2024회계연도 결산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25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8. 25.)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보고
-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
-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3차 전체회의(2025. 8. 27.)

・부별심사(경제부처)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9. 1.)

・부별심사(비경제부처)

・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3.)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4.)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5.)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27.)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계속)

・원안의결

□ 제9차 전체회의(2025. 11. 27.)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 윤 철)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 왔음.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마주하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정책에 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초혁

신 경제로의 전환을 담아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여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음.

❒ 아울러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음.

또한 미래 핵심전략 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통하여 추격경제에서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임.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문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음.

그러면 2024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임.

총세입 규모는 535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50조 원보다 14조 100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총세출 규모는 529조 5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54조 원 중 95.6%가 집행되었음.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 발생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458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였음.

❒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임.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8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08조 5000억 원임.

❒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임.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음.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임.

❒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임.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임.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조 2000억 원 증가한 2585조 7000억 원임.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8000억 원 증가한 632조 7000억 원임.

예비비는 민생 안정과 국민 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해 예산 4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되었음.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음.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음.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요지

(보고자 : 감사원장 최 재 해)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음.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5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2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임.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1008조 5000억원임.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6조 7000억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임.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총 2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1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218조 4000억 원, 부채는 2585조 7000억 원이었음.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 3829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1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44조 5000억 원, 물품은 16조 5000억 원이었음.

2024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092조 5000억 원에 비해 48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8%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음. 그 밖에 국가채권은 576조 7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1조 원이었음.

❒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임.

기획재정부 등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15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

였음.

❒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임.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74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지난 2024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등 20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음.

Ⅳ.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의 요지

(보고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 윤 철)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음.

❒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림.

❒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한 144건 중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88.9%에 해당하는 128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1%인 16건은 조치 중임.

조치 중인 16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4건이며 시정요구가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음.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 대 영)

※【붙 임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

Ⅵ.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박 형 수 위원)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림.

2. 심사보고 요지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음.

❑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각 채택하였음.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음.

❑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Ⅷ. 토론요지

생 략

Ⅸ. 심사결과

원안의결

※【붙 임 2】결산심사결과 총괄표 참고

Ⅹ. 시정요구(안) 및 부대의견(안)

1. 시정요구(안)

【붙　임 3】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안)

2. 부대의견(안) : 총 16건

연번	부 대 의 견
1	○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
2	○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3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관구성방식이 시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
4	○ 행정안전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 배상 및 보상 차이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다.
6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선발제도 및 적정 규모에 대해 점검한다.

연번	부 대 의 견
7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함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9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10	○ 고용노동부는 지방공기업 중 안전활동수준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기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철도 노선의 지하플랫폼과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12	○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빈건축물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비근거를 마련한다.
13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14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연번	부 대 의 견
15	○ 국토교통부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도 등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6	○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철도 급행화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한다.

【붙 임 1】

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주요 재정 지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94.5조원으로 예산 612.2조원 대비 17.7조원(△2.9%)미달되었으나 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예산 656.6조원 대비 18.6조원(△2.8%) 미달되었고, 전년 대비 27.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 등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조정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Ⅰ. 총수입[1]	573.9	612.2	594.5	△17.7	20.5
1. 국 세	344.1	367.3	336.5	△30.8	△7.5
2. 세외수입	28.5	28.2	29.6	1.4	1.1
3. 기 금	201.1	216.7	228.2	11.5	27.1
※ 세입예산외[2]	0.3	-	0.1	0.1	△0.1
Ⅱ. 총지출[1]	610.7	656.6	638.0	△18.6	27.3
1. 일반회계	343.5	356.5	344.5	△12.0	1.0
2. 특별회계	69.6	81.7	78.6	△3.2	8.9
3. 기 금	196.5	218.4	214.5	△3.9	18.0
※ 세출예산외[3]	1.0	-	0.4	0.4	△0.6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GDP 대비 △1.7%)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0.9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 6.8조원 악화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04.8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13.1조원, 전년 대비 17.7조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6.8 (△1.5)	△44.4 (△1.8)	△43.5 (△1.7)	0.9 (0.1)	△6.8 (△0.2)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GDP 대비)	50.3 (2.1)	47.2 (1.9)	61.2 (2.4)	14.0 (0.5)	11.0 (0.3)
Ⅲ.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87.0 (△3.6)	△91.6 (△3.6)	△104.8 (△4.1)	△13.1 (△0.5)	△17.7 (△0.5)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GDP 대비 46.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0.5조원 감소한 것이나, 전년 대비로는 48.5조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권(1,047.9조원)가 전년 대비 49.9조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 (A+B, 잠정)	1,126.8	1,195.8	1,175.2	△20.5	48.5
(GDP 대비, %)	(46.8)	(47.4)	(46.0)	(△1.5)	(△0.8)
○ 중앙정부 채무(A)	1,092.5	1,163.0	1,141.2	△21.9	48.6
■ 국 채	1,091.1	1,161.7	1,139.8	△21.9	48.7
- 국고채권	998.0	1,046.0	1,047.9	1.9	49.9
-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1	△4.6	△2.5
- 외평채권(외화)	11.5	32.0	12.8	△19.2	1.3
■ 차입금	1.2	1.2	1.2	0.0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0	△0.0
○ 지방정부 순채무(B)	34.3	32.8	34.1	1.3	△0.2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가 815.4조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359.8조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중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예산 대비 23.1조원, 전년 대비 88.9조원 각각 증가하였는데,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이며, 이는 756.7조원으로 전년 대비 96.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예산 대비 43.7조원, 전년 대비 40.5조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예산 대비 43.7조원, 전년 대비 40.7조원 각각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126.8	1,195.8	1,175.2	△20.5	48.5
○ 적자성 채무(A)	726.4	792.3	815.4	23.1	88.9
(구성비)	(64.5)	(66.3)	(69.4)	(3.1)	(4.9)
- 일반회계적자보전	660.1	733.3	756.7	23.4	96.6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66.4	58.9	58.7	△0.3	△7.7
○ 금융성 채무(B)	400.3	403.5	359.8	△43.7	△40.5
(구성비)	(35.5)	(33.7)	(30.6)	(△3.1)	(△4.9)
- 외환시장 안정	251.0	253.4	210.3	△43.1	△40.7
- 서민주거 안정 등	149.4	150.1	149.5	△0.6	0.2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535.9조원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4.1조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37.3조원으로 전년 대비 29.4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2.2조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은 98.6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9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497.0	550.0	535.9	△14.1	39.0
일반회계	407.9	449.5	437.3	△12.2	29.4
특별회계	89.0	100.5	98.6	△1.9	9.6

자료: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의 성질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7.6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0.8조원 미달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9.4조원으로 전년 대비 46.5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6.7조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3 결산 (A)	2024				2023 결산	2024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344.1	367.3	336.5	△30.8	△7.6	152.9	182.7	199.4	16.7	46.5
일반 회계	333.9	356.1	326.2	△29.9	△7.7	74.0	93.4	111.1	17.7	37.1
특별 회계	10.1	11.2	10.4	△0.8	0.3	78.9	89.3	88.3	△1	9.4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출은 529.5조원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한 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24.5조원 적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세출은 43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9.5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16.1조원 적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은 94.0조원으로 전년 대비 9.5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보다 8.4조원 적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C-B)	
합 계	490.4	550.0	554.0	529.5	△24.5	39.0
일반회계	405.9	449.5	451.6	435.4	△16.1	29.5
특별회계	84.5	100.5	102.4	94.0	△8.4	9.5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535.9조원 - 총세출 529.5조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35.9	529.5	6.5	4.5	2.0
일반회계	437.3	435.4	1.9	1.4	0.4
특별회계	98.6	94.0	4.6	3.0	1.6

자료: 기획재정부

3.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액은 1,00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8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보면, 여유자금회수(293.5조원), 정부내부수입(290.5조원), 자체수입(242.5조원), 차입금(182.1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차입금(△1.5조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지출(337.4조원), 여유자금운용(299.6조원), 사업비(193.5조원), 차입금원금상환(143.6조원), 차입금이자상환(31.5조원), 기금운영비(2.9조원) 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14.3	231.8	231.9	242.5	10.5	28.1
	정부내부수입	248.1	309.8	312.5	290.5	△22.0	42.4
	차입금	183.5	198.7	198.9	182.1	△16.9	△1.5
	여유자금회수	243.8	283.1	287.0	293.5	6.5	49.7
합 계		889.8	1023.3	1030.4	1008.5	△21.8	118.8
지출	사업비	178.7	198.9	202.6	193.5	△9.0	14.9
	기금운영비	2.9	3.0	3.0	2.9	△0.1	-
	정부내부지출	268.9	332.6	342.7	337.4	△5.3	68.5
	차입금원금상환	139.0	143.3	144.7	143.6	△1.2	4.6
	차입금이자상환	26.9	31.9	32.2	31.5	△0.7	4.6
	여유자금운용	273.4	313.5	305.2	299.6	△5.6	26.2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98조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 2,468억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519조 8,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 2,7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1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1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59조 4,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6,8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가 38조 7,394억원 초과된 반면, 계정성기금은 34조 7,977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562억원, 사업성기금은 23조 4,152억원 각각 미달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897,582	10,232,932	10,303,614	10,085,316	△218,299	1,187,73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688,556	2,592,394	2,593,631	2,981,025	387,394	292,468
■ 계정성기금(5개)	4,405,447	5,485,652	5,546,144	5,198,166	△347,977	792,719
■ 금융성기금(8개)	306,274	326,108	335,498	311,935	△23,562	5,661
■ 사업성기금(49개)	1,497,304	1,828,779	1,828,342	1,594,189	△234,152	96,885

자료: 기획재정부

Ⅱ.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

1. 2024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1-1. 성장 측면

2024년 세계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세계 교역의 확대 등으로 코로나 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당초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상회하는 3.3%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물가 안정과 반도체·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내수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 대비 실적]

구분	2024년도 전망치(목표치)		2024년도 실적치(B)	차이(B-A)
	당초(2024.1)	수정(2024.7)(A)		
○ 실질GDP 성장률(%)	2.2	2.6	2.0	△0.6
- 민간소비(%)	1.8	1.8	1.1	△0.7
- 설비투자(%)	3.0	2.0	1.7	△0.3
- 건설투자(%)	△1.2	△1.2	△3.3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5	1.2	△1.3
○ 경상수지(억달러)	500	630	990	360
- 수출(통관, 전년비 %)	8.5	9.0	8.2	△0.8
- 수입(통관, 전년비 %)	4.0	2.0	△1.6	3.6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1.4.),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7.3.)

이와 더불어 과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이 견인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정체되면서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는 매년 0.5%p 이상의 기여도를 유지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낮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5%p 수준으로 정체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실질 경제성장률 둔화로 직결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2015~2024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9	3.2	3.4	3.2	2.3	△0.7	4.6	2.7	1.6	2
민간	2.2	2.3	2.8	2.4	0.8	△1.8	4	2.3	1	1.5
정부	0.8	0.9	0.7	0.8	1.5	1.0	0.7	0.5	0.5	0.5

주 1)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민간과 정부는 각각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의미
2) 단수조정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합계가 경제성장률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특히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재정지출의 규모와 정부의 성장기여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해 재정 규모 외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총지출을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2019년(1.5%p)과 2020년(1.0%p)에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7%, 13.4% 증가했으나,

2021년(9.3%), 2022년(13.5%)은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여도는 0.7%p, 0.5%p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 성장기여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정부는 최근 성장기여도 하락 및 정체의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2024년 총지출변동 현황(결산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조원)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38.0
전년대비 증감률(%)	6.9	3.5	5.6	6.8	11.7	13.4	9.3	13.5	△10.6	4.4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한편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과 같은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서는 오히려 경기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재정의 신속집행 시행 여부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재정의 집행률과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으므로,[1] 재정의 신속집행이 실제 경기부진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르더라도 당해년도의 경기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될 때에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상고하저의

1)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5.2.) 연구용역에 따르면, 집행률 1%p 상승할 때 당기 GDP 성장률이 0.272%p 상승하는 유의미한 단기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시차효과를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상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 승수효과는 불확실함.

경기흐름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은 상반기 2.2%, 하반기 2.0%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었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8%, 하반기 1.3%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큰 경기변동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상·하반기 예상 및 실제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구 분	예상			실제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2	2.0	2.1	2.8	1.3	2.0

주: 예상 GDP성장률은 2023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11.) 및 「경제전망보고서」(2025.2.)를 재작성

2024년 정부는 상고하저의 경기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민생경제 부진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신속집행이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고용 측면

코로나19 이후 주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명 증가한 2,857만 6,000명으로, 당초 전망치인 23만명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2.7%를 기록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69.5%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2024년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명,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인구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8,922	29,203	29,399
취업자수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년 대비 증감	△218	369	816	327	160
실업자수	1,108	1,037	833	787	823
비경제활동인구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3.9	64.3	64.5
고용률	60.1	60.5	62.1	62.6	62.7
전년 대비 증감	△0.8	0.4	1.6	0.5	0.1
15~64세 고용률	65.9	66.5	68.5	69.2	69.5
실업률	4.0	3.7	2.9	2.7	2.8
전년 대비 증감	0.2	△0.3	△0.8	△0.2	0.1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연령계층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15세~29세, 30세~39세, 40~49세가 모두 202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만 2020년 18.9%에서 2024년 22.7%로 상승하였습니다.

[2020～2024년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15세～29세	3,763	3,877	3,996	3,899	3,755
비중	14.0	14.2	14.2	13.7	13.1
30～39세	5,364	5,257	5,303	5,357	5,447
비중	19.9	19.3	18.9	18.9	19.1
40～49세	6,346	6,311	6,314	6,260	6,179
비중	23.6	23.1	22.5	22.0	21.6
50～59세	6,356	6,422	6,618	6,678	6,705
비중	23.6	23.5	23.6	23.5	23.5
60세 이상	5,076	5,406	5,858	6,223	6,489
비중	18.9	19.8	20.9	21.9	22.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30.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도 2024년 67.6%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37.7시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2024년 전일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수(A)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일제 근로자(주 36시간 이상)	20,112	20,078	19,578	21,195	19,319
비중	74.8	73.6	69.7	74.6	67.6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5,956	6,706	8,028	6,795	8,810
비중	22.1	24.6	28.6	23.9	30.8
일시휴직	837	490	483	426	446
비중	3.1	1.8	1.7	1.5	1.6
주당 평균 취업시간(B)	39.0	38.9	38.3	38.9	37.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 7,000명(5.0%)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15～29세 및 30～39세의 증가율이 각각 5.2%, 10.8%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2022～2024년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단위: 천명, %, 전년대비)

	2022			2023			2024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15～29세	390	17.1	△29	401	17.0	11	421	17.1	21	5.2
15～19세	28	1.2	3	29	1.3	2	33	1.3	3	10.9
20～29세	362	15.9	△31	371	15.8	9	389	15.8	18	4.7
30～39세	260	11.4	△22	273	11.6	13	302	12.2	29	10.8
40～49세	263	11.6	△11	265	11.3	1	277	11.2	12	4.5
50～59세	386	16.9	△29	376	16.0	△10	390	15.8	14	3.6
60세 이상	978	43.0	△30	1,037	44.1	59	1,077	43.7	41	3.9
70세 이상	-	-	-	176	7.5	-	174	7.0	△2	△1.1
전체	2,277	100.0	△121	2,351	100.0	74	2,467	100.0	117	5.0

자료: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에서 아예 구직의사를 상실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고용정책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2)]

이에 정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단계별(재학 → 재직 → 구직)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2025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의 쉰 주된 이유는 ① 구직 의욕 부족(38.1%), ② 교육 및 자기계발(35.0%), ③ 재충전 필요성(27.7%), ④ 심리적인 문제(25.0%) 순으로 나타났음.

2. 재정수입: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입결손(30.8조원)이 발생되었고,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도 10.3조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연례적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국세수입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예산(367.3조원) 대비 30.8조원(△8.4%)의 결손이 발생되었고, 2025년에도 세수 부족 전망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세수 오차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도 국세외수입은 257.8조원이 수납되어 예산(244.9조원) 대비 12.9조원(5.9%)이 증가되었고, 전년 결산(229.6조원) 대비 28.2조원(12.3%) 증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예산(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수입	625.7	573.9	△51.8	612.2	594.5	△17.7	20.5
1. 국세수입	400.5	344.1	△56.4	367.3	336.5	△30.8	△7.5
2. 국세외수입	225.2	229.6	4.4	244.9	257.8	12.9	28.2
- 예산수입	25.0	28.5	3.5	28.2	29.6	1.4	1.1
- 기금수입	200.3	201.1	0.8	216.7	228.2	11.5	27.1
3. 세입세출외	-	0.3	0.3	-	0.1	0.1	△0.1

주) 세입세출외는 국고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기획재정부

2-1.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국세수입의 경우, 2021년 이후 4년간의 오차(201.1조원)가 최근 10년간 오차 규모(280.4조원)의 71.7%에 달하는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세수오차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 2022년 52.5조원, 2024년 △30.8조원 순입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다음으로는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2	19.7	23.1	25.5	△1.3	△6.5	61.4	52.5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9	14.3	25.5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경제성장률(2.4%) 및 민간소비증가율(2.2%) 전망치가 실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영업실적·부동산거래량 및 수입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관세 등의 세수결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회계연도 세수추계 오차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계모형 개선·전문가 참여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수입 오차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국세외수입도 절대값 기준으로 오차규모가 38.8조원, 오차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수납(+)과 과소수납(-)을 상계하지 않고 합한 절대값 기준으로 국세외수입의 오차를 계산할 경우, 2021년에는 43.4조원(30.8%)으로 가장 큰 오차규모 및 오차율를 보였으며, 2024년의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 오차율은 22.8%입니다.

[2021~2024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오차를 절대값으로 계산 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140,881,945	152,183,177	151,781,684	169,880,366
수납액(B)	168,637,314	164,589,344	166,364,497	185,671,678
오차(B-A)	43,446,886	35,714,749	39,710,563	38,798,330
오차율(C/A)	30.8	23.5	26.2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납액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거나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가 요구한 2023회계년도 결산 시정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해당 부족액을 ㉠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불용 조치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는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외국환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4조원 축소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외국환거래 지원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조세지출 정비

2년 연속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국세 수입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회와 함께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2025년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2018년 대비 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62.5%에 이르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4.1%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4년 16.3%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3. 재정지출: 4대 중점투자 분야 분석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민생안정·경제활력·국민안전·미래대비라는 목표 하에 4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4대 중점투자 분야로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분야가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및 20대 핵심과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도 예산안」, 2023.8.

3-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정부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기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전제도 설계 미흡, 현장 수용성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과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차별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역시 정책자금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낮아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시험장 선점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설계하고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를 위해 혁신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으나, 사전 준비 부족과 미흡한 사업관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024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하반기에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마치기 전 예산이 미리 편성되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의 융자금 사용 용도가 원전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이 증액되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어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민간 중심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투자 미흡,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한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 전략펀드’**는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2024년도 출자 자금이 민간에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투자기간 내 자펀드 결성이 지체되면서 대규모 재정이 사실상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 및 투자 집행 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지연과 사업 기간 혼선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고, 일부 서비스 수행기관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양은퇴직불·은퇴직불형농지연금’** 등 고령농 지원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수요자(고령농)의 영농 지속의사에 대한 정밀한 사전 조사가 병행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정부는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ODA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난안전사업에서 사전협의 없는 예산 편성 및 이연 집행 등이 나타났고, 급격한 ODA 예산 증액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계획 부실 및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정부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쳐 편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 재원을 차년도 본예산을 활용하여 이연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예비비 등의 사용을 통해 재난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ODA 예산은 당초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30년 목표치로 제시한 수준에 도달하였는 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급격하게 ODA 예산을 증액한 것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정지출: 재정 정상화(지출구조조정) 관련 분석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R&D)과 보조금 예산을 중점 정비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과 보조금 예산을 중점 정비분야로 지정하면서, 관행적 R&D 지원에서 탈피해 성과창출형 도전적 R&D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1.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의 대상 사업 및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세부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상 사업명 및 사업별 조정 규모 등의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효율화 노력은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출구조

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시내역을 보면, SOC 등 시설 구축사업과 ODA 사업 등의 경우에는 총사업비나 전체 사업 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지출효율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4-2. 국가연구개발(R&D) 예산 감액 편성

정부는 2023년 3월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고 R&D 전체 예산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을 2024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수립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과학기술기본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서 그간의 투자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면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동 전략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의 R&D 분야 예산 투자액은 32.0조원(예상 총지출 669.7조원 기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불과 5개월 후인 2023년 8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결과에서 R&D 예산을 총지출의 3.9% 수준인 25.9조원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4.7조원) 대비 6.3%를 증액한 5조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R&D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성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매년 10%씩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명시한 분야조차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R&D 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R&D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다년간 단계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과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및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가 R&D 예산을 감액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평가 절차나 연구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체결하는 연구개발협약서[4]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R&D 사업에 대해 달성가능성이나 중간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국비를 조정할 경우, 연구가 지연되거나 최종 성과가 축소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표준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서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4-3. 보조사업 재정비 검토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정비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의 관행적 증가와 더불어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미흡·부정수급 등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누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합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 타 사업과 유사중복, 근거법령 미흡 또는 부실한 사업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인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북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2024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이 전액 이·전용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중 국립예술단체(8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 미흡 및 사업 수요 오예측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배달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외식업소(5,000개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 업소는 2,000개소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32.0%에 불과합니다.

Ⅲ. 주요 주제별·유형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

저성장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약된 재정 여건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건보재정의 수입·지출이 적절한 외부 통제 없이 정부 일방 정책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타 4대 보험과 같이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국가재정 편입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급여항목 확대·보장성 강화 및 운영체계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의료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약 10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중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2024년 12.2조원)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 대부분이 국회 예산 심의·의결 없이 국가재정 외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인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국가재정 내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율과 수가 등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지며 수가가 건보지출의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건보재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통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및 건강보험 수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및 고시 등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판단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 수가의 경우 폐쇄적인 결정 체계로 인해 수가의 적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제한되고 수가 결정의 합리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비상진료대책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정책,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지원금, 복지정책 성격의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별다른 통제 없이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 단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 2,90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적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번 의료공백 위기는 국가적인 정책 판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재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지양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4년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재정지출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중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의 시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건강실천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 신규 의료정책이 아닌 복지정책과 유사한 성격의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의 과소 추계와 더불어 총지출 규모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 통합재정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로는 보건복지 분야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전체 복지 지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에 편입 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평가 및 국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기관 결산 검토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31개로,[5] 2024회계년도 공공기관 전체 수입은 948.1조원, 전체 지출은 947.4조원 규모이고, 2024년 말 자산은 1,151.9조원, 부채는 741.5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80.6% 수준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21년 9월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고, 통합 전 광물자원공사는 5조 9,985억원의 투자실적 대비 8,090억원 회수에 그쳤고, 통합 후 2024년까지도 총 투자실적 7조 3,387억원 대비 1조 4,514억원만이 회수된 상황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2014~2024년 투자한 해외광구 대상 총 투입비용 대비 회수대금을 살펴보면, 총 51개 해외광구를 대상으로 240억 3,99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128억 9,08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은 2020년 △1.2조원에서 2024년 △2.0조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증가 등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31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57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이 243개임.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보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캠코채 발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 출연금을 통한 현금 출자 이외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 사업 및 청년농 정책 등이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노사협의 등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제도 하에서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 상한(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초과한 대출 인원이 전체 대출 인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대부 초과금액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광고를 자체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차입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외부차입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지원(펀드) 사업 검토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14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1조 9,429억 9,300만원 중 1조 9,405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등이 있으며, 2024년 투자지원(펀드)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태펀드 일부 투자 분야에서 정책 출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민간 출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운용 중인 모태 출자펀드의 투자분야별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14개 계정의 15개 분야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2개 계정의 13개 분야에서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 ‘농식품벤처’ 등 기대수익률이 낮아 정책출자 비중이 높아진 분야도 있으나,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스케일업’ 등에서도 정책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펀드사업 추진 시 민간 출자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이 자펀드의 주목적에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최소한 정책자금의 출자비율보다는 높게 설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의 수익보전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은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2024년 운용 중인 자펀드 중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낮은 펀드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②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민간자금이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부적정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분야 내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유도 및 민간출자자의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별 기준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이 같은 하나의 분야 내에서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기준수익률은 펀드별로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최소 기준수익률 이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스포츠출발 분야의 경우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2% 또는 7%로, 루키리그 분야의 경우 5%에서 8%로 설정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일부 정책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어 출자된 정책자금이 모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 및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현재 4개 지역의 프로젝트 펀드에서 자펀드 결성 기한을 아무런 제재 없이 연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 조속히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어 투자실적이 여전히 부진하고 프로젝트 자펀드의 민간자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연내 투자소진율이 부진하고 문화계정 내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하고 있는 금액(투자여력)이 상당하므로, 향후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빈집정비 사업 검토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 간 유사성, 법령상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F 방식의 한시적 협의 구조를 넘어, 명확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및 정비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빈집 수 및 사업규모와 정비율(%) 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국 빈집은 13만 4,009호, 빈집정비사업규모는 8,986호로써 정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5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빈집정비를 위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며,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례로 국토교통부는 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빈집·폐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경관개선 사업도 전국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 정비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들도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복 등으로 집행 부진 및 정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매칭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처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정비된 빈집을 공공활용하여 타 사업과 연계하고자 계획하였다가 철거사업만 지원하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공활용의 범위가 부지활용으로 제한되고, 타 사업과의 연계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공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빈집 등의 정비사업** 중 일부는 철거 또는 보수를 단순 지원하는 것이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내용상 유사하면서도 상호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5.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검토

정부는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형태의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관된 세부사업[6]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27개 부처에서 169개의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며, 2조 559억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조 160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91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6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 부처 AI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783,216	783,041	-	150	99.9
고용노동부	5	500,343	500,154	-	189	99.9
산업통상자원부	21	162,232	162,232	-	-	100.0
환경부	1	157,771	145,694	1,452	10,625	92.3
국토교통부	15	116,789	115,251	233	1,305	98.7
방위사업청	7	91,583	79,160	5,188	7,236	86.4
문화체육관광부	7	85,005	84,844	-	161	99.8
보건복지부	5	27,451	27,450	-	1	99.9
해양수산부	5	26,554	26,554	-	-	100.0
국회	2	25,208	13,104	12,000	104	52.0
교육부	2	22,012	22,012	-	-	100.0
중소벤처기업부	4	19,200	19,197	-	3	99.9
행정안전부	3	5,384	5,384	-	-	100.0
질병관리청	1	5,072	4,564	48	460	91.0

6)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AI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을 기준으로 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농촌진흥청	3	5,004	4,979	-	25	99.5
우주항공청	1	3,869	3,869	-	-	100.0
산림청	2	3,537	3,507	-	30	99.2
외교부	1	3,113	2,830	22	261	90.9
경찰청	1	2,813	2,813	-	-	100.0
통일부	1	1,877	1,872	-	5	99.7
해양경찰청	1	1,632	1,348	195	89	82.6
법제처	1	1,482	1,482	-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95	1,281	-	14	98.9
대통령경호처	2	1,000	1,000	-	-	100.0
통계청	3	915	898	-	17	98.1
방송통신위원회	2	850	850	-	-	100.0
대법원	2	712	712	-	-	100.0
합계	**169**	**2,055,919**	**2,016,082**	**19,138**	**20,675**	**98.1**

주) 위 자료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AI 사업을 정리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AI 사업 중에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시키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와 같은 사업은 기존 사업에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부처 실적 중심의 사업 편성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고도화 및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머신러닝·자연어처리·딥러닝·시계열 예측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AI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수행된 일부 AI 사업은 사업 관리가 미흡하거나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계획현액 425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태조사 결과 AI 솔루션을 구입한 기업 중 66.4%만 해당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6.8%의 기업이 효과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3월, 5월, 8월 총 3차례에 걸쳐 과제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각 과제의 협약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데이터 수집 및 품질검증 기간이 불충분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구매·거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6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수집대상 과제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공·등록한 실적이 없거나, 관련 데이터셋이 타 지역특화 플랫폼에 먼저 구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6. 재정제도 개선과제

첫째, 2024년 기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배분 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변화 등으로 인해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은 전체 계획현액 1조 401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정배분비율은 과거 복권발행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각 기금 및 회계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상당 부분 변화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현행 법령 하에서 복권수익금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비율의 가감제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44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원 기준(300명) 미달을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또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42년에 기금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는바,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지정 기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기관]

<table>
<tr><th>기관명</th><th colspan="2">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th></tr>
<tr><td>대한석탄공사</td><td colspan="2">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 존재 및 금융부채 2.4조원</td></tr>
<tr><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d><td colspan="2">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의 소진 등이 추정됨</td></tr>
<tr><td>서민금융진흥원</td><td colspan="2">부채비율 급증(2018년 29% → 2023년 614.2%)</td></tr>
<tr><td>부산항만공사</td><td rowspan="2">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능조항</td><td>금융부채(억원): 2019년 19,025 → 2023년 36,334</td></tr>
<tr><td>인천항만공사</td><td>금융부채(억원): 2019년 9,174 → 2023년 14,402</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첨부]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내용(요약)

검토보고 총괄 편에는 결산 총평 4건, 재정총괄 검토 11건, 주제별 검토 11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처별의 경우 총 60개 부처에 대하여 총 643건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총괄 보고서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결산 총평]	
경제적 성과	· 경제성장 및 고용 관점에서의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과 검토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추계정확성, 세수결손 대응방안 검토 등
4대 중점투자 분야 분석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사업 검토 등
재정정상화(지출구조조정) 분석	·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예산 감액 및 보조사업 재정비에 대한 검토 등
[재정총괄 검토]	
재정수입	· 국세수입 결손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 국세외수입 검토 등
재정지출	· 의무지출 증가 대응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검토 등
재정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 및 적자성 채무 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기금 결산	·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현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 등
재무결산	· 재무제표 오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소개 등
예비비 결산	· 예비비 편성의 예측가능성, 시급성 검토 등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공공기관 결산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관리 문제, 수입 관리 문제, 경영 및 조직 관리 문제,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련 문제, 성과 관리 문제, 제도 개선 과제, 수지차보전기관 관련 검토 등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 예산안 심의 결과 준수 필요,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필요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집행 관련 문제,「총사업비 관리지침」 미준수 문제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집행 관련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관련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단위 및 범위 문제, 타당성 재조사 관련 문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문제 등
성과관리제도	· 성과목표관리 대상과 성과평가 대상의 불일치, 예산심사 대상과 성과목표관리 대상의 불일치 등
[주제별 결산 검토]	
국민건강보험 재정	· 건강보험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금화 등 국가재정 내 편입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R&D)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논의 관련 검토 등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 당초 계획 대비 급격한 증가에 따른 ODA 총규모 재검토 및 국회 예산심의권 고려 필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유형별 일자리 사업 검토 등
재난안전 대응	· 재난안전사업 대상 사전협의・평가 관련 개선사항 및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 사업 검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석
정책금융사업	·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보증지원 사업, 펀드사업 검토 등
빈집 정비 사업	· 빈집 정비 주무부처 지정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및 책임성 확보 필요 등
정보화사업	· 전년도 예비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 필요 등
국고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필요 등
출연금 사업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출연예산 편성 필요 등

□ 부처별 보고서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일용임금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필요 등 (1건)
대통령경호처	· 공무직 인건비 불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등 (2건)
국회	·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등 (5건)
국가인권위원회	·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 미흡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등 (3건)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지연손해금 이월액의 최소화 필요 등 (12건)
법제처	·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 전용 주의 등 (4건)
감사원	· 감사활동의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등 (5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수행 부적정 등 (3건)
헌법재판소	· 조속한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등 (3건)
대법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12건)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등 (11건)
국가보훈부	· 보상금 사업에서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등 (19건)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 (5건)
금융위원회	· 햇살론15 사업의 보증부실 및 금융권 출연 등을 고려한 햇살론 체계 개편 검토 필요 (16건)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예산 집행 부적정 등 (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 부진 (4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등 (25건)
국세청	·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7건)
관세청	· AEO 공인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등 (5건)
조달청	· 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9건)
통계청	·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부적정 등 (5건)
[교육위원회]	
교육부	·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부적절 등 (17건)
국가교육위원회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이월 연례적 반복 등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일원화 필요 등 (23건)
방송통신위원회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등 (6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 (4건)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10건)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의 추진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등 (12건)
통일부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의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 재검토 및 문헌조사 등 보완방안 모색 필요 등 (11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출석수당 지급 부적정 등 (3건)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한 상담실적 제고 필요 등 (5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국방위원회]	
국방부	· 탄약 비군사화 적체물량 해소 필요 등(17건)
병무청	· 복무규정 위반자 전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 실시 필요 등(4건)
방위사업청	· 보라매 개발 사업의 공동참여국 분담금 축소 등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16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 사업의 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 부적절 문제 등(20건)
경찰청	·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간 과도한 비대칭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필요 등 (10건)
소방청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현장 업무 근무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6건)
인사혁신처	·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시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등(7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정선거지원단 사업의 성과수당 집행 개선 필요 등 (4건)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22건)
국가유산청	·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등 (1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들의 예산집행 부진사유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등 (23건)
농촌진흥청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9건)
산림청	·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세입부족을 사유로 그 집행을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등 (10건)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펀드,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 등 (24건)
해양경찰청	·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장비 구입 부적정 등 (6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본잠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등 (26건)
특허청	· 장기 미납과태료의 철저한 수납관리 필요 등 (6건)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 중 임의적 사업내용 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후 변경·승인 부적정 (20건)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예산 전용(증)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 지양 필요 등 (27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 (11건)
질병관리청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3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R&D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등 (20건)
기상청	·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등 (8건)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등 (26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인상이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쪽방 등 임차료를 인상시키는 부작용 검토 필요 등 (27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및 규정 보완 등 (5건)
새만금개발청	·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비 최소화 필요 등 (5건)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등 (8건)

【붙 임 2】

결산심사결과 총괄표

1. 연도별 결산 심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시 정 요 구(안)	1,889	2,293	1,967
부 대 의 견(안)	26	34	16
감 사 요 구(안)	1	-	-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2024회계연도 20건) 별도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44건) 및 부대의견(3건) 별도

2.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안) : 1,967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 계
건수	-	-	147	432	1,479	(91)	1,967

※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 시정 및 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44건) 별도

□ 부대의견(안) : 16건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3건) 별도

3.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위원회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구 분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회운영	-	-	-	3	2	-	5
법제사법	-	-	12	24	101	(1)	136
정무	-	-	16	73	130	(17)	202
기획재정	-	-	39	22	139	(4)	196
교육	-	-	8	6	80	-	9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11	64	101	(22)	154
외교통일	-	-	2	34	82	(2)	116
국방	-	-	19	41	55	(9)	106
행정안전	-	-	5	12	53	(2)	68
문화체육관광	-	-	7	18	68	(3)	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9	28	151	(1)	1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3	21	90	(4)	110
보건복지	-	-	-	18	153	(5)	16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	6	37	133	(14)	162
국토교통	-	-	5	26	91	(6)	116
성평등가족	-	-	5	5	50	(1)	59
공통	-	-	-	-	-	-	-
합 계	**-**	**-**	**147**	**432**	**1,479**	**(91)**	**1,967**

4.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처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	-	-	-	-	-
	대통령경호처	-	-	-	-	1	-	1
	국회	-	-	-	2	1	-	3
	국가인권위원회	-	-	-	1	-	-	1
	소계	-	-	-	3	2	-	5
법제사법	법무부	-	-	7	8	45	(1)	59
	법제처	-	-	1	3	10	-	14
	감사원	-	-	3	2	11	-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1	5	-	6
	헌법재판소	-	-	-	-	16	-	16
	대법원	-	-	1	10	14	-	25
	소계	-	-	12	24	101	(1)	136
정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5	11	35	-	51
	국가보훈부	-	-	6	22	31	(7)	52
	공정거래위원회	-	-	3	6	21	(1)	29
	금융위원회	-	-	2	17	28	(7)	40
	국민권익위원회	-	-	-	11	7	-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6	8	(2)	12
	소계	-	-	16	73	130	(17)	20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	30	17	87	(3)	131
	국가데이터처	-	-	3	1	11	(1)	14
	국세청	-	-	-	3	17	-	20
	관세청	-	-	3	-	13	-	16
	조달청	-	-	3	1	11	-	15
	소계	-	-	39	22	139	(4)	196
교육	교육부	-	-	8	6	74	-	88
	국가교육위원회	-	-	-	-	6	-	6
	소계	-	-	8	6	80	-	94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	48	80	(15)	118
	우주항공청	-	-	-	6	3	-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6	9	11	(6)	20
	원자력안전위원회	-	-	-	1	7	(1)	7
	소계	-	-	11	64	101	(22)	154
외교통일	외교부	-	-	1	21	42	(1)	63
	통일부	-	-	1	11	29	(1)	4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1	6	-	7
	재외동포청	-	-	-	1	5	-	6
	소계	-	-	2	34	82	(2)	116
국방	국방부	-	-	16	24	32	(5)	67
	병무청	-	-	1	3	13	(2)	15
	방위사업청	-	-	2	14	10	(2)	24
	소계	-	-	19	41	55	(9)	106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	3	8	21	(1)	31
	경찰청	-	-	1	1	12	-	14
	소방청	-	-	1	1	6	-	8
	인사혁신처	-	-	-	2	6	(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8	-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	-	-	-	-
	소계	-	-	5	12	53	(2)	6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	6	8	53	(2)	65
	국가유산청	-	-	1	10	15	(1)	25
	소계	-	-	7	18	68	(3)	90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	-	5	54	-	59
	농촌진흥청	-	-	-	3	11	-	14
	산림청	-	-	-	8	29	-	37
	해양수산부	-	-	9	11	44	(1)	63
	해양경찰청	-	-	-	1	13	-	14
	소계	-	-	9	28	151	(1)	1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부	-	-	3	5	38	(2)	44
	지식재산처	-	-	-	1	14	-	15
	중소벤처기업부	-	-	-	15	38	(2)	51
	소계	-	-	3	21	90	(4)	1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	-	16	112	(5)	123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15	-	16
	질병관리청	-	-	-	1	26	-	27
	소계	-	-	-	18	153	(5)	16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	3	24	66	(7)	86
	기상청	-	-	-	2	10	(1)	11
	고용노동부	-	-	3	11	57	(6)	65
	소계	-	-	6	37	133	(14)	162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	3	20	83	(3)	1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2	3	4	(2)	7
	새만금개발청	-	-	-	3	4	(1)	6
	소계	-	-	5	26	91	(6)	116
성평등가족	성평등가족부	-	-	5	5	50	(1)	59
	소계	-	-	5	5	50	(1)	59
공통		-	-	-	-	-	-	-
합계		-	-	147	432	1,479	(91)	1,967

【붙　임 3】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정 요 구(안)

2025. 1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국회운영위원회

1.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해당사항 없음)

2. 대통령경호처(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운영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 불용,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	제도개선	대통령경호처
		지적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교육·훈련시설 추가 운영계획에 따라 전기·가스 및 수도요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시설 활용이 장기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불용되었음 -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현액 32억 9,600만원 중 19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60.1%)되고 13억 1,500만원이 불용됨 - 사업추진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육시설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연내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 국회(3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차세대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정보화(정보화)(2034-500)	제도개선	국회사무처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현액 515억 4,000만원 중 346억 2,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7.2%이고, 141억 6,300만원이 이월되어 이월률이 27.5%에 달하는 등 입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구체적 지연이유를 살펴보면, ‘차세대 e의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요구사항 수렴 및 유찰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절차로, ‘차세대 인적관리·행정지원시스템’은 요구사항 수렴 및 방향 검토로 인해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는 주요 차세대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달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입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용역사업 수행인력의 타 사업 중복투입 관리감독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법정보화(정보화)(2034-500), 전자도서관 운영(3035-500)	주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지적사항	○ 입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2024 의정지원 DB 구축) 사업과 전자도서관 DB구축(융복합서비스 데이터셋 구축, 2024년도 법률과 통계 DB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인력을 중복 투입하여 인건비를 중복수령하였음 - 동 사업자는 2024년 하반기에만 6개 부처(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법제처,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10개 사업에 동시 참여하고 있었고, 동일 인력을 각 사업에 중복 투입하여 일부 인력은 투입률(참여율)이 380%에 이르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수행임이 확인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은 국회 소속기관 간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의 사업수행현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인력 타 사업 중복 투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의계약 과다 및 예산 이월로 인한 회계 불일치 발생, 경쟁입찰 원칙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	주의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27건 중 21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이 중 입찰공고 후 유찰 등의 절차 없이 단순 공모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제도 14건에 이르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특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27건 중 11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이월된 과제 상당수의 입찰공고가 2024년 12월 말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건은 계약이 2025년에 체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제 추진 가능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		

4. 국가인권위원회(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내역사업인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절차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검토 미흡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법제사법위원회

1. 법무부(59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66억 6,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장기·과다 미수납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105억 1,200만원, ‘변상금’은 24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항이며, 그 밖에 ‘가산금’(13억 2,400만원), ‘징계부과금’(7억 1,800만원), ‘토지대여료’(9,800만원) 등의 미수납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토지대여료 등 수납실적 저조 항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의 202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당초 계획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음 - 구체적으로, ‘토지대여료’(52.2%), ‘기타관유물대여료’(76.5%), ‘변상금’ (32.8%), ‘위약금’(49.7%), ‘가산금’(25.6%), ‘기타경상이전수입’(75.7%) 등 항목의 수납률이 저조함 - 특히, 이 중에서도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가산금’ 등 항목의 경우 저조한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바, 이는 관련 제도 운용이나 예산 편성이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수납실적이 저조한 주요 세입항목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 세입예산액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출 총괄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 등 연구용역비(260목) 성격의 사업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임 - 2024년 법무부에서 집행한 일반용역비 내역 중에는 일반용역비와 무관한 '만족도 조사', '친절도 점검', '컨설팅',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전 사업에 대해 비목 적합성을 확인하여 비목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타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산은 적정비목으로 변경·재편성함으로써,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연구용역 연말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출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4분기나 연말에 추진한 과업들이 존재하고, 선급금(선금)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성 검검이 필요함 - 2024년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은 총 123건(검찰국 46건, 법무실 25건, 범죄예방정책국 14건 등의 순)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관 내 연구용역비(260목) 사업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연구용역이 보다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익법무관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10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익법무관의 전체 인원과 수요 대비 충원률이 70%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인바, 법률구조 등 주요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추세임에도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무부 부서에 다수 배치하고 있는바, 법률구조공단 배치 확대 등 조정이 필요함.로 입사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취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구조·국가송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재배치 및 변호사 채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익법무관 감소현황에 대응하고 배치적정성을 검토할 것		
6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음 ○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제중재센터는 2019년 사건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48건 및 수수료 수입 약 5억원임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4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보조금은 13억 4,900만원 정도이나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은 5억 700만원으로,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사건 중재 역량 강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재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특성화 방안,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상대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8	**마을변호사 사업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제도 선진화(1038-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현재 1,425개의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1개 마을에 3~4명을 배치한 경우도 있고, 3~4개 마을에 1명의 변호사를 배치한 경우도 있음. 구체적으로 무변촌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배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 역시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적 평가 및 이용자의 평가 체계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별 상담 건수 및 수요파악이 되지 않아 마을변호사 배치 적정성을 기할 근거가 없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이용자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변호사 배치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인권증진(1133-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아동학대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의 총계가 매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개최 실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아동학대사건의 양적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 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절한 피해아동 구제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가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보강, 예산 불용 방지, 회의실적 관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체계를 확립할 것		
10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목적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사례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업에 집행된 사례도 존재하므로, 사업추진 경위 · 목적 · 근거 · 효과 등에 기초하여 예산액을 산정 ·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예산 집행용도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세부사업비 혼용 지출 유의 및 법적 근거 마련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18년 사업비 개편*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업비와 다른 사업의 기본경비를 함께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①법무행정정보화(기획조정실 소관), ②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3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비로 편성·집행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 세부사업비 간의 혼용지출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것		
12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제고 노력 시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연속 '미흡 2회'와 '보통 1회' 등급을 받아 평가결과가 계속 저조한 상황이고, 지출구조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 11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년에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 사업 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 ※ 기재부는 재정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이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강조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관리사업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으로 사업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재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관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을 통한 여유 재원 활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에서 총 17억 8,500만원을 이·전용한 뒤 타 사업비 부족분에 활용하였고, 최근 4년간 이·전용이 관례화되는 추세로 보임 - 2024년 이·전용 후 집행 내역: 국제법무국기본경비(7011-266) 5억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7018-250) 1억 8,500만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1232-300) 6억원,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5억원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집행 점검을 통해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 인건비가 여유 재원으로 반복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4	**난민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방식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에 전문임기제(다급) 33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110-02)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7억 6,700만원을 이·전용으로 마련한 뒤 집행하고, 2024년 인력 충원 및 운영도 원활하지 못함 ○ 난민심사 수요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가 아닌 정식 직제내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임기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난민심사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제출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수활동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 정기분 및 수시분 관련 집행명목, 수령인은 모두 비공개하고, 금액 및 일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익명처리한 수령인을 표기해서 제출하고, 특활비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16	**검찰 특정업무경비 자료제출 관련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정업무경비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사용일자, 가맹점명, 승인금액’만 제출하고, 수사활동비의 경우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하고 ‘금액’만 제출 - 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관련 일시(시간) 및 인원(명수),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하여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및 자료제출 거부 관련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정업무경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7월 1일 권순정 당시 수원고검장이 안산지청을 방문 후 안산지청장 등 10명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98만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것에 해당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등 담당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지연하였으며, 위 회식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지만 지침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거짓으로 답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관련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국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제출할 것		
18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의 경우 전국 검찰청의 건물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68.1%에 이르는 5억 5,7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4억 8,2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7,500만원) 집행함 ○ 또한,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의 경우에도 전력설비 및 통신시설,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기계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 중 6억 1,4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3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2억 7,400만원)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한 이·전용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검사 국외훈련비 관련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사 학위과정 학자금은 연 6만 달러로 법관(5만)·공무원(2.2만) 대비 과다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 대상자 수, 금액, 논문 표절율 등 주요 현황 자료를 비공개해 국회 심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 국외훈련을 마친 검사의 연구논문이 전체 공개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 국외훈련결과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관 등 타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사 국외훈련에서의 학자금, 체재비 등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하여는 국회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0	**검찰 국외훈련비 관련 부당사용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관보다 기본학자금 및 가산한도가 높다는 점, 국외훈련 관련 보고서, 논문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또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16명의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환수 조치만 이뤄졌을 뿐 이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 ※ 환수된 금액은 총 지급훈련비 6억 7천만원 중 8천 6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는 검사 국외훈련운영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법무부는 체재비 2배('23. 1. 31.) 또는 4배('23. 1. 31. 이후) 환수. 체재비는 학자금을 제외한 체류기간 동안 지원된 비용을 의미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종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외훈련비 환수대상자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예산 증액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공공수사(1335-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및 ‘공공수사’ 사업의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지 않게 과다 증액하여 이·전용 등이 크게 발생하였음 - 대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 등 명목으로 일반수용비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음 - 공공수사 사업의 ‘포상금’ 예산 또한 전년 대비 77.3%를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8.0%에 그쳤음 ○ 반대로, 국내여비의 경우 2023년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당초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증액하지 않아, 2024년에도 재차 다른 항목으로부터 전용받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예산 증액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예산 편성 · 집행 전반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사비(420-03)’ 및 ‘자산취득비(430-01)’ 등 항목의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의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 먼저, 구치감 및 민원실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의 경우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 2,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9억 6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36.2%인 나머지 5억 1,600만원을 모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 또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장비 구입 및 각 청사 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의 경우에도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4억 600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2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		
23	**일반수용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목적 일반수용비(210-01)는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연례적 실적 부진이 지적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임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일반수용비 또한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4.8%에 불과한바, 실제 소요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의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과다전용 반복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등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였음. - 2024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당초 총 29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이어 재차 상당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여,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함 - 특히,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의 경우 7억 700만원을,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사업의 경우 9억 3,200만원을 공사비(420-03)와 자산취득비(430-01)에서 전용하였음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의 경우 전용액을 더한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의 162.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이는 공사비 예산액의 36.2% 및 자산취득비 예산액의 30.8%를 각각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주의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이 다수 있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의 경우 매년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4년 기준 771만원만이 집행되어 8.5%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실적이 저조함 -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도 집행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의 경우, 실적 부진을 수차례 지적받은 이후 이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4년도 집행률이 각각 51.4% 및 53.3%로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라는 본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내역사업의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한 상고제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판활동지원(1337-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2년간 상고 포기 의견 등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다른 유사 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준수율이 유독 떨어짐 - 심의위원회의 상고 포기 의견에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검찰청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미 1심·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심의위원회도 심의기준에 따라 상고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 포기 의견'을 의결하였음에도 검사가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 피고인의 형사절차로부터의 해방을 지연시켜 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무리한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검찰청은 향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취지 및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상고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심의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검찰청 인건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325억 3,8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고 5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49억 2,600만원을 이·전용, 75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전용 등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22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각각 205억 8,800만원 및 408억 1,400만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바, 검찰청 인건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당초 총 86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2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음 - 그 결과, 예산액 12억 9,5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총 6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3억 1,300만원)하거나 불용(2억 5,500만원)함 ○ 이는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법무실을 비롯한 각 부서는 당초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검찰청의 경우 당초 35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19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실적을 보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9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률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에 적자폭이 27% 증가함.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각국의 정책변화, AI, 에너지 등 여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현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시장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서비스 무역수지TF를 신설하는 등 법률서비스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국제법 전문위원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영문 에디터 1인과 국제법 전문위원 2인의 공무직 보수로 2024년 집행액은 1억7,5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이며, 공무직 인건비 집행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음 이와 같은 국제법 전문위원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국제법률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며,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퇴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전문 공무원 양성, 민간경력 채용을 통한 공무원 인력 확보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1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 지연제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교정본부에 각 구치소·교도소별 2024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교정본부는 실제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소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자료제출은 국회의 예·결산심사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임 - 실제로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가 부재할 경우 이는 각 기관의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교정본부의 결산자료 지연제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본부가 법사위원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결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 - 본 위원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받은 예산의 사용내역 및 연도별 과밀률 등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여부”, “2024년 서울·수원구치소의 비목별 집행내역 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원활한 결산심사 업무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지연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		
33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평균 수용률 126.8%, 여자수용자의 경우 138.9%) - 본 위원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받은 예산의 사용내역 및 연도별 과밀률 등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여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이 없어 해당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전용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전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사업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임 - 이에 더해, 교정본부는 해당 이·전용 금액의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5	**비목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대구교도소 개청식 행사 대행용역을 위한 4,9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은 전문성이 필요한 비정기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행사 대행용역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개청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노후 교정시설 예산 확보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예산 초과집행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 ('22)51,117명→('23)56,577명→('24)61,366명 1일 평균 수용률 : ('22)106.9%→('25.5.)124.3% ※ 재소자 진료 인원 : ('20)24,520명→('22)27,388명→('25)34,935명 ※ 의무관 현원 : ('22~'23) 84명→('24) 94명, 2024년 기준 충원율 : 79.6% ※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건수 : ('20)37,101건→ ('24)49,175건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고령·질병 수용자 증가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정시설 의료 및 예산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무부는 의무관 보수 현실화, 전공의 조기확보 등 의무관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할 것		
37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도록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인력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수원·인천·서울남부구치소, 춘천·원주교도소 등 교정기관 심리치료팀 구성인원 또는 기준이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상 인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정기관이 다수 존재함.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심리치료팀 구성 인원 : (대형기관) 7명 이상, (중형기관) 6명 이상, (소형기관) 5명 이상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347억 6,500만원을 이·전용하고 63억 1,900만원을 불용하는 등 매년 200~400억원 대의 연례적인 인건비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백만원): ('22)40,946→('23)26,483→('24)41,085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처우개선 등 교정직 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교정직 공무원 확충방안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사현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며,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소년원 출소 후 재입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 비율: ('21)4.7%→(' 22)8.2%→('23)10.4% - 소년원 출원 후 무의탁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평균 입주율은 50% 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지도 자체의 부족 및 부정적 인식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년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		
4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 미확보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임상연구비가 불용되었는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충원율 60% 이하 - 특히 제주소년원의 의무관 현원은 0.5명으로, 시간제 의무관이 1일 4시간 홀로 근무하고 있음(2025.5. 기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제주소년원 의무관 등의 조속한 충원대책을 시행하고, 의무관 처우개선 등 인력충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충실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갱생보호활동(16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갱생보호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 매년 기금이 누적되어 기금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음 ※ 갱생보호기금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1995년 8월부터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수익금, 사업수입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됨. - 2024년의 경우 109억 7,600만원의 수입 중 29억 500만원만을 갱생보호사업에 지출하였고, 80억 7,100만원을 이월함 - 지출한 금액 중 직원 관사 구입(6,000만원), 공단 직원 퇴직금(3억원), 공단 소유 빌딩 관련 관리비(4억 1,500만원) 등은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갱생보호기금의 이월금 규모가 매년 증대되어 기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기금으로부터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국립법무병원 의료인력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의사의 경우 법령상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기타 의료인력의 경우 재활치료 연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수를 보임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의사 1인당 입원환자 60명이 기준이나, 2024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118명임 - 2024년 재활치료 참여 연인원 11,781명이나, 이를 담당하는 임상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는 13명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43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사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호관찰활동(16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4년 예산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을 초과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164.7%), 위기상황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 12만 4,000원에서 2024년 77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함 ※ ('23) 위기상황자 57명에게 약 707만원, (' 24) 198명에게 약 1억 5,355만원 지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학생자치법교육 운영사업 위탁대금의 일반용역비 편성 ·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중 프로그램 외부 기관 위탁비용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 ·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45	**포상금 용도에 사용된 기타운영비 내역 전수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법무연수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에는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격려 목적에 집행하거나, 분기별로 지속적 ·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기타운영비(210-16) 지급 사례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포상 목적인 경우 해당 예산을 포상금(310-03)으로 편성 ·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주의,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37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남 ○ 법무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답변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누락하는 등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 최소화하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법무부는 국회의 결산 자료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 제출할 것(주의)		
47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익신탁제도는 10년 경과되었으나 실제 운영·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집행이 없는 신탁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신규 인가 및 기부금 규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법에서 규정한 3년 내 집행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제도의 활용가치가 제한적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기 미운영·미집행 신탁 관리 강화, 홍보효과 분석 및 계층별 수요조사 선행, 세제혜택 개선 및 새로운 기부 모델 창출 등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예산액 8억 2,000만 원 중 불용액이 9,30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 저조한 전자공증 이용률, 규모가 작은 지정공증인으로 인한 제약, 효과 분석이 어려운 홍보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시민 인식 조사·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지정공증인 확대·전자확정일자 도입, 전자공증 기능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9	**변호사시험 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1038-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였음에도, 출제 중복검사, 채점, 문제은행 관리 등은 전산화하지 않아, 여전히 종이 기반의 출제·채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고, 기출문제 제출률이 30%미만으로 매우 낮음 ○ 채점보조인력 및 문제은행 전자화 인력도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전원에 기출문제 제출을 독려하여 시험문제를 다양화하고, CBT도입에 따라 불용된 채점보조인력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법무부는 기출문제 제출률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보안 대책 방안을 마련하며, 채점·문제은행 등 시험관리의 전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1041-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2023년에도 4,4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에도 6,600만원을 이월함 - 또한, 2023년에는 8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4년에도 8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말에 정책연구를 몰아 체결하여 이월금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및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1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스템 고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계층 선택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기타’ 계층 선택 비율이 전체의 34% 이상인 바 사업의 적정성 등 판단이 어려움 ○ 전화·방문 예약 시 취약계층 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계층별 이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매 상담마다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 문제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회원가입 단계에서 취약계층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하여 실적통계를 정확히 수립하고, 계층별 지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계층 이동이 적은 대상군에 대하여 계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기준 검토 및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12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업은 상대국* 배우자의 입국허가요건을 국내 배우자의 강의 수강 여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적 영역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 UN특별보고관 권고 :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및 면제 요건 등을 점검하고,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		
53	**집행가능성과 실제 소요를 반영한 마약수사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정부는 2023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마약수사사례 제작’,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함. - 세부적으로, 마약사범수사 관련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국내외 자료구입비 및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은 집행액이 0원이고, 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4.6%),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6.2%), 마약류 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8.3%) 및 마약수사사례·범죄정보 제작(32.8%)의 예산 등도 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보상(1337-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4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607억 9,000만원을 이·전용하고, 총 2,20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기준으로는 372억원 이상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였고, 특히 '마약수사' 예산에서도 4억 9,000만원을 이·전용함 ○ 또한, 가장 많은 보상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무죄비용보상'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과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수사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것		
55	**서로 다른 프로그램 혼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세부사업(1431-303)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의 일반수용비(210-01) 예산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본 사업(1431-303)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 -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법률상 이용절차 없이 임의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가 무색해지며,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관·항 및 사업 간 구분을 무시하고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일부 교도소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광주·의정부교도소 휴게실 리모델링 예산 4억 8,600만원 중 1억 8,400만원, 휴게실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 2억 600만원 중 8,900만원을 불용함 - 두 교도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다수 교정기관이 포함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광주·의정부교도소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57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재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처·기관이 존재하여, 지원체계 연계가 부족 ○ 원스톱솔루션센터는 현재 서울시에만 1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원 보장, 온라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개별 홈페이지 구축, 센터의 전국 확대 검토를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 범죄유형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실적 관리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준공일정을
고려한 임차료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12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인천공항(T2) 출입국 심사장 등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의 준공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입국 업무용 공간 임차료를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
※ 2024년 인천공항(T2)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 임차 예결산 내역
<table>
<tr><th>임차 대상</th><th>면적
(㎡)</th><th>단가
(원)</th><th>연간
임차액
(백만원)</th><th>예산액</th><th>집행액</th></tr>
<tr><td>신규 입국장
업무시설</td><td>149</td><td>1,043,900</td><td>156</td><td rowspan="3">847㎡×
102.2만원
(12개월분)</td><td rowspan="3">T2 4단계 확장 지역 운영 개시
(2024. 12. 3.)

약 1개월분 (12.3.~12.31.)
임차료만 납부</td></tr>
<tr><td>신규 출국장
업무시설</td><td>92</td><td>1,075,217</td><td>99</td></tr>
<tr><td>신규
출국대기실</td><td>599</td><td>1,075,217</td><td>644</td></tr>
<tr><td>합계(백만원)</td><td>840</td><td>-</td><td>899</td><td>866</td><td>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는 향후 건축물의 확장 등 공사가 수반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의 예산 편성 시 해당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를 편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탁계약서 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법정민간대행사업비’는 민영교도소(여주 소망교도소)에 운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2024년 예산현액 105억 3,300만원) ○ 민영교도소 운영비는「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위탁계약서를 통해 산출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음 - 동 계약서 제65조(예산반영방법)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서 제65조 제1항: 예산에 반영되는 일반운영경비는「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그러나 2010~2017년까지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의 운영경비 90%가 교정본부의 일반회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지급된 반면, 2018년부터 위탁계약서 및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무관액)’을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음 - 위탁계약서에는 ‘무관액’ 제외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으며, ‘무관액’이라는 개념 또한 예산·계약·재정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가 없음 - 법무부와 기재부는 ‘무관액’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에서 당사자와의 합의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은「민법」상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정민간대행사업 예산 산출 시 법률 및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무관액)’을 제외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산’의 개념을 교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안을 마련할 것		

2. 법제처(1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기타직보수 연례적 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110-02목) 수요(채용후보자 보수 지급)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110-01목) 중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에는 5급 경력채용자 4인의 교육기간 임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타직보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4인의 채용은 법제처가 2024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2023년 5월 31일)하기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안이었음 - 채용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타직보수를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집행지침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기타직보수의 이·전용을 지양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법령해석 회신율 및 신속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제처</td></tr>
<tr><td>지적사항</td><td>❍ 법령해석 처리·회신율이 2021년 50.9%에서 2024년 41.1%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0일 이상 소요 안건이 전체 회신 건의 55.7%에 달하는 등 회신의 신속성이 미흡함

※ 최근 4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단위: 건, 일, %)
<table>
<tr><th colspan="2">연 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colspan="2">접 수(A)</td><td>923</td><td>1,013</td><td>1,182</td><td>1,010</td></tr>
<tr><td colspan="2">철 회</td><td>58</td><td>91</td><td>139</td><td>74</td></tr>
<tr><td rowspan="3">처리</td><td>회 신(B)</td><td>470</td><td>470</td><td>490</td><td>415</td></tr>
<tr><td>협의조정</td><td>122</td><td>156</td><td>169</td><td>191</td></tr>
<tr><td>반 려</td><td>193</td><td>272</td><td>391</td><td>403</td></tr>
<tr><td colspan="2">평균처리기간</td><td>66.8</td><td>91.6</td><td>67.8</td><td>65.4</td></tr>
<tr><td colspan="2">회신율(B/A)</td><td>50.9</td><td>46.4</td><td>41.5</td><td>41.1</td></tr>
<tr><td colspan="2">60일 이상 소요건수</td><td>284</td><td>305</td><td>236</td><td>2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회신율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국외현장학습을
위한 경비 적정
비목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제처</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1,393만원을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전용함
※ 2024년 일반수용비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한 내역
<table>
<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원)</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집행내역</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전용
('24.8.29.)</td><td>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td><td>일반수용비
(210-01)</td><td>9,287,000</td><td>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td><td>국외교육여비
(220-03)</td><td>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경비</td></tr>
<tr><td>전용
('24.9.9.)</td><td>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td><td>일반수용비
(210-01)</td><td>4,638,000</td><td>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td><td>국외교육여비
(220-03)</td><td>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td></tr>
<tr><td>합계</td><td colspan="2"></td><td>13,925,000</td><td colspan="3"></td></tr>
</table>
- 연례적으로 이와 같은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므로 향후 국외교육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경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집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법령 개정 적시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중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음 ○ 법제처는 월단위로 법령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나,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하거나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개정을 사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도 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법령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사업 목적에 맞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주제 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매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법률안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취지가 아니고 현행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께 알리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법령·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 주제가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음 - 2024년 세미나 주제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맞춤형 생활조례정보의 방향”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법령입법자문의 편중 지양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을 보면, 1분기 1건, 2분기 2건, 3분기 7건, 4분기 8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82%를 하반기에 집행함 ○ 세법 전공 자문위원에게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를 자문하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중 편중된 자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입법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의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021년 32.9%, 2022년 33.7%, 2023년 22.2%에서 2024년 17.4%로 감소하고 있어 법령입법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21년 75.2%, 2022년 77.8%에서 2024년 45.4%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역시 2021년 83.7%에서 2024년 44.8%로 감소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2023년부터 시행중인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는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문장 정비안 중 최종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실제 개정 완료된 실적도 미흡함 - 2023년의 연구용역 3건을 통하여 연구기관이 발굴한 문장 정비 건수는 총 1,976건이었음. 이 중 법제처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관 부처에 정비안 초안을 송부한 건수가 533건(27%), 이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여 선정된 최종 정비안의 건수가 323건(16.3%)임. 이 323건 중 개정이 완료된 건수는 2025년 6월말 현재 18건(0.9%)에 불과함 - 2024년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1,646건 중 법제처가 선정한 건수는 392건(23.8%), 이 중 부처가 수용한 최종 정비안 건수는 211건(12.8%)에 불과하고, 아직 정비 실적은 없음 ○ 최종 문장정비안의 내용에서도, 문장의 조사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만을 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가 2024년에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제시된 8건의 개선과제 중 2건만이 정비되었고, 이 중 법령 개선사항이 아닌 행정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도 1건 있었음 - 행정적 제도개선은 법령에 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에 가깝고, 이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도 있음 ○ 입법영향평가는 타 연구용역(법제처 평균 4,729만원) 에 비해 평균 용역금액(8,733만원)이 훨씬 높음에도 하나의 용역에서 두세 건의 개선과제밖에 도출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에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0	**AI 환각 현상의 감소 및 대응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업무정보화추진(1033-5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자연어를 활용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AI 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AI 환각 현상으로 인하여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검색 시 하단부에 “검색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나, 잘못된 법령정보가 제공된 경우의 위험성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2024년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9,150만원 전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은 조문을 선정하여 시각 콘텐츠의 내실화 도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콘텐츠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일부 시각화가 어려운 조문에 대하여 편집만 다르게 하여 소개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시각화가 불필요한 조문까지 그림을 추가하는 등 법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식화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단순한 내용으로 도식화 필요성이 떨어지는 조문에도 그림을 삽입하여 별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콘텐츠별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면밀한 수요조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법제교육’은 나라키움 태안 정책연수원 개원 지연(당초 9월→ 11월), 연수원 강의실 무상 사용 및 교육 수요의 예측 미비 등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액 3억 700만원 중 집행액은 4,600만원(집행률 약 15%)임 - 임차료의 불용이 예상되자 4,300만원을 조정하여, 2,500만원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1,800만원은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임차료로 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법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수요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4	**인력중복 투입에 따른 사업추진방식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시정	법제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세계법제 지원(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은 인력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수령 문제가 확인되었으므로, 중복지급된 인건비 추징 등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참고로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SW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수령,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프리랜서 투입으로 인한 불법 하도급, 허가받지 않은 인원 교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SW사업 용역 수행에 있어 위법·부당한 인력중복투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기발생 인력중복 투입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		

3. 감사원(1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감사원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결산보고서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국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분석에 다음과 같이 오류가 확인됨.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임차보증금 3억 7,000만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임차보증금 2억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시 재무재표 상에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임차보증금 계상 등에 있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예산 적정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용임금 예산을 감액해 일용임금의 증액 재원으로 조달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결원 발생 시 일용직을 우선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하나, 위 결원을 일용직으로 보충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임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감사원은 상용임금 미집행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집행하는 데 충당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상용임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		
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결산심사 곤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감사원장(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과, 같은 기간 감사원 출장비 세부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대법원 2025. 8. 14. 2025두33659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해당 (정보공개를 위한) 작업에 시일이 상당 소요된다.”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결산심사가 불가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일반연구비 용역 과제 공개 확대 및 수의계약 비중 축소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감사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연구 성과물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여 감사원이 집행하는 일반연구비 과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신에 공개에 적합한 일반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공개 건수는 2022년 7건에서 2024년 0건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계약시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이 2020~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재심의 중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처리된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2024년은 처리건수 58건 중 51건이 기각·각하되는 상황에서 3건만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음.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사건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내여비 예산의 타사업 이·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2024년 사이에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전용 등이 이루어졌음. - 특히 2024회계연도에도 국내여비에서 다른 비목 또는 세부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전용 및 세목·내역변경 되었는바, 2022년 3억원, 2023년 2억 5,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실소요에 맞게 감액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연 3회 기준으로 편성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연 6회로 확대하면서, 하반기 여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내역변경을 통해 3,972만원을 증액하였음. ○ 그러나, 조직 개편 후 실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인 2,974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4년 사전컨설팅 접수는 82건으로 2023년 76건 대비 7.9% 증가하였지만, 제도도입 시점인 2019년 101건에 비해서는 19% 감소한 상황임. ○ 사전컨설팅의 규정상 처리 기한은 30일 이내임. 2024년의 30일 내 처리율이 33.3%로 2023년 62.5% 대비 절반 수준이며, 2019년 53.7%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였음. 60일 이상 장기 처리 건수의 비율 또한 22.8%(13건)를 차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의 적시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절차간소화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적극행정 지원 사례집 발간비 이월 및 연례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4년도 3건의 발간계약이 모두 10월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중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차 개정판’ 계약액 전액인 5,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또한, 최근 3년간 총 7건의 발간물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그 중 6건이 동일 기업과의 계약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 관련 발간 사업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출 것		
10	**공사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 및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바닥 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공사’가 사전조사 결과와 달리 규모가 축소되어, 공사비 예산액 15억 700만원 중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집행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이 60% 수준임. ○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금액 5억 7,5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을 자산취득비 1억원, 임차료 1억 4,500만원, 타 내역 사업을 위한 공사비 2억 100만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시설공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전용 등 목적외 사용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OASYS 구축·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일정 체계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은 OASYS(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변화된 IT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2026년에는 디지털 감사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예정이었음. ○ 당초 2024년 12월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과기부 대기업 참여제외 예외 인정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4억 2,400만원이 이월되고 준공 예정일이 2025년 5월로 연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월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장 등 5명은 2024. 6. 12.부터 21.까지 G20 감사원장회의 등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경비로 총 8,441만원을 집행하였음. - - 위 사업은 감사원의 예산요구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음. - - 감사원은 이로 인해 당초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타 사업(감사활동경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 이와 같은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전용 제한(제46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G20 감사원장 회의 참석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 취지를 위배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재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의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임. ○ 또한,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2024년 사이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짐. ○ 그리고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감사활동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성과지표 총괄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감사결과 조치금액’과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효과나 국민안전 관련 감사활동의 성과는 위 지표로 측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① 예산절감, ② 수입증대, ③ 국민편익, ④ 지출합리화, ⑤ 재산증가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감사원은 세부 내역별 달성치를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기대효과 금액에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이 감소한 부분,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예산 절감액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 관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추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를 개발하며,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세부내역별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감사활동의 성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결산검사 시 세수결손에 대한 검사 및 시정요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주의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수추계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음 ○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관계부처에 대한 구체적 시정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권고 수준으로 종결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2023·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수 부족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대한 조치 등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 다만, 이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요구가 의결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함(상임위)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국민감사청구제도 관련 홍보비 초과 집행 지양 및 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절차 고지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감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 통지가 지연되고, 청구인에게 지연통지를 하지 않는 상당수 사례가 존재하며, 기일이 지연되어 각하결정이 이루어지는 예가 다수 발생함
- 규칙상 30일 이내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2020~2024년 총 143건 중 30일 이내 결정된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건이 15건임
- 또한 2020~2024년 각하결정 건 중 30일 이내 처리된 건은 0건이고, 2024년 기준 각하 결정에 소요된 평균 일수가 60일을 경과했으며, 감사기간 연장 시 청구인에게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6건임
○ 국민감사청구 관련 홍보비를 증액 조정하여 집행했지만,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국민감사청구 · 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절차 지연시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홍보비 등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한 집행을 지양할 것</td></tr>
</table>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집행률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4년 예산 불용률은 11.6%인 반면, 국가 전체 예산의 평균 불용률은 약 2% 내외인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판활동지원 예산의 불용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매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추계 정확성을 기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2	**연구비 집행률 제고 및 규정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연구용역 절차 지연으로 일반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00만원을 불용(집행률 32%)하였고, 정책연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집행률 29.5%)하였음 ○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해 세목변경을 하고 있음. 또한, 연구용역 미발주 등의 상황에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16차례 진행하였으며, 모든 심의를 서면심사를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개의요건인 ‘위원 출석’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공판활동지원(1033-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수사·공소 관련 각 위원회의 2024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4.5%,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20.8%임 - 2024년 회의 개최실적은 심의 계획인 30회와 달리 개최횟수가 수사심의위원회 1회, 영장심의위원회 1회, 공보심의위원회 4회, 감찰위원회 2회, 검사징계위원회 2회로 도합 10회(약 34%)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회 계획수준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공수처 인력 충원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검사 임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수처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접수 중 공소 제기는 4건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3명이 퇴직하는 등 높은 퇴직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적대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적대비 과도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지적사항	○ 소형 복합기 구매 계약이 2023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으로 스캔 가능한 OCR스캔시스템을 1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함 *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은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을 사용하여 텍스트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기술임 ○ 공수처는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관련 업무위탁비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각 400만원, 4,650만원 편성하였으나 1건도 집행하지 않음. 내부고발 보호제도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고,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6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수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지적사항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의 국내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계획에 없던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5. 헌법재판소(1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의 2024년 인건비 사업 불용률은 4%로, 전년 대비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건비 집행률 부진은 과거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문제임 ※ 2024회계연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은 1.2%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인력충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 · 공보관 겸임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연구관이 인사관행적으로 비서실장·공보관의 직위를 겸임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연구관 본연의 연구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해당 보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공보관 겸임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억 5,700만원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을 지양하고, 비서실장 및 공보관 직위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임용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3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정부는 2019년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규정 마련 -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후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완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명예퇴직금 환수 사유 발생 시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직책수행경비의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본부기본경비 내 직무수행경비의 세목인 ‘직책수행경비(250-02)’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현황 (2020년) 100만원, (2021년) 400만원, (2022년) 6,600만원, (2023년) 5,000만원, (2024년) 4,600만원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약 1,000건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신청 처리건수 5,014건인데,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700건으로 평균 선임률이 14%에 불과함 ※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건수는 1,001건, 선임건수는 127건(선임률 12.7%)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신청건수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8.9%)이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12.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고 건수 115건 중 인용된 사건은 12건(인용률 10.4%)으로, 2024년 헌법소원심판 선고 사건 인용률 12% 보다 낮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을 확보하고,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7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참고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법조인)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분야 참고인 지정 시 전문분야 별로 한 명의 참고인을 지정하여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20건의 사건에서 총 44명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참고인 44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이 23명(52.3%)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지정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등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재판의 평균처리기간은 약 725일으로, 180일을 4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임 또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 지연이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미처리 사건은 201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4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4년 이상 경과한 사건도 55건 존재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조직 ·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영상·만화·동화·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날, 제헌절 등에 선물제공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바, 이벤트를 개최한 달과 그 외의 달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임 ※ 2024년 기준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7월(518,386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30,330건) 사이 약 17배의 차이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의계약 최소화 및 연구수행기관의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7건 중 4건(57%)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3건(43%)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7건의 연구 중 4건은 한국헌법학회가, 2건은 한국공법학회가 수행하여 특정 학회와의 계약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할 것		
1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를 위하여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대 중 1대를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설하고 추가로 4대의 완속충전기를 본관 지하 1층에 신규로 설치하였음 -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따라 이설되었어야 할 급속충전기 1대는 여전히 별관 지하 3층에 위치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확정된 예산을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용액(불용률) 현황 (2022년) 150만원(41.6%), (2023년) 60만원(16.7%), (2024년) 180만원(50.0%) ○ 또한, 전체 31건의 국외통신원 위촉 건수 중 신규 위촉은 6건(19%)에 그치고, 대부분 3년 이상의 기존 국외통신원을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13기(2024.9.~2025.9.) 국외통신원의 경우 2명 지원에 2명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지원자가 전원 위촉(경쟁률 1:1)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13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연수(1034-304)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연수목적에 따른 제도 설명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연수 내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음 ○ 또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경우 기한 내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수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임명된지 10년이 지나 연임된 헌법연구관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이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한 내규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발간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1011-251),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본부운영지원(1032-301),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국제교류(1034-305), 재판자료확충(1035-306)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2024년 헌법재판소의 발간물 현황을 보면,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계약금액의 60.94%에 해당하는 2억 1,269만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 입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완화할 것		
15	**헌법연구관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도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함 ※ 2024년도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에 따른 불용액: 8억 1,300만원 ※ 2024년도 일반직공무원 휴직인원 총 26명 중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 23명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른 파견 등 「헌법재판소법」 및 「국가공무원법」 상 허용되는 대체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 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세목조정을 통해 국외교육여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국외교육여비 부족 발생 사유는 매년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정책지도자과정(과장급 1명), 국립외교원의 글로벌리더십과정(국장급 1명) 등 교육훈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연수경비가 실소요보다 적게 예산에 반영됨에 기인함 ❍ 국외교육여비는 타 비목에 비해 집행목적이 뚜렷하고 실제 소요가 비교적 명확히 예측이 가능한 점,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함 ※ 2024년 국외여비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세목조정을 통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국외교육여비의 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6. 대법원(25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3개년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 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179억 1,000만원, 2023년 344억 700만원, 2024년 438억 7,3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3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
이·전용 등(A)</th><th>예산
세목조정(B)</th><th>기금운용계획
변경(C)</th><th>계
(A+B+C)</th></tr>
<tr><td>2022</td><td>11,946</td><td>5,083</td><td>881</td><td>17,910</td></tr>
<tr><td>2023</td><td>27,604</td><td>6,219</td><td>584</td><td>34,407</td></tr>
<tr><td>2024</td><td>32,505</td><td>9,913</td><td>1,455</td><td>43,87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경상경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 체납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계부가금(56-5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크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24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
<tr><td>징계부가금</td><td>-</td><td>1,062</td><td>11</td><td>1,045</td><td>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변상금의
적극적인 징수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변상금(57-57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변상금의 징수 결정액이 전년 대비 49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으며 미수납 금액도 상당한 규모임
※ 2024년도 변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
<tr><td>변상금</td><td>-</td><td>5,475</td><td>546</td><td>4,924</td><td>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변상금의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증인지원실 설치
예산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
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 방음 등을 갖춘 별도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9억 2,600만원 중 19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 19억 2,600만원 중 실제 증인지원실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제주지방법원(4,360만원), 평택지원(3,592만원) 등 2개소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7,952만원에 불과하고, 4억 1,000만원이 타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등으로 이·전용되어 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음
※ 이・전용 금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
(일자)</th><th colspan="3">~ 에서</th><th colspan="3">~ 으로</th></tr>
<tr><th>세부사업</th><th>비목</th><th>금액</th><th>세부사업</th><th>비목</th><th>금액</th></tr>
<tr><td>승인전용
(2024.8.8.)</td><td>재판절차
비용지원</td><td>공사비
420-03</td><td>△310</td><td>재판일반
경비지원</td><td>사업추진비
240-01</td><td>310</td></tr>
<tr><td>승인전용
(2024.11.13.)</td><td>재판절차
비용지원</td><td>공사비
420-03</td><td>△100</td><td>재판일반
경비지원</td><td>구호및교정비
320-06</td><td>1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증인지원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감축하고 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광역면접교섭 센터 설치 사업의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 기금 예산 병행 집행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재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나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과는 목적·대상·법적 근거 등에서 구별되고,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법서비스 향상(1161-403) 세부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예산을 일반회계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혼합해 운영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구) 구리등기소에 설치된 광역면접교섭센터에 공사비 총 4억 1,806만원 집행(리모델링 공사비 3억 2,063만원, 관급자재 구매비 9,743만원)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와 같이 법적 근거가 다른 시설에 대해 예산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 없이 병행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를 강구할 것		
6	**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4년 사건 수 추계를 112,545건으로 과소 예측하여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30억 2,600만원을 송달료로 자체이용 하였으나, 이용을 통해 증액된 예산 중 7,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2억 6,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전용한 예산을 또다시 다른 비목으로 세목조정하고 불용하는 예산 집행 구조는 송달료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함께 혼합 집행하여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송달료와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정을 마련하고, 송달료 수요를 사건 수, 송달 건수, 건당 평균 송달비용 등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측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 정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비상근 진술조력인 선정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최근 4년간 진술조력인 제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사건수</th><th>소송관계인수</th><th>기준금액
(1인당)</th><th>집행률(%)</th><th>불용액</th></tr>
<tr><td>2021</td><td>50</td><td>2</td><td>18</td><td>19</td><td>30만원</td><td>4</td><td>48</td></tr>
<tr><td>2022</td><td>50</td><td>5</td><td>23</td><td>24</td><td>30만원</td><td>10</td><td>45</td></tr>
<tr><td>2023</td><td>30</td><td>7.8</td><td>64</td><td>71</td><td>30만원</td><td>26</td><td>22.2</td></tr>
<tr><td>2024</td><td>30</td><td>9</td><td>73</td><td>78</td><td>30만원</td><td>30</td><td>2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수요에 기반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td></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 주의 및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외부 업체를 통한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2024년 일반용역비(210-14목)로 1억 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했고 2025년 예산에도 일반수용비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집행 방식과 예산 비목간 불일치가 발생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외주제작 기반 콘텐츠 사업에 대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목조정 없이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항목 구조와 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법원정책
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원가산정 위탁
기준 명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과제 기획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일정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과제가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수행기간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세목</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률)</th><th>차년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2</td><td rowspan="3">정책연구비
(260-02)</td><td>1,026</td><td>324</td><td>-</td><td>1,320</td><td>853(64.6)</td><td>464</td><td>3</td></tr>
<tr><td>2023</td><td>1,026</td><td>464</td><td>-</td><td>1,490</td><td>952(63.9)</td><td>501</td><td>37</td></tr>
<tr><td>2024</td><td>885</td><td>501</td><td>-</td><td>1,386</td><td>1,018(73.4)</td><td>358</td><td>10</td></tr>
</table>
❍ 반복·유사 과제임에도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위탁하고, 특정 기관에 위탁이 편중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정책연구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과제 기획·계약 시점을 조기화해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반복 과제 및 정형적 단가 구조를 갖는 과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등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지침 또는 내규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예산의 내역변경을 통한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사업의 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 및 관리용역비 등 연차별 관련 예산 변경을 협의하지 않고,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할 동 사업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내역변경을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내역변경을 통해 관리용역비를 타 사업에 집행하는 등의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의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2024년 동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집행률은 72%, ‘임차료(210-07목)’의 집행률은 79%로 낮은 편이고, 최근 5년간 해당 비목들의 결산 내역을 보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예산액 4억 9,500만원 중 3억 6,000만원 집행(집행률 72%) - 임차료는 당초 예산액 27억 9,700만원 중 22억 1,000만원 집행(집행률 79%) ○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는 정보통신망 사용비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고, 임차료는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확정금액을 5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목들의 비용 예측이 가능함에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 ○ 특히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인건비로의 이·전용이 잦은데 이·전용을 미리 고려하여 예산을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12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일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범위로 과업을 설정하는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일정을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위탁교육 이수자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교육비 환수조치 제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야간대학원과정,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의 국내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정 기간 법원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명예퇴직자 2명의 교육비 4,700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임 - 환수 미조치 내역 : KAIST 석사과정 900만원, 디지털포렌식과정 3,8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절차와 연계한 훈련비 환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법원보관금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시중은행이 법원보관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용수익금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024년말 기준 잔액 2조 3,409억원) ○ 이에 대해 2022. 8.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개선조치까지 2년 이상 소요되어 상당한 지연을 보이는 등 대법원의 개선조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법원은 2024. 11.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법률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탁법」 개정 관련 법무부와의 협의, 출연금 산정모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원보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예산 적정 수준 계상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송구조지원(1161-30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은 전년대비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지급 건수 및 파산·면책 사건 송달료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 4억 300만원을 불용하여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집행률 77.0%)되었음 - 회생사건 지급 건수는 과거 구조대상 기준별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 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파산·면책사건 송달료 단가도 과거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과다계상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향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계획 시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소년보호사건
등의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년보호 등 지원사업(116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총 사건 수 대비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비율이 2024년 3.4%에 불과하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예산집행률(B/A)</th></tr>
<tr><td>2022</td><td>1,184</td><td>547</td><td>46.2</td></tr>
<tr><td>2023</td><td>1,184</td><td>538</td><td>45.4</td></tr>
<tr><td>2024</td><td>867</td><td>601</td><td>69.3</td></tr>
</table>
※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건, %)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총 사건 수(A)</td><td>29,979</td><td>29,644</td><td>32,020</td><td>36,858</td><td>35,034</td></tr>
<tr><td>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td><td>1,036</td><td>1,772</td><td>1,349</td><td>1,663</td><td>1,184</td></tr>
<tr><td>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td><td>3.5</td><td>6.0</td><td>4.2</td><td>4.5</td><td>3.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비율을 높여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연도 말 계약 체결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긴급하지 않은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2024년 12월 긴급입찰공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 8,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정책연구비(260-02목)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행위임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정책연구비 수행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계획액</th><th>계약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연구용역 계약기간</th></tr>
<tr><td>2021</td><td>30</td><td>29</td><td>-</td><td>29</td><td>2021.12.~2022.9.</td></tr>
<tr><td>2022</td><td>25</td><td>24</td><td>-</td><td>24</td><td>2022.8.~2023.2.</td></tr>
<tr><td>2023</td><td>25</td><td>24</td><td>-</td><td>24</td><td>2023.12.~2024.6.</td></tr>
<tr><td>2024</td><td>25</td><td>25</td><td>-</td><td>25</td><td>2024.12.~2025.6.</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연도 말 계약 체결 및 예산 이월을 지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인건비의 과다한
이·전용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일반 인건비(7001-1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인건비 예산의 과다한 이·전용으로 국회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형해화 함
❍ 인건비 외 특정사업 예산의 과다한 승인 이용을 지양해야 함
※ 2024년도 일반 인건비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일반 인건비</td><td>1,288,541</td><td>4,308</td><td>1,292,849</td><td>1.292.610</td><td>23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정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국선변호료
지급지연 예방을
위한 집행관리
체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선변호료 지원사업(1143-4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각급 법원 예산 배정 시점과 실제 집행 수요 시기가 불일치하고,「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선변호인 보수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수를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법원행정처장에 지연사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법원행정처의 각급 법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2024년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에서 총 206억 원 규모의 지급지연이 발생했음
※ 2024년도 국선변호료 분기별 지급 지연액 현황
(단위: 원)
<table>
<tr><th>분기</th><th>지급 지연액</th></tr>
<tr><td>1분기</td><td>443,715,840</td></tr>
<tr><td>2분기</td><td>3,149,643,240</td></tr>
<tr><td>3분기</td><td>8,918,980,552</td></tr>
<tr><td>4분기</td><td>8,078,336,632</td></tr>
<tr><td>합 계</td><td>20,590,676,26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국선변호료 수요 집중 시기를 반영해 예산 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급요청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집계해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입금 지연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시 경고하도록 하는 등의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형사전자 소송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정보화)(1331-3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2024년 예산액 69억 9,100만원 중 2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29.5%) 48억 3,0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 2023년 시스템 구축 계약 지연에 따른 개발 일정 조정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 일정이 1차 조정되었고, 2024년에도 법무부 KICS 연계기관과의 연계 등 추가 개발기간 확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2개월을 연장하는 2차 조정이 이루어졌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	**법원의 감사 결과 공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7031-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4개 기관을 감사하여 335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하였고, 이 중 시정 82건, 권고 4건, 통보 249건을 시행함 ○ 대법원은 회계감사 등을 포함하여 자체 감사에 관한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으나, 민감정보 내지 개인정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 회복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각급 법원 감사과 등 감사 주무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사법부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복리후생비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복리후생비</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일반회계 복리후생비(210-12목)는 재판일반경비지원 등 12개 사업에 편성되어 예산현액 186억 6,800만원 중 184억 7,600만원 집행되고, 1억 9,300만원 불용되었음
❍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위반하여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4개 사업에서 83건, 총 1억 4,98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복리후생비를 체육행사, 세미나 등에 집행한 사례
<table>
<tr><th>사업명</th><th>주요 내용</th><th>지출금액(원)</th></tr>
<tr><td>사법운영
기본경비</td><td>체육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무국장세미나,
법관 워크숍 등</td><td>39,917,690</td></tr>
<tr><td>사법운영지원</td><td>신임법관 및 교수단 워크숍 등</td><td>14,065,200</td></tr>
<tr><td>사실심충실화</td><td>상사·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등</td><td>34,628,960</td></tr>
<tr><td>재판청구권
실현</td><td>법원행정처 워크숍,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
법원도서관 춘계문화체육행사, 통일사법연구회
워크숍 등</td><td>61,189,13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49,800,98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주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지침을 다시 위반하였으므로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본래 비목상의 적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회의 예비심사 결과 지적 후에도 동일한 예산집행을 반복한 담당자를 시정조치 할 것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세목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 세목조정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일반수용비의 부족사유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전세사기 등 특수사건 접수 건수 및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처리 사건 수 증가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폭증으로 각급 법원의 위생용품 등 필수적인 용품 구입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세목변경 세부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목변경의 사유와 타당성을 심사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과도한 세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세목변경 세부내용을 작성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어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다양한 언어 통역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채용방식 외에 수시로 필요한 통역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법정 통역서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하게 하여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법정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법정 통번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통역인 5명을 1년 계약으로 고용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수어 등 3개 언어에 대한 수요는 저조하였고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통번역 수요가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정 통역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히 하고,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통해 각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적시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5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결혼이민자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행정 장벽을 겪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와국인 가족정보 데이터 작업인 색인화 지연을 앞당길 것		

정무위원회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5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7011-200)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기본경비의 전용을 통하여 확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다른 예산의 전용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2	**국정과제 점검회의 방식 조속히 확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사업 및 비목에서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전용·조정 등을 거쳐 1억 2,000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주체 및 행사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평가 결과 중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발표하기로 결정함 또한,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및 성과연봉 등 반영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함 - 국세청은 평가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지식재산처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영비율이 각각 4.48%, 7.2%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결과를 보수체계에 충분히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관련 평가내용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으로 5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거나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일을 초래한 기관들을 포상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움 - 행정안전부(1,425만원), 기획재정부(1,225만원), 법무부(5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500만원), 경찰청(125만원) 등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집행 점검에 부응하도록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대테러활동 홍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대테러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은 4,4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지출하여 유튜브 영상제작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한 것이 유일하며, 해당 영상의 조회 수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6	**선급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통하여 제5차 및 제6차 회의를 완료한 2024년 2월 이후 시점인 3월에 계약금액의 80%(1억 2,200만원)의 선급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선급금 지급 시점에 추가회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추가 과업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급금 지급 요건(계약 착수에 필요한 자금)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계약 잔여 이행분이 불확실한 경우 선급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이 ① 임차료 예산으로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료를 장소 제공자가 아닌 행사 용역업체에 지급하여 지출관으로 하여금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점, ② 제7차 회의 관련 용역계약 입찰공고 시의 과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방의 과업내용을 축소하고, 축소된 과업은 분리하여 별도 건으로 하여 그 대가를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지급한 점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위반, 공정성 시비, 과도한 사업내용 변경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8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비 과다지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ODA)(7035-306)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ODA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하였는데,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법률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수정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ODA)(7035-30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동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초에 국회에 보고되지만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ODA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10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 정기감사 적정 수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비로 집행(2024년 20억 7,200만원)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승인받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갖추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의 정기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실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법적 기한 제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로, 1기 위원 임기 종료(2024년 10월) 후 2기 위원 선임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지연되어 2025년 2월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1기 위원이 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며 회의 등이 서면으로 대체 및 축소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중 4억 4,600만원이 불용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업의 정책 공백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정 기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12	**법적 근거 없는 지원단 운영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7035-320)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구 설치 근거를 두면서 존속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법률에서 정한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지원단 상설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근거 법률 개정 및 지원단 폐지 등의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지원단이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신규 위원회 편성 시 성과지표의 사전설정 및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정성적인 요소(회의 개최, 계획 수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유사한 신규 위원회를 편성하는 경우 성과지표(정책 반영 건수, 국제협력 성과 등)를 사전에 설정·보고할 것		
14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이 2024년도에 1차로 구축하여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국무조정실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함. 당초 연간 접속자가 28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적은 7개월 간 100만명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에 따라 2025년도의 운영실적과 미비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신규 정보화사업 편성 시 중복 여부 확인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기존 온라인 청년 플랫폼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신규 편성·집행하여 중복·과다계상 우려가 있고, 성과지표 역시 ‘시스템 구축·운영’ 수준에 그쳐 실효적인 청년정책 성과와 연결성이 미흡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신규 정보화 사업 편성 시 전체 구축 계획·로드맵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고, 유사 플랫폼·센터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것		
16	**청년인턴 지원정책의 적극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7036-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2024년 동 사업 내에 편성된 청년인턴 지원 예산 8억 9,600만원 중 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활동지원 회수도 축소되면서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인턴 지원정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청년들이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반복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8월 최초 설치된 이후 7차례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2027. 12. 31. 까지)하고 있으나, 임시조직의 활동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는 것임 -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2년 이내(훈령 이상 법령에 근거 시 2년 이상)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까지 조직 당국과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더 이상 훈령을 통한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것		
18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동 사업에는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여비를 편성(2024년 1억 3,000만원)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사업 내의 다른 비목으로부터 조정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2022년 2,400만원, 2023년 4,800만원, 2024년 3,800만원을 일반수용비 등으로부터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을 전제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시민사회 소통 관련 제도개선 명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회·정당·시민사회 간 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2년간 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집행도 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재 일회성 간담회 위주로 집행되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와의 불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명확히 하여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국무조정실은 일회성 간담회만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할 것		
20	**조세심판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2024년도에 처리대상 건수 1만 3,356건 중 1만 17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 64.7%에 해당하는 6,582건이 법정 처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담인력 확충,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조세심판 후 불복 소송 제기 건 철저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조세심판원장이 통보받아야 하나, 지방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 사건자료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불복 소송의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세심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고는 있으나, 일부 소송사건이 누락되거나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이 포함되는 등 관련 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완결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행정소송 처리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음으로써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22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심판청구서 접수 외 대부분의 절차가 비전자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국세기본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연구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연구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監事)는 폐지(2020년)한 것에 반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감사(監事)를 두고 있음 - 통합감사조직은 감사의 전문성 축적과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 임명 지연에 따른 자체감사의 효능성 저하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기관 운용의 정합성과 통일성,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처럼 감사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수의계약 비중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들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축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수의계약 규정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R&D)(1535-301), 한국노동연구원(R&D)(1543-301)	시정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규정을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수의계약의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수의계약의 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26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노동연구원(R&D)(1543-301)	시정	한국노동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에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결산잉여금
축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한국교통연구원(R&D)(154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R&D)(1548-3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1550-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1551-3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경제연구원(R&D)(15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수탁용역수입은 계획에 비해 실제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함
※ 결산잉여금의 주요 재원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구기관</th><th rowspan="2">결산잉여금</th><th colspan="5">재원</th></tr>
<tr><th>수탁용역수입</th><th>정부대행사업수입</th><th>이자수입</th><th>기타수입</th><th>정부출연금</th></tr>
<tr><td>한국교육과정평가원</td><td>25,883</td><td>22,928</td><td>2,928</td><td>422</td><td>269</td><td>△735</td></tr>
<tr><td>한국교통연구원</td><td>7,198</td><td>7,553</td><td>△433</td><td>137</td><td>101</td><td>△303</td></tr>
<tr><td>육아정책연구소</td><td>6,586</td><td>6,688</td><td>-</td><td>32</td><td>-</td><td>△134</td></tr>
<tr><td>한국해양수산개발원</td><td>4,187</td><td>4,662</td><td>△121</td><td>197</td><td>124</td><td>△679</td></tr>
<tr><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4,106</td><td>1,708</td><td>-</td><td>119</td><td>5,057</td><td>△2,777</td></tr>
<tr><td>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td><td>2,896</td><td>2,973</td><td>-</td><td>5</td><td>△2</td><td>△80</td></tr>
<tr><td>에너지경제연구원</td><td>2,363</td><td>994</td><td>1,774</td><td>114</td><td>143</td><td>△583</td></tr>
<tr><td>한국개발연구원(KDI)</td><td>2,336</td><td>4,036</td><td>-</td><td>329</td><td>66</td><td>△2,12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8개 기관은 예산 편성 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간접비 과다계상 방지를 통한 결산잉여금 축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한국교통연구원(R&D)(1542-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1551-3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경제연구원(R&D)(15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기관은 수탁용역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간접비 초과분에서 발생하였는데, 간접비의 증가는 직접비의 감소를 초래함
※ 간접비 초과분이 과다한 기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구기관</th><th rowspan="2">결산잉여금</th><th colspan="3">수탁용역 수입</th></tr>
<tr><th>합계</th><th>직접비(비율)</th><th>간접비(비율)</th></tr>
<tr><td>한국교통연구원</td><td>7,198</td><td>7,553</td><td>1,714(22.7%)</td><td>5,839(77.3%)</td></tr>
<tr><td>한국해양수산개발원</td><td>4,187</td><td>4,662</td><td>1,690(36.3%)</td><td>2,972(63.7%)</td></tr>
<tr><td>에너지경제연구원</td><td>2,363</td><td>994</td><td>△55(△5.5%)</td><td>1,049(105.5%)</td></tr>
<tr><td>한국개발연구원</td><td>2,336</td><td>4,036</td><td>1,510(37.4%)</td><td>2,526(6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간접비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7개 기관만이 우선고용 비율을 준수하였고, 20개 기관은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또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미준수 기관이 20개 내외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17개 기관은 5년 연속으로 우선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특히 정부 출연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연구과제 미배정 등으로 인한 수시연구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37억 9,400만원 중 28억 5,200만원을 집행(75.2%)하고 6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18.2%)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6.6%)하였음 -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 2억 8,400만원은 수시연구사업비를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수시연구의 적정한 사업·예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행률(20%) 저조 -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 예산 중 일부를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24.7%) 저조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에서 수시연구사업비로 조정한 금액의 78%를 다음연도로 이월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함께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3.43%), 에너지경제연구원(3.17%), 한국개발연구원(3.68%), 한국노동연구원(1.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3.7%), 한국행정연구원(2.9%) ○ 또한, 다수의 연구기관은 장애인근로자를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근로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5곳(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32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비목 통일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각 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및 외국의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방문을 통하여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다른 예산 비목에서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9개 기관은 국외여비로,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교육훈련비로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예산을 각 연구기관이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국가연구산업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산업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381억 9,400만원(2023) → 187억 7,700만원(2024) → 221억 2,200만원(2025)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산업정책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34	**연구개발적립금의 중장기 연구과제 투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되는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이내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음(178개 중 2건만 중·장기 연구)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이 중장기 연구과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연구개발적립금 운용 개선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현행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자체연구사업에 40% 이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은 기관발전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편법적 증액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연구원(4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58.8%), 한국교육개발원(100%)은 연구개발적립금의 상당 금액을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지원·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비율을 정하는 등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36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R&D)(1535-301)	제도개선	산업연구원
		지적사항	○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예산집행율이 저조(실집행율 14.9%)하며, 인도네시아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인도네시아 파견인력도 당초 예정인력과 다른 인적구성을 보임 - 인도네시아 연락사무소의 개소가 2025년에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사업은 2025년 6월에 실시함 - 당초 파견 계획인력(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공무원 각 1인, 산업연구원 직원 1인) - 실제 파견인력(산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상의 직원 각 1인)		
		시정요구사항	○ 산업연구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과다한 상품권 구입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제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회계연도에만 42차례에 걸쳐 약 1억 59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은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것		
38	**과다한 기념품 제작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제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지적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년 한해에만 69종, 약 8,700만원의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10종 미만의 기념품을 소액 제작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향후 적정한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능률성과급 체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교육개발원(R&D)(1540-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1550-3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D)(1553-301),
한국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은 5개 등급 미만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배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B등급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에 차이가 거의 없음
※ 5개 기관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체계
<table>
<tr><th>기관</th><th>등급 체계</th><th>B등급 분포 비율</th><th>최상·최하 차등지급률</th></tr>
<tr><td>한국교육개발원</td><td>3개</td><td>82.1%</td><td>1.22</td></tr>
<tr><td>한국보건사회연구원</td><td>3개</td><td>73.8%</td><td>1.99</td></tr>
<tr><td>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td><td>4개</td><td>70.0%</td><td>수탁기여도에 비례</td></tr>
<tr><td>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td><td>3개</td><td>76.4%</td><td>1.02</td></tr>
<tr><td>한국육아정책연구소</td><td>3개</td><td>95.4%</td><td>1.1</td></tr>
</tabl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상·최하 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 되어야 하고 업적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하며,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이상으로 배분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은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제도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적사항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년 근속자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 20년 근속자 4명에게 40만원씩 총 16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하여 포상금으로 총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1	**검정 자격 심사 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적사항	○ 한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07년 출판된 문제집을 2022년 출판물처럼 허위 출판 실적을 제출하였고, 검정 신청 교과서에 헌법 정신과 객관적 역사 서술 등의 검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2024년에 검정을 통과하였음. 그러나 2025년 감사원 지적으로 검정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은폐·방치 의혹이 있음.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자격 심사 및 내용 심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신청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서류 검증 시스템 정비, 심사위원 운영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국회로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지적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직·인사·예산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임 -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소장은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관계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적 권한을 보유하고, 직원의 모든 인사 및 직제 규정은 소장의 권한이며, 별도의 회계 및 사업 관리를 함 - 2024회계연도 육아정책연구소 예산현액 83억 1,800만원(정원 61인) ○ 연구기관이 정관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부설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통제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 설립의 입법례처럼 부설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1547-301)	제도개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2025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해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1억 3,700만원임. 그러나 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인 28개 내역사업에 편성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예산 1억 3,700만원을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됨		
		시정요구(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R&D)(1549-301)	제도개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에 연구개발적립금 교육훈련사업 예산 6,800만원 중 퇴직 예정자 6인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 귀산촌 임업후계자 과정, 목공 전문 과정 등에 797만원을 집행하였음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45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한국환경연구원(R&D)(1554-301)	제도개선	한국환경연구원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와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성과평가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환경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714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전액 정규직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하였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환경정책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한국환경연구원(R&D)(1554-301)	제도개선	한국환경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분야의 지식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최근 4년간 환경정책교육원의 과정별 일반시민의 신청 및 수료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환경정책교육원의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일반시민은 2024년 신청인원과 수료인원이 각각 17,969명, 12,971명으로 2021년 29,069명, 18,339명 대비 각각 38.2%(△11,100명), 29.3%(△5,368명)가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교육원 운영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의 참여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의 교육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이후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183개(45.7%)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48	예산의 과다계상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2023년 23.1%, 2024년 31.5%였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2023년 54.9%, 2024년 29.5%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조직 신설 시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 사전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기능상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민간 전문가 전원을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조직 신설 시 기존에 존재하는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근인력보다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탄력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50	청년인재DB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중앙행정기관·위원회·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인재DB를 통해 청년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위원 선임 실적이 저조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 - 중앙행정기관 347명, 위원회 136명, 지방자치단체 97명(이 중 34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 실적 제고 및 활동 기관 다양화를 위해 청년인재DB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임시조직 운영 시 기존 회의장 우선 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임기 1년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별도의 서울 회의실을 9개월(2023.7.1.~2024.4.30.)간 임차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 회의실 임차료 및 공사비, 원상복구비로 총 1억 4,300만원을 집행함 ○ 활동기간이 짧은 임시조직 운영 시 별도의 상설회의장을 신규 임차·공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세종회의장 또는 유관기관 시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국가보훈부(5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과태료는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이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환경 악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38.0%, 미수납액은 3억 3,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 - 2025년은 8월 기준 13.5%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과 대상자 특성 반영</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생활조정수당(11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과거 집행실적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119억 5,800만원)의 약 31%(36억 9,800만원)가 불용되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노력</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6·25자녀수당(1133-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6·25자녀수당 대상 유형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되는데, 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와 신규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 (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6·25 자녀수당 단가
<table>
<tr><th>대상</th><th>2023년도</th><th>2024년도</th></tr>
<tr><td>제적자녀</td><td>월 1,536천원</td><td>월 1,613천원</td></tr>
<tr><td>승계자녀</td><td>월 1,307천원</td><td>월 1,372천원</td></tr>
<tr><td>신규승계자녀</td><td>월 439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114천원</td><td>월 516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114천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 계획 수립 및 보고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비상 상황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산으로 심사 기준 정립과 무관한 전쟁기념관 방문 및 무기체계 관람 등을 실시하는데 약 1,300만원을 사용함 - 이는 보훈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심사 전문성 제고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와 무관한 외부 관람 활동에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성을 할 것		
7	**재정 소요 관리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 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 수검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인원(47,189명)이 과다추계(실제 발송인원 10,527명)되어 집행이 저조(집행률 22%)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상인원을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은 2024년 36만매 교체 발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34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747매를 발급하는데 그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였음 ※ 교체사업 전체 기간(2023년 6월~2024년 12월)의 계획 대비 발급률: 33.1%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홍보 강화, 대상자 안내 등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인력 부족에 따른 검진 지연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고엽제환자검진(1143-36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환자 검진의 주요 검사 항목의 시행건수는 5,322건으로 전년 대비 4,108건 감소(43.6%)하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48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정원</th><th colspan="3">24년</th></tr>
<tr><th>인원(6월)</th><th>인원(9월)</th><th>인원(12월)</th></tr>
<tr><td>서울중앙보훈병원</td><td>110</td><td>9</td><td>9</td><td>9</td></tr>
<tr><td>부산보훈병원</td><td>26</td><td>6</td><td>5</td><td>5</td></tr>
<tr><td>대전보훈병원</td><td>12</td><td>-</td><td>-</td><td>-</td></tr>
<tr><td>대구보훈병원</td><td>12</td><td>1</td><td>1</td><td>1</td></tr>
<tr><td>광주보훈병원</td><td>23</td><td>3</td><td>2</td><td>2</td></tr>
</table>
※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table>
<tr><th>구분</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2">검진
소요기간</td><td>39.8일</td><td>39.3일</td><td>39.0일</td><td>39.8일</td><td>54.2일</td><td>42.3일</td><td>43.6일</td><td>43.1일</td><td>48일</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3">(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td><td colspan="2"></td></tr>
</table>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고엽제환자 검진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범위 확대 및 고엽제검진 전담인력 추가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2024년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정수준 감축할 것” 판정을 받은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세부사업 ‘참전유공자지원’의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인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보조금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액하여 편성하고, 예산 확정 이후 동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사업의 사전 절차 신속 이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운송업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어 개발 및 시스템 적용이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소송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서울교통공사가 운송기관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소송에 대한 체계적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13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사전·사후통제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보상금 또는 수당에서 이용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추계 또한 잘못한 것임 -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553억 1,200만원 이용 -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68억 1,900만원 이용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철구 지급(2150-3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은 2023년 집행률 24.8%, 2024년 집행률 38.9%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1인당 단가를 1,500만원으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임
- 2023년 및 2024년 모두 평균 지원금액은 300만원을 하회함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table>
<tr><th>연도</th><th>예산 편성기준</th><th>실제 집행내역</th></tr>
<tr><td>2023</td><td>17명×1,500만원</td><td>21명(1인당 평균 295만원)</td></tr>
<tr><td>2024</td><td>12명×1,500만원</td><td>27명(1인당 평균 250만원)</td></tr>
<tr><td>2025(6월말)</td><td>12명×1,500만원</td><td>15명(1인당 평균 98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td></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매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해왔으나 2024년은 이·전용 충당 없이 예산액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실제 진료비 발생액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2026년 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비 우선 집행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인데, 2024년 설계비 집행 과정에서 국비는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은 11.9%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이월됨. ○ 이는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17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및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시교체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2020년 제외) 8년 중 7개 연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함 - 2024년 : 예산현액 32억 3,800만원 중 9억 3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7.9%)하고 나머지 2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 성과지표는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정량적 사항인 관람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의 질적 평가가 누락되어 온전한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독립기념관 전시 편성 상황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5년, 광복 80주년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현 관장의 발언이 사회적·국민적 논란이 된 사례가 발생함 - 제7관의 전시물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의 독립운동의 의의가 축소되고, 연합국 원조 활동의 측면 위주로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연합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이 현 관장 취임 후인 2024년도에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달라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제7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운동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편성 상황을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이미 집행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2024회계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가 25년 2월 6일 내지는 7일로 되어 있으나, 결정서 내 교부현황에 따르면 교부는 2024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 등 사업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존재함 - 강원동부지청 등 4곳에서는 2024년에 정상적으로 교부를 결정한 반면, 이외 나머지 지방청에서는 모두 절차를 위반함 ○ (보조율 위반 문제) 일부 사업(100곳 중 9곳)이 100% 국비 지원으로 집행됨 - 100%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재난 등 특수한 국가책무 사업 등이어야 하나, 이 사업은 일반 청소년 문화활동 성격으로, 원칙에 어긋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100% 국비 지원을 받은 곳들 중 보고사업 실적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곳(국제조리고등학교, 통진고등학교, 마리아회고등학교)들도 확인됨 ○ (예산 급증) 동 내역사업 예산은 2020년 6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8억 7,800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함. 급격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와 집행 관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교부결정 절차 위반, 국고보조 시 자부담 원칙 위반,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 및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율 적용 및 교부결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유사사업 재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 자체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국가보훈부 자체 사업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1	**교육 콘텐츠 사전·사후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라이브 온 보훈’ 강의 교안에서 ‘3대 독립운동가’를 설명하면서, 김구·안창호와 함께 이승만을 포함함.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독단적 활동 및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탄핵된 인물로, 자주독립 노선과 배치되는 행적을 보인 이승만을 ‘3대 독립운동가’로 교육하는 것은 역사적 균형성 결여 -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보훈부 교육 예산이 역사적으로 논란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규정·교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보훈에 대한 이해, 공감 증대로 쓰고 있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존재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라이브 인 보훈’ 콘텐츠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제시한 부분을 즉각 수정·삭제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수강생에게는 정정 안내를 하며, 향후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학계검증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사업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창원시 포항시 경우 예산액 전액이 이월,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훈문화관 건립 지연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검토를 고려할 것		
23	**독립기념관 전시 기획 방향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중복성)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중복된 전시임 ○ (정체성 혼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해야 할 공간이 산업화, 민주화, 문화강국 서사까지 다 담으면 독립운동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음 - 독립운동사라는 본래의 주제가 현대 국가발전 서사에 덮여, 관람객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된 채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 독립운동 기념이라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상관 없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를 다루는 전시관 연구용역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획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3146-40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몽골이태준열사 기념관은 전체 금액의 97%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부는 이 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실적 보고서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있는지도 확인 못한 상황임 - 보훈부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세부적인 결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기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현충시설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수령의무를 해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25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국의 현충시설 1,001곳 중 436곳이 사유지인데, 정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음. 그러나, 젊은 후손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 있는 후손은 고령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신경쓰지 못하는 실정임 -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과 관리를 후손들에만 맡겨둬서는 안됨.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독립투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관리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전수 점검을 통해 노후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AI기반 디지털 휴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배포·활용 채널 부재로 실사용이 저조하고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AI 디지털 휴먼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AI 디지털 휴먼 활용 시나리오·상시 서비스모델·교육 커리큘럼·저작권/2차 활용 방안을 문서로 확정·제출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문체부·교육부·지자체 유사 콘텐츠와 기능 매핑표를 제출할 것		
27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및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기념행사(3147-41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도에 2·28민주운동기념행사 등 11개의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초 본예산 29억 6,700만원 대비 6.6% 수준인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함 ○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 국가보훈부는 제출 자료에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편향적 활동 단체 지원 제외 기준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의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등 헌법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이어온 단체임 - 해당 사업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는 주장을 하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하야가 곧 민주주의를 지킨 행위라고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체는 최근 3년간 총 8,500만원의 보훈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기념식·추모식·행사성 사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단체에 예산 지원은 부적절함 -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식에 300만원,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9주기 추모식에 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단체 지원 평가기준(공통·신규·유지/확대·축소/제외)에 따라, 헌법 가치 위반·역사적 사실 왜곡 등 편향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훈부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 향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같이 역사적 사실 왜곡·편향적 활동이 논란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훈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할 것		
29	**의전단 처우 개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대전현충원(3250-35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대전현충원에서 운영 중인 의전단(35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고, 의전단과 실무원의 통합 논의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의전단과 실무원 통합을 포함한 의전단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국립신암선열공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시정,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의 내내역사업으로 “경비실 신축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선행 절차인 공원조성계획 및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당시부터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전액(1억 8,500만원) 집행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누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의 신규 공사 추진 등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신규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관리 강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립묘지조성(3250-3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중 횡성호국원은 주민 반대에 따른 협의 절차로 설계가 지연되었고, 장흥호국원은 총사업비 조정 소요로 기본설계 착수 자체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4년 설계비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었음
※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사업</th><th colspan="3">계획 대비 이행 현황</th><th rowspan="2">비고</th></tr>
<tr><th>구분</th><th>계획</th><th>이행</th></tr>
<tr><td rowspan="3">횡성
호국원
조성</td><td>기본설계</td><td>2023. 4. ~ 2024. 2.</td><td>2023. 4. ~ 2024. 12.</td><td></td></tr>
<tr><td>실시설계</td><td>2024. 2. ~ 2025. 10.</td><td>(2025년 내 추진 예정)</td><td>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2025.8. 종료 예정)</td></tr>
<tr><td>준공</td><td>2028. 12.</td><td></td><td></td></tr>
<tr><td rowspan="3">장흥
호국원
조성</td><td>기본설계</td><td>2023. 11. ~ 2024. 9.</td><td rowspan="2">-
(사업타당성 평가 이행)
(2023. 7. ~ 2024. 7.)</td><td rowspan="2">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5.8. 종료 예정)</td></tr>
<tr><td>실시설계</td><td>2024. 10. ~ 2025. 12.</td></tr>
<tr><td>준공</td><td>2029. 12.</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신규 국립묘지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국립묘지 건립 시에는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묘역관리 예산 편성 추계 정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안·이장 신청이 급증하게 되는 국립묘지 개원 초기(2022년) 신청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안·이장에 소요되는 묘역관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이 부진(집행률 63.9%)하게 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과거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제대군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율
상향 또는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제대군인수업료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 집행액은 앞으로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2024년 제대군인수업료지원 사업의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합 계</th><th colspan="3">고등학교 수업료</th><th colspan="3">대학교 수업료</th></tr>
<tr><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액</th><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액</th><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액</th></tr>
<tr><td>2020</td><td>85</td><td>119</td><td>1.40</td><td>58</td><td>85</td><td>1.47</td><td>27</td><td>34</td><td>1.26</td></tr>
<tr><td>2021</td><td>49</td><td>96</td><td>1.96</td><td>14</td><td>53</td><td>3.79</td><td>35</td><td>43</td><td>1.23</td></tr>
<tr><td>2022</td><td>42</td><td>81</td><td>1.93</td><td>11</td><td>45</td><td>4.09</td><td>31</td><td>36</td><td>1.16</td></tr>
<tr><td>2023</td><td>28</td><td>59</td><td>2.11</td><td>7</td><td>32</td><td>4.57</td><td>21</td><td>27</td><td>1.29</td></tr>
<tr><td>2024</td><td>40</td><td>63</td><td>1.58</td><td>4</td><td>15</td><td>3.75</td><td>36</td><td>48</td><td>1.3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집행 저조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수업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 사업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및 2023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0년 신청자 수보다 적은 숫자로 계상하여 가장 큰 이·전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5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기념행사(4161-420)	시정, 주의,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국가보훈부는 유가족의 고령화,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대규모 귀환행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비협조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3년간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도로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어려울 시 국가보훈부 자체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현실적인 소요 기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기념행사(4161-42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 명비는 당초 계획대로 2개 지역에 2억 3,400만원을, 초중고 명비는 2개교에 계획보다 많은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교 명비(3개교 대상 각 1억원)는 전액 미집행하였음. 대학교 명비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37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4161-42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불용액 24억 2,700만원은 사망·불희망 등 제복 미신청(13억 2,700만원), 모자 미제작(9억원), 낙찰차액(2억원) 등으로 구성됨 ○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데, 특히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신청률이 저조하고, 국가유공자의 요양원 입소, 병원 장기 입원, 제복의 색상 및 질 등의 불만족으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임 ○ 행사성 일회성 지출로 지속적 효과가 불명함 ○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89.5%로 발표했으나, 조사대상이 제복수령자 200인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한 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가보훈부는 2023년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의 공개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7167-42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부진하며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에는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연구용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사업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연구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것		
39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7167-42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당초 추진일정은 계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응답률 저조로 실태조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2024년 12월에 체결하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에 제출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생활실태조사 시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후순위 투찰업체와의 계약 체결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시 국가보훈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63개의 적격 업체 중 53번째 순위로 응찰한 업체임 - 적격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업수행의 시급함을 고려해 2일의 기한을 부여하고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회신토록 한 뒤, 해당 기한 내 회신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임 ○ 법령이 정한 경쟁절차 외에 별도의 응모를 재차 요구하면서 회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사정을 이유로 참여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1	**홍보성 행사 지양 및 교육·상담 중심으로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2160-473)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프로그램은 멘토 활동 지원 및 자녀 국제 교류캠프 행사 등 행사·홍보 위주로 운영되는데, 가족 기능 개선, 재이용률, 중장기 건강 지표 변화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고, 멘토 선정 기준 및 행사 기획·운영에 미흡함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홍보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육·상담·생활지원 등 실질적 복지로 전환하는 한편, 유사사업과 중복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요양원 건립·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부지 매매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 - 2024년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률이 각각 2.3%, 41.0%에 불과 ○ 착공 및 완공 시점이 재차 연기되고 있어, 증가하는 보훈요양시설 이용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우려까지 초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전절차 이행 점검 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43	**민간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인원 산정의 합리성 제고**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민간요양시설 이용 보조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 편성으로 인해 매년 자체변경을 통한 재원 조달이 반복되고 있음 - 매년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적이 아닌 전년도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자체변경 내역: 2020년(391백만원) → 2021년(502백만원) → 2022년(974백만원) → 2023년(593백만원) → 2024년(869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 및 대상자 분류별 지원 예상 인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을 추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보훈원 · 복지타운 입주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원과 복지타운의 입소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가 무의탁 고령 유공자에게 양질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		
4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1 · 2022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수 차례 과오급금 수납실적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여러 수납 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임 - 국가보훈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과오급금 분할납부제, 납부기피자 연체금 징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연계,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등의 후속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식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상금(1132-300)</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매년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계오차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추계오차) 지급 예상인원: 191,448명 / 실제 지급인원: 189,065명
※ 보상금 집행잔액 및 이·전용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집행잔액</td><td>3,026</td><td>24,575</td><td>70,014</td><td>67,158</td><td>71,275</td></tr>
<tr><td>이·전용</td><td>3,020</td><td>24,565</td><td>35,153</td><td>64,247</td><td>71,183</td></tr>
<tr><td>불용</td><td>6</td><td>10</td><td>35,311</td><td>2,911</td><td>6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 현황, 제도 시행 시점, 지급인원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문제를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지양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과거연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인원을 추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모니터링 강화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건립(1238-32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선정 시 추진가능성 철저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2024년 계획된 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월되었음. 이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 기회 상실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함
※ 2024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본예산</th><th>교부현액
(A)</th><th>실집행액
(B)</th><th>실집행률
(=B/A)</th><th>불용</th><th>이월</th><th>특이사항</th></tr>
<tr><td>안동시</td><td>250</td><td>250</td><td>34</td><td>13.6</td><td>-</td><td>216</td><td>사업 지연
(연약 지반 보강공사)</td></tr>
<tr><td>진안군</td><td>250</td><td>250</td><td>91</td><td>36.6</td><td>-</td><td>159</td><td>사업 지연
(위치 변경으로 재설계)</td></tr>
<tr><td>대구
달서구</td><td>250</td><td>250</td><td>-</td><td>-</td><td>-</td><td>250</td><td>사업 지연
(BF인증 지연 등)</td></tr>
<tr><td>서울
송파구</td><td>250</td><td>-</td><td>-</td><td>-</td><td>250</td><td>-</td><td>사업 포기
(지방비 미확보)</td></tr>
<tr><td>대구
동구</td><td>250</td><td>250</td><td>-</td><td>-</td><td>250</td><td>-</td><td>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로 보고할 것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주의,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사업수행자에게 보훈대상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대납액을 모두 정산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지급이 미루어진 바,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024년 지급 대상액 171억 500만원 중 99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의 교통복지카드 사업은 전국호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판단 실패를 보여줬고, 그 결과 재정 비효율성과 미지급금 누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누적 및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개선하고, 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고부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편의성과 영예성 증진이라는 해당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살리되, 예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절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 재정립**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기념관장은 개인적 인맥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의전을 맡기는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 및 운영 원칙을 훼손하였음. 또한 일반 관람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유물 수장고 관람을 특정 집단에 허용하는 등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음 - 관장에게는 2024년에 48,492,000원의 급여와 4,384,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에 지급되는 급여와 경상비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를 재정립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시설·인력 운영 과정에서 시설 대관 및 활용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정 집단·개인의 종교적·사적 목적 사용을 차단하고, 사적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과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유물 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적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시정)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3146-405)	시정, 주의,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은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가 2개년에 걸쳐 편성됨. 그러나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심의가 2025년 3월에 의결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현재까지도 독립의 전당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과정에서 설계안이 대폭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기존 119억원에서 상당 규모 증액이 불가피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발생함 -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충시설 건립 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인허가·심의 절차 지연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의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사전 검토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총사업비 증가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해당사업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논의하였고,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바, 국회에 대해 적극적인 보고가 필요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수업료 국비보전금 등의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2241-33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 등)(2241-45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 보훈부 자체감사에 따르면, 다수의 지방보훈청에서 수업료 국비보전금·학습보조비·장제보조비의 미지급 사례가 확인됨 - 수업료 국비보전금: 3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0건, 859만원 미지급 - 학습보조비: 4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7건, 238만원 미지급 - 장제보조비: 4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89건, 3,780만원 미지급 ○ 해당 지방청들은 이미 2021년 자체감사에서도 동일한 수업료 국비보조금 미지급 사례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제도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훈부는 특정 청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미지급 사례를 확인·지급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2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010년 이후 보훈기금수입에 연례적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매각이 실현되지 않아 수입결손이 초래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기능조정과제 심의 이후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2025년 2월에서야 비로소 매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음 ○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보훈기금에는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조속히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확정 후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29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연구개발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사업(1231-310),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사익편취 행태개선(1261-340), 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동반 성장시책 추진(1331-40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공개함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개발결과물 공개 추이
(단위: 건,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건수</th><th colspan="3">해당연도 과제 완료</th><th colspan="2">총 예산</th></tr>
<tr><th>공개(비율)</th><th>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비율)</th><th>합계(비율)</th><th>예산</th><th>집행</th></tr>
<tr><td>2020</td><td>22</td><td>10(45)</td><td>12(55)</td><td>22(100)</td><td>1,009</td><td>992</td></tr>
<tr><td>2021</td><td>29</td><td>8(28)</td><td>21(72)</td><td>29(100)</td><td>1,305</td><td>1,245</td></tr>
<tr><td>2022</td><td>31</td><td>5(16)</td><td>26(84)</td><td>31(100)</td><td>1,463</td><td>1,429</td></tr>
<tr><td>2023</td><td>29</td><td>6(21)</td><td>23(79)</td><td>29(100)</td><td>1,711</td><td>1,339</td></tr>
<tr><td>2024</td><td>25</td><td>4(16)</td><td>17(71)</td><td>25(100)</td><td>945</td><td>931</td></tr>
</table>
❍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태조사도 비공개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비공개비율이 높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비지수기업의 협약체결 실적은 2개 기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3년 동안 이행평가 실적은 전무함.
※ 가맹분야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협약체결 실적</th><th colspan="5">협약평가 실적</th></tr>
<tr><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지수기업</td><td>11</td><td>11</td><td>11</td><td>10</td><td>12</td><td>10</td><td>11</td><td>11</td><td>10</td><td>12</td></tr>
<tr><td>비지수기업</td><td>6</td><td>6</td><td>6</td><td>6</td><td>2</td><td>2</td><td>2</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17</td><td>17</td><td>17</td><td>16</td><td>14</td><td>12</td><td>13</td><td>11</td><td>10</td><td>12</td></tr>
</table>
❍ 한편, 유통분야의 이행평가 결과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8개(33.3%)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가맹분야 83.3%, 대리점분야 62.5%, 하도급분야 51.9%
※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단위: 개)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최우수</td><td>0</td><td>2</td><td>3</td><td>1</td><td>4</td></tr>
<tr><td>우수</td><td>2</td><td>2</td><td>2</td><td>3</td><td>2</td></tr>
<tr><td>양호</td><td>5</td><td>3</td><td>2</td><td>1</td><td>2</td></tr>
<tr><td>등급외</td><td>17</td><td>17</td><td>18</td><td>19</td><td>1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와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자율규제 정책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배달앱 업체들은 자율규제 항목을 모두 ‘이행 중’이라고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체계를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독과점 행태 규율과 공정한 갑을 관계를 위하여 자율규제 정책을 시정할 것</td></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고포상금 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47.1%로 저조함(15억 8,500만원 불용).
※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지급건수</td><td>55</td><td>31</td><td>43</td><td>67</td><td>37</td></tr>
<tr><td>지급액</td><td>868,655</td><td>2,353,500</td><td>3,157,982</td><td>3,361,515</td><td>1,414,595</td></tr>
<tr><td>예산액</td><td>1,038,000</td><td>2,130,000</td><td>3,130,000</td><td>3,350,000</td><td>3,000,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사건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수탁연구사업 예산편성 ·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적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수탁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24년 예산 2,000만원 중 819만원(40.9%)을 집행하였음 ○ 수탁연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근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가 없음에도 타 기관의 위탁용역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탁연구를 출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행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타 기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탁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는 등 연구용역 위탁기관과의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6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적사항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낙찰차액 2,700만원을 활용하여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 용역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사업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일부(1월, 2월, 11월분의 용역 대금 1,920만원)를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간담회 및 교육 실적은 8회에 불과하므로, 산업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발표회 1회, 연동제 설명회 4회, 간담회 3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설명회(2회), 지역별 현장 설명회(2회, 호남, 영남), 건설업계 간담회(1회), 분쟁조정 간담회(1회), 부산지역 현장 간담회(1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및 실질적 제도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 횟수를 확대하고, 제도 실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국회 결산 및 감사원 지적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에 일반용역비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것 (감사원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예산을 일반연구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평가의 투명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의 일부인 매우 우수사례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소비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10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비의 적정 비목으로 편성 및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은 일반연구임에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임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소비자단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수의계약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7호)」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을 각각 (사)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운영위탁 협약서’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음 ○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수행 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소비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계획액은 34억 1,700만원이나 수납액은 27억 2,200만원으로 6억 9,5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도 자체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21</th><th colspan="3">2022</th><th colspan="3">2023</th><th colspan="3">2024</th></tr>
<tr><th>예산
(A)</th><th>수납
(B)</th><th>결손
(B-A)</th><th>예산
(C)</th><th>수납
(D)</th><th>결손
(D-C)</th><th>예산
(E)</th><th>수납
(F)</th><th>결손
(F-E)</th><th>예산
(H)</th><th>수납
(I)</th><th>결손
(I-H)</th></tr>
<tr><td>전년도
이월금</td><td>1,040</td><td>676</td><td>△364</td><td>1,040</td><td>226</td><td>△814</td><td>952</td><td>506</td><td>△446</td><td>952</td><td>607</td><td>△345</td></tr>
<tr><td>수탁용역
사업</td><td>2,741</td><td>1,751</td><td>△990</td><td>2,318</td><td>1,333</td><td>△985</td><td>1,660</td><td>1,366</td><td>△294</td><td>1,660</td><td>1,397</td><td>△263</td></tr>
<tr><td>교육연수
수입</td><td>40</td><td>9</td><td>△31</td><td>40</td><td>3</td><td>△37</td><td>40</td><td>4</td><td>△36</td><td>40</td><td>1</td><td>△39</td></tr>
<tr><td>이자수입</td><td>125</td><td>70</td><td>△55</td><td>125</td><td>164</td><td>39</td><td>125</td><td>247</td><td>122</td><td>164</td><td>275</td><td>111</td></tr>
<tr><td>기타수입</td><td>601</td><td>127</td><td>△474</td><td>601</td><td>108</td><td>△493</td><td>601</td><td>144</td><td>△457</td><td>601</td><td>442</td><td>△159</td></tr>
<tr><td>합 계</td><td>3,946</td><td>2,506</td><td>△1,914</td><td>3,523</td><td>1,726</td><td>△2,290</td><td>2,777</td><td>2,123</td><td>△1,111</td><td>2,816</td><td>2,280</td><td>△69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10억 5,800만원 중 8,800만원을 분쟁조정 사업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비는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		
14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사업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제품 차단 등 신유형·신기술 제품과 국민 밀접 이용 시설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도 국민 밀접 이용 시설 안전 실태조사 중 위해제품 조사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품목 군에 해당하는 제품 선정 과정이 전수적 조사라기보다는 임의적 부분적 선별에 가깝고,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등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보편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적 여지를 둘 수 있는 기준에 가까워 피조치 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유발됐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제품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하는 한편, 조사 절차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하고, 평가 기준은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과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되었고 그 조정 결과 환급 결정에도 일부 판매사와 결제대행사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강화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	**소비자 소송지원 예산 운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저조한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소송지원 관련 본예산은 5,800만원, 수정예산은 4,8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감액 배분하였음 - (항)분쟁조정-(세항)피해구제 항목 안에서 소비자 상담, 소송지원, 피해구제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불성립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와 운영계획을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일반사건의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소송지원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현재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의 내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2022년 9%, 2023년 14%, 2024년 13%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8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공정거래지원-공정거래정책 알리기(7031-300),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1), 전산운영경비(7031-302),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7),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지침에 따라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카르텔환경개선(1241-32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동일한 목적의 국외 출장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성 예산을 혼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 2024회계연도 동일 목적의 국외 출장 집행 내역
(단위: 천원)
<table>
<tr><th>출장목적</th><th>세부사업명</th><th>집행액</th><th>출장지</th></tr>
<tr><td>OECD 경쟁위원회 오픈데이 및 백투백 워크숍</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td><td>6,478</td><td rowspan="3">프랑스</td></tr>
<tr><td>OECD 경쟁위원회
2024년 6월 정기회의</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56,205</td></tr>
<tr><td>OECD 경쟁위원회
2024년 12월 정기회의</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카르텔환경개선(1241-320)</td><td>40,616</td></tr>
<tr><td>경쟁주창 관련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td><td>15,638</td><td>스페인</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국외업무 여비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정거래지원(7031-3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인지면담 과정은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취소 결정된
과징금의 조속한
환급절차 완료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 (7031-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업무도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을 초과(47건 중 15건)하고 있음
* 2024년 과징금 수납액 3,016억원, 환급액 1,319억원(환급율 43.8%)
* 과징금 환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지급한 가산금 14억 7,800만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에 앞서 신중한 법리검토와 분석을 선행하고, 취소 결정된 과징금은 조속히 환급절차를 완료할 것</td></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변호사 선임료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 (70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변호사 선임료 비용이 초과하여 배상금 및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을 이·전용하여 사용하였음(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이·전용 발생)
※ 최근 3년 변호사 선임료 예산 및 집행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7월</th></tr>
<tr><td>예산(집행)</td><td>2,875(2,944)</td><td>2,875(2,921)</td><td>2,875(3,003)</td><td>3,475(1,87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이·전용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G-클라우드 전환 사업 집행부진 유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화기반확충(7032-501)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후화된 대표누리집을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하여 G-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수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사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상당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잔존함 * G-클라우드 전환 예산 5억 8,4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이월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수납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함
- 2024년 과징금 체납액은 총 249건 787억 4,100만원이고, 과태료 체납액은 총 711건 19억 8,000만원임
※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추이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과태료</td><td>67.5%</td><td>52.9%</td><td>53.7%</td><td>45.3%</td></tr>
<tr><td>과징금</td><td>59.8%</td><td>55.7%</td><td>65.9%</td><td>23.1%</td></tr>
<tr><td>가산금</td><td>1.9%</td><td>6.1%</td><td>3.2%</td><td>2.7%</td></tr>
</table>
❍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납된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증가하고 있음
-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징금은 287억 5,3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36.5%를 차지하고,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태료는 11억 7,7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59.4%를 차지함
-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고, 과징금은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전체 미수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 등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직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격년에 1인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전공, 관련 자격증, 근무경력 및 평정, 포렌식부서 경력 등 고려
(훈련 후 보직) 디지털포렌식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2인의 경우 포렌식 부서 경력이 없었고,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부서배치 현황
<table>
<tr><th>구분</th><th>2021~2022년 위탁교육</th><th>2023~2024년 위탁교육</th></tr>
<tr><td>교육 이전 재직부서</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8.1.~2023.12.)</td></tr>
<tr><td>전체 재직기간 중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 경력</td><td>-</td><td>-</td></tr>
<tr><td>교육 이후 재직부서</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td><td>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3.12.~현재)</td></tr>
</table>
*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 디지털포렌식 TF(2010.4.~2017.9.), 디지털조사분석과(2017.9.~2023.4.), 조사총괄담당관실(2023.4..~현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한 내부전문가가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보직배치에 유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현재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상 분쟁조정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있어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특히 조정 불성립 시 추가적인 후속조치나 별도의 구제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구제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률 제고방안과 함께 불성립 이후 후속조치 마련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집단분쟁조정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 신속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 급증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시스템 증설공사를 위해 2025년에 3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8월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다수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이용자 수와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함 -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에 노후 전산네트워크 교체 관련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을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할 것		
28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당 정산 지연 문제 반복 발생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여 소비자단체가 지급한 상담 수당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 예산으로 사후 집행하였음 - 티몬·위메프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단체가 수행한 상담 수당 일부를 연내에 정산하지 못하여 2025년 예산으로 2024년도 미지급분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발생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수당 정산지연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과징금 일부 패소 환급 기간단축 및 승소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징금(56-565)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 수납 후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과징금 부과처분 일부 패소가 해당연도 통계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기준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발생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과징금 3,015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행정소송 패소 및 자진신고 감면 등 1,319억 4,000만원을 환급하고 128억 1,700만원을 다시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1,824억 4,400만원을 수납함(최종 수납률 60.5%)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확정된 과징금액 기준으로 98.2%를 전부승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패소로 인한 환급액이 당해연도 수납액의 40%를 넘을 정도로 큰 상황임 - 일부패소 확정판결 중 판결취지에 따른 과징금의 재산정 및 재부과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전체 취소하였다가 재부과되는 과정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과징금이 재부과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관련 통계에서 제외되어 승소율의 착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패소 시 과징금 재부과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승패소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징금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4. 금융위원회(40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2024년부터 동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분할공모 방식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컨설팅 용역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는 용역사업자가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		
3	**핀테크 온라인 교육 운영 성과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핀테크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핀에듀)은 2024년 23종 강좌에 대해 77회 개설하였으나, 강좌 개설 1회 당 평균 수료 인원은 2.4명, 총 수료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성과 관리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예산 하에서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제 분담금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과 2025년에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부족*하여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함 *2024년과 2025년에 국외업무여비 등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 4,800만원을 전용함 ○ 그 결과 2024년에는 계획한 국외출장 4건 중 1건만 집행되고, 2025년에는 계획된 국외출장이 대부분 집행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제 분담금의 증가율 및 환율 변동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장 등 국제공조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축소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공급 사후 관리에 집중한 결과 6개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15)의 총 대위변제액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고, 서민금융 공급 조절 차원에서 2024년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2023년 대비 감소(10조 6천억원→9조 3천억원)하였는데, 이는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중인 서민금융상품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가입유인 제고 등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도해지율) 2023년말 8.2%, 2024년말 14.7%, 2025년 4월 기준 15.3%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구조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7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최근 개편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하여도 정부기여금의 일부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도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본래 정책목표와 반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부분인출서비스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신규사업 도입에 앞서 기존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평가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경우 집행가능성이 없는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월·유보잔액만 증가시키는 등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만기와 과도한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가입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가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전액을 납입하는 비중이 43.6%에 달하는 등 사업의 핵심지원대상인 저소득 청년층보다는 소득여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앞서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적 부진, 높은 중도해지율 및 수도권·고소득 집중 경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중장기적 재원 조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햇살론15 상품은 2019년 9월 신규 출시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잔액이 고갈됨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정부재정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 햇살론15 사업의 대위변제율이 빠른 상승 추세*에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재정 외에도 현재 서민금융보완계정에 확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출연금(2025년 4월 기준 약 1,296억원 규모) 역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2026년 10월부로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근거가 실효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보증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대위변제율)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 2024년 25.5%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5 사업의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고 금융회사 출연금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현행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 근거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햇살론15 사업 예산 900억원이 전액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900만원보다 적은 78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지원인원은 당초 예측한 7.2만명보다 많은 8.5만명이었음. 이는 금융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돈을 빌려주는 '쪼개기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햇살론15 사업 수요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지원 실적을 부풀리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1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지원 인력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일부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인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고, 소송 전 구조건수가 2024년과 2025년 모두 0건으로 파악되는바, 동 제도가 단순 대응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채무 종결 여부 및 재추심 발생 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 관리 등 사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추심 발생 여부를 표준 양식으로 의무 집계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혁신성장펀드 재편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혁신성장펀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 유인 부족, 투자대상 중복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기존 정책자금 및 정책펀드와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고,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며, 투자 집행률 관리가 미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의 운용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통합·폐지하고, 그 외의 기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체계를 고려하여 재편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		
13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1곳(충북 단양)에 불과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및 배분 취지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지역개발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차별성 있는 지역개발프로젝트 선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케이블카, 어드벤처돔 등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지역개발프로젝트 선정시 타 지역 개발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15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성과평가 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 성과평가시 연도내 자펀드 결성 실적(0원)이 아니라 일부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 예상 규모(3,086억원)를 성과로 산출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의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채권금융회사
동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2025년 6월까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은 34.2%에 불과함
※ 새출발기금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현황
<table>
<tr><th>2025. 6.까지 동의회신 대상</th><th>동의</th><th>부동의(과반동의계좌 포함)</th></tr>
<tr><td>425,344계좌
(100%)</td><td>145,512계좌
(34.2%)</td><td>279,832계좌
(65.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td></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대부업계의
협약가입 등
제도개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상호금융업권 및 대부업체 채권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새출발기금 협약을 거부하면서 실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 및 대부업계의 협약가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 대상
선정 절차 진행
독려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2432-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제6호펀드와 제4호·제5호펀드의 투자 집행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될 수 있음
※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5호 결성 및 집행 현황(2025.6.기준)
(단위: 억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결성 현황</th><th colspan="2">집행 현황</th></tr>
<tr><th>모펀드</th><th>민간자금</th><th>자펀드결성(A)</th><th>투자실적(B)</th><th>집행률(B/A)</th></tr>
<tr><td rowspan="3">4호</td><td>소 계</td><td>5,000</td><td>6,190</td><td>11,190</td><td>4,577</td><td>40.9%</td></tr>
<tr><td>프로젝트</td><td>2,200</td><td>2,800</td><td>5,000*</td><td>2,159</td><td>43.2%</td></tr>
<tr><td>블라인드</td><td>2,800</td><td>3,390</td><td>6,190</td><td>2,418</td><td>39.1%</td></tr>
<tr><td rowspan="3">5호</td><td>소 계</td><td>5,000</td><td>8,367</td><td>13,367</td><td>1,855</td><td>13.9%</td></tr>
<tr><td>프로젝트</td><td>1,650</td><td>1,850</td><td>3,500*</td><td>-</td><td>-</td></tr>
<tr><td>블라인드</td><td>3,350</td><td>6,517</td><td>9,867</td><td>1,855</td><td>18.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 대상선정 절차진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현황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특정업무경비 개인별 지급 시 현금 집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02)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관련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및 검사활동 비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소속 직원 64명에게 개인별 월정액으로 집행(2024년 1억 3,600만원)하는 과정에서, 2024년 3월까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개인별 계좌 지급 원칙'과 달리 부서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 시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적자금상환기금 - 예수원금상환(9111-8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른 재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
(7월말)</th><th>2026
(계획안)</th><th>2027
(계획안)</th></tr>
<tr><td rowspan="2">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td><td>원금</td><td>6,290,225</td><td>6,402,465</td><td>8,345,572</td><td>8,842,338</td><td>4,084,124</td><td>8,718,811</td><td>5,894,626</td></tr>
<tr><td>이자</td><td>799,543</td><td>647,009</td><td>537,709</td><td>484,798</td><td>232,530</td><td>302,592</td><td>60,121</td></tr>
<tr><td rowspan="2">원리금
상환계획</td><td>원금</td><td>6,290,225</td><td>6,402,465</td><td>8,345,572</td><td>9,840,902</td><td>5,997,739</td><td>8,718,811</td><td>5,894,626</td></tr>
<tr><td>이자</td><td>844,790</td><td>703,109</td><td>651,458</td><td>549,755</td><td>438,282</td><td>302,592</td><td>60,121</td></tr>
<tr><td colspan="2">잔액(원금)</td><td>38,648,264</td><td>32,232,982</td><td>28,011,614</td><td>20,611,176</td><td>14,613,437</td><td>5,894,626</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다음 세대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주의	금융위원회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2024년말 기준 17.3배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출연(2024년 300억원, 2025년 1,500억원)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 운용배수는 여전히 16.7배로 전망되므로, 실질적인 건전성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배수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순신규보증총량제 정착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		
22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 노력 필요 등**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금(2432-680)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에 따른 부실보증의 급증과 대위변제 증가로 인하여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기금 자체변경의 법정상한(30%)에 근접한 26.1%와 28.0%의 자체변경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위변제 증가와 기금운용계획의 반복적 자체변경은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시 대위변제금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여유자금 운영 관련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여유자금운용(9701)	주의, 제도개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88%로, 사업체계가 유사한 신용보증기금(5.73%)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6.21%)의 수익률에 비해 저조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리스크관리팀이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인력이 팀장 및 담당자 각각 1명에 불과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자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조직의 분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주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 여유자금의 관행적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24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시정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년 1:1 비율로 출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2022년, 2025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를 권고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정부출자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정부출자수입(52-52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정부출자수입’ 과목 편성시 매년 ‘출자회사 및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만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의 대부분은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SPC 출자금과 대물주식 배당금’에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자수입 산정 시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한 SPC 출자금 및 대물주식 배당금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반영하는 등 계획 대비 실적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적정규모 대위변제 계획액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주의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의 2024년 기업규모별 예상 부실률이 실제 부실률에 비해 과다 추계되어, 동 계정에서 대위변제액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2024년 3,048억원 중 2,466억원이, 2023년에는 2,109억원 전액이 각각 불용됨 ○ 이러한 결과는 예상 부실률 산출 시 과거 경험 부실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 부실률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부실률을 현실화하여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공사 추진 시 관련 절차 사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업무용건물(2431-305)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고, 그 결과 설계·인허가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2025년 12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음 * 2024년에는 6억 3,700만원만 집행되고 53억 6,200만원은 이월됨 ○ 본점 주차타워 공사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5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BF 인증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고, 그 결과 설계 및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2025년 9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음 * BF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24년에는 17억 5,900만원만 집행되고 41억 4,000만원은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향후 업무용건물 관련 공사를 추진할 때 필수적인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2431-307)	주의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비용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음 * 계획액 및 집행액: 2024년 (계획액) 36억 6,000만원 (집행액) 15억 1,500만원 2023년 (계획액) 31억 6,400만원 (집행액) 17억 500만원 - 이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펌뱅킹 방식의 수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수납액) 펌뱅킹: 4,075억원(2020) → 5,834억원(2024), 신용카드: 1,075억원(2020) → 677억원(2024) * 신용카드 수수료는 보증료의 평균 2.28%, 펌뱅킹은 건당 최대 200원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료 납부 금액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9	**과도한 정부재정 출연 지양**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운용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등 제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공급목표 대비 공급실적이 저조함 - 국가재정으로 투입한 7,6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예상 잔여재원 중 2,000억원은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간 조율을 통해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당초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받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 2631-30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보증, 반환보증, 사업자보증 및 연금보증 상품 모두에서 전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그리고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증가하였음 - 또한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 주신보계정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 2631-30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획 대비 과다해짐에 따라 공사는 2024년도 총 3회에 걸쳐 ‘대위변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주신보계정 총 30.0%, 주연보계정 총 79.4% 규모의 증액을 실시함		
		시정요구사항	○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후 연간 기금의 대위변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32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관련사업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재고자산매각대(73-73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지적사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보유 자산을 매각해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출자금융회사 주식의 매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청산 일정(2027년)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 귀속 등 대체방안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33</td><td rowspan="2">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td><td rowspan="2">시정,
주의</td><td rowspan="2">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기여금 지원’은 2023년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이월잔액이 3,008억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추계하여 편성하고 이를 전액 교부함에 따라 이월금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음
- 2024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3,030억원을 출연하였는데, 2024년도 말 누적 가입 인원이 당초 계획(250만명)에 못 미치는 157만명에 불과하고 동 사업의 연간 집행액이 2,840억원에 그친 결과, 2024년도말 진흥원 내 유보잔액이 3,2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청년도약계좌 예산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편성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r>
<tr><td>2023년</td><td>344,037</td><td>344,037</td><td>-</td><td>344,037</td><td>43,221</td><td>300,816</td></tr>
<tr><td>2024년</td><td>359,043</td><td>359,043</td><td>300,816</td><td>603,809</td><td>284,329</td><td>319,480</td></tr>
</table>
- 특히 기여금 지원 예산액 총 3,600억원 중 560억 5,000만원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만기 지급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내역변경되었음</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차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사업 교부액 중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시정) ○ 금융위원회는 신사업(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실적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시정)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결과 사업 예산의 약 15%를 타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데 활용하고 수시로 가입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초기 정책 설계 실패에 따라 하락한 정책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의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 현황과 가입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채권매입 목표 재검토 및 재원 조달 비중 등 재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적사항	○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51개월간 신청을 받아 총 33.4조원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시작 이후 33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기준 총 10.4조원의 매입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실적은 31.1%에 불과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 금융회사 채무(대부업 채무 제외) ○ 채권매입비용을 국가재정과 공사가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가재정은 계획 대비 65%가 투입된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1.4%만 자금을 투입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향후 중장기 매입 수요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총 채권매입 목표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자규모와 재원 조달 비중 등을 재산정할 것 ○ 금융위원회는 목표 대비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에 근거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대상 범위에 대부업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내역사업별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현액의 50%인 6억 2,800만원만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교부하였고, 공단은 교부받은 금액 중 5억 7,199만원만을 실제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에 집행한 바, 2024년도 실집행률은 45.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채무자 본인 외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목표를 4,560건으로 설정한 것에 비해 실제 지원실적은 연간 총 10건으로 저조함 * 2024년도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총 2,924건, 부수사건 소송대리 총 162건, 관계인 대리인 선임 총 10건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불법추심 등 변화하는 범죄수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서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향후 실효성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향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선정·조성 단계의 문제점 점검 및 운용방안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선정된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여 동일 프로젝트 재선정을 통한 펀드 결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보되어 한정된 정부 재정 투입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프로젝트 선정과 동시에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을 위한 민간자금 모집 절차를 시작했으나, 연내 자펀드 결성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전무함
- 자펀드 결성시한은 원칙적으로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함
※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선정 및 결성현황
<table>
<tr><th>지역</th><th>프로젝트명</th><th>1차
연장</th><th>2차
연장</th><th>결성여부
(2025.5)</th><th>투자액
(2025.5.)</th></tr>
<tr><td>단양</td><td>단양역 복합관광단지</td><td>❍</td><td>❍</td><td>×</td><td>-</td></tr>
<tr><td>구미</td><td>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td><td>❍</td><td>❍</td><td>×</td><td>-</td></tr>
<tr><td>여수</td><td>여수 묘도 LNG 터미널</td><td>❍</td><td>-</td><td>❍</td><td>2.5억원</td></tr>
<tr><td>경주</td><td>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td><td>❍</td><td>❍</td><td>×</td><td>-</td></tr>
<tr><td>서산</td><td>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지역개발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선정, 민간자금 모집 현황 및 사업 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펀드 운용방안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프로젝트 선정 및 관련 자펀드 조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주의)</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에 정부출자금 560억원을 활용하여 2,8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목표하였으나, 대위변제율이 예상보다 급증한 결과 실제 보증공급 실적은 1,935억원(목표 대비 69.1%)에 그쳤음 - 동 사업의 예산액은 목표 보증공급액에 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2024년도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손실률을 상향(20%→33%)함에 따라 보증공급액이 감소되었다는 설명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초기 부실률 예측 실패에 따라 보증공급이 축소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최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보증사고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리스크 관리 철저 등**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이 일반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순자산은 잠식된 상태이고, 현금재원도 부족한 상황임 * (2024) 소상공인 위탁보증 / 일반보증 : (부실률) 16.7% / 3.6%, (대위변제율) 19.7% / 3.2% - 부족한 현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보증 계정에서 2,000억원을 임시 전용(2024년)하고, 소상공인 대환보증 계정에서 예상 잔액 2,000억원을 전용(2025년)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에 일반보증으로부터 임시 전용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효과성이 미비한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벗어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D-테스트베드 경쟁률 저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D-테스트베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개 유형의 경우 경쟁 없이 지원을 받고 있어, 경쟁없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음 - ‘D-테스트베드’ 사업(2024년 10억 1,000만원 편성·집행)은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것임 - D-테스트베드 경쟁률은 2023년 1.10:1, 2024년 1.13:1로 낮고, 2024년 공익과제형과 협업과제형 모두 신청자 전원이 선정됨 - 테스트 과제 간 경쟁이 없는 경우 성공가능성·혁신성 높은 과제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 없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실효적인 혁신금융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대규모 대위변제의 안정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2631-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1~2024년 대위변제는 총 1조 9,923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는 1조 3,364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2021) 2,286억원 (2022) 3,168억원 (2023) 5,891억원 (2024) 8,579억원 ○ 국회에서 2023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대위변제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금융위는 2025년 8월 중 추가 개선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체계적인 실사와 선순위채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시행에 문제가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확산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 심사 단계에서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등의 현황 등의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기 경보 및 후속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위변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국민권익위원회(1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56-56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16건(76.1%)이 취소됨 - 권익위의 24년 1심 판결 선고 9건 중 패소가 5건임(나머지 승소 2건, 각하 2건) ○ 소송이 제기된 9건 중 패소가 8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잘못된 또는 성급한 법 집행이 미수납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처분 부과 대상자인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및 부담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2024년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함 - 권익위가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50억원을 상회함 ○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 또한 연말에 5~7개 기관에 한정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		
3	**총액인건비 제도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대상)(1101-10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사업비의 일용임금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 인건비(대상)”를,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의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이는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임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고금 관리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고금 관리법령은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07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국고금 관리법」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기관 홍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간
집행계획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홍보비 예산은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 추진됨
- 사업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고, 홍보사업이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2024년 홍보비 예산 월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table>
<tr><th colspan="2">기간</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th></tr>
<tr><td rowspan="3">1분기</td><td>1월</td><td>3,676</td><td rowspan="3">20,078</td><td>0.3</td><td rowspan="3">1.4</td></tr>
<tr><td>2월</td><td>6,511</td><td>0.5</td></tr>
<tr><td>3월</td><td>9,891</td><td>0.7</td></tr>
<tr><td rowspan="3">2분기</td><td>4월</td><td>35,349</td><td rowspan="3">135,674</td><td>2.5</td><td rowspan="3">9.7</td></tr>
<tr><td>5월</td><td>25,533</td><td>1.8</td></tr>
<tr><td>6월</td><td>74,792</td><td>5.4</td></tr>
<tr><td rowspan="3">3분기</td><td>7월</td><td>93,662</td><td rowspan="3">253,251</td><td>6.7</td><td rowspan="3">18.2</td></tr>
<tr><td>8월</td><td>132,736</td><td>9.5</td></tr>
<tr><td>9월</td><td>26,853</td><td>1.9</td></tr>
<tr><td rowspan="3">4분기</td><td>10월</td><td>126,748</td><td rowspan="3">984,540</td><td>9.1</td><td rowspan="3">70.7</td></tr>
<tr><td>11월</td><td>137,499</td><td>9.9</td></tr>
<tr><td>12월</td><td>720,294</td><td>51.7</td></tr>
<tr><td colspan="2">계</td><td>1,393,543</td><td>1,393,543</td><td>100.0</td><td>1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분산 집행하여 홍보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장기간 미이행
과제의
신속한 이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고충제도개선(1134-34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기한이 도래한 186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 수는 82개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 수는 17건에 달함
※ 2020~2024년 부패·고충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
(단위: 건,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권고</th><th colspan="3">이행</th><th rowspan="2">이행률
(=B/A)</th></tr>
<tr><th>부패방지</th><th>고충예방</th><th>합계(A)</th><th>부패방지</th><th>고충예방</th><th>합계(B)</th></tr>
<tr><td>2020</td><td>12</td><td>36</td><td>48</td><td>10</td><td>26</td><td>36</td><td>75.0</td></tr>
<tr><td>2021</td><td>18</td><td>18</td><td>36</td><td>12</td><td>10</td><td>22</td><td>61.1</td></tr>
<tr><td>2022</td><td>12</td><td>25</td><td>37</td><td>7</td><td>8</td><td>15</td><td>42.9</td></tr>
<tr><td>2023</td><td>7</td><td>25</td><td>32</td><td>2</td><td>7</td><td>9</td><td>36.0</td></tr>
<tr><td>2024</td><td>4</td><td>29</td><td>33</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53</td><td>133</td><td>186</td><td>31</td><td>51</td><td>82</td><td>44.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도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민원상담위원의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1년으로 하여 위촉하는 위촉직임에도, 고용부담금 비목에서 사회보험료를 집행함 - '고용부담금' 비목은 기타직·상용직·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국가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임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원상담위원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하도록 할 것		
8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증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콜110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지속되고 있고, 2024년의 경우에는 타 사업의 상용임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600만원에 달함 ※ (상담사 인건비 불용액) 21년 6억 4,000만원, 22년 5억 4,300만원, 23년 6억 300만원 ※ (근로조건) 악성민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정원(228명)의 23%(52명) 퇴사 / 다산콜센터에 비해 인건비 31만원 차이(1호봉 기준)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상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업무별 예산 구분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은 신고 사건 처리와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와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10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국회 자료요구 성실 이행 및 예산집행 점검 협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의 과정·내역·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예산 집행 점검 절차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1136-368)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4년(2022년~2025년) 보상금 신청인원이 8명에 그쳤고, 그 중 지급요건을 갖춘 신고사건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 (2022년) 500만원, (2023년) 600만원, (2024년) 600만원 전액 불용 발생 - 2025년 예산 편성시부터 각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보·포상금(부패신고 · 공익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사업으로 일원화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포상금 관련 비목이 일원화되었으므로, 예산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차년도 구축 사업 착수가 지연(2024년 6월~2025년 6월)되었고 2차년도 고도화 사업 또한 순연되었음 -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97~99%)보다 크게 낮은 85.2%에 그쳤으며, 일반연구비 잔금 및 자산취득비 등 3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당초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전체 118개 행정심판기관 중 28개 기관이 불참하여, 2025년 6월 개통 시 90개 기관만이 참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 편의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행정심판 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		
14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세목조정하였고, 추가로 일반수용비(210-01) 5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함 ○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 인원·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이 상이하며,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를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함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조정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일반용역비(210-14목)가 예산액의 2배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용역사업인 ‘초등학생 청렴캠프’를 추진한 것에 주로 기인함 ○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해 당초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이해관계 점검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청렴 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점검 및 조기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체계를 보완·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행정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심판운영(1137-37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정 최장 처리기간(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특히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재정경제, 국토해양, 환경문화 등의 재결사건은 평균 80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음

※ 2022~2024년 연도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평균
재결기간</th><th colspan="4">재결기간별 건수(비중)</th></tr>
<tr><th>60일 이내</th><th>60일 초과
90일 이내</th><th>90일 초과</th><th>계</th></tr>
<tr><td>2022</td><td>75.83</td><td>13,570(64.1%)</td><td>2,677(12.7%)</td><td>4,912(23.2%)</td><td>21,159(100.0%)</td></tr>
<tr><td>2023</td><td>60.11</td><td>19,616(70.3%)</td><td>3,445(12.4%)</td><td>4,826(17.3%)</td><td>27,887(100.0%)</td></tr>
<tr><td>2024</td><td>55.60</td><td>13,563(70.1%)</td><td>3,019(15.6%)</td><td>2,775(14.3%)</td><td>19,357(100.0%)</td></tr>
</table>
※ 2024년 소관 과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평균
재결기간</th><th colspan="4">재결기간별 건수(비중)</th></tr>
<tr><th>60일 이내</th><th>60일 초과
90일 이내</th><th>90일 초과</th><th>계</th></tr>
<tr><td>재정경제심판과</td><td>80.0</td><td>466(38.2%)</td><td>322(26.4%)</td><td>432(35.4%)</td><td>1,220(100.0%)</td></tr>
<tr><td>국토해양심판과</td><td>81.3</td><td>464(41.4%)</td><td>248(22.1%)</td><td>410(36.5%)</td><td>1,122(100.0%)</td></tr>
<tr><td>환경문화심판과</td><td>89.1</td><td>406(35.5%)</td><td>231(20.2%)</td><td>507(44.3%)</td><td>1,144(1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해 개선권고 후 이행 실태를 점검함. 그런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구체적으로 2022년 권고의 이행률이 제・개정법령은 91.7%, 자치법규는 70.6%로 양자 간 21.1%p, 2023년 권고의 이행률은 제・개정법령은 82.9%, 자치법규는 46.2%로 양자 간 36.7%p의 차이를 보였음
※ 2022~2023년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실적
<table>
<tr><td colspan="6">(단위: 건, %)</td></tr>
<tr><td colspan="2">구분</td><td>개선
권고(A)</td><td>관리
종결(B)</td><td>이행(C)</td><td>미이행
(=A-B-C)</td><td>이행률
[=C/(A-B)]</td></tr>
<tr><td rowspan="2">제・개정법령</td><td>2022</td><td>324</td><td>22</td><td>277</td><td>25</td><td>91.7</td></tr>
<tr><td>2023</td><td>158</td><td>18</td><td>116</td><td>24</td><td>82.9</td></tr>
<tr><td colspan="2">구분</td><td>개선
권고(D)</td><td>이행(E)</td><td>미이행
(=D-E)</td><td>(불수용)</td><td>이행률(=E/D)</td></tr>
<tr><td rowspan="2">자치법규</td><td>2022</td><td>1,972</td><td>1,393</td><td>579</td><td>(18)</td><td>70.6</td></tr>
<tr><td>2023</td><td>2,199</td><td>1,017</td><td>1,093</td><td>(82)</td><td>46.2</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1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출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 이자반납액인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를 산출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160.0%로 나타나 예산액이 상당히 과소계상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과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것		
2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자문료 지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연구나 신규제도 설계 등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동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출연사업으로는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고, 법 개정안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은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문료를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개인정보보호 예산 집행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교육’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여 관련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8억 3,500만원 중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4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1억 1,400만원)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5등급(S/A/B/C/D) 중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2025. 6. 6.)되어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하위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의 집행부진 부적정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주의,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결과 제도 시행일(2025년 3월 13일)까지도 전문기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 역시 상당히 부진하였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개정법률 부칙에서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을 2024년 3월 13일로 정하였으나 관련 하위법령은 2025년 2월 25일에야 시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신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거 규정 마련을 선행한 후 소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과 분야,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됨 - 서비스 개발주체에 따른 전송대상정보의 범위, 세부기능 및 고도화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위험 예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호위원회와 과기부의 사업 과제간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분야가 아닌 분야(여행)에 대하여도 지원함으로써 과기부 사업과 지원방식이 유사해진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심사·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공공기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시 비목별로 집행실적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1차 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목)과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 260-01목)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을 통합 발주·계약하였는데, 통합 추진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모두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특정 비목에 일괄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8	**예산 소진 목적의 연말 예산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 법무지원(7041-301)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송 수행 관련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집행률은 확정예산 기준 79.5%에 불과하였고, 대신 다른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에서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 - 내역사업 ‘법률서비스이용지원’의 경우, 보호위원회의 법률자문 소요가 반드시 연말에 집중되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료의 75.5%가 12월에 집행되었고,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예년에는 연간 1,300만원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도에는 총 6,000만원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진바, 이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연말에 법률자문 및 법률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행정처분 관련 소송수행 소요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가명정보 결합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신규 지정건수가 2021년 이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매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기관 수도 2023년 23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하였음
※ 연도별 결합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현황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신규지정</td><td>6개</td><td>14개</td><td>3개</td><td>2개</td><td>1개</td></tr>
<tr><td>지정취소</td><td>-</td><td>-</td><td>1</td><td>1</td><td>2</td></tr>
<tr><td>지정기관 수</td><td>6개</td><td>20개</td><td>22개</td><td>23개</td><td>22개</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관리의 중요성 확대 및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감소 및 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균등지원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현재 서울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직접 수행방식(국비 100%), 강원・부산・대전센터는 국비-지방비 1:1 매칭방식(성과에 따라 일부 차등), 인천・대구・전북센터는 지방비 100%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국비 지원 현황
<table>
<tr><th>지역</th><th>구축일</th><th>2024년
센터 운영비용</th><th>국비 지원율</th></tr>
<tr><td>서울</td><td>2020.11.2.</td><td>4억 5,700만원</td><td>100%</td></tr>
<tr><td>강원</td><td>2021.7.28.</td><td>4억 4,000만원</td><td>50%(지방비 50%)</td></tr>
<tr><td>부산</td><td>2022.8.29.</td><td>3억 6,000만원</td><td>50%(지방비 50%)</td></tr>
<tr><td>인천</td><td>2023.7.18.</td><td>3억원</td><td>0%(지방비 100%)</td></tr>
<tr><td>대전</td><td>2023.11.28.</td><td>4억원</td><td>50%(지방비 50%)</td></tr>
<tr><td>대구</td><td>2024.7.18.</td><td>1억 5,200만원</td><td>0%(지방비 100%)</td></tr>
<tr><td>전북</td><td>2024.11.26.</td><td>2억 6,000만원</td><td>0%(지방비 1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운영성과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매칭비율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서울센터의 경우에도 통상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센터의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집행 부진에 따른 이월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주의,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내역사업인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예산 25억원 중 10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3년 3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가 개정되어 2025년 3월부터 시행중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 및 조율에 따른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5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수렴 및 조율과정이 지연되어 2025년 2월에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고, 세부내용(정보전송자·수신자·범위 등) 확정이 지연되어 사업이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수렴 및 법령개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신규 제도 도입 시 근거 규정 마련을 선행한 후 소요 재원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사전에 완료하여 시행령 제·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6개소의 방문 및 지원실적이 부진함
- 2024년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 지원*실적은 353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6개소(강원·부산·인천·대전·대구·전북)의 지원실적은 총 303건임
* 지원실적: 가명처리·적정성검토·컨설팅·교육·실습 등
- 서울센터 대비 지역센터의 운영비용 대비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2024년 가명정보 지원센터별 운영비용 및 방문자 수
<table>
<tr><th>지역</th><th>구축일</th><th>2024년
센터 운영비용</th><th>2024년
센터 방문자 수</th><th>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th></tr>
<tr><td>서울</td><td>2020.11.2.</td><td>4억 5,700만원</td><td>625명</td><td>137만원</td></tr>
<tr><td>강원</td><td>2021.7.28.</td><td>4억 4,000만원</td><td>171명</td><td>257만원</td></tr>
<tr><td>부산</td><td>2022.8.29.</td><td>3억 6,000만원</td><td>138명</td><td>261만원</td></tr>
<tr><td>인천</td><td>2023.7.18.</td><td>3억원</td><td>84명</td><td>357만원</td></tr>
<tr><td>대전</td><td>2023.11.28.</td><td>4억원</td><td>74명</td><td>541만원</td></tr>
<tr><td>대구</td><td>2024.7.18.</td><td>1억 5,200만원</td><td>266명</td><td>57만원</td></tr>
<tr><td>전북</td><td>2024.11.26.)</td><td>2억 6,000만원</td><td>75명</td><td>347만원</td></tr>
</table>
❍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차등지원 확대(현행 10%)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부(13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주의**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국외출장 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는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 그러나 공무수행에 대한 증빙 사진이 없거나 시사점이 단 한 줄 또는 한 장에 불과한 등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여 출장 계획서에 기재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공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인사과 등)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수결손 대응 부적절**	관련사업명	총괄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0.8조원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불용 등을 반복한 문제 발생 - 2023년 결산 심사 당시 추경 없이 정부가 사업별 지출계획을 조정할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재발 - 2023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시정)’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부적절**	관련사업명	총괄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0개 실·국은 임차료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외부 회의를 위한 장소 임차료(210-07)를 지급하면서 업무추진비(240)로 지급되어야 하는 식대 등을 함께 지급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함(임차료 총 2,555만원)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및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업무추진비 대신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항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료를 통해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과다
및 미배정</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수시배정된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의 수시배정 비중이 과다한 문제 발생
- 내역사업 기준으로 2024년 수시배정 사업은 124개이나, 이 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73개로 그 비율이 58.9%로 과다
- 수시배정 대상액 대비 실제 배정률 역시 전체 사업은 95.7%인 반면, 국회 증액 사업은 93.6%로 평균에 비해 저조
※ 2024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 현황
<table>
<tr><th colspan="3">수시배정 사업수</th><th colspan="3">수시배정 대상액</th><th colspan="2">배정률</th></tr>
<tr><th>전체(a)</th><th>국회증액(b)</th><th>비율(b/a)</th><th>전체(c)</th><th>국회증액(d)</th><th>비율(d/c)</th><th>전체</th><th>국회증액</th></tr>
<tr><td>124</td><td>73</td><td>58.9</td><td>61,186</td><td>7,215</td><td>11.8</td><td>95.7</td><td>93.6</td></tr>
</table>
주) 내역사업 기준
○ 특히 국회 증액 사업 중 예산액이 전액 미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 발생
-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거제-마산국도건설’ 등 15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대상액이 전액 미배정</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과다 문제 및 전액 미배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수시배정 내역 및 사유를 보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 시정 필요 및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예산실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연말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집중하여 「집행지침」위반 및 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를 위반 - 2024년의 경우 자산취득비 예산의 약 88%를 12월에 집행 ○ 또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 필요 -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식사비를 일반수용비로 잘못 지출한 사례가 6건(411만원)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서면회의 중심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운영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고업무관리(2233-302)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대면회의 개최 실적은 전무한 상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 - 기획재정부가 분과위원회의 조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의 형식적인 서면의결 검토수당에 지급한 일반수용비는 1,9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상의 비효율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면회의는 예외·보완 수단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공용재산취득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공용재산취득사업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됨
-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계획현액은 1조 1,041억 900만원, 지출액은 9,012억 1,800만원, 집행률은 81.6%임
※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용재산취득 사업 집행실적 현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5년 평균</th></tr>
<tr><td colspan="2">계획현액(A)</td><td>1,064,717</td><td>1,065,558</td><td>1,005,402</td><td>1,138,112</td><td>1,104,110</td><td>1,075,580</td></tr>
<tr><td colspan="2">지출액(B)</td><td>946,745</td><td>859,646</td><td>753,785</td><td>906,176</td><td>901,217</td><td>873,514</td></tr>
<tr><td colspan="2">집행률(B/A)</td><td>88.9</td><td>80.7</td><td>75.0</td><td>79.6</td><td>81.6</td><td>81.2</td></tr>
<tr><td colspan="2">위탁개발임차료(C)</td><td>54,362</td><td>26,186</td><td>64,200</td><td>128,343</td><td>79,235</td><td>70,465</td></tr>
<tr><td rowspan="3">위탁개발
임차료
제외</td><td>계획현액
(D=A-C)</td><td>1,010,355</td><td>1,039,372</td><td>941,202</td><td>1,009,769</td><td>1,024,875</td><td>1,005,115</td></tr>
<tr><td>지출액
(E=B-C)</td><td>892,383</td><td>833,460</td><td>689,585</td><td>777,833</td><td>821,982</td><td>803,049</td></tr>
<tr><td>집행률(E/D)</td><td>88.3</td><td>80.2</td><td>73.3</td><td>77.0</td><td>80.2</td><td>79.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청·관사 건설 등 공용재산취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용재산취득 계획액을 편성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이 면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연례적 이월 방지 및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2712-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체결하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용역비가 매년 이월되는 문제가 있음
- 2022년~2024년 각각 1,500만원 편성, 300만원 이월
○ 내역사업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의 정책연구비에서 연례적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2024년 동 사업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다수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계약건명</th><th>계약
금액</th><th>계약기간</th><th>계약상대방</th><th>계약
유형</th><th>프리즘
공개
여부</th></tr>
<tr><td rowspan="3">2022</td><td>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td><td>30</td><td>’22 10.17.~’22.12 17.</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공개</td></tr>
<tr><td>사회보장 공론조사</td><td>90</td><td>’22.12.13.~’23.6.30.</td><td>㈜엠브레인퍼블릭</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td><td>90</td><td>’22.12.13.~’23.6.30.</td><td>한국개발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 rowspan="2">2023</td><td>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연구</td><td>30</td><td>’23.2.16.~’23.9.30.</td><td>한국개발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주요국 장기재정전망 사례 분석</td><td>40</td><td>’23.12.13.~’24.4.30.</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2024</td><td>주요국의 재정관리지표 연구</td><td>45</td><td>’24.8.13.~’24.12.20.</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재정데이터분석 센터의 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2713-5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재정데이터의 분석·가공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용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공 실적이 전체 이용 실적의 3% 내외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2024년 기준 센터 이용실적 2,449건 중 데이터 분석·가공은 65건(2.7%)에 불과하며, 센터 운영이 교육 위주로 편중(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530건,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1,854건)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재정데이터분석센터가 단순 교육 기능에 치중하지 않고 재정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용 사례 발굴, 홍보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국가재무제표
오류 해소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회계제도운영(26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회계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원 수준임
- 반복되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로 기초 데이터의 신뢰 하락이 우려됨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연도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조원)
<table>
<tr><th>구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
<tr><td>전기오류
수정이익</td><td>5.9</td><td>2.8</td><td>9.0</td><td>7.5</td><td>3.7</td><td>6.4</td><td>5.0</td><td>2.6</td><td>3.3</td><td>2.7</td><td>40.3</td><td>1.0</td><td>1.4</td><td>91.6</td></tr>
<tr><td>전기오류
수정손실</td><td>6.7</td><td>1.6</td><td>4.6</td><td>4.4</td><td>3.6</td><td>9.5</td><td>3.8</td><td>4.3</td><td>5.6</td><td>1.9</td><td>13.3</td><td>3.0</td><td>2.0</td><td>64.3</td></tr>
<tr><td>합계</td><td>12.6</td><td>4.4</td><td>13.6</td><td>11.9</td><td>7.3</td><td>15.9</td><td>8.8</td><td>6.9</td><td>9.0</td><td>4.6</td><td>53.6</td><td>4.0</td><td>3.4</td><td>155.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개선 및 공정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정집행관리(2643-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산하기관 사업을 부당하게 '미흡'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아닌 '기관 소관 불일치' 등 성과 외적 요인을 근거로 저성과 판정을 내리고 있음 -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되는 부처별 예산 의무삭감분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성과 관리 책임성을 왜곡하는 문제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평가 관리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산하기관 사업이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과다한 수의계약 비율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율 과다
- 2024년 기준 13건 중 12건이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비율 과다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연구용역 총 건수(a, 건)</td><td>10</td><td>12</td><td>15</td><td>14</td><td>13</td></tr>
<tr><td>수의계약 체결 건수(b, 건)</td><td>10</td><td>12</td><td>15</td><td>14</td><td>12</td></tr>
<tr><td>수의계약 비율(b/a, %)</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2</td></tr>
</table>
○ 연구용역 중 ‘통합공시 점검용역’ 4건 등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부적절
- 기획재정부는 동 계약은 공공기관 운영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설명
- 그러나 동 계약은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계약으로 해당 법인만이 동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가 부적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문제 존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연구용역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을 추진한 문제 - 기재부는 대통령 또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통령·부총리 일정상 추진이 어려워져 미추진 - 이에 따라 해당 예산 전액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연말에 신규로 개최 ○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해당 행사는 연말에 필수로 개최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야기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추진 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문료 과다 지급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문료가 타 위원회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 - 기재부는 공운위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15만원)에 더하여 본회의 자문료 35만원을 별도로 매번 지급 중(총 50만원 지급) - 그러나 2024년 14차 본회의 동안 매번 참석 민간위원 전원에게 자문료를 전부 지급하고 있으며,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만 있는 경우에도 자문료를 지급하여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적절 - 특히 이러한 자문료는 기재부 내 타 위원회 자문료(10만원~15만원)에 비해 과다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문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시 잉여재원
고려</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32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 출자 등으로 조성된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규모에 비해 특별계정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신규대출 추진을 위해 출자를 받았음에도 대출실적이 부진하여 과다한 잉여재원이 남아있는 것은 부적절함
- 2023년 8월 이후 신규 대출 승인 실적이 전무하며, 특별계정 조성액 1조 3,125억원 중 대출 승인액이 9,022억원(소진률 68.7%)에 불과하여 잉여재원 규모가 4,103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조성 및 지출 승인 현황]
(단위: 억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1단계</th><th colspan="3">2단계</th><th rowspan="2">합계</th></tr>
<tr><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3">연도별
조성액</td><td>정부</td><td>2,300</td><td>1,600</td><td>1,100</td><td>250</td><td>-</td><td>1,000</td><td>6,250</td></tr>
<tr><td>수은</td><td>2,300</td><td>1,600</td><td>1,100</td><td>375</td><td>-</td><td>1,500</td><td>6,875</td></tr>
<tr><td>합계</td><td>4,600</td><td>3,200</td><td>2,200</td><td>625</td><td>-</td><td>2,500</td><td>13,125</td></tr>
<tr><td colspan="2">지출 승인액</td><td>5,131</td><td>-</td><td>-</td><td>3,481</td><td>410</td><td>-</td><td>9,02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특별계정 잉여재원을 고려하여 출자액을 산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한국수출입은행 계정 간 구분 명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3236-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이 특별계정에 귀속되지 않고 있어 계정별 운용성과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제2항에 따르면 특별계정은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 현재 특별계정 이자수익 등이 일반계정으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특별계정 사업이 아닌 기관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에 활용 가능한 상황임 ※ 특별계정 누적 이자수익(2025년 6월 기준): 131억원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을 특별계정에 귀속시켜 계정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고용휴직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휴직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등 고용휴직제도의 운영이 미흡함
- 자체 고용휴직의 경우, 고용휴직자는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또한 소속 장관은 고용휴직자가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하고,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휴직자가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과 고용휴직자의 휴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이 전무함
※ 2024년 말 기준 자체 고용휴직 인원은 25명, 인사혁신처 통합 고용휴직인원은 19명
[기획재정부 2024년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자체 고용휴직 인원 현황]
<table>
<tr><th>국제금융기구</th><th>WB</th><th>IDB</th><th>IMF</th><th>EBRD</th><th>ADB</th><th>CABEI</th><th>AfDB</th></tr>
<tr><td>2024년 출연 실적(십억원)</td><td>144.5</td><td>13.4</td><td>38.5</td><td>70.7</td><td>49.4</td><td>11.9</td><td>15.6</td></tr>
<tr><td>2024년 자체 고용휴직자(명)</td><td>4</td><td>4</td><td>3</td><td>1</td><td>3</td><td>2</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휴직 공무원이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실무경험 등과 휴직결과보고서의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근로자 햇살론의 서민금융지원 기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복권기금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6346-328)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근로자햇살론)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 햇살론'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으로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하위 20%인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임 -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지원실적을 보면, 중상위권 이상인 1~5등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고, 하위권인 6~10등급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음 * 동 신용등급은 일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로 설계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분류임 - 동 기간 소득구간별 공급금액 비중 추세도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대출 실적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서민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국세수입</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악화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이 전망됨
- 2023년과 2024년도의 경우 법정한도를 각각 1.5%p, 1.7%p 초과하였고, 2025년 또한 법정한도를 0.3%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table>
<tr><th>구분</th><th>2023년 실적</th><th>2024년 잠정</th><th>2025년 전망</th></tr>
<tr><td>○ 국세감면액 (A)</td><td>69.8</td><td>71.4</td><td>78.0</td></tr>
<tr><td>○ 국세수입총액 (B)</td><td>370.4</td><td>364.4</td><td>412.2</td></tr>
<tr><td>○ 국세감면율 [A/(A+B)]</td><td>15.8</td><td>16.3</td><td>15.9</td></tr>
<tr><td>○ 국세감면율 법정한도</td><td>14.3</td><td>14.6</td><td>15.6</td></tr>
<tr><td>○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차이</td><td>△1.5</td><td>△1.7</td><td>△0.3</td></tr>
</table>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반복적 초과는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조세지출 수혜자 구분 및 귀착정보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세수입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지급대상자가 명확히 지정되는 보조금과 달리 조세지출은 그 수혜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 현행의 조세지출 귀착정보는 수혜자 구분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2개 계층으로만 분류하고 있고, 그 구분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 도입취지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이 세부적으로 어느 계층에게 얼마만큼 귀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귀착정보를 소득분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조세지출 관리제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세수입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국세감면율 한도제, 예비타당성 평가제, 의무심층 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국세감면율 한도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이전 국세감면액의 증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예비타당성 평가제) 연간 감면액 300억 이상 신규 조세특례 도입 시 외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수의 조세특례가 면제되고 있음(2021-2024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비율 75-88%). - (의무심층 평가제) 일몰 도래 조세특례 중 연간 300억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은 외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가 세법개정안으로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조세지출의 경우 환류 비중이 높지 아니함 ○ 또한 국가 세입·세출결산서에 조세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 및 의무심층 평가제 등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조세협력(2131-301), 국내조세협력(21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 최근 5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10건이고, 21건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현황
-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2020년에 총 9건 중 5건(55.6%)이 비공개, 2021년에 총 9건 중 7건(77.8%)이 비공개, 2022년에 총 8건 중 7건(87.5%)이 비공개, 2023년에 총 2건 중 2건 모두 비공개, 2024년에는 총 6건 중 6건 모두 비공개
[최근 5년간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사유]
<table>
<tr><th>구분</th><th>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th><th>건수</th></tr>
<tr><td>제9조제1항
제2호</td><td>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td><td>10</td></tr>
<tr><td>제9조제1항
제5호</td><td>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td><td>1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부적정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7111-208),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7011-258)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일반수용비(210-01목)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과 구체적 사유 기재를 준수하지 않고 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업무 수행 및 회의 준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4건, 약 744만원을 집행 ○ 특근매식비(210-05목)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 필요 -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불용액(집행률)은 2020년 2,900만원(75.8%), 2021년 2,600만원(76.3%), 2022년 4,500만원(60.3%), 2023년 7,300만원(39.7%), 2024년 9,700만원(19.8%)으로 연례적 부진 ○ 특근매식비(210-05목)를 정규근무시간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경비 집행 시 지급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세제실 모든 부서에서 정규근무시간(9~18시)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집행시간 기준을 위반한 금액은 총 집행액 3,877만원 중 3,316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구체적 사유 기재 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 특근매식비 예산을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24</td><td rowspan="2">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국가채무 구성(「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table>
<tr><th rowspan="2">국가채무
(A=B+C)</th><th rowspan="2">적자성
채무(B)</th><th rowspan="2">금융성
채무(C)</th><th colspan="4">금융성 채무(C)</th></tr>
<tr><th>외환시장
안정용</th><th>서민주거
안정용</th><th>기타 금융성</th><th>공자기금조
정</th></tr>
<tr><td>1,175.2조원</td><td>815.4조원</td><td>359.8조원</td><td>210.3조원</td><td>79.1조원</td><td>66.4조원</td><td>4.0조원</td></tr>
</table>
○ ① ‘기타 금융성 채무(25개 회계·기금)’ 중 상당 부분은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
- ‘기타 금융성 채무’란 공자기금이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탁 잔액
-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 채무들의 상당 부분은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부족
※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현황(채무 상위 5개)</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구분(단위: 조원)	2021년		2022년		2023년	
	채무	대응자산	채무	대응자산	채무	대응자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5.7	13.0	19.5	14.0	20.6	14.3
고용보험기금	9.4	1.8	10.3	1.9	10.3	1.9
국민건강증진기금	3.5	0.4	3.9	0.2	4.5	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4	0.0	3.2	0.0	2.8	0.0
관광진흥개발기금	2.3	3.2	2.6	3.1	2.5	3.0

- 특히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 따르면, ‘기타 금융성 채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중기가용자산 과소 평가를 받아 대응자산이 불충분

- 과거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응자산 부족분과 초과분을 공개 중

* 감사원 권고(2021.5.):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도 포함되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대응자산이 채무에 크게 미달

- 동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으로, 정부는 대응자산으로 주택도시기금 금융성 자산 제시

- 그러나 이러한 대응자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2023년 기준 95.3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제외 시 대응자산 규모는 채무에 비해 부족

구분(단위: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	78.9	82.2	82.2	81.6	79.1
정부에서 제시한 대응자산 규모(a)	120.3	129.8	141.1	151.4	집계 중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b)	83.4	96.3	95.5	95.3	97.5
청약저축 납입액 제외 시 대응자산 (a-b)	36.9	33.5	45.6	56.1	집계 중

○ ③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 역시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대응자산에는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 최근 3년간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지속적으로 부족
<table><tr><th>구분(단위:조원)</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잔액(a)</td><td>263.8</td><td>265.7</td><td>251.0</td><td>210.3</td></tr><tr><td>대응자산 규모(b)</td><td>228.5</td><td>185.9</td><td>200.1</td><td>집계 중</td></tr><tr><td>대응자산 부족분(a-b)</td><td>35.3</td><td>79.8</td><td>50.9</td><td>-</td></tr></table>- 특히 해당 대응자산에는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실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 실질적 의미의 대응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존재하므로 동 채무를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계상되어 실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및 구성 내역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국가 자산에는 포함되나 부채로는 인식되지 않아 불균형한 문제 발생하며 순자산이 과다인식되는 문제 발생
-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에는 4대 연금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나 부채에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만 포함
❍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산으로 반영되어 순자산 과다인식
❍ 특히 국민·사학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와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회계기준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공무원·군인연금기금만을 연금충당부채로 인식
❍ 2024년 국가 재무제표 순자산 약 633조원에서 국민·사학연금 자산 규모 제외 시 국가의 순자산은 △473조원으로 음(-)으로 전환
- 국가 재정상태표 상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증가(63조원)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민·사학연금 제외 시 순자산은 전년 대비 감소(△108조원)
(단위: 조원)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국가 재무제표 순자산</td><td>505</td><td>671</td><td>508</td><td>570</td><td>633</td></tr>
<tr><td>국민연금·사학연금 제외 후 순자산</td><td>△224</td><td>△304</td><td>△288</td><td>△365</td><td>△47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자산 규모를 별도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26</td><td rowspan="2">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정 기관은 총 201개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비공개하여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예시: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자회사
(단위: 백만원, 명)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산은캐피탈</td><td rowspan="4">한국산업은행</td><td>628,171</td><td>9,537,324</td><td>258</td><td>지정 유보</td></tr>
<tr><td>KDB인프라 자산운용</td><td>39,007</td><td>73,868</td><td>72</td><td>지정 유보</td></tr>
<tr><td>KDB비즈</td><td>26,710</td><td>7,551</td><td>579</td><td>지정 유보</td></tr>
<tr><td>KDB인베스트먼트</td><td>35,036</td><td>131,257</td><td>1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시스템</td><td rowspan="10">중소기업은행</td><td>208,070</td><td>71,143</td><td>655</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신용정보(주)</td><td>31,799</td><td>40,012</td><td>122</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연금보험(주)</td><td>1,752,799</td><td>11,352,550</td><td>18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자산운용(주)</td><td>23,485</td><td>86,463</td><td>61</td><td>지정 유보</td></tr>
<tr><td>IBK투자증권(주)</td><td>1,881,781</td><td>7,493,826</td><td>658</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캐피탈</td><td>669,330</td><td>11,036,496</td><td>265</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저축은행</td><td>111,075</td><td>1,737,380</td><td>13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서비스</td><td>70,366</td><td>20,032</td><td>2,058</td><td>지정 유보</td></tr>
<tr><td>㈜IBK벤처투자</td><td>2,546</td><td>95,678</td><td>13</td><td>지정 유보</td></tr>
<tr><td>캠코선박운용(주)</td><td rowspan="3">한국자산관리공사</td><td>3,992</td><td>13,911</td><td>8</td><td>지정 유보</td></tr>
<tr><td>㈜캠코 시설관리</td><td>46,583</td><td>8,833</td><td>831</td><td>지정 유보</td></tr>
<tr><td>㈜캠코씨에스</td><td>6,583</td><td>2,014</td><td>135</td><td>지정 유보</td></tr>
<tr><td>예울FMC(주)</td><td rowspan="2">예금보험공사</td><td>3,406</td><td>920</td><td>74</td><td>지정 유보</td></tr>
<tr><td>서울보증보험</td><td>2,611,579</td><td>9,201,790</td><td>1,510</td><td>지정 유보</td></tr>
<tr><td>신보운영관리(주)</td><td>신용보증기금</td><td>9,175</td><td>2,556</td><td>287</td><td>지정 유보</td></tr>
<tr><td>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td><td>주택금융공사</td><td>12,253</td><td>5,545</td><td>242</td><td>지정 유보</td></tr>
</table>
주) 모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들 현황임</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경우 2010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캐피탈의 경우 2011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 비공개
-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상이한 경우도 있으나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백만원, 명)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한국전력기술</td><td rowspan="7">한국전력공사</td><td>534,581</td><td>945,383</td><td>2,228</td><td>지정</td></tr>
<tr><td>한전KPS</td><td>1,634,908</td><td>1,675,775</td><td>6,669</td><td>지정</td></tr>
<tr><td>한전KDN</td><td>753,310</td><td>846,360</td><td>3,021</td><td>지정</td></tr>
<tr><td>한전원자력연료</td><td>328,688</td><td>1,060,367</td><td>1,163</td><td>지정</td></tr>
<tr><td>한전MCS</td><td>161,523</td><td>94,304</td><td>4,360</td><td>지정</td></tr>
<tr><td>한전FMS</td><td>107,078</td><td>16,410</td><td>2,110</td><td>지정 유보</td></tr>
<tr><td>한전CSC</td><td>48,501</td><td>17,430</td><td>994</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가스기술공사</td><td rowspan="3">한국가스공사</td><td>412,307</td><td>226,115</td><td>2,358</td><td>지정</td></tr>
<tr><td>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td><td>34,475</td><td>10,166</td><td>871</td><td>지정 유보</td></tr>
<tr><td>코가스보안관리</td><td>16,718</td><td>4,342</td><td>422</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벤처투자</td><td rowspan="4">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td><td>56,984</td><td>148,783</td><td>163</td><td>지정</td></tr>
<tr><td>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d><td>570,434</td><td>277,931</td><td>297</td><td>지정</td></tr>
<tr><td>중진공파트너스(주)</td><td>10,368.33</td><td>2,221</td><td>208</td><td>지정 유보</td></tr>
<tr><td>중소벤처기업인증원</td><td>2,975.67</td><td>3,827</td><td>20</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도로공사서비스</td><td rowspan="2">한국도로공사</td><td>343,678</td><td>105,576</td><td>5,273</td><td>지정</td></tr>
<tr><td>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td><td>17,881</td><td>3,606</td><td>409</td><td>지정 유보</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공공기관 분류 기준 재검토 등 지정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기관 유형은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 현재는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 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부적절한 측면 존재
-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기준이 상향(50명→300명)되면서 총수입액이나 자산 규모가 큼에도 정원 미달로 다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예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대한석탄공사)
<table>
<tr><td>기관명</td><td>부산항만공사</td><td>인천항만공사</td><td>사학연금공단</td><td>서민금융진흥원</td><td>대한석탄공사</td></tr>
<tr><td>총수입액
(억원)</td><td>4,203</td><td>1,720</td><td>62,151</td><td>10,326</td><td>798</td></tr>
<tr><td>자산규모
(억원)</td><td>78,489</td><td>36,370</td><td>269,486</td><td>51,984</td><td>8,568</td></tr>
<tr><td>비고</td><td colspan="5">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①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②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r>
</table>
-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도 제외되어 국회의 관리・감독도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유형 분류 시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국세수입 세수오차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세수입	주의,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최근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오차가 심화되고 있음 -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약 61조원,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6조원, 31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발생 ○ 과도한 세수오차 발생 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이 적시에 수행되지 못해 목표한 재정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규모 세수결손 반복 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약화 우려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 ○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수입 전망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정부는 특히 수납률이 저조한 소득세-신고분, 관세, 종합부동산세의 수납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세수입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연계분석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지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조세지출예산서는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관련 재정지출에 관한 정보는 병기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사업과 연계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지출의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예를 들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수혜자는 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로 구분되나, 조세지출예산서상에는 조세지출 실적이 총합계액만 표시되어 각 수혜자에게 얼마만큼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② 관련 재정지출에 관한 정보는 병기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통합적으로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재정정책국 소관 유사 사업의 통폐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 재정건전성 관리강화(2712-302)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및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등 재정정책국 소관 사업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문제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함으로써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하고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전략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재정정책총괄과 소관)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추진,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지출요인 및 재정수요 도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부문 및 분야 도출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재정분석과, 재정제도과, 재정정책협력과 등 소관)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장기재정전망, 재정위험 분석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재정건전성과 소관) ○ 같은 부처 내 서로 다른 부서가 개별적으로 재정전략 또는 계획을 입안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통일성 및 일관성 없는 재정전략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최근 재정 운용 성과 부진에 대한 변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부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 - 2024년 예산현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22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7,100만원이 불용됨 ○ 그러나 2차례의 대규모 세수결손, 2024년도 연구개발예산 삭감, 지자체 교부금 재원 부족 등을 야기하였던 바, 최근 5년간 연간 20~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소모한 것에 비해 재정운용 성과는 매우 낮아 사실상 예산이 낭비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개별 사업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135-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2024년 예산현액 19억 2,300만원)의 취지는 개별 사업 부서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용역 주제 중복을 예방하고, 적시에 유연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 2024년도 기획재정부 실시 연구용역 중 중복 의심 연구 사례 내역
<table>
<tr><th>주제</th><th>세부사업명</th><th>연구용역 제목</th></tr>
<tr><td rowspan="3">연구
개발
효과성</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국가 R&D 중장기 효과성 제고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방안</td></tr>
<tr><td>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td><td>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td></tr>
<tr><td rowspan="3">기업 및
산업
경쟁력</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중장기 기업경쟁력 확보 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지원방안</td></tr>
<tr><td>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td><td>주요 전략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td></tr>
<tr><td rowspan="4">규제
개선</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중장기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연구</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기업규모별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 발굴</td></tr>
<tr><td>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td><td>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제목 구체화·세분화 등을 포함하여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중복성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정책연구개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정책연구개발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정사업평가(2644-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8.)을 통해 기존에 재정사업 프로그램당 2~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던 것을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하에 관리대상 지표를 대폭 감축하여 전(全) 부처에 적용하였음 ○ 그러나 2024년도 각 부처의 결산 자료 확인 결과, 무리한 성과지표 감축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단위·세부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정량적·구체적 성과지표가 폐지되고 정성적·추상적 성과지표가 존속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 공무원 업무 및 재정사업은 민간 기업과 같은 객관적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면 국민의 혈세 낭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정치·정무적 요소에 근거한 인사 평가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정보를 추가하는 등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결과치를 측정하며, 활동 등 행위 실적이 아닌 행위의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지식협력 단지운영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상 기재오류 방지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식협력단지운영(3239-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육운영’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성평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효과분석에는 예산현액 2억 9,200만원 전액이 여성 사업대상자 12,568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오류가 있음 - 담당 부서는 데이터 입력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입장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성인지 결산서 상의 기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체계 상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		
35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2233-307)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채관리시스템은 시스템 운용 1년차인데,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ISP에서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증이 불가능 - 국채관리시스템은 2021년에 ISP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 1차 구축(28억 600만원), 2023년에 2차 구축(11억 8,300만원)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시스템을 유지보수 중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의 관리대상 데이터 중복 예방 및 불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33-301)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발굴, 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당 내역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당초 예산안 9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된 6억원만 승인되었으며, 한국은행, KDI, 국가데이터처,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심의 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 대상으로 판단되고, 사업 성격 자체가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함이 타당하며, 경기진단 시 중요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으므로 9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동 내역사업 예산 6억원 중 2억 7,3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7,300만원이 이월, 5,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소통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대상 데이터의 중복을 예방하고, 사업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한국은행 일시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 일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재정증권을 비롯한 일반적 금전차입은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상환하여 부적절한 이익을 취함 - 기획재정부는 1953년에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에 따라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① 동 약정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수행할 때 작성되었고, ② 차입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이자를 원금보다 늦게 상환하여 시간 가치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불공정계약 소지 존재 - 실제 2024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48억원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최소 약 12.8억원의 부적절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임 ○ 국고금 운용수익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며, 그 규모와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를 「일시차입금이자상환」예산 또는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지불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이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이자 상환 시기를 조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와
적절한 경정
절차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세입 추계 오차에 따라 집행액 및 불용액 변동이 크게 발생
- (2024년) 본예산은 992억 900만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115억원을 이용 증액 후 전액(2,107억 900만원) 집행
- (2023년) 예산 미편성
- (2022년) 예산액 250억원 중 59억 1,600만원을 이용 감액하고, 잔액은 전액 불용
- (2021년) 예산액 608억원 중 80억 9,6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86.7%
* 일시차입금이자상환사업은 국고금 출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
※ 일시차입금이자상환사업 결산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60,800</td><td>60,800</td><td>-</td><td>-</td><td>-</td><td>60,800</td><td>8,096</td><td>13.3</td><td>13.3</td><td>-</td><td>52,704</td></tr>
<tr><td>2022</td><td>25,000</td><td>25,000</td><td>-</td><td>△5,916</td><td>-</td><td>19,084</td><td>-</td><td>-</td><td>-</td><td>-</td><td>19,084</td></tr>
<tr><td>202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024</td><td>99,209</td><td>99,209</td><td>-</td><td>111,500</td><td>-</td><td>210,709</td><td>210,709</td><td>100.0</td><td>100.0</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입 추계 오차로 인하여 자금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 경정 등에 맞춰 동 사업 예산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성·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1132-4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 및 전용하였는데, 증액 변경한 세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함 - 내역사업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일반수용비(210-01) 4,4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로 1,400만원을 세목조정하고, ‘기타정책연구개발’ 내역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일반용역비는 1,100만원, 정책연구비는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여 증액한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정확성을 제고할 것		
40	**반복적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1141-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업무추진비 집행 외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며,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큰 비중으로 불용이 발생함 - 동 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6,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나, 운영비 3억 6,000만원 중 3억 1,900만원 집행(집행률 88.4%), 여비 9,700만원 중 6,800만원 집행(집행률 70.5%), 연구용역비 1억원 중 7,800만원 집행(77.8%) 등 집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대비 큰 비중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사업예산 중 홍보성 비용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 신설되었으나, 사업 예산 중 지원단 홍보물 제작, 성과공유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홍보성 비용이 2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달하여 과도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홍보성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42	**충실한 사무실 조성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23년 출범 당시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실 조성 공사비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출범 1년만인 2024년에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가적으로 사무실 조성 공사비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는 당초 사무실 조성계획이 충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중 비용으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무실 조성시 이중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간담회·상담회·설명회 개최 건수, 1:1 수출수주기업 면담건수 등 활동상황만을 제시하고, 수출·수주관련 애로사항 처리·개선 결과, 수출·수주 계약체결 건수 등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사업의 성과로서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 처리·개선 결과 및 조사·연구 결과, 면담기업의 수출·수주 체결건수 등 업무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44	**사업 계획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1331-306)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비목별로 예산 전용 및 조정이 과다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불용률이 각각 31.8%와 26.1%로 사업 집행의 계획성이 미흡함 - 일반수용비 2억 2,500만원 중 6,500만원을 감액 조정 후 8,100만원을 불용하여 일반수용비의 과다 책정 및 집행 부진이 있으며,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2,000만원에서 일반수용비로부터 2,000만원,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의 정책연구비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의 예산 전용 및 세목조정이 과다하여 사업 집행의 계획성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계획성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운영비(210)는 예산현액 23억 3,500만원 중 4억 2,400만원의 불용(불용률 18.2%)이 발생하였고, 여비(220)는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9,700만원의 불용(불용률 59.9%)이 발생하였음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계엄선포 이후 정국을 고려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대규모 불용사유로 설명하나, 1개월의 예산집행 지연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계획성이 현저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불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성과지표 미설정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인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재정성과 평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2023년까지 제시한 성과지표를 2024년부터 제외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r>
<tr><td rowspan="3">조세특례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반영률(반영률)</td><td>목표</td><td>신규</td><td>60.0</td><td>78.5</td><td>-</td><td>-</td><td rowspan="3">정부세법개정안 內 제도개선사항 반영건수/ 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건수 × 100</td></tr>
<tr><td>실적</td><td>84.6</td><td>71.4</td><td>100</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19.0</td><td>127.3</td><td>-</td><td>-</td></tr>
</table>
※ 평가단의 성과지표 제외 권고(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4년부터 제외됨
- 조세정책 프로그램(2100) 내 6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FTA 협상 등 전문가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할 성과지표로는 부적절
* 국제조세협력(2131-301),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2131-303), 관세협력기구 출연(2131-304),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국내조세협력(2131-308),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기재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합리적 조세지출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동 사업에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유지 및 존속 타당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 과다 불용 - 예산현액 7억 3,600만원 중 4억 4,800만원(60.9%)이 불용되었으며, 특히 운영비(210)는 63.5%, 여비(220)는 73.2%, 정책연구비(260)는 46.7%가 불용 - 또한 일반연구비(260-01)는 1억 5,000만원 중 7,900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7,100만원으로 불용률이 47.3%에 이르며, 일용임금(110-04)은 전액 미집행 ○ 실질적인 사업집행 부진으로 사업 유지·존속 여부 점검 필요 - 조세개혁추진단은 2023년 2월 신설되었고, 인력구성 및 조세개혁 관련 연구용역 추진지연 등으로 과다한 집행부진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에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협력 사업의
성과 및 조기
종료 사유 등에
대한 정보 제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 재정협력 강화(244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지급하는 국제부담금(3억 9,100만원)을 전액 불용
- 기획재정부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2019년 MOU를 체결하면서 매년 30만불의 기금을 지원하고, 피터슨 연구소는 매년 최소 5개의 한국 재정정책 연구보고서(5년간 총 25건)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약(2020년~2024년)
○ 기획재정부는 동 협약의 성과 저조 등을 사유로 협약을 2024년 조기 종료하였고, 국제부담금도 전액 불용함
- 기획재정부가 동 협약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억 500만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의 국제부담금 지원 현황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
<tr><td>집행액
(백만원)</td><td>357</td><td>357</td><td>402</td><td>389</td><td>0</td><td>1,505</td></tr>
</table>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 협력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및 조기 종료 사유, 신규 협력기관 선정 여부,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국제 재정협력기관 선정 사유, 협력 내용 및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예산 불용에 대한 국회 지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낮음
-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2%이며, 5억 7,100만원 불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1</td><td>2,302</td><td>2,045</td><td>88.8</td><td>23</td><td>234</td></tr>
<tr><td>2022</td><td>3,159</td><td>2,383</td><td>75.4</td><td>135</td><td>640</td></tr>
<tr><td>2023</td><td>3,196</td><td>2,746</td><td>85.9</td><td>95</td><td>356</td></tr>
<tr><td>2024</td><td>2,827</td><td>2,211</td><td>78.2</td><td>45</td><td>5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재정집행관리
사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정집행관리(264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에서 유사·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주요 불용 사유: ① 예산성과금 사례집 등 인쇄비 절감, ②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 건수 감소, ③ 국외출장 미실시 등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의 최근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
현액
(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278</td><td>278</td><td>21</td><td>-</td><td>299</td><td>263</td><td>94.6</td><td>88.0</td><td>-</td><td>36</td></tr>
<tr><td>2022</td><td>278</td><td>278</td><td>-</td><td>△50</td><td>228</td><td>176</td><td>63.4</td><td>77.4</td><td>12</td><td>40</td></tr>
<tr><td>2023</td><td>318</td><td>318</td><td>12</td><td>-</td><td>330</td><td>162</td><td>50.9</td><td>49.1</td><td>-</td><td>168</td></tr>
<tr><td>2024</td><td>278</td><td>278</td><td>-</td><td>-</td><td>278</td><td>200</td><td>71.9</td><td>71.9</td><td>-</td><td>78</td></tr>
<tr><td>2025</td><td>240</td><td>240</td><td>-</td><td>-</td><td>240</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 사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2646-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행의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예산액
(A)</th><th rowspan="2">이·전용</th><th rowspan="2">예산
현액
(B)</th><th rowspan="2">집행액
(교부액)
(C)</th><th colspan="4">출연기관(KISTEP) 실집행내역</th></tr>
<tr><th>실집행액
(D)</th><th>불용액
(C-D)</th><th>집행률
(D/C)</th><th>예산대비
실집행률(D/A)</th></tr>
<tr><td>2022</td><td>296</td><td>-</td><td>296</td><td>296</td><td>55</td><td>241</td><td>18.6</td><td>18.6</td></tr>
<tr><td>2023</td><td>281</td><td>△226</td><td>55</td><td>55</td><td>26</td><td>29</td><td>47.3</td><td>9.3</td></tr>
<tr><td>2024</td><td>274</td><td>-</td><td>274</td><td>121</td><td>118</td><td>3</td><td>97.5</td><td>4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의 적정 연구용역비 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271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을 위하여 2024년도에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억 1,100만원을 편성(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 3,100만원)하였으나, 이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불용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 예산의 과·부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연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연구용역비를 산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적절하므로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 2024년 동 사업의 국내여비(7,600만원) 불용률은 88.2%, 국외여비(7,200만원) 불용률은 76.4%이며, 일반연구비(1억 500만원) 불용률은 71.4% - 일반수용비(3억 5,000만원)와 일반용역비(5억 9,100만원)의 경우 각각 4,300만원 및 7,5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700만원, 7,300만원의 불용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54	당초 확정예산 대비 이·전용을 통한 파견인원 증가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7132-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파견인원 6명분)과 달리 이·전용 등을 통해 우회하여 파견인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적절 - 기재부는 2024년 해외기관 파견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및 임차료가 부족하여 세목조정 및 전용을 통해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 - 이는 확정예산(6명분)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하여 파견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 것 -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담당자의 착오로 파견인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설명함 ※ 동 사업은 해외기관 파견자의 임차료 및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파견인원을 증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 계획 수립에 정확성을 제고하여 사업 수행의 애로 및 예산 편성·집행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당초 계획액
편성시 대규모
계획액 누락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액 편성 시 일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총 9,870억원)을 누락하였으나, 공자기금 지출계획은 타 기금의 수입 계획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계획액 편성에서 대규모 누락분이 발생한 것은 국가 기금운용계획 편성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기획재정부는 방폐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4,2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5,670억원을 누락하고 당초 계획액을 편성
※ 2024년도 방폐기금·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액 누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기금명</th><th>예수일</th><th>상환일</th><th>당초 계획(a)</th><th>실제(b)</th><th>누락분
(b-a)</th></tr>
<tr><td rowspan="2">방폐기금</td><td colspan="2">2023년 원금상환액을
2024년 원금상환액으로 혼동</td><td>2,880,000</td><td>3,300,000</td><td>420,000</td></tr>
<tr><td>2023.12.8</td><td>2024.12.9</td><td>-</td><td>67,000</td><td>67,000</td></tr>
<tr><td>주택도시기금</td><td>2022.12.28</td><td>2024.1.29</td><td>-</td><td>500,000</td><td>500,000</td></tr>
<tr><td colspan="3">합계</td><td>2,880,000</td><td>3,867,000</td><td>987,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와 관련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함으로써 기금 간 내부거래에서의 대규모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획재정부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수원금 상환소요 과소계상 등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56</td><td rowspan="2">예수원금상환
만기연장으로
인한 국회 심의
우회 및
불필요한
이자부담 증가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2">시정,
주의</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공자기금이 일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연장하였으나, 이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 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산재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1조 5,5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1조 1,100억원을 미상환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함
○ 이러한 만기연장은
- 산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연장한 것은 해당 금액을 상환 후 재예탁하는 경우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자체변경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임
(단위: 억원, %)
<table>
<tr><th>기금명</th><th>프로그램
당초계획액(a)</th><th>자체변경범위
(a × 0.2)</th><th>기존
자체변경액
(b)</th><th>만기연장액
(c)</th><th>재예탁시
변경범위
[(b+c)/a]</th></tr>
<tr><td>산재기금</td><td>33,000</td><td>6,600</td><td>0</td><td>15,501</td><td>47.0</td></tr>
<tr><td>주택도시
기금</td><td>103,656</td><td>20,731</td><td>20,700</td><td>11,100</td><td>30.7</td></tr>
</table>
-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공자기금 미상환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거치지 않은 재정운용이 정부 재량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이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되었음에도 또다시 위반
○ 또한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이자부담 231억원을 증가한 문제도 발생</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기금명</th><th rowspan="2">만기연장 금액</th><th colspan="3">이자율(%)</th><th rowspan="2">추가 이자 부담</th></tr><tr><th>만기연장(a)</th><th>재예수시(b)</th><th>차이(a-b)</th></tr><tr><td>산재기금</td><td>1,550,090</td><td>3.86</td><td>2.84</td><td>1.02</td><td>15,811</td></tr><tr><td>주택도시기금</td><td>1,110,000</td><td>3.50</td><td>2.84</td><td>0.66</td><td>7,326</td></tr><tr><td colspan="5">합계</td><td>23,137</td></tr></table>
-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기금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자기금에서 각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자수입 및 이자 상환 운용 방식과도 부합하지 않음
- 특히 공자기금의 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 발생은 국채 발행량 증가로 귀결될 수 있음</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예수원금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
○ 기획재정부는 산재기금, 방폐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시정)
○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이 예수원금을 정상 상환 후 저금리 환경에서 재예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주의)</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7</td><td rowspan="3">내부거래
사업들의 사업
구조 개편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행 사업 구조로는 특별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을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 필요
- 동 사업의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구조만으로는 특별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단위: 백만원)
<table><tr><td>프로그램명</td><td>기금간거래(예탁금)</td><td>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td><td>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td></tr><tr><td>단위사업명</td><td>기타기금예탁</td><td>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td><td>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td></tr><tr><td>세부사업명</td><td>기타기금예탁</td><td>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td><td>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td></tr><tr><td>계획액</td><td>69,445,731</td><td>23,298,237</td><td>964,437</td></tr></table>- 특히 국회에서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부적절
- ① 내부거래들은 이미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② 각 특별회계·기금은 각각의 설치 목적이 있어 정책적 독립성이 존재한다는 점, ③ 타 기금의 경우 세부사업에 내부거래 대상 회계나 기금명을 표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사업 기준을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 사업들의 계획액을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 부적절 및 과도한 계획액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경비(총괄계정)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비가 편성됨 - 해당 수수료는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와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구성 ○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32억 500만원이나 불용액은 12억 6,100만원으로 불용률이 39.3%로 높음 - 기획재정부는 주된 불용 사유로 1/4분기 개인투자용국채 미발행을 사유로 밝힘 ○ 그러나 분기별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1/4분기 미발행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과도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을 분기별 발행 계획 기준으로 계획액을 편성하였으나 불용률이 과도하므로, 향후 사업 집행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사업 선실시 후 형식적 컨설팅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대외경제협력기금 - 사업진행컨설팅(3376-302)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은 EDCF 계정이 외화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외화금고 신설 및 외화 직매입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을 위해 일반연구비 예산액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률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이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불용액이 1억 9,500만원으로 불용률이 66.3%에 달함 - 이는 EDCF 외화금고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에 앞서 외화금고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등 사업을 컨설팅 이전에 실시하여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 중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시 제한적인 내용의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편성하여 불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개선**	관련사업명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기금운용임 -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은 이자상환이라는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전액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해당 비목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타이자상환 외 별도사업 또는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지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율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사업명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비공개하고 있어,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외평기금 결산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말 기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은 4.58%로, 운용수익 합계는 939억 달러이고 한국투자공사의 누적 수수료 수익 합계는 28.47억 달러(3조 3,704억원)임 -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향후 기관 운영비에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인건비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20년·2021년·2022년·2024년에 당기순이익의 10~30%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총 인건비도 2020년 355.9억원에서 2024년 475.1억원으로 33.5% 증가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기타이자상환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근거 및 집행결과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문제가 있음
- 불용률은 2021년 34.6%, 2022년 0.5%, 2023년 40.6%, 2024년 29.4%를 기록함
[최근 4년 간 기타이자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현액
(B)</th><th>집행액
(C)</th><th>집행률
(C/A)</th><th>집행률
(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1</td><td>482,897</td><td>482,897</td><td>-</td><td>482,897</td><td>315,604</td><td>65.4</td><td>65.4</td><td>167,293</td></tr>
<tr><td>2022</td><td>363,944</td><td>372,715</td><td>-</td><td>372,715</td><td>370,691</td><td>99.5</td><td>99.5</td><td>2,024</td></tr>
<tr><td>2023</td><td>373,407</td><td>373,407</td><td>-</td><td>373,407</td><td>221,930</td><td>59.4</td><td>59.4</td><td>151,477</td></tr>
<tr><td>2024</td><td>412,514</td><td>412,514</td><td>-</td><td>412,514</td><td>291,167</td><td>70.6</td><td>70.6</td><td>121,347</td></tr>
</table>
- 그런데 연도별 불용 사유와 불용률 변동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려움
- 또한 편성 및 집행 근거로 “파생거래지급이자”와 같은 모호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근거 및 집행결과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국회 헌정회관
신축 사업 불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회 헌정회관 신축(1231-4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4,600만원(집행률: 1.9%)에 불과하며, 저조한 집행률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기금 편성단계가 아닌 사업 추진연도에 착수하여 2024년 8월에 완료한 것에 기인함
- 집행 부진 사유: 총사업비 협의가 2024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순연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5,8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58.7%임
※ 국회 헌정회관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1,362</td><td>1,304</td><td>-</td><td>1,304</td><td>46</td><td>486</td><td>771</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1,178</td><td>1,178</td><td>-</td><td>1,178</td><td>-</td><td>492</td><td>686</td></tr>
<tr><td>- 감리비
(420-04)</td><td>56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3,102</td><td>2,482</td><td>-</td><td>2,482</td><td>46</td><td>978</td><td>1,458</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회사무처)이 총사업비 협의를 기금안 편성 단계에서 착수하도록 하여 불용·이월을 최소화하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 불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1331-61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5,6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98.3%임
※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td><td>-</td><td>471</td><td>471</td><td>-</td><td>-</td><td>471</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td><td>-</td><td>385</td><td>385</td><td>-</td><td>-</td><td>385</td></tr>
<tr><td>- 공사비
(420-03)</td><td>6,708</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25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td><td>15</td><td>-</td></tr>
<tr><td>합 계</td><td>6,975</td><td>15</td><td>856</td><td>871</td><td>-</td><td>15</td><td>85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1331-61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현액의 91%를 이월하여 2024년도 집행이 부진함
※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td><td>-</td><td>357</td><td>357</td><td>243</td><td>-</td><td>114</td></tr>
<tr><td>- 공사비
(420-03)</td><td>5,167</td><td>5,167</td><td>-</td><td>5,167</td><td>124</td><td>5,043</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273</td><td>273</td><td>-</td><td>273</td><td>-</td><td>273</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td><td>-</td><td>46</td><td>46</td><td>14</td><td>-</td><td>32</td></tr>
<tr><td>합 계</td><td>5,440</td><td>5,440</td><td>403</td><td>5,843</td><td>381</td><td>5,316</td><td>14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대법원)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66</td><td rowspan="2">「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 시정
및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비축토지매입(2035-300)</td><td rowspan="2">시정</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경우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799억 8,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1,141억 1,500만원)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준수하지 못함
-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에 체결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및 ‘멕시코시티’ 비축토지 건은 2024년에 일부만 지불되었고 차액은 2025년 계획액을 통하여 지불
* 「국고금 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024년도 비축부동산 매입 상세 지출 내역(단위: 천원)]
<table>
<tr><th>건명</th><th>세목</th><th>지출금액</th><th>수령인</th></tr>
<tr><td>비축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지급(경기도 광주시 역동)</td><td>건설보상비</td><td>865,823</td><td>경기도시공사</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td><td>건설보상비</td><td>23,243,467</td><td>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부천시 원종동)</td><td>건설보상비</td><td>19,500,000</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td><td>건설보상비</td><td>23,051,960</td><td>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td><td>건설보상비</td><td>9,667,533</td><td>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td></tr>
<tr><td>외교부 멕시코시티 비축부동산 매입</td><td>건설보상비</td><td>3,634,000</td><td>외교부</td></tr>
<tr><td>비축부동산 면적정산에 따른 정산금 납부</td><td>건설보상비</td><td>17,217</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td></tr>
<tr><td>2024년 비축부동산 매입에 따른 계약수수료 지급</td><td>시설부대비</td><td>15,673</td><td>조달청 징수관</td></tr>
<tr><td colspan="2">계</td><td>79,995,673</td><td></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계약연도와 잔금 지급연도가 상이한 비축토지 구매내역]
<table><tr><th>건명</th><th>매입연도</th><th>매입연도 지급액</th><th>차년도 지급액</th><th>총 매입금액</th></tr><tr><td>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td><td>2024년</td><td>23,051,960천원</td><td>2,902,540천원</td><td>25,954,500천원</td></tr><tr><td>멕시코시티</td><td>2024년</td><td>2,500,000USD</td><td>22,500,000USD</td><td>25,000,000USD</td></tr></table>
○ 현행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① 국내·국외 구분 없이 적용되어 해외 비축부동산 후보지를 평가하기 부적절하고, ②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 절차가 불분명하며, ③ 해외 비축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미흡
- ①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주요 평가요소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용승인 비율, 지역별 수요·보유 비율, 행정구역 특성, 토지 매도자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외 부동산의 경우 국가 수도 등에 매입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고,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토지 매입 주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
- ② 국내 비축부동산은 ‘조달청장의 매입 대상 부동산 평가 및 추천 목록 제출 → 총괄청의 매입 대상 부동산 우선순위 확정 → 총괄청의 매입’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해외 비축부동산은 조달청장이 매입 대상을 평가하고 추천하기 곤란
- ③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규정만 두고 있음</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를 시정하고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7</td><td rowspan="3">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2231-36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현액의 99%를 이월하여 해당 연도에 사업 집행이 부진함
[주호놀룰루(총) 청사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td><td>759</td><td>-</td><td>759</td><td>-</td><td>759</td><td>-</td></tr>
<tr><td>- 공사비 (420-03)</td><td>8,2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42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80</td><td>80</td><td>-</td><td>80</td><td>8</td><td>72</td><td>-</td></tr>
<tr><td>합 계</td><td>8,620</td><td>839</td><td>-</td><td>839</td><td>8</td><td>83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외교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8</td><td rowspan="3">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2233-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임에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국회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집행 부진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비
(410-00)</td><td>-</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외교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2433-31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대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 지연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
(420-03)</td><td>1,100</td><td>11</td><td>-</td><td>11</td><td>-</td><td>-</td><td>11</td></tr>
<tr><td>- 감리비
(420-04)</td><td>4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54</td><td>54</td><td>2</td><td>56</td><td>-</td><td>54</td><td>2</td></tr>
<tr><td>합 계</td><td>1,554</td><td>65</td><td>2</td><td>67</td><td>-</td><td>54</td><td>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법무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0</td><td rowspan="3">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2434-4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동 사업은 주민반대 민원으로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되지 못함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
(420-03)</td><td>5,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26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8</td><td>18</td><td>13</td><td>31</td><td>-</td><td>18</td><td>13</td></tr>
<tr><td>합 계</td><td>5,278</td><td>18</td><td>13</td><td>31</td><td>-</td><td>18</td><td>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법무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1</td><td rowspan="3">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2631-4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불용률이 99.9%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감리비 부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협의 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106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99.9%임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
(420-03)</td><td>23,700</td><td>13,093</td><td>-</td><td>13,093</td><td>-</td><td>-</td><td>13,093</td></tr>
<tr><td>- 감리비
(420-04)</td><td>1,014</td><td>1,014</td><td>-</td><td>1,014</td><td>-</td><td>-</td><td>1,014</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53</td><td>53</td><td>-</td><td>53</td><td>13</td><td>-</td><td>40</td></tr>
<tr><td>합 계</td><td>24,767</td><td>14,160</td><td>-</td><td>14,160</td><td>13</td><td>-</td><td>14,14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행정안전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
찰대 청사
신축사업 불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3431-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률이 0.2%에 불과하여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낮게 나와 매입금액이 감소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매매계약 지연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억 4,3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45.7%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비
(410-00)</td><td>4,844</td><td>4,844</td><td>-</td><td>4,844</td><td>10
[10]</td><td>2,500</td><td>2,334</td></tr>
<tr><td>- 기본조사설계비
(410-01)</td><td>260</td><td>260</td><td>-</td><td>260</td><td>-</td><td>260</td><td>-</td></tr>
<tr><td>- 실시설계비
(410-0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5,104</td><td>5,104</td><td>-</td><td>5,104</td><td>10</td><td>2,760</td><td>2,33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토교통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3</td><td rowspan="3">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4531-54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예산 현액이 전액 불용되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
(420-03)</td><td>6,679</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45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td><td>-</td><td>15</td></tr>
<tr><td>합 계</td><td>7,146</td><td>15</td><td>-</td><td>15</td><td>-</td><td>-</td><td>1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세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4</td><td rowspan="3">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5131-17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10</td><td>10</td><td>-</td><td>10</td><td>-</td><td>-</td><td>10</td></tr>
<tr><td>합 계</td><td>10</td><td>10</td><td>-</td><td>10</td><td>-</td><td>-</td><td>10</td></tr>
</table>
- 경찰청의 관련 성과지표 상으로도 달성도가 55.6%(2023년 기준)에 불과함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rowspan="3">목표 대비 집행률
(단위:%)</td><td>목표</td><td>80.3</td><td>85.6</td><td>82.7</td></tr>
<tr><td>실적</td><td>79.9</td><td>78.4</td><td>46.0</td></tr>
<tr><td>달성도</td><td>99.5</td><td>91.6</td><td>55.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5131-41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도는 3.9%에 불과하며, 2023년도의 경우도 24.8%에 불과함
- 성과지표 목표 산출 근거: 최근 3년('21~'23) 평균 집행실적(59.6%)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3">목표 대비 집행률
(단위:%)</td><td>목표</td><td>80.3</td><td>85.6</td><td>82.4</td><td>59.6</td></tr>
<tr><td>실적</td><td>79.9</td><td>78.4</td><td>20.4</td><td>2.3</td></tr>
<tr><td>달성도</td><td>99.5</td><td>91.6</td><td>24.8</td><td>3.9</td></tr>
</table>
[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381</td><td>381</td><td>-</td><td>381</td><td>-</td><td>381</td><td>-</td></tr>
<tr><td>- 공사비
(420-03)</td><td>2,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15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2</td><td>9</td><td>-</td><td>9</td><td>9</td><td>-</td><td>-</td></tr>
<tr><td>합 계</td><td>2,543</td><td>390</td><td>-</td><td>390</td><td>9</td><td>38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5131-42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도는 34.9%에 불과함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3">목표 대비 집행률
(단위:%)</td><td>목표</td><td>80.3</td><td>85.6</td><td>82.4</td><td>85.3</td></tr>
<tr><td>실적</td><td>79.9</td><td>78.4</td><td>97.6</td><td>29.8</td></tr>
<tr><td>달성도</td><td>99.5</td><td>91.6</td><td>118.4</td><td>34.9</td></tr>
</table>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21</td><td>21</td><td>-</td><td>21</td><td>21</td><td>-</td><td>-</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563</td><td>563</td><td>2</td><td>565</td><td>481</td><td>84</td><td>-</td></tr>
<tr><td>- 공사비
(420-03)</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100</td><td>100</td><td>-</td><td>100</td><td>-</td><td>100</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5</td><td>-</td><td>10</td></tr>
<tr><td>합 계</td><td>1,699</td><td>1,699</td><td>2</td><td>1,701</td><td>507</td><td>1,184</td><td>1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7</td><td rowspan="3">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5131-43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759</td><td>-</td><td>4</td><td>4</td><td>-</td><td>-</td><td>4</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5</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764</td><td>5</td><td>4</td><td>9</td><td>-</td><td>-</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8</td><td rowspan="3">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5131-4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공정 순연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346</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9</td><td>9</td><td>-</td><td>9</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355</td><td>9</td><td>-</td><td>9</td><td>-</td><td>-</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9</td><td rowspan="3">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5131-45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
(410-00)</td><td>500</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74</td><td>74</td><td>-</td><td>74</td><td>-</td><td>-</td><td>74</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575</td><td>79</td><td>-</td><td>79</td><td>-</td><td>-</td><td>7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0</td><td rowspan="3">경찰청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5131-45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사업부지 확보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체결 기간 소요
[경찰청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
획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143</td><td>143</td><td>-</td><td>143</td><td>-</td><td>143</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td><td>1</td><td>-</td><td>1</td><td>-</td><td>1</td><td>-</td></tr>
<tr><td>합 계</td><td>144</td><td>144</td><td>-</td><td>144</td><td>-</td><td>144</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1</td><td rowspan="3">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5131-7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사업부지 확보 및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로 공정 순연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538</td><td>538</td><td>-</td><td>538</td><td>-</td><td>419</td><td>119</td></tr>
<tr><td>- 공사비
(420-03)</td><td>1,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
(420-04)</td><td>7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10</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1,618</td><td>543</td><td>-</td><td>543</td><td>-</td><td>419</td><td>12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2</td><td rowspan="3">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5131-81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156</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3</td><td>3</td><td>-</td><td>5</td><td>-</td><td>-</td><td>3</td></tr>
<tr><td>합 계</td><td>159</td><td>3</td><td>-</td><td>3</td><td>-</td><td>-</td><td>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3</td><td rowspan="3">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신축(5131-81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162</td><td>162</td><td>-</td><td>162</td><td>-</td><td>162</td><td>-</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412</td><td>412</td><td>-</td><td>412</td><td>-</td><td>412</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3</td><td>3</td><td>-</td><td>3</td><td>-</td><td>-</td><td>3</td></tr>
<tr><td>합 계</td><td>577</td><td>577</td><td>-</td><td>577</td><td>-</td><td>574</td><td>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4</td><td rowspan="3">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5131-82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87</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54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8</td><td>4</td><td>-</td><td>4</td><td>-</td><td>-</td><td>4</td></tr>
<tr><td>합 계</td><td>636</td><td>4</td><td>-</td><td>4</td><td>-</td><td>-</td><td>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5</td><td rowspan="3">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5131-82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
(420-01)</td><td>400</td><td>-</td><td>163</td><td>163</td><td>-</td><td>-</td><td>163</td></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54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8</td><td>8</td><td>-</td><td>8</td><td>-</td><td>-</td><td>8</td></tr>
<tr><td>합 계</td><td>950</td><td>8</td><td>163</td><td>171</td><td>-</td><td>-</td><td>1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5133-300)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포항북부서 어린이집 신축’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7</td><td rowspan="3">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6031-3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제주해양종합훈련시설 신축’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동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가 56.6%(2024년 기준)에 불과함
- 성과지표 목표 산출 근거: 최근 3년(‘21～‘23) 평균 집행실적(67.1%)
[제주해양종합훈련시설 신축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계획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
(420-0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공사비
(420-03)</td><td>-</td><td>-</td><td>209</td><td>209</td><td>-</td><td>-</td><td>209</td></tr>
<tr><td>- 감리비
(420-04)</td><td>6,023</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
(420-05)</td><td>5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6,523</td><td>-</td><td>209</td><td>209</td><td>-</td><td>-</td><td>20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해양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8</td><td rowspan="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는 공사계약 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6033-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양경찰청은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에서 예산확보를 상정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고금 관리법」제20조를 위반하고,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
- 동 사업의 2차수 계약 체결일(2024.12.20.)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 의결·확정일(2024.12.10.)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 규모가 18억 9,800만원(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에 불과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규모를 초과한 2차수 계약(66억 4,500만원)을 체결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총차계약</th><th></th><th>1차수 계약</th><th></th><th>1차수 변경계약</th><th></th><th>2차수 계약</th><th></th><th>2차수 변경계약</th></tr><tr><td>총공사금액:7,727</td><td>→</td><td>총공사금액:7,727
1차수
계약금액: 1,900</td><td>→</td><td>총공사금액:8,234
1차수
계약금액: 1,589</td><td>→</td><td>총공사금액: 8,234
2차수
계약금액: 6,645</td><td>→</td><td>총공사금액: 8,234
2차수
계약금액: 1,540</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해양경찰청)이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9</td><td rowspan="3">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6931-36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기본조사설계비
(420-01)</td><td>332</td><td>32</td><td>-</td><td>32</td><td>-</td><td>-</td><td>3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r><td rowspan="3">90</td><td rowspan="3">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6931-42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집행 부진 사유: 유관기관 협의 지연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기본조사설계비
(420-01)</td><td>113</td><td>113</td><td>-</td><td>113</td><td>-</td><td>-</td><td>1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1	**편성 내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산취득 시정 및 위탁기관 자체계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환급 필요**	관련사업명	국유재산관리기금 - 정책연수원 신축(6933-100)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4억 200만원)는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에 집행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규정 - 당초 취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래방 시설(노래방 테이블1·2·3, 노래방 인포 의자, 반주기(TV60’ 포함)) 및 당구장 시설(당구장 의자, 당구장 테이블, 당구대)에 자산취득비 집행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의 재원을 통해 임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함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4억 200만원)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에 사용됨에 따라, 예약시스템 구축을 연수원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계정으로 지출한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비용(4,876만원)을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2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총괄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기후대응기금 사업만의 차별성이 없이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의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기반구축 등 사실상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사업선정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기후대응기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0조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온실가스 국제감축,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은 감축효과를 명시화하기 어렵거나 국내 감축 효과가 미미해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기후대응기금 내 기후적응 사업 비중은 약 10% 대에 불과함 ※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부적합한 사업 목록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1. 온실가스 국제감축(6131-300)</td><td>15. 그린뉴딜유망기업100(6231-601)</td></tr>
<tr><td>2. 온실가스 국제감축(6131-410)</td><td>16.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6231-700)</td></tr>
<tr><td>3. 기후변화협약대응(6131-302)</td><td>17.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6232-400)</td></tr>
<tr><td>4. 공공열분해시설 설치(6131-306)</td><td>18.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6232-500)</td></tr>
<tr><td>5.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6131-313)</td><td>19.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6232-501)</td></tr>
<tr><td>6. 국토교통 기후대응지원펀드(6131-411)</td><td>20.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6232-600)</td></tr>
<tr><td>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6131-601)</td><td>21. 녹색정책금융활성화(6232-601)</td></tr>
<tr><td>8.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6131-621)</td><td>22.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6233-400)</td></tr>
<tr><td>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6132-300)</td><td>23.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td></tr>
<tr><td>10.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사업(6132-500)</td><td>24. 탄소중립그린도시(6331-302)</td></tr>
<tr><td>11. 도시생태 복원사업(6133-401)</td><td>25.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6331-410)</td></tr>
<tr><td>12. 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6231-300)</td><td>26.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6332-300)</td></tr>
<tr><td>13. 산림특성화대학원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6231-400)</td><td>27.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6332-302)</td></tr>
<tr><td>14.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6231-500)</td><td>28. 고용상태영향조사(6332-310)</td></tr>
</table>
</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구체화하여 기금사업의 차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다른 회계로 이관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재편하고, 기후적응 관련 사업 비율을 OECD 주요국 평균인 30%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93</td><td rowspan="2">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 확대 및 기금 수입구조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세입총괄</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후대응기금 수입 중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비중은 8.1%에 불과하며, 당초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낮은 실질 유상할당 비율(4%)과 배출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64.8%(2022년43.6%, 2023년 21.3%), 계획단가는 23,0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단가는 10,355원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수납액(C)</th><th colspan="2">수납률</th></tr>
<tr><th>당초(A)</th><th>수정(B)</th><th>당초대비(C/A)</th><th>수정대비(C/B)</th></tr>
<tr><td>2022</td><td>730,584</td><td>447,639</td><td>318,826</td><td>43.6</td><td>71.2</td></tr>
<tr><td>2023</td><td>400,896</td><td>208,660</td><td>85,233</td><td>21.3</td><td>40.8</td></tr>
<tr><td>2024</td><td>289,694</td><td>202,121</td><td>187,677</td><td>64.8</td><td>92.9</td></tr>
</table>
○ 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이 계획 대비 부진함에 따라 2024년에는 24개 기금사업의 지출 1,045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출권 가격 하락 추세는 국내기업의 탄소저감기술 투자축소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탄소저감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부족에 따라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등 외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전체 계획기간의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상향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기금 수입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기획재정부는 최근 2~3개년 경매낙찰가·낙찰률·거래시장 수급을 반영한 세입 추계모형을 도입할 것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상할당 비율 상향·초과공급 흡수장치를 포함한 제4차 할당계획 개선안을 마련하며, 기금 자체수입 다변화 로드맵(비정상이월, 반납 최소화 포함)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4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기금예수금(94-94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19)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설립 첫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차입)하여 매년 적자 운용 중이며, 2025년에도 3,199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누적예수금액은 1조 3,725억원으로 예상됨 - 예수금 증가는 이자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예수금 상환이 시작되는 2031년부터는 예수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예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타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 많은데, 타 회계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받아 예수금으로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기금예수금'은 자체수입, 타회계·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차입)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3,199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감소로 인해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수이자 상환으로 2022년 51억원, 2023년 171억원, 2024년 28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450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누적상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95</td><td rowspan="2">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6131-600)</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입찰·계약 과정에서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적발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4년 11월 보조금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음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주요결과
<table>
<tr><th>구분</th><th>주요 위반내용</th><th>위반
건수</th></tr>
<tr><td>업무방해</td><td>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하여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td><td>135</td></tr>
<tr><td rowspan="3">입찰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td><td>특수관계인과 담합</td><td>49</td></tr>
<tr><td>계약업체 사전 내정</td><td>4</td></tr>
<tr><td>나눠먹기식 담합</td><td>21</td></tr>
<tr><td rowspan="2">「전기공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td><td>미등록업자의 전기공사 및 건설동사 업무 수행</td><td>120</td></tr>
<tr><td>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td><td>20</td></tr>
<tr><td rowspan="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td><td>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td><td>82</td></tr>
<tr><td>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td><td>17</td></tr>
<tr><td>정산금액 반납 지연과 착수신고서 제출 지연</td><td>48</td></tr>
<tr><td colspan="2">계</td><td>496</td></tr>
</table></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또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총량적 성과와 비교하여 개별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은 미흡함 - 2024년 사후관리 추진결과에 따르면 민간·지자체 수행실적은 모두 당초 계획 대비 109%를 달성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10,258톤 감축함 - 그러나 개별 대상업체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9개 업체에서 설치한 감축설비에서 당초 계획했던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고, 7개 지자체의 13개 공공시설에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법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량적 성과 이외에도 감축설비 단위의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강화를 위하여 감축효율이 부진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기술 상용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6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6131-62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2014년 롯데월드타워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롯데월드타워는 초고층 대형 복합건물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조적 특성 및 에너지 수요 패턴에서 차이가 크고, 2014년 당시의 수열에너지 관련 기술 및 시스템 효율이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있어 건축물 유형·용도별로 대표성 있는 최신 사례나 에너지 절감계수를 활용하여 산정기준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축물 유형·규모·용도별 대표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최신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보완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MRV)을 의무화해 산출근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감축량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6132-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전 정부에서 2025년도 예산을 삭감하였음 - 공공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중은 전체 대비 약 85% 수준이며, 2024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530동의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 평균 측정 결과 39.6%의 에너지가 절감되었고 126,871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등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 2024년도 계획액(127,517백만원) → 2025년도 계획액(114,538백만원) [12,979백만원 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4년에는 도서관, 기타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파출소, 교육원, 기타교육연구시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에는 보건소,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라 지원하는 용도 건물의 유형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8	**정의로운 전환 특구 미지정으로 인한 전액 불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6331-410)	주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법률안 제정 및 특구 지정 관련 고시 마련 등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4년도 예산(24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2023년에 정의로운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4억원(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2.5억원 + 연구용역비 1.5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특구가 지정되지 않아 실질적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특구가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으며, 2023년 구축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되지 않아 2023년 기집행된 예산 역시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확인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문제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구 모집을 조속히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9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산업 · 일자리전환지원금(6332-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2년 신설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 2022~2023년 계획액은 52억 6,000만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2022년 5,400만원, 2023년 4억 7,800만원에 불과 - 이에 2024년 계획액을 37억 4,2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17억 4,2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그럼에도 집행액이 5억 6,000만원(32.1%) 수준에 그침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산업 · 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100</td><td rowspan="2">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
발생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6332-403)</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탄소중립활동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table>
<tr><th>업체</th><th>사업재편
유형</th><th>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th></tr>
<tr><td>A</td><td>과잉공급</td><td>(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 분양 진출 촉진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조선 기자재 생산을 축소하고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및 기술 개발 등 사업 혁신 추진</td></tr>
<tr><td>B</td><td>신산업
진출</td><td>(필요성) 관세서비스 AI 프로그램 출시에 따라 업무보조 컨설팅에서 유산균 발효 참기름 사업으로 사업재편 추진</td></tr>
<tr><td>C</td><td>신산업
진출</td><td>(필요성) 자동차회사의 로봇 산업 진출에 따른 사업범위 다각화
(주요내용)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에 적용할 치형 설계 및 가공 기술개발</td></tr>
<tr><td>D</td><td>신산업
진출</td><td>(필요성)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인공지능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진입
(주요내용)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개발</td></tr>
</table></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 및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을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대기업이 신산업 진출 등 산업 재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효과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6333-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전국적인 평균참여율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율 편차도 발생하고 있음 - 탄소중립포인트제도란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구입,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임 -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 18,429,743가구 대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트포인트제도에 참여한 총 가구수는 2,336,523가구로 1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광주광역시(57.9%), 제주특별자치도(39.2%), 전북특별자치도(24.9%)에 비해 경기도(5.7%), 세종특별자치시(5.8%), 부산광역시(7.4%)로 지역간 편차가 최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23,120,986대 대비 0.29%인 66,010대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참여비율도 0.2%~0.6%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녹색생활 실천분야는 2024년 11월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진 바 있고, 2025년에는 작년보다 4개월 빠른 7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전국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참여율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생활 속 녹색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2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및 감액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6431-400)	시정,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석유 코크스(20톤/일급)를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고도정제, 수성가스 전환, 고순도 수소생산(3톤/일급)을 위한 실증 플랜트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① 석탄가스화기술(IGCC*)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화석연료 기술 R&D라는 점, ② 석유 코크스 100만톤을 투입한 수소 생산량은 15만톤에 불과해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시켜 가스를 만든 다음, 이 가스를 정제·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고, 2026년도 예산을 감액할 것(시정)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사업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향후 화석 활용 관련 연구개발 추진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3	**녹색기업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6433-7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정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정기업도 대기업과 제조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녹색기업은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정 현황: 2020년 123개, 2021년 111개, 2022년 103개, 2023년 97개, 2024년 97개 - 2024년 기준 전체 녹색기업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99%이고, 전기전자·식료품 등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약 80%임 ○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녹색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20개, 2021년 14개, 2022년 11개, 2023년 6개, 2024년 9개 등 최근 5년간 총 50개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고, 해당 사유로 2개 기업이 지정취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기업지정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기업지정제도의 공공 신뢰를 확보하고 녹색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4	**세수재추계 시점 조정 및 재주계 정례화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세수입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총 국세수입을 당초 367.3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20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30.8조원 감소하였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7조원) 대비로도 △1.2조원 감소 하는 등 세수 예측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추계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 세수추계에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모형 자체보다도 기업실적 악화나 자산 시장 둔화 등의 변수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당초의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한 탓으로 보임 ○ 그동안 추계모형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그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 세수여건 변화가 보다 빨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추계 시점 조정 내지 재추계 정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변화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재추계 정례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5</td><td rowspan="3">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총괄 - 정책연구비(260-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과목임
-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126억 700만원 중 101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5%)되고, 14억 1,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3,500만원이 불용됨
○ 2020~2025년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의 2024년 6월 기준 결과보고서 공개 현황을 보면, 2020년 비공개 비율은 28.6%였으나, 2024년에는 비공개 비율이 76.1%에 이르고 있음
※2020~2024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현황
(단위: 건,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정책연구용역
건수(A)</th><th rowspan="2">등록
비대상
건수(B)</th><th rowspan="2">등록
대상건수
(A-B)</th><th colspan="2">공개
(일부공개 포함)</th><th colspan="2">비공개</th></tr>
<tr><th>건수</th><th>비율</th><th>건수</th><th>비율</th></tr>
<tr><td>2020</td><td>87</td><td>3</td><td>84</td><td>60</td><td>71.4</td><td>24</td><td>28.6</td></tr>
<tr><td>2021</td><td>94</td><td>5</td><td>89</td><td>32</td><td>36.0</td><td>57</td><td>64.0</td></tr>
<tr><td>2022</td><td>98</td><td>2</td><td>96</td><td>28</td><td>29.2</td><td>68</td><td>70.8</td></tr>
<tr><td>2023</td><td>101</td><td>4</td><td>97</td><td>36</td><td>37.1</td><td>61</td><td>62.9</td></tr>
<tr><td>2024</td><td>105</td><td>13</td><td>92</td><td>22</td><td>23.9</td><td>70</td><td>76.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6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미납금 환수 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고보조사업	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나 지자체에서 미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자체 교부 보조금 미반납액 : 2021년 144억원, 2022년 194억원, 2023년 735억원 ○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반납현황 자료 및 금액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국회 예결위 2023년 결산 검토보고에 “2023년까지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반납현황을 보면, 23개 부처 총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아 미수납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국회 예결위가 각 부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로 정확한 수치는 아님 ○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반납을 독려하고 있거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일부 사업에 대해 지자체 미반납을 지적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조치가 없고, 체계적인 미반납 환수체계가 없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7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원칙수립 및 경영실태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출자수입(52-52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세입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국유재산법」및「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1조 6,033억 4,700만원 전액이 수납됨 ○ 정부출자기관 40개의 24년 당기순이익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40개 기관중 17개 기관만 배당을 실시하여 2조 1,322억원의 정부출자수입을 수납함 - 한국공항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 21개 기관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배당성향을 보면 최저 13.81% ~ 최고 100%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분 100%인 한국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의 배당성향도 23.08% ~ 100%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나, 배당성향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배당성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주주가 대부분 중앙정부임을 고려할 때, 배당성향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반여신업무가 없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조 5,089억원 발생하였으나 8,781억원만 배당받은 합리적인 근거가 설명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적정 BIS 유지를 위해 별도 출자하는 상황에서 배당을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40개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연속 배당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재무상태 등 경영실태를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8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구체화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3-2024년도의 경우 법정한도를 각각 1.5%p, 1,7%p 초과했으며, 2025년 역시 법정한도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 - 같은 기간 동안의 재정지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601조원에서 2025년 703.3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 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음 - 또한 모든 면제사유가 추상적·포괄적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9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금융센터 보조(3132-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운영기금의 경우 「국제 금융센터 운영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센터는 감사 이후에도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 정기예금으로만 운영기금을 운용한 문제가 있음 - 2025년의 경우 센터는 운영기금 314억원 중 10억원은 발행어음(1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304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는 센터의 중장기적 수입 및 지출 추이, 향후 정기예금으로 운영기금을 운용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2월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운영기금의 자금을 연 기금투자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MF·채권 및 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 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0	**공공자금관리 기금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공자금관리기금 - 한국은행예치(9702-970)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 발생된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임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 국채발행, 예수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전출, 예탁 등의 지출을 수행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 - 국채발행 및 예수예탁 모두 빚을 얻어 빚을 갚은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의 과다보유는 불필요한 이자지급을 수반하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부족에 따라 공공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해 수입부족 대책을 마련하였음 - 당초 대비 8,355억 5,300만원의 추가예수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잉여금) 3조 1,915억 3,500만원 등을 통해 4조 7,785억 8,500만원의 추가세입을 마련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예탁금을 당초보다 14조 9,618억 3,300만원을 증액함 -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1억원을 계상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 1조 5,093억 6,500만원으로 확대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시 여유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1	**대외경제협력 기금 ODA 사업예산 편성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대외경제협력기금 - 총괄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겠다면서 예산을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으로 1.8조원 대폭 증액하였음(정부안에서 6.5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0.2조원 감액). 수혜국의 수요가 있어 반영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연례적인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ODA)의 경우 2024년 계획안 편성 당시인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미승인 사업임에도 반영된 사업은 51개임 - 이 중 2024년 중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차량 구매사업’과 에콰도르의 ‘산토 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8건은 집행실적이 전무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일「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혜국에 지원방침을 알린 후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난 후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 이로 인해 수혜국의 수락도 없이 통보만으로 ODA 예산이 편성되어 수혜국이 수락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는 예산낭비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유상 ODA사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2	**국유재산관리 기금의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절**	관련사업명	국유재산관리기금 - 총괄	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며,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4년 프로그램별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변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21개의 프로그램 중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20%의 한도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한 프로그램이 9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113</td><td rowspan="2">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당초 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24개 사업의 지출 1,045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기금운용상 비효율을 발생시킨 바 있음
-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수납액은 2조 3,058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2조 3,918억 대비 96.4% 수준으로, 당초 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납액(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당초 계획액 대비 1,020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계획액 대비 524억 1,200만원 적게 수납된 것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계획</th><th colspan="3">결산</th></tr>
<tr><th>당초(A)</th><th>수정(B)</th><th>(C)</th><th>(C/A)</th><th>(C/B)</th></tr>
<tr><td colspan="2">기후대응기금 수입 총계(A)</td><td>2,391,807</td><td>2,287,277</td><td>2,305,830</td><td>96.4</td><td>100.8</td></tr>
<tr><td>자체
수입</td><td>기타재산이자외수입
(배출권매각대금)</td><td>289,694</td><td>202,121</td><td>187,677</td><td>64.8</td><td>92.9</td></tr>
<tr><td rowspan="5">내부
수입</td><td>일반회계
(교통에너지환경세*7%)</td><td>1,149,413</td><td>1,097,001</td><td>1,097,001</td><td>95.4</td><td>100.0</td></tr>
<tr><td>교통시설특별회계</td><td>300,000</td><td>300,000</td><td>300,000</td><td>100.0</td><td>100.0</td></tr>
<tr><td>전력산업기반기금</td><td>200,000</td><td>200,000</td><td>200,000</td><td>100.0</td><td>100.0</td></tr>
<tr><td>복권기금</td><td>108,333</td><td>108,333</td><td>108,333</td><td>100.0</td><td>100.0</td></tr>
<tr><td>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td><td>319,910</td><td>319,910</td><td>319,910</td><td>100.0</td><td>100.0</td></tr>
<tr><td>보전
수입</td><td>여유자금 회수</td><td>12,189</td><td>12,189</td><td>15,863</td><td>130.1</td><td>130.1</td></tr>
<tr><td>기타</td><td>출자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융자원금 회수 등</td><td>12,268</td><td>47,723</td><td>77,046</td><td>628.0</td><td>161.4</td></tr>
</table>
</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후대응기금 수입(2조 3,058억원) 중 배출권 매각대금(1,877억원) 비중이 전체 수입 중 8.1%에 불과하고 당초 계획 대비 낮은 수납 실적(2024년 64.8%)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출권 유상할당 당초수입계획액(A)	204,600	215,818	490,325	730,584	400,896	289,694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B)	232,174	248,017	294,461	318,826	85,233	187,677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B/A)	113.5	114.9	60.1	43.6	21.3	64.8

-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5% 미만으로 낮고, 배출가격이 8,000원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에 투자하기 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내기업의 탄소저감기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전체 할당배출권(KAU) 중 유상 할당배출권 비중

(단위: 천톤,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할당 배출권(A)	571,472	591,808	592,441	595,894	586,213
유상할당 배출권(B)	10,783	22,419	21,802	22,682	25,003
비율(B/A)	1.89	3.79	3.68	3.81	4.27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향후 제4차 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근거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전환부문 외 산업부문으로의 유상할당 확대 등 적정한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하고, 배출권 이월제도의 단계적 완화 및 경매참여 대상의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배출권 매각대금 외 안정적인 수입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활당계획 수립 시 전체 계획기간의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대폭 상향되도록 설정하는 등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기획재정부는 2025년 배출권 매각대금에 따른 자체수입(3,487억원)의 구체적 산정근거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지출 계획 변경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점검 및 조정절차를 제도화하며, 향후 기금 수입 증가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4	**조속한 사업비 정산 및 국비 반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	제도개선	
		지적사항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2024년 계획 현액 1,095억원(사업출연금)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사업 정산보고서 확정이 통상 11월에 이루어지고 국비 반납은 12월에 실시하는 등 결산서 제출(5월) 대비 사업비 정산 완료에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사업은 ①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②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③산단 특화 탄소저감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전담기관 출연(100%)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국회 결산시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정산 현황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지연시 패널티(출연금 감액 등), 전담기관-수행기관 간 월별잔액 마감 파악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5	**협약 체결전 교부금 지급 방지 및 집행 투명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6131-31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민간대행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며 대규모의 전담기관 이월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고,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투자지원’ 사업은 수정계획액 296억 2,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최종 협약은 1건(지원액 42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법정민간대행비를 전액 교부하고, 전담기관은 254억원을 이월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7건의 협약이 미체결된 바 있음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NDC에 활용하는 사업임 ** 투자지원 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최종 협약 체결 전 교부 금지를 지침에 명시하고, 협약 무산 시 즉시 반납 및 대체과제 자동전환 규정 신설, 전담기관 월별 협약·집행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6	**융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6232-4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은 2022년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사업 목표 대비 효과가 부족할 우려가 있었고, 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에 전담기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출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융자건이 발생한 바 있음 - 2022년 지원한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 융자금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26건 중 2.0 미만이 12개, 2.0 이상이 14개로 나타났는데, 산업통상부의 기존 사업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평균인 2.071보다 낮은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이 12개로 나타났음 - 2022년 융자금이 인출된 26건 중 1건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고 및 다른 용도의 자금 사용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7	**산업계순환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재설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6233-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024년에도 순환경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전시회 지원(55개 기업), 배터리 및 희소금속 재자원화 상생라운지 개최, 베트남 현지 전시회 개최, 순환경제 페스티벌 개최, 순환경제 제도 활성화, 순환경제 혁신 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 바 있음 * 동 사업은 산업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순환경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이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		
11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6332-4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또는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① 냉·난방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② 냉·난방기 교체는 기후적응 및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9	**탄소중립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R&D)(6431-57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사업재편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은 전기차 분야 등 「기업활력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재편기술개발 지원유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고출력 750마력의 동력제어를 담당하는 클러치 제어용 액추에이터 과제와 같이 기술개발 내용과 탄소중립 간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사업도 선정되었음 * 동 사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로 사업재편을 하거나 기존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유도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과 재편계획 승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20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사업의 재설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6231-6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내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은 2023년 결산 심사 당시에도 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계획보다 1~2년 늦어지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은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친환경 인프라와 교통·문화·주거·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이 결합된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재설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감축비용 정보 명시 및 성과지표를 보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1	**성과와 연동한 보조금 환수·감액 추진 및 사후관리 고도화 지침 개정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6131-6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제조업 공장의 설비개선 등 친환경 공장 모델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99개 기업(2020~2022년 참여 기업) 중 15.2%인 15개소가 폐업·파산, 고장·성능저하, 행정절차 미완 등으로 미가동되고 있는 상태임 ○ 보조금으로 구축한 설비가 미가동되고 저활용되는 사례가 다수로,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성과 기반 예산 원칙과 괴리되며, 사전 선정·사후관리 정합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설비개선 등 친환경공장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성과와 연동하여 보조금의 환수·감액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고장·성능저하에 대응하여 유지보수 펀드 또는 공동AS 체계를 마련하며, 사전 적격성 평가 강화를 포함한 사후관리 고도화 지침을 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2</td><td rowspan="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6131-6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32.6%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NDC에 활용하는 사업임
※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3">사업시행
주체
(기관명)</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계획</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
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한국환경공단</td><td>11,250</td><td>5,300</td><td>5,300</td><td>532</td><td>5,832</td><td>4,210</td><td>1,479</td><td>143</td><td>72.2</td></tr>
<tr><td>수자원공사</td><td>5,945</td><td>7,934</td><td>7,934</td><td>-</td><td>7,934</td><td>1,293</td><td>6,641</td><td>-</td><td>16.3</td></tr>
<tr><td>매립지공사</td><td>6,345</td><td>5,100</td><td>5,100</td><td>-</td><td>5,100</td><td>638</td><td>4,462</td><td>-</td><td>12.5</td></tr>
<tr><td>합계</td><td>23,540</td><td>18,334</td><td>18,334</td><td>532</td><td>18,866</td><td>6,141</td><td>12,582</td><td>143</td><td>32.5</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간 협력 여건 조성 및 사업유치국의 역량배양 등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3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예산 불용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6131-620)	주의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은* 홍보관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위탁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었고, 2025년에도 준공 지연으로 관련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은 과천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내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7월 준공하여 8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홍보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관리위탁비 5개월 분인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준공 이전 운영비 편성을 자제하고, 선투입·재발주 시 국고부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며, 월별 공정관리 지연시 경고 및 대체발주 자동화 기능을 도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4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6131-622)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률이 각각 91.6%, 49.2%로 나타났음 *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 버려지는 폐비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예방 사업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노후한 공공선별장 신설 및 증설, 자동선별시설 등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가능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사업 -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증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설계·인허가 지연 및 물가 변동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음 ○ 2023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2024년 이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재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선정 시 사전 타당성(부지·인허가·물가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공정지연 시 단계별 감액·대체사업 전환 규정을 명문화 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진행과정 협의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이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5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추진방식 변경 및 관리 대책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습지보전관리(6133-403)	주의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실집행률은 전남(신안)을 제외하고는 20~60% 수준으로 유사한 생태보전 관련 보조사업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하고, 매년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명백한 관리 부실이 반복됨. - 특히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경북(문경) 58.1%, 전북(고창) 26.5%, 강원(인제) 27.1%, 강원(철원) 63.7%, 경남(김해) 전액이월, 경남(창녕) 전액이월, 경남(고성) 21.8%, 광주광역시 전액이월, 전남(순천) 35.3% 등으로 매우 저조함 *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훼손 습지 복원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서 반복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방식의 변경과 함께 보다 철저한 계획과 집행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6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투자방침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6232-6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본래 사업취지에 맞게 환경과 녹색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펀드 금액의 30% 이상이 탄소중립과 무관한 바이오/AI/로봇 분야 기업에 투자되었으며 에너지/탄소분야는 4.6%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투자비중은 ① 자원순환 40.7%, ②바이오/AI/로봇 31.5%, ③ 청정대기 23.1% ④ 에너지/탄소 4.6%로, 바이오/AI/로봇 분야에서 두 번째 순서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녹색산업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촉진하려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예산을 기후대응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 방침을 변경하여 운영할 것		
127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당초 95억원이었으나, 세수부족으로 81억원으로 수정되었고, 실집행액은 71억원에 그쳐 실집행률은 88%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사업 집행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서울(93%), 인천(99%), 경기(99%) 등 수도권과 비교해볼 때 전북(53%), 강원(64%), 충북(76%), 경북(78%) 등은 실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역량· 조건 및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이행점검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8</td><td rowspan="3">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했고, 2024년 교부액 대비 8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9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에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서 일부 용역비의 이월 발생,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의 불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 2024년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실집행 현황
<table>
<tr><th colspan="3">부처</th><th colspan="8">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계획</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C/A)</th></tr>
<tr><th>당초</th><th>수정
(A)</th></tr>
<tr><td>6,400</td><td>6,400</td><td>6,400</td><td>6,400</td><td>3,530</td><td>9,930</td><td>8,621</td><td>339</td><td>970</td><td>89.8</td></tr>
</table>
*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은 지자체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지원, 탄소중립 이행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17곳에 각 2억원, 기초지자체는 30곳에 국한하여 각 1억원을 보조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상황을 점검하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규모의 현실화, 인구·온실가스배출량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등지원방안 마련, 전문인력파견 및 기술지원, 교육·홍보 강화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9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의 수요 파악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6232-302)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집행률이 2024년 41.2%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12월 6일 현장수요 및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 25억원의 28%인 6억 9,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훈련수요가 높지 않고, 산업구조 전환을 주도하는 원청인 대기업이 훈련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요부족으로 집행액이 7억 4,300만원(4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과 2023년에도 불용액이 각각 36억 2,000만원, 3억 8,7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당초 사업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기후대응기금 6332-301)과 통합하고 지원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는 집행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내용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성과를 점검·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0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6131-400)	주의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와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예산 불용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자체변경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음 *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 등을 실현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단 내 입주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 스마트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구축하는 사업임 ○ 그러나 2024년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24.8%(계획액 4억 8,0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 집행)에 불과하고, 소액이긴 하나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목 간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음 ** (2024) 법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를 위해 실시설계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1,0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1	**녹색구매지원 센터 활성화 방안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기후대응기금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6433-7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녹색소비활성화 사업은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임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구매촉진 제4차 계획(2021~2025)의 세부전략 13개 중 10개(77%)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이행기관임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전국 10개 센터의 활동을 통해 총 69,926.2tC02-eq의 탄소를 감축함 ○ 4억원의 예산으로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센터당 평균 3,600만원에 불과한 상황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녹색매장과 더불어 국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을 현실화할 것		

2. 국가데이터처(1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통계 작성·공표 업무 부당 관여 및 부적정 처리 문제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통계작성(3032-304)	시정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감사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사안감사 결과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 작성 및 공표 업무에 대한 부당 관여·처리”, “통계서술정도 임의 수정 등 통계 작성 및 공표 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함 -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결과 지적된 통계 작성·공표 업무 부당 관여 및 부적정 처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통계조사 답례품 선호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계조사지원(3037-309)	주의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통계조사 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통계조사 답례품 선호도 조사의 실효성이 낮음 - 통계조사 답례품에 대한 주된 불만족 사유로 ‘답례품 금액이 낮음’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불응률을 보인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답례품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조사의 경우 최근 불응률이 높았지만 지난 5년간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 ○ 또한, 본 사업 집행액의 74%가 통계조사 답례품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실적은 답례품과 무관한 ‘사업체 경상조사 5종 전자조사율’을 활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답례품 선호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사업실적을 답례품 관련 지표로 변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품질관리 사업의 운영 개선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이행률이 낮고, 언론 지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컨설팅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0~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1,334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으나 상당수가 미이행 상태이며, 2024년에는 진단대상 60건 중 57건(95%)이 개선되지 않아 통계 신뢰성 저하 우려가 큼 -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도출 후 이행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통계가 2022년 32건, 2021년 6건, 2020년 4건에 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시진단은 연평균 1건, 컨설팅 지원은 연 3~4종에 그쳐 기관 수요(연 10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품질개선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가통계 품질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적시에 이행되도록 후속 점검과 성과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수시진단 건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통계품질 저하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취약 기관의 개선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가통계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통계인프라강화(1031-302)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지 않고 매년 타 사업의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2023년·2024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세목조정 및 지역사회조사 토론회 진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협의회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였고, 2025년·2026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협의회 행사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세목조정을 통한 편법적 전용 관행을 중단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투입예산 대비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 부진 - 통계데이터센터: 2025년 6월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전북·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총 13개소 운영 중 - 2024년 기준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 건수는 294건, 평균 이용자 수는 512명에 그쳤으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센터 1개소당 24.5건, 일평균 이용자 수는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수준은 저조 -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7억 5,000만원으로, 같은 해 기준 이용 건수 4,033건, 이용자 수 7,08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용 1건당 약 93만원, 이용자 1인당 약 53만원의 예산이 소요 ○ 통계테이터센터의 이용자 편의와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는 자료 반출 기준 완화 및 반출 소요 시간 단축, 자료 간 연계성 확대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와의 연계 강화, 민간자료 등 제공 데이터 종류의 확대 등 개선 요구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센터의 복잡한 자료 반출 절차와 제한된 데이터 범위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자료 반출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외국인 사망자 통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통계작성(3032-304)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직접 관련된 통계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산업재해현황이 유일한데, 내·외국인이 따로 구분되어 공표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외국인 사망자 원인 등 외국인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지양 및 국외출장경비 집행기준 명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총조사(3033-306)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 시행을 위해 해외자료 번역 목적으로 편성한 일반수용비를 북미학술통계대회 등록비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 - 2024년 해외자료 번역 예산 일부를 학술대회 등록비로 사용하였으나 해당 대회 발표주제는 경제총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국외여비를 일괄 집행하고 부대비용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관행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을 지양하고 국외출장 경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회 확정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7031-305)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른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 사업의 국외여비 부족분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하였으며, 파라과이 출장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콜롬비아 현지점검을 미실시하는 등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 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킨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른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자의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상품권 구매 체계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통계조사용 상품권 198억 2,500만원, 기타 상품권 4억 1,000만원 등 총 202억 3,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일정 규모의 연례적인 상품권 재고가 발생함 - 2024년 7개 세부사업에서 각종 통계조사 답례품 명목으로 총 198억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며, 이 중 8억 9,9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재고 발생 ○ 국가데이터처는 상품권 관련 별도 지침 없이 내부결재 문서만을 근거로 상품권을 구매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상품권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상품권 구매와 배분 및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문책 등 향후 조치 내용을 보고할 것(시정) ○ 국가데이터처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 각 부서의 상품권 구매 계획을 통합 관리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한 태블릿PC 취득 시 비용절감 방안 강구 및 사후 활용방안 사전 수립**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시정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태블릿PC 취득 시 렌탈, 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전량을 구매하였고, 구매 전에 미리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2025년 5월 중앙부처 대상 태블릿PC 이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예산 낭비를 반복함 -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2024년 4월 8,000대 계약, 2024년 11월 21,613대 계약 -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가데이터처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구매한 태블릿PC의 대부분을 조사 종료 이후 타 부처로 이전한 것은 타 부처의 업무를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다음 총조사 때는 렌탈·순차구매 등 예산 절감 방안 및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태블릿PC 취득 시 렌탈·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태블릿PC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타 부처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근거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2031-302)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내역사업인 ‘초거대 AI 통계챗봇 구축’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집행근거, 예산 과부족 사유, 집행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 집행 타당성 확인이 어려움 -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된 예산 5억 2,500만원을 자체 전용하여 공공요금(210-02목)으로 집행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집행근거, 예산 과부족 사유, 집행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업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용 이유·근거·경과에 대하여 소명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통계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경제동향작성(3031-302),
사회통계작성(3032-304), 통계조사지원(3037-3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데이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조사 불응률이 상승함
-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답례품 등 인센티브 부여, 응답 편의성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정보노출 기피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주요통계 불응률 추이
(단위: %)
<table>
<tr><th>통계명</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사회조사</td><td>12.8</td><td>14.1</td><td>13.4</td><td>16.1</td><td>14.5</td><td>16.8</td></tr>
<tr><td>가계금융복지조사</td><td>7.8</td><td>7.8</td><td>8.5</td><td>10.1</td><td>9.8</td><td>9.5</td></tr>
<tr><td>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td><td>1.8</td><td>2.9</td><td>2.7</td><td>3.7</td><td>3.8</td><td>3.6</td></tr>
<tr><td>가계동향조사(통합)</td><td>36.2</td><td>32.2</td><td>30.6</td><td>34.8</td><td>42.1</td><td>44.4</td></tr>
<tr><td>경제활동인구조사</td><td>10.1</td><td>10.8</td><td>10.9</td><td>12.1</td><td>12.7</td><td>13.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데이터처는 정보 보호 강화,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동 사업예산의 세목 조정을 통해 본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2020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반하는 집행을 하였음 -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 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추진 -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정기통계품질진단, 국제협력, 통계 작성 및 홍보, 통계정보화 업무 등의 위탁사업은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3월 일반수용비 9,6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사업' 용역 발주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세목조정을 통한 연례적인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및 통계 교육·홍보 업무 등의 추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가구주택 기초조사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편성·집행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처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지자체에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위임하면서 일반수용비를 교부·정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 지출을 위한 비목이므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은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국세청(20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예산의 과다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주의	국세청
		지적사항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국세청이 발행하는 실물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 ○ 국세청은 2024년 전용카드 10만장을 추가 제작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전용 - 이는 2024년 소요량(28만 1,000장)보다 기보유량(56만 2,000장)이 더 많았기 때문 ○ 국세청은 2024년 전용카드 기보유량(56.2만장)이 최근 연간 소요량(20~30만장)에 비해 많음에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가 있음 - 특히 2021년 전용카드 소요량은 33.3만장이며, 2022년 27.4만장, 2023년 23.7만장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전용카드 제작 예산 편성시 기보유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설정하여 관리 중 - 2024년 성과목표치는 166조원이며, 실제 발급규모는 179.7조원으로 목표 초과달성 ○ 그러나 이러한 성과목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자 증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설정된 문제 존재 - 국세청은 성과목표치를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연평균을 고려하여 산정 - 그러나 2024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가 전년(112개)에 비해 13개 업종 추가 지정되어 125개로, 이는 2021년 77개 업종에 비해 업종 수 기준으로 약 62.3% 증가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발급액 증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높게 설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조세범칙처분율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사활동지원(21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조세범칙처분율’을 설정하여 관리 중
- 조세범칙처분율이란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 중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범칙처분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 비율을 의미
❍ 2024년 조세범칙처분율은 85.1%로 성과목표(87.4%) 미달성 및 최근 5년간 가장 저조
※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처분율 현황
(단위: 건, %)
<table>
<tr><th>연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범칙조사건수(a)</td><td>217</td><td>152</td><td>128</td><td>126</td><td>174</td></tr>
<tr><td>고발·통고처분 건수(b)</td><td>188</td><td>132</td><td>121</td><td>117</td><td>148</td></tr>
<tr><td>범칙처분율(b/a)</td><td>86.6</td><td>86.8</td><td>94.5</td><td>92.9</td><td>85.1</td></tr>
</table>
- 특히 성과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최근 5년간 2024년도가 유일
- 국세청은 모수가 작고 사건별 개별성이 강해 연도별 편차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
❍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자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처분율의 하락은 사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칙처분율을 유일한 성과지표로 설정한 만큼 처분율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조세범칙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금융거래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범칙처분율의 연도별 편차를 최소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장비구매 예산 편성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압류재산공매(2232-301)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국세청은 사전에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바디캠의 사양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바디캠 단가가 과다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구매된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은 예산안에 바디캠 단가를 973,400원으로 산정하고 수량을 115개로 산정하여 1억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였음 - 그런데 조달청 입찰 결과 구매 단가가 예산에 편성된 단가 대비 38.1% 수준(371,000원)인 제품으로 최종 낙찰되어 총 280개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수량 115개를 초과하는 물량(당초 계획 대비 243.4%)임 - 이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인 2024년 중 국세청이 보호장비 구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구매를 계획했던 제품의 사양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장비 구매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현장 수요와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과다 단가 산정 및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수량 구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적정규모의
청원심의회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청원심의회 운영'은 편성 대비 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함
- 2023년과 2024년 모두 계획 대비 실제 청원심의회 개최가 저조하여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각각 1.8%, 3.6%임
❍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 부족 및 제도 홍보 미흡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2025년부터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시작
※2023년 및 2024년 청원심의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 편성내역</th><th colspan="2">집행 내역</th><th rowspan="2">집행률
(B/A)</th></tr>
<tr><th>계획횟수</th><th>금액
(A)</th><th>개최횟수</th><th>금액
(B)</th></tr>
<tr><td rowspan="3">2023</td><td>본 청</td><td>12회</td><td rowspan="3">181</td><td>2회</td><td rowspan="3">3.3</td><td rowspan="3">1.8%</td></tr>
<tr><td>지방청</td><td>84회</td><td>1회</td></tr>
<tr><td>세무서</td><td>666회</td><td>6회</td></tr>
<tr><td rowspan="3">2024</td><td>본 청</td><td>6회</td><td rowspan="3">39</td><td>0회</td><td rowspan="3">1.4</td><td rowspan="3">3.6%</td></tr>
<tr><td>지방청</td><td>21회</td><td>1회</td></tr>
<tr><td>세무서</td><td>133회</td><td>4회</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청원심의회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세자에게 적극적·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비수도권 지역에
위탁인력 적극
배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세무서에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기 위한 위탁인력을 배치하는 사업
❍ 위탁인력 배치에 있어 수도권에 집중배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2023년도 결산 심사 당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금신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채택
- 2025년 6월 기준 지방청 배치 인력은 24.6%로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 존재
<table>
<tr><th>연도</th><th>합계(명)</th><th>사업본부</th><th>서울청</th><th>중부청</th><th>인천청</th><th>대전청</th><th>광주청</th><th>대구청</th><th>부산청</th></tr>
<tr><td>2021</td><td>100</td><td>7</td><td>46</td><td>25</td><td>22</td><td>-</td><td>-</td><td>-</td><td>-</td></tr>
<tr><td>2022</td><td>100</td><td>7</td><td>45</td><td>27</td><td>21</td><td>-</td><td>-</td><td>-</td><td>-</td></tr>
<tr><td>2023</td><td>100</td><td>7</td><td>45</td><td>25</td><td>23</td><td>-</td><td>-</td><td>-</td><td>-</td></tr>
<tr><td>2024</td><td>120</td><td>7</td><td>42</td><td>27</td><td>24</td><td>4</td><td>4</td><td>4</td><td>8</td></tr>
<tr><td>2025.6.</td><td>130</td><td>7</td><td>41</td><td>27</td><td>23</td><td>6</td><td>6</td><td>6</td><td>14</td></tr>
</table>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서별 민원량에 따라 위탁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였다고 설명함. 실제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의 민원량은 각각 전체의 34.5%, 24.8%, 19.4%로 높은 비중
❍ 그러나 민원량 외에도 납세인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인력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할 필요
- 2024년 기준 납세인원은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이 각각 전체의 9.8%, 8.1%, 8.1%이나 위탁인력 배치 비중은 세 개청 모두 4.9%에 불과</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량이나 납세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도 위탁인력을 적극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비율
제고 및
청년층 부담
완화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0년 이후 미상환 인원과 금액 및 비율, 평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환유예 인원·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4년 1,752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대상자로 분류됨
- 2020년 대비 2024년에 미상환인원(36,236명→54,241명), 미상환인원 비율(14.0%→16.5%), 미상환금액 비율(13.8%→17.3%)이 증가하였으며, 상환유예 대상인원(7,802명→14,091명) 및 금액(10,820백만원→23,284백만원)도 증가함
-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국가보증채무에 해당하여 보증채무 잔액 증가가 전망되는 여건에서 미상환 및 상환유예 관리 강화가 필요함
※ 2020년 이후 연도별 학자금 의무상환대상 상환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상환대상*</th><th colspan="2">상환실적</th><th colspan="3">미상환실적</th><th colspan="2">미상환비율(%)</th></tr>
<tr><th>인원</th><th>금액</th><th>인원</th><th>금액</th><th>인원</th><th>금액</th><th>평균
체납액</th><th>인원</th><th>금액</th></tr>
<tr><td>2020</td><td>259,219</td><td>309,492</td><td>222,983</td><td>266,841</td><td>36,236</td><td>42,651</td><td>1.18</td><td>14.0</td><td>13.8</td></tr>
<tr><td>2021</td><td>273,322</td><td>333,696</td><td>233,977</td><td>285,581</td><td>39,345</td><td>48,115</td><td>1.22</td><td>14.4</td><td>14.4</td></tr>
<tr><td>2022</td><td>291,830</td><td>356,886</td><td>247,614</td><td>301,696</td><td>44,216</td><td>55,190</td><td>1.25</td><td>15.2</td><td>15.5</td></tr>
<tr><td>2023</td><td>318,395</td><td>403,693</td><td>267,279</td><td>337,548</td><td>51,116</td><td>66,145</td><td>1.29</td><td>16.1</td><td>16.4</td></tr>
<tr><td>2024</td><td>328,539</td><td>427,469</td><td>274,298</td><td>353,435</td><td>54,241</td><td>74,034</td><td>1.36</td><td>16.5</td><td>17.3</td></tr>
</table>
* 전년도 미상환(체납) 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환유예기간 만료 전 안내를 강화하며 필요시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상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은 저소득 체납자를 구제하고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상환기준소득 상향 등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불용이 지속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함
- 2024년 신고 57건 중 익명신고가 16건(28.1%)으로 지급 불가 사례가 다수임
-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금액 기준 완화(2천만원→1천만원) 시행령 개정 미완료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1천만원~2천만원 구간사례도 없었음
- 위반대상자의 과태료가 납부·확정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요건이 엄격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제보 요건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 건수를 늘리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재발 방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7111-25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정보서비스(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2024년 12월 10일에 체결하고 12월 20일에 사용료(1,980만원)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사업을 위한 경비를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 국세청이 2022년도 사업을 위한 사용료를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대신 2021년도 잔여 예산으로 집행한 이후, 연례적인 연말 선집행·차년도 사용이 반복되고 있음
※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사용료 현황
(단위: 만원)
<table>
<tr><th>계약기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사용료</td><td>1,980
(2021년 예산으로 집행)</td><td>990
(2022년 예산으로 집행)</td><td>1,980
(2023년 예산으로 집행)</td><td>1,980
(2024년 예산으로 집행)</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향후 세출 예산 집행 시 해당 연도 사업기간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관서운영경비 등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7111-257)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을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나, ①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해야 하며, ② 단일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총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 - 국세청은 2024년 11월~12월 중 3개 영상제작업체에 총 4,533만 9,250원을 지급함 ※ 관서운영경비 범위: 일반수용비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등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가능, 일반용역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불가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세금 신고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 시,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 지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징계부가금
수납률 제고 및
징계 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계부가금(56-5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징계부가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2.2%(수납액 600만원/징수결정액 2억 7,9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2023년 징수결정된 1억 6,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고, 2024년 2억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국세청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그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임
※ 2024회계연도 징계부가금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
증감액</th><th>예산
현액(B)</th><th>징수
결정액(C)</th><th>수납액
(D)</th><th>미수납액</th><th>불납
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징계부가금</td><td>20</td><td>20</td><td>-</td><td>20</td><td>279</td><td>6</td><td>273</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징계부가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태료의 2024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1.5%(수납액 330억 3,400만원/징수결정액 1,539억 6,0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2024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등
증감액</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징수
결정액(C)</th><th rowspan="2">수납액
(D)</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
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
(A)</th></tr>
<tr><td>과태료</td><td>34,692</td><td>34,692</td><td>-</td><td>34,692</td><td>153,960</td><td>33,034</td><td>97,071</td><td>23,85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과태료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변상금 수납률 제고 및 변상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변상금(57-5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1.1%(수납액 1,700만원/징수결정액 14억 9,1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이 징수결정된 변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성실하게 추징하지 않아 불납결손된 것인데, 이는 국세청이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회계직 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과 사후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임
※ 2024회계연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등
증감액</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징수
결정액(C)</th><th rowspan="2">수납액
(D)</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
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
(A)</th></tr>
<tr><td>변상금</td><td>3</td><td>3</td><td>-</td><td>3</td><td>1,491</td><td>17</td><td>9</td><td>1,46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변상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변상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가산금 수납률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5.6%(수납액 2,414억 1,300만원/징수결정액 4조 3,236억 8,5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2024회계연도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체등
증감액</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징수
결정액(C)</th><th rowspan="2">수납액
(D)</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
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
(A)</th></tr>
<tr><td>가산금</td><td>243,567</td><td>243,567</td><td>-</td><td>243,567</td><td>4,323,685</td><td>241,413</td><td>3,871,873</td><td>210,39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압류재산공매(2232-301)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체납 발생액과 누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여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체납액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 - 국세 체납 발생액은 2020년 19조 2,364억원에서 2024년 24조 2,112억원으로 4년간 4조 9,748억원(25.9%) 증가하였음 - 국세 누계체납액은 2024년 110조 7,31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 99조 8,607억원 대비 10조 8,703억원(10.9%) 증가함 ○ '2024년 국제 세무행정 설문조사(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에 따른 2023년 기준 주요국의 조세 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은 미국 7.75%·영국 5.43%·독일 3.12%·일본 1.26% 등인데, 우리나라는 7.9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감치제도의 적극 운영 등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며, AI기술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납세자보호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됨
- 본청의 경우 2020년(66건)→2024년(24건)으로 63.6% 감소,
지방국세청의 경우 2020년(103건)→2024년(57건)으로 44.7% 감소,
세무서의 경우 2020년(24건)→2024년(5건)으로 79.2% 감소
※ 2020~2024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적(세무조사 분야)
(단위: 건, 일)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4">본청</th><th colspan="4">지방국세청</th><th colspan="4">세무서</th></tr>
<tr><th>처리건수</th><th>시정건수</th><th>시정불가건수</th><th>평균소요일수</th><th>처리건수</th><th>시정건수</th><th>시정불가건수</th><th>평균소요일수</th><th>처리건수</th><th>시정건수</th><th>시정불가건수</th><th>평균소요일수</th></tr>
<tr><td>2020</td><td>66</td><td>13</td><td>53</td><td>18.0</td><td>103</td><td>27</td><td>76</td><td>15.4</td><td>24</td><td>6</td><td>18</td><td>18.0</td></tr>
<tr><td>2021</td><td>40</td><td>13</td><td>27</td><td>15.7</td><td>55</td><td>18</td><td>37</td><td>16.2</td><td>16</td><td>5</td><td>11</td><td>15.7</td></tr>
<tr><td>2022</td><td>29</td><td>3</td><td>26</td><td>18.1</td><td>62</td><td>21</td><td>41</td><td>15.1</td><td>7</td><td>2</td><td>5</td><td>14.6</td></tr>
<tr><td>2023</td><td>38</td><td>18</td><td>20</td><td>19.8</td><td>55</td><td>6</td><td>49</td><td>16.0</td><td>5</td><td>1</td><td>4</td><td>15.8</td></tr>
<tr><td>2024</td><td>24</td><td>12</td><td>12</td><td>19.3</td><td>57</td><td>14</td><td>43</td><td>15.9</td><td>5</td><td>-</td><td>5</td><td>17.4</td></tr>
</table>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서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성과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2014년「국세기본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및 심의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홍보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청년인턴제도 운영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지원인력 운영(7138-304)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세청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국세청 청년인턴의 중도퇴사 비율은 30.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는데, 중도퇴사 사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 성과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세청이 2024년 7월~8월 사이에 실시한 청년인턴 워크숍에는 취업특강·취업 면접 및 자소서 등에 대한 교육과 퍼스널 컬러 진단·쿠키 베이킹 등 실제 직무경험을 쌓는 것과 무관한 다수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 - 국세청은 청년인턴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청년인턴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청년인턴 중도퇴사 사유를 조사하여 청년인턴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중도퇴사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경쟁률·중도퇴사율·수료율·인턴수행 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것 ○ 국세청은 청년인턴 교육·워크숍을 직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아닌 문서 작성 및 보고요령 등 직무 관련 교육과 실무체험(OJT)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견학과 가상 세무서 실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청년인턴의 본·지방청 정책부서 배치 등을 통해 청년인턴의 업무를 단순 잡무가 아닌 사업 취지에 맞는 업무로 설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실효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도입된지 약 20년 정도로 이제 사회 전반에 정착되었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국세청도 2025년부터 건당 최대 5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25 만원으로, 연간 최대 수령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하 기도 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충분히 뿌리내린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 제도는 일시적인 실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한 경우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탈세 억제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는 단순 실수에 대한 징벌에 가깝고, 일부 신고자는 이를 악용하여 반 복적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공정성과 실 효성에 대한 우려가 큼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신고 대상을 고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지급 기준을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에 따른 예산액 이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1135-300)	주의	국세청
		지적사항	○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요금 부족액으로 자체 이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예산의 이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4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대외 홍보비와 신고안내 비용 등 관련예산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공공요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체 이용(4억원)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자체 이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세정보분석시스템(7133-502)	제도개선	국세청
		지적사항	○ 국세청이 2021년에 추가 발굴한 82개의 분석과제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나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은 ISP를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빅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65개에 달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ISP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ISP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4. 관세청(1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체화물품의 적극적 공매를 통한 관련 예산 집행 효율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관세청의 체화물품 처리 과정에서 공매 실적이 저조하고 체화물품의 대부분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관세 및 제세 수입이 감소하고 폐기비용만 증가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전체 체화물품의 95% 이상이 폐기 등 기타처리 되었고 실제 공매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가능한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공매 사례는 극히 드묾 - 공매 관련 홍보 부족으로 공매 참여도 특정 소수에 집중됨 (최근 5년간 세관 공매 전자입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인원은 394명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체화물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최소화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해 일실된 관세 및 제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가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각·공탁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지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 (1231-30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탈루심사 활동 지원’은 관세심사 직원의 관세탈루심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국적기업은 해외 본사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임에 따라 조사기간이 장기화됨 - 2023년 기준 국내기업의 평균 조사기간이 72일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은 108일임 ○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제출을 지연하다가 소송 진행 이후에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사례 발생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을 위한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 지양 및 적극적 환가 처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밀수단속(1331-30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관세청은 압수물품을 위탁보관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은 위탁보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간 위탁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관세법」은 압수물품을 세관 자체 창고나 소지자·지자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여, 위탁보관자의 관리·책임범위 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관세청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관리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큼 - 부패·손상·상품가치 하락 등으로 매각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 현행법상 환가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관련 실적은 전무함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압수물품 위탁보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보관을 위한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며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관세청은 매각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가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보관비용을 줄이고 국고 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재무제표상 오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7111-250)	시정	관세청
		지적사항	○ 관세청 재무제표 내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이 누락되어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에서 군산항 해상 통관장 등 3건의 임차개량자산을 취득 시점 이후부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함 - 기타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 3억 3,553만원 등 총액 4억 7,796만원이 과소계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재무제표상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5	**위법적 예산 집행 관행 근절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세행정활동지원(7131-301), 인천본부기본경비(7118-254), 광주기본경비(7118-256)	시정	관세청
		지적사항	○ 관세청은 고위공무원 국외교육을 위해 5,700여 만원의 예산을 국외교육여비(220-03)목이 아닌 국외업무여비(220—02)목으로 집행하였음 ○ 관세청은 국외출장 시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집행하거나 두 가지 주요사업비를 활용하여 국외출장 비용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관세청은 세관 중 인천 및 광주본부세관은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 이용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에 ‘일반수용비 및 시설유지비 집행’ 목적으로 또 다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예산지침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를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7140-30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관세청은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는 5년간 총 55건(연평균 11건) 수준이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재심의도 5년간 10건(연평균 2건)에 불과 - 2024년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전체 심의건수는 28건으로, 부산세관(17건)을 제외하면 인천 2건, 인천공항 3건, 서울 4건, 대구 2건, 광주 0건으로 운영실적 저조 ○ 관세청은「관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공개내용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여부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관세청 실무부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관련 심의실적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이행여부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적정 수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큰 폭(844억 8,300만원, 본예산 대비 83.6%)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본예산
(A)</th><th>징수
결정액(B)</th><th>수납액
(C)</th><th>과다 편성액
(A-C)</th><th>수납률
(C/A)</th></tr>
<tr><td>2020</td><td>122,158</td><td>78,428</td><td>78,410</td><td>43,748</td><td>64.2</td></tr>
<tr><td>2021</td><td>58,595</td><td>24,650</td><td>24,633</td><td>33,962</td><td>42.0</td></tr>
<tr><td>2022</td><td>25,330</td><td>36,949</td><td>36,926</td><td>-11,596</td><td>145.8</td></tr>
<tr><td>2023</td><td>74,913</td><td>51,560</td><td>51,539</td><td>23,374</td><td>68.8</td></tr>
<tr><td>2024</td><td>101,020</td><td>16,584</td><td>16,537</td><td>84,483</td><td>16.4</td></tr>
</table>
○ 이는 면허료·수수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점, 코로나19에 따른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기인함
○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정부의 예산안 추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 시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 (56-563)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 6,400만원에서 2024년 839억 6,200만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으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 72.9%에서 2024년 13.9% 수준으로 감소함 - 대부분「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 해당 과태료 징수내역은 2015년 71.3%에서 2024년에는 11.0%로 60.3%p 급감함 - 가상자산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규 위반자가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잠적하고 있기 때문 ○ 과태료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과태료를 성실 납부한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2020, 2021,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외국환거래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과징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징금(56-56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과징금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등 의무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위반,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징수하여 수납하는 항목임
❍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기준 49.1%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49.1% 정도의 낮은 수납률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
※ 관세청 과징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6">2024</th><th>2025</th></tr>
<tr><th>본예산(A)</th><th>징수
결정액(B)</th><th>수납액
(C)</th><th>미수납액</th><th>불납
결손액</th><th>수납률
(C/B)</th><th>예산액</th></tr>
<tr><td>과징금</td><td>2,857</td><td>7,233</td><td>3,553</td><td>3,635</td><td>45</td><td>49.1</td><td>7,233</td></tr>
</table>
❍ 2020, 2021,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저조한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가산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가산금 항목은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기본가산금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0.75%씩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을 각각 징수하여 수납하는 항목임
❍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기준 △0.4%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0.4% 정도의 낮은 수납률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 관세청 가산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6">2024</th><th>2025</th></tr>
<tr><th>본예산(A)</th><th>징수
결정액(B)</th><th>수납액
(C)</th><th>미수납액</th><th>불납
결손액</th><th>수납률
(C/B)</th><th>예산액</th></tr>
<tr><td>가산금</td><td>1,319</td><td>633,708</td><td>△2,763</td><td>631,466</td><td>5,004</td><td>△0.4</td><td>1,042</td></tr>
</table>
❍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AEO공인업체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 (1231-30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임 - AEO 공인업체로 공인되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수혜를 받음 ○ AEO 공인업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공인 취소가 이행되지 않음 - 2024년의 경우 밀수출입 1건, 부정수출입 2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1건 등 총 6건(192억 원)의 법률 위반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3건은 공인 취소가 이행되지 않음 ○ AEO 공인심사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위탁기관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 시 활용하여야 하나, 관세청은 이를 미실시함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에 대해 공인취소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세청은 AEO 공인심사 위탁 업무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위탁계약을 실시하는 등 집행을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외직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매년 폭증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위해식품·의약품 등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물품과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주요 적발 현황
(단위: 건)
<table>
<tr><th>구분</th><th>세관장
확인대상[1)]</th><th>지재권 침해</th><th>사회안전
위해물품[2)]</th><th>기 타3)</th><th>합 계</th></tr>
<tr><td>2020년</td><td>61,768</td><td>44,742</td><td>3,416</td><td>115,761</td><td>225,687</td></tr>
<tr><td>2021년</td><td>56,408</td><td>34,624</td><td>4,483</td><td>144,658</td><td>240,173</td></tr>
<tr><td>2022년</td><td>80,989</td><td>62,326</td><td>8,011</td><td>142,213</td><td>293,539</td></tr>
<tr><td>2023년</td><td>90,563</td><td>67,749</td><td>7,557</td><td>94,182</td><td>260,051</td></tr>
<tr><td>2024년</td><td>174,659</td><td>84,625</td><td>9,388</td><td>170,878</td><td>439,550</td></tr>
</table>
1)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 모의총포도검류 등, 3) 품명·수하인 상이, 저가신고 등
○ 현재 관세청의 해외직구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대응은 인력·예산의 부족으로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1441-5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
- 시스템구축 사업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불법마약 밀수단속 포함) 구축 내내역사업을 위해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억 400만원을 불용하고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7.3%에 불과함
※ 2024회계연도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7">2024</th><th>2025</th></tr>
<tr><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관세행정 정보관리</td><td>79,148</td><td>1,186</td><td>-</td><td>80,334</td><td>77,943</td><td>241</td><td>2,150</td><td>63,638</td></tr>
<tr><td>시스템구축</td><td>5,949</td><td>-</td><td>-</td><td>5,949</td><td>4,881</td><td>241</td><td>827</td><td>9,224</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관세청은 향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업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송무수행비용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송무수행비용지원(7150-40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송무수행비용’은 선례가 없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고, ‘확정채무지급’은 국가패소에 따른 패소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며, ‘소송역량강화’는 송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워크숍, 송무대책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송무수행비용’, ‘확정채무지급’, ‘소송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패소율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은 동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소송 패소율은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역량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써 높은 패소율은 행정기관의 법적 검토 및 소송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송무수행비용지원 사업에 대해 패소율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R&D 사업 성과 미흡 및 실효적 과제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1442-530)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관세행정의 첨단화, 관세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다부처 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된 과제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외산장비의 국산화, 행정편의 목적의 장비개발 등의 과제들임 - 4년간 312억원(관세청 예산 1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기술적 혁신성이나 현장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세행정의 고도화라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기획과 과제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향후 R&D 사업 추진 시 단순한 국산화 수준을 넘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선정·지원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R&D 사전기획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세관 기술지원(1442-533)	제도개선	관세청
		지적사항	○ 관세청이 2024년에 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수행한 3건의 R&D 사전기획 연구 산출물은 기술의 실현 가능성, 소요 예산 산출 등에 있어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관세청은 2024년에 R&D 과제기획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용역과제 3건을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민간 컨설팅업체에 발주하였으나,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과제의 경우 당초 제안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했음 - 또한 동 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개발비 소요 예산에 대해 보고서상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종합하면, 관세청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관리 및 과제수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관세청은 스마트세관 기술지원 사업의 관리 및 과제수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것		

5. 조달청(1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조달청 사업의 성과관리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총괄	시정	조달청
		지적사항	○ 2024년도 감사원 결산 감사에서 조달청 성과관리 부진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성과지표 달성률이 33.3%로 전 중앙부처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음. 이는 국가조달행정의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조달 생태계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성과관리 부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조달청 자체 계획을 마련할 것		
2	**국고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시정	조달청
		지적사항	○ 조달청은 「국고금 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국회, 감사원, 기재부, 조달청 자체감사 등 최근 5년간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지적받은 현황, 사례, 대응조치 등의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고금 관리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시설계약 사업수입 미수납 및 예산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시설계약사업수입(45-454)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조달청의 시설계약사업수입은 수요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상승 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장기 미납 사례가 늘어나 세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시설계약사업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2021년 4.9% → 2024년 9.6%) - 전체 미수납액 중 수요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비율(2021년 18.2% → 2024년 48.9%) ○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을 과소계상하여 2024년 기준 수납률이 13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 전출금이 축소되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음 -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계상되는 경우 자본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도 실제 전출 여력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시설계약수입의 미수납 방지를 위해 수요기관의 예산 편성 · 집행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법적 · 제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며, 시설계약 수입의 실제 수납 규모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과소계상 문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 불용액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에 편성된 다수공급자 계약 구매 지원 및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예산액 33억 6,1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배상금·기타직 보수 예산 편성의 현실화 및 실무수습 인력 운영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조달청은 매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의 반복적인 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사업의 보수 항목 불용 예상액이 다른 세목(배상금, 기타직보수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조달청은 2020~2024년 배상금 예산을 4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최대 3억 5,300만원에 달해 매년 전용이 발생했고, 2024년에도 1,300만원을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충당 - 또한, 보수 항목이 반복적으로 세목조정되어 기타직보수·건강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하고, 실무수습 인력 증원에 따라 1억 3,000만원이 기타직보수로 이동하는 등 국회 심의와 다른 집행이 이루어짐 ○ 이로 인해 배상금·기타직보수 예산 편성이 부실해지고 반복적 전용과 불용이 구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배상금과 기타직보수의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항목을 정밀하게 산정·관리하며, 실무수습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심의 내용과 다른 세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별 비축 목표 달성률 제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철금속의 평균 비축일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개별 품목별로는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여 실제 위기 대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비축물자 구매계약 방식 중 프리미엄계약이 전체 도입 물량의 약 85%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급등이나 공급 차질 시 안정적 수급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프리미엄계약: 운송비, 수수료 등 부대비용(프리미엄)만을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고, 물품가격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통상 2~3개월) 안에 조달청이 시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 ※ 장기공급계약: 입찰에 의해 장기공급을 위한 프리미엄을 결정. 통상 6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월 평균 국제가격에 따라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비철금속별 비축 목표량을 면밀히 관리하여 품목별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고, 프리미엄계약 일변도에서 벗어나 장기공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계약 방식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세입예산 정확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총괄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세계잉여금 관련)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상 세계잉여금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달특별회계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매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매년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 과소편성된 주요과목은 시설계약사업수입과 기타영업외잡수익으로,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경우 조달청은 2024년도 공사계약 등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초과수납이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기타영업외잡수익의 경우 조달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조달청은 과거 평균예치액을 활용해 추계하는 등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함 ○ (과징금 관련) 조달청은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예산을 과소편성함에 따라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국가계약법과 과징금 부과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전년도세계잉여금 초과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징금 초과수납 방지를 위해 과징금 세입 추계방식을 개선하는 등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토지대여료(51-511), 건물대여료(51-512)	시정	조달청
		지적사항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 선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조달청이 수납한 토지대여료 총 22건 중 10건과 건물대여료 총 20건 중 6건이 사용·수익일 이후 수납되어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음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에 부합하도록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적기에 부과·고지하고 납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1131-505)	주의	조달청
		지적사항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은 계획 대비 시스템 개통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관리용역비 등 2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舊나라장터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2024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통 지연으로 6월 28일 기존 계약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 조정은 8월 2일에서야 이루어져, 계약 당시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을 위반하였음 - 또한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용역비 46억 2,000만원을 조달정보화 관리용역비로 내역변경하였으며,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및 용역직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억 800만원을 자체 세목조정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과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 유지·보수·관리상 애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준수하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것 ○ 조달청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등 4억 2,900만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 ○ 조달청은 향후 예산 확보 없이 계약 변경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개별 지원사업의 제공서비스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타 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도 큰 차별점이 없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성과를 해외 조달시장 진출실적이 아닌 기업 전체 수출실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성과평가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곤란한 실정임 - 조달청은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실적을 통해 수출성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현지 조달기업을 통한 간접 진출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최종납품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증하여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개별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1	**회전자금 운영현황 공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조달청은「정부기업예산법」제13조에 따라 최근 5개년 중 2023년에는 500억원을, 2024년에는 700억원을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 ○ 특히 회전자금전출금 유동자산 중 기타미수금 자산에는 조달청이 조달사업법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이 포함되는 바, 이는 공정조달을 실현해야 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결산을 포함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방안이 사실상 차단됨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영현황의 공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리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 실질 소유권이 ETF 투자자들에게 있어 비상시 대비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축물자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민간사업자인 자산운용사는 구리 보관에 따른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달청에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이 민간 창고 대비 7.6%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ETF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음 - 자산운용사가 조달청에 지급하는 비용은 톤당 약 53원으로 국내 LME 보관창고 사용비인 톤당 1일 상한 약 696원 대비 7.6% 수준 ○ 민관 공동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특정 자산운용사와 ETF 투자자들에 대한 금전적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을 통해 비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중소·영세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는 복수의 공급자를 사전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이 품질·성능·가격 등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를 운영하는 사업임 ○ MAS에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수요물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수요물자 등록요건 등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혁신제품 판매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제도개선	조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는 혁신제품의 지정 및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형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실적이 저조하고, 유형2 혁신제품** 중 공급자 제안형 혁신시제품의 시범구매 실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개별 부처의 추천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제품. 부처에서 R&D 결과물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천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됨 ** 상용화 전 시제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공급자(혁신기업) 또는 수요자(공공기관)가 조달평에 혁신시제품 지정을 신청하면 조달청의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됨		
		시정요구사항	○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이 시범구매로 연계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 관리 강화 및 비철금속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 등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 전출금(9701-9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조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에 알루미늄 8,000톤, 구리 1,800톤, 니켈 700톤 확충을 위하여 회전자금 전출금 예산 7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니켈을 제외한 알루미늄과 구리의 확충량이 이에 미달하고 있음
❍ 알루미늄과 구리의 재고 확충량 실적이 예산상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비철금속 전체의 목표재고일수는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여 연간 재고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철금속 재고일수
(단위: 백만원)
<table>
<tr><th>품명</th><th>2024년 계획</th><th>2024년말 재고</th><th>과부족</th></tr>
<tr><td>알루미늄</td><td>65</td><td>64</td><td>△1</td></tr>
<tr><td>구리</td><td>50</td><td>48</td><td>△2</td></tr>
<tr><td>납</td><td>31</td><td>33</td><td>1</td></tr>
<tr><td>아연</td><td>36</td><td>36</td><td>-</td></tr>
<tr><td>주석</td><td>69</td><td>70</td><td>1</td></tr>
<tr><td>니켈</td><td>70</td><td>70</td><td>-</td></tr>
<tr><td>합계</td><td>53</td><td>53</td><td>-</td></tr>
</table>
❍ 비축실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방출실적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 회전자금 운용계획 작성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조달청은 회전자금을 통한 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을 위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비철금속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 및 회전자금 운용계획 작성상 미비사항을 개선할 것</td></tr>
</table>

교육위원회

1. 교육부(8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집행 점검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303-500),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문해력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지적되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됨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교원의 AI 교수 · 학습 역량강화 사업은 79.2%로 실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투입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여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AI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교육부 총괄(운영지원과)	주의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교육부 관할 49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1%에 미달하는 기관은 28곳이며 이 중 23곳은 2년 연속 미달하였음 - 2024년 목표 미달 기관 중 특수학교 3곳, 특수교사 양성 학과 설치 학교 5곳, 지방거점국립대 5곳, 글로컬대학 8곳 등에서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특히 부적절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3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1-250), 학술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8-2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7018-22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3년도 결산심사시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결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대한민국학술원의 경우 사이버 보안 핵심인 망분리 예산 2억원을 불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24년 4월 전용했지만, 6월 이후에야 해당 예산을 집행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24년 3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를 조정해 비상임위원 격려품과 추석선물에 집행하였는데, 집행지침에는 업무와 무관한 내부직원 격려용 집행을 금지하고 있고, 비상임위원은 직제상 직원으로 보기도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를 조사하여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2025년 동일하게 전용된 예산이 있다면 전액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의 안전인증 완료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주의	교육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하위사업인 ‘국립대학 안전 인증비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3일까지 국립대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집행이 부진한 것은 교육부와 국립대의 안전 의식과 집행 노력이 부족한 탓임 ○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및 미인증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말까지도 전체 안전인증 대상 교육시설 중 60.7%가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가 기한 내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사업의 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주의	교육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59.5%, 2023년 39.7%, 2024년 2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부지확정 지연, 학내 의사결정 지연, 조달청 행정협의 등에 의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의사결정 지연이나 행정협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함 -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통합정보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7	**예산 배분방식 개선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대학별 시설확충 사업 각각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미진하고, 과거 집행실적 등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학별 시설확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대학별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5년 제2차 추경안에서도 동 예산을 산정할 때 노후 시설의 항목만을 특정하고, 각 대학별로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대학별로 배분함에 있어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 집행실적 등 그간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이를 근거로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조속한 설립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하위 사업 중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선정된 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2025년까지 각각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도체 기자재 목록 검토 지연 등에 따라 차질이 발생하여 2025년에도 연구소의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의 특화를 통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9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제고 방안 마련 및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해당 대학의 취업률 자체는 높지만,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이 낮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약 기업 유지취업률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져 안정성이 부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평가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계속’으로 평가되고 사업비 조정도 미미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계약학과 등록률·유지취업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대학별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해 환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인재양성 목적에 맞는 사업 예산 활용 필요 등**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이 연구시설·장비비에 과도하게 편중(’ 23년 58.5%, ’ 24년 57.4%)되고 해당 비목의 대학별 집행이 저조(’ 23년 26.5%, ’ 24년 67.1%)함 - 교원 충원의 경우 6개교(’ 23년 1개교, ’ 24년 5개교)에서는 전혀 채용이 없어, 특성화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이나 관련 연구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의 예산이 연구시설·장비비에 편중되지 않고 인재양성 목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대학은 교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1	**평가인증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5학년도부터 대학 재정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해관계 기관이 평가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대학의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고 인증을 받은 사례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평가인증기관의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허위자료 제출·형식적인 심사와 같은 부실 운영을 근절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한국학진흥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학 진흥(243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한국학 진흥 사업의 성과지표인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만족도는 해외한국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만족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인 국내외 한국학 진흥 및 확산의 성과 평가의 지표로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실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학진흥 사업 과제 참여 연구자 1,1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조사대상 중 11.7%에 해당하는 137명만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성과목표를 95.8%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성과 측정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의하여 동 사업의 국내외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해당 지표는 연구자의 만족도 외에 연구실적,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결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학 진흥 및 확산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인프라고도화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인프라고도화 사업은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24년도 1차년도에 10개 기관의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 첨단R&D 장비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이나, 2024년 결산기준(2025.2.28.)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그 외 6개 기관은 장비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차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한 과제수행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각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통해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 ❍ 교육부는 첨단 R&D 장비의 체계적 운용 및 전담운영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4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2301-300), 전문대학 혁신지원(4602-4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 비정년트랙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지원 자격요건 인증이 비정년트랙의 양산을 초래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 - 현행 기관평가인증의 정량평가에서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정성평가 측면에서만 교원 구성을 고려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에서 비정년트랙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한국연구재단
위탁연구
개발비 목적을
고려하여 집행</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230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연구재단은 관리운영비 중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정책과제 중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과제를 수행한 바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의 최근 3년간 결산자료
(단위: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B)</th><th>집행률(B/A)</th></tr>
<tr><td>2022</td><td>490</td><td>125</td><td>25.5</td></tr>
<tr><td>2023</td><td>550</td><td>375</td><td>68.2</td></tr>
<tr><td>2024</td><td>375</td><td>240</td><td>64.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 향후 위탁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td></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운영비에
대한 적정예산 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혁신지원(230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 사업관리운영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0%수준임에도 매년 사업관리운영비로 배정된 예산 전부를 한국연구재단에 교부하였음
-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수탁기관에 전액 교부함에 따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책무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 대학혁신지원 사업 내 관리운영비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B)</th><th>집행률(B/A)</th></tr>
<tr><td>2022</td><td>7,200</td><td>3,320</td><td>46.1</td></tr>
<tr><td>2023</td><td>9,580</td><td>4,255</td><td>44.4</td></tr>
<tr><td>2024</td><td>7,325</td><td>3,558</td><td>48.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교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창업 활성화(2256-31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으로 참여할 때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 없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하였음 ○ 해당 청년보좌역을 주축으로 청년자문단이 운영됨에 따라 자문단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친일 교과서 집필과 무단 겸직 등으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18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 별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대학창업 활성화(2256-31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청년자문단 운영’과 ‘청년인턴 운영’ 등은 창업활성화라는 세부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운영’과 ‘청년인턴 운영’등의 내역사업을 세부사업항목으로 분리하여 따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추계방식 개선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홍보 등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이자면제 사업의 지원범위와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ICL 이자면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ICL 이자면제 사업 내 내역사업인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이 저조함 - 당초 편성된 예산 188억 6,3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3.1%로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이하 대출잔액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집행실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추계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사업이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	**멘토링 사업 예산 산출방식 현실화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 확대에 따라 멘토와 참여 대학 수를 확대하였으나, 멘티 모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칭률이 낮았으며, 멘토 1인당 활동시간이 평균 286시간인데 반해 당초 산출 기준이 130시간으로 예산 산출 방식의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멘토의 활동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산 추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멘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국가장학금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자금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 비율의 2배에 달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2024년 1학기 수능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3만 4,329명에 달하는 등 효율성 문제도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재정 지속가능성, 교육의 질 개선, 대학구조개혁, 연구·혁신 투자 등 고등교육의 다른 분야 지원 수요와의 균형을 점검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22	**K-MOOC 강의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보완**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강좌당 수강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 강좌당 평균 5,000만원 내외의 강좌 개설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하여 수강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K-MOOC강의 수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143-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사업의 시행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및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행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사업 정산이 늦춰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보조금 사업 정산 규정 준수를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잔액 및 이자에 대해 조속하게 반납요청을 하고 보고할 것		
24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의 규모 산정 합리화 및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직업 계고 졸업자 수는 2021년 대비 약 16,000명 감소(78,894명→ 63,005명)하였고, 2024년부터 장려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계고 졸업자 수 감소와 제도 변경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집행률이 77.9%로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직업 계고 졸업자 수와 취업자 수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장려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장려금 지급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향후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연계 장려금 수혜자 규모 예측 합리화 및 집행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사업 진행을 고려한 예산 교부**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주의	교육부
		지적사항	○ 병원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비 충당 불가 및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해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54.4%에 불과하며, 40개 내역 사업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0%임. -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업의 진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개별 병원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 병원에 예산을 교부할 것		
26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성과와 무관하게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병원 선정 개수’로 설정하고 있음. - 2024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지원 병원 7개 중 4개는 실집행률이 0%, 1개는 8%, 1개는 24%, 1개는 36%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로 변경하는 등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공공임상 교수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공공임상교수제는 정원 목표를 당초 15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속된 지원자의 미달로 2024년 50명으로 정원을 줄였음. - 교육부는 정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목표치를 축소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 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달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8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학생수 기준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보통교부금의 합리적인 교부비율 결정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결정할 때 교육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생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학교수와 교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결정할 때 학생수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시 학생수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 방식을 개편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2조(교부금의 보고)제1호에 따른 보고 시 학생수 기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과 그 비중을 명시할 것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 배분내용 · 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9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과정(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 프로그램운영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격, 내용 및 사업추진체를 고려하여 동 사업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비 지원 방안도 모색하도록 할 것		
30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부가 정책을 입안·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과 같이 사업성과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기간이 제한적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재원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과 용도 일탈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가 없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정책연구용역 2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 없이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 교육발전특구 교부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 우려가 있고, 학생 안전에 집행하여야 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교육발전특구에 집행됨.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재원인데, 동 사업은 대학 계약학과, 외국인 전담학과, 지역인재전형,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등 고등교육 및 RISE사업 연계 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교육부는 고등교육 연계 과제는 별도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집행점검과 회수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범위 및 규모 적정 수준 조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은 시범사업임에도 56개 특구에 대규모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운용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의 상당액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집행함에 따라 학교시설 신·증축이 시급한 지역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교부 방식을 재검토하고, 시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며,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현장 현안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대규모 예산임에도 교육부 중심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서 결정됨. 해당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교육감 등 교육부 영향력이 큰 인사와 대학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고, 국회나 외부의 실질적 검증 절차도 미흡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한됨. ○ 2023년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총 82개 중 ‘D등급(미흡)’과 ‘E등급(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이 29개로 전체 사업 대비 35.3%를 차지하였으나, 해당 성과평가 결과가 2025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시·도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출석 관리와 국회 보고 절차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 교육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관리 강화 및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국가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동일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시책사업의 추진현황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이 3년을 초과해 시행되고 있고, 2024년 기준 3년 이상 연속지원사업은 전체 127개 사업 중 76개로 59.8%에 달함. - 특히, ‘수능시험 시행지원’ 등 일부 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사무로 국가시책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10년 이상 국가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3년 제한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 전반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예정되는 사업에 대해 통폐합하거나 국고 지원 또는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4년도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한 전국 150개 시범기관을 통해 상향평준화 과제를 수행함 ○ 동 사업의 시범기관 선정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 유치원 66개소 중 전체 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참여(7개소, 10.6%)가 오히려 사립유치원(59개소, 89.4%)과 비교하여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을 통해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보완·검증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 주체인 관련 기관 및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6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아 사교육비 조사(1608-3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은 본조사가 아닌 시험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조사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공표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 영유아 사교육 이용과 비용 비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지 않고 있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최근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교육비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되, 동 사업의 취지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달성을 위하여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본조사 시행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담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편차가 있음 - 2024년도 12월말 기준 '시간제 보육반 당 대상자 수'는 평균 124.1명이고, 최대 209.7명(경기)부터 최소 44.7명(제주)까지 시·도별 기반시설의 편차가 있음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영유아 양육 부모의 거주지가 시간제보육 이용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시간제보육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시간제보육 통합반의 경우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4년 본격 시행된 통합반의 경우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함 - 최근 3년간 통합반(시범사업 포함)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기준인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비율이 각각 2022년 73.15%, 2023년 88.0%, 2024년 75.7%에 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확충에 있어 수요자의 제공기관 유형(독립반, 통합반)에 따른 선호를 반영하고, 시간제보육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통합반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린이집 확충(1634-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어린이집 확충 실집행률이 55.8%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 - 2024년도 확충 계획은 540개, 지원은 369개로 달성률이 68.3%임 -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기준 단가가 낮고, 신축 기준 및 절차 소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방식에 비해 저조함 ○ 유보통합 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중·장기적 추진방안 마련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유보통합(안)을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함 - 통합교원 자격체계와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두고 교육계와 보육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 유보통합 정책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육취약지역의 인프라도 고려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목표 물량을 과다 추계해 매년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저출생과 보육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단가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유보통합(안)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1635-35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으로 최근 예산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서울시 은평구와 경남 김해시에 각각 6억 3,200만원과 3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0% 수준임 ○ 또한, 2024년 서울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교부 시 국고보조율을 50%로 적용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20%를 상회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95.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율 적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부 절차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편성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1601-300)에도 편성되어 있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일반회계로, 0~2세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함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처우개선비 등’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고, 3~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함 ○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소관이었다가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한 부처 내 두 개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비슷한 예산을 쪼개기 편성하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이 여러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관리체계 일원화(복지부→교육부) 이후 교육부와 지자체 간 사무와 재정이관(2단계)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답보 상태임 ❍ 교육부는 현장의 반발로 통합모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추계, 이관방식, 국비 추가 투입 여부도 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유보통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재정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조속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규모 및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		
43	**유보통합 재원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누리과정 재정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별회계 신설, 재정 이관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고, 교사 자격·처우, 양성체계 등 주요 제도 개편 과제도 합의점이 미도출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재정 분담, 특별회계 신설 등 주요 사항을 정책참여자·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누리과정 추진체계와 재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소재 한국교육원의 교육기능 효율적 수행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재외동포 수가 1만 명 미만인 한국교육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은 한국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재외동포 수가 1만 명 이상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5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국외에 설립을 승인한 정규학교임 ○ 재외한국학교는 16개국에 3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의 재정상태·지역 물가수준·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함 ○ 하지만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고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 실효성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7억원 규모에서 96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사업의 효과성, 활용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47	**실증 지원 성과 조사의 응답률 제고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수행된 실증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의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으나, 해당 조사의 참여율이 저조(대상 교사의 54.6%, 대상 기업의 37.5%)하여 사업의 효과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사업 효과성, 공교육 기여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성과 조사 응답률을 제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에듀테크 정보 제공·활용의 지역격차 최소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주관·운영기관 선정시 권역별로 지역을 배분하였으나, 사업 수요 및 중요도, 지방비 매칭의 한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구축된 곳과 거리가 먼 경우 같은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에듀테크의 정보 제공·활용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9	**교원연수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주의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은 AIDT 학교현장 도입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크고,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효성이 없고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디지털 튜터 배치·운영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실집행률은 사업 종료 시점인 2025년 2월 기준으로 65.5%(72억원 중 47억 1,500만원)로 저조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디지털튜터 배치 현황에 편차가 나타남 ○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튜터가 학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 필요한 연수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튜터가 필요한 학교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게 할 것		
51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은 가장 최근 기준인 2025년 6월 기준으로 70.3%(600억원 중 421억 5,000만원)로 저조함 ○ 교육부의 2024년 11월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AIDT 대상학교(학년) 중 무선속도 점검 완료 학교는 45.2%(5,459개교), 그 중 개선 필요 학교는 26.6%(1,452개교)였고, 디바이스 보급 예정 학교는 1,720개교에 이르며, AIDT 현장 도입 후 AIDT 사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위탁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2024년 위탁사업비는 1,719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1%, 집행액 대비 32.2%임 - 위탁사업비 비중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위탁사업비 비중(28.72%) 보다 높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위탁사업비 최소화 기준을 수립하여 교부운용 기준에 반영하고, 성과평가에서 위탁사업비, 홍보비, 해외연수비가 교부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정하게 살펴볼 것		
53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단 및 조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2022~2024년) 교육기관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 건수가 매년 전체 건수의 95~96%를 차지함 ○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수준 진단 결과와 실제 보호 수준 등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실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반영하는 진단을 적기에 진행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현황 점검 및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은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를 집행한 사유와 해당 사업 수행 결정 과정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정비 등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55	**교과용도서 검정 체계 정비 및 부실 검정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배포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기존 공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저작자 제한 요건(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이 추가 기재되어 제한 요건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검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함 ○ ‘한국학력평가원’이 이른바 표지갈이로 검정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업체의 교과서를 검정 합격처리하는 등 부실 검정 문제가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저작자 제한 요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안내자료와 공고 간 불일치를 시정하며, 출판실적 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정 신청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국가영재 교육연구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재교육 지원사업(1031-305)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영재교육 종단연구는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연구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참여 독려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7	**학사관리시스템(HS크레딧)의 기능 개선 및 사설업체 의존 최소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학사관리시스템(HS크레딧)을 구축·운영하여 매년 약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기능 부족 및 사용 불편으로 현장 활용이 저조하며 상당수 학교가 사설 시스템을 병행하거나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1,840개교 중 1,067개교(59%)가 사설 시스템을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HS크레딧의 기능 개선과 성과 검증을 제도화하고, 사설업체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공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동북아역사재단의
결원 및 업무 공백
최소화</td><td>관련사업명</td><td>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북아역사재단의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집행률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table><tr><th>연도</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예산액(백만원)</td><td>7,854</td><td>8,025</td><td>8,233</td></tr><tr><td>불용액(백만원)</td><td>238</td><td>644</td><td>831</td></tr><tr><td>집행률(%)</td><td>97.0</td><td>92.0</td><td>89.9</td></tr></table>- 이는 정원 대비 현원에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결원은 4명으로 매년 결원이 존재하였고,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 퇴직일 이후 평균 4개월 17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채용 공고를 하였음
- 한편,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으로 타 기관 이직 증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년퇴직 인원의 선제적 채용 공고를 통해 결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승진제도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직 이탈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사업명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시정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및 주요 역사기관장들은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을 사용하여 울릉도 · 독도 현지답사를 다녀왔으나, 이는 국회에 보고한 사업의 당초 목적과 다름 -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독도영유권 · 동해 표기 논거강화 연구, 독도 · 동해 표기 확산’에 한정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예산을 국회에 보고한 목적과 달리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60	**교직원 정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보통교부금은 유 · 초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나, 정부는 점차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 - 공립교원의 경우 초등은 최근 4년간, 중등은 최근 6년간 감축되었고, 2026년에도 감축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교직원 감축은 학교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농 · 산 · 어촌 및 지방은 학교 · 지역소멸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학생 맞춤교육, 통합지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직원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61	**유사 내역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과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은 모두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공통적으로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역량 체계’에 기반하여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부 수행 내용이 유사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유사한 내역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62	**교원 양성기관 개선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2232-32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과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은 모두 2024년 사업으로 종료되어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고,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비율도 저조하여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상황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원 양성기관 개선 사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에 실시된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추후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방안을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연금급여(61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금 가입자 수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수급자 수의 영향 등으로 지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함
○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공단의 2020년 제5차 연금재정장기추계 보다 앞선 시점으로 기금 적자 전환, 기금 고갈을 전망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재정수지 적자</th><th>기금 고갈</th></tr>
<tr><td>사학연금</td><td>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td><td>2029년</td><td>2049년</td></tr>
<tr><td>감사원</td><td>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재추계</td><td>2028년</td><td>2046년</td></tr>
<tr><td>국회예산정책처</td><td>장기재정전망</td><td>2028년</td><td>2042년</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연금급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제6차 연금재정장기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td></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교육기부활성화사업(1035-4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메타버스 체험관은 정식 운영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정식운영 직후부터 방치한 것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
- 2025년도 사업계획에 메타버스 유지보수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홍보를 통해 사용자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관련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교육급여 실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교육급여(11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교육급여 사업은 과거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23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이전과 비교해 실집행률이 하락하였으며 2024년 사업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인원 330,057명 중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 12,074명에 달함
<table>
<tr><th>연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실집행률(%)</td><td>97.9%</td><td>93.1%</td><td>87.6% (’ 24.12.)
94.4% (’ 25.6.)</td></tr>
</table>
- 이는 교육급여 수령을 위해 ①복지급여 신청, ②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바우처 신청이라는 2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초래된 문제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자동 신청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1단계 교육급여 신청자 중 2단계 바우처 신청을 누락한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td></tr>
<tr><td rowspan="3">66</td><td rowspan="3">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학생건강지원강화(1235-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학교보건법」에 의해 출연의 법적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근거 없이 보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법령에서는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차에 걸쳐 전액을 교부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2회 이상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7</td><td rowspan="3">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2448-6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운영을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총 7억 7,000만원을 세목 조정(2024년 예산액 64억 500만원의 약 12%에 해당)하여 집행하였고, 최근 5년간 세목조정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세목조정 규모
<table>
<tr><td>2020년</td><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r>
<tr><td>10억 7,700만원</td><td>5억 1,000만원</td><td>2억 5,300만원</td><td>7억 4,400만원</td><td>7억 7,700만원</td></tr>
</table>
❍ 동 사업의 세목 조정과 같이 상당한 금액을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비목별 실제 소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고,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8</td><td rowspan="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속 추진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2448-6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사편찬위원회는 2024년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시스템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목적이 적기에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ISP 추진경과
<table>
<tr><th>사업명</th><th>입찰공고</th><th>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th><th>준공</th></tr>
<tr><td>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td><td>2024.1.17.</td><td>2024.2.16.</td><td>2024. 5.16.</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시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정보화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고도화 사업의 경우 그 수요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9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4131-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4~8일간의 국고보조금 교부는 부적절함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특성상 1차 보조금 교부와 2차 보조금 교부 사이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나, 타 세부사업과의 형평성,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와 그에 따른 사업의 신뢰성 저하, 사업비 부실 집행의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동 사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이 동 사업의 교부금 교부 및 관리지침에 따른 1차 교부금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의 사업 중간점검 현황과 관리지침 취지에 따라 사업의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70	R-GKS 장학생 취업·정주 연계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453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R-GKS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학위 취득 지원에 머물러 있어 지역 취업·정주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R-GKS: Region-Global Korea Scholarship(지자체와 지방대가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을 우대 선발하여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이 R-GKS 장학생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정주 연계 선발·관리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1	**HURIK 유지보수 계약 예산 비목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453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HURIK은 장학생의 학적·비자·귀국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유지보수 계약 비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관리용역비(210-15)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고 있음 - HURIK: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www.hurik.go.kr) - 관리용역비(210-15):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이 HURIK 유지보수 계약이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되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1502-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교육부는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법률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또는 정산규정에 따르지 않고 연도 중 미교부·불용 처리하였음
※ 2023·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th><th>불용액(B)</th><th>불용률(B/A)</th></tr>
<tr><td>2023년도</td><td>75,760,666</td><td>75,760,666</td><td>65,363,666</td><td>10,397,000</td><td>13.7</td></tr>
<tr><td>2024년도</td><td>68,873,209</td><td>68,873,209</td><td>64,620,773</td><td>4,252,436</td><td>6.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반하여 교부금을 미교부·불용 처리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전국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및 노력을 기울일 것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산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고려하여 교부금의 불용 등 회계연도 내의 감액에 신중을 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1502-30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에 연동되는 산정방식으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임 ○ 최근 3년 연속(2023~2025년) 세수결손 발생으로 연도 중 교부금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지방교육재정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음 -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10.4조원, 4.3조원을 연도 중 각각 불용처리하였던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우, 시·도교육청은 보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교부금 감액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추계 오차로 변동액이 크게 늘었고 미교부·불용처리로 재정운용 불안정이 심화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내국세 연동 방식 외 편성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할 때 시·도 교육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4	**학생정신건강 지원강화 사업 사업방식 변경 및 성과관리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학생건강지원강화(1235-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은 ①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연수, ②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③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의 3가지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 간접적인 측면의 연수나 교육자료 개발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각 추진과제별 성과지표는 연수 횟수나 교재·보고서 건수 등으로 실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판단할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수정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할 것		
75	**고교 무상교육의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최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이 연장되었으나, 이는 3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정책 이해관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특례규정의 일몰 후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3년 이내 준공을 계획했으나, 심의 및 사전기획지연·사업에 대한 반대 등으로 계획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실집행률 현황 : (2021년) 58.9%→(2022년) 37.6% → (2023년) 52.5% → (2024년) 80.2% - 이에 교육부는 사업 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행정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대부분을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 -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한 결과, 가령 2024년 서울교육청에 교부된 예산 127억 5,700만원 중 66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452억 4,200만원 중에는 153억 400만원만 집행되고 미집행분 299억 3,800만원이 대부분 불용처리됨 - 한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교육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7	**근로장학금 사업 수요 산출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로장학금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집행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 교육부는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9구간 대상자 인원 증가 규모와 지원단가 인상분(11,150원→12,220원), 대학이 제출한 근로 수요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집행률이 하락하는 결과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가근로장학금 수요처가 충분히 발굴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보고할 것 ○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하는 사업수요 산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의 근로장학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8	**사업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지방비 매칭 실적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방비 매칭 구조로 사업 지원방식이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실적이 저조하여 국비 예산의 실집행률이 52.8%로 저조하며, 내역사업인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역시 동일한 사유로 국비 예산의 실집행률이 40.9%로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의 지방비 재정 상황 및 예산 상황과 지방비 매칭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방비 매칭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9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 기준 공시 독려 및 등록금 연계 방식 재검토**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학생은 지원대상·지급액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대학 간 지원 편차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 -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예산 특성상 예산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 기준을 공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금 동결 연계 방식과 지원 범위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0	**퇴직수당급여 부담금 지원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퇴직수당급여(6133-402)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적용된 일시적·예외적 조치로 사용주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비용은 전액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사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비용은 60%를 국가가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사용주 부담 원칙, 학교경영기관 및 사학연금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수당 비용 부담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1</td><td rowspan="3">수입대체경비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연례적
반복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9-651),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4532-650) 등</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업에서 매년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한 65억 4,6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4.8% 감액한 65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82억 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초과지출 승인액은 세출예산의 90.9%인 59억 4,800만원에 이르렀음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인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세입 및 세출예산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과도한 초과지출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 및 결산
(단위: 명,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응시인원</th><th colspan="3">세입</th><th colspan="5">세출</th></tr>
<tr><th>예산
(A)</th><th>결산
(B)</th><th>초과수입
(B-A)</th><th>예산
(C)</th><th colspan="2">초과지출 승인(D)
및 비율(D/C)</th><th>예비비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
액</th></tr>
<tr><td>2020</td><td>218,869</td><td>7,929</td><td>5,382</td><td>△2,547</td><td>3,994</td><td>420</td><td>10.5%</td><td>1,577</td><td>5,991</td><td>5,727</td></tr>
<tr><td>2021</td><td>330,016</td><td>8,162</td><td>9,215</td><td>1.053</td><td>5,010</td><td>3,982</td><td>79.5%</td><td>44</td><td>9,036</td><td>8,769</td></tr>
<tr><td>2022</td><td>357,395</td><td>5,383</td><td>7,286</td><td>1,903</td><td>5,245</td><td>2,517</td><td>48.0%</td><td>2,272</td><td>10,034</td><td>9,568</td></tr>
<tr><td>2023</td><td>421,812</td><td>8,700</td><td>13,078</td><td>4,378</td><td>6,086</td><td>5,132</td><td>84.3%</td><td>-</td><td>11,218</td><td>10,635</td></tr>
<tr><td>2024</td><td>493,287</td><td>6,546</td><td>14,827</td><td>8,281</td><td>6,546</td><td>5,948</td><td>90.9%</td><td>-</td><td>12,494</td><td>12,105</td></tr>
</tabl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초과지출 승인 비율도 31.8%로 높은 수준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업에서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적정액으로 편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학부모지원센터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증액 필요**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현재 전국 7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가정 간 상호 협력하는 학부모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2025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 2024년에는 1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동 사업 성과지표가 지난 4년간 매년 100%를 초과하는 등 학부모 지원 기반으로 역할을 담당해옴 - 향후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내실화, 교육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건강한 학생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동 사업 증액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사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3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고교무상교육 재투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4년 시·도교육청 결산 결과 총 1.6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교무상교육이나 유아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국가가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24년 서울 2,946억원, 경기 5,332억원, 경남 1,442억원 등 총 1.6조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분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4	**공무직 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 필요**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 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부기하였으나,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교육공무직 학교 영양사는 학교 급식업무에 관해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여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과 관련해 다년간 반복해 국회 부대의견이 이행되지 않는 사유와 유관기관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8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1634-353)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08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설치된 곳은 120곳에 불과하고, 109곳은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동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부는 2024년 동 사업예산을 각 병원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7개 병원 중 4개 병원에 교부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다른 3개 병원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도 각각 24.4%(충남대병원), 36.4%(칠곡경북대병원), 8.1%(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저조한 편임 -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센터 설치공간 변경,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 센터 부지 변경 등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일정이 지연되어 지역의료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87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국립대병원 시설확충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중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상당액이 이월 또는 재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집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관련 예산이 전액 교부되고 있음 - 시설확충사업 중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등 7개 사업은 2024년 실집행률이 0%로 전년도 이월액까지 전액 재이월되었으나, 2024년 예산은 전액 교부되었음 - 임상교육훈련센터 2024년 교부 예산 176억 7,200만원 중 148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개 센터의 실집행률은 0%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교부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 교부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8</td><td rowspan="3">연금급여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 반복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연금급여(61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교육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사학연금 연금급여 증액변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증액규모와 비율은 2021년 303억원(당초 계획액의 0.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3,562억 5,000만원(당초 계획액의 7.9%)에 이르렀음
※ 2021년~2024년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계획액(당초)</th><th>계획액(변경)</th><th colspan="2">증액규모 (비율)</th><th>집행액</th></tr>
<tr><td>2021</td><td>3,407,725</td><td>3,438,025</td><td>30,300</td><td>(0.9%)</td><td>3,437,337</td></tr>
<tr><td>2022</td><td>3,703,240</td><td>3,860,491</td><td>157,251</td><td>(4.2%)</td><td>3,859,684</td></tr>
<tr><td>2023</td><td>4,108,274</td><td>4,378,413</td><td>270,139</td><td>(6.6%)</td><td>4,362,354</td></tr>
<tr><td>2024</td><td>4,484,529</td><td>4,840,779</td><td>356,250</td><td>(7.9%)</td><td>4,817,689</td></tr>
</table>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3호에서 의무적 지출금액의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 규모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연금급여 계획액을 과소 편성할 경우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의무지출 비중, 재정수지 등 재정지표에 오차가 생기고, 비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교육부는 사학연금 연금급여 소요비용을 정확히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2. 국가교육위원회(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공무 전용차량 및 복무 기록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7019-200)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공무 전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복무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원장 복무관리 부적정이 지적되어 주의를 촉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하여 공무 전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 기록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 부진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이상의 국민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는데,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이래 한 차례도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사례 역시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고 수렴·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 요건을 낮추는 등 방안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민참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바,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 집단으로 49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500명)으로 구성됨 -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회의 참여 인원이 최소 131명, 최대 176명으로 회의당 평균 참석위원은 150명 미만으로 집계되었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224명으로 절반 가까운 44.9%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 모집 단계에서 회의 참여 의사가 큰 국민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미흡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으나, 정기 모니터링 활동은 2024년 12월 14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점검의견 제시 협의회 1회만 보고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0조는 모니터링단은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고시와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 관리에 주의할 것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의 결과가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핵심 사무 및 주요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국민의견 수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법에 명시된 위원회 핵심사무 중 두 가지 사무에 대한 수행이 다소 부족함 -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던 사안으로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2025년 3월에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거친 경우는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 주요 사무가 취지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과를 반추하고 추진 체계 등에서 방안을 강구할 것		
6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제도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은 충분한 합의와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 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음 - 전문위원회 구성에서도 현장 교원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편향적이고 폐쇄적 논의 절차로 안건을 처리하여 운영의 신뢰성이 훼손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이 편향적·폐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개선 사항은 보고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기정통부 산하 협회·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협회 예산 운영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협회 및 단체들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사업 성과 미흡, 중복 사업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럼에도 상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협회·단체 예산의 집행 관리 시 단순 집행실적 평가를 벗어나 성과 달성도, 산업 파급효과, 국민 체감성과를 반영한 성과체계를 마련할 것		
2	**정책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7031-40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일부는 연내 완료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 향후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4년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인구·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연구'는 2024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어 2025년에 수행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의 반복적 예산 이월을 지적하며, 이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7036-505)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보보호 자산을 주로 12월에 취득·집행하여 예산 집행지침의 신속집행 기조에 부합하지 아니함 - 자산취득비 집행은 2022년 67.4%, 2023년 44.4%, 2024년 전액이 12월에 집행되는 등 매년 연말 집중 경향을 보임 ○ 또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자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결과가 초래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자산취득비의 집행이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국제협력 R&D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추진 지연**	관련사업명	국제협력 R&D 사업 총괄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국제협력 R&D 사업이 신규로 8,973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국제협력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발생하였음 - 국책연구과제의 경우 2024년 총 410개 신규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10월 이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과제는 96개 과제(23.4%)가 존재하였음 - 기초연구의 경우 국제협력 R&D 신규과제 850개가 추진되었으며 1월 또는 4월에 과제가 개시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연구개시 시점은 이보다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 R&D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이 예산상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연구과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국제협력 R&D 추진방식의 다변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제협력 R&D 사업 총괄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국제협력 R&D 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일반형 과제 위주로 추진되어, 첨단 분야에서 우수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은 미흡함 - 정부는 2024년 국제협력 R&D 예산을 확대하면서 일반형 이외 전략적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형 및 별도과제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국책연구과제의 경우 2024년 신규 과제 410건 중 공동기관형은 17건(4.1%)에 불과하여 저조함 ※ 공동기관형: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형 외 공동기관형 등으로 국제협력 R&D 추진방식을 다변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에서 경쟁력 확보**	관련사업명	국제협력 R&D 사업 총괄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국제협력 R&D 예산은 전년 대비 341.2% 증액되었으나, 국제협력 R&D 과제는 연구책임자 개인 역량에 의존해 해외기관과 협상이 진행되어 글로벌 협상력에 한계가 있음 - 2024년 일반형 신규 국책과제는 성과 소유가 원칙적으로 국내 연구기관에 귀속되나, 신규 323건 중 협약 내용이 없는 경우가 210건이며 국내기관 소유는 30건, 공동소유는 83건에 불과함 - 해외기관은 간접비 규정이 달라 일부는 50% 이상을 간접비로 사용하는 등 사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협상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협상력을 확보할 것		
7	**성과지표 목표치의 과소설정 및 도전성 부족**	관련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성과지표 관련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의 과소 설정 및 도전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 전략목표(Ⅲ. 국가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확산, 산학연 협력, 지역혁신 및 전략적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의 프로그램목표(Ⅲ-2.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류 협력기반을 확대한다<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 전체 SCI급 논문 대비 IF 상위 10% 학술지 논문 비율(%)’을 설정하였음 - 2024년도 성과지표 목표치가 23.5%로, 2021년 실적치(23.7%)보다 낮게 설정되어 성과계획서의 신뢰성과 도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계획 수립 시 실적 대비 과도하게 낮은 목표치를 반복 설정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부합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해외 공동연구 사업의 조속한 협약 체결 및 해외협력센터 효율적 운영**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간협력기반조성(4731-402)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경우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이 4분기에 체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 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2024년도 55개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을 살펴본 결과,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경우 전체 과제 중 61.8%에 해당하는 34개 과제가 4분기(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됨 ○ 또한, 동 사업의 해외 협력센터 간의 업무 중복이 심하여 유사한 업무들을 소규모 인력이 비슷한 지역에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연구 내역사업 신규과제의 연내 연구비 집행 기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을 조기 체결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지역의 인력 확대도 검토하는 등 통합·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9	**ODA 사업 분류 및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1946-5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우리 정부가 3년간 100만 불을 출연하고, 협력국은 유틸리티·인력 등 현물을 제공하여 공동프로젝트, 인력교류, 세미나를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됨 ○ 2024년도 공동협력과제로는 한-카자흐스탄 IT 협력프로젝트의 카자흐어 AI 학습용 말뭉치 데이터 구축 등이 추진됨 - 동 사업은 협력국 정보화 촉진과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상호 이익을 창출하지만, 반대급부 없는 지원 성격이 있어 ODA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성과지표는 만족도 조사 중심의 정성 지표로, 실제 구축·운영 건수 등 정량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사업을 ODA 사업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슈퍼컴퓨터 도입 지연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4734-305)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활용지원 내역사업은 슈퍼컴퓨터 5호기 퇴역 자원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에 재난대응 솔루션을 보급하는 ODA 사업으로, 6호기 구축을 전제로 함 ○ 과기정통부는 슈퍼컴 6호기 구축 지연으로 5호기 퇴역이 불확실하여 ODA 예산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 슈퍼컴 6호기 구축 사업은 2023년 5월 첫 입찰 이후 7·9·10월에 추가 입찰이 있었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어 추진이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제가 되는 사업의 추진 지연과 연계되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11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의 조기 지급 필요 및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수당 등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해외IT지원센터운영(2137-303)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2~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OTRA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4분기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비해 지연되고 있음 - 2022년도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보조금 4차 교부시기는 2022년 10월 27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지급 시점이 4/4분기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년도 3억 1,794만원, 2021년도 3억 4,454만원, 2024년도 5억 481만원 등 동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해외IT센터 주재원 관련 수당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가족수당·보험료 등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침에 따라 3분기까지 민간 보조금의 교부가 완료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IT센터 주재원 수당 등에 있어 사업비가 아닌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글로벌 ICT 포털(GIP) 운영 사업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1232-3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ICT 포털은 해외 진출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사업이 비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가 있음 - 해외시장 지원 시스템인 ‘글로벌 ICT 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 ○ 해당 포털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유사 중복 방지·EA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사실상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ICT 포털(www.globalict.kr)의 시스템 유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감사관실 예산 집행 관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7011-201), 총액비대상 감사관 기본경비(7011-251) 등	시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감사대상 기관(31개)에 비해 감사인력이 부족함 - 행정안전부(대상기관 14개, 감사인력 46명), 교육부(대상기관 29개, 감사인력 43명) 등에 타 부처에 비해 감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감사관실 예산이 과다 전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2024년 본예산은 2억 1,500만원이었으나, 현액은 2억 700만원, 집행액은 1억 7,700만원, 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률(예산액 대비)은 82.3%에 불과함 - 전용되는 곳도 정책기획관, 일자리혁신관, 과학기술정책국 등 타 실국으로 반복 전용되고 있으며, 국내여비·국제협력비·임차료 같은 기본 운영경비까지 수차례 조정됨 ○ 상임감사의 외유성 출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감사관실의 감사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관실 예산의 과다 전용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상임감사의 외유출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할 것(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여 감사관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인사청문회 시 우정사업본부 스마트워크센터 목적외 사용**	관련사업명	인사청문회 준비 중 우정사업본부 스마트워크센터의 사용 관련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스마트워크센터는 2014년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서울 출장 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임 ○ 인사청문단 TF가 우정사업본부 시설관리 및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해당 시설을 회의실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여 스마트워크센터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인사청문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없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여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소속 기관을 압박하여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임대차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 실적의 연례적 저조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징금(56-565)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세입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의 비율인 수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 과징금 세입 수납률은 2020년 34.3%, 2022년 28.8%, 2024년 17.1%로 지속적으로 저조 ○ 과징금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해당 과징금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부적절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 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연구개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체납자 실태조사, 결손처분 기준 등 절차와 규정 정비, 자진납부 유도 방안을 포함해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잡수입(69-69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제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세종시 거주를 위한 관사를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신규 계약에 직접 사용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신규 관사 계약 시 기존 전세보증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활용했으며, 부족분은 해당 연도 기본경비 예산으로 충당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신규 관사 전체 전세보증금을 예산을 통해 편성·집행할 것		
17	**법령 및 결산시정요구 사항을 준수한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대상 인건비(7001-100), 국립전파연구원 총액대상 인건비(7002-101),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01-701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의 계획(2022. 12. 8.)과 부처별 채용목표 인원 배정(2023. 1.)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하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인턴 210명 채용을 목표로 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총액인건비 및 경비 등을 청년인턴 인건비에 전용하여 「국가재정법」 및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전용하여 「국가재정법」상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는 국회 심의·의결 없이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2024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 청년인턴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대상 인건비 등을 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매년 계획된 채용 인원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미리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에 주의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1139-437)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소부장 실증평가” 사업의 과제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총 연구기간 12개월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던 계획과 달리, 총 연구기간은 17~18개월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연구비도 2억 2,5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 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 이후 협약 체결과정에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계획하였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 미체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원천기술 국제협력개발사업(R&D)(1139-438)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R&D 협력센터와 한-EU R&D 협력센터가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화하여 구축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향후 각각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을 실시할 때에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예산 집행 내용이 변경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동 사업 내역사업인 “반도체 R&D 협력센터”는 반도체 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반도체 R&D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및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2개 과제에 대하여 각각 5억원이 편성·집행되었음 - 두 과제는 각각 공모에 따라 별개의 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이 수행하는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화하여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구축형R&D사업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형 R&D 사업으로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1159-425)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024년에 집행한 슈퍼컴 6호기 기반시설(수배전, 냉각 등) 구축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로 편성함이 적절하나, 2022년 예산 요구 당시 착오로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편성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만 사업추진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비목인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구축형이 아닌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의 구분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21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ABL3 시설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 증축 예산 63억원(2022년 30억원, 2023년 33억원)과 장비비 21억원이 미집행하였는데, 시설증축 지연 사유 중 건축 전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등은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내역사업 “국가전임상지원체계구축사업”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운영 및 영장류 시험법 마련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79억 3,400만원, 2023년에 116억 1,600만원, 2024년에 87억 6,5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과제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로 인한 과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국제공동연구의 불리한 협약체결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협약 결과 총 1,140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가 집행될 예정인데, 이 중 400억 7,600만원은 해외 연구기관에 교부되며, 해외부담분은 현물 중심(17개 중 15개)으로 현금 부담이 없어 “미국 퍼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과 귀속 규정을 협약단계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내 연구기관이 불리한 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연구기관의 현금 부담 의무화 및 성과 배분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분담률에 상응하는 성과 지분 확보 장치를 마련하며, 협약 체결 시부터 국내 연구기관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		
23	**김형숙 교수 디지털 심리치료제 R&D 지원 예산에 대한 환수/배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김형숙 교수가 총괄한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 구축, VR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이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고,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던 2023년에 해당 과제만 40억원 증액되어 특혜・카르텔 의혹이 있으며, 연구 성과가 부적정하고 참여기관이 R&D 경험이 전무하여 자격 논란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사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성과 없는 과제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부적격 참여기관에 대해 배상 책임 및 징계를 부과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실적 저조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1138-417)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21.5%, 2023년 22.7%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2024년 종료 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당초의 협약대로 2024년까지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였음 - 해당 과제는 동 사업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에서 실시한 임상과제로 2022년에 시작하여 2024년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4년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		
25	**과도하게 낮은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1138-417)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는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 실적이 2020년보다 월등히 높아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야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재의 목표치를 초과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성과지표의 성과 목표치를 살펴보면, 2020년에 2018년~2020년 동안 의료기기 품목 인증허가 성공률의 가중평균인 25.6%의 2배인 52%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후, 매년 1.5%p씩 성과목표를 상향하고 있음 - 최근 실적치를 살펴보면, 2021년 133.3, 2022년 76.2, 2023년 114.8, 2024년 88.1로, 2025년에 설정한 목표치보다 훨씬 상향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R&D)(1139-424)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교육·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인데, 유사사업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체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것		
27	**연구 중단 조치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 발생 우려**	관련사업명	R&D 예산 감액에 따른 계속과제 조정 관련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이례적으로 연구개발비 조정을 과제중단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연구중단은 연구개발결과의 사장 및 매몰비용 발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밀한 평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조정을 사유로 중단신청하는 경우 모두 중단 사유로 인정한 것은 예산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024년 삭감된 예산이 2025년에 복원되었다고 하나 2023년 수준에 불과하고, 신규 편성 과제들로 인해 68개 과제가 예산이 삭감된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중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하여 중단과제를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R&D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2026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고, R&D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과학분야의 타격이 심대한 수준이므로 기초과학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시정명령 건수가 많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402)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흡이 2022년 147건, 2023년 149건, 2024년 120건으로 과도한데,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6조에 따른 과태료가 가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가 미흡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9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402)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은 생명과학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될 수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고, 동 조직은 1부, 3실, 9팀으로 이루어지며, 총 인원은 2025년 7월 기준 54명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연구실안전환경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402)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가 올해 4건 발생(한양대, 카이스트, 충남대, 서울대)하였는데, 동 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135억원에서 86억원으로 해마다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습형 의무교육으로 강화하며, 위험작업 사전 승인제 도입을 검토할 것		
31	**과학기술인재양성 성과 측정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1744-41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의 성과 측정방법(지표)이 제각각이며, 특히 “감염병 연구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서비스청년인재양성”의 경우 단순 교육 이수자의 합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의 경우 단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내역사업이 각각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방법이 제각각이고, 각 사업의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성과 측정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해외인재유치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최종 목적은 영주권 취득 및 정규직 임용 등으로 유치연구자를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국내 정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2021년부터 국내 정착 성과를 조사하고 있고 종료된 과제에 대해 과제 종료 후 유치과학자의 현 소속기관 및 직위, 현 체류국 등에 대해 조사 중인데, 응답률이 평균 54.5%로 낮고, 동 조사내용으로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유치 사업의 국내 정착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치를 통한 연구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서 나아가 잔류 비율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정착 성과를 면밀히 관리할 것		
3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1831-40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9억 6,600만원, 2023년에 4억 5,700만원, 2024년에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지원대상인 영월군의 자체 평가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설계단가 급감 등으로 예산 대비 실집행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콘텐츠의 단순화 발생, 어린이 과학관 건물 내 일부 미활용 유휴공간 발생” 등이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평가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어린이 과학시설공간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성과지표 목표치의 과소 설정 및 도전성 부족	관련사업명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 목표 Ⅱ-3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 생활화를 전개한다’의 성과지표로 ‘과학문화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동 성과지표의 2024년 목표치는 89.6으로, 전년도 실적 90.5점에 비해 0.9점 낮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과 도전성에 문제가 있음 - 특히 동 만족도는 ‘과학문화 관련 정책 전문가 및 수혜자 만족도(70%)’와 ‘국립과학관 고객만족도(30%)’를 합산하여 측정하여,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및 수혜자의 만족도를 지표로 삼고 있어 대상 특성상 높은 만족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성과계획 수립시 실적 대비 과도하게 낮은 목표치를 반복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적 노력과 실질 성과가 정합성을 갖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35	임의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측정	관련사업명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 목표 Ⅱ-5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대중화에 기여한다(국립과천과학관 운영)’의 성과지표로 ‘과학관 총 방문객’을 설정하였는데, 성과실적을 산정하면서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측정산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적을 과다 보고하였음 -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매표시스템 및 방문자 통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를 추가하여 249만 5,252명으로 산출하였는데, 온라인 이용자를 제외하면 189만 6,080명으로 달성률이 72.9%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립과천과학관이 재무당국과의 협의사항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맞게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성과지표 지속 미달에 대한 목표설정 부적정 및 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 목표 Ⅱ-4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국립중앙과학관 운영)’의 성과지표로 ‘본관 총 방문객 수’를 설정하였는데, 동 성과지표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개 성과지표 중 유일하게 목표를 미달성하였음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은 2년 연속 성과 목표를 미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기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립중앙과학관이 분기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7	**사업 추가 지연 방지 및 사업기간 연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극한소재실증기반조성(R&D)(1139-423)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극한소재실증기반조성(R&D)”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35억 9,000만원 중 18억 9,000만원을 집행(52.9%)하고 17억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설계적정성검토 기간을 누락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단장 선임 지연 등으로 인해 설계 단계에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었음 ○ 사업기간(‘23～‘28) 내에 시설·장비 구축과 실증연구가 완료되어야 하나, 인프라 구축 지연에 따라 당초 3년간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던 실증연구에 투입 가능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도입계획과 발주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의 추가적 지연을 방지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프라 구축 후 이뤄지는 실증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부처사업 관리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군기술협력(R&D)(1158-402)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내역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인데, 방위사업청이 2024년도 동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6억 1,600만원이 불용되고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사업조정체계가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다부처사업추진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산하 ‘민군기술협의회’의 이중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예산 편성 여부가 통일되지 못하였음 - 2023년 R&D사업 특정평가에서 동 사업에서의 협력 부재가 지적된 바 있음에도 협의회가 연 2회 이하로 개최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		
39	**R&D예산 감액에 대응하여 기술료 적립액 등 여유재원 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2024년도 R&D예산 감액 관련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2024년 R&D예산 감액 대응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2024년 R&D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적인 경비는 증액한 반면, 연구직접비 위주로 감액함에 따라 기존과제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신규과제가 추진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출연연구기관은 2024년 R&D예산의 감소로 연구직접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료 적립액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었으나 재정변동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23)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성과평가가 형식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계약(무단 하도급)이 발생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원칙을 확립할 것		
41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2)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성과평가가 형식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원 출장여비 중복수령이 발생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원칙을 확립할 것		
42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성과평가가 형식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지급이 발생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원칙을 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의 산학연 협력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민체감형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연 연계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신규 도입되어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 선정된 전략연구단의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초거대계산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경우 출연연 이외 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 비중(2024~2028년 합계 기준)이 각각 13.8%, 6.6%로, ‘시장선도형 차세대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19.3%),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사업단’(20.6%), ‘고효율·고안전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3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의 경우 대형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산업체와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산·학·연 개방형 협력체계 구성이 필수적이므로, 연차컨설팅·단계평가를 통해 협력체계 및 연구개발비 배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전략연구단 선정 시 출연연 외의 산·학·연의 참여 비중을 높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승인된 한시조직에 대한 경상운영비 예산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연구기관이 지역에 자체적으로 설립한 센터가 연구원 상주 등으로 점차 조직 형태를 갖추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들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으로 규정함 - 한시조직은 설립 이후 정부로부터 경상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필요한 비용을 센터 자체 수입금과 지자체 지원비 등으로 조달해왔으나,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구회는 작년 말 소관 연구기관의 39개 한시조직의 운영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35개(한시운영 유예 5개 포함), 부적정 4개로 등급을 결정하였음 - 승인된 센터는 정규조직 또는 상위 지역조직의 하위부서화하는 등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한시적 운영을 지속하고, 미승인 센터는 운영을 종료하고 통폐합하여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승인된 한시조직의 경상운영비를 2026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상황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조정 중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회 이사회의 한시조직 운영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을 통폐합하는 한편, 적정성을 인정받은 지역조직에 대한 경상운영비 예산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KIST 연구동환경개선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36)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 은 사용연한이 5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판정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노후 연구동을 첨단 연구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 과기연은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58억 2,600만원 중 23억 9,600만원을 집행(15.1%)하는 데에 그쳤음 ○ 동 내역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장기화되며 건설공사 계약 체결과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에 교부된 120억원 전액 이월 및 14억 3,000만원 규모의 재이월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환경개선사업의 건축비 실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기초지원연 연구1동 증축 및 수도권통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2241-437)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연구1동 증축사업”은 대형연구시설·장비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연구1동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연은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45억 2,500만원 중 27억 8,400만원을 집행(61.5%)하는 데에 그쳤음 - 동 내역사업의 지연은 소방업체의 자금사정(공사 채권압류 5건)으로 인한 중도 공사 포기로 인한 것임 - 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사정과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임 ○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은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첨단 바이오메디컬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연은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차년도 이월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기초지원연 간 실무협약(MOU) 및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설계용역이 중단되며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1동 증축 및 수도권 통합센터 건설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업체 선정,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생명연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2241-439)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을 통해 자원동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한 연구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생명연은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72억 9,200만원을 전액 차년도 이월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가건물과 관련하여 조달청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길어지며 지연되었음 - 연중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여 차년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원동 환경개선 사업에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절차를 조기에 착수하고 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사전 조율할 것		
48	**생기원 연구동환경개선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45)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연구동환경개선사업”은 설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천안 연구동의 총체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생기연은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6억 1,100만원을 전액 차년도 이월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철골공사 중 기상 이변과 이에 따른 장비반입 일정 순연에 의해 지연되었으나, 예산의 이월과 재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비 예산의 이월 및 재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제주 지질자원 연구를 위한 제주 지역조직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설 지원(2241-406)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지질조사 전문기관이나, 현재 포항 외에는 상주 연구조직이 없어 특히 복합지질 현안이 집중된 제주지역의 특화 자원 연구와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 지질자원 연구를 위하여 제주 지역조직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0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나, 구축 첫해인 2024년에는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하였고, 2025년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센터 운영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 계획 재원(정부출연금 20억, 대전광역시 15억, 센터 활용 수입 등 15억) 중 정부출연금 12억원만 확보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특구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4632-402)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특구 기반시설 구축’ 내역사업 착수 당시에는 기준 규모에 미달하여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1년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이 추가되면서 예타 기준 규모를 초과하게 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총사업비가 990억 2,400만원, 국비 지원규모가 339억 9,600만원에 해당하여 예타 기준 규모(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으로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에 속한 공사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중이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개 공사 합계 예타 기준 규모를 초과하게 된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1640-300)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신부는 내역사업 “기초과학연구원건립” 중 UNIST 캠퍼스에 대해 2023년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 2025년에는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 편성하는 등 2가지 이상의 비목을 동시 편성하였음 - UNIST 캠퍼스의 경우에도 2023년에 예산현액 18억 9,700만원 중 8억 500만원(42.4%)가 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예산편성 없이 이월금액만 집행하였으며, 2025년 5월 기준 148억 1,100만원 중 800만원만 집행된 상황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렇게 공사상황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부진이 나타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중 2가지 이상 비목을 연례적으로 동시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인건비 미교부로 인한 예산 불용 방지 위한 채용제도 및 직원 처우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R&D)(1032-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최근 4개년 중 3년 동안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미교부되어 총 27억 6,500만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음
<table><tr><td>2021</td><td>불용액: 결원인건비 1,123백만원 미교부</td></tr><tr><td>2022</td><td>불용액: 결원인건비 1,141백만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234백만원 미교부</td></tr><tr><td>2023</td><td></td></tr><tr><td>2024</td><td>불용액: 결원인건비 501백만원 미교부</td></tr></table>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교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제도와 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연례적 예산 이월 최소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1033-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 (백만원)</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집행률 (%)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1</td><td>470</td><td>470</td><td>96</td><td>566</td><td>395</td><td>69.8</td></tr>
<tr><td>2022</td><td>470</td><td>470</td><td>110</td><td>580</td><td>436</td><td>75.2</td></tr>
<tr><td>2023</td><td>470</td><td>470</td><td>123</td><td>593</td><td>543</td><td>91.6</td></tr>
<tr><td>2024</td><td>800</td><td>800</td><td>31</td><td>831</td><td>629</td><td>75.7</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은 2024년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 11건 중 9건(81.8%)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여야 하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수의계약 체결을 최소화하며, 정책연구과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차세대 태양광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차세대 태양광 기술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함 -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2025년 기준 주요 R&D 예산의 21.7%(6조 4,295억 원)를 선정된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76억원으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2025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인 차세대원자력분야의 예산은 2,043억원, 수소분야의 예산은 2,569억원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상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직무발명보상금 관련</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근로소득의 일종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최대 45%의 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료 상승 등으로 연구의욕이 저하될 수 있음
- 2024년 기준 비과세한도(연간 700만원)를 초과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87%이며,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연구원 중 비과세한도 이상 지급받은 인원이 매년 20% 이상임
○ 출연(연) 연구원 연봉은 최저임금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이 누적되어 이직자가 연평균 1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함
<table>
<tr><th>전년 대비 인상률 (%)</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최저임금</td><td>5.05</td><td>5.0</td><td>2.5</td><td>1.7</td></tr>
<tr><td>공무원임금</td><td>1.4</td><td>1.7</td><td>2.5</td><td>3.0</td></tr>
<tr><td>출연(연) 연구원 평균연봉</td><td>0.86</td><td>1.91</td><td>2.49</td><td>1.63</td></tr>
</table>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 촉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정부지분기술료 사용비율 준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기술료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성과활용 기여자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70% 이상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정부지분기술료의 4%만이 성과활용 기여자에게 지급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대학의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비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을 어떤 구조로 결정하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은 연구개발기관이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서는 용도별 사용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지나, 교육부 소관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관리가 소홀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분기술료 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부지분기술료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및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상 용도별 사용비율 준수 여부를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재정 외 R&D 정책자금에 대한 국고반납 이자율의 적정 수준 인상 필요**	관련사업명	재정 외 R&D 정책자금 국고반납 이자율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재정 외 정책자금은 공적 재원이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외로 운용되어 정책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은행이 R&D 자금 예치로 누리는 유무형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		
59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운용 현황 국회 보고 절차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1035-4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2021년 4,998억원에서 2024년 7,32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지급비율은 61.5%에서 59.2%로 하락함 ○ 적립금은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하나, 개별 연구책임자의 과다 적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적립금의 이자발생액과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책임자 단위별 학생인건비 적립·집행 현황, 이자발생액과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적립·미집행 기관·연구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운용 현황 국회 보고 절차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R&D)(1037-4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적립금이 2020년 23억원에서 2023년 19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 458개 적립단위 중 324개(70.7%)는 실제 집행이 전혀 없는 전액 적립 상태임 ○ 적립금은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하나, 적립금 운용 현황(적립금 규모, 이자발생액 및 집행내역)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과다 누적, 장기 미집행 등 투명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적립·운용 현황, 이자발생액과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적립·미집행 계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자체장비심의위 원회 및 운영규정 관련 지침 준수 및 나눔장비이전사 업 집행률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R&D)(1037-401)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대상기관 481개 중 39개 기관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15개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표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수요기관에 이전·재배치하는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에 따른 이전 건수는 늘고 있으나, 2024년 집행률이 59.2%에 그쳤음 - 최근 3년간 나눔장비 이전 실적은 (‘22년) 483점, (‘23년) 565점, (‘24년) 615점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심의위 및 운영규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과 운영규정이 미비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준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연구기관이 장비 도입 및 활용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유휴·저활용 장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수기관 측면에서 장비 이전·설치비용 지원 신청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R&D예타
후속제도 준비
및 성과목표
점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1038-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예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R&D로 전환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R&D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후속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R&D 예타 실적의 성과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4 목표치
산출근거</th><th>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r>
<tr><td rowspan="3">R&D예타 7개월 이내 종료 비율 (%)</td><td>목표</td><td>65</td><td>70</td><td>75</td><td>75</td><td>75</td><td rowspan="3">‘22.9월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소위 신설, 전문가 자문 확대 등 예타 조사 절차가 추가됨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유지</td><td rowspan="3">당해연도 대상사업 중 7개월 이내 조사 완료된 사업개수/당해연도 대상 사업 개수</td></tr>
<tr><td>실적</td><td>79.3</td><td>80</td><td>62.5</td><td>62.5</td><td>-</td></tr>
<tr><td>달성도</td><td>122</td><td>114</td><td>83</td><td>83*</td><td>-</td></tr>
</table>
* ‘24년 조사 종료 8개 사업(7개 시행, 1개 미시행) 중 5개 사업이 7개월 이내 조사 완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R&D로 전환을 위해 R&D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후속제도를 잘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R&D 예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성과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 제척사유 확대 및 재검토 기간 단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R&D)(1039-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제재처분을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원처분을 결정하는 제재처분평가단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나, 권익보호위 위원의 제척사유에는 제재처분평가단과 달리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이 포함되지 않음.
❍ 현행법에 따른 제재처분 재결정 기한이 30일이나,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검토 요청 건수 및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재검토 요청 건수 (건)</td><td>274</td><td>311</td><td>363</td><td>394</td></tr>
<tr><td>재검토 평균 기간 (일)</td><td>50.8</td><td>76.5</td><td>92.3</td><td>142.2</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의 제척사유를 제재처분평가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거나 소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처분 대상자인 연구자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보완**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구축(정보화)(2532-302)	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 내역사업인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의 성과지표는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건수” 성과지표는 기술 실증의 완료 여부만 측정할 뿐이고, 사업예산의 감소에 따라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서비스 만족도” 성과지표는 실적 대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 측정이 제한적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 과제의 매출유발 효과, 사업화 진척 등 실질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65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사후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2535-309)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7월 적합성평가 제도에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의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였는데, 도입 취지상 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부적합 적발률이 낮은 서류검토 위주로 사후관리가 실시된 측면이 있음 - 자기적합확인 이후 사후관리 실시현황을 보면, 24년 하반기는 372건 모두 서류검토로 실시되었고, 25년 상반기는 총 908건 중 900건이 서류검토로 실시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검사, 현장조사 비율을 높이는 등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6</td><td rowspan="3">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편성</td><td>관련사업명</td><td>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공통 - 국제우편운송(5134-332) 등</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에 따라 수탁사업자 및 위탁업무 지정을 고시한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은 위탁법인 지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타 비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table>
<tr><th>회계
구분</th><th>세부사업
(0000-000)</th><th>내역사업</th><th>예산과목</th><th>'24년
예산</th><th>수탁자('24년)</th></tr>
<tr><td>우특</td><td>국제우편운송
(5134-332)</td><td>항공운송료</td><td>210-16
(기타운영비)</td><td>78,862</td><td>우체국물류지원단</td></tr>
<tr><td>우특</td><td>우편업무
정보화
(5135-500)</td><td>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위탁운영비</td><td>210-15
(관리용역비)</td><td>2,565</td><td>(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td></tr>
<tr><td>우특</td><td>우체국시설유지
관리
(5142-409)</td><td>청사관리용역비</td><td>210-15
(관리용역비)</td><td>74,663</td><td>(재)우체국시설관리단</td></tr>
<tr><td>예특</td><td>금융사업위탁
(5231-365)</td><td>금융창구경비위탁</td><td>210-15
(관리용역비)</td><td>40,332</td><td>(재)우체국시설관리단</td></tr>
<tr><td>보특</td><td>보험사업운영
(5331-381)</td><td>보험 기획조사</td><td>210-14
(일반용역비)</td><td>127</td><td>우체국금융개발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위탁사업을 고시한 내역사업의 편성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 편성**	관련사업명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그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동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수납률도 저조하게 나타났고,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8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우편사업특별회계 - 별정 및 취급국 운영(5142-407)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1982년 도입된 공적연금 제도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해 운영되며, 2024년 말 기준 적립기금은 1,075억원, 연금수급자 2,677명, 재직자는 3,258명임 ○ 별정우체국연금은 재직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부양률이 82.1%에 이르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에서 매년 적자가 확대되어 2027년 연금자산 고갈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준비금 편성 등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적자 상황을 고려하여 우체국예금·보험 유휴재원 활용 등 장기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9	**우편사업의 우체국예금 의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 및 구조개선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편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우체국예금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2024년 기준 82%)이 우편사업 결손보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예금사업 당기순이익으로 우편사업 적자를 충당하는 방식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 2016년의 경우 우편사업 적자(2,428억원)가 우체국예금 당기순이익(1,502억원)을 초과함 ○ 우편사업의 우체국예금 의존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우체국예금의 재무 건전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이 우편물량 감소에 대응한 사업구조 개편, 비용 효율화, 신규 수익원 발굴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자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의 자구노력 및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할 것		
70	**우체국예금의 적정 수신금리 설정 및 안정적 자산운용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지급이자와 반환금(5232-371) 등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금리를 시중은행에 비해 0.12% 정도 낮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여 안전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수신고가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23년 이자지급액은 전년대비 107.7% 증가한 1조 6,666억원, 2024년 이자지급액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2조 2,952억원 규모 ○ 우체국예금은 대출이 불가능하여 국채, 공자기금 등 안전자산 뿐만 아니라 주식, 대체투자 등의 자산운용 확대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고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우체국예금에 적정한 수신금리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1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AI반도체 실증지원(2603-31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재 선발, 평가 플랫폼, 채용 연계를 추진함 - 수요기업과 인재의 채용 연계를 지원하며, 취업 컨설팅·상담·인건비 지원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임 ○ 동 내역사업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AI반도체 업체와 구직이 필요한 AI반도체 관련 대학·대학원 등에 있는 우수인력의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AI반도체 업계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을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할 것		
72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동일한 과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7602-304)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과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연구 수행과 관리 업무를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해당 연구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성과평가·정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3	**지침을 위반한 자산의 미등록 및 정산보고서상 자산 누락 부적정**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2137-311)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HPC이노베이션허브’ 사업에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기금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미등록하고, 정산보고서상에서도 누락하여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음 - 2024년에 4,350만원으로 취득한 ‘HPC 클러스터 네트워크 장비’를 정산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음(2025. 6. 11. 기준) - 상임위 결산 검토 과정에서 연락을 통해 부처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시정을 요구한 후 6월 16일에 정산보고서에 등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거나 정산보고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4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 수당 등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7176-104)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인건비 성격에 해당하는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인건비가 아닌 경상비에 편성·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0~2024년도 동안 해외 파견 직원의 연도별 수당 등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2명의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을 경상비에서 약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인 재외근무수당·가족수당·주택비는 인건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정확한 공시를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5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필요 등**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7176-204)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의 정보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계약금액 9,900만원)을 체결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고시금액 이하 협상계약에도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직원 대상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근버스 관련 비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기술능력평가 항목에서 수행실적을 제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통합공시 기준을 준수하여 통근버스 관련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공시할 것		
76	**해외 진출 사업의 특정 기업 중복 지원 지양 필요 등**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ICT창의기업육성(1139-303)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해외 주요시장 투자설명회 및 협력 관계 구축 내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 기업에 중복하여 지원된 현황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10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다수의 기업이 중복 지원받았음 ○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내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과 실제의 지원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추계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에서 다양한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과 유사 사업 추진 시 체계적 추계를 실시하는 등 사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7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반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운영규모는 정진기금은 2022년(1조 9,942억원), 방발기금은 2021년(1조 4,530억원)이 최대 규모로, 2024년까지 지속 하락하였음 ❍ 기금 운용규모의 하락은 자체수입의 축소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여기에 더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이 큰 것도 원인임 - 주파수할당대가는 2018년 5G 신규할당, 2021년 3G·LTE 재할당으로 수입이 급증했으나, 2022~2024년에는 정진기금 약 5,500억원, 방발기금 약 4,000억원 수준 ❍ 반면, 2020년 이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순자산은 2024년말 기준 각각 △2조 9,843억원, △1조 4,165억원으로 악화된 상황임 - 2019년까지 공자기금 예탁잔액이 총 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두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차입 없이 운용됨 - 2020년부터 당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 차입이 발생함(2020년 기준 6,335억원 차입금) ❍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고갈 부분과 수입원·용도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통합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중장기적 진단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성과지표의 지엽적 설정 및 산출 지표 위주 설정**	관련사업명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사회의 디지털 혁신 전면화,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의 전략목표 중 프로그램 목표 ‘Ⅴ-2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의 성과지표로 ‘버스(AP)당 월평균 이용량(GB)’를 설정하였음 - 동 지표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품질, 확장성, 기술력 등 핵심 지표를 포괄하지 못하고, 특히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 버스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21년 60.7GB, 2022년 72.8GB, 2023년 101.8GB, 2024년 165.3GB로 급증하여 2024년 성과지표 달성률은 157.7%에 달함 - 이는 단지 동영상 트래픽 급증이라는 환경 요인에 따른 결과일 실질적인 정책 노력의 성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를 지엽적으로 설정하거나 산출 지표 위주로 설정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통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재설계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9	**예산증액, 사업구조 재설계, 강사·서포터즈 고용 개선방안 마련 및 '찾아가는 디지털 도우미' 제도 강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디지털역량강화 교육(1945-301)	시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 698억 4,00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279억 3,600만원으로 60%가 감액되었음 - 기존에 약 1,000개 내외로 운영하던 디지털배움터를 36개 거점센터 위주로 축소한 결과 교육인원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 인원수도 5,005명에서 2,326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예산축소와 거점센터 중심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인원과 접근성이 크게 감소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차질이 우려되고,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 다수가 재고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고령층,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등의 사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수준이 상당히 취약하여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성 있는 강사의 지속 고용 등 강사 및 서포터즈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증액, 사업구조 재설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강사 및 서포터즈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도우미' 제도를 강화할 것(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필수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배움터사업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집중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최소 현행 수준의 예산 유지 필요 일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1945-5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50억 6,000만원에서 38억 3,000만원으로 24% 삭감되었고,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될 예정임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인권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적정규모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질 경우 대안을 적극 검토할것		
81	**사업관리 강화, 전문기관 예산 확보 및 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33-300)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광역·기초지자체의 집행 편차와 이월액 발생 등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년 연속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지특회계 전환 후 전문기관 사업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일부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스마트빌리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제한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스마트팜·스마트의료·스마트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데 그쳐 통합적 생활서비스 모델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행방식 점검하고 연례적인 이용·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을 확보할 것(제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공공·민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성과지표 미비 및 단순 산출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232-325)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도에 기존 인재양성 사업들을 통합·재구성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성과지표가 통합·조정되지 않아 일부 내역사업에는 지표가 없거나 산출물 수준의 미흡한 지표가 설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성과지표인 '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는 전체 8개 내역사업 중 5개(예산의 68.7%)만 반영되어 산출되어 나머지 3개 내역사업(총 256억원)은 성과지표가 없어 성과평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인 '교육 이수자 수'는 예산·인력 투입만으로 달성 가능한 단순 산출물지표에 불과하여 사업의 본래 목표인 산업 내 AI 도입·확산 및 디지털 전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가 없는 내역사업에 대해 지표를 마련하고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할 것		
83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소프트웨어인재키움사업(2232-327)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SW인재키움센터 기본계획·타당성 조사(3억원)를 위해 신규 착수했으나, 2025년 예산 미반영으로 센터 선정·설계 등은 중단되고 기본계획·커리큘럼·운영모델 연구만 수행하였음 - 3억원 중 1억 5,800만원(52.6%)이 집행되었고, 당초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 123억원(지방비 50억 별도) 규모의 사업계획이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편성 시 예산·일정·리스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4	**사업의 조기종료로 인한 성과미흡 및 예산 비효율 문제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2233-339)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7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2025년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조기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목표 축소, 연구기간 단축, 정산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부실과 함께 성과없는 매몰비용 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기종료로 인한 성과 미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단계부터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비효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제도개선)		
85	**AI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2602-303)·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2605-304)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두 AI 서비스 개발 사업의 경우 대형언어모델 등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서비스와 유사한 개발 과정을 거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단가 및 개발기간에서 사업 간 격차가 큰 상황임 ○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은 개발기간이 3년에 과제당 3년간 총 36억원이 소요되고, 초거대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은 개발기간 1년에 과제당 10억원이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적정 개발기간, 적정 단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을 설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국민 건강과 직결된 기술 개발에 자원 집중 및 의료현장 수요 기반 과제 선정·재배치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R&D)(2333-308)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산이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 개발에 분산되면서 의료 현장에 시급히 필요한 필수 질환 중심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 의료 현장 활용성과 환자 체감도가 낮음 ○ 동 사업은 국비 투입에 따른 공공 기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비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자원을 집중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재배치하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환자 혜택과 국민적 기여를 명확히 지표화할 수 있는 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것		
87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조속한 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자 선정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단년도 과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및 사업수행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속한 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8	**사업출연금 예산을 이용한 사업수행기관 경상비 지출 행위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2601-403) ·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2601-405)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적사항	○ 동 사업들의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관의 운영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동 사업의 사업출연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사 비용을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향후 사업출연금 예산을 이용한 사업수행기관 경상비 지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부정수급 및 중복참여 기업에 대한 기준 및 제재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및 ‘AI 바우처 지원’은 2023년 국정감사,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과 관련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현재 부정수급 환수 기준은 AI 바우처 사업과 AI 데이터 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기업의 두 사업 합산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 비율이 과다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은 예산이 분산적으로 집행되고 개별 기업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효과가 제한됨 ○ 내역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은 지원이 단기적·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산업과 필수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내역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은 수요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공급하다 보니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및 AI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시 부정수급 및 중복참여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제재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시 반도체·의료·제조·금융·안전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전략 분야에 대한 AI 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바우처를 현장 수요에 맞게 공급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0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기 추진 필요 등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2601-303)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제2기 위원이 적기에 위촉되지 않아 제1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한 차례 서면회의를 개최한 데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에 전체회의 3회(서면 2회, 대면 1회), 조정회의 1회로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조정 접수 건수는 3건, 그 중 조정 성립 건수는 1건에 불과하여 운영·조정 실적이 저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속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1	데이터·클라우드 관련 예산 확대 기조로의 전환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클라우딩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2602-31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정부는 AI G3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라우드 예산은 2024년 868억 100만원에서 2025년 441억 8,1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인프라 근간인 데이터·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확대 기조로 전환할 수 있게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2	**사이버 보안 관련 핵심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 보안 사업 총괄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국가 기반시설 해킹, SKT 침해사고 등 정보보안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강화가 병행되는 것이 필수이나 이번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 보안 사업은 모두 제외되어 AI 주무부처의 보안 전략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93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지침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복리후생제도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지적사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관리기관운영비(7176-203) 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관리비(7276-200) 사업 및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연례적으로 전 직원 대상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4년도에는 긴팔 셔츠 2종, 콤비 자켓 388개와 브이넥 가디건, 점퍼 142개를 구매하는 등 연례적으로 전직원 대상 근무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인원 이외에도 근무복을 지급하여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휴직·휴일·보수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기준에 비해 금품비위, 형사사건 기소 등 직위해제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규정도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제복 착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직원의 휴직·직위해제 시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4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 제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과 관련하여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이 별다른 조치 없이 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MS 예비인증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하여 ISMS 예비인증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5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2024년도 R&D 예산 감액 관련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R&D 예산이 정부안 기준 5.2조원 삭감되었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R&D 예산의 정부총지출 비중을 2026년 4.3%, 2027년 4.1%, 2028년 4.0%로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과학기술 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등 R&D 분야의 급격한 역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R&D 예산 심의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것 ○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과학 분야의 타격이 심대한 수준이므로 기초과학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것		
96	**의료분야 AI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 집행 효율화 도모 필요**	관련사업명	AI 지원 사업 총괄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2024년 의료분야에서 신규사업이 확대되면서 주로 뇌질환, 정신건강 관련 유사한 질환에서 서비스 개발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닥터앤서 2.0 사업에서 이미 우울증, 뇌경색 등 12대 질환 관련 솔루션을 개발했음에도 유사 과제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 의료분야 AI 서비스 개발 사업이 개별 사업별로 기획, 수행기관 공모·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국내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과 맞물려 유사 질환 영역에서 과제들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사사업 간 통합 추진 등 의료 분야 AI 사업 관리·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7	**한국연구재단 및 IITP 감사 권한 남용**	관련사업명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 관련	시정,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실이 감사계획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 - 열람한 개인정보: 사원정보관리, 현황관리, 시간외근무 현황, 근태 총괄 현황, 근무시간 현황, 선택적근무 현황, 임금피크제/재고용 근로시간 현황, 재택근무자 현황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자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공감사 시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와 IITP 감사실은 인사 정보 열람 권한을 남용하다 감사실의 무분별한 인사 정보 열람에 대해 문제를 인식한 인사 실무자가 일부 권한을 회수하자, 이에 대해 감사 방해라며 압박하고 곧 권한이 복원되었음에도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개인정보 보호법」 및「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 또한 감사계획서 없이 감사반도 구성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실상의 사찰에 가까운 인사정보 열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규정을 관리해야 할 한국연구재단 감사팀은 오히려 상임감사 등의 무분별한 인사 정보 열람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감사 권한을 남용한 상임감사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감사 권한 남용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 규정들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8	**사업지연에 따른 GPU 활용 수요 적시 대응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1159-425)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이하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영하여 거대 계산과학·AI 중심 과학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슈퍼컴 6호기에는 첨단 GPU 8,500장이 투입될 예정임 ○ 최근 국내 GPU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GPU 적시 공급이 필요함에도, GPU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수차례의 유찰과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수급 불안·가격 변동에 대응할 사전 확보·계약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9	**참여자 모집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1138-454)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개인 동의 기반으로 검체 및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 2024~2025년 계획한 참여자 모집 인원은 210,497명(2024년 19,633명, 2025년 190,864명)이나, 2025년 7월 기준 참여자 모집은 희귀질환자 1,619명, 중증질환자 1,744명, 일반참여자 41,493명을 합하여 44,856명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준동의서·패스트트랙 도입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 질환·권역별 전략 마련, 진척 보고 강화 등 참여자 모집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0	**관리체계 완비 후 과제 착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치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2132-371)	주의,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3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24년부터 추진 중으로, 과제수행기간은 2024~2028년이고 총 과제비는 4,407억원(국비 3,731.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제로서, 전문적인 기획·관리·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네트워크(6G) 사업단이 2024년 말이 되어서야 출범하여 2024년은 사실상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그 과정에서 사업단이 아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과제에 대한 기획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국가 R&D 사업에 대하여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 관리체계가 완비된 이후 과제를 착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1</td><td rowspan="3">국민 AI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방안 적극 모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방송통신발전기금 -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정보화)(24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은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과 전국민 디지털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1,368개소에 대한 신규 구축 수요가 존재함에도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지자체 신규 구축 수요
<table>
<tr><td>구분</td><td>서울</td><td>부산</td><td>대구</td><td>인천</td><td>광주</td><td>대전</td><td>울산</td><td>세종</td><td>경기</td></tr>
<tr><td rowspan="2">개소</td><td>69</td><td>31</td><td>33</td><td>95</td><td>11</td><td>27</td><td>23</td><td>85</td><td>145</td></tr>
<tr><td>강원</td><td>충북</td><td>충남</td><td>경북</td><td>경남</td><td>전북</td><td>전남</td><td>제주</td><td>합계</td></tr>
<tr><td>81</td><td>36</td><td>26</td><td>154</td><td>87</td><td>81</td><td>359</td><td>25</td><td>1,36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구축이 중단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의 재개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AI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2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SaaS 혁신펀드(2602-33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407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여 2025년 4월말 기준 12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였고, 그 중 11개 기업이 SaaS* 기업 또는 SaaS 전환 중인 중소·벤처기업 및 국내 IaaS**기반 SaaS 기업에 해당하여 주목적 투자요건에 부합함 *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주목적 투자요건에 부합하는 11개 기업 중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2개에 불과하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작은 문제가 있음 ○ 또한 정책펀드의 목적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초기 기업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VC의 수익성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펀드의 수익성 중심 운용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가 집중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 혁신펀드 운용 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VC 중심의 안정성 위주 투자 관행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3	**R&D 사업 성과추적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총괄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우리 과학계의 R&D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여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과 같은 HRHR(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실례로 최근 미국 국립 보건원(NIH)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혁신연구 및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 중 연구과제 성공률은 약 17.8%인이나, 국내 연구 성공률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실패 과제 대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 연구의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실패 과제 관련 DB 구축・관리 주체가 없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이후의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 기술이전 실적 등의 성과추적 관리체계도 부족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에 있어 「실패백서(Failure Report)」 작성 및 기술 DB 공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의 본질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상용화 및 기술이전 실적 등의 성과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4	**제 4 이동통신 선정 및 취소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선정 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대상 전파정책국 기본경비(7011-219)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자(이하 “컨소시엄”)가 선정되었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하여 이례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등록제로 시행함에 따라 기초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없이 최고가를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함 - 그러나 컨소시엄의 주도 회사였던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자금조달 계획의 핵심인 산업은행 대출 관련 부분도 해당 부서와의 논의조차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 취소가 아닌 이례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회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결국 2023년 6월 자금조달 이행 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4 이동통신 선정 및 취소 과정에 대해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 이유를 밝히고, 추후 주파수 경매 시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파법」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5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계도전 R&D 프로젝트(R&D)(1158-450)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였음에도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서는 책임PM의 책임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책임PM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중간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4년 사업비 100억원 중 9억원(9%)이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전문기관의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2% 수준인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또한 별도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8호, 2024.5.17. 제정)을 제정하여 책임 PM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서는 책임PM의 책임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6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선급금 전액 지급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9)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한국연구재단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급금을 전액 지급한 비율이 최근 3년간 매년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 제한 등이 우려됨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건 중 28건(84.8%)에 대하여 선급금을 100% 지급하였음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내규인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용역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나,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연구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의 기관 내규 등의 경우,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선급금 지급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급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이나 계약상대가 기업인 경우 과업 수행 도중 폐업하거나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국고금관리법」이나 다른 전문기관의 내규와 유사하게 선급금 지급 제한을 두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7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에 대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3책 5공) 제도 적용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융합연구’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는 과제의 중요도나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여 과제에 참여하여도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으로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의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런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는 국가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미래선도 기술분야에서 전(全) 출연연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고 책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24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32명 중 11명의 동시 수행 과제 수가 5개를 넘어서거나 연구책임자인 과제 수가 3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각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몰입 저하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의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동 과제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8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에 대한 산업계 및 연구계 참여 확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에 최근 10년간 참여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약 90%를 대학이 차지하는 등 참여기관이 학계에만 집중되고 있음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는 58,200개로 이 중 379개가 대학, 477개가 공공연구기관, 나머지 57,344개가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국내 대학의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도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해외우수과학자를 유치·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나 연구계가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9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전정보문화조성(정보화)(1945-504)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제2항·제3항·제4항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받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2,120개 기관 중 2,063개의 기관이 어린이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교의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43.6%로 집계되어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0</td><td rowspan="3">예산 및 기금의
재원과 용도
구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디지털 질서기반 구축 및 글로벌확산 지원(2033-37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한 문제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하여 2024년 9월 10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수행중이던 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출범식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활용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회계·기금</th><th>세부사업 명</th><th>활용예산</th><th>합계</th></tr>
<tr><td>일반회계</td><td>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질서 확산</td><td>50</td><td rowspan="4">261.5</td></tr>
<tr><td>방송통신발전기금</td><td>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td><td>50.5</td></tr>
<tr><td>정보통신진흥기금</td><td>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td><td>50</td></tr>
<tr><td>정보통신진흥기금</td><td>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td><td>111</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도록 하여 향후 예산과 기금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1</td><td rowspan="3">사업관리 방식
개선 및
체계적인
추적조사 실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의 최종 목적은 유치연구자를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연구자 국내 정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잔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지원대상자 국내 잔류 현황]
(단위: 개, 명, %)
<table>
<tr><th>연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조사대상 및 방법</td><td colspan="4">해외 우수 과학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조사</td></tr>
<tr><td>조사내용</td><td colspan="4">과제 종료 후 해외 우수 과학자의 현 소속기관 및 직위, 현 체류국 등</td></tr>
<tr><td>조사기간</td><td>2021.7.30.~2021.8.6.</td><td>2022.8~10월</td><td rowspan="5">미실시</td><td>2024.10.16.~10.23.</td></tr>
<tr><td>대상과제 수(A)</td><td>336</td><td>429</td><td>791</td></tr>
<tr><td>응답자 수</td><td>133</td><td>294</td><td>421</td></tr>
<tr><td>국내 잔류자(B)</td><td>79</td><td>92</td><td>153</td></tr>
<tr><td>잔류비율(B/A)</td><td>23.5</td><td>21.4</td><td>19.3</td></tr>
</table>
주) 2021년 이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2023년에는 설문조사를 미실시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국내 정착 성과 등에 대해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2</td><td rowspan="3">수의계약
체결 시 면밀한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계약 120건 중 83건(69.2%)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어,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건, %)
<table>
<tr><th rowspan="2">계약 수</th><th colspan="2">수의계약 수(비율)</th></tr>
<tr><th colspan="2">수의계약 사유(건,비율)</th></tr>
<tr><td rowspan="8">120건</td><td colspan="2">83건 (69.2%)</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인 경우(58건, 69.9%)</td></tr>
<tr><td>시행령 제27조인 경우(18건, 21.7%)</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인 경우(2건, 2.4%)</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인 경우(2건, 2.4%)</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인 경우(1건, 1.2%)</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인 경우(1건, 1.2%)</td></tr>
<tr><td>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인 경우(1건, 1.2%)</td></tr>
</table>
주) 2024년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계약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으로 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업무 수행 시 면밀한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3</td><td rowspan="3">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집행 문제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1158-42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2년(40억원)과 2023년(40억원)에 편성한 예산 총 80억원도 2024년까지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2024년 예산 3억원에 대하여는 편성이 불필요하였으나, 이를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함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였으며, 2025년 7월 기준 총 실집행액은 76억원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4">2022년</th><th colspan="4">2023년</th><th colspan="4">2024년</th></tr>
<tr><th>교부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h>교부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h>교부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r>
<tr><td>4,000</td><td>4,000</td><td>17</td><td>3,983</td><td>4,000</td><td>7,983</td><td>3,931</td><td>4,052</td><td>300</td><td>4,352</td><td>1,203</td><td>3,149</td></tr>
</table>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의 집행 현황(2024.12.31.기준)에 대한 자료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집행이 저조한데도 결산 사업 설명자료의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를 100%로 적시하여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시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사업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례적으로 예산이 대규모 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성과지표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4	**특이소요를 면밀히 검토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교육(손익계정)(2232-407)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국립중앙과학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역과 달리 전국과학전람회를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함 -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해 본예산 3억 1,100만원 외에 전용 등(4억 6,200만원)을 통해 증액된 예산현액 7억 7,300만원 중 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회 운영 확대를 위해 사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관련 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특이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를 확대 개최하기 위한 예산 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5</td><td rowspan="3">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과학기술진흥기금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1744-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을 추진하면서 용도별로 수행 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각 과제마다 매년 동일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수행기관 현황]
<table>
<tr><th>내역사업</th><th>연구개발과제 명</th><th>수행 연구개발기관</th></tr>
<tr><td rowspan="3">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td><td>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지원</td><td>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td></tr>
<tr><td>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td><td>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td></tr>
<tr><td>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td><td>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td></tr>
</table>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음(2024년 12월 31일 기준)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사업수행 시에도 여전히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6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2232-342)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SW중심대학'의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의 ICT 분야 종사 현황 등의 성과지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 'SW중심대학'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었는데, 2024년 기준 58개 대학에 총 92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5년도 기준 8개 대학에 총 56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SW인재양성 교육생의 만족도 및 SW 인재양성 취업률로 되어있는데 SW 인재양성 취업률의 경우 해당 대학 전체 졸업생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SW중심대학 사업 자체만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 외에 이 사업의 성과를 SW 및 SW융합 전공 수혜인원수, SW교육 수혜인원 등 정량적인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어 사업의 정성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7	**펀드사업의 단계별 집행 구조로의 전환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SaaS 혁신펀드(2602-331)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정부예산 200억원과 민간자본 207억원을 합한 407억원이 결성되었으나, 2025년 6월말 현재 125.3억원만 투자되었는데, 정부투자비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00억원 중 약 60억원만 투자가 이루어진 것임 - 특히 펀드사업의 경우 모펀드에 이은 자펀드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민간에서의 자펀드 투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의 투자금은 처음부터 투자사에 납입이 되어 장기간 활용이 제한되어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의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집행도 불가능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재정낭비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8	**중복지급 사업비 회수 및 사업추진방식 변경**	관련사업명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	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의 과제를 수행한 업체 중 여러 부처 사업에 인력을 중복으로 투입하여 인건비를 중복수령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업체는 2024년도 하반기에만 6개의 부처(과기부 포함)에 10개의 사업을 동시에 참여하면서 각 사업에 동일한 인력을 중복투입하여 일부 인력은 참여율이 380%가 나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수행 인력이 확인됨 - 참고로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SW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수령,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프리랜서 투입으로 인한 불법 하도급, 허가받지 않은 인원 교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지급 사업비를 회수하고, 관련 사업 전반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할 것		

2. 우주항공청(9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사업 집행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우주항공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은 민간발사장 구축, 위성개발혁신 센터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2025년도 4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0%임
※ 내역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내역사업명</th><th rowspan="2">비목</th><th colspan="3">2024년</th><th colspan="3">2025년</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 rowspan="2">민간발사장 구축</td><td rowspan="2">360-05</td><td>2,000</td><td>2,000</td><td>100</td><td>2,600</td><td>2,600</td><td>100</td></tr>
<tr><td>[2,000]</td><td>[109]</td><td>[5.5]</td><td>[4,491]</td><td>-</td><td>-</td></tr>
<tr><td rowspan="2">발사체기술 사업화센터 구축</td><td rowspan="2">360-05</td><td>1,500</td><td>1,500</td><td>100</td><td>3,600</td><td>3,600</td><td>100</td></tr>
<tr><td>[1,500]</td><td>[81]</td><td>[5.4]</td><td>[5,019]</td><td>-</td><td>-</td></tr>
<tr><td rowspan="2">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td><td rowspan="2">360-05</td><td>2,500</td><td>2,500</td><td>100</td><td>10,000</td><td>4,250</td><td>42.5</td></tr>
<tr><td>[2,500]</td><td>[411]</td><td>[16.4]</td><td>[12,089]</td><td>-</td><td>-</td></tr>
<tr><td rowspan="2">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td><td rowspan="2">360-05</td><td>1,500</td><td>1,500</td><td>100</td><td>3,200</td><td>3,200</td><td>100</td></tr>
<tr><td>[1,500]</td><td>[0]</td><td>[0]</td><td>[4,700]</td><td>-</td><td>-</td></tr>
<tr><td rowspan="2">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td><td rowspan="2">360-05</td><td>2,000</td><td>2,000</td><td>100</td><td>3,600</td><td>3,600</td><td>100</td></tr>
<tr><td>[2,000]</td><td>[304]</td><td>[15.2]</td><td>[5,296]</td><td>-</td><td>-</td></tr>
<tr><td>기획평가비</td><td>360-06</td><td>500</td><td>10</td><td>2</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1339-301)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연구개발사업(R&D)이 아닌 일반 출연사업으로 국가재정법상 비 R&D사업 예산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의 실제 수행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4년에 예산 38억 5,000만원 중 11억 2,300만원(29.2%)을 집행하고, 27억 2,700만원은 2025년으로 이월하여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주항공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30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월하였는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출연금 지원 근거이고, 공통 운영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로서, 「국가재정법」이 금지하는 이월을 정당화할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차세대발사체개발 핵심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발사체개발(R&D)(1433-303)	주의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모용발사체로 결정되었으나 재사용발사체로의 변경 필요성 등 핵심 사업내용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지연, 예산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23~2032년 동안 추진되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었음 -2024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임무목표 달성 리스크 확인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시작되어, 2025년 현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확정(재사용발사체로 변경 필요성 등의 사유임)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의 핵심 사업내용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종료사업에 대한 이관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1733-306)	주의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에 단계평가 결과 사업이 중단되면서, 2024년 예산은 전액 불용하여 이후 사후 정산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산업통상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었음 -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은 고중량 화물 탑재 및 장거리·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중형 드론을 개발하여 공중을 활용한 고속 배송으로 운송시간 절약을 통해 물류시장에서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5억 7,300만원(0.0%)을 전액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이미 사업이 중단되어 사후 정산 절차만 남은 사업을 이관한 것은 행정 효율성 및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이관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달탐사 2단계 사업의 사업계획안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1634-301)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에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4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계 관련 사업계획안 변경 등으로 인해 40억원 중 4억 2,000만원(10.1%)만 집행되고 35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동 사업은 2023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2024~2033년까지 총사업비 5,303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으로 2024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우주항공청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결정된 달착륙선의 추진계와 추진기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업계획안 변경이 검토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1339-302)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미집행액을 이월하여 원칙적으로 예산의 이월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 - 동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024년에 교부받은 예산 28억 8,000만원 중 8억 1,300만원(28.2%)만 집행되었고, 20억 6,700만원은 이월되었음 - 우주항공청은 이와 같은 예산의 이월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30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입장임 - 그러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출연금 지원 근거일 뿐이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로서, 이에 근거하여 「국가재정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월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이월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R&D사업의 일반출연금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미집행액을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이월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	주의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임 - 우주항공청은 2023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개시되었으나,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음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808억원으로 확정되었고 2024년 10월 및 11월에 사업시행주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25년 7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 이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우주항공청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6년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적정 수준의
사업단 운영비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R&D)(1337-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우주항공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단 운영지원’은 매년 4억원 이상 이월되고 있고, 일부 예산은 내역조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등 사업단 운영비가 필요 이상으로 투입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교부한 운영비 중 4억원 이상이 이월되고 있는데, 주로 인력 채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음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교부액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4">2022</th><th colspan="4">2023</th><th colspan="4">2024</th></tr>
<tr><th>교부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h>교부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h>교부액</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r>
<tr><td>1,820</td><td>1,893</td><td>1,475</td><td>418</td><td>2,000</td><td>2,418</td><td>1,858</td><td>560</td><td>2,100</td><td>2,660</td><td>2,191</td><td>469</td></tr>
</table>
주) 교부액은 한국연구재단이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으로 교부한 금액임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4년 1월 1일에 사업단운영비 내역사업 예산액 2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내역조정을 거쳐 위성중점기술개발 내역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비로 지원되기도 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단 운영지원 사업의 이월액 및 인건비 등 운영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1533-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우주항공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는 2024년 예산액 중 59.2%가 불용되었고, 연구개발기관의 최종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8.2%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집행가능한 예산의 범위가 예측되었을 것이나, 이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24년 예산액의 59.2%가 불용됨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교부된 예산 24억 4,700만원 중에도 4억 9,000만원만 집행되고 19억 5,700만원은 이월되어 실집행이 극도로 부진함
[2024년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우주항공청</th><th colspan="4">연구개발기관</th></tr>
<tr><th>본예산
(A)</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교부액</th><th>최종
집행액
(B)</th><th>이월액</th><th>최종
집행률
(B/A)</th></tr>
<tr><td>6,000</td><td>2,447</td><td>3,553</td><td>2,447</td><td>490</td><td>1,957</td><td>8.2</td></tr>
</table>
주) 2024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우주항공청은 향후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 전용, 연가보상비 편성 등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총액대상)(7101-101)	시정,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확정 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를 예산 전용으로 진행하였음. ○ 방통위는 연가보상비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유보하고 있어, 연가보상비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조직 정책적인 변경사항 등 예측 가능한 예산 소요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기보다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가능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2	**법정위원회 상시운영 및 교추위 구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법정위원회에 대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 미흡,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회의가 간헐적으로 개최되어 정책 현안 대응의 시의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2024년 3월 7기 임기 만료 후 재구성되지 않아 회의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사업들이 법정 절차인 교추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신뢰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유효한 경쟁입찰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시정,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는 지난해 40건의 용역이 수행되었으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정책연구과제 입찰현황을 보면,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의 과제비중이 72.5%이고, 입찰공고기간의 경우 수시과제는 공고기간이 10일 미만, 학술행사 등의 용역은 공고기간을 10일 내외로 두고 있어 법령 최소기간을 준수하는 정도임.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에 있어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문제가 연례적으로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기간을 충분히 둘 것(제도개선)		
4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한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주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도로 터널 등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음영지역 내 기술지원, 중계설비 설치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임. 사업의 근거 법률의 개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제3항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방향관련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본 보조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기금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시정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이 16.3% 감소하였음에도 지난해 192억 7,200만원을 국제방송 및 국악방송에 지원하였음.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감사가 불가능한데,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증액안을 수용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6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정보화)(2141-309)	주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59.7%)되었지만, 월평균 스팸수신량 14건으로 16.7% 증가하였음. 스팸신고 처리율 목표치는 44.4%였으나 52.3%로 목표를 상회하였는데 최초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스팸 수신량이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법정 정원의 조속한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주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31%가 법정 처리기한(60~90일)을 초과하고 있음. 위원회 정원은 30명까지 위촉가능하나, 현재 16명만 위촉된 상황으로, 위원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국민 피해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지연 및 법정기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상 허용된 정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		
8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OTT 산업 경쟁력 강화(3134-341)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민간보조사업자 KOBACO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업의 주된 수혜자인 OTT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무가 없어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참가기업 만족도’라는 단일 성과지표만 반영하여 성과관리 체계가 부실함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주관기관을 재검토하고, 기금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 재설계 필요하며, 실질적 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벌금 및 과료(56-561),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불법스팸 전송 등에 대한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이 연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함
※ 최근 3년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세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예산액</th><th rowspan="2">징수결정액(A)</th><th rowspan="2">수납액(B)</th><th rowspan="2">수납률(B/A)</th><th colspan="3">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결손</th></tr>
<tr><th></th><th>거소불명</th><th>체납자무재산</th></tr>
<tr><td rowspan="3">벌금 및 과료</td><td>2022</td><td>6</td><td>17,591</td><td>68</td><td>0.4</td><td>13,981</td><td>6,138</td><td>7,843</td><td>3,542</td></tr>
<tr><td>2023</td><td>6</td><td>13,575</td><td>66</td><td>0.5</td><td>13,509</td><td>8,010</td><td>5,499</td><td>-</td></tr>
<tr><td>2024</td><td>6</td><td>13,311</td><td>39</td><td>0.3</td><td>12,817</td><td>7,165</td><td>5,652</td><td>455</td></tr>
<tr><td rowspan="3">과태료</td><td>2022</td><td>3,072</td><td>45,969</td><td>3,316</td><td>7.2</td><td>36,868</td><td>16,185</td><td>20,683</td><td>5,786</td></tr>
<tr><td>2023</td><td>4,259</td><td>40,597</td><td>3,699</td><td>9.1</td><td>36,897</td><td>21,880</td><td>15,017</td><td>-</td></tr>
<tr><td>2024</td><td>4,022</td><td>40,328</td><td>3,321</td><td>6.6</td><td>34,485</td><td>19,277</td><td>15,208</td><td>1,886</td></tr>
<tr><td rowspan="3">가산금</td><td>2022</td><td>50</td><td>32,034</td><td>232</td><td>0.7</td><td>28,523</td><td>12,522</td><td>16,001</td><td>3,279</td></tr>
<tr><td>2023</td><td>98</td><td>30,199</td><td>197</td><td>0.6</td><td>30,002</td><td>17,791</td><td>12,211</td><td>-</td></tr>
<tr><td>2024</td><td>141</td><td>30,606</td><td>197</td><td>0.6</td><td>28,950</td><td>16,070</td><td>12,679</td><td>1,458</td></tr>
</table>
○ 불법스팸 관련 낮은 징수률이 지속될 경우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예금압류・추심・독촉, 중장기적 인력 충원・교육, 간접적 제재방안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스팸 과태료 등의 수납률을 제고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 해결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td><td rowspan="3">시정,
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EBS는 동 사업을 통해 UHD 방송 송출을 위한 방송제작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나,「방송법」 제54조에 따른 송신지원의 범위에 대한 KBS와의 이견으로 인해 방송 송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EBS의 UHD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2,200만원 중 9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그러나「방송법」 제54조에 따른 송신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EBS는 KBS가 UHD 송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KBS는 재정여건상 EBS의 UHD 송신비용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있음
- 이로 인하여 EBS는 UHD 방송 송출을 위한 방송제작장비와 네트워크장비만 구축하고 있을뿐, UHD 방송을 송출하고 있지 않음
※ EBS 연도별 UHD 프로그램 제작·송출 내역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
<tr><td>제작비(백만원)</td><td>926</td><td>2,878</td><td>2,391</td><td>1,387</td><td>1,255</td><td>750</td><td>1,627</td><td>1,800</td><td>1,472</td><td>14,487</td></tr>
<tr><td>제작편수</td><td>29</td><td>22</td><td>16</td><td>9</td><td>11</td><td>8</td><td>12</td><td>13</td><td>12</td><td>132</td></tr>
<tr><td>HD송출건수</td><td>29</td><td>22</td><td>16</td><td>9</td><td>11</td><td>8</td><td>12</td><td>13</td><td>12</td><td>132</td></tr>
<tr><td>UHD송출건수</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청자들이 UHD 방송을 향유할 수 있도록 KBS-EBS 양사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주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EBS의 UHD 송출실적이 전무한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UHD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EBS UHD 송출문제의 대안별 실효성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예산 투자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업 근거 보완 및 수행기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7131-303)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가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사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2024년에는 예산을 모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를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사업방식이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동일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선정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보완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7111-212)	시정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불법적 2인 의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회의 예산 삭감 취지에 몰각하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외상계약’의 일환인 미지급 방식으로 소송비를 지속 지출하는 문제가 있음 ○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권한의 형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국가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024~2025년 방통위가 ‘외상계약’으로 로펌에 지급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1억 450만원임 ○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송비로 당초 편성된 2억 3,500만원을 모두 소진하고 타 예산을 전용하여 총 5억 8,88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여 편성 예산의 2배가 넘는 소송비를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지적 및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방식으로 소송계약을 진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상 강요한 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것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자 징계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는 2024년에 예산액 3억 5,700만원 중 실집행이 1,200만원에 그쳤고, 사업을 중단하면서 나머지 예산 3억 4,500만원은 불용됨 - 동 사업은 2023년 1월에 주 사업수행주체인 (재)팩트체크넷이 해산하면서 2023년에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후 사업의 수행주체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것임 - 또한 동 사업은 2023년 하반기 방통위 감사 결과 수행과정에서의 간접보조사업자 부당 지정, 소유권 부당 이전, 보조금 부당집행, 정치 편향성 시정 미이행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기도 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명령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우려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며,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오히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책임이 큼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사업의 수행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이에 대해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방심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변상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주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의 국외출장을 통해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하여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약속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 간 명시적 협약은 없었으며, 면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문제가 있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음 - 류희림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예산 2,900만원이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성과 없는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발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의 성과관리 시 금지사항 적발 후 개선율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예산과 인력의 투입만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인터넷 불편광고 측정률(조사건수/조사목표건수 x 100)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금지사항 적발 시 위반사항 개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5">실적 및 목표치</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출처</th></tr>
<tr><th>구분</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3">인터넷
불편광고
측정률(%)</td><td>목표</td><td>120</td><td>300</td><td>350</td><td>350</td><td rowspan="3">(불편광고
측정건수/불
편광고
측정목표치)
*100</td><td rowspan="3">결과보고서</td></tr>
<tr><td>실적</td><td>120</td><td>300</td><td>350</td><td>350</td></tr>
<tr><td>달성도</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able>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관리 시 금지사항 적발 후 개선율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점검을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국외조사 예산의
필요성 재검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4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에 편성된 국외 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최근 5년간 매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됨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예산액</th><th>예산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r>
<tr><td>국외업무여비</td><td>8</td><td>-</td><td>5</td><td>-</td><td>5</td><td>-</td><td>5</td><td>-</td><td>5</td><td>-</td></tr>
</table>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의 국외 조사 예산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주의)</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매년 반복되는 부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 개선**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1)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유아·청소년·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프로그램 제작 편수가 계획과 현저히 차이가 남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1,109편을 제작 계획이었으나 664편 제작 - 청소년 프로그램: 824편 제작 계획이었으나 2,289편 제작 - 평생교육 프로그램: 600편 제작 계획이었으나 1,038편 제작 ○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프로그램별 제작 편수나 세부 단가 등의 기초정보조차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편수와 단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을 보다 면밀히 편성하고, 집행 결과를 국회에 상세하게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법령을 준수한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다음연도 계약 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7035-301)	주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 2024년 10월 24일 ‘2025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 1억 원 규모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을 공고함 - 해당 계약공고는 단독응찰로 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2월 9일 수의계약으로 2025년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금액 9,9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부합하지 않게,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2024. 12. 10. 국회 의결)임에도 2025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2024년 10월 24일 공고하고 12월 9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다음연도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신규사업 추진 시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성과지표 보완 및 운용사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등**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131-308)	시정, 주의,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콘텐츠전략펀드출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민간중심 펀드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첫해부터 펀드 규모가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변경되었고 2024년도 완료 예정이었던 1호 펀드도 2025년 말까지 순연되었으며, 2호 펀드 역시 아직 결성되지 않아 실제 투자는 2025년 4분기 이후에야 개시될 전망임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단순 모펀드 조성 여부에 치중해 규모 축소와 결성 지연에도 불구하고 달성도는 100%로 평가되는 한계가 있고, 본래 목적이던 IP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은 지표에서 배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절차를 고려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조성규모 달성도·투자실적(투자기업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등) 산출·결과지표를 보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사가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주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펀드 결성 및 투자에 대한 집행을 관리할 것(주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운용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펀드 운용기금이 매년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시정)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펀드사업의 단계별 집행 구조로의 전환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131-308)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정부예산 350억원이 일시에 투입되었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지급된 정부의 투자금이 장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펀드사업의 경우 모펀드에 이은 자펀드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민간에서의 자펀드 투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의 투자금은 처음부터 투자사에 납입이 되어 장기간 활용이 제한되어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펀드출자 사업의 정부 투자 선지급 관행에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 동 사업의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집행도 불가능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재정낭비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원자력안전위원회(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방사선안전 기본교육의 교육주체 명확화 및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원자력안전 위원회
		지적사항	○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의무를 원자력 관계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수행 기관을 안전재단으로 지정하고 있어 교육주체가 불명확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강료를 안전재단에 납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담금 성격으로 부적절함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납부한 수입은 안전재단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사업의 교육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명확화 하고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1402-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원자력안전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노선이 있는 공항·항만에 방사성물질 감시기를 설치해야 하나, 일부 공항항만은 예산 부족 및 기술적 제약으로 설치가 지연되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기준 방사성물질 감시기 설치 대상 18개 공항·항만에 152개의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인천공항과 7개 항만의 일부 지역에 감시기 설치가 미비하며, 특히 6개 항만은 기술적 제약 등으로 감시기 추가 설치가 어려움
※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소요) 현황(’ 24.12월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15">항만(15개)</th><th colspan="3">공항(3개)</th></tr>
<tr><th>경인</th><th>광양</th><th>군산</th><th>대산</th><th>동해묵호</th><th>마산</th><th>목포</th><th>부산</th><th>삼천포</th><th>울산</th><th>인천</th><th>장항</th><th>진해</th><th>평택당진</th><th>포항</th><th>인천</th><th>김포</th><th>김해</th></tr>
<tr><td>설치</td><td>2</td><td>9</td><td>11</td><td>2</td><td>4</td><td>1</td><td>3</td><td>44</td><td>1</td><td>7</td><td>29</td><td>1</td><td>1</td><td>9</td><td>3</td><td>22</td><td>2</td><td>1</td></tr>
<tr><td>설치 추진 중</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4</td><td></td><td>13</td><td></td><td></td></tr>
<tr><td>현재 설치난해</td><td></td><td>2</td><td></td><td></td><td></td><td>1</td><td></td><td>7</td><td></td><td>8</td><td>6</td><td></td><td></td><td></td><td>2</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현장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해외직구 물품이 많이 유입되는 인천국제공항부터 감시기를 설치하여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감시 공백부터 해소해 나갈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실적
저조 문제</td><td>관련사업명</td><td>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원자력안전기반조성(170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원자력안전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원전 비리 및 부패를 근절하려는 사업인데, 2024년 계획액 2,6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불용 사유는 제보 건수의 감소와 제보자의 익명 제보 선택 증가임. 제보 건수는 2020년 53건에서 2024년 21건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익명제보 건수는 2020년 3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급증하였음
※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건)
<table>
<tr><th>구 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제보건수(익명)</td><td>53건(3건)</td><td>47건(0건)</td><td>26건(4건)</td><td>22건(5건)</td><td>21건(12건)</td></tr>
<tr><td>포상금지급액(건수)</td><td>96(46건)</td><td>92(30건)</td><td>26(9건)</td><td>20(4건)</td><td>-</td></tr>
</table>
- 제보 건수 감소는 제도 홍보가 홈페이지·교육에만 국한되어 전문기관·정보시스템을 통한 안내가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익명성 보장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R&D 사업 종료과제의 조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R&D 사업 총괄	제도개선	원자력안전 위원회
		지적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상 R&D 과제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있으나, 2023년 종료과제는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 - 2025년 5월말 기준 2023년 종료 과제 26개(276억원)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정산 중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R&D 사업 중 정산이 지연된 2023년 종료과제의 조속한 정산을 이행하여 사용 잔액의 국고납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강력한 연구개발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일관성 있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통한 규제기관 신뢰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과징금(56-565)	제도개선	원자력안전 위원회
		지적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1 중 제1호에서 정한 감경 사유와 과징금 최고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과징금을 환급 및 재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적 부담 및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법률 대리인 비용(1,650만원) 등 직접적 비용이 발생하였음 ○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특성(동기, 피해정도, 반복성 등)을 반영하기에는 가중·감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과징금 부과 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과징금 부과의 감경·가중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파견 대상 공무원 지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재환경기반구축(1402-402)	주의, 제도개선	원자력안전 위원회
		지적사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3개의 중앙행정기관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이 중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13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파견하여야 함 -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대상 공무원 목록을 확인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평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로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할 것(주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방사능지휘센터에 각 부처 공무원의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에서 해당 부처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 파견 대상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고 해당 공무원을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제도개선	원자력안전 위원회
		지적사항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24년 결산 기준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이고,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하는 등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부(63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세입</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5%인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에 대하여 편성한 4억 2,900만원 중 1,000만원(2.3%)이 수납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징수
결정액</th><th>수납액
(B)</th><th>미수납액</th><th>불납
결손액</th><th>수납률
(B/A)</th></tr>
<tr><th></th><th>본예산</th><th>추경(A)</th><th></th><th></th><th></th><th></th><th></th></tr>
<tr><td>관유물대여료</td><td>429</td><td>429</td><td>45</td><td>45</td><td>-</td><td>-</td><td>10.5</td><td>396</td></tr>
<tr><td>토지대여료(51-511)</td><td>-</td><td>-</td><td>35</td><td>35</td><td>-</td><td>-</td><td>-</td><td>-</td></tr>
<tr><td>건물대여료(51-512)</td><td>429</td><td>429</td><td>10</td><td>10</td><td>-</td><td>-</td><td>2.3</td><td>396</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 핵문제 대처(113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된 반면, 집행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불용률은 28.5%로 매우 높음
- 2024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행정비용이 일부 감소했다고 하나, 장기간 누적된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결과임
- 조직 개편에 따라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구체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하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국민적 관심 유도 부족

[2024년도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북한 핵문제 대처</td><td>530</td><td>530</td><td>-</td><td>△25</td><td>505</td><td>361</td><td>-</td><td>144</td><td>476</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 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절차를 재정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는 한·몽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정무 분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집행률은 30.6%에 불과함

[2024년도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td><td>3,560</td><td>3,560</td><td>9</td><td>-</td><td>3,569</td><td>2,813</td><td>-</td><td>756</td><td>2,616</td></tr>
<tr><td>대몽골 외교역량 강화</td><td>121</td><td>121</td><td>-</td><td>-</td><td>121</td><td>37</td><td>-</td><td>84</td><td>121</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아시아 · 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과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17.1% 및 31.7%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함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전액 미집행하였고,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총 예산 8,200만원 중 국외여비 3,800만원을 타 사업에 지출하고도 1,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2024년도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 한-인도 카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td><td>2,688</td><td>2,688</td><td>21</td><td>△62</td><td>2,647</td><td>1,975</td><td>73</td><td>600</td><td>3,420</td></tr>
<tr><td>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td><td>82</td><td>82</td><td>-</td><td>△37</td><td>45</td><td>14</td><td>-</td><td>31</td><td>30</td></tr>
<tr><td>한-인도 카라반 사업</td><td>82</td><td>82</td><td>-</td><td>△38</td><td>44</td><td>26</td><td>-</td><td>18</td><td>82</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은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분절되어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단위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 관리의 기준이 되는바, 세부사업 내 구성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202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사업개요</th><th>편성액</th></tr>
<tr><td>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td><td>과거사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과 함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td><td>812</td></tr>
<tr><td>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td><td>일본 현지 공관 주도로 일본 사회 전반과의 접점을 확대해 우호적 여론 기반과 대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td><td>680</td></tr>
<tr><td>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td><td>서남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및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td><td>331</td></tr>
<tr><td>아프간 관련 국제협력</td><td>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국익과 경제안보 기반을 확대하려는 사업</td><td>37</td></tr>
<tr><td>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td><td>서남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교 다변화 및 양자관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td><td>82</td></tr>
<tr><td>한-인도 카라반 사업</td><td>인도 현지 우리 공관 주도로 인도 현지에서 양국 간 지역 차원의 관계 기반을 강화해 대인도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td><td>82</td></tr>
<tr><td>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td><td>한중일 3국 협력 및 아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td><td>113</td></tr>
<tr><td>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td><td>태평양도서국과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운영해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td><td>374</td></tr>
<tr><td>동아시아 협력포럼(신규)</td><td>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소다자 외교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332-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 특정 내내역사업들의 연례적 부진에 대해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내역사업들의 경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최근 5개년 집행부진 내내역사업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
<table>
<tr><th>사업명</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td><td>43.8</td><td>43.4</td><td>0</td><td>43.4</td><td>40.6</td></tr>
<tr><td>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td><td>1.2</td><td>33.3</td><td>203.6</td><td>15.5</td><td>9.2</td></tr>
<tr><td>민주주의 · 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td><td>0</td><td>0</td><td>55.2</td><td>31.0</td><td>59.3</td></tr>
<tr><td>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td><td>100</td><td>0</td><td>0</td><td>0</td><td>0</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
○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432-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 개황 원고 작성 및 검수 사례비 등 총 2억 5,0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함
- 동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개황책자 수요는 예측 가능했던바, 예산 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비고</th></tr>
<tr><td>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대금</td><td>192</td><td>42개국</td></tr>
<tr><td>개황 발간을 위한 원고작성 및 검수 관련 사례비</td><td>50</td><td>20개국</td></tr>
<tr><td>기타 개황 발간</td><td>9</td><td>앙골라, 에티오피아</td></tr>
<tr><td>합계</td><td>251</td><td></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사업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감사를 두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감사 공백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서가 누락되어 있음 - 재단의 「감사규정」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은 감사 공백 기간 동안 검사역 또한 임명하지 않은바, 결산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한 · 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은 총 4만원으로 초과근무 실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성 및 집행액임
-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공제를 피하기 위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데 기인하며, 특근매식비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 운영 왜곡을 초래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배정액 집행액]
(단위: 천원)
<table>
<tr><th colspan="2">2020</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h colspan="2">2024</th></tr>
<tr><th>배정액</th><th>집행액</th><th>배정액</th><th>집행액</th><th>배정액</th><th>집행액</th><th>배정액</th><th>집행액</th><th>배정액</th><th>집행액</th></tr>
<tr><td>1,000</td><td>152</td><td>1,000</td><td>702</td><td>1,000</td><td>829</td><td>2,000</td><td>1,109</td><td>40</td><td>40</td></tr>
</table>
자료: 한-아프리카재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국내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 :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아프리카재단의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사업의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산액 대비 53.6%, 38.5%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함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동창회원 등 대상자 관리 미흡, 콘텐츠 활용계획 부족, 낮은 대국민 접근성과 파급력, 홍보전략 부재 등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예산액
(A)</th><th colspan="2">예산결정 후 증감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차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예산액 대비
집행률(B/A)</th></tr>
<tr><th>전년이월</th><th>전용 등</th></tr>
<tr><td>2020</td><td>67</td><td>-</td><td>-</td><td>67</td><td>44</td><td>-</td><td>23</td><td>65.7</td></tr>
<tr><td>2021</td><td>67</td><td>-</td><td>-</td><td>107</td><td>99</td><td>-</td><td>8</td><td>147.8</td></tr>
<tr><td>2022</td><td>67</td><td>-</td><td>-</td><td>210</td><td>183</td><td>-</td><td>27</td><td>273.1</td></tr>
<tr><td>2023</td><td>67</td><td>-</td><td>-</td><td>67</td><td>36</td><td>-</td><td>31</td><td>53.7</td></tr>
<tr><td>2024</td><td>39</td><td>-</td><td>-</td><td>39</td><td>15</td><td>-</td><td>24</td><td>38.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1432-4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및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행사의 경우, 행사에 수반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등 필수 부대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하여 집행 시 행정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세목조정
(2024.1.24.)</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일반수용비
(210-01)</td><td>3.5</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관리용역비
(210-15)</td><td>관리용역비 미편성</td></tr>
<tr><td>세목조정
(2024.2.22.)</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일반수용비
(210-01)</td><td>61</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시설장비 유지비
(210-09)</td><td>시설장비유지비 미편성</td></tr>
<tr><td>세목조정
(2024.4.4.)</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일반수용비
(210-01)</td><td>15.3</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일반용역비
(210-14)</td><td>공관송금을 위한 일반용역비 미편성</td></tr>
<tr><td>세목조정
(2024.5.28.)</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일반수용비
(210-01)</td><td>26</td><td>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td><td>시설장비 유지비
(210-09)</td><td>시설장비유지비 사업배정잔액 부족</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한국 소재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2131-4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은 행정 경비에 비하여 활동성 경비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며, 부서별 집행률도 20%p 이상의 편차가 발생함

[2023 회계연도 연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A)</th><th>결산(B)</th><th>집행률(B/A)</th></tr>
<tr><td>연간 예산(Annual Budget)</td><td>4,111,864</td><td>3,523,879</td><td>85.7</td></tr>
<tr><td>활동(Activities)</td><td>1,278,832</td><td>1,049,870</td><td>82.1</td></tr>
<tr><td>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td><td>355,179</td><td>244,802</td><td>68.9</td></tr>
<tr><td>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td><td>315,087</td><td>251,731</td><td>79.9</td></tr>
<tr><td>Department of Socio-cultural Affairs</td><td>345,538</td><td>309,584</td><td>89.6</td></tr>
<tr><td>Department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td><td>263,028</td><td>243,754</td><td>92.7</td></tr>
<tr><td>행정(Administration)</td><td>2,833,032</td><td>2,474,009</td><td>87.3</td></tr>
<tr><td>인건비(Personnel Expense)</td><td>2,616,342</td><td>2,297,837</td><td>87.8</td></tr>
<tr><td>사무실 운영비(Office Management Cost)</td><td>216,690</td><td>176,171</td><td>81.3</td></tr>
</table>
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의 2023 회계연도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임
자료: 「FY2023 ANNUAL FINANCIAL REPORT」, TCS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한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한국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기관별 성과계약서를 도입하고, 분담금의 성과와 연동된 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2231-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임
- 회의·세미나 개최 횟수, 인력 운영 규모 등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53.1%임
❍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2025년도 역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024년도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사업명</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중점의제 성과 도출 관련 활동</td><td>610</td><td>540</td><td>88.5</td></tr>
<tr><td>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 제고 활동</td><td>364</td><td>185</td><td>50.8</td></tr>
<tr><td>안보리 이사국 간 업무체계 구축</td><td>62</td><td>76</td><td>122.6</td></tr>
<tr><td>안보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td><td>573</td><td>375</td><td>65.4</td></tr>
<tr><td>안보리 회의 참석 및 이사국·관련국·사무국과의 협의</td><td>189</td><td>74</td><td>39.2</td></tr>
<tr><td>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수임 지원 관련 연구</td><td>240</td><td>219</td><td>91.3</td></tr>
<tr><td>대국민 공공외교 및 안보리 수임 관련 홍보</td><td>9</td><td>9</td><td>100.0</td></tr>
<tr><td>합계</td><td>2,047</td><td>1,478</td><td>72.2</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부처간 면밀한 협의 및 사전 설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2331-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도록 각 부처에 각각 31억원씩 배정하였는데, 외교부는 당초 준비기획단 인건비로 책정된 9,300만원에 1억 1,1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집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책연구비 1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편성액</th><th>집행액</th></tr>
<tr><td>준비기획단 인건비</td><td>93</td><td>171</td></tr>
<tr><td>회의 물품 구입, 자료 제작, 자산 취득,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td><td>2,869</td><td>2,611</td></tr>
<tr><td>국내외 여비</td><td>30</td><td>28</td></tr>
<tr><td>오·만찬 및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td><td>20</td><td>20</td></tr>
<tr><td>정책연구비(의제·발굴 등)</td><td>100</td><td>-</td></tr>
<tr><td>총계</td><td>3,112</td><td>2,830</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실무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국별협력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사전검토 · 현지
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별협력사업(ODA)에서 수원국 법·제도 요건, 선행 절차 미이행, 선행사업 종료·사후관리 지연, 수원국 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 현지 정세 불안, 수원국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예시로,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은 법 개정 동향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해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이 발생했고, ‘케냐 아띠리버센터 사업’은 기본약정서 미체결로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였음

[2024년도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외교부 단계</th><th colspan="6">KOICA 단계</th></tr>
<tr><th>예산</th><th>미교부액</th><th>예산현액
(=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조정</th><th>예산
현액</th><th>실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773</td><td>-</td><td>773</td><td>-</td><td>△380</td><td>393</td><td>1</td><td>-</td><td>392</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케냐 청년 생산직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 강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외교부 단계</th><th colspan="6">KOICA 단계</th></tr>
<tr><th>예산</th><th>미교부액</th><th>예산현액
(=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조정</th><th>예산
현액</th><th>실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346</td><td>-</td><td>346</td><td>-</td><td>△346</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법·제도 요건 및 선행 절차, 현지 정세, 행정절차 소요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사업 일정에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4년간 종료된 94건의 국별협력사업 중 종료보고 기한(사업종료연도 다음 해 1월 말)을 준수한 사업은 48건이며 나머지 46건은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였음
❍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과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종료보고가 누락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되어 기간 도과 후 종료보고가 진행되었음

[2021~2024년 종료된 ODA 사업의 종료보고시점 현황]
(단위: 건)
<table>
<tr><th rowspan="2">종료
연도</th><th rowspan="2">합계
(A+B)</th><th rowspan="2">기한 내
보고</th><th colspan="3">기한 경과 후 보고</th></tr>
<tr><th>~1개월 경과</th><th>1~3개월 경과</th><th>3개월 이상 경과</th></tr>
<tr><td>2021</td><td>29</td><td>11</td><td>5</td><td>2</td><td>11</td></tr>
<tr><td>2022</td><td>16</td><td>7</td><td>4</td><td>3</td><td>2</td></tr>
<tr><td>2023</td><td>19</td><td>8</td><td>1</td><td>6</td><td>4</td></tr>
<tr><td>2024</td><td>30</td><td>22</td><td>4</td><td>4</td><td>-</td></tr>
<tr><td>합계</td><td>94</td><td>48</td><td>14</td><td>15</td><td>17</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종료연도의 ODA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7	**유상 ODA 인정액 제고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무상 ODA 인정액 비율을 37~43:63~57 수준으로 관리할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2년부터 양자 ODA 인정액 중 유상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보다 낮아지면서 목표 범위를 이탈하였음 - 차관 집행액의 절반 이하만 유상 ODA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업들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상 ODA 인정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미교부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2.6%임. 이와 같은 편차는 예산당국이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함
❍ 출연금 미교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미교부액</th></tr>
<tr><td>(단위사업)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td><td>227,516</td><td>-25,666</td></tr>
<tr><td>(단위사업)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td><td>274,957</td><td>-17,376</td></tr>
<tr><td>(단위사업) 중남미지역 국가원조</td><td>58,341</td><td>-887</td></tr>
<tr><td>(단위사업) 중동CIS지역 국가원조</td><td>132,574</td><td>-13,825</td></tr>
<tr><td>(단위사업) 글로벌 프로그램</td><td>313,652</td><td>-7,562</td></tr>
<tr><td>(단위사업) [사업비] 협력사업 지원</td><td>73,644</td><td>-4,222</td></tr>
<tr><td>(단위사업) 전략적 협력강화</td><td>8,000</td><td>-2,339</td></tr>
<tr><td>(단위사업)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출연금)</td><td>57,000</td><td>-1,635</td></tr>
<tr><td>(단위사업) [예비비] 협력사업 지원</td><td>1,330</td><td>-588</td></tr>
</table>
주)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하위 세부사업 중 미교부가 있는 세부사업의 예산액의 합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ODA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의 미교부를 최소화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출연금의 분기별 교부계획 수립 등 집행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집행현황에 따르면 71개의 신규 사업 중 33개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신규 국별 사업 중 집행액이 전무한 경우도 있음
❍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초년도에 협의의사록 미체결 및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등의 이유로 착수가 지연됨

[2024년 집행률이 0%인 신규 국별 협력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예산액</th></tr>
<tr><td>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24-'29/350만불)</td><td>989</td></tr>
<tr><td>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24-'28/1,470만불)</td><td>347</td></tr>
<tr><td>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24-'27/500만불)</td><td>347</td></tr>
<tr><td>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24-'28/550만불)</td><td>347</td></tr>
<tr><td>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td><td>347</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당해 연도 내 집행 완료가 원칙이나, 2023~2024년 동안 사업에 착수한 연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단년도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 사례가 반복되어, 사업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저해하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림

[2021~2024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5">외교부</td><td>예산</td><td>10,000</td><td>11,500</td><td>78,000</td><td>23,006</td></tr>
<tr><td>전년도 이월액</td><td>289</td><td>-</td><td>279</td><td>14,545</td></tr>
<tr><td>전용조정</td><td>△19</td><td>△224</td><td>1,460</td><td>1,400</td></tr>
<tr><td>미교부</td><td>-</td><td>-</td><td>2,380</td><td>1,144</td></tr>
<tr><td>예산현액(=교부액)</td><td>10,270</td><td>11,276</td><td>77,358</td><td>37,807</td></tr>
<tr><td rowspan="3">KOICA</td><td>실집행액</td><td>9,789</td><td>10,463</td><td>57,428</td><td>32,464</td></tr>
<tr><td>다음연도 이월액</td><td>-</td><td>279</td><td>14,545</td><td>3,315</td></tr>
<tr><td>불용액</td><td>481</td><td>534</td><td>5,384</td><td>2,027</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액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 일정 및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수원국 협의 지연, 사업 설계 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에서 개별 사업의 취소가 연쇄적으로 패키지 내 다른 사업 취소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수원국 현지의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패키지 내의 타 사업인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취소되어 패키지 전체의 전망이 불확실함 ○ 여러 ODA 사업을 패키지로 결합할 경우, 특정 사업의 집행 부진이 같은 패키지 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패키지 전체의 성과 저해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ODA 사업 패키지의 사전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베트남(ODA)(24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법·제도 요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수원국 토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부동산 가격산정 모델 및 가격정보 종합시스템’ 직접 구축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ODA 사업의 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법·제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3</td><td rowspan="3">인도네시아 ODA 사업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제반 사항 면밀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네시아(ODA)(2431-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현지 시공업체 현지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추후 MOOC 시스템 적용 및 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 중임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 MOOC 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와 스마트 교실 및 스튜디오 기자재 지원 사업
[2024년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외교부 단계</th><th colspan="6">KOICA 단계</th></tr>
<tr><th>예산</th><th>미교부액</th><th>예산현액
(=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조정</th><th>예산
현액</th><th>실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3,650</td><td>2,254</td><td>1,396</td><td>-</td><td>△330</td><td>1,066</td><td>474</td><td>-</td><td>592</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선행사업 종료 보고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 한 후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아시아 지역
ODA 사업
집행률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ODA)(2431-4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인도의 경우 2023년도 42%, 2024년도 22.3%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D) 협의 단계에서 수원국의 비협조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2023~2024년도 인도(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
(B)</th><th>집행액
(C)</th><th>집행률
(C/A)</th><th>집행률
(C/B)</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3</td><td>987</td><td>987</td><td>-</td><td>△550</td><td>437</td><td>415</td><td>42.0</td><td>95.0</td><td>-</td><td>22</td></tr>
<tr><td>2024</td><td>853</td><td>853</td><td>-</td><td>△663</td><td>190</td><td>190</td><td>22.3</td><td>100.0</td><td>-</td><td>-</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인도 ODA 사업을 현지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실적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2435-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업현장에서의 수요와 파견 계획간의 불일치로 일부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저조하였음

[인원 파견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봉사단/해외개발인재 현황]
(단위: 명)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3">2022</th><th colspan="3">2023</th><th colspan="3">2024</th><th>2025</th></tr>
<tr><th>목표</th><th>실적</th><th>달성률</th><th>목표</th><th>실적</th><th>달성률</th><th>목표</th><th>실적</th><th>달성률</th><th>목표</th></tr>
<tr><td>월드프렌즈코리아
NIPA 자문단</td><td>77</td><td>32</td><td>41.6%</td><td>69</td><td>14</td><td>20.3%</td><td>69</td><td>29</td><td>42.0%</td><td>69</td></tr>
<tr><td>월드프렌즈코리아
과학기술지원단</td><td>34</td><td>5</td><td>14.7%</td><td>25</td><td>6</td><td>24.0%</td><td>25</td><td>12</td><td>48.0%</td><td>25</td></tr>
<tr><td>글로벌협력의료진</td><td>23</td><td>14</td><td>61.0%</td><td>22</td><td>13</td><td>59.0%</td><td>22</td><td>12</td><td>55.0%</td><td>22</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에 있어 개발국과 파견 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학위과정
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글로벌 연수(ODA)(2435-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학위연수의 운영에 있어 이월액의 발생 규모가 점점 늘어나 최근 3개년 누적액이 약 16억 6,3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취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집행임

[최근 3개년 학위연수의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천원)
<table>
<tr><th>구분</th><th>이월액(석사)</th><th>이월액(박사)</th><th>계</th></tr>
<tr><td>2022년</td><td>45,000</td><td>-</td><td>45,000</td></tr>
<tr><td>2023년</td><td>395,000</td><td>9,000</td><td>404,000</td></tr>
<tr><td>2024년</td><td>1,179,070</td><td>35,084</td><td>1,214,154</td></tr>
<tr><td>계</td><td>1,619,070</td><td>44,084</td><td>1,663,154</td></tr>
</tabl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전반적 점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2435-4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운영에 있어 2019년 이후 SEED3 진입 기업이 전무하여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CTS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ODA가 아닌 민간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갈 우려가 있음

[2024년 CTS 사업 운영 결과]
(단위: 백만원, 건)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2024</th><th>2025</th></tr>
<tr><th rowspan="2">예산</th><th rowspan="2">결산</th><th colspan="2">사업 건수</th><th rowspan="2">예산</th></tr>
<tr><th>신규</th><th>기존</th></tr>
<tr><td>Seed 1</td><td>2,465</td><td>2,850</td><td>10</td><td>12</td><td>2,480</td></tr>
<tr><td>Seed 2</td><td>2,022</td><td>2,200</td><td>5</td><td>8</td><td>2,749</td></tr>
<tr><td>Seed 3</td><td>1,600</td><td>-</td><td>-</td><td>-</td><td>3,350</td></tr>
<tr><td>TIPS 연계형</td><td>-</td><td>-</td><td>3주)</td><td>-</td><td>-</td></tr>
<tr><td>합계</td><td>6,087</td><td>5,050</td><td>18</td><td>20</td><td>8,579</td></tr>
</table>
주) TIPS 연계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2025년 교부 예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TIPS 연계형의 사업공모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설정한 10대 분야와 동일함

○ CTS의 성과 측정방식은 당해연도 종료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 특성 상 연간 종료사업이 매우 적어 비현실적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CTS의 목적성을 재확립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외교부는 CTS 사업 예산안 편성·집행 시 SEED3 단계 예산을 타 단계로 전용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SEED3 예산을 SEED1, 2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담은 ‘단계 간 전용 관리지침’을 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약정금 교부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기구협력(ODA)(2435-4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제기구와 약정 체결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국제기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있음
- 특히 2024년 교부금 중 당해 연도 전혀 집행이 없는 사업도 있음
○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에 매년 추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중 실집행 부진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KOICA</th><th colspan="3">국제기구</th></tr>
<tr><th>2024년
교부액</th><th>교부시점</th><th>누적
교부액</th><th>누적
집행액</th><th>미집행
잔액</th></tr>
<tr><td>WHO 키리바시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사업('21-'25/600만달러)</td><td>727</td><td>2024.11.25.</td><td>6,225</td><td>2,555</td><td>3,670</td></tr>
<tr><td>UNICEF 에티오피아 분쟁 및 난민 지역 아동을 위한 복원력 강화, 평화 구축 및 아동보호 사업 ('21-'25/600만달러)</td><td>1,519</td><td>2024.6.17.</td><td>7,845</td><td>7,076</td><td>769</td></tr>
<tr><td>UN-HABITAT 이라크 지속가능한 귀환 촉진을 통한 평화 및 안정화 ('22-'25/600만달러)</td><td>1,354</td><td>2024.3.27.</td><td>7,954</td><td>6,343</td><td>1,611</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내부 미집행 잔액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일 사업의 약정금 교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신규 국제기구협력 사업 추진 시 약정서에 실집행 현황 보고 의무 및 집행 부진 시 교부금 조정 조항을 포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9</td><td rowspan="3">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략적 협력강화(ODA)(2437-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단순 물자지원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물자 및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연차점검과 종료평가의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전략사업비를 통한 사업 추진 내역(2024) 예시]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추진경위</th><th colspan="2">2024년도 예산</th><th rowspan="2">진행단계
(2025.6.)</th></tr>
<tr><th>배정액</th><th>집행액</th></tr>
<tr><td>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23-'24/125만불)</td><td rowspan="2">'23년 한-우 정상회담 계기 추진</td><td>1,463</td><td>1,227</td><td>종료</td></tr>
<tr><td>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 식수 지원 사업('23-'24/150만불)</td><td>1,683</td><td>1,344</td><td>종료</td></tr>
<tr><td>아이티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사업('23-'25/155만불)</td><td>'23년 한-아 총리 간 양자회담(CARICOM) 계기 추진</td><td>245</td><td>575</td><td>스쿨버스(26대) 지원완료</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예산 집행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사무국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이미 무기계약직 2인 고용 및 3억 5천만원 상당의 자회사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코웍스의 인력 또한 증원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용역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더욱이 KDRT 사무국 관련 코이카 현원이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음

[자회사 코웍스의 KDRT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집행액</th></tr>
<tr><td colspan="2">인건비</td><td>134</td></tr>
<tr><td rowspan="3">직접경비</td><td>교육훈련(예비대원 교육, 예방접종, 합동훈련)</td><td>71</td></tr>
<tr><td>장비(소모품비, 점검/유지보수, 차량임차 등)</td><td>50</td></tr>
<tr><td>계</td><td>121</td></tr>
<tr><td colspan="2">경상경비</td><td>71</td></tr>
<tr><td colspan="2">계(부가가치세 제외)</td><td>326</td></tr>
<tr><td colspan="2">총계(부가가치세 포함)</td><td>358</td></tr>
</tabl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조치
이행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인도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고 외교부가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상 공약 이행에 사용되고, KDRT 관련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이 수행됨

[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요구]
<table>
<tr><th>시정
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
상황</th></tr>
<tr><td>(15)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td><td>○ [지적사항] 인도적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인도적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td><td>제도
개선</td><td>○ 우리 정부는 2024년 2월 무상개발전략회의 계기 의결된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우리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 중임.
-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관리 강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서 기구 운영·활동에 대한 관여 확대 활성화 ▲현지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는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99%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함.
- 향후에도 우리 인도적지원 예산이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률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d>조치
완료</td></tr>
</table>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조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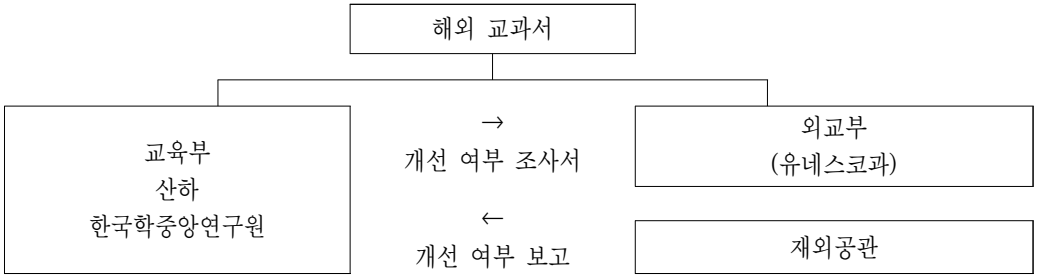
❍ 외교부는 국회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인도적지원 용역
다빈도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사무국 예산에서 KOICA 인도지원처 관련 홍보·연구·정산 용역 등 다수용역이 2024년에 집중하여 수행되었음
- KDRT 사무국 예산으로 인도지원처 전반 홍보 용역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및 범위를 일탈할 소지
❍ 용역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

[2024년 '사무국 운영' 사업의 용역 실시 현황]
(단위: 천원)
<table>
<tr><th>계약명</th><th colspan="2">계약기간</th><th>계약액</th></tr>
<tr><td>인도적지원 및 분쟁취약 지원사업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td><td>'24.7.16.</td><td>'24.12.15.</td><td>128,253</td></tr>
<tr><td>인도적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td><td>'24.7.18.</td><td>'24.12.31.</td><td>147,676</td></tr>
<tr><td>2024년 인도적지원 홍보 용역</td><td>'24.8.29.</td><td>'25.2.28.</td><td>320,036</td></tr>
<tr><td>우리나라의 인도적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td><td>'24.9.6.</td><td>'25.4.3.</td><td>287,060</td></tr>
<tr><td>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디자인 제작 용역</td><td>'24.9.25.</td><td>'24.10.18.</td><td>4,950</td></tr>
<tr><td>(장기계속)2024-2026 KOICA 인도지원처 회계정산 검토용역</td><td>'24.10.7.</td><td>'24.12.31.</td><td>35,497</td></tr>
<tr><td>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인쇄 용역</td><td>'24.11.7.</td><td>'24.11.19.</td><td>9,966</td></tr>
<tr><td>인도적지원 혁신제품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 컨설팅 용역</td><td>'24.11.8.</td><td>'25.3.31.</td><td>221,504</td></tr>
<tr><td>인도적지원 정보시스템 기본설계(ISMP) 용역</td><td>'24.11.14.</td><td>'25.3.31.</td><td>184,371</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관련 각종 용역 수행 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지난 11월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가입을 선언하며 연내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밝힘에 따라 동 사업에서 GAAHP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인도적지원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도적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 GAAHP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재난의 인도적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G20 정상회의라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님 ○ GAAHP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동 지원은 정상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긴급재난이나 만성재난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과 같이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사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외교부는 정상공약 이행 관련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
관련 체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서도 외교적인 시정 활동 및 시정결과 회신 등 협조가 미흡하였음

[해외 교과서 관련 오류정보 대응 업무 현황]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외국교과서 등 한국 관련 오류정보 배포·발견 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외 그 누구라도 간편하게 신고하고 오류에 대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간편 오류 신고 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재외공관은 일반수용비를 행사 내 식음료 구입, 차량 등 임차, 항공운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함

[유형별 공관 내 비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미불)
<table>
<tr><th>구분</th><th>식사비로 집행</th><th>임차료로 집행</th><th>항공운임으로 집행</th><th>합계</th></tr>
<tr><td>건수</td><td>26건</td><td>7건</td><td>1건</td><td>34건</td></tr>
<tr><td>액수</td><td>25,016.67</td><td>3,442.49</td><td>301.3</td><td>28,760.46</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 집행을 도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지원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대학교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무영사직 시험대비반의 운영 지원에 사용되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2023~2024년 B대학교의 외무영사직 시험준비반 지원 내역]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2023</th><th colspan="2">2024</th></tr>
<tr><td rowspan="3">B 대학교</td><td rowspan="2">영사외무직 시험대비반 활동지원</td><td rowspan="2">489만원</td><td>영사외무직 시험대비반 지원</td><td>495만원</td></tr>
<tr><td>영사외무직 시험대비반 교재 지원</td><td>153만원</td></tr>
<tr><td>합 계</td><td>489만원</td><td>합 계</td><td>648만원</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표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심사할 것
○ 외교부는 향후 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중간 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문가 심리상담의 횟수 제한,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고위험군 케어의 최대 연1회 제한 등 불만족이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남
○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임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3년간 실적]
(단위: 명)
<table>
<tr><th>구 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전문가 심리상담 케어</td><td>47(151회)</td><td>56(212회)</td><td>52(252회)</td></tr>
<tr><td>지역별 영사담당 회의 계기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td><td>49</td><td>116</td><td>44</td></tr>
<tr><td>고위험군 케어</td><td>267(91회)</td><td>155(69회)</td><td>221(95회)</td></tr>
<tr><td>공관 맞춤형 상담/강의 프로그램</td><td>-</td><td>-</td><td>74(10회)</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추후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교부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서비스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운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영사서비스 지원(2731-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의 집행률이 50% 안팎에 그치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됨
❍ 해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충원 지원 및 사업 추진 절차상 차질 등 반복으로 위기대응 체계의 실효성 저하 및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2024년도 재외국민 보호·영사서비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th><th>본예산</th><th>추경(A)</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재외국민 보호</td><td>15,510</td><td>15,510</td><td>28</td><td>△655</td><td>14,883</td><td>12,117</td><td>137</td><td>2,629</td><td>13,959</td></tr>
<tr><td>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td><td>3,662</td><td>3,662</td><td>-</td><td>△229</td><td>3,433</td><td>1,806</td><td>-</td><td>1,627</td><td>2,546</td></tr>
<tr><td>영사서비스 지원</td><td>234</td><td>234</td><td>13</td><td>455</td><td>702</td><td>594</td><td>-</td><td>108</td><td>720</td></tr>
<tr><td>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td><td>73</td><td>73</td><td>-</td><td>△8</td><td>65</td><td>33</td><td>-</td><td>32</td><td>73</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외교부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보강 및 해외안전망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영사콜센터 운영, 해외위기 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우선 집행 관리할 것
❍ 외교부는 불용액 발생 사유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한 사전경보제 및 부처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2931-65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3년부터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두 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여권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동일 기간 중 여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교육 효과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책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 - 교육과 평가 간 기능 분리가 미흡할 경우, 정책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실질적 환류(feedback)가 어려워 여권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 저하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데, 이를 위해 1년 동안 약 1억 5,000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됨

[경제안보 외교센터 조직 현황(현원 기준)]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인원</th><th>비고</th></tr>
<tr><td colspan="3">센터장</td><td>1명</td><td>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겸임</td></tr>
<tr><td rowspan="3">연구원</td><td rowspan="3">공무직</td><td>가급</td><td>2명</td><td></td></tr>
<tr><td>나급</td><td>6명</td><td></td></tr>
<tr><td>다급</td><td>1명</td><td></td></tr>
<tr><td>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td><td colspan="2">계약직</td><td>4명</td><td>미국,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td></tr>
<tr><td colspan="3">계</td><td>14명</td><td></td></tr>
</table>
주) 2025년 6월 말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
○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재외공관 경제안보 전문관 예산이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채용이 가능함
○ 인력 충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인 6명 중 일부만 채용된 상태임
- 2024년에는 미국(워싱턴),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각 1명씩 총 4명이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현황]
<table>
<tr><th>연번</th><th>이름</th><th>근무기간</th><th>공관명</th><th>학위</th></tr>
<tr><td>1</td><td>A</td><td>'25.04.28.-근무중</td><td rowspan="3">주미국(대)</td><td>국제학 학사</td></tr>
<tr><td>2</td><td>B</td><td>'24.01.08-'24.12.31</td><td>국제관계학 석사</td></tr>
<tr><td>3</td><td>C</td><td>'23.04.03-'23.10.30</td><td>정책학석사</td></tr>
<tr><td>4</td><td>D</td><td>'24.03.25-근무중</td><td rowspan="2">주애틀랜타(총)</td><td>공공정책 및 개발학 석사</td></tr>
<tr><td>5</td><td>E</td><td>'22.11.28-'23.11.27</td><td>국제안보학 석사</td></tr>
<tr><td>6</td><td>F</td><td>'23.09.01-근무중</td><td>주인도(대)</td><td>영문학 석사</td></tr>
<tr><td>7</td><td>G</td><td>'22.11.28-'23.11.27</td><td>주타이베이(표)</td><td>동아시아학과 석사</td></tr>
<tr><td>8</td><td>H</td><td>'24.01.01-근무중</td><td>주네덜란드(대)</td><td>국제관계학 석사</td></tr>
<tr><td>9</td><td>I</td><td>'22.11.24-'23.11.23</td><td>주베트남(대)</td><td>정치국제관계학 석사</td></tr>
</table>
주) 2025년 6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전문관 채용 관련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313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의 집행을 위해 20개의 다른 내내역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감액 규모가 50% 이상이었음

[2024년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td><td>9,806</td><td>9,806</td><td>-</td><td>1,380</td><td>11,186</td><td>10,386</td><td>-</td><td>800</td><td>2,698</td></tr>
<tr><td>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 협력 강화</td><td>4,819</td><td>4,819</td><td>-</td><td>2,481</td><td>7,300</td><td>7,053</td><td>-</td><td>247</td><td>271</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관행을 조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예산
실효성 확보</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3532-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주요국은 각자의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2024년 예산 불용률 40%로 제대로 된 전략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25년도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태 전략의 중요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4년도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인도-태평양 전략 이행</td><td>846</td><td>846</td><td>-</td><td>4</td><td>850</td><td>389</td><td>121</td><td>340</td><td>100</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계획·성과·현안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정보외교시대,
신속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3532-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정보기획국 신설('24.5.28.)에 따른 예산 집행 순연과 해외 싱크탱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률이 78.6%로 저조함
❍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4.6.) 후속조치인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발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기조변화 및 '24.12. 계엄으로 인하여 발간이 되지 않고 있음
[2024년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th><th>본예산</th><th>추경(A)</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외교정보 역량 선진화</td><td>1,000</td><td>1,000</td><td>-</td><td>5</td><td>1,005</td><td>786</td><td>54</td><td>165</td><td>1,390</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정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유한 외교정보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집행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외교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5</td><td rowspan="3">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4012-2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착지원금 지급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성격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이나 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본예산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
<tr><td>2020</td><td>1,727</td><td>△226</td><td>1,501</td><td>1,464</td><td>37</td></tr>
<tr><td>2021</td><td>1,871</td><td>-</td><td>1,871</td><td>1,485</td><td>386</td></tr>
<tr><td>2022</td><td>1,512</td><td>199</td><td>1,711</td><td>1,704</td><td>7</td></tr>
<tr><td>2023</td><td>1,671</td><td>177</td><td>1,848</td><td>1,841</td><td>6</td></tr>
<tr><td>2024</td><td>1,671</td><td>126</td><td>1,797</td><td>1,796</td><td>1</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정착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재외공관 행정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8.7년에 불과하여 퇴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석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소요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시적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근속년수 현황]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평균 근속년수</td><td>7.8년</td><td>8.7년</td><td>8.6년</td><td>8.6년</td><td>8.7년</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것
○ 외교부는 국가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수요 예측, 순환배치 실시 및 고도화, 결원보충을 위한 한시정원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공관 주요행사비(7033-4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1년부터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일부를 공관직원 교체여비 부족을 사유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매년 관행적으로 전용하여 사실상 교체여비의 일부로 집행해 왔음

[2021~2024년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아전용
등</th><th rowspan="2">예산현액
(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8,076</td><td>8,076</td><td>-</td><td>△479</td><td>7,597</td><td>4,851</td><td>60.1</td><td>63.9</td><td>-</td><td>2,746</td></tr>
<tr><td>2022</td><td>7,465</td><td>6,377</td><td>-</td><td>△260</td><td>6,117</td><td>6,003</td><td>94.1</td><td>98.1</td><td>-</td><td>114</td></tr>
<tr><td>2023</td><td>7,543</td><td>7,543</td><td>-</td><td>△500</td><td>7,043</td><td>6,770</td><td>89.8</td><td>96.1</td><td>-</td><td>273</td></tr>
<tr><td>2024</td><td>7,649</td><td>7,649</td><td>-</td><td>△382</td><td>7,267</td><td>6,894</td><td>90.1</td><td>94.9</td><td>-</td><td>37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를 적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승인한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청년인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인턴 80%와 단기 인턴 2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단기 인턴의 채용 규모가 59%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함
○ 단기 인턴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2024년도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td><td>1,802</td><td>1,802</td><td>-</td><td>△195</td><td>1,607</td><td>1,139</td><td>-</td><td>468</td><td>1,617</td></tr>
<tr><td>청년인턴 채용</td><td>1,454</td><td>1,454</td><td>-</td><td>-</td><td>1,454</td><td>1,009</td><td>-</td><td>445</td><td>1,294</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청년인턴 채용 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7033-4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인원의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부족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함

[2024년도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th><th>본예산</th><th>추경(A)</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td><td>2,303</td><td>2,303</td><td>-</td><td>984</td><td>3,287</td><td>2,914</td><td>-</td><td>373</td><td>2,188</td></tr>
<tr><td>재외공관장회의</td><td>1,553</td><td>1,553</td><td>-</td><td>984</td><td>2,537</td><td>2,460</td><td>-</td><td>77</td><td>1,528</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국제질병퇴치기금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2439-4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 500만불 대비 23.6%인 118만불만 이행되었음
- 이는 편성환율 대비 시장환율 급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외교부가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자 기금 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GAVI에 대한 지원이 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반영되지 못하였음
○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은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도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세사업 명</th><th colspan="3">원화 기준</th><th colspan="3">미화 기준</th></tr>
<tr><th>계획액
(A)</th><th>집행액
(B)</th><th>집행률
(B/A)</th><th>계획액
(C)</th><th>집행액
(D)</th><th>집행률
(D/C)</th></tr>
<tr><td>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td><td>6,505</td><td>6,505</td><td>100.0</td><td>500</td><td>469</td><td>93.8</td></tr>
<tr><td>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21-'25/3,000만불)</td><td>6,505</td><td>1,734</td><td>26.7</td><td>500</td><td>118</td><td>23.6</td></tr>
<tr><td>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활동</td><td>32,525</td><td>36,216</td><td>111.3</td><td>2,500</td><td>2,500</td><td>100.0</td></tr>
<tr><td>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사업</td><td>23,418</td><td>26,075</td><td>111.3</td><td>1,800</td><td>1,800</td><td>100.0</td></tr>
<tr><td>GPEI 소아마비퇴치활동</td><td>3,903</td><td>3,903</td><td>100.0</td><td>300</td><td>273</td><td>91.0</td></tr>
<tr><td>합 계</td><td>72,856</td><td>74,433</td><td>102.2</td><td>5,600</td><td>5,160</td><td>92.1</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당초 지원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미정산에 따른
지연가산금 발생</td><td>관련사업명</td><td>국제질병퇴치기금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2439-4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에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항공사에 대한 수수료인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기금 폐지를 위한 외교부의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2025년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함

[2020~2025년 징수위탁 수수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615</td><td>64</td><td>269</td><td>1,361</td><td>1,664</td><td>미편성</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이후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불 현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4년 구매</th><th>2025년 구매</th></tr>
<tr><th>2024년 이전 출국자</th><th colspan="2">2025년 이후 출국자</th></tr>
<tr><td>징수위탁 수수료 및 가산금</td><td colspan="2">2025년 징수한 금액에 대해 외교부가 부담</td><td rowspan="2">출국납부금 폐지</td></tr>
<tr><td>환불 여부</td><td>환불 ×(국고 납입)</td><td>환불 ❍</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사업 이관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징수위탁 수수료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속하게 지급할 것
❍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불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국별협력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 간의 차이가 큼
-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가 전체의 16.4%인데 반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는 전체의 82.9%임
○ 이는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의 자원배분 전략, 성과 달성도 등을 충분하게 점검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음

[2024년 예산·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현황]
(단위: 건)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0% 이상
40% 미만</th><th>40% 이상
60% 미만</th><th>60% 이상
80% 미만</th><th>80% 이상
100% 이하</th><th>100%
초과</th></tr>
<tr><td>예산 대비
실집행률</td><td>사업 수
(총 396건)</td><td>109[1)]
(27.5%)</td><td>38
(9.6%)</td><td>36
(9.1%)</td><td>65
(16.4%)</td><td>148
(37.4%)</td></tr>
<tr><td>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td><td>사업 수
(총 396건)</td><td>51[2)]
(12.9%)</td><td>7
(1.8%)</td><td>10
(2.5%)</td><td>24
(6.1%)</td><td>304
(76.8%)</td></tr>
</table>
주 1) 2024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이월액 또는 예산조정을 통한 증액으로 예산현액이 계상된 사업 포함
2) 2024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예산 조정을 통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ODA 현장의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차별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ODA)을 추진하면서 사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개별 사업간 예산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등의 관행에 대해 관련자 주의 조치와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주의)</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사업 착수 전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면밀 파악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타지키스탄(ODA)(2434-4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타지키스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KOICA 국가지원계획(CP)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1억 6,900만원 중 18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22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타지키스탄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24-’27/650만 달러)’ 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성과관리 체계 등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실집행액이 전무하며 협의의사록 체결이 미완료됨
[2024년도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외교부 단계</th><th colspan="6">KOICA 단계</th></tr>
<tr><th>예산</th><th>미교부액</th><th>예산현액
(=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조정</th><th>예산
현액</th><th>실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346</td><td>-</td><td>346</td><td>-</td><td>△346</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조사 단계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정세불안
수원국에 대한
ODA 집행관리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미얀마(ODA)(2431-413), 우크라이나(ODA)(2434-4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국제협력단의 미얀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수원국 현지의 정세불안으로 인하여 다른 수원국에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

[2024년도 미얀마·우크라이나 내 ODA 사업 실집행 실적 부진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외교부 단계</th><th colspan="6">KOICA 단계</th></tr>
<tr><th>예산</th><th>예산현액
(=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조정</th><th>예산
현액</th><th>실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td><td>200</td><td>200</td><td>-</td><td>△191</td><td>10</td><td>7</td><td>-</td><td>3</td></tr>
<tr><td>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td><td>600</td><td>600</td><td>-</td><td>△366</td><td>234</td><td>231</td><td>-</td><td>3</td></tr>
<tr><td>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UNDP)</td><td>50</td><td>50</td><td>-</td><td>△50</td><td>-</td><td>-</td><td>-</td><td>-</td></tr>
<tr><td>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td><td>50</td><td>50</td><td>-</td><td>△50</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사업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제도개선)
❍ 외교부는 미얀마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정세를 전면 재평가하고 사업의 존속 여부와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제도개선)
❍ 외교부는 수원국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 구조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사전 설계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를 위한 매체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② 정부기관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
(단위: 만원)
<table>
<tr><th>업체</th><th>정부광고 요청시점</th><th>광고기간</th><th>집행액</th></tr>
<tr><td>(가)</td><td rowspan="5">2024.11.6.</td><td>2024.8.1.~2024.9.11</td><td>6,086,918</td></tr>
<tr><td>(나)</td><td>2024.7.15.~2024.10.15.</td><td>14,850,000</td></tr>
<tr><td>(다)</td><td>2024.8.17.~2024.8.31.</td><td>1,452,000</td></tr>
<tr><td>(라)</td><td>2024.8.17.~2024.8.31.</td><td>2,420,000</td></tr>
<tr><td>(마)</td><td>2024.8.17.~2024.8.31.</td><td>5,500,000</td></tr>
<tr><td colspan="3">합계</td><td>30,308,918</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용역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절차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마련과 기획조정실 소관 운영 기본경비 마련을 위한 것임
- 국외여비로 당초 예산을 초과한 148억 4,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의 28.4%인 32억 8,9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과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 매년 관련 예산이 실집행액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됨
[2024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기관운영 기본경비</td><td>22,303</td><td>22,303</td><td>132</td><td>1,495</td><td>23,929</td><td>23,186</td><td>209</td><td>534</td><td>27,266</td></tr>
<tr><td>국외업무여비</td><td>11,585</td><td>11,585</td><td>-</td><td>3,289</td><td>14,874</td><td>14,847</td><td>-</td><td>27</td><td>15,977</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7</td><td rowspan="3">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기금운용계획
일관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국제교류기금 - 법정부담금(12-59-593): 국제교류기여금</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여금 수입 감소와 적립금 급감이라는 재정 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2024년도에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구조조정 또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에 따른 것임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허용됨을 감안할 때, 재단은 기금운용계획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설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table>
<tr><th>연번</th><th>변경 보고 사유</th><th>변경보고일</th></tr>
<tr><td>1</td><td>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td><td>5.29.</td></tr>
<tr><td>2</td><td>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td><td>8.27.</td></tr>
<tr><td>3</td><td>민간출연금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관련된 수입 및 지출액 변경</td><td>11.19.</td></tr>
<tr><td>4</td><td>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td><td>12.13.</td></tr>
<tr><td>5</td><td>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td><td>12.23.</td></tr>
</table>
자료: 국제교류재단 제출공문을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중장기 재전건전성을 확보하여 기금 고갈에 대비하도록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은 한일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협력 및 인적교류·경제 등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에 따른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투명함
- 당초 2022년 한·일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 아래 개최하기로 계획했던 1차 포럼도 순연되어 2024년 5월에 개최되는 등 2025년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 과정이 계획 대비 지연·축소된 면이 있음
- 또한 2025년 추진계획도 당초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신협력비전 제시’에서 ‘연내 추진 검토’ 및 ‘향후 한일관계발전 방향 제시’로 수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이 목표한 시점에 도출되지 못할 우려 존재

[2022~2024년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3">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h colspan="4">2025년(4월말 기준)</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r>
<tr><td>한·일 신협력비전</td><td>260</td><td>40</td><td>260</td><td>129</td><td>17</td><td>200</td><td>152</td><td>-</td><td>150</td><td>-</td><td>150</td><td>41</td></tr>
<tr><td>(집행률)</td><td colspan="2">(15.4%)</td><td colspan="3">(49.6%)</td><td colspan="3">(76.0%)</td><td colspan="4">(27.3%)</td></tr>
</table>
자료: 외교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는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다른 부처와 공동 사업 추진 시 계약당사자 및 예산 소관 일치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2331-402)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국방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고위급회의’와 관련한 일반용역 계약에서 외교부만이 계약당사자임에도 국방부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24년에 종료된 광고의 정산대금 2,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이는 2024년 11월에 광고사업이 원활히 종료되었음에도 대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다른 부처와 공동진행 사업에서 계약당사자와 예산의 소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외교부는 업무수행 시 연내 집행금액을 면밀하게 살펴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 및 유엔
중앙
긴급대응기금
(CERF)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자·장비지원·현금지원 등을 하는 사업임
❍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대한 국제부담금 납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제외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하여 외교부 소관의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교부는 2024년에 내역사업 해외긴급구호에서 CERF와 OCHA에 총 312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2024년도 해외긴급구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인도적지원(ODA)</td><td>740,111</td><td>740,111</td><td>-</td><td>-</td><td>740,111</td><td>740,079</td><td>-</td><td>32</td><td>677,503</td></tr>
<tr><td>해외긴급구호</td><td>734,624</td><td>734,624</td><td>-</td><td>-</td><td>734,624</td><td>734,600</td><td>-</td><td>24</td><td>670,016</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대한 분담금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내내역사업인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의 수행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2024년도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재외국민 보호</td><td>15,510</td><td>15,510</td><td>28</td><td>△655</td><td>14,883</td><td>12,117</td><td>137</td><td>2,629</td><td>13,959</td></tr>
<tr><td>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td><td>4,516</td><td>4,516</td><td>-</td><td>-</td><td>4,516</td><td>3,884</td><td>-</td><td>631</td><td>4,216</td></tr>
<tr><td>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td><td>180</td><td>180</td><td>-</td><td>-</td><td>180</td><td>180</td><td>-</td><td>-</td><td>180</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학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의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타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은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사업과 기능 및 대상 측면에서 중복되는 성격을 가짐
○ 두 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는 모두 민원상담과 사건사고 대응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큼
[외교부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및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사업목적 및 내용]
<table>
<tr><th>구분</th><th>사업목적 및 내용</th></tr>
<tr><td>외교부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td><td>「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바탕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이행
-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서비스 제공</td></tr>
<tr><td>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td><td>전세계 700만 재외동포 대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를 위한 무중단 다국어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 신설 재외동포청 민원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전 세계의 700만 재외동포 민원안내 및 초동 대응 수행
-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업무수행 개시(예비비 편성)</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의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기능·명칭이 유사해 국민들의 혼동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 신고 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외동포청의 365 민원콜센터와 명확히 차별화해 나갈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계약기간 조정을
통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2931-6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외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외교부는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지 않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이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table>
<tr><th>계약명</th><th>계약기간</th><th>계약금액</th><th>계약상대자</th><th>계약방법</th></tr>
<tr><td>2022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td><td>2022.4.6.
~ 2023.4.6.</td><td>124,300,000</td><td>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td><td>일반경쟁
→ 수의*</td></tr>
<tr><td>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td><td>2023.4.7.
~ 2024.4.6.</td><td>127,600,000</td><td>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td><td>일반경쟁
→ 수의*</td></tr>
<tr><td>2024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td><td>2024.4.8.
~ 2025.4.8.</td><td>126,632,000</td><td>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td><td>일반경쟁
→ 수의*</td></tr>
</table>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2022년 이후 내역사업 여권품질 및 서비스개선 이월액]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B)</th><th rowspan="2">이·전용
등(C)</th><th rowspan="2">예산현액
(A+B+C)</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 rowspan="3">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td><td>2022년</td><td>543</td><td>543</td><td>62</td><td>-</td><td>605</td><td>418</td><td>62</td><td>125</td></tr>
<tr><td>2023년</td><td>578</td><td>578</td><td>62</td><td>-</td><td>640</td><td>399</td><td>64</td><td>178</td></tr>
<tr><td>2024년</td><td>782</td><td>782</td><td>64</td><td>-</td><td>846</td><td>846</td><td>63</td><td>-</td></tr>
</table>
주) 다음연도 이월액 =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금액의 50%
= 선금 50%를 제외한 완수금으로 계약완수 시 지급</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외교부는 향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연례적 사고이월을 해소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td></tr>
</table>

2. 통일부(40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사항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를 6개(75%)임 ○ 특히,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는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통일부와 유사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임무로 하면서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체계를 가진 외교부는 전체 15개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과 평가방식을 재설계하고, 사업 내용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재검토할 것		
2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7개 세부사업 공통 (2133-306, 2135-306, 2137-301, 5031-308, 5031-309, 2040-401, 3041-405)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보조금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통일부 소관의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검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단체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단체별 회계검사 지출액과 보조금 교부액 대비 비율도 편차가 있는 바, 이는 연초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 명확한 지침이 없이 통보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검사 비용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수납률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세입</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200만원 등 총 11건 1,120만원이며, 이 가운데 9건 97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1~2024년 과태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
증감액</th><th>예산
현액</th><th>징수결정액
(B)</th><th>수납액
(C)</th><th>수납률
(C/A)</th><th>수납률
(C/B)</th><th rowspan="2">미수납액</th><th>불납
결손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10</td><td>10</td><td>-</td><td>10</td><td>46</td><td>38</td><td>380.0</td><td>82.6</td><td>8</td><td>-</td></tr>
<tr><td>2022</td><td>10</td><td>10</td><td>-</td><td>10</td><td>8</td><td>6</td><td>60.0</td><td>75.0</td><td>2</td><td>-</td></tr>
<tr><td>2023</td><td>10</td><td>10</td><td>-</td><td>10</td><td>10</td><td>4</td><td>40.0</td><td>40.0</td><td>6</td><td>-</td></tr>
<tr><td>2024</td><td>10</td><td>10</td><td>-</td><td>10</td><td>11</td><td>1</td><td>10.0</td><td>9.1</td><td>10</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신년 특별좌담회’ 등 분할 수의계약 집행 추진 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1억 5,900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1억 3,300만원이 총 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
❍ 통일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집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 특히,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용역)를 추진하면서, 단일 행사임에도 무대환경 조성과 행사대행을 각각 2,2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데, 단일 목적의 행사는 ‘분할계약금지’ 원칙에 따라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이 타당하고, 인위적 분리계약은 경쟁입찰의 회피 또는 수의계약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계약명</th><th>발주금액</th><th>계약금액</th><th>계약기간</th><th>계약유형</th></tr>
<tr><td>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특별좌담회 행사 대행</td><td>22</td><td>22</td><td>’24.2.~’24.2.</td><td>수의</td></tr>
<tr><td>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무대 환경 조성</td><td>22</td><td>22</td><td>’24.2.~’24.2.</td><td>수의</td></tr>
<tr><td>’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캠프 행사 대행</td><td>49</td><td>49</td><td>’24.5.~’24.7.</td><td>수의</td></tr>
<tr><td>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연례 국제학술회의 세션 운영</td><td>10</td><td>10</td><td>’24.7.~’24.8.</td><td>수의</td></tr>
<tr><td>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세션 운영</td><td>10</td><td>10</td><td>’24.8.~’24.9.</td><td>수의</td></tr>
<tr><td>통일부-대한변협 공동학술세미나 관리,운영</td><td>20</td><td>20</td><td>’24.11.~’24.12.</td><td>수의</td></tr>
<tr><td>계</td><td>133</td><td>133</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통일부는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 등 계약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는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수용비,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한 실정임. 또한,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구분</th><th>산출내역</th><th>집행액</th><th>세부 집행 내역</th></tr>
<tr><td rowspan="9">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td><td>인건비</td><td>책임연구원 등</td><td>24</td><td>책임연구원 등 인건비</td></tr>
<tr><td rowspan="7">경비</td><td>수용비</td><td>17</td><td rowspan="7">조사수행비(한국갤럽)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사례비, 통역, 임차료, 다과비 등)
보고서 발간 및 인쇄비
출장비
자문사례비 등</td></tr>
<tr><td>사업인건비</td><td>5</td></tr>
<tr><td>임차료</td><td>5</td></tr>
<tr><td>여비</td><td>4</td></tr>
<tr><td>자문사례비 등</td><td>15</td></tr>
<tr><td>회의비</td><td>9</td></tr>
<tr><td>조사비</td><td>175</td></tr>
<tr><td>일반관리비</td><td>일반관리비</td><td>11</td><td>(인건비+경비)의 6% 이내</td></tr>
<tr><td colspan="3">합계</td><td>266</td><td></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5.16 및 유신 독재 정당화 연구용역에 긍정 평가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중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5.16,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적절'로 평가함 ○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정책연구 평가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합당하게 평가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세목별 초과집행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집행률은 90.9%로 양호한 편이나, 세부 항목별로 초과집행 또는 불용이 반복됨. 세부적으로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집행률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118.2%) 등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반면,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50.0%),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40.0%) 등은 집행이 저조하여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함
○ 주요 세목별로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또는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연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 집행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화체계 추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사업내용</th><th>예산계획</th><th>집행실적</th><th>집행률</th></tr>
<tr><td>1.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td><td>425</td><td>389</td><td>91.5</td></tr>
<tr><td>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td><td>259</td><td>221</td><td>85.3</td></tr>
<tr><td>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td><td>93</td><td>109</td><td>117.2</td></tr>
<tr><td>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 등</td><td>33</td><td>39</td><td>118.2</td></tr>
<tr><td>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td><td>40</td><td>20</td><td>50.0</td></tr>
<tr><td>2. 통일·통합 준비 및 공론화</td><td>164</td><td>164</td><td>100.0</td></tr>
<tr><td>3.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td><td>80</td><td>77</td><td>96.3</td></tr>
<tr><td>4.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td><td>30</td><td>12</td><td>40.0</td></tr>
<tr><td>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td><td>300</td><td>266</td><td>88.7</td></tr>
<tr><td>계</td><td>999</td><td>908</td><td>90.9</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4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2회, 위원장단 회의 5회,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각 분과위원회별 3회 등을 개최하고, 회의비로 총 6,459만원을 집행함 ○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8.15 통일독트린' 내 정책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행사 참여자 수, 언론보도 분석, 정책 전후의 여론 변화 등을 종합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것 ○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사업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통일부 내 운영중인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됨 ※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분과, 인권인도분과, 정보분석분과, 통일협력분과, 남북관계관리분과, 통일교육분과 등으로 구성·운영 중 ○ 국회 협의 및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8.15 통일독트린)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바,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책자문위와 중복되고 의미있는 통일담론 마련에 실패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시정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9억 4,000만원 집행)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장관이 주재하는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간담회를 추진함 ○ ‘수요포럼’(조찬모임)과 ‘통일이 있는 저녁’(만찬모임)은 집행방식에 차이(조찬모임 총 14차례 중 11차례에서 사례비가 지급되었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호텔에서 개최되어 임차료가 별도 집행된 반면, 만찬모임 총 13차례 중 한 차례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임차료는 대부분 집행되지 아니함)가 있어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도 미흡하였음 ○ 동 위원회가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만이 참석·주재하였음에도 그 경비를 위원회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것 ○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집행률은 85.2%이지만,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됨 ○ 통일부는 12월 중순경 유튜브·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책광고 송출’에 2억원을, 12월 11일과 12일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3,300만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 정책 광고 송출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연도말 추진을 계획한 것은 소극적 집행관리로 해석될 수 있는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사업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변수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세부사업은 국제회의, 포럼,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입찰 시 단독 응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일반용역비(210-14) 집행에서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관에 용역이 집중되는 결과가 반복되었는 바, 이러한 계약방식은 실질적인 경쟁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연구생태계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통일부는 과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반복적 단독 응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단독 응찰 시 과업 분할 발주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사업내용</th><th>예산액</th><th>계약액</th><th>수의계약 사유</th></tr>
<tr><td>2024 한반도국제포럼(GKF) 대행기관 선정</td><td>788</td><td>771</td><td>○○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td></tr>
<tr><td>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td><td>65</td><td>64</td><td>○○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td></tr>
<tr><td>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td><td>125</td><td>117</td><td>○○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td></tr>
<tr><td>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td><td>70</td><td>64</td><td>(사)××××연구원 단독 응찰</td></tr>
<tr><td>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운영</td><td>176
(528)</td><td>173
(518)</td><td>(재)□□□□연구원 단독 응찰
(3년 장기계약)주)</td></tr>
</table>
주) 장기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장비·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분류되어 장기계약 형태로 체결·운영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수의계약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건립 계획보다 시공사의 선정이 13개월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2024년 공사비(37억 7,600만원)와 감리비(3억 7,300만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3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는 통일부가 건립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2024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td><td>8,828</td><td>8,828</td><td>-</td><td>±0.2</td><td>8,828</td><td>5,664</td><td>3,160</td><td>4</td><td>12,937</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소요 파악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영상 9편(인트로 제외)을 제작하여 2025년 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하였고, 8월 현재, 9개 영상(인트로 제외)의 평균 조회수는 41회에 불과함 ○ 최초 공개된 1강에서 강연자(이○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2024년 7월, TV조선 보도로 확산된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사례를 언급하였음 ※ 이 사례는 통일부가 공식입장을 통해 ‘진위 확인 불가’로 밝힘 ○ 또한 당초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정해 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완전 중단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소요 파악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영상 등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집행률은 88.6%이지만, 탈북민 실태조사 등 8개 내내역사업별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액 미집행됨
❍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의 경우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편성한 3,4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집행률 38.2%)함. 특히, 일반수용비 1,600만원 중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집행이 260만원에 불과하였음
❍ 국외여비도 동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585만원,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반복되는 사업 미집행과 이로 인한 불용은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세사업명</th><th>사업내용</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 rowspan="9">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td><td>탈북민 실태조사(답례품, 여비, 연구용역 등)</td><td>90</td><td>66</td><td>73.3</td></tr>
<tr><td>분야별 인권실태 평가(회의 준비, 평가회의 등)</td><td>6</td><td>3</td><td>50.0</td></tr>
<tr><td>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연구용역 등)</td><td>23</td><td>5</td><td>21.7</td></tr>
<tr><td>유관기관 업무협의(준비물품, 장소임차, 간담회 등)</td><td>8</td><td>2</td><td>25.0</td></tr>
<tr><td>자문단 운영(자문 사례비, 간담회 등)</td><td>14</td><td>3</td><td>21.4</td></tr>
<tr><td>지원인원 인건비(보수, 4대보험 등)</td><td>118</td><td>108</td><td>91.5</td></tr>
<tr><td>심층조사 및 연구(연구용역)</td><td>15</td><td>-</td><td>-</td></tr>
<tr><td>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td><td>338</td><td>355</td><td>105.0</td></tr>
<tr><td>소 계</td><td>612</td><td>542</td><td>88.6</td></tr>
<tr><td colspan="2">정보수집 및 문헌조사</td><td>34</td><td>13</td><td>38.2</td></tr>
<tr><td colspan="2">조사결과 활용</td><td>214</td><td>284</td><td>132.7</td></tr>
<tr><td colspan="2">합 계</td><td>860</td><td>839</td><td>97.6</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된 출연금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2021~2025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현액
(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2</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3</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4</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5</td><td>475</td><td>475</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인도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에 필요한 사례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2024.11.)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정한 정책자문 및 협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800만원에 불과함
○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본래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기관의 경상적 경비(법무대응 경비)를 정책개발 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 사용 원칙을 약화시킨 선례가 되었음
○ 향후에는 불가피한 소송 대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대응 경비 등 해당 목적으로 편성·운영되는 예산비목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봄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세사업명</th><th>사업내용</th><th>예산(편성)액</th><th>집행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8">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td><td>자문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td><td>10</td><td>3</td><td>전문가 자문</td></tr>
<tr><td>자료번역비 등</td><td>5</td><td>-</td><td></td></tr>
<tr><td>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td><td>1</td><td>-</td><td></td></tr>
<tr><td>전문가 간담회</td><td>3</td><td>3</td><td></td></tr>
<tr><td>유관기관 간담회</td><td>3</td><td>2</td><td></td></tr>
<tr><td>기타 사업 관리</td><td>-</td><td>11</td><td></td></tr>
<tr><td>계</td><td>22</td><td>19</td><td></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집행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됨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2,200만원 계획 대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1억 4,200만원 계획대비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3%)되어 실적이 저조함
❍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국외출장 경비를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부 자체평가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임

[2024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td><td>164</td><td>164</td><td>-</td><td>△10.2</td><td>153.8</td><td>79</td><td>-</td><td>74.8</td><td>131</td></tr>
<tr><td>인도지원 정책개발</td><td>22</td><td>22</td><td>-</td><td>△0.2</td><td>21.8</td><td>19</td><td>-</td><td>2.8</td><td>27</td></tr>
<tr><td>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td><td>142</td><td>142</td><td>-</td><td>△10</td><td>132</td><td>60</td><td>-</td><td>72</td><td>114</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통일부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민화협, 민통 등 국고보조금 지정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민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적 통일운동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민족통일협의회(민통)을 통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나, 2024년부터 전(全) 민간단체 대상 공모로 지원방식이 변경됨 ○ 2023년까지 민화협과 민통에 지원되는 금액은 8억 9,700만원이었으나, 지원단체가 2024년 6곳, 2025년 8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민화협, 민통)에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기념관
운영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을 보면 세목조정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초과집행되었음

[2024년도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 rowspan="2">세목조정
(2024.10.23.)</td><td rowspan="2">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 rowspan="2">210-02</td><td rowspan="2">29</td><td rowspan="2">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1</td><td>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00만원)</td></tr>
<tr><td>210-09</td><td>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td></tr>
<tr><td>세목조정
(2024.12.5.)</td><td>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2</td><td>3</td><td>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9</td><td>노후 차량 수리
(300만원)</td></tr>
</table>
자료: 통일부

○ 최근 3년간, 기념관의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항목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항목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공요금에서의 세목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서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p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p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정착금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예산과목</th><th colspan="3">2022년</th><th colspan="3">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r>
<tr><th>프로그램
(사업코드)</th><th>단위사업
(사업코드)</th><th>본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본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본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 rowspan="4">정착금
지급
(6)</td><td>합계</td><td>13,385</td><td>13,319</td><td>99.5</td><td>13,385</td><td>11,184</td><td>83.6</td><td>11,809</td><td>8,546</td><td>72.4</td></tr>
<tr><td>가산금
(6-1)</td><td>522</td><td>548</td><td>105.0</td><td>522</td><td>417</td><td>79.9</td><td>440</td><td>346</td><td>78.6</td></tr>
<tr><td>교육지원금
(6-2)</td><td>4,516</td><td>5,112</td><td>113.2</td><td>4,516</td><td>4,715</td><td>104.4</td><td>4,984</td><td>4,366</td><td>87.6</td></tr>
<tr><td>정착자산형성
(6-3)</td><td>8,347</td><td>7,659</td><td>91.8</td><td>8,347</td><td>6,052</td><td>72.5</td><td>6,385</td><td>3,834</td><td>60.0</td></tr>
</table>
자료: 남북하나재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p 감소하고, 실업률이 1.8%p 증가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한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경제활동참가율</th><th colspan="3">고용률</th><th colspan="3">실업률</th></tr>
<tr><th>2023</th><th>2024</th><th>증감(%p)</th><th>2023</th><th>2024</th><th>증감(%p)</th><th>2023</th><th>2024</th><th>증감(%p)</th></tr>
<tr><td>전체</td><td>63.4</td><td>64.1</td><td>0.7</td><td>60.5</td><td>60.1</td><td>△0.4</td><td>4.5</td><td>6.3</td><td>1.8</td></tr>
<tr><td>남성</td><td>74.6</td><td>76.6</td><td>2.0</td><td>72.3</td><td>74.3</td><td>2.0</td><td>3.1</td><td>3.0</td><td>△0.1</td></tr>
<tr><td>여성</td><td>59.7</td><td>60.0</td><td>0.3</td><td>56.6</td><td>55.4</td><td>△1.2</td><td>5.1</td><td>7.7</td><td>2.6</td></tr>
</table>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대책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취업·창업 대책 및 생계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3</td><td rowspan="3">남북하나재단
운영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 분석
후 예산 편성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결산잉여금 규모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은 2022년 28억 600만원 대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음
○ 이는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비례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3년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비중)</th></tr>
<tr><td>예산집행 잔액</td><td>1,588</td><td>2,198</td><td>3,201(76.1)</td></tr>
<tr><td>출연금 환입</td><td>701</td><td>552</td><td>594(14.1)</td></tr>
<tr><td>이자수익</td><td>201</td><td>302</td><td>385(9.2)</td></tr>
<tr><td>기타</td><td>316</td><td>15</td><td>26(0.6)</td></tr>
<tr><td>합계</td><td>2,806</td><td>3,067</td><td>4,206(100.0)</td></tr>
</table>
자료: 남북하나재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또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말 정부출연금 교부 시 그 집행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교육 및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런데 2024년도 하나원의 전기요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누적 약 6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세목조정</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비고</th></tr>
<tr><td>2020</td><td>871</td><td>-</td><td>871</td><td>718</td><td>153</td><td></td></tr>
<tr><td>2021</td><td>916</td><td>-</td><td>916</td><td>692</td><td>224</td><td></td></tr>
<tr><td>2022</td><td>861</td><td>-</td><td>861</td><td>655</td><td>206</td><td></td></tr>
<tr><td>2023</td><td>706</td><td>51</td><td>757</td><td>757</td><td>-</td><td>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세목조정</td></tr>
<tr><td>2024</td><td>665</td><td>60</td><td>725</td><td>725</td><td></td><td>전기요금 부족분 세목조정</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하나원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변동과 집행 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신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부는 국회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회계년도 개시 약 40일 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과 다른 정책대상(예: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으로 내역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드는 행정적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 rowspan="3">내역변경
('24.1.10.)</td><td rowspan="3">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td><td>210-01</td><td>4</td><td rowspan="3">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td><td>210-01</td><td rowspan="3">청소년 대상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진행</td></tr>
<tr><td>210-14</td><td>420</td><td>210-14</td></tr>
<tr><td>240-01</td><td>3</td><td>240-01</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위주 프로그램 운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내역사업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임
❍ 통일부는 2024년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통해 6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중점사항과 맞지 않는 현장 방문에 458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2024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td><td>5,695</td><td>5,695</td><td>-</td><td>△430</td><td>5,265</td><td>5,095</td><td>-</td><td>170</td><td>2,490</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 방문 및 시찰일정이 본 프로그램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현장위주로 진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
전용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9월 30일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통일부가 사업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24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전용
('24.9.30.)</td><td>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td><td>210-14</td><td>100</td><td>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td><td>260-01</td><td>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비 충당</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통일부는 예산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 편성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에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음
○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예산 수요 중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동 내역사업 일반용역비처럼 사업수행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수요가 사라진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210-14)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편성</th><th>집행</th><th>편성</th><th>집행</th><th>편성</th><th>집행</th></tr>
<tr><td>일반용역비(210-14)</td><td>20</td><td>20</td><td>20</td><td>-</td><td>20</td><td>-</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9</td><td rowspan="3">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남북협력기금 - DMZ 평화적 이용(3040-4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DMZ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현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획액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나머지 금액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경과]
<table>
<tr><th>구분</th><th>제안요청서 작성</th><th>조달청 계약의뢰</th><th>조달청 사전규격 공개</th><th>조달청 입찰공고 (유찰)</th><th>조달청 입찰공고 (수의)</th><th>낙찰자 선정</th></tr>
<tr><td>일자</td><td>’23.10.5.</td><td>’23.10.17.</td><td>’23.10.17.</td><td>’23.11.1.</td><td>’23.12.8.</td><td>’23.12.14.</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통일부는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관행적 예산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남북협력기금 - DMZ 평화적 이용(3040-4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은 2023.12.1.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견학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무직 인건비, 버스임차료 등 상당액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DMZ 평화올레길, 세계평화공원 조성 내역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남북합의 등 사전 절차 미비로 집행이 지연되어, 다수 사업에서 전액 불용 사례가 발생함

[2024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내역사업 명</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DMZ 통합관리체계 구축</td><td>1,061</td><td>1,061</td><td>58</td><td>1,119</td><td>532</td><td>-</td><td>587</td></tr>
<tr><td>DMZ 세계평화공원 조성</td><td>5,952</td><td>5,952</td><td>-</td><td>5,952</td><td>-</td><td>-</td><td>5,952</td></tr>
<tr><td>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td><td>2,155</td><td>2,155</td><td>-</td><td>2,155</td><td>1,192</td><td>-</td><td>963</td></tr>
<tr><td>남북철도도로 출입시설 역사관 운영</td><td>240</td><td>240</td><td>-</td><td>240</td><td>43</td><td>-</td><td>197</td></tr>
<tr><td>합 계</td><td>9,408</td><td>9,408</td><td>58</td><td>9,466</td><td>1,767</td><td>-</td><td>7,699</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장비·시설 등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및 대체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
○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사전절차(환경평가·남북합의 등)를 충실히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장기간 지연·불용되는 사업은 단계별 점검·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구조조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통일부는 통일플러스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통일부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2024년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함으로써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경기도는 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4억 6,700만원의 이월액의 발생하였는데, 통일부의 보조금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의 간격이 1개월에 불과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2024년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보조사업 실집행내역(경기·충남)]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
시행
주체
(기관명)</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8">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예산
(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th><th>집행액
(C)</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
집행률
(C/A)</th></tr>
<tr><td>경기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d>2,755</td><td>3,755</td><td>3,288</td><td>1,000</td><td>533</td><td>467</td><td>-</td><td>53.3</td></tr>
<tr><td>충남도</td><td>2,000</td><td>2,000</td><td>2,000</td><td>1,644</td><td>3,644</td><td>1,537</td><td>2,000</td><td>-</td><td>2,107</td><td>-</td><td>-</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통일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기준 명확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위성정보센터 운영’은 북한지역 위성 영상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분야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5,7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83.3%)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위성영상 구독료 및 군집·정밀 위성영상 구매비로, 신규 촬영보다는 기존 촬영 영상과 초해상화 영상 구매비중이 높았는바, 고해상도 영상 구매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초해상화는 이미지나 영상의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함
[위성영상분석시스템 운영비 계획 대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계획</th><th>집행</th></tr>
<tr><td>위성영상분석시스템
운영비
(210-01)</td><td>○ 기술평가사례비 2
○ 위성영상 구독료 488</td><td>○ 기술평가사례비 2
○ 위성영상 구독료 398
- 고해상도 군집위성영상 구매 295
- 위성영상 구독 8.3
- 고해상도 정밀위성영상 구매 2</td></tr>
<tr><td>합계</td><td>490</td><td>400</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을 실제 활용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해상도 정밀 위성영상의 적시 구매 및 활용을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2억 1,400만원)을 7,000만원 초과한 2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2.7%)됨
※ 영상보고서 제작, 종합보고서 추가 발간 등은 당초 국회 승인 예산에 없었고,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하나원 기본경비 등을 세목조정 또는 자체전용함
❍ 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이 대부분 탈북민 인터뷰 등에 의존하고 증언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어 매년 발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세사업명</th><th>편성사업</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r>
<tr><td rowspan="4">조사결과
활용</td><td>자료발간(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td><td>20</td><td>18</td><td>90.0</td></tr>
<tr><td>공개보고서 발간(국문판, 영문판 발간비)</td><td>170</td><td>245</td><td>144.1</td></tr>
<tr><td>설명회 개최(국내외 설명회, 임차, 여비 등)</td><td>24</td><td>21</td><td>87.5</td></tr>
<tr><td>계</td><td>214</td><td>284</td><td>132.7</td></tr>
</table>
자료: 통일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국회의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 및 이로 인한 잦은 세목조정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통일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간물 종류, 부수, 매체 활용 등 충실한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제도개선)
❍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주기, 발간 형태(책자, 요약본, 영상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명시 등
사전 검증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국제협력·문화예술·공론화 등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공모과정에서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민간단체의 자부담 없이도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4년 사업평가 ‘미흡’ 단체가 2025년 사업자로 재선정되거나, 허위 출장내역 작성, 소재지 불분명 또는 대북전단 옹호 등 문제적 단체 지원, 결과보고서 누락 등 다수의 부정·부실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징계,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타부처 보조사업 응모 시 자부담비율 의무화 및 가점 현황]
<table>
<tr><th>구분</th><th>부처</th><th>자부담비율 의무화</th><th>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th></tr>
<tr><td>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td><td>국가인권
위원회</td><td>5% 이상(2020년 이후)
※ 7% 이상(2019년)</td><td>6% 이상~7% 미만: 1점
7% 이상: 2점</td></tr>
<tr><td>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td><td>행정안전부</td><td>7% 이상(2024년 도입)</td><td>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td></tr>
</tabl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 시 자부담 비율 및 규모에 따른 가점부여 등 사전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자부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 확인을 병행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통일부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문제 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예산에 미편성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예산 전용을 통한 추진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사전에 미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사업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5억 3,401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2024년 5월 21일 기념일 규정 개정 후 7월 14일에 동 행사를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사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행사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 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통일부가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정착금 지급 관련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 의지 제고 등을 위해 정착기본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87억 5,700만원 가운데 57.1%인 10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입국 인원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19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예산 편성 시 예측치 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국회 증액으로 2024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새출발 장려금은 10억원 중 3억 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30.8%에 불과한데,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이 2024년 11월로 지연되어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집행 추세를 예산 편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 통일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 사업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 사업 여건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설문조사 예산 재검토 및 수행 불가능 국가 대상 보완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당초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는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특히 통일 관련 주요 이해관계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관련 조사지역 등 비교]
<table>
<tr><th>구분</th><th>2024 예산안</th><th>입찰공고</th><th>용역보고서</th></tr>
<tr><td>조사 지역
(대상국)</td><td>28개국
(G7 및 APEC 21개국)</td><td>12개국
[(핵심 관련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분단 경험국)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태평양) 호주, 인도, 뉴질랜드,
(기타) 영국, 프랑스 등]</td><td>8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베트남)</td></tr>
<tr><td>표본 규모</td><td>최소 25,000명</td><td>국가별 1,000~2,000명(유동적)</td><td>9,223명</td></tr>
<tr><td>조사 방법</td><td>온라인 패널 조사</td><td>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부가적인 조사방법 적용 가능)</td><td>온라인 설문
(웹조사)</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설문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전문가 자문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경비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으며, 북한은 2020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놓여 있음
○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관리를 위해 71명의 인건비 2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계획액</th></tr>
<tr><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계획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td><td>3,417</td><td>3,417</td><td>-</td><td>△80</td><td>3,337</td><td>2,994</td><td>-</td><td>343</td><td>3,521</td></tr>
<tr><td>출입심사시설
관리</td><td>2,915</td><td>2,915</td><td>-</td><td>-</td><td>2,915</td><td>2,702</td><td>-</td><td>213</td><td>3,521</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공무직 근로자 54명을 최대한 타부서로 전출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사실상 운휴상태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경비 최소화를 추진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의무 이행 지연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12.14.)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 통일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 증액된 1억원으로 확정·편성되었음 - 그러나 통일부는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예산안 제출 시의 계획보다 약 1년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도 순연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률 시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실질적 차관회수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4건의 차관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청구건 관련 북한의 미상환 총액은 3조 8,826억원에 달함(환율 1,387.6원, 8.12.기준) - 경수로차관: 2조 2,995억원 = 원금 1조 3,744억원 + 이자 9,251억원 - 식량차관: 8억 6,620만불 - 경공업원자재차관: 1억 960만불 - 철도도로자재장비차관: 1억 3,290만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청구건: 447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피해금액 102.5억원+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344.5억원) ○ 통일부는 이러한 장기미상환 차관 등에 대해 KEDO사무국을 통해 서한을 발송하고 있고, 대북차관은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상환촉구 공문을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지속 발송 중이라고 함 ○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종합지원센터 폭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며, 철도도로자재장비차관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차관 금액이 미확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의 미상환 차관 등을 회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령은 예산집행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는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동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였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음(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할 것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을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사업수행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등]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등의 사업수행방식을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 후, 사업수행 실적이 크게 감소함 ○ 사업수행방식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된 사업별로 그 성과 등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환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분석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 5개 등 총 23개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 중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1,950만원을 편성한 후 7,67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의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사례는 최근 개최된 지역회의(2020년 및 2022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등	주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격년마다 개최하는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이 49.5%로 목표에 미달하는 등 저조한 문제가 있음 - 2024년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살펴보면, 국내 18개 지역회의의 평균 참석률은 49.5%에 그쳤는데, 이는 사업 성과목표 66% 대비 미달한 수치로서, 제19기 67.2%, 제20기 53.0%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수치이며, 특히, 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과 청년위원의 참석률이 각각 18.6%, 38.3%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국내 지역회의 프로그램 개선,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일정 조기 확정 및 안내 등 국내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통일공감 사업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통일골든벨’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통일·안보·역사·북한인권 등 전문가가 출제한 문제를 국내와 해외 청소년들이 경쟁을 펼쳐 입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통일골든벨과 KBS 도전 골든벨이 연계한 결승대회가 중단되었으며, 입시 중심 고교 학사 운영에 따라 학교의 협조도 어려워졌음 ○ 또한 현재의 퀴즈 형태 사업은 지식 전달 위주로 청소년들의 상향식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해에는 출제 문항별 분포에 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사업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개의정족수
미충족 회의의
회의출석수당
지급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td></tr>
<tr><td>지적사항</td><t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부 분과위원회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문위원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였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회의 출석률은 49.1%, 2024년 2분기 종교·민족화합분과회의 출석률은 48.1%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의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참석자들에게 회의출석수당이 지급되었음
- 회의출석수당은 자문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개의한 회의에 출석하여 수행한 자문 또는 정책제안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반대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의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것이므로 출석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2024년도 분과위원회 중 출석률이 50% 미만인 회의]
(단위: 명, %, 원)
<table>
<tr><th>분과명</th><th>일자</th><th>출석대상</th><th>출석인원</th><th>출석률</th><th>회의출석수당</th></tr>
<tr><td>인권·탈북민지원</td><td>2024.02.28.</td><td>55</td><td>27</td><td>49.1</td><td>1,350,000</td></tr>
<tr><td>종교·민족화합</td><td>2024.05.17.</td><td>54</td><td>26</td><td>48.1</td><td>1,300,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의출석수당을 집행한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하며, 이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할 것</td></tr>
</table>

4. 재외동포청(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반복적인 조정이 발생하였고, 특히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500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과도한 예산조정은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 저하, 편법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로 이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등 예산조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2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편성 비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소송예산의 불용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7121-301)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된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해당 예산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로 일부 전용되어 집행된 것은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임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소송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유사사업 사업구조 재정비 및 예산집행 효율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5035-303)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해외 입양동포 및 그 자녀와의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2024년에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에 4억 4,900만원,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에 7억 8,900만원, ‘입양동포 단체지원’에 8,000만원, 총 1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과 유사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을 이미 추진 중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글로벌 한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외동포협력 전문기관으로 지난 2023년도에 설립되었음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2024년 ‘차세대육성사업’에는 8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규모의 모국연수를 실시하였고, 한글교육 취약지역 재일동포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집중캠프도 운영하는 등 규모와 범위 면에서 동 사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음 ○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같은 부처 내에서 이중으로 추진되면서 기능과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유사사업간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유사사업 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재외동포교육
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재외동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거점, 재외동포 관련 학술연구 기반 및 차세대 동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소로서 필요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8억 9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집행이 부진하여 지속적으로 이월되었고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2026년에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2025년도 예산도 2026년으로 이월될 예정임
- 당초 계획일정 상으로는 2023년 9~12월에 공사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문화센터의 건축계획 및 임대차 비용과 관련한 서울대학교와의 사전협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2024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도</th><th rowspan="2">2025년도
예산액</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B)</th><th>이·전용
등(C)</th><th>예산현액
(A+B+C)</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재외동포협력
센터 출연</td><td>23,754</td><td>23,754</td><td>-</td><td>-</td><td>23,754</td><td>23,754</td><td>-</td><td>-</td><td>27,757</td></tr>
<tr><td>재외동포교육
문화센터 건립</td><td>-</td><td>-</td><td>7,809</td><td>-</td><td>7,809</td><td>-</td><td>7,809</td><td>-</td><td>7,203</td></tr>
</tabl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td></tr>
</table>

국방위원회

1. 국방부(6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미수납액이 2020년 678억원에서 2023년 852억원, 2024년 1,009억원으로 급증하였음 ○ 2024년도 미수납액 1,009억 3,000만원이 전년 852억 300만원 대비 157억 2,7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방부에서 승소한 결과 140억대 채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기타 연체료 등이 패소자의 재력부족 등 사유로 미수납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2025년도말까지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채권 관리 전산망의 연계를 추진하고, 채권추심 관련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미수납액 채권의 수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불용 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
정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잡수입(69-691)</td><td rowspan="3">시정,
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의 고철 매각 중 사회복지법인 굿피플과의 수의계약 단가가 현저히 낮고, 고철 매각 요건에는 사업장 보유 여부 및 직접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함
※ 2024년 국방부 고철 판매 품목별 단가 비교
(단위: 원/kg)
<table>
<tr><th>품목</th><th>평균단가</th><th>굿피플 매각단가</th></tr>
<tr><td>동</td><td>12,515</td><td>3,227</td></tr>
<tr><td>알루미늄</td><td>1,799</td><td>726</td></tr>
<tr><td>스테인리스</td><td>1,689</td><td>703</td></tr>
<tr><td>경철</td><td>217</td><td>77</td></tr>
<tr><td>연철</td><td>188</td><td>38</td></tr>
<tr><td>주철</td><td>140</td><td>72</td></tr>
</table>
- 국방부의 고철 매각 체계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철 적재 사업장이 없고 수집·운반은 제3의 업체가 수행하는 단체에 헐값 매각을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불용군수품 수의계약 제도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수의계약 단가만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단체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 고철 수거와 달리 직접 현장 수거 방식을 수행하는 경우 단가가 낮을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고철 매각 지침에 수의계약 당사자의 직접 처리 의무를 명시하고, 향후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체결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단가 산정 및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것(시정)
○ 국방부는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존중하여 현장 실태를 반영한 균형 잡힌 고철 매각 제도 운영에 힘쓸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직제에 반영없이 상설 운영하고 있는 T/F장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직 및 정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2007년부터 해당 3직위를 한시기구인 ‘TF장’ 직위로 사실상 상설 운영함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 소속 부대에서는 해당 TF장 인사를 ‘정책연수’로 처리하여 야전부대의 인력 공백 및 작전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장기간 한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합법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외직무파견 신설 시 국회 예산심의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인건비(1103-1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국외직무파견 2직위를 신설하기 위해 2024년 다른 세부사업들의 예산 등을 활용하여 총 3억 6,120만원을 집행하였고, 과장급 공무원 2명을 각각 주 NATO 대표부와 38North(미국 워싱턴DC 소재 연구소)로의 신규 국외직무파견을 실시하였음 ○ 국방부는 2023년도부터 국외직무파견 2직위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업들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국외직무파견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연례적 과다편성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30%대의 집행률을 유지하면서 저조하였는데, 2년 연속 남은 잔액은 기본급식비 부족분에 모두 활용되었음
※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잔액 활용</th></tr>
<tr><td>2023</td><td>378</td><td>143</td><td>37.8</td><td>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35)</td></tr>
<tr><td>2024</td><td>378</td><td>132</td><td>34.9</td><td>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4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야전조리병 교육 편성인원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급식재료 납품시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주의,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국군체육부대는 구매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계약한 납품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을 통한 타 업체가 납품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불법 하도급을 통한 저품질 식재료 납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방부는 식재료 납품 검수 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 급식방침 반영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7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12월 경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이 상황 발생에 따른 군 이동시에 지참되는 일이 발생함 ○ 전투식량은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을 통해 일정 규모의 비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급식품으로서 유통기한이 존재하여 위생상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함 ○ 예산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함에도 유통기한 도래된 전투식량이 창고에 보관되고 또한 군병력 이동시 지참되었다는 것은 급식방침 위배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관리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전투식량이 유통기한 도래 전에 순환급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폐기되거나 훈련시 등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특전식량 국방규격 개정시 조달가능성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특전식량 조달’은 2024년 변경된 국방규격을 준수하는 생산업체의 응찰이 없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 이로 인해 2024년말 특전식량의 비축률은 99.3%에서 26.3%로 저하됨 ○ 국방부는 2018년부터 신형 전투식량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2024년 조달을 추진할 때까지 국방규격에 맞출 수 있는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확인절차 또는 시장·업체 조사 등을 내실있게 거치지 않아 결국 정상 조달에 실패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향후 연구개발된 품목이 적시에 조달될 수 있게 시장 및 업체의 능력 확인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시설개선(2231-305)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의무시설개선’ 사업 중 2024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집행률 75%이하를 기록하여 연기된 사업들은 6건으로, 해병대 6여단 의무대 신축,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 육군 22사단 의무대 신축, 해군 해양의료원 격리병동 리모델링, 의무사 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임 ○ 공통 집행 부진사유로는 설계 변경,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건축 승인 지연 및 정산 지연 등으로 계획 및 집행상의 관리 미흡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의무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승인 및 설계 반영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며,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긴급공고 지양 등을 통한 경쟁계약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건복지지원(2242-303)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2024년의 총 4건의 연구 중 1건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음 ○ 국방부가 일반연구의 75%인 3건을 모두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경쟁계약 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계약관리라고 볼 수 있음 ○ 수의계약된 3건 중 2건은 일반공고가 아닌 긴급공고에 의하여 각 일반연구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긴급공고로 인한 입찰 기회의 제한은 연구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일반연구 계약 추진에 있어서 향후 긴급공고 방식이 아닌 일반공고 방식으로 조달공고를 하여 충분한 입찰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계약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등 사전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비장비(2331-309)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정비장비 중 예산안 편성시와 집행시 간 장비를 비교해 보면, GP부분복원 경계력보강 중거리 카메라,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정비용 리프트, 유도가열기, 증류수생산기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시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 화력정비 장비(14건), 궤도정비 장비(2건), 기동(차륜)정비 장비(8건), 항공정비 장비(5건), 함정정비 장비(1건), 일반정비 장비(3건) 등 33건에 대해서 업체 무응찰 및 군요구사항 미충족, 기보유장비 수명연장 및 시설공사 순연 등으로 장비획득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 전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밀측정장비(유지)(2333-31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연도별 정밀측정장비의 국내 및 해외 정비의 비율을 보면, 해외 정비 비율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정밀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정비에 대해서 국외정비를 국내정비로의 전환한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전무한 상황임 ○ 자주국방 실현, 전시 대응력 향상, 비용 절감,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등 전략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 필요성도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며, 또한 장비별 특성 및 전환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겠지만 항공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로 국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밀측정장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의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정비 체계를 국외 의존에서 국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TMO 수송지원
위법·불법 사용
근절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송활동(23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연가 120~140여건이었던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가 2024년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250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연도별 TMO 지원관련 위법·불법 현황
(단위: 건)
<table>
<tr><th>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위법·불법 건수</td><td>142</td><td>124</td><td>138</td><td>25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TMO의 목적과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TMO 수송지원의 위법·불법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훈련장 시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훈련장 시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85.9%, 2023년 80.3%, 2024년 7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육군 1사단 15여단 실내사격장 신축은 집행률 3.5%로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및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연례적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 심의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신규추진(3억 5,400만원 집행)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육군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는 당초 편성액이 2억 2,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8억 3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조정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규모와 다르게 임의로 3배 이상 사업규모를 확대·집행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와 육군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충분한 정책 검토를 통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방식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 (2439-30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필기시험 시행을 전제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폐지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와 추가 선발 모집에 해당 예산을 집행함 ○ 또한, 제도 변경을 예고 없이 즉시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필기시험을 준비한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 ○ 대학 성적 반영 비율이 전체 배점의 20%에 불과하고 불합격 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기시험 폐지를 계기로 면접 비중을 40%까지 확대하였으나 AI 면접을 상반기에만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미실시하는 등 운영 일관성이 결여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육군)는 예산 목적 외 집행 문제를 방지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비목 설정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육군)는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대관협의 및 신축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관협의 목적의 예산 비목을 대관협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설보상비(410-00)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 -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된 육군 관사 및 간부숙소 관련 14건의 사업에 대해 기본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31억 2,500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요금 등 타 비목으로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육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소요 및 예산 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공공요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통해 과도한 이·전용 발생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요금(2536-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공공요금 예산액 5,381억 1,000만원에 이·전용을 통해 증액한 1,688억 8,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7,069억 9,700만원 중 7,068억 700만원을 집행함 - 국방부는 과소한 공공요금을 편성해 예산액의 31%에 달하는 금액을 이·전용을 통해 집행함 - 2020년 감사원, 2023년 국방위 결산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과도한 공공요금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계룡대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지원시설(2533-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계룡대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주전력이 차단될 경우에도 예비전력을 통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체계를 이중화하여야 하나, 주·예비전력 모두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력 공급체계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음 - 2024년 9월 11일 한국전력 서대전지사 송전선로 이상으로 약 36분간 정전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계룡대와 같은 군 핵심시설의 예비전력이 주전력과는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건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전국 64개소 동원훈련장 중 생활관 16개소, 안보교육관 2개소, 식당 2개소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활관 개선 사업은 13곳이, 안보교육관 및 식당 개선 사업은 2건 모두 사고이월 됨 ○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일정 지연에 따른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은 최근 5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감안했을 때, 2024회계연도에 국한된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현재의 사업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연합지휘통신 체계사용 연례적 이·전용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5132-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에서는 동 사업의 부족 예산을 위해 2300프로그램 예산(기동장비(유지)(2333-305), 항공장비(유지)(2333-307))에서 총 73억 1,400만원을 전액 이용(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충당함 ○ 동 사업은 510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연구분석으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점에서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는 2300 프로그램과 성격이 상이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연례적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현 방식을 주한미군사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 충당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재외공관 주재무관 포상금 집행 근거의 법제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관부 활동(5135-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방부 수행사업 중 부대운영지원 사업,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병양성교육 사업, 간부양성교육 사업, 군사대학교육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무관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려는 포상금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집행될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법령의 근거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타부처와의 공동사업 진행시 예산소관과 계약주체 일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외교부와 국제회의(제2차 REAIM 회의) 공동개최시 운영대행업체 또는 임차업체와의 계약을 국방부 명의로 체결하지 않고도 그 대금을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25억 600만원)하여 정산하였음 ※ REAIM: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의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한 집행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향후 다부처 공동사업을 시행 시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성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이·전용액)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국방부의 이용액은 1,293억원이고, 전용액은 3,929억원으로, 이를 합한 이·전용액은 5,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6억원 증가하였음 ○ 이·전용 규모의 확대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배상금 등의 일반배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고,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의 요건인 예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각군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각군의 운영비(210) 집행내역을 보면,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건당 500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문제 발생
※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초과집행 현황
<table>
<tr><th>구분</th><th>비목</th><th>초과
집행 건수</th><th>비고</th></tr>
<tr><td rowspan="3">육군</td><td>210-01</td><td>7건</td><td>해외파병부대 긴급항공수송(5) 및 긴급행사지원(1), 교통안전체험(1)</td></tr>
<tr><td>210-03</td><td>2건</td><td>신병 명찰부착비, 정비피복 구매비</td></tr>
<tr><td>210-04</td><td>16건</td><td>자율운영 급식(4), 지역상생 장병특식(4), 특수근무자 증식(4) 등</td></tr>
<tr><td>해군</td><td>210-01</td><td>1건</td><td>국제 해양안전대전 참가비</td></tr>
<tr><td>공군</td><td>210-01</td><td>4건</td><td>차량정비능력향상교육비(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각군)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관서운영경비 법인카드의 체크카드 비중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구매카드의 종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이 규정됨 ○ 2025년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0.40~1.45%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0.15~1.15%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더 낮게 책정됨 ○ 현재 국방부 정부구매카드 중 체크카드 보유비율은 4.3%로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발급건수 및 사용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군 드론 정의·인력·관리 전반의 제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 영역에서 드론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혼선이 발생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에서는 드론을 협의의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고 있으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서는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드론법상의 광의 개념과도 혼재되는 상황임 ○ 드론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양성 및 운용 지침 마련이 미흡한 실정 - 현재 각군에서 드론 특기병 및 전문부사관을 선발하고 있으나, 규모와 방식이 군별로 상이하며 중·장기적 인력 양성 로드맵도 부재함. 또한 드론 운용 절차서·교범 등이 부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정 여부조차 파악이 어렵고, 총괄적인 관리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드론 등록·관리체계의 미비 문제 - 현행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서만 DTIS(국방수송정보체계)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협의의 드론'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실제로 DTIS는 보험가입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행실적은 전혀 입력되지 않고 있고, 제원 입력 오류 사례도 다수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사영역에서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무·기능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정립하며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와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국방부 차원의 표준화된 운용 지침을 제정하며 모든 군 보유 드론이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는 드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목적·기능·제원 등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군 드론 보험가입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은 2024년 소형자폭드론 도입과 함께 ‘지휘관 판단 하 보험가입이 불필요한 경우 제외’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음 ○ 그러나 판단 가능한 지휘관의 범위와 판단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지휘관에게 가입 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보험가입 후 조정’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 제3조는 DTIS에 입력된 운행실적을 근거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시스템 미비로 운행실적을 입력하지 않고 있어, 군 차량과 달리 드론은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일괄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 규정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 미가입 드론 운용 시 피해배상 대책도 마련하며 드론 등록·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종류별 적정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초빙강사 지급 기준 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초빙강사 지급 기준)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 및 각 군별 초빙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군에서 양성되지 않는 특정 분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외부전문가 초빙강연이 내부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악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초빙강사 지급 실태를 확인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국방예산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초빙강사료 오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방부 감사 시 확인을 통해 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민간근로자
퇴직급여 적립
미흡 및 형평성
저해</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 민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기관·제대별 노사협약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제대 중 최소 5개소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최소 11개 기관은 법정 최소적립금 요건에 미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됨
※ 퇴직금 제도 선택 기관 중 퇴직금 미적립 사례
<table>
<tr><th>기관명</th><th>근로자 수</th></tr>
<tr><td>국방부 본부</td><td>34</td></tr>
<tr><td>육군본부(전투준비안전단)</td><td>466</td></tr>
<tr><td>해군본부</td><td>40</td></tr>
<tr><td>공군본부</td><td>47</td></tr>
<tr><td>국방부 조사본부</td><td>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고용부담금에 포함된 퇴직부담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적립 미이행 기관·제대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 의무도 철저히 준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군수품 지원 내역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장애물 개척전차, 카고트럭, 지뢰제거 장비 등 17종·300억원 이상의 군사장비를 무상대여 형식으로 지원함 - 국방부는 무상대여 계약에 대해 이미 회계상 불용·재산삭감 처리를 완료함 - '장애물 개척전차'는 국군에 2027년 보급 예정이나 우크라이나에 먼저 무상 제공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해당 군수품 지원이 감행되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정화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과 2022년 70%대였고, 2023년 95.1%에 달하였으나, 2024년에는 정밀조사 및 문화유산조사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46.2%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 설계 및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 미흡으로 집행률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17사단 대관협의 절차 이행 소홀에 따른 사업 지연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부대개편 7차 사업(4131-48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17사단 직할대 개편, 17사단 10화생방대대 개편, 17사단 항공단 개편, 17사단 본부대 개편 사업 예산액 중 각각 사업별로 95% 이상을 이·전용, 조정을 통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이는 인천광역시의 관련 법령 오인으로 인한 대관협의 지연 및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시설소요 제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관협의 등 규정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사업 승인 지연 및 예산 집행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운용수익률 상향을 위한 자산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연금기금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7.93%에서 2024년 4.79%으로, 전년 대비 3.14%p 하락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적립금 규모는 2021년말 1조 3,408억원에서 2024년말 8,90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금 적립률은 2021년 4.6개월에서 2024년 2.5개월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상향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산운용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군 관사 장기 미퇴거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관사퇴거지연에 따른 각 군별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45건에서 2021년 591건, 2022년 732건, 2023년 900건, 2024년 1,2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육군의 징수건수는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774건으로 613건(380%) 급증함으로써 전체 징수건수의 증가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관사 퇴거지연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장기 관사퇴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관사퇴거지연에 대한 지연금 부과수준 인상 및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장교 ·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적정편성 및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 · 부사관인건비(1101-15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장교 ·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은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부터 조정하여 충당 · 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482억 8,000만원을 조정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부사관의 경우 가용 재원이 부족해 명예전역 선발률이 70.7%에 그침(지원: 1,720명, 선발: 1,216명) -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명예퇴직 지원 인원의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교 ·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이 매년 대규모로 조정 집행되지 않게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시간외근무 실태
관리 체계 강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군무원인건비(1102-1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매년 부족한 실정이며, 그 부족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정원</th><th>현원</th><th>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편성액(A)</th><th>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집행액(B)</th><th>집행률
(B/A)</th><th>조정액</th></tr>
<tr><td>2021</td><td>4,101</td><td>3,992</td><td>17,122</td><td>20,212</td><td>118.0</td><td>3,099</td></tr>
<tr><td>2022</td><td>4,064</td><td>3,930</td><td>17,223</td><td>28,412</td><td>165.0</td><td>11,284</td></tr>
<tr><td>2023</td><td>3,966</td><td>3,927</td><td>19,185</td><td>32,564</td><td>169.7</td><td>14,125</td></tr>
<tr><td>2024</td><td>3,917</td><td>3,863</td><td>19,204</td><td>35,413</td><td>184.4</td><td>16,211</td></tr>
</table>
- 연도별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는 2021년 30.7시간, 2022년 43.2시간, 2023년 49.0시간, 2024년 53.2시간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방부에 의하면 최근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증가하는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점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통한
운용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집행률이 87.3%, 불용률이 12.7%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 이는 결원 및 중도퇴사자가 많아 민간조리원 운용률(2024년 84.1%)이 낮게 나타난 데 기인함
※ 연도별 민간조리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table>
<tr><th>구 분</th><th>정원(A)</th><th>현원(B)</th><th>결원(A-B)</th><th>운용률(B/A)</th><th>중도퇴사</th></tr>
<tr><td>2019년</td><td>1,982</td><td>1,900</td><td>82</td><td>95.9</td><td>103</td></tr>
<tr><td>2020년</td><td>1,987</td><td>1,919</td><td>68</td><td>96.6</td><td>231</td></tr>
<tr><td>2021년</td><td>2,278</td><td>2,014</td><td>264</td><td>88.4</td><td>116</td></tr>
<tr><td>2022년</td><td>3,188</td><td>2,494</td><td>694</td><td>78.2</td><td>169</td></tr>
<tr><td>2023년</td><td>3,305</td><td>2,713</td><td>592</td><td>82.1</td><td>83</td></tr>
<tr><td>2024년</td><td>3,305</td><td>2,778</td><td>527</td><td>84.1</td><td>348</td></tr>
</table>
- 민간조리원의 낮은 운용률은 주로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민간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기본피복 사업의 미집행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기본피복' 사업은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의 경우 이·전용액(감) 185억 2,500만원, 불용액 166억 8,700만원 등 총 352억 1,2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됨 - 동 사업은 수요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피복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소요 발생 시 동 사업에서 전용하여 우선 충당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동 사업 예산의 일정 규모를 과다계상하는 측면도 있어 보임 - 수백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방증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기본피복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미집행 예산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시정,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은 국직부대의 실전적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용 탄약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204억 9,000만원 증액)을 통해 예산현액이 209억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남 ○ 이러한 증액은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소형자폭드론 구매를 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였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짐 ○ 또한, 이러한 집행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집행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할 것(시정) ○ 국방부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첨단과학훈련 장비에 대한 계약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화훈련(2434-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첨단과학훈련장비’는 2024년 예산현액 531억 1,800만원 중 432억 3,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6.3%으로 부진하였고, 7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8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액은 4건의 집행부진 내역사업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원인은 계약지연 2건, 사업취소 1건, 낙찰차액 과다발생 1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첨단과학훈련장비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단가산정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42	**단기복무장려금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단기복무장려금은 1인당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7억 3,700만원 중 32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8억 1,900만원에 달함 -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군인사법」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한 데 있음 - 법률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계속될 경우 향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적절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 배상금(7136-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일반배상금은 2021년 이·전용 규모가 10억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증액(1,180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용규모의 증가는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과거사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170억 8,900만원으로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임 ○ 2025~2026년부터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재판, 제주4·3사건 관련 재판, 여순사건 관련 재판도 예정되어 있어 더욱 막대한 군 배상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4	**적정 가산금리 책정과 협약은행 추가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024년 11월부터는 신잔액기준 COFIX + 1.55%로 재협약되었으나, - 가산금리 재협약 시점인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순)가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는 약 1.07% 수준임 *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여제도의 경우 기존 2개 은행에서 취급하였으나, 2024년 9월에 1개 은행을 추가함으로써 3개 은행에서 회원 대여를 취급하도록 개편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순)가산금리(A은행 기준, 2024년 11월 0.78%, 2025년 6월 0.38%)를 적용하여 대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가산금리가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 추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미수납 징계부과금 철저 추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징계부과금(56-564)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징계부과금' 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일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32억 7,000만원 중 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31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이 과도한 것은 국방부가 징계부과금 추징을 세무서장에 위탁했을 뿐 적극적 추징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얻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기부과된 징계부과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향후 유사 금전적 제재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6	**방한용품 조속한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기본피복' 사업은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형 방한복 등의 지연보급 문제가 있음 - 당초 신형 방상외피는 2024년부터 3만 5000벌을 우선 보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2,600여벌만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방한복 역시 2,600여벌만 보급되었음 - 현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존 방한복은 전체 장병에게 보급되지 않고 부대 단위로 일부 개수만 보유하고 근무시 등에만 상호교대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기존 전투우의의 경우에는 전 장병에게 보급이 완료된 상태로 새로운 기능성 전투우의 보급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새로운 방한체계에서 가장 고가인 것은 기능성 전투우의인 것으로 파악되어 기능성 전투우의 보급계획을 조정하면 방한복 등 나머지 3종은 조기에 개인별 1벌씩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방상내피, 외피와 방한복의 조속한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면밀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의무물자확보(22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보건용마스크’는 장병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KF급)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액 37억 4.900만원 중 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9.3%로 낮게 나타남. 예산편성 대비 낮은 집행률은 연례적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보건용마스크 집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예산 편성</th><th colspan="4">집행</th></tr>
<tr><th>물량
(개)</th><th>단가
(원)</th><th>예산
(백만원)
(A)</th><th>물량
(개)</th><th>단가
(원)</th><th>집행
(백만원)
(B)</th><th>집행률
(B/A)</th></tr>
<tr><td rowspan="2">2022</td><td rowspan="2">96,856,408</td><td rowspan="2">550</td><td rowspan="2">53,271</td><td>81,145,200</td><td>250</td><td rowspan="2">25,971</td><td rowspan="2">48.8%</td></tr>
<tr><td>30,727,780
(비말마스크)</td><td>185</td></tr>
<tr><td>2023</td><td>92,781,000</td><td>250</td><td>23,195</td><td>17,360,100</td><td>240</td><td>4,166</td><td>18.0%</td></tr>
<tr><td>2024</td><td>15,620,833</td><td>240</td><td>3,749</td><td>5,000,000</td><td>145</td><td>725</td><td>19.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보건용마스크 사업의 경우 면밀한 수요예측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등을 재정립하여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상근예비역 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내일준비지원(2242-30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만기 해지) 시 정부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근예비역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실적이 저조함 - 상근예비역의 경우 2024년 기준 병역의무자 복무형태 중 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이 가장 낮음. 특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2년 이후 가입률과 납입금액이 지속 감소하였음 * 2022년 66%이던 가입률은 2024년 38.3%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평균납입액도 2022년 30.6만원에서 2024년 28.2만원으로 소폭 감소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상근예비역에 대하여 미가입자 중 일정 규모 인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가입에 제한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9	**탄약 사용 기한을 고려한 실사격 훈련 강화 및 폐기대상 탄약을 축소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군사화(2340-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비군사화' 사업은 수명기한이 된 각종 탄약들을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대상 탄약을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례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프랑스산 미스트랄은 신궁으로 대체되어 폐기대상으로 대당 도입 가격이 2억 3,000만원으로 고가임. 대다수의 미스트랄을 실사격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결국 폐기 처리하고 있으나, 신궁으로 대체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이에 맞춰 미스트랄의 실사격을 대폭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탄약폐기사업에 앞서 탄약의 사용기한을 고려한 실사격 훈련을 강화하여 도입과 폐기라는 이중적 예산집행을 최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2439-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로 2020년도 8억 7,000만원, 2022년 52억 7,300만원, 2024년 116억 700만원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2">군무원</td><td>예산</td><td>-</td><td>2,741</td><td>4,153</td><td>6,324</td><td>6,324</td></tr>
<tr><td>집행</td><td>-</td><td>3,088</td><td>4,017</td><td>6,526</td><td>8,809</td></tr>
<tr><td rowspan="2">공무직</td><td>예산</td><td>524</td><td>571</td><td>712</td><td>1,502</td><td>1,502</td></tr>
<tr><td>집행</td><td>870</td><td>738</td><td>1,256</td><td>1,661</td><td>2,798</td></tr>
<tr><td rowspan="2">총 계</td><td>예산</td><td>524</td><td>3,312</td><td>4,865</td><td>7,826</td><td>7,826</td></tr>
<tr><td>집행</td><td>870</td><td>3,826</td><td>5,273</td><td>8,187</td><td>11,60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법률에 따른 장애인 군무원과 장애인 공무직 근로자 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불용액 및 이·전용액 과다로 인한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 인건비(1101-15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장교 인건비' 는 장교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조 7,504억 4,700만원 중 4조 7,114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390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방부는 장교 인건비 예산을 5.18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과 부사관 인건비 부족분, 병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으로 조정 및 이·전용하고 있음 - 5.18 관련 사건 다수 판결로 인한 배상금 부족분 지원 및 국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151억 4,700만원이 이·전용되었음 - 부사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 부족분 지원 및 병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부족분 지원을 위해 209억 5,700만원이 조정되었음 - 그 밖에 390억 2,300만원의 장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장교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불용액 및 이·전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불용액 및 이·전용액 과다로 인한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사관 인건비(1101-15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부사관 인건비’ 는 부사관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조 7,210억 7,300만원 중 6조 6,443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766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방부는 부사관 인건비 예산을 5.18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과 군무원 인건비 부족분, 장교 일부 수당 부족분 및 병 수당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으로 조정 및 이·전용하고 있음 - 5.18관련 사건 다수 판결로 인한 배상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434억 3,000만원이 이용(감)되었음 - 군무원 채용 고용부담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37억 8,100만원이 이용되었고 군무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785억 8,800만원이 전용되었음 - 장교 일부 수당 부족분 지원을 위해 308억 3,500만원이 조정되었고 병 함정근무수당 부족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조정되었음 - 그 밖에 부사관 인건비 766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불용액 및 이·전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불용액 및 이·전용액 과다로 인한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 인건비(1101-15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 인건비' 는 군인(병)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조 2,474억 600만원 중 3조 2,01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46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방부는 병 인건비 예산을 군무원 인건비 부족분, 부사관 수당 부족분 지원을 위해 전용, 조정하였음 - 군무원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181억 2,000만원이 전용되었음 - 부사관 수당 부족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이 조정되었음 - 그 밖에 병 인건비 46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병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불용액 및 이·전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		
54	**군무원 인건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무원인건비 (1102-15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군무원 인건비' 는 군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6,598억 2,600만원 중 2조 6,598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29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방부는 과거에 이·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군무원 운영률이 하향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군무원 인건비를 과소편성하였으나 과도하게 과소편성하여 인건비가 부족해짐 - 이로 인해 부사관 인건비에서 785억 8,800만원, 병 인건비에서 181억 2,000만원을 각각 전용(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무원 인건비 예산안 편성시 과거의 이·불용액 발생 규모와 운영률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예산추계 정확도 제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 (1231-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기본급식’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장병 체력 및 기본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부족으로 인해 피복비 등의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였음 - 기본급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특식비, 특수식량비를 전용하였고 역으로 증/특식비 부족분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다시 전용하였음. 한편, 기본급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용품비 및 기본피복비를 전용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피복비 사업과 함께 설정되어 있어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장병 만족도로 집계하고 있으나 ‘급식·피복 만족도’라는 광범위하게 통합된 지표를 활용하여 기본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통합된 성과지표인 ‘급식·피복 만족도’의 목표치가 60점대 후반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다른 사업과 예산을 전용하거나 전용한 예산을 다시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본급식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편성할 것 ○ 국방부는 장병들이 기본급식, 증/특식, 개인피복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관리할 것 ○ 국방부는 기본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 목표 수준을 대폭 상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영내자급식 관련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시정,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영내자급식’ 은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 급식을 지원하는 것임 ○ 국군체육부대 급식재료 구매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 사실이 사후적발됨 - 실제 납품업체가 계약업체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법 하도급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품질 축산물이 납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국군체육부대는 해당 계약을 단순 해지하는 데 그치고 불법 하도급 계약 위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추가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 및 국군체육부대는 불법 하도급 정황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여 계약관리 책임성을 확립할 것(시정) ○ 국방부 및 국군체육부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하도급을 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후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시정) ○ 국방부 및 국군체육부대는 급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납품업체 확인절차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예산추계 정확도 제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증/특식(1231-302)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증/특식’ 은 기본급식 외 식사 제공을 통한 장병 체력 및 기본전투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는 ‘기본급식’ 사업 예산 부족분을 ‘증/특식’ 예산에서 충당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피복비 사업과 함께 설정되어 있어 장병들의 증/특식 만족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장병 만족도로 집계하고 있으나 ‘급식·피복 만족도’ 라는 광범위하게 통합된 지표를 활용하여 기본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통합된 성과지표인 ‘급식·피복 만족도’ 의 목표치가 60점대 후반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증/특식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타 사업에 대한 지원액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것 ○ 국방부는 장병들이 기본급식, 증/특식, 개인피복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관리할 것 ○ 국방부는 증/특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 목표 수준을 대폭 상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예산추계 정확도 제고 및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 (2531-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병영생활관 사업' 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500억 5,800만원 중 3,052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296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7.2%로 저조한 상황임. 특히, 설계·계약·대관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을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의 목표치가 2024년도 기준 70.7%로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목표치를 대폭 하향하여 50.8%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이 타 사업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것 ○ 국방부는 사업별 지연원인을 파악하고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사업의 성과지표인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관련 목표치를 대폭 상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실질에 맞지 않는 교통비 보장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병여비지원 (2233-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장병여비지원 사업' 은 장병들의 전·출입, 전역 및 휴가 등 병력이동시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 병 휴가비가 총 3회만 지급되어 실질적인 병사들의 휴가 시 교통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가에 대해 전역까지 총 3회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병사들은 1회의 정기휴가(9박10일)를 2회(4박5일씩)로 나눠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3회의 휴가비만 지급하기에 병사들이 3회 초과의 휴가에 대하여는 개인 급여로 교통비를 해결해야 함 ○ 한편, 신병위로휴가는 TMO 이용이 가능하지만 정기휴가는 교통비가 휴가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병사들의 TMO 이용이 불가능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실질적인 휴가 이용에 부합하는 여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실질에 맞지 않는 승차 지원 및 TMO 지원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송활동(2336-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수송활동 사업’ 은 육로·철도·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 지원태세를 완비하고 군 장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병사들의 신병휴가 및 포상휴가 이외의 출타에 대하여는 승차 지원 및 TMO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병사들의 신병휴가 및 포상휴가를 제외한 일반 정기휴가에 대하여는 휴가비가 지급된다는 명목으로 승차 지원 및 TMO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병사들의 휴가비는 군 복무 중 총 3회밖에 지급되지 않고 병사들은 일반적으로 제공받은 정기휴가를 나누어 여러 차례 사용하는 방법으로 3회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기에 3회만 지급되는 휴가비로는 병사들의 귀가 교통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병사들의 실질적인 휴가 횟수에 맞게 승차 지원 및 TMO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휴가비와 별도로 모든 출타에 대한 승차 지원 및 TMO 지원을 할 것		
61	**연례적 이·전용 및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피복(1241-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특수피복’ 사업은 방한피복류, 침구, 개인장구류, 특수임무피복 등 각 임무에 적합한 특수피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미집행액이 2022년 235억 9,700만원(당초 예산 대비 11%), 2023년 373억 4,000만원(당초 예산 대비 15%), 2024년 315억 7,000만원(당초 예산 대비 1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방증임 ○ 또한 연례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특수피복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업무용 휴대폰 정보유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신요금(2131-30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통신요금' 사업은 군 통신업무 지원을 위한 통신망 사용료를 지원하는 체신료와 고속데이터 통신망(국방망, 작전망, 정보망, 인터넷 등) 운영에 필요한 전용회선 임대사용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 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실제 유출된 USIM 정보 등의 범위를 통보받지 못했고, 주체적으로 파악하지도 않았음 - 국군의 경우 정보 유출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보 유출 자체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 사후조치 및 대응이 필요함 - 향후 SKT에 대한 조달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하는데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통신요금 사업 관련 업무용 휴대폰에 대하여 SKT 정보 유출 사태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통신전자장비 구매 및 운영과 관련한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신전자장비(2331-305)	주의,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국회가 확정한 육군의 장비 34종을 초과하는 41종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예산도 96억원을 추가 집행한 데 반해, 해군·공군 및 해병의 예산을 불용하고, 특히 공군의 경우 승인된 장비 40종에 한참 미달하는 24종의 장비만을 구매함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집행계획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예산 심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함 ○ 한편, 국방부는 전(全) 군에 전개된 감시 장비 중 중국산 CCTV와 관련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2024년에 1천여 대가 넘는 중국산 CCTV를 철거했으며, 이에 따라 우발적 감시 장비 구매 소요가 발생함 - 국방부는 중국산 CCTV 철거에 따른 추가 감시 장비 구매 예산을 기확정된 통신전자장비 예산 내에서 다른 장비 구매를 불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으나, 이는 기계획된 장비 조달에 차질을 주어 다른 안보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통신전자장비 사업과 관련해 향후 확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군별 차별적 예산 배정을 지양하도록 할 것(주의) ○ 국방부는 전자장비 부품 등에 대한 보안 문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달지침 등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국방부는 향후 우발적 감시 장비 구매 소요의 경우 예비비 신청 및 승인의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노후 개선 사업 신속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부족하거나 노후한 군 주거시설의 확보 및 노후 개선을 위한 것임 ○ 노후 간부 숙소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공관병 제도가 부활됨 - 독신자 숙소 중 30%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곳은 8.8%임 - 여러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국방부는 관사 관리와 관련된 임무로 공관 관리 부사관을 설치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간부숙소 공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노후화된 간부숙소를 모두 점검하여 인테리어를 할 것 ○ 국방부는 관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력(부사관, 병, 장교)을 철수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재배치 할 것		
65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특기병 선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은 국방부 및 국직기관 각급부대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적·반복적 소규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국군체육부대의 운영에 있어서 체육특기병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짐(감사원 지적사항) - 즉, 국군체육부대는 종목별 배점 기준표의 총점 순서에 따라 체육특기병을 선발하지 아니하고 최근 경기 전적이 우수하거나 국가대표 경력이 있다는 등의 정성적 평가요소를 사유로 47명을 총점 순위와 다르게 최종 선발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특기병 선발에 있어 배점표 이외의 정성평가를 반영하지 말고 선발 기준과 선발 결과 및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복지시설 중 과다한 골프장 비율 축소 등**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복지시설 운영 (2237-64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군 마트,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군에서 너무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각 군단별/사단별 회관에 병사들을 차출하고 있음 -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30여개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음 - 군 골프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주로 이용하며 병사들은 연간 이용자 수가 각 골프장 당 한자릿수 수준임 - 각 군단, 사단별로 보유한 회관에 병사들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관리, 카페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한편,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현역병 회원가입 안내사항으로 "자대배치 45일 경과 후 회원가입 진행 요망" 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표기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 중 일반병사 이용이 가능한 체력단련시설 확대에 노력하며 부대복지회관에 차출한 병사를 최소화해 나갈 것 ○ 국방부는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현역병 회원가입 안내사항을 "입대 45일 경과 후 회원가입 진행요망" 이라고 수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추가적 골프장 시설확보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복지시설 확보 (2237-64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복지시설 확보' 사업은 장병 사기 및 복지 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한 휴양, 레저, 체육, 기타 복지시설을 신·증설하는 것임 ○ 골프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시설확보 예산이 계속 집행됨 - 군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일반 사병의 복리와는 관계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골프장 시설확보는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추가적 골프장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할 것		

2. 병무청(1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되었던 단가(16,000원)보다 계약단가(12,400원)가 낮게 형성되어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함 ○ 지속적으로 계약단가가 예산 편성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고, 그 차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향후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편성 시 단가 변동 추세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할 것		
2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모집(1232-30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현역병모집 사업 예산 중 37억 9,600만원(예산 현액 대비 약 87%)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사용됨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의무자 수 대비 센터이용자 수)은 다소 낮은 수준임 (2024년 25.0%) ○ 센터 이용률이 낮은 원인 중에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주요 병무 행정·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지방병무청과 지리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있어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다고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병무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외병역자원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입영(1232-305)	주의	병무청
		지적사항	○ 국외자원관리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음 ○ 예산 대부분이 병역 이행 정보 책자 발간, 병역 의무자 출국 시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음 ○ 단순히 병역 이행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인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국외 병역 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저조한 국외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홍보 확대, 병역 이행 유인책 마련 등 국외 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하도록 주의할 것		
4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교육을 현재 집합·대면 방식과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집합·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 수립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전시업무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집합·대면 방식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 감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이 2019년 이후 매년 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집 완료자 대비 전시근로역 처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2024년 43.6%) ○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중요한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6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개편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 상황과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6.30. 시행)을 통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13인으로 축소한 바 있음 ※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 : 1,962건(2020년) → 574건(2021년) → 338건(2024년) ○ 대체역심사위원회 지원 조직인 사무국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1명 규모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행정 업무 소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24년 지원비율 5.9%) ○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강화 등 사업 실적 제고 방안과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		
8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역판정검사’ 사업 수요는 매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 불용률이 5% 이상 발생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임 ○ 병무청의 불용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검사 대상자 규모 등 예측 능력이 미흡함 ○ 예산 불용이 반복될 경우, 다른 긴급 사업 재원 분배에 영향을 주어 예산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인원 및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정밀히 수립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지하상황실 구축사업 예산 전용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7134-317)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주의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2024회계연도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총 2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지하상황실을 구축 완료함 - 기획재정부 예산 전용 승인을 거쳐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전금 4억 2,000만원을 전용 재원으로 하여, ‘병무행정운영’ 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2억 8,000만원, 공사비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전용(증)함 ○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예산 전용 시 요구되는 사업 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 경비 여부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이 진행된 사유 및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을 부당히 전용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설치된 지하상황실의 원 목적과 기능, 상황감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불용 최소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2024년도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예산 1,933억원 중 176억원이 불용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집행 수요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성이 저하됨 -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금 지급 등은 대상 규모와 지급 단가가 명확히 산정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용이 크게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11	**징계부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및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징계부과금(58-56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징계부과금’ 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일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6,100만원 중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3.8%)되고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3건,「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2건 등 총 5건의 징계부과금이 발생됨 -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비리행위가 발생되는 원인은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및 청렴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고, 내부통제가 부족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 발급비 미지급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시정, 주의,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677명에게 지급해야 할 1억 700만원 상당의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병역법」 제79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함 - 해당 보완서류 발급비 미지급 문제는 2021년과 2022년 병무청 자체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2024년 미지급까지 최근 5년간 3차례 반복됨 -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 정당한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개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병무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이래 발생한 보완서류 발급비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할 것(시정) ○ 병무청은 반복적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병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병무청은 동일한 미지급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군번입력 착오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 (7134-317)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동일 군번이 착오로 이중 등록됨 - 현역복무부적합자 보충역 처분자 인수시 군번 착오입력 사례 - 보충역 군사교육수료 후 군번 착오입력 사례 - 무관후보생 등 퇴교자 군번부여 착오 입력 사례 등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군번 입력에 있어 착오 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14	**해외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지원인력 (1434-309)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동 사업을 통해 산업지원인력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사례에도 대다수 행정처분이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또한, 해외 실태조사의 경우 연 2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제재장치를 강화하고, 3진 아웃제 등 실효적인 퇴출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병무청은 해외 실태조사의 경우 재외공관에 점검권한 위임, 정기적 순회 점검 체계 구축 등 복무확인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사회복무요원 재정부담 완화 및 수요감소 대응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 복무지도를 통해 복무부적응 발생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 병 봉급 인상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재정부담 완화 및 수요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방위사업청(24건) : 비공개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부(3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지자체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 및 지원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를 위하여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수익의 일부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부담하도록 함(지방비 100%)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가 기부모금액 대비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지역투자계획 수립지원 컨설팅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금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컨설팅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투자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3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 고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금의 신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634-304)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은 397개소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로 구축할 154개소들에서는 토지 매입 등 사전 준비와 보조금 교부·관리 미흡으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 최근 5년 간 주민대피시설 실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실집행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 2개소(인천 강화 및 경기 연천) 모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실집행률이 3.1%에 불과하였음 ○ 접경지역 중 정부지원 설치대상지역인 15개 시·군 전체의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은 432.2%이나 일부 접경지역(옹진, 연천, 양구)의 면단위 평균 수용률은 30.3%에 불과하며, 이 중 대피시설이 없거나 인구 대비 10% 미만인 곳이 절반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인 실집행이월 과다를 방지하고, 사업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대피시설 구축 현황 재검토를 통해 연도별·연차별 계획대로 해당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 ○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시설 구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구체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특별교부세에 대한 수시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시정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특별교부세(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 1조 8,500억원 중 8,478억원(45.8%)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었고, 수시배정 예산의 86.9%인 7,370억원이 11월말~12월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됨 - 특별교부세는 법률에 의해 수입이 보장된 간접 조세 수입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수시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수요를 제출하고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이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하여 연말에 교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 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		
6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은 일부 재난안전제품의 경우 정량적인 인증기준이 없어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의 정량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등급화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재난안전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안전개선시설 모델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2632-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에서는 2023년 안전지수 산정 결과와 무관한 지역을 202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 관련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보조비율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8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사업이 2025년에야 종료됨에 따라 실태조사가 지연되어 차년도 재해예방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다음연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수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집행 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단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풍수해보험(2734-302)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3자 기부가입자 및 일반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하향 조정한 결과 2024년 소상공인 가입률이 6.5%로 목표치(25%)에 비해 저조하였음 - 정부지원율 하향조정: 제3자 기부가입자 : 70% → 50%, 일반가입자 : 70% → 55% ○ 최근 4년 간 풍수해보험 손해율 현황에 따르면 다른 정책보험 대비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낮은 상황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300)	주의,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의 전단계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사업의 보조금이 수시배정(24.10.30.)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어 대부분 미집행되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협의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협의대상 13개 지역사업 중 11개 지역사업의 협의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음 - 그 결과 협의대상 13개 지역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수시배정(2024.10.30.)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었고, 그 중 10개 지역사업의 보조금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주의) ○ 행정안전부는 수시배정 대상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역사업별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업추진 전 실수요, 중기부 등 타 기관 사업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사업추진 전 배달료 지원의 실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실수요 부족으로 실집행이 저조(실집행률 32.0%)하였음 - 당초 전체 외식업소 수인 5,125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달료가 지원된 업소 수는 1,427개소로 당초 계획 대비 28.5%에 불과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가 집행률이 저조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지급된 보조금 일부(10억 7,200만원)를 반납하기도 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와 유사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수요 예측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통교부세(1631-300),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행정안전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2024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2.2조원 상당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면서 교부세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에 맞지 않음
❍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인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에도 부합하지 않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지방교부세 미교부 관련)
<table>
<tr><th>시정
요구명</th><th>(33)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방지 필요(시정)</th></tr>
<tr><td>지적
사항</td><td>❍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2023년·2024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세입경정 절차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2031-504)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상반기에 초거대 AI민원상담서비스 학습용 서비스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용역이 2025년 1월에야 발주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음 ❍ 학습용 기초데이터로 다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상담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데이터만 확보하여 학습 효과가 제한되었음 - 현재 민간 챗봇의 학습수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민원상담 LLM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Data'를 고려하면 사업의 실효성도 저하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사업효과가 계획 대비 저하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2041-502)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건비 인상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건비 산출근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음 - 2024년 동 기관의 성과연봉 지급률은 편성예산 기준(직급별 표준단가의 151.76%)보다 높게(155.27%) 책정되었음 ❍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동 기관에 대해 4년(2019~2023년) 연속 우수 및 2024년 양호등급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수탁사업의 불용·이월액 미반납, 휴직자에게 인건비 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총인건비 한도 미준수 등이 지적됐음에도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검증된 대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에도 사업의 실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년도(2023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었음 - 2024년 기준 30개소 대상 14억 6,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8개소를 대상으로 당초 예산의 44.9%인 6억 5,900만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실집행 실적은 전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		
16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3031-5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 2024년 수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교부된 민간위탁사업비 115억 3,100만원 중 34억 8,6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0.2%)되어 80억 4,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3032-5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행정안전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지능형관제를 위한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현 사업여건상 비용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의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능형관제 도입을 위해 CCTV 전면 교체를 계획하였으나, CCTV 교체만으로는 오탐률 저감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영상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학습데이터를 제작·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사업 ISP 수립 전-후 사업내용 비교
<table>
<tr><th colspan="2">변경 전</th><th colspan="2">변경 후</th></tr>
<tr><th>내용</th><th>총사업비</th><th>내용</th><th>총사업비</th></tr>
<tr><td>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CCTV 전면 교체</td><td>7,600억원
(추정)</td><td>CCTV 영상 기반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재난유형별 학습데이터
제작·관리</td><td>304억
9,700만원
(ISP 기준)</td></tr>
</table>
-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CCTV를 교체하고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하는데, CCTV 전면 교체 비용은 7,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영상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별도의 비용부담도 발생할 수 있어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가 불확실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 지원 목적으로 제작관리되는 학습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실증공모 결과를 ISP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3032-509)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는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실증공모와 학습데이터 제작 및 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ISP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내용상 실증공모 결과를 확인한 다음 ISP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였음 - 2024년 실시된 2건의 실증공모는 지방자치단체 CCTV 실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학습데이터로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시범운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므로, 정보화사업을 통해 제작·공유될 학습데이터의 유용성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의 ISP 수립 시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ISP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완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2・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 부진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집행이 부진(실집행률 42.9%)하였음 ○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차년도에 기금 배분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적용사례는 없는 등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차년도에 기금 배분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2025년 배분 시 '실집행 부진'의 판단기준이 과도하게 관대하여(3년간 누적 실집행률 30%) 적용사례가 없었음 ○ 광역지원계정 기금 일부가 평가등급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되거나 동명의 기초지원계정 사업에 중복투자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하는 취지가 약화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산 후 기금운용주체에게 반납되지 않고 재투자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 ○ 행정안전부는 기금 성과관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조치할 것 ○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의 기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 또는 중복투자되는 것을 방지할 것 ○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 결성 촉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이 1회 이상 지연되었고, 나머지 1개 프로젝트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이 취소되어 출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2024년 연말(12.31.) 기준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금 집행실적 없음 ○ 현행 제도상 자펀드 위탁운용사의 최종선정일이 결성 시한의 기산점이어서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시 자펀드의 결성 시한 자체가 설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프로젝트는 현재 위탁운용사 재선정 중이어서 자펀드 결성 시한 자체가 설정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가 선정 취소되는 경우에도 자펀드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할 것		
21	**마을기업의 고용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마을기업육성(3131-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마을기업 1개당 상용근로자 수도 정체되고 있어, 재정사업 성과지표상 성과가 미흡함 - 최근 4년간(2021-2024) 마을기업 지정 취소 건수: 2021년 64건, 2022년 40건, 2023년 58건, 2024년 74건 ○ 또한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수는 1.70~1.98명 수준으로 정체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불분명함 -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 1개당 상용근로자 수: 2018년 1.93명→2019년 1.98명→2020년 1.95명→2021년 1.70명→2022년 1.79명→2023년 1.77명→2024년 1.83명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의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보조금 집행잔액 부적정 처리**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3131-303)	시정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일부(15억 3,900만원)가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적기에 반납 처리되지 않아 반납이 2025년 4월 이후로 지연되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및 보조사업 수익금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사업자에 의해 임의로 집행될 위험이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및 실집행 저조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관련 지침 위반**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32억 5,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2%에 불과하고, 201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교부금을 전액 교부하고 실집행률은 저조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6년간 실집행률: 2019년 29.3% → 2020년 57.0% → 2021년 30.2% → 2022년 35.9% → 2023년 79.0% → 2024년 5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법령상 기준에 맞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2231-302)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2022년 1억 7,932만원, 2023년 3억 8,449만원, 2024년 4억 5,372만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지양할 것		
25	보상금 심의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의 집행률이 87% 수준이고, 최근 3년간 불용액 합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잦은 결원 발생으로 심사인력이 불충분하여 보상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심사인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등 보상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사고 대책 및 현장 종사자 지원(2632-505)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의 집행잔액 일부가 당초 예산 편성내역과 상이한 신규사업에 집행되었음 - 당초 물품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3억 3,500만원 중 6,700만원이 재난안전종사자들의 「KBS 열린음악회 특집방송」 참가지원을 위해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7	**필수의료문제 해결 기여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범위·사용방식이 경직적이어서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인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분만 취약지는 54곳, 응급의료 취약지는 79곳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지방사무에 국비 예산 투입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국비 지원 감액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액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에서 정부지원 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5.0%→2022년 67.5%→2023년 52.4%→2024년 48.8%로 감소 추세 - 제도의 역진성 우려에도 이용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재정이 현금성 예산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부작용을 초래 - 따라서 이용자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명확히 증빙되기 전까지 국비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극한 폭우로 인한 지방 소하천 범람 예측 사업의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최근 가이드라인(2023년, 2024년)에서 유속·유량 계측 기준을 국제표준(ISO 748) 대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저하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유속·유량 계측기준인 '측선 수'를 국제표준보다 적은 3-6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		
		시정요구사항	○ 소하천 유속·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홍수 예측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계측장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표준의 완화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		
30	**보조사업 실집행 점검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2635-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실집행 부진으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음에도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대부분이 기계적으로 교부되어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52억원 중 489억원만 실집행(실집행률 51.4%)되고 457억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정부가 인건비 지급해도 취업 연계율 저조 및 부정수급 증가**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지역혁신형’ 정규직 전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80% 미만)하고 ‘지역포용형’의 취업연계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혁신형 사업의 최근 3년간(2022-2024) 정규직 전환율(정규직 전환·채용/총 참여자 수)은 2022년 70.4% → 2023년 79.7% → 2024년 79.9% 수준임 - 지역포용형 사업의 최근 3년간(2022-2024) 취업연계율(취업연계인원/지원종료인원)은 2022년 36.2% → 2023년 37.4% → 2024년 59.4% 수준임 ○ 지원 이후 지역 정착 여부가 중요한 성과임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어 성과관리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음 ○ 부정수급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4년 허위수급 건수가 16건에 달하고 있음 - 신규 채용 없이 기존에 근무 중이던 직원의 인건비를 수급한 사례(대구광역시), 직원의 퇴사 후에도 인건비를 수급한 사례(세종특별자치시) 및 근무일지·기록부 허위작성에 의한 인건비 수급 사례(전북 익산) 등 주요 허위수급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원금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의 계속 취업 여부, 지역 정주 여부 등을 파악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2. 경찰청(1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운 과태료에 대하여 시효 중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6만 9,000건(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과태료의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경찰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 사업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1231-314)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경찰관서 사건기록보관실 구축’은 경찰관서에 사건수사기록 보관을 위한 공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95억 300만원 중 90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000원이 불용처리됨 ○ 사업계획 수립 시 장비 설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액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 강원 강릉서 및 대구 달성서는 2024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임시 기록보관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간 협소를 이유로 항온항습기 및 모빌렉(이동식 서가) 구입비 1억 6,1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으며, 2개서의 사건기록이 항온항습기 없이 관리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사건기록보관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보관실의 개·증축 및 보수, 기록 이전 등의 과정에서 수사기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개선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경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검거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건수로 측정되는 영상녹화 실시율은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영상녹화 실시율 현황
(단위: %)
<table>
<tr><th>구 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영상녹화 실시율</td><td>7.0</td><td>6.9</td><td>5.1</td><td>4.6</td></tr>
</table>
○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성녹화 대비 영상녹화 자료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및 수사관들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찰청은 영상녹화 실시율이 지속 감소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에 따라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경찰 해외파견인력 운영비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는 2024년 예산현액 7,800만원 중 4,000만원만이 집행됨 - 신변안전보험·의료보험·실의료비 및 전지의료검진비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40~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2024년 48.7%) 특히 전지의료검진비는 2024년의 경우 200만원 중 34만원만이 집행됨 ○ 내내역사업인 ‘직무파견 주재관 운영비’ 중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는 해외파견 경찰협력관이 개인 차량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현지 직접 구입 시 지원하는 비용으로, 2024년 예산현액 2,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파견지가 대중교통 발달 지역이거나 짧은 임기로 차량 구매·이전이 어려운 것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해외파견자 공통운영비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인원과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해외치안협력 강화사업의 성과지표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해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2024년 신규 951명)하고 있음에도 2024년 성과지표를 단순히 송환인원으로 설정하여, 성과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질적인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024년의 경우 목표 437명 대비 실적 691명 비율(158%)로 성과를 평가 ○ 2025년부터 성과지표는 해외도피사범 송환율과 국내 도피 해외범죄인 송환율의 단순평균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부서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해외치안협력강화 성과지표를 송환인원이 아닌 송환율로 바꿔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로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 실패 원인 분석에 따른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2024년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납품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단가가 약 100만원 가량 높은 미국산 테이저7을 구입하여 재정적 부담이 우려됨 - 예산)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비: 27억 5,500만원 (1,620정×170만원) - 집행) 미국산 테이저7 구입비: 27억 5,500만원 (1,043정×266만원) ○ 구매 계약 체결당시 검증기준이 규격서 등에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업체와 계약해지 및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등 계약체결 시 검증기준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핵심 기준인 표적지 도달(0.33mm 동관 관통)은 계약체결 후 협의로 설정 - 판매업체는 경찰청이 계약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규격서 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중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장비유지관리 사업에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 성능 기준과 구체적 시험방법을 계약체결 이전에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경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연례적으로 과태료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며, 최근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4년도 미수납액이 1조 837억 3,6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 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징수결정액(A)</td><td>1,621,189</td><td>1,759,607</td><td>2,122,089</td><td>2,293,491</td><td>2,406,482</td></tr>
<tr><td>수납액(B)</td><td>751,822</td><td>860,688</td><td>1,141,266</td><td>1,228,436</td><td>1,318,886</td></tr>
<tr><td>미수납액</td><td>859,727</td><td>894,690</td><td>974,404</td><td>1,060,986</td><td>1,083,736</td></tr>
<tr><td>수납률(B/A)</td><td>46.4</td><td>48.9</td><td>53.8</td><td>53.6</td><td>54.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부과체계 및 제재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 재정비 또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차량의 과태료 징수수단을 모색하며, 담당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경찰청은 과태료의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과태료 수납률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분담 명확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실질적인 업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 각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순찰근무를 중심으로 광역범죄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경찰은 ‘순찰근무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 경찰관을 요하는 중요 상황 동원’ 업무를 담당하여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기동순찰대는 별도 청사공간 사용 및 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연간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동순찰대의 인력 및 예산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 운영 여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임 - 기본 지원금 10만원 외에 지자체별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추가 지급함 ○ 2024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11만 4,436건으로 전년(11만 2,896건)대비 증가하였으나, 실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의 경우 4만 2,369건, 21.6%에 달하고 있음 -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16.9%로* 낮음 *실제 운전 증빙자료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 천안시 통계 기준 - 운전면허 반납률은 도시 평균(2~3%)에 비해 농촌은 1%대 이하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령자·농촌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대체이동수단 현황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 및 타 사업과의 연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청은 반납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인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의 지연 및 이월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는 경호·에스코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오토바이 승무 경찰관에게 보호복을 구매·지급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계약체결 및 납품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연도별 이월액 현황 - (’22년) 6,000만원, (’23년) 4,500만원, (’24년) 3,1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에서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납품기간 및 검수기간을 고려하여 보호복 지급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는 예산안 심사 시의 구매 계획대수 및 예산액과 실제 구매대수 및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함 - 차량유형별로 순찰차량은 41억 600만원(62대)이 초과 집행되었고, 기능별 차량은 100억 3,400만원(△334대)이 과소 집행되는 등 교체수량 및 예산이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음 ○ ‘노후차량 교체’ 내역사업의 집행 잔액 중 일부를 동 세부사업 내 ‘증차’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차’ 사업은 예산현액 103억 3,800만원을 초과하여 158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증차 사업에서 112순찰자가 당초 계획인 58대 대비 22대가 부족한 36대가 구매되었고, 계획에 없었던 고속순찰차 19대와 암행순찰차 3대가 추가 구매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차량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계획의 과도한 변경을 자제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병원 사업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로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하고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수납액 (결산 기준) - ('22년) 327억 7,800만원, ('23년) 294억 9,900만원, ('24년) 241억 6,900만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예산안 기준) - ('22년) 33.0%, ('23년) 57.3%, ('24년) 54.5%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국회 증인고발 사건 신속 수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경찰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13명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1월 17일 대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경찰로 이송된 6건(YTN 관련 불출석 증인)의 사건은 최대 6개월 되는 시점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찰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소환조사 등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인지장애·정신질환자·발작성 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3. 소방청(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세부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와 신체건강 이상을 예방·치료·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됨 - 재정투입 규모: ('20년)32.9억원에서 ('24년)41.6억원으로 5년만에 약 10억원 증가 - '24년에 17명의 소방공무원 자살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내근직 공무원이 30.1% 차지 - 상담인력 부족: '24년에 상담인력(총 102명) 1인당 779건 상담 진행 - 정신건강 관련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24년에 5억 6천만원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소방장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과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산업육성지원(1133-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024년에 30개사 컨설팅을 목표로 하였으나 15개사만 컨설팅하였음. 이는 소방산업체의 저조한 관심, 복잡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불충분한 사전 안내, 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미흡 등에 기인한 것임 ○ 그 밖에, 소방청의 소방장비 인증 서식과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 서식이 달라 보완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을 받고 있던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에 따른 컨설팅 중단 사례도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공공판로컨설팅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 소방장비의 국내외 확산으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024년도에 플랫폼을 수탁·운영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 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느라 사업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하였음.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과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임 ○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227건)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412건)에 비해 적고, 유상 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2023년 2억 3,660만원 → 2024년 1억 1,730만원, 1억 1,930만원 감소),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연평균 증가율 2.0%)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 등에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시정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청은 소방병원 건립공사 내용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는 부적정한 집행을 하였음 - 2021년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어 약 300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33%)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음 -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나 소방청은 '타당성 재조사' 시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기본설계 단계까지 반영된 헬리패드·의료가스장비공사 등을 제외한 후 총사업비를 168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18.5%)만 증액하여('21.12.)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 소방청은 202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9조제2항*을 근거로 총사업비 78억원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하여 기존에 제외했던 설비를 반영하였고 부족한 공사비는 2024년 예산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9조제2항은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현장 인력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고위험군,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출동자 등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심리적 문제의 예방·관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2024년도 행정인력의 참가율(749명 참가, 6.5%)이 현장인력의 참가율(1,685명 참가, 3.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어 시·도별 여건 및 해당 지역 소방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도별 1인당 교육 비용(202,247원~990,000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1인당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현장인력 참여율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비를 편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119 항공정비실 건립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함 - 동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4개월, '24.1.~4.) 대비 지연(13개월, '24.7.~'25.7.)되었는데 이는 연약지반 보강공사 재원 확보(1차 총사업비 조정, '24.12.) 및 법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추가(2차 총사업비 조정, '25.6.)로 인한 것임 -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21.4.~11.) 시 경찰청 충북항공대 격납고, 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등을 참조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없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에너지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하기로 조달청과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충북항공대 격납고와 포항격납고는 군부대 비행장 내에 위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여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 소방청은 향후 유사 건립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정의무시설 추가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건립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1134-305)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부지 내 위치한 주유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도 당초 352억 9,700만원에서 430억 7,200만원으로 증액됨 - 박물관 부지 내 주유소 등의 보상·철거 협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음 - 소방청은 광명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광명시가 지장물 정리 등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검토하여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확보와 관련된 사전조사 및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약 시에도 이행책임 및 분쟁 발생 시 대응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분쟁과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훈련시설 설치 예산을 실제 집행할 수 없었음에도 소방청은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 서울의 경우 실화재 훈련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돔 형태의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실화재 훈련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만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계약을 발주할 수 있음 - 최초 계획과는 달리 2024년 내에 훈련장 건립 및 훈련시설 구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61억 1,200만원 중 56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설계 공모 및 용역비만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소방청은 서울시의 예산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서 2차례('24.3.20.,'24.4.26.)에 걸쳐 보조금 13억 6,500만원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4. 인사혁신처(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지양 및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험 시행(1631-300)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시험관리 부대비용’ 사업은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목조정을 통해 3억 3,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 세목조정의 규모가 과다하고, 다수의 시설공사가 예산 편성 시점에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향후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부처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2024년도에는 개방형직위 선발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125개→94개: 31개(24.8%) 감소],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76.3%로 부진한 편이었음. ○ 2023년부터 개방형직위 선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규정이 삭제되어 개방형직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선발이 감소함에 따라 각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은 확대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확인, 사후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주의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최근 4년간(2022-2025) 인사혁신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되어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가 미흡하였음 - 최근 4년간 2차례 이상 지출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주택사업관리’ 사업에는 입주자 퇴거시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금이 편성되어 있어 초과수요 발생시 증액변경이 불가피함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		
4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파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연 및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신규 임용이 지연되고 일부 직위의 장기 공석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130개 직위(46개 기구) 중 11개 직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공석이 발생하였고, 신설된 10개 직위 중 7개 직위에서 연내 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 현안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증설 및 상담 인력 증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센터에 상담사의 추가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업무부담이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상담사 1인당 적정 처리 가능 건수(개인상담 월 48건, 연 570건)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권역별 접근성 측면에서도 현행 10개 센터만으로는 전국 공무원의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센터별 적정 상담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담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상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대여학자금 수탁금잉여금의 신속한 반환 및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반환의 근거규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공무원연금기금 - 일반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1), 공무원연금기금 - 특별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2)	주의,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621억원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수탁금 잉여액 반환액을 상향조정하여 과다한 수탁금 잉여금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 ○ 수탁금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금 잉여금을 내부에 과도하게 유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할 것(주의) ○ 인사혁신처는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장기 미수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의 마련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연수 후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공무원들에게 소요경비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 미수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6,200만원이 최근까지 미수납되고 있음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수납에 대한 지연 이자부과 및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향후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지연한 미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8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제고 및 전문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1131-301),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선거지원단은 투입 대비 낮은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한시적 인력 중심 운영과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채용 방식, 인력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력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재외선거 매체별 홍보예산 재조정 등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선거관리(1131-305)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재외선거 홍보방식에 대한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와 달리, 동 사업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4억 6,200만원(60.6%)을 집행하고,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재외선거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는 1억 2,800만원(16.8%)만을 집행하여 실제 유권자의 인식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체환경의 변화,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및 재외국민의 매체활용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체별 홍보 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홍보 효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탁선거관리(1131-30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법적 근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결산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예외로 두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17조 상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사업수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참관프로그램 추진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별 장·관·항 간 예산 이용의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 별도 프로그램(항)에 편성된 사업인 “서울국제선거포럼(7132-345)”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음 ○ 또한, 실제 집행에서 항공임 및 숙박비 등에서 세부사업 예산 구별없이 집행하고, 사업수행업체에 과목별 구분없이 사업비를 일괄 지급했으며, 교통수단 임차에서 차량 사양,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단가로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정통제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인건비(7101-1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앙선거관리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연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건비 30억 1,3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이용하는 등 총 3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제22대 총선 이후 복직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였고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및 세목조정 등으로 65억 3,500만원을 다시 증액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당시 선거 직전 휴직자 발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총선 이전 선관위에서 약 160명 이상의 인원이 휴직 상태에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건비 관련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 과도한 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인건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용 및 불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반복적인 인건비와 타 사업 간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3년간 휴·복직자 추계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적정 인건비 예산을 반영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후 불필요한 휴직이 대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휴직으로 인한 인력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운용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선거지원단에 지급된 성과수당은 성과수준, 성과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선거법 등 법규평가에 대한 성과수당의 경우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이 2만원 미만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법규평가의 심사 목적인 ‘선거법 이해도’는 공정선거지원단 자체의 자격 요건으로 이를 평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법규평가 우수자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을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특별정려금의 지급범위 확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및 사례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나, 특별정려금(精勵金)의 경우 선관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그 밖의 파견·위촉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지급 대상을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률의 위임에 따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대상으로 파견·위촉공무원도 명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사례금이 인상되어 처우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거사무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14시간 내외에 이르게 되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대부분의 위촉공무원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종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사무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정려금의 지급 범위가 파견·위촉 공무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A-WEB 활성화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7132-34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앙선거관리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2024년 사업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하였고, A-WEB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문제가 있음
* A-WEB(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선거관리 관련 국제기구
- A-WEB은 사업 성과지표로 ‘A-WEB 운영활성화’를 설정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목표 9.3 대비 실적 8.0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음(달성도 86%)
- 설립 이후 A-WEB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ODA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고 A-WEB 운영지원 보조금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는 더욱 축소되었음
※ 2017~2025년 A-WEB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7,948</td><td>7,896</td><td>1,501</td><td>1,189</td><td>1,373</td><td>1,313</td><td>782</td><td>912</td><td>73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재원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td></tr>
</table>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7.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부(6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세입 예산 과소 계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세입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는 등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규모 세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 세입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지방이양 사업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지방이양은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간 재정 능력 차이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및 예술인·체육인의 활동 기회 격차로 직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민간 투자가 활발한 대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실질적인 문화 향유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간 문화예술, 체육분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문체위 전체회의(2024.11.19.)에서 채택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의 취지에 따라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예술인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율은 11.5%, 산재보험 가입률은 23.5%에 불과하며, 평균 보상액 또한 낮은 수준임. 지난 5년간 산재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예산으로 4억 2,888만원을 투입했지만, 홍보 효과는 매우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과 보상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공정한 심의 절차 등의 확보로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함께누리 지원(1633-304)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수행하는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지정공모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단체(빛소리친구들)가 특정 인사(김건희 팬클럽 대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량영 코바나콘텐츠 임원 등)와 연계되어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함께누리지원사업에서 특정 단체가 장기간 지정공모를 받고 있으므로, 지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공정한 심의 절차 도입, 공모와 지정사업의 적절한 비율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국립디자인 박물관 개관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635-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위한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용역 유찰 및 조달시스템 개편에 따른 재공고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 예산 7억 4,200만원 전액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유찰과 조달시스템 개편에 따른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과 일정 관리,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해외 주요 박물관에 우리 문화유산 전시 및 한국관 설치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2831-300), 관광진흥개발기금 -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4362-306)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가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수 실적이 저조하며,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 수요에 부응하는 전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주요 박물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우리 문화유산 전시를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토대로 한국관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것		
7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성과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2032-301)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매년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과 성과 달성을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예산 불용 주의 및 조속한 위원회 구성 필요**	관련사업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2032-303)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종합계획 심의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2023년과 2024년 관련 예산 집행률은 각각 39.3%, 35.2%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속히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9	**세종학당 사업 목표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532-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세종학당 수료생 수는 매년 35,0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목표치(수료생 수)는 매해 2만 명 초중반 수준에 불과함. 성과목표가 현실에 비해 낮게 설정됨에 따라 매년 달성률이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목표 관리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또한,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실질적 이익 부족 및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역할 미흡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에도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63개소가 지정해제되었고, 그 중 73%인 46개소가 자진해제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 신규 지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과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며 목표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3131-304)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재외문화원 운영 사업 집행 관련 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경비 재원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 경비에서 마련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필요 필수경비에 대해 면밀히 산정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11	**분기별 집행률 점검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통사찰보존’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콘텐츠공정상생 센터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불공정피해 신고 건수가 콘텐츠 산업 규모 대비 매우 적고, 신고 접수 이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바, 당사자의 합의나 권고 이행에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콘텐츠공정상생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불공정피해신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13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통폐합 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1231-303)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재외한국문화원, KOTRA 해외무역관 등 유사 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추가 설치 및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22년 10개소를 운영하던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27년까지 총 50개소로 조성 예정하고 있는바 현행 성과 평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인 사업효과 검증 및 성과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배점 방식을 개편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기존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K-콘텐츠 펀드 게임 계정 신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K-콘텐츠 펀드는 문화계정, 영화계정으로 나누어 각 산업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임 산업에 대한 별도 계정이 없어 모태 펀드 중 게임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게임산업은 2022년 이후 이용률 감소, 수출액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게임 분야 벤처투자 실적도 전체 벤처투자 실적의 1.6%에 불과함 - 게임 분야는 타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 기간이 길고, 실패 확률도 높아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가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게임산업에 투자비율을 늘리고, 게임펀드 신설 등 맞춤형 운용을 통해 게임산업 지원을 두텁게 할 것		
15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비율과 정부 출자비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중 일부 계정이나 개별 자펀드에서 주목적 투자비율이 정부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일부만 정부 목적대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되는 등 정부 예산이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민간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을 정부출자비율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자금 공급이 지연되어 출자 사업의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펀드 결성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연장 허용 기준 강화, 민간 운용사 선정·결성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17	**모태펀드 문화계정, 최소 수익률 낮아 운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현재 운용 중인 문화계정 자펀드의 경우 기준수익률이 1% 이하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운용사의 성과 창출 유인 및 정책의 신뢰성이 낮아지면서 민간 자금 유치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 자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장르별 또는 시장성·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보수는 수익률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콘텐츠 전략펀드의 민간자금 적극적 유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콘텐츠 전략펀드는 민간자금 유치가 어려워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당초 계획한 목표조성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아진 바, 대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당초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전략펀드가 정책펀드로서의 취지와 정당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간출자자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지방보조사업 예산집행 관리 기준 보완 적극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전주독립영화의집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설계 지연(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연속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함 -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예산의 이월과 미집행이 결국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내년도 완공을 앞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문화유산 발굴과 같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산집행점검 관리의 예외로 하여,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게임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게임산업육성(1232-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은 모바일 게임, PC 게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콘솔 게임이 모바일 게임, PC 게임과 동일한 비중의 지원을 받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지원에 있어 모바일과 PC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내 게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것		
21	**국비보조사업 사전 확인 절차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1232-303)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대구시 미래미디어 실증 및 영상관 조성’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수요나 준비 없이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이후 지자체가 사업 수행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비보조금 5억원이 전액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보조사업 편성 시 국회 예산반영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수요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부문장 인건비 사업비 전용사용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혁신 부문장’이라는 직제를 예산 확보 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직제를 시행하고,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 혁신 부문장 직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것		
23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1232-306)	제도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적사항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은 영상물 산업의 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미 있는 제도의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등급분류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논란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 인력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등급으로 유통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등급분류 기준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신기술 문화 R&D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획단계 설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1234-61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메타버스 문화공간 IP 확보 기술개발 R&D 과제는 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재정효율화 지침에 따라 예산의 80%가 감액되면서 연구수행기관이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이 전액 불용되고 연구 공백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불가피한 예산 감액 등 외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를 관련 과제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신기술 정책의 일회성 대응 지양과 지속가능한 정책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7132-303)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2022년 신규 편성되어 2024년까지 약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의 특성 및 기술 확산보급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2025년 예산 미반영으로 종료되었음 -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정책 축적과 성과관리 및 인프라에 대해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신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회성 산업육성 프레임이 아닌 장기적 문화생태계 안에서 기술·콘텐츠·인재·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을 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영화발전기금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필수적인 재원이나, 부과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기금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영비법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법개정을 통해 2025년 3월 25일부터 징수가 재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7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영화발전기금 - 영화영상로케이션 지원(1261-308)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외국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예산 현액 10억 2,400만원 중 8억 6,400만원이 이월되고 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사전제작 단계에서 신청을 받아 편집 완료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므로 제작 단계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일과 지원금 지급일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지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언론진흥재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 및 환수필요	관련사업명	언론진흥기금 - 언론기금기금관리비(7279-200)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사전품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를 사전품의 없이 집행한 후 품의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집행내역에 허위 사실를 기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할 것		
29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143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2024년도 미디어시장조사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집중도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자체평가가 있는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상 불용액이 약 3,800만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 1억 5,600만원의 24.3%에 해당하는 금액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비목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필요예산을 책정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증액해 여론집중도조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30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신문발전기금 총괄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최초 연간 250억원 규모(사업비 200억원)에서 현재 100억원(사업비 80억원) 규모로 축소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원 구조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재원 부족으로 기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사가 총 655개 지역신문 중 82개(약 12.52%)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신규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의 경제적 편익이 조정 처리 건당 약 1,460만원으로 2024년 기준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대비 4배 이상인 약 575억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확충으로 대한민국 갈등지수를 개선해 GDP 상승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32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193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42개 부처 중 10개 부처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컨설팅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성평등가족부 등 10여 개의 부처 또한 3년 동안 한 해만 1~2건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함 ○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컨설팅 과제 중 최근 3년 동안 17.7%를 지원받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각 부처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민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홍보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KTV의 저작권 관리 역량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TV 운영(3831-300)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KTV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전송한 행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위한 수임료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36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음 ○ 국가 저작물을 개방·공유하는 아카이브 운영기관으로서 KTV의 저작권 인식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		
34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한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계획액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및 변경안을 통해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지적되어 왔고 2022년 평가 결과 ‘감축’으로 결정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사실상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년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계획액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매년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집행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44곳이 참여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당 참여 제휴업체 수는 평균 22곳에 불과한데, 이는 제휴업체 참여 시 혜택이 없고 관광객 할인에 대한 정산지원금이 없기 때문임 ○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자 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계획하였던 주요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통해 발급하고 QR코드로 할인증을 발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참여율이 낮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이 불가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지역별 할인 혜택 제공 사용처를 확대하고, 향후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계획 편성 취지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36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관리 개선**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310)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전년도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액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집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지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예산 편성 시 반영한 실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률 지역별 편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대구 94.1%, 광주 93.2%, 울산 87.9% 등 실집행률이 높은 지역과 충남 69.9%, 충북 70.7%, 서울 71.6%, 강원 73.5% 등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의 편차가 발생 중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실집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것		
38	**국립체육박물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5261-315)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립체육박물관 건축 공사는 2020년 1월 개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립체육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 박물관 운영 및 스포츠 유산 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규정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체육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 박물관 운영 및 스포츠 유산 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5461-302)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실적이 48.2%로 저조한데,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결과 미배정 및 불용 처리된 경기장·훈련장 개보수 및 국제방송 신호제작 예산의 경우, 미배정 사유가 경기장 휴관 및 노후화 문제 등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항들이었음에도 당초 예산편성 및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결국 해당 예산이 불용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지연 및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법정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미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40	대한장애인체육회 정 가맹단체당 2명씩 인력 증원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556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중 구술·실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도 체육지도자 시험 중 종목단체들의 실무적인 실수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종목 가맹단체 운영인원이 적어 실무자들의 역할이 가중되기 때문인바, 인력 수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장애인체육 등록선수 규모는 비장애인 대비 적으나, 장애등급 분류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훈련·대회 지원 등 절대 업무량이 많아 가중되는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 직원 퇴사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22년 16.7% → 23년 27.5%)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적정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33개의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2025년 5월 기준으로 7개소만 설치가 완료되었음. 예산 편성 당시 19개소 설치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법정기한인 2026년까지 방화막 설치완료가 필요함 ○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 예산 확정 시기의 차이로 지방비 매칭에 실패하거나, 설치공사로 인한 휴관 부담과 지자체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방화막 설치사업을 중단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이 법정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사업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42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지자체의 사업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2024년 실집행이 0원이 사업이 존재하는 등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소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해외거점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1231-303)	주의,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의 개소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 부진이 예상되자 신규 센터 개설에 편성된 예산을 편성 취지와 맞지 않게 기존 센터에 배정 및 집행함 - 이는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체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할 것(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제도개선)		
4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등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1632-317)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립전통예술중고에서 허위 예산 편성과 집행 문제가 발생했으며, 방한·방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입시 및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충돌과 물품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로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하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정상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137-302)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정부는 교육재정의 일원화 지원을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의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일방적 방침으로 국회의 동의 및 승인 없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약 50% 감축됨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이 열악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예술강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6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137-302)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없는 다른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사업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지급된 보조금(3,000만원)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수행 -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3개 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전용한 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할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예산 불용 주의
및 실집행률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2151-302)</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자체의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 부동산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24년 148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도 35.8%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4">문화체육관광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본예산
(A)</th><th>집행액
(B)</th><th>불용액</th><th>교부율
(B/A)</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교부현액
(a)</th><th>실집행액
(b)</th><th>차년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2020</td><td>14,843</td><td>13,873</td><td>970</td><td>93.5</td><td>13,873</td><td>9,061</td><td>22,934</td><td>8,022</td><td>13,414</td><td>1,498</td><td>35.0</td></tr>
<tr><td>2021</td><td>10,690</td><td>10,290</td><td>400</td><td>96.3</td><td>10,290</td><td>13,414</td><td>23,704</td><td>8,524</td><td>14,618</td><td>562</td><td>36.0</td></tr>
<tr><td>2022</td><td>12,023</td><td>8,623</td><td>3,400</td><td>71.7</td><td>8,623</td><td>14,618</td><td>23,241</td><td>7,863</td><td>13,342</td><td>2,036</td><td>33.8</td></tr>
<tr><td>2023</td><td>23,531</td><td>18,211</td><td>5,320</td><td>77.4</td><td>18,211</td><td>13,342</td><td>31,553</td><td>10,121</td><td>21,198</td><td>235</td><td>32.1</td></tr>
<tr><td>2024</td><td>31,315</td><td>16,423</td><td>14,892</td><td>52.4</td><td>16,423</td><td>21,198</td><td>37,621</td><td>13,456</td><td>20,585</td><td>3,580</td><td>35.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 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집행률이 24.9%로 저조한 바, 이는 공연·전시 인프라 및 접근성 부족에서 기인하고, 음악 콘서트 및 페스티벌로 이용 가능 장르를 확대하였으나 순수예술 이용 촉진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역별 지방비 매칭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시기가 상이하여 사업 혜택에 지역간 차별이 발생함 ○ 사용처는 YES24와 NOL티켓 두 개 회사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역 공연·전시 접근성도 여전히 부족함. 사업기간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하고 이월 집행하였으나 발급률 79.8%에 비해 이용률은 34.2%에 그쳐 정책효과 체감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공연장과 전시장 확충, 순회 공연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지역에서 매칭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월·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다양화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집중 홍보에 노력할 것		
49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 검증 및 수수료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	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플랫폼사의 수익 구조로 전락하고 있음 - 숙박업체는 플랫폼사에 평균 11.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 혜택이 반감됨 - 2024년 부당 가격 적발 건수는 619건인데 관련 모니터링은 참여업체 중심과 표본 한정으로 관리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할인권 발급 전후 가격검증제를 도입하여 실질적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고,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하여 플랫폼 수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실집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2024년부터 지원대상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비중이 급감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사용 및 현금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적발 실적은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시설 확대 등 이용자와 가맹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 규모의 계획을 편성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유·청소년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51	**스포츠 R&D 예산복원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5362-606),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5362-614)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신규사업 편성도 없으며, 계속사업도 시기만료로 사업종료가 되고 있음 - 예산 규모가 2022년 207억원에서, 2023년 139억원, 2024년에는 29억원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연구과제 수도 2020~2022년까지 3년간 7건에서 2023년부터 4건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R&D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적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사실상 2025년 3월말 모펀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2025년 7월 현재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이처럼 모펀드 및 자펀드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음 - 당초 2024년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4,0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민간 참여기관들과의 출자 여부 및 규모, 참여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었고, 민간 출자 규모 또한 목표의 절반 수준인 600억원만 모집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되었으며 자펀드 조성 목표도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1231-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 모두에서 2023년~2024년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5년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연간 채권회수 실적은 대위변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2024년 기술보증기금에 175억원, 신용보증기금에 75억원이 출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 완성보증계증의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각각 44억 6,000만원 및 42억원 감소하여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
※ 2024년 완성보증계정(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23년말
기본재산(A)</th><th>2024년 출연금</th><th>2024년말
기본재산(B)</th><th>증감
(B-A)</th></tr>
<tr><td>기술보증기금</td><td>767.4</td><td>175</td><td>722.8</td><td>△44.6</td></tr>
<tr><td>신용보증기금</td><td>193</td><td>75</td><td>151</td><td>△42</td></tr>
<tr><td>합계</td><td>960.4</td><td>250</td><td>873.8</td><td>△86.6</td></tr>
</table>
주) 기본재산 = 전년도 결산 자본총계 + 당해연도 출연금 - 대위변제금 + 회수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해 완성보증계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게임산업 육성(1232-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게임인재원 운영’은 최근 정원 미달 규모 및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제4기 교육생 65명을 모집할 때 선발인원이 56명으로 9명이 미달되어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고, 이후 2023년 제5기 교육생부터 모집인원이 12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선발된 인원은 2023년 106명, 2024년 94명, 2025년 91명으로, 정원 미달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교육생 중도 탈락 및 졸업 현황을 보면, 제2기 교육생부터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생 수가 목표인원(정원) 대비 2022년(제4기)은 64.6%, 2023년(제5기)은 57.5%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 - 현재 교육 중인 제6기(교육기간 : ’24.3. ~ ’26.2.) 교육생 또한 1년차 교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24년 12월말 기준 입학인원 94명 중 27명(28.8%)이 중도 탈락하여 67명만 교육 중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기적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분석하여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출자구조 전환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이 실제 투자로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장기간 운용사 계정에 방치되는 구조는 불요불급한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출자금이 전액 자펀드 운용사로 납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투자 추정액을 제외하면 약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각 자펀드 운용사 계정에 남아있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6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137-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아동과 청소년(취약계층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술 교육지원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극단'은 연차별 국고 지원 비율이 감소하여 7년차 이후부터는 국고 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자립형 모델로 전환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극단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개인 성장과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예술의전당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술의전당 지원(1631-304)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예술의전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예술·공익사업보다 세금납부·시설유지 등 행정성 경비에 집중 사용되면서, 보조금 집행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 편의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술의전당은 2017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2018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예술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즉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이 국고보조금을 세금 납부 등 행정 편의적 지출에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이 자체수입으로 세금을 충당하고, 보조금을 예술 및 공익사업에 우선 편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집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 세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에 발생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예술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또는 감면대상 명확화를 추진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법령 개정·제도 변화 시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견 개진 및 부처 협의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예술의전당 대관료 현실화 및 사업 기조 변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술의전당 지원(1631-304)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현재 예술의전당은 대관 공연 위주로 사업 운영중이나, 대관료는 민간 공연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부처의 지원사업 또한 예술·공익사업 지원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중되어 있음 ○ 순수·기초예술 장르 예술가인 클래식 음악가, 성악가, 배우의 공연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순수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클래식·오페라 등 순수·기초예술 장르 공연 다수 개최는 타당하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한 우리의 '문화예술'은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대관료 현실화를 통해 대관공연에 따른 수익률을 제고하고, 본연의 업무인 예술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K컬쳐 세계화에 따른 개최 공연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 기조 변화를 검토할 것		
59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사업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1232-307)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은 민간 자율심의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사업이나, 최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하여 모니터링 인력 및 지원사업은 답보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적 기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전문 모니터링 인력의 재교육 및 처우개선 그리고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노후 국립지방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지방박물관 운영(2831-301)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국립지방박물관 중 건립 40년 이상 4개소, 30년 이상 5개소, 25년 이상 2개소 등이 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누전, 화재방지 안전관리 시설 보완이 시급함 -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수로 인한 유물 피해를 지적당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는 2005년 건립되어 내구 연한이 20년 지난 상태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후 국립지방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것		
61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 사업의 상시 추진 및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언론진흥기금(총괄)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정부의 광고 중에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기사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언론진흥재단의 광고 의뢰시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현황 파악도 되지 못하고 있음 - 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11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협업으로 기사형 광고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968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신뢰 확보와 정부 광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언론진흥재단이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내 상시 시행해 공개하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516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문화체육관광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은 평균 97.2%로 교부는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지자체의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문화체육관광부</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th></tr>
<tr><th>본예산
(A)</th><th>집행액
(B)</th><th>집행률
(B/A)</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현액
(C)</th><th>집행액
(D)</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D/C)</th></tr>
<tr><td>2020년</td><td>248,540</td><td>245,404</td><td>98.7</td><td>245,404</td><td>206,650</td><td>452,054</td><td>91,164</td><td>353,280</td><td>7,610</td><td>20.2</td></tr>
<tr><td>2021년</td><td>251,032</td><td>245,532</td><td>97.8</td><td>245,532</td><td>353,280</td><td>598,812</td><td>190,168</td><td>406,484</td><td>2,160</td><td>31.7</td></tr>
<tr><td>2022년</td><td>202,568</td><td>202,368</td><td>99.9</td><td>202,368</td><td>406,484</td><td>608,852</td><td>223,380</td><td>375,359</td><td>10,113</td><td>36.7</td></tr>
<tr><td>2023년</td><td>165,473</td><td>160,083</td><td>96.7</td><td>160,083</td><td>375,359</td><td>535,442</td><td>221,420</td><td>304,552</td><td>9,470</td><td>41.4</td></tr>
<tr><td>2024년</td><td>84,787</td><td>78,700</td><td>92.8</td><td>78,700</td><td>304,552</td><td>383,252</td><td>150,832</td><td>221,743</td><td>10,676</td><td>39.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례적 이월과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실제 수요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5365-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2024년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모두 집행률이 70% 내외로 저조하므로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체육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금융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인 기금 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원금회수와 이자수입이 가능한 융자 대비 불리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은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스포츠ICT통합체계 구축 사업 집행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5261-301)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포츠ICT통합체계 구축'은 ISP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ISP 계획과 무관한 별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인 약 1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사업 기획 단계의 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정책 효과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ICT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불용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 ISP 계획과 무관한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승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와 재정당국에 투명하고 보고하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5	**장애인체육계의 행정역량 강화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체육진흥기금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5561-300)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장애인체육회 조직의 행정역량 부족과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법인화 미비 등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체육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간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사업 집행과 선수 지원이 차질을 빚고 기부 의욕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계의 행정역량 강화와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법인화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부금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인화 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것		

2. 국가유산청(2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정규직 고용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차년도 인턴기관 모집 시 인센티브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목표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규직 고용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재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정규직 고용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차년도 인턴 기관 모집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		
2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정 건전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가유산보호기금 - 수입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수입 구조를 보면 전체 수입 중 복권기금 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이 평균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관람료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평균 5.3%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 발생 방지 및 용역업체의 과업수행 기간 보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제1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 및 2024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 용역 체결 후 참석인원 증가로 행사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세목조정이 발생하고 용역업체의 실질적 과업수행 기간이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 및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 참석인원을 철저히 예측하여 향후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역업체의 과업수행 기간도 보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체계적인 예산 편성·배정 방식 마련 및 지급 여부·요율 등의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 사업은 2022년 입장료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있어 실제 관람료 감면비용과 지원금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면비용 지원금 외에 지급 중인 관람환경 개선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감면비용 지원금과 집행항목이 중복되며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보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식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람환경 개선비의 지급 여부 및 요율 등을 재검토할 것		
5	**국가유산에 대한 선제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국가유산보호기금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현재 운용 중인 옥외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은 수동 소화시설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접근 및 작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산림청에서 도입한 수관수막타워 등의 도입을 통해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가유산보호기금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2332-301)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이 상반기 대형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긴급보수를 위해 소진되어 하반기 폭우 피해 복구에 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매년 긴급보수비 예산 부족으로 긴급보수 지원 신청 금액 대비 실제 지원 금액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8.6%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유산 복구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해외 소재 국가유산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조사와 수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331-306)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해외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과 환수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해외 소재 국가유산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와 환수 노력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8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운영비 등 적정 수준의 집행계획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재료센터의 2024년 개관을 목표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공사기한이 지연되며 2억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예상 사업 기간을 면밀히 추계하여 향후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계산하여 집행계획을 세울 것		
9	**사업 추진경과 점검을 기초로 한 예산 요청 및 이월·집행부진 방지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적관리(2132-301)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량 이월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해당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이 2025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 집행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11	**집행부진 원인의 철저한 점검 및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매장문화재보호 및 관리지원(2332-302)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실집행률이 약 64.6%로 매우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점검이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집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의 지연으로 2024년 84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어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2024년 12월 사업재개 결정에 따라 2028년 12월 목표로 개관을 준비 중이므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공간 부족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고궁박물관운영(3433-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중 대부분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밀집 보관되어 있고, 수장고 포화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1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수장고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누적되고 있는 대형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 경복궁 내 수장고의 증축 불가 상황, 외부 임차 수장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외부 수장고 신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		
14	**철저한 사업관리와 2단계 공사 공정률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9)	주의	만인의총관리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며 대량의 이월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만인의총관리소는 향후 사업계획 검토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불용이 발생함 ○ 동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국회의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다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해야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종묘의 사적 이용 논란 재발 방지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발생 예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시정,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작년 9월 김건희씨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망묘루를 지인과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궁능유적본부는 해당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필요 경비를 마련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사적 이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에 맞춰 운영하고, 부적절한 사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주의) ○ 국가유산청은 ‘김건희씨 등의 종묘 사적 이용’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 및 김건희씨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의 필요성과 궁능유적본부장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며, 김건희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장소사용 요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17	**계획과 달리 미운영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운영(3433-302)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은 2024년에 2차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공사 필수기간(2~3개월)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리모델링 기간 약 10개월 동안 전체 휴관하여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목적과 집행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예방관리강화(2334-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는 드론의 상시운영을 통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 예방·대응에 대한 드론 활용 성과가 불분명하므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할 것 ○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방안도 마련할 것		
19	전통재료의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전통재료 비축·공급’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리현장에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재료를 사전에 확보·비축하여 국가유산 수리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그런데 아직까지 재료별 적정 비축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 재료의 비축량이 과다하거나 부족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비축한 재료의 공급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공급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재료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체계적인 전통재료 비축 및 비축 재료의 적시 공급을 위해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비축 재료의 공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당초 2024년 추진하려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에 수행됨에 따라,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인 1차년도 정비사업 또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21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홍보 관련 예산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1131-314)	주의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국가유산청은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 2024년 4,400만원, 2023년 2,2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고, 2022년에는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R&D)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세목변경하는 등 연례적으로 내역사업인 ‘연구개발사업관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관리’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예산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세목변경을 통한 전시부스 제작·설치 및 홍보영상 제작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관리 예산 집행 시 국회의 예산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3331-304)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 연속하여 시정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조치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음에도, 2024년에 다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해야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23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은 중도포기가 많고 정규직 전환 및 취업 유지 비율이 낮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참여인턴 107명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면직 인원이 3명으로 2025년 7월 현재 계속 근로자가 1명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효과가 매우 부실하므로 참여자 정규직 전환율 저조 등 실적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종합정비 성격의 정기보수 일반사업으로 분리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문화재보수정비(2134-7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사업별 예산 규모 및 세부 편성항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음 - 각 지자체별 국가지정(등록)유산의 보수 및 정비 신청의 규모와 재난재해 등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총액사업으로의 진행이 타당해보이나, 사업 내용 중 정기적인 종합정비 성격의 보수 사업도 존재하여 해당 사업의 일반사업 분리편성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보장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중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으로 분리편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가유산보호기금 - 문화재 돌봄사업(2133-301)	제도개선	국가유산청
		지적사항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포괄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 대상 및 범위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나, 관리대상 문화유산 대비 돌봄인력 감축으로 국가유산 상시·예방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유산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경미한 수리 등 필요한 후속조치 연계를 위해서는 전통건축 전공자 등 우수인력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유산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각 지자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 및 수행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부(59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교부기준 집행률은 높은 데 반하여, 실제 사업수행 단계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실정 - 2024년 국고보조사업 254개 중 80%에 달하는 19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단계에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43개에 불과 - 2024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4건으로 집행 부진 발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특회계 내 모든 계정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보다 다음연도 세출예산 이월액이 더 큰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사업 차질 등 우려 ○ 농특세계정의 결산상잉여금이 78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 및 공익직불기금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전출금을 집행한 문제 -구조개선사업계정 내 부족분인 4,967억원을 초과하는 전출금 6,089억원 이월 -공익직불기금 당초 여유자금운용 계획액 1,102억원을 초과하는 3,531억원 전출 ○ 2024년 보조금 편성사업 중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천연물소재전주기 표준화허브구축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전액 또는 과다 교부된 문제 ○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업시설개선, 다목적용수개발 등 대단위사업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외상공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의 지양, 타회계 등으로의 전출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외상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보조금 교부 상황을 고려하여 대단위사업의 공사를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8010-8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수입농수산물 및 배합사료에 부과되어 징수되는 관세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의무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관세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품목별로 부과·징수되는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징수된 세액을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모두 전출하는 것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 또한, 법률상 수입농수산물의 범위에 농수산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일부 누락된 품목들도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대한 의무전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 지자체 지원사업 예산의 지분취득비 편성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가의 자본보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각 시 국가가 그 지분을 회수하여 국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490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국제기구분담금 미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국제기구분담금(5031-5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분담금사업과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분담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내 부족액 발생 시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국제분담금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6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분담금(5031-5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동 사업은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으로 200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과는 성격 등이 상이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 시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이 아닌 별도의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식량원조사업 성과평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농업협력(ODA) (503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2025년에 걸쳐 식량원조 규모를 종전 대비 3배로 늘리면서 사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량원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를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연구용역의 연례적·반복적인 이월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업협상대응(5031-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등 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은 관행적인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24년은 10개 과제 중 6개(60%), 2023년은 8개 과제 중 7개(87.5%), 2022년은 7개 과제 중 4개 과제(57.1%)가 이월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요의 사전 발굴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진출국 다변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지관리기금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전체 참여 기업의 56.9%(37개)가 캄보디아, 러시아 등 단 4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한 구조로 보임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관련 진출 기업 현황(2024. 12. 기준) 】
<table>
<tr><th>국가</th><th>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th><th>활동기업</th><th>비 고</th></tr>
<tr><td>합계</td><td>117</td><td>65</td><td></td></tr>
<tr><td>캄보디아</td><td>46</td><td>14</td><td rowspan="4">37(56.9%)</td></tr>
<tr><td>러시아</td><td>17</td><td>9</td></tr>
<tr><td>중국</td><td>32</td><td>7</td></tr>
<tr><td>인도네시아</td><td>22</td><td>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통</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사업내용이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매년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기금지출 혜택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임
*광역지방자치단체별(수도권 · 광역시 제외) 지원액 비중 최고 14.9%에서 최저 1.6% 차이</td></tr>
<tr><td>시정요구(안)</td><td>❍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기사형 광고의 개선 및 정책중심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3-341)	제도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게재하거나 온라인 배너광고의 경우 단순히 기관 명칭과 로고만 노출하여 정책홍보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홍보비 등의 부적절한 비목 사용 등이 확인됨		
		시정요구(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의 투명성 및 식별성을 제고하고, 기관명 중심의 광고보다는 농정 관련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집행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12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4160-43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집행률: 2022년 41.0%, 2023년 60.1%, 2024년 69.1%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5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효과적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서 2023년부터 전략매입지구를 지정하고 전략매입지구 내 농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매입 목표량 1,300ha 중 369ha만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달성률이 28.4%에 그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매입에 있어 전략매입지구 지정 및 집중매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농지매입 방안을 모색할 것		
14	**FTA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5년 FTA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면, 매년 지출이 자체수입을 초과하는 기금 수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FTA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FTA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실투자 촉진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4년 출자금 550억원이 편성되어 4개 분야 5개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펀드 결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한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실투자금액이 스마트농업 3.7%, 영파머스 펀드 10.0%에 불과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는 조합등록 후 1년 이내 25% 이상을 의무투자하도록 기준 제시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 스마트농업 확대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펀드의 실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R&D 사업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연구개발과제(R&D)에 대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총액의 약 83.3%에 달하는 4억 9,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음 또한, 최근 3년간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처분은 15건인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2건에 불과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불성실한 과제 수행 등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제재부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밭농업 기계화’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정책 과제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일선 농가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과제 수가 감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고 있음 ※ (밭농업기계화 연구과제 수) 2022년 12건 → 2023년 12건 → 2024년 5건 → 2025년 1건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연구과제 수) 2022년 1건 → 2023년 3건 → 2024년 1건 → 2025년 0건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또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69억 8,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7.9%의 낮은 실집행률에 그치는 등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2022~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
현액(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2</td><td>33,000</td><td>33,000</td><td>33,000</td><td>33,000</td><td>19,119</td><td>52,119</td><td>9,471</td><td>42,648</td><td>-</td><td>18.2%</td></tr>
<tr><td>2023</td><td>49,000</td><td>49,000</td><td>49,000</td><td>49,000</td><td>42,648</td><td>91,648</td><td>18,737</td><td>72,911</td><td>-</td><td>20.4%</td></tr>
<tr><td>2024</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72,911</td><td>100,911</td><td>45,526</td><td>55,385</td><td>-</td><td>45.1%</td></tr>
<tr><td colspan="8">평 균</td><td>56,981</td><td>-</td><td>27.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금액을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한 무기질비료 수급안정 지원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260-37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서 2025년의 경우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동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55억원 편성되었으나, 2025년 7월 기준 25%의 저조한 집행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
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2</td><td>-</td><td>180,099</td><td>180,099</td><td>180,099</td><td>-</td><td>180,099</td><td>123,758</td><td>-</td><td>56,341</td><td>68.7</td></tr>
<tr><td>2023</td><td>100,000</td><td>100,000</td><td>98,800</td><td>98,800</td><td>-</td><td>98,800</td><td>73,921</td><td>-</td><td>24,879</td><td>73.9</td></tr>
<tr><td>2024</td><td>28,815</td><td>28,815</td><td>28,815</td><td>28,815</td><td></td><td>28,815</td><td>22,365</td><td></td><td>6,450</td><td>77.6</td></tr>
<tr><td>2025. 7.</td><td>-</td><td>25,500</td><td>6,400</td><td>6,400</td><td>-</td><td>6,400</td><td>6,400</td><td>-</td><td>-</td><td>25.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무기질비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2274-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10%까지 높일 계획이었던 ‘인증면적 비율’은 감소하여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농약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5차 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농약 살포 등 외부위협으로부터 친환경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도시농업관리사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도시농업활성화(2250-38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도시농업관리사는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7월 현재까지 13,63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4년 행정조사(2024.1.1~2024.12.31) 결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1,407명으로 나타나 자격 취득자의 10%에 불과한 실정임.
【 도시농업관리사 취업현황(2024년 기준) 】
<table><tr><th>합계</th><th>서울</th><th>부산</th><th>대구</th><th>인천</th><th>대전</th><th>광주</th><th>울산</th><th>세종</th><th>경기</th><th>충남</th><th>전북</th><th>전남</th><th>경북</th><th>경남</th></tr><tr><td>1,407*</td><td>232</td><td>106</td><td>39</td><td>88</td><td>6</td><td>4</td><td>4</td><td>24</td><td>713</td><td>30</td><td>79</td><td>8</td><td>69</td><td>5</td></tr></table>* 조사기간(2024.1.1 ~ 2024.12.31)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식품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은 식품분야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인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2024년에 양 사업에서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기업이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지원을 방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의 유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할 것		
23	**K-미식 붐 활성화 사업의 유사사업 중복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K-미식 붐 활성화’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간 중복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 붐 활성화 사업이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K-미식 붐 활성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한 정보가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을 뿐 별도의 외국어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해외의 잠재소비자에게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와 이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식당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사업효과 제고**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푸드서비스선진화(2837-37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소지가 있음 * 해당 내역사업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외식업체(1,850개소)의 경영 컨설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4개소),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165개소)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또한,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의 수혜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집중되는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투입의 효과성 저하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임의 사용을 지양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의 정책지원 편중구조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은 기존 수혜업체에 정책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고,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위반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 * 2024년에 기존 수혜업체에 대한 지원율이 93.4%로 증가 **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위반 업체 2019~2023년 연평균 20개(6.7%)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것		
27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의 경쟁제한요인 점검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전체 수리시설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고시와 달리, 농업생산기반시설과의 관련성이 낮은 수리시설 실적을 30%만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경쟁제한 소지가 존재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부당한 경쟁제한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 -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에서 농협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액인 연산별 시장격리곡 매입 금액이 원금 기준 3.5조원 규모에 달하여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공하는 등 적절한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29	**APTERR 수원국 운영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 -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APTERR(ASEAN+3 비상 쌀 비축제,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수원국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19억 5,000만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으나,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APTERR 수원국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선제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비용을 집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당초 내실있게 수립되지 못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추진방식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ISP · ISMP 수립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1	**콩 수매·비축 계획액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공공비축 시행계획 상 콩 비축 계획물량이 6만톤임에도 불구하고 콩 수매 · 비축 계획액을 2만 5,000톤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수매대금 지급지연이 나타나는 한편, 추가적인 금융비용 22억 7,400만원을 지출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수매대금 지급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콩 수매 · 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 상의 계획물량에 맞게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새만금지구개발(4043-33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내부개발’ 사업은 2024년에 농업용수 공급공사 발주 예산 5억원을 불용하였는데, 농업용수 미공급으로 인하여 농업특화단지 및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등 농생명용지 활용 사업의 운영이 저해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완료하고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3	**농식품바우처 카드의 취약계층 낙인효과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3041-38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현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있어, 카드 사용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인하여 취약계층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사업의 사업의무액 적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3033-30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은 최초에 여신한도의 1,200%에 해당하는 농산물 의무구매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를 미세조정하지 않고 2~3개월만에 1/2 수준인 600%로 급격히 완화하여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들의 여신 이용현황 및 사업의무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무액을 적정규모로 재설정할 것		
35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보조)(3033-311, 3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를 편성하며,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은 저탄소영농활동에 필요한 저메탄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내 출시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기본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분야 실집행률은 0.5%에 불과하고, 젖소의 저메탄사료 급이 실적은 전무함 ○ 젖소용 저메탄사료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미완료로 2025년에도 출시가 불투명하여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이 기본여건 미비로 인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7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지출 조정 검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보조)(3735-315, 32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지원에 매년 800 ~ 9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료 자급률 목표(2023, 2024년 82.4% → 2025년 80.9%)와 실적(2023년 82.4% → 2024년 79.0%)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지출 조정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축산환경관리원의 계약 체결 법령 위반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30)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축산환경관리원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2024년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형식상 연도별(2024, 2025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국고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이 계약 사무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9	**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의 보조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한편, 발매수득금 등 자체수입으로 말산업 진흥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나, 보조금과 한국마사회의 운영경비가 혼용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성과 측정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 승마대회 지원, 생산농가 역량강화, 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운영경비 중 약 4억원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운영경비 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종자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종자산업활성화지원(6432-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2020~2025. 7.) 접수된 조정신청이 단 3건에 불과하고, 그 3건 또한 1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분쟁종자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분쟁종자조정제도 최근 5년 운영실적 현황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 7.</th></tr>
<tr><td colspan="2">조정 신청건수</td><td>2</td><td>-</td><td>-</td><td>1</td><td>-</td><td>-</td></tr>
<tr><td colspan="2">조정거부</td><td>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최종
조정 여부</td><td>성립</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미성립</td><td>-</td><td>-</td><td>-</td><td>1</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방식의 다각화,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정신청 대행 및 조정성립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농업기반시설 활용에너지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2230-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2023년도까지 출자금이 투입되고 ‘26년까지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될 예정인데, 해당 사업은 추가 투자 여부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미수립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재생에너지 시설의 고장으로 발전시설 가동중지로 인한 발전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리시설 유지보수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발전수익 일부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동 사업을 통한 정부출자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적기 대처하여 고장으로 인한 장기간의 가동중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의 통합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후변화 실태조사(2240-35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후변화가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취약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이 각각 농업·입업·용수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전문성 있는 조사 결과 도출이 예상되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조사범위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조사 결과는 농업·농촌 기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데, 현재 네이버 검색 플랫폼에서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시스템(구명칭)으로 검색되고 있어 혼동될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의 통합 기후변화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가 등록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정보시스템이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2240-4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실증 및 인프라시설 임대, 기후변화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총사업비: 594억원 - 2023년 예산현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 - 2024년 예산현액 30억 100만원 중 21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9%)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의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집행률·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3741-33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24년도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60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비 15억 8,400만원을 모두 불용하였으며, 교부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800만원의 경우에도 실집행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4.4%에 불과함 - 예산 편성시 기준으로 15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매년 평균 7개소에 불과하고 사업대상자별 평균 교부액은 5,200만원에 그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이행점검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동물복지 · 안전 관리 강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동물복지 · 안전관리 강화(3741-33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입양 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등록제를 안착시키는 것을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마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유실 · 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 구조 · 보호된 유실 · 유기동물의 분양 · 기증률은 31.6%~39.5%로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실 · 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 ·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실 · 유기동물의 분양 · 기증률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3741-347)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는 전문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당해연도 지원 기업들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만족도’ 임. 동 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현 성과지표만으로는 동 사업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기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신생산업이어서 반려동물 사료를 제외한 타 분야에 대한 통계가 없는바, 현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별 수출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반려동물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3740-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영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9년~2024년에 동 사업은 55개소를 선정·지원하였는데, 이 중 12개소(21.8%)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중단 - 2024년도에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5곳 존재하고, 교부가 이루어진 16개 지역 중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한 지역은 단 두 곳에 불과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은 2024년도에 18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57억 9,800만원 중 실집행한 금액은 36억 500만원(실집행률 62.2%)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도에 교부한 30억원을 2024년까지 재이월(28억 1,600만원)하여 사업을 완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에 교부한 12억원과 2024년에 교부한 18억원이 2025년도까지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4135-39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사업방식 변경(민간보조 → 지자체보조) 등에 따라 68.9%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2024년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tr><th>예산현액</th><th>실집행액(B)</th><th>불용액</th><th>실집행률(B/A)</th></tr>
<tr><td>4,300</td><td>2,961</td><td>1,339</td><td>68.9</td></tr>
</table>
○ 또한 검진대상이 ‘51세~70세’이나, 70세 이상 농업인의 유병률이 높고, 유사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이 71세 이상도 검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유병률: 50~69세 5.6%, 70세 이상 8.0%
○ 병원검진형에 비하여 이동검진형으로 시행한 지자체의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검률: 병원검진형 74.5%, 이동검진형 80.2%</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과 검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검 대상자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융자 자금 조기소진*에 따라 일부 청년농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8,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이 2024년 8월에 전액 소진 ○ 청년창업농 선발인원 확대로 2024년 청년농의 임대 신청면적이 1만 2,471ha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지원 면적은 33% 수준인 4,108ha에 그침 ○ 후계농 자금의 대출조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귀농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들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2023년 영농이탈자는 1,225명으로 영농이탈률이 9.72%에 달하나, 영농정착금 지원기간 이후 영농이탈률은 파악조차 되지 않음 - 의무사항 위반자 중 '전업적 영농 미유지'는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만 환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전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청년의 농촌정착이 활성화되도록 영농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경영이양직불(1070-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4년 신규 내역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약정 체결 농지 면적도 목표 대비 35.4%에 불과하였음 * 126억원 중 16.6%인 20억 9,400만원 집행 - 이는 과도한 목표 설정 및 근거 법령 마련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기인 ○ 고령농 등의 영농은퇴·농지매도 의사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청년농에 대한 농지공급량 확대를 전제로 추진한 결과 집행부진이 발생되었음 - 상기 사업 외에도 관련 사업인 은퇴직불형농지연금(집행률 4.1%), 임차임대(집행률 26.9%) 사업도 동일한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의 영농은퇴·농지매도 의사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유가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3031-306)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69억 7,200만원이 전액 불용됨 * 평균 판매가격: 등유 1,097원, 중유 1,016원 ** 기준가격: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률이 2020년 62.5%에서 2024년 41.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1조 7,964억원 중 7,453억원 수납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4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와 다른 사업변경 재발 방지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의 지원대상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함 - 당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스마트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함 ○ 지원대상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2024년 사업비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 변경으로 인한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공익기능증진
직불제도의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기준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중 소농과 면적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형 직불제가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선택형 직불제* 비중은 9%에 불과함
* 친환경 농업, 경관보전, 논 활용 같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지원
○ 또한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수급 준수사항 중 일부 항목(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교육이수 등)은 이행점검 항목으로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제도가 공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2024년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9.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실집행액(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실집행액
(실집행률)</td><td>5,032
(11.2%)</td><td>5,341
(9.7%)</td><td>5,357
(9.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과거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금 계획안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7</td><td rowspan="3">집행률 저조
해소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농촌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시설확충 등을 통해 RE100*을 실증하는 것으로, 2024년 실집행률이 15%로 부진하였음
* RE100: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 2024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실집행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5">사업시행주체</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교부액</th><th>예산현액
(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농어촌공사</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td><td>-</td><td>100.0</td></tr>
<tr><td>지자체</td><td>2,566</td><td>2,566</td><td>1,924</td><td>1,924</td><td>385</td><td>1,539</td><td>-</td><td>15.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되는 집행률 저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2018년~2019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2018~2019년에 선발된 청년농들의 대출상환 압박 문제를 감안하여 이차보전사업(2024년 5,577억 2,200만원)을 확대하고, 2020년이후 청년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대출상환 조건</th></tr><tr><td colspan="2">2020년이후 청년농</td><td>5년거치 20년 상환</td></tr><tr><td rowspan="2">2018년~2019년 청년농</td><td>후계농자금</td><td>3년거치 7년상환(최대 5년 유예가능)</td></tr><tr><td>귀농자금</td><td>5년거치 10년상환</td></tr></table>❍ 2024년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조기 소진 및 이에 따른 농지마련 지연으로 이와 연계되는 ‘영농정착지원금(청년농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2024년 190억 4,100만원 불용)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창기(2018~2019년) 청년농 선발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금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축산발전기금 -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 33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농림축산식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축사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실집행 부진으로 과다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교부한 것에 기인함
※ 2024년 실집행 실적
<table>
<tr><th colspan="2">내역사업</th><th>실집행 실적</th></tr>
<tr><td>축사악취
개선</td><td>융자</td><td>예산현액 270억 3,000만원 중 66.1% 실집행
(2024년 교부 182억 5,000만원, 이월금 87억 8,000만원)</td></tr>
<tr><td rowspan="2">공동자원화시설</td><td>보조</td><td>예산현액 265억 4,300만원 중 79.6% 실집행
(2024년 교부 159억 9,800만원, 이월금 105억원 4,600만원)</td></tr>
<tr><td>융자</td><td>예산현액 123억 2,100만원 중 44.0% 실집행
(2024년 교부 66억 7,300만원, 이월금 56억원 4,800만원)</td></tr>
</table>
- 농식품부는 2023년 결산심사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지자체로 교부함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2. 농촌진흥청(1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고객현장지원 사업예산 일반회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고객현장지원(7136-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고객현장지원 사업의 예산은 민원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일반회계성 예산이고, 사업분류코드 또한 행정지원 프로그램(7100)에 해당하여 농촌진흥청 기관 고유업무에 속함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향후 고객 현장지원 사업 예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전문연구원제도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1131-300), 작물시험연구(1132-300), 원예특작시험연구(1231-300), 축산시험연구(1232-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국립농업과학원 등 3개 소속기관의 전문연구원 중도퇴직률이 21%~26%에 달하는 등 이탈이 심각한데, 이는 연구 중단, 사업 지연 등 R&D 사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소속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전문연구원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조사 및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전문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등 인력 유지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퇴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산품종 보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품종지역적응연구(R&D)(1133-30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품종의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로열티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정체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우수 국산 품종 개발·보급이라는 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민간연구
개발지원 사업
신청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민간연구개발지원(R&D)(1148-6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촌진흥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의뢰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민간 수요 발굴을 위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민간연구개발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
현액(A)</th><th rowspan="2">집행액(B)
[실집행액]</th><th rowspan="2">집행률
(B/A)</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1</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12[12]</td><td>15.5%</td><td>-</td><td>66</td></tr>
<tr><td>2022</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14[14]</td><td>17.9%</td><td>-</td><td>64</td></tr>
<tr><td>2023</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2[2]</td><td>2.6%</td><td>-</td><td>76</td></tr>
<tr><td>2024</td><td>33</td><td>33</td><td>-</td><td>-</td><td>33</td><td>23[23]</td><td>69.7%</td><td>-</td><td>10</td></tr>
<tr><td>2025. 8.</td><td>25</td><td>25</td><td>-</td><td>-</td><td>-</td><td>-</td><td>0%</td><td>-</td><td>-</td></tr>
</table>
(민간의뢰 건수) 2020년 12건 → 2021년 8건 → 2022년 4건 → 2023년 1건 → 2024년 1건</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신청을 촉진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성과 초과달성 사업에 대한 별도 보상제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R&D)(1133-414)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인 ‘신규 육종소재 개발’ 2023년 목표치(1개)를 초과달성(3개) 하였으나, 해당 연구진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의 연구진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1136-33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2233-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했다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향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보조금 관련
지침 준수 및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2233-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농촌진흥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농촌진흥청은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동사업의 집행 부진 정도가 단순 반복을 넘어 고착화, 심화됨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2022 ~ 202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
현액(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2</td><td>63,342</td><td>63,342</td><td>65,893</td><td>65,893</td><td>22,920</td><td>88,813</td><td>54,658</td><td>32,755</td><td>1,400</td><td>61.5%</td></tr>
<tr><td>2023</td><td>53,696</td><td>53,696</td><td>53,696</td><td>53,696</td><td>32,755</td><td>86,451</td><td>44,313</td><td>40,689</td><td>1,449</td><td>51.3%</td></tr>
<tr><td>2024</td><td>67,585</td><td>67,585</td><td>67,585</td><td>67,585</td><td>40,689</td><td>108,274</td><td>50,161</td><td>57,239</td><td>874</td><td>46.3%</td></tr>
<tr><td colspan="8">평 균</td><td>43,561</td><td>1,241</td><td>52.6%</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실집행률 부진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동사업 연수생의 취업통계에서 농식품분야 종사자는 평균 59%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비 농식품분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사업 연수생에 대한 취업현황 조사 시 미응답 비율이 2020년 17.9%에서 2024년 40%로 급증하는 등 기본적인 성과 추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연수생 선발 시 ‘사후 현황조사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이 2024년에 수행한 33개 ODA 사업 중 일부인 9개(27%) 사업에 대하여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프라 지원이 결합될 때 발휘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상당 수의 ODA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현재 일부에 그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 간 협력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ODA 사업의 민간역량 활용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KOPIA 센터 소장 총 20명 중 16명(80%)이 전직 농촌진흥청 공무원인 반면, 민간 전문가는 1명(5%)에 불과하고, 2024년에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ODA 사업 중 민간과의 공동수행 사업은 없어 민간 농업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향후 KOPIA 소장 선발 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내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분야 역량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ODA 사업의 외교부 사업과의 중복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ODA는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대상 기관, 대상 국가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DA 사업의 방향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농업공공기술 진흥 사업의 지원방식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1136-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촌진흥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신규 내역사업인 ‘농업공공기술진흥’ 사업은 최근에 민간이전된 기술들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이전 이후 기간이 경과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성과 측정방식 등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지원대상 28건 중 82.1%인 23건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이전된 기술을 대상으로 함
- 성과지표 중 매출액의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품 매출액을 측정하는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성과가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음
※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2024년도 성과지표
<table>
<tr><th>지표명</th><th>지표정의</th><th>목표</th><th>지표산식</th></tr>
<tr><td>고용창출</td><td>지원기업의 고용창출효과</td><td>10억원당 4명</td><td>평가연도 고용창출실적/투입예산</td></tr>
<tr><td>매출액</td><td>기술사업화 지원에 의한 기업의 매출성장 기여도</td><td>15%</td><td>[제품(개선)매출액/기업매출액]×100</td></tr>
<tr><td>사업화</td><td>지원기업 사업화 성공률</td><td>45%</td><td>(기술사업화 성공/당해년 수혜기업 수)×1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촌진흥청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의 성과측정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22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농촌진흥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은 농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부산물 파쇄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원대상 작목범위가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음
❍ 산림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을 수행
-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발생 경감과 초미세먼지 저감, 산림청은 산불예방으로 서로 차이가 있지만, 파쇄기 임차 및 인력지원 등의 사업내용이 유사
<table>
<tr><th>구 분</th><th>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th><th>산림청
(산불위험지관리 사업)</th></tr>
<tr><td>지역</td><td>전국 영농지</td><td>산림 100m 이내 인접 영농지</td></tr>
<tr><td>사업연도</td><td>2024년부터 시작</td><td>2016년부터 시작</td></tr>
<tr><td>사업기간</td><td>5개월</td><td>6개월</td></tr>
<tr><td>예산(2024년)</td><td>5,844백만원</td><td>468백만원</td></tr>
<tr><td>사업실행</td><td>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파쇄기 2,481대 / 파쇄인력 834명)</td><td>산불위험지역 10개 시·도
(파쇄기 100대/산불진화요원 13,000여명)</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안)</td><td>❍ 농촌진흥청은 파쇄지원 대상품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작업가능 범위가 넓은 파쇄기의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농촌진흥청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위해 유사사업의 부처간 사업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지연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1232-305)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2021년부터 추진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주민반대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었음 *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에 축산자원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이전(사업기간: 2021년-2029년, 총사업비: 8,153억 1,800만원)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산림청(3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주요 세입 미수납액 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 괄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 징수·수납 현황을 보면, 1조 2,430억 4,800만원 징수결정하여, 1,240억 500만원을 미수납함 -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 수납률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 발생으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각각 65.0%, 83.7%로 하락함 - 법정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체납자가 다수 존재함 -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연례적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하며, 변상금의 법률 이행효과가 미흡함 - 농특회계(임업진흥계정)에서 숲가꾸기 및 조림 등에서 세입 재원 없는 이월 발생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 방지의 효과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입 재원 없는 이월 문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 괄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9,269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9,183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85억 3,3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총 이월액 466억 9,200만원에서 결산잉여금 85억 3,300만원을 차감한 ‘세입 재원 없는 이월액’은 381억 5,900만원으로 나타남 -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은 세입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할 다음연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에 우선 집행하게 되어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산림조성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주요 세입원을 중심으로 수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65.0%이며, 미수납액은 15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7,600만원 대비 8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13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83.7%이며, 미수납액은 5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105억 800만원 대비 51억 1,5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2년도 16억 9,800만원보다는 36억 9,5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의 발생으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의 수납률이 각각 65.0%, 83.7%로 2022년도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것		
4	**집행부진 사업 점검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1538-305)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건(목재산업육성, 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으로 242억 7,0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목재산업육성: 예산현액 32,264백만원, 실집행액 10,303백만원 - 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 예산현액 2,588백만원, 실집행액 279백만원 ○ 집행부진 원인은 대부분 계약 체결 지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했다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보다 면밀하게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및 세목조정 관련 내부지침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 괄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4년도에 총 59개 세부사업에서 935건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137억 3,4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세목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상위 3개 사업에서 전체 세목조정 건수의 30.1%(지방산림청 기본경비 사업, 산불방지대책 사업, 임도시설(지원)), 전체 세목조정 금액의 40.7%(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가 나타나는 등 일부 세부사업에서의 과도한 세목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림청은 세목조정과 관련하여 내부지침이 부재하여, 세부사업의 소관 실·국마다 상이한 절차에 따라 세목을 조정하는 등 세목조정 관련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획조정관실 등 일부 실·국의 경우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의 세부사업에서 별도의 내부 결재 과정 없이 세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게 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매년 상당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의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과다한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세목조정이 내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산림협력(1331-300) 일반회계 -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ODA)(1331-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세부내역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은 개도국 산림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ODA사업이었음에도 그동안 비ODA사업으로 분류되어, ODA사업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사업추진실적·성과 등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산림청의 주요 사업은 토지황폐화·사막화 방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혼농임업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소득향상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교육 등인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산림녹화프로그램확산’ 사업의 내용상 ODA 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어야 하므로, 비ODA사업으로 예산편성된 동 세부내역들을 ODA사업으로 이관하고,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일부 사업은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을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변상금 부과를 통한 무단점유지 발생 차단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상금(57-571)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2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1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1억 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3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3.2%로 나타남 ○ 일반회계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고 무단점유지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변상금의 법률 이행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무단점유지의 원상복구 추진 원칙 아래 변상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함으로써 변상금 부과가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미수납 채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구간별로 채권관리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채권회수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무단점유 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점유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과학연구(R&D)(1251-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에 편성된 시험연구비 178억 6,7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 행사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직원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및 교육 참석 여비, 해외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기관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험연구비 통합 비목에 속하지 않는 관리용역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 ○ 이는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요구를 받았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집행의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내부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를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관련 소송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24년 설계 공모에 미당선된 업체에서 ‘당선자 결정 무효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일부 패소하고, ‘설계 용역 등 기타 일체의 후속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2025년 8월 현재 동 설계 계약은 진행률 84% 수준에서 후속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본안에 대한 항소 및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사업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조림(15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VR·AR을 활용한 첨단 산림사업 체험 및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실집행률이 50.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순연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지하수 용출 및 내화인증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K-포레스트관건립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구조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산목재 활용촉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등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세부 내역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함 - 내역사업 실집행률: (2021년) 40.6%, (2022년) 34.1%, (2023년) 35.4%, (2024년) 31.9% ○ 내역사업들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진행이 저조하고, 사업내용 및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며 차별성이 크지 않은 실정으로, 사업 종료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역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중 일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의 부적정한 통합 집행행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이용증진(1535-304) 일반회계 - 목재제품 품질관리(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부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함께 집행되고 있음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두 사업 예산을 통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강화 및 이행점검 항목 재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의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80%로 저조함 - 2022년 65.2%, 2023년 70.5%, 2024년 81.5% ○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추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행항목 준수율이 99.6%이고, 미준수 건수가 많은 항목이 산지형상 유지(3건)가 아닌, 대부분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미이수(189건)이며, 부정수급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농식품부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준수사항위반 1%,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항목 위반행위 가장 많음, 고위험군 대상 10.7% 부정수급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항목을 합리화하여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의 최근 3년간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평균 46.5%에 머물러 있으며, 임업기계장비 1대당 사용일수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4년 기준 36.6일(1개월에 3일 정도 사용 수준)에 불과해 연중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 ○ 2021년부터 국유림관리소 등에 도입되고 있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에도 2024년 기준 평균 가동률은 23.8%에 불과한 실정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와 정기적인 운용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수요와 활용빈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운용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구입계획을 수립 ·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의 2024년도 예산현액 82억 3,900만원 중 29.3%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러한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이월액 규모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월액 중 상당 규모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비가 당해연도에 계약 및 선급 지급이 이루어지고 장비 수령 및 잔금 지급은 다음 연도에 완료되고 있음 ○ 또한, 도입 장비의 계약 시점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수령 시기는 계약부터 최소 5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계약에서 도입까지 2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임도시설의 과도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자율)(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제주)(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세종)(1536-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도 임도 전체 계약 건 중 87.3%(산림청 발주 기준 93.4%)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액 중 80.8%는 산림조합과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비중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도 발표(2025.5월)됨 -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중은 평균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조합과는 평균 96.8%를 수의계약하는 등 임도 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 측정 기준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자율)(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지원)(1536-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제주)(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임도시설(세종)(1536-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3년말 기준 25,848km(임도밀도 4.1m/ha)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충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에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임도가 산불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임도 확충에 앞서 임도의 산불 진화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임도 확충·정비 시 산불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반영·차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자체수입 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 (2024년) 21억 6,300만원, (2023년) 22억 9,400만원, (2022년) 3억 8,500만원 ○ 매년 시설 운영 환경과 기준이 변화함에도 단순히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의 자체수입 산출 방식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 ○ 산림복지진흥원은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잉여금을 다시 해당 시설 운영 등의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다음 해의 예산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해당 금액만큼 국비가 과다 지원되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림복지진흥원의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녹색자금)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은「산림자원법」제5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함 ○ 녹색자금은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및 국회 재정통제가 어려움 -「국가재정법」제17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자금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됨		
		시정요구(안)	○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0	일반회계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각각 추진되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차별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녹색자금) - 산림교육치유활성화(1743-302)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통해 녹색인프라확충사업에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 내 산림치유활성화 내역사업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및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간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집행 가능성 없는 일·숙직비 예산 편성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1118-2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일·숙직비(210-06목)는 국립수목원의 일직 및 숙직근무자에게 일·숙직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2024년도 예산액 700만원 전액을 세목조정 및 이용하였음 - 국립수목원은 2019년 이후 연례적으로 일·숙직비를 이·전용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국립수목원에서 재택당직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토·일요일 사무실 일직 근무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일·숙직비 지급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여 타 사업에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백두대간보전(1933-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유사 사업이 있는데 산림청은 간접지원 성격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직접지원 성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을 검토해서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액 4,947백만원, 실집행액 2,137백만원(실집행률 43%) - 백두대간 주민지원: 예산액 4,154백만원, 실집행액 3,627백만원(실집행률 87%) -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지불제와 유사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것		
23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내역사업 재분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생물자원관리, 산림보호 예방·단속 등을 통해 산림의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사업과 연관 없는 내역사업: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수목원교육프로그램선발 및 교육지원,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 운영, 수목원 미래인재양성사업,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에 속해 있는 내역사업의 개수가 과다하고 내역사업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해 내역사업을 재분류하여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 및 산림보호단속선 운영 사업의 저조한 성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산림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동 위원회는 단 8회 개최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피해지역의 안정적 식생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식생적응력 조사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 내역사업인 ‘산림보호단속선운영’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개 선박의 총 운행현황은 68건으로 월평균 5.7회, 선박당 월 1.9회에 불과하며, 단속실적 또한 2021~2023년은 전무하고 2024년은 1건에 그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 관련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예산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제련소의 산림훼손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보호단속선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25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의 연내 착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은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수송기(C-130)에 탑재할 진화용 이동식 물탱크 1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0억원을 전액 미집행함 -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협의 실패로 추진하지 못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80억원이 재반영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군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비가 2025년도에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신속한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예산의 불용액은 약 20억원으로, 불용 사유는 진화대원의 중도포기로 인한 잔여 인건비가 대부분임 - 3년 동안 중도포기 인원은 108명이며 최근 3년간 불용액은 약 60억원임 - 중도포기 사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수당으로 4만원을 지급받는데,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직원들은 재난업무수당 8만원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향후 초대형산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례적 지적사항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		
27	**노후 산불감시카메라의 신속한 교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17개 시·도 및 지방산림청, 과학원 등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는 총 1,446대로 내내역사업인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 사업을 통하여 노후 산불감시카메라에 대한 교체 및 유지보수를 행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기준 1,446개의 산불감시카메라 중 10년 이상 노후 산불감시카메라는 131개로 9.1%에 달하며 2022년 90대에서 45% 증가한 수치임. 노후로 인한 오작동·미작동 사례 역시 2022년 299건에서 2024년 368건으로 23% 증가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산불감시카메라를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의 과다한 미집행액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감시 및 효율적인 야간산불 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5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2024년도 예산액의 미집행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동 사업의 2024년도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므로 주의할 것		
29	**산불위험지관리 사업과 유사사업 간의 일원화 추진 검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은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기를 지원하고 위험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6억 6,700만원을 전액 교부하고 이 중 5억 3,1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과 유사한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은 불법소각 근절을 통한 미세먼지·병해충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처 간 사업 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 · 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교체’는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725억원 중 72.9%인 528억 3,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현재 산림헬기 1대당 사업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산림헬기 계약 체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고 이후 납품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임.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3차년도 예산의 일부에 대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함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의 착수부터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1	**산림헬기 도입 · 교체 사업 예산의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 · 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1%에 해당하는 151억 6,000만원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산림헬기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국회도 추경을 통해 추가 도입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타 사업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집행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국산헬기 도입의 적극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 · 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운영의 주요 세부내역 사업인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항공보험 등의 재원을 타사업으로 이·전용 또는 타 목적으로 세목변경 하였음 - 산림헬기도입·교체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21%인 151억 6,000만원, 외주정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9%인 80억 800만원, 항공보험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9%인 31억 7,400만원 ○ 이는 금년 경북·경남·울산 산불(2025.3.21.~3.30.)과 같이 대형화되는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사전준비대책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산 헬기 기종의 부품수급 및 정비를 위한 계약 및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헬기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및 항공보험 예산을 타사업 또는 타목적으로 과다하게 이·전용하거나 세목변경하여 산불방지대책의 마련 및 준비가 미흡했으므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헬기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산불대응체계 통합지휘 관련 표준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정부의 산불대응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임 ○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와 재난관리주관기관 체계가 병행되는 가운데, 산불 규모에 따라 통합지휘권자가 달라지는 구조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지휘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산불 규모별 지휘전환 기준, 현장 통합지휘 본부 설치·운영 표준, 관계기관 역할분담을 정비한 새로운 통합지휘 표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진화 역량 제고 및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로 통합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림재해일자리(2331-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내 험준한 산악지역 산불진화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내 중·저지대 산불 및 잔불 진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산불현장 진화작업시에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산불재난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는 한편, 진화 역량 제고를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과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예산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 검증도 실시하지 않고,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대다수임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산불 진화의 중요성·안전사고 발생 우려·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용의 효율성·재정운영의 효과성 및 산불재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 하는 등 산불대응을 위한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연례적 미수납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0년~2024년까지 법정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 중 고액채권 비중이 높음 -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10억원 이상은 10건에 불과하나, 금액은 145억 6,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9%를 차지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로 미수납 규모를 줄여나갈 것		
36	**목재산업 육성 사업의 보조금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목재산업육성(1535-303)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목재산업 육성’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조금 전액을 일시 교부(2024.3.4.)하여 상당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목재 에너지림 조성 등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실집행률: 국산목재 활용촉진 사업(29.8%),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15.5%, 이월액 제외 시 0%),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1.2%)		
		시정요구(안)	○ 산림청은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경제적 이익 및 산불 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조림(153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림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침엽수 수종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름 함유량이 높은 침엽수가 연료 역할을 하여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 반대로 침엽수가 척박한 산지에서도 생존력이 뛰어나며 송이 생산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종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종비율
<table>
<tr><th>구분</th><th>2015년</th><th>2024년</th></tr>
<tr><td>침엽수</td><td>55.7%</td><td>62.2%</td></tr>
<tr><td>활엽수</td><td>44.3%</td><td>37.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림청은 금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조림사업 수종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제적 이익 및 산불 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td></tr>
</table>

4. 해양수산부(63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변상금 미수납에 대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이 2022년 및 2023년에는 각각 1억 7,400만원, 2024년 1억 2,8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2023년 변상금 미회수채권 건수 543건 중 채권 보전·회수 조치는 149건밖에 되지 않는 등 변상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변상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보조사업 실집행률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66개 세부사업)의 부처 단계 집행률은 100.8%(이월액 포함)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73.6%로 저조한 집행률은 사업의 실효성을 저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60개 세부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은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②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③ 광양항(3단계),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의 4개임 -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과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피보조기관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등 19개 사업)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등 19개의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여, 시험연구비가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홍보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홍보 기념품 구입 등)가 있음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등 19개 사업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로 필요한 비목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신규사업 적기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신규로 추진된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대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순연(7개 내역사업)이었으며, 그 외 지역주민 민원 등에 따른 사업 변경(2개 내역사업), 다부처 사업 중 주관부처 예산 미확보 또는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의할 것		
5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 회계연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는 23건이 해당하는데, 집행부진 원인의 대부분은 계약 체결 지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지역주민 반대, 사업 수요부족 등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집행 점검과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오염사고 방지(1031-30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 예산 불용현황 : (2022) 35.9억원 → (2023) 21.5억원 → (2024) 20억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3년간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모두 불용되었고,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결국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북 호미반도와 전남 여자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7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1033-32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은 전국 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인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해양방사성물질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실시 중인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법적 집행 가능성 없는 사업추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로 2023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에도 2024년도에 재차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는 법적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td></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을 통한 인건비의 과다이월 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해양박물관 및 해양과학관 지원 출연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인건비가 이월되고 있음
※ 해양문화시설 인건비 이월액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국립해양박물관</td><td>877</td><td>801</td><td>812</td></tr>
<tr><td>국립해양과학관</td><td>788</td><td>1,017</td><td>1,533</td></tr>
</table>
○ 2024년 개관에 따라 신규로 반영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내역을 보면 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출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금액만 편성 및 배정하는 등 출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건립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 면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 등이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것		
11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전남 완도)은 감리비 부족 및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관리 미흡이 반복 지적되고 있고, 2024년 실집행률은 0.2%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관련하여 설계 · 감리비 산정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운영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2033-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의 평가위원 관련 규정은 외부 위원 구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입찰대상자가 위원 구성을 예측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조달청 기준(정량 98점/정성 2점)에 비해 정량평가(96점) 대비 정성평가(4점)의 배점 비율이 높아 평가위원의 개입 여지가 다소 클 우려가 있음

※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 개요
- 기술평가 근거 규정: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예규)
- 기술평가위원회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으로 구성(외부위원 규정 없음)
- 평가위원 구성 : 추정가격의 고시금액 기준에 따라 3명(고시금액 미만)이상, 5명(10억 원 미만)이상, 7명(10억 원 이상)을 선정
- 평가점수 : 정량평가 96점, 정성평가 4점으로 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조달청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위원 요건의 강화, 평가항목의 배점 비율 조정 등 기술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 투명성 강화 및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부적정한 업무 처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관광육성(2034-310)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관광 인프라조성’은 중앙관서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이월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부합하지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금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재이월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14	**예산 편성시 부처간 면밀한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2046-34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사업 연기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 특정 부처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한 부처의 예산이 불용될 경우,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다부처 사업추진 시 부처 간 협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고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계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3431-301)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은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을 위해 단위수협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2023년 대상사업지 중 통영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에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다음연도로 재이월함 - 보조사업자인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재이월 승인한 6억 6,700만원을 초과한 8억 7,100만원을 재이월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위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금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4249-52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해양수산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 총 1,175건의 취약점이 존재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 대응이 곤란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각 시설별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약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17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지연, 설계 변경에 따른 절차 순연 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 바 있음 ※ 예산 이월현황: (2022) 17,017백만원 → (2023) 7,151백만원 → (2024) 2,230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는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설계 1년, 공사 1년)에서 3년(설계 1.5년, 공사 1.5년)으로 조정한 만큼 향후 사업지부터는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한 2027년까지는 모든 사업지가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보조금관리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6131-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요재산 취득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3개 내역사업별 관리 미흡 내역
<table><tr><th>내역사업명</th><th>관리 미흡 사항</th></tr><tr><td>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td><td>○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숙박업체 이용료 납부
○ 일반수용비로 상해보험비 납부</td></tr><tr><td>선박관리
전문가 양성</td><td>○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일반수용비로 보조인력 인건비 (매년 약 7개월간) 지급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납부</td></tr><tr><td>선원인권
보호교육</td><td>○ 일반수용비로 노트북 구입
○ 중요자산인 노트북 등 중요재산 공시 누락</td></tr></table>※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보조사업비는 지침 별표1과 같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자체 지급규정으로 집행하되,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 · 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원인별 대응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전년 대비 70명(74.5%) 증가 ※ (2023) 3,092건 → (2024) 3,255건(+163) / (인명피해) (2023) 94명 → (2024) 164명(+7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관리할 것		
20	**평택해수청 재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인건비(7001-101)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인데 다른 기관과 비교 및 평택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를 높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평택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위상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세입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크게 발생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납률이 75.6%로 미수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농특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2) 192.5% → (2023) 427.9% → (2024) 158.5%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 (2022) 110억원 → (2023) 193억원 → (2024) 163억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미수납액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시험연구비 비목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과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추진하는 사업임 ○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반용역비를 시험연구비로 예산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ODA 사업의 조달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발생함 ※「2025년 예산안 작성지침」 시험연구비(210-13): 국가시험 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위해 편성하는 비목으로,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편성 지양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등 구입비, 조달수수료 등은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수용비와 국내·국외여비 등 반복적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은 적절한 비목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식품산업육성(2832-313),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2832-301),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3140-410) 수산발전기금 - 수산물자조금지원(3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4월 김 양식 신규 면허구역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5년 1월 물김 가격 폭락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2024년 해양수산부가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허가 - 물김 생산량은 2024년 1월 12만 1,142톤이었다가 2025년 1월에는 15만 2,203톤으로 증가하고 이에 물김 가격은 2024년 1월 kg당 1,604원에서 2025년 1월 763원으로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 2024년 1월~5월 사이에 폐기된 물김은 54톤이었으나, 2025년 1월에만 5,989톤이 폐기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양식장 신규 면허 시 수급상황 및 가공처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면적을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양식장 면적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마른김 가공역량 확충 등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수산물 품질 안전 위한 어상자 전면교체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3040-30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정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플라스틱 어상자 721만개를 보급하였으나, 2024년 플라스틱 어상자는 총 647만개로, 74만개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플라스틱어상자 사용률(%)로, 2024년도 성과목표는 20.6%로 설정되었으나, 2022년 전체 어상자량과, 2023-2024년 플라스틱 어상자 예상 보급량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22%로 설정하였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성과 목표를 전년 전체 어상자량에서 당해 보급양을 합산한 비율로 조정하고, 플라스틱 어상자 전면교체 계획을 세울 것		
25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저온·친환경 위판장’은 전국 215개 노후 위판장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예산 6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이월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현액 119억 4,000만원 중 95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16억 1,700만원을 실집행(16.2%)하였음 - 사업장별로 지방비 미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민원 대응 및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전체 편성 보조금 중 79.9%를 교부하였고, 대부분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연도 중 사업 내용 확대·변경의 부적정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 위생관리(30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은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관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4년 예산액 40억 9,3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안심관리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정확인서 발급 관련 경비보다 홍보 및 소비촉진 관련 경비를 더 많이 집행 - 수산물 소비촉진의 경우 별도 세부사업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사업과의 중복가능성도 존재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사업과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감척사업 효과 상쇄요인 관리 및 저선령 어선 재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근해어선감척(3145-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최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예산(2021, 1,249억원 → 2024, 1,812억원) 및 감척 척수가 증가(2021, 195척 → 2024, 267척)에도 척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수산자원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척당 생산량(톤): ('20) 23.4 → ('21) 23.8 → ('22) 22.7 → ('23) 24.5 → ('24) 21.8(잠정) ※ 수산자원량(만톤): ('20) 340.5 → ('21) 344.6 → ('22) 337.9 → ('23) 359.5 → ('24) 추정중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연도별 감척목표 달성을 위해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저선령 어선까지 대규모로 폐기처리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산가치 손실을 가져옴 ※ 최근 5년간(2020~2024) 감척 어선은 5년 이하 선령의 어선이 7척, 6~10년 선령이 73척, 11~15년 124척, 16~20년이 197척으로, 내구연한인 20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감척한 어선이 401척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선마력수 증강, 불법조업 증가 등 동 사업의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들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선령 어선의 감척을 최소화하고 감척한 저선령 어선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임차인의 수요를 고려한 양식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장임대(3347-36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장임대’ 사업은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하여 양식장을 확보하여 귀어인 등에게 임대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계획했던 10개소에 대한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발생 - 사업참여를 희망한 양식장(임대인)이 61개소에 달하였음에도 이 중 42개소를 대상으로 미선정 - 16명의 임차 희망자 중 최종적으로 6명에 대해서는 상호간 조건 불일치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임차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귀어·귀촌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임차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		
29	**가격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3440-37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45억 700만원을 전액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재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3440-37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지원대상 어가(1만 2,731개)의 15%에 불과한 2,103개 어가만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2025.6.) 집행률이 50%(실집행률은 15%)로 저조하게 나타남 - 지원금액의 규모 및 지급방식이 어업인들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양식어업인 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단기적·한시적으로 논의되어 장기적 검토는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개별 어가의 실제 전력사용량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체계를 강구할 것		
31	**고수온 피해양식장 재해보험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매년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양식수산물 피해액은 1,430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20만 마리 어류가 폐사 -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적 부가상품으로, 특약 가입시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고수온 특약 가입률은 전국 평균 10%대에 불과 -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전체 80종 중 30종에 불과하고, 보상요건도 ‘10년 평균 수온 대비 3℃ 초과, 10일 지속’ 등 과도하며, 실제로는 2.5℃ 상승만으로도 참복·전복 등 폐사 사례가 급증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민들의 고수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확대하고, 고·저수온 특약 조건을 재점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경영이양 직불사업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 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경영이양 직불’은 사업시작 첫 해인 2021년에 연간 수급인원 3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까지의 누적 수급인원은 36명에 불과하고 2024년 신규 수급인원도 6명에 그쳐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함 ※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①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② 경영이양직불, ③ 수산자원보호직불,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로 구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경양이양 직불 사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3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여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사업 5건 중 2건의 추진이 지연되어 협의의사록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연말에 이루어져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 내역사업인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사업은 수원국의 조달방식 변경 및 사업 승인 지연으로 실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이 10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의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의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비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포항영일만신항(5050-32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 용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면적 5천㎡ 이상)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가 편성되지 않아 실시설계비(420-02)에서 1억 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 -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으로 인해 설계경제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시설계 및 공사 등 후속조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설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관련 항목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소형선부두 이전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기능의 도입을 위해 소형선부두 축조(180m), 어항방파제 증고(140m), 배후부지 정비 등을 실시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사업의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비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2단계 축조’는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아, 공사비에서 30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입찰 참여기업이 보상비를 늦게 받게 되어 업체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입찰 참여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보상비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반함 - (사업내용) 국제여객부두 및 해경부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 1.3㎞)를 축조하는 사업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부산항 사업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부산항(5058-307)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북항 파제제’(예산액 50억원)와 ‘연구조사선 부두’(예산액 30억원)는 2022년도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사업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항만시설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되어 2024년도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북항 파제제 사업은 예산액 50억원 중 21억 5,9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23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4억 6,000만원은 불용하였고,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은 예산액 30억원 중 29억 8,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2,000만원 불용 ○ 2024년도 두 내역사업 예산 80억 원 중 64.2%인 51억 3,900만 원을 다른 내역사업 또는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액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북항 파제제 사업: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공선 대체 계류지 조성 및 파제제(방파용 구조물) 건설 -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 해양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에 관한 연구·과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선 전용부두(285m) 확충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예산 전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 집행 및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 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2024. 12. 20. 운영개시)에 따라 필요한 보안장비(X-RAY 검색대 8대) 구매를 위해 9억 4,400만원을 2024년 10월 전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9억 600만원)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예산 대부분을 이월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시설 및 장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연간 단위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38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 및 보상 중복 청구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 정부에서 수거 실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일부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동일한 물량을 중복 청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수거 실적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실하고, 동일 해역·기간에 대해 사업이 중복집행되는 경우에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성과 관리가 단순히 ‘수거 물량’ 위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단가 부풀리기 및 중복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30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이 총사업비 협의 등 실시설계 지연으로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32억 3,4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건립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공사 추진 시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40	**융자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 -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3465-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융자 신청 후 수산장비 구입을 미루다가 뒤늦게 융자를 포기하여 이후 신규 신청자를 찾지 못해 융자 실행기간 부족으로 융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신청자 중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융자신청인원 대비 포기 인원이 상당히 많고, 매년 융자실행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융자신청부터 실제 장비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공간 통합관리(1031-30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경계 획정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2024년 예산에 일반연구비 1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함 ○ 또한,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내 준공금을 지급한 것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다른 연구용역 사업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추진계획의 검토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국고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036-30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건조 완료 후 준설 등을 통해 운영비를 자체충당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비 전액을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부실로 연간 약 50억원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고 부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오염사고 방지(1036-306)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고,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해양환경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도 면밀한 계획하에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사업방식을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2042-32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는 2022년에 시작되었으나 2023년 및 2024년에 건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2023년 2.3%, 2024년 4.5%)하고,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기간: (당초) 2022년~2026년 → (현재) 2022년~2029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세부 공정에 대한 관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중단 장기화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업지도관리(3132-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서해어업관리단이 발주한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이 입찰·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2022년 10월 법원의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정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음 ※ 2025.7. 기준 전체 공정률은 50.8%(1호 63%, 2호 53%, 3호 35%) ○ 공사재개 시기가 지연될수록 선체 등 훼손이 심화되어 공사재개 가능성이 감소하고 폐기처리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공정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선박 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본부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소속기관 현원 확충 및 의원면직 등 조기퇴직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인건비 등(7001-1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부 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반면, 소속기관은 상시적인 결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본부의 정원 대비 ‘초과’ 현원을 보면, 2020년 39명, 2021년 45명, 2022년 63명, 2023년 64명, 2024년 66명이고, 소속기관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인원은 2020년 220명, 2021년 238명, 2022년 260명, 2023년 242명, 2024년 200명임 ○ 매년 자체 경력 채용 등을 통해 실무직원을 충원하고 있으나,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직 인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충원 효과가 상쇄됨 -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 결정으로 인해 직원의 이탈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본부 인원을 소속기관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신규 채용·승진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재배치하는 등 소속기관의 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원면직 사유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040-310)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수차례 중단·지연되어 준공시기가 최초계획 대비 10년 이상 지연(2018년 준공→2028년 이후 준공)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약 1,729억원→2,360억원)하였음 - 국회는 4차례(2019·2020·2022·2023회계연도)에 걸쳐 동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공업체 설계보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함으로써 국회 시정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48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이력제(3041-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05년부터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물량의 비중은 13.9%에 불과해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 -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2025년 5월 기준 참여 품목은 고등어·명태·멸치 등 총 78개 품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산자·유통판매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동 환급행사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부정환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부정환급 적발 건수는 2023년 50건, 2024년 35건, 2025년(5월말) 34건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수산물 상생할인지원)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		
50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3140-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중 일부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행정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남 - 실집행부진사업지(예):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전남) 29.8%,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제주) 33.2%,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구축(부산)사업 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등**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내수면자원조성(31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들은 지역주민 반대,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여건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었음 - 내역사업인 ‘유휴저수지 자원화’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를 어류가 서식·산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강원 원주 반계저수지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전액(3.7억원) 불용 - 내역사업인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은 사업 첫 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시일이 소요되어 교부한 예산 전액(10억원) 이월 - 내역사업인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착수 첫해인 2024년도에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10억원) 전액 이월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예산 이월이 발생한 사업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어선중개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선거래제도 운영(3145-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2·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전체 어선 거래 건수(5,802건) 대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실적(14건)과 매물등록 건수(357건)가 저조함 ○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선중개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나, 어선중개업 제도 시행 이후 중개업 등록 건수는 줄어들고 휴·폐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어선중개업 제도 안착도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
업의 수검 실적
제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해양수산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대상자 연령확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2024년 수검 목표 인원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
- 2024년도 예산 16억 8,7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이 실집행됨(실집행률 37.9%)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목표 대비 실제 수검인원(2025.7. 기준)
(단위: 명, %)
<table>
<tr><th>연도</th><th>수검 목표 인원(A)</th><th>실제 수검인원(B)</th><th>수검률(B/A)</th></tr>
<tr><td>2022년</td><td>1,500</td><td>552</td><td>36.8</td></tr>
<tr><td>2023년</td><td>1,800</td><td>674</td><td>37.4</td></tr>
<tr><td>2024년</td><td>11,764</td><td>1,350</td><td>11.5</td></tr>
<tr><td>2025년</td><td>8,246</td><td>320</td><td>3.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의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지급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어가가 다수 발생하고, 최소 승선기준(6개월 이상) 미충족 어선원이 증가하여 불용액(62.3억원)이 과다하게 발생 -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소규모어가직불, 농업·임업 분야 직불 등 다른 직불제와 지원자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직불금 규모가 다른 직불제 대비 낮아 실집행률(2023년 60.9%, 2024년 61.5%)이 저조 ※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은 ① 소규모어가직불, ② 어선원직불, ③ 조건불리지역직불로 다시 구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 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급요건 또는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의 추진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수리조선단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방식 변경(BTO-a→BTO)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제안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사업내용)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총 2,24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880m와 도로 2,987m를 건설 ○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제안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책임성 있게 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민간사업제안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관리 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기타항만 재개발(5061-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과 ‘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가까이 지연된 상황임. 묘도 재개발 본공사의 일부 상부시설이 2028년에 운영 개시할 예정이므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의 완료가 필요함 - (정부재정사업, 직접)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설치 - (정부재정사업, 민간보조 50%)묘도 재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사업구역 내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묘도 재개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이후, 조달청에 공사 발주 요청(2024.11.)을 하였으나 유사사례가 없어 조달청 내부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전액(27억 4,000만원)이 이월됨 - 2024년 예산액 32억 4,600만원 중 실시설계비 3억 6,2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11.1%임 - 인천항의 경우 사업자 선정은 2025년 8월, 부산항·울산항의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준비 및 검토 등을 충분히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실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신활력증진(330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3년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약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3년(실집행률 42.0%)에 이어 2024년에도 지자체 실집행이 56.9%로 저조함 - 2023년과 2024년에 선정한 사업지(98개) 중 66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설계 착수 사업지는 28개소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어촌뉴딜300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뉴딜300(3301-304)	주의,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19년부터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재생을 도모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지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나, 2024년말 기준 85개 사업지의 공정률이 저조하여 2025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례적 집행부진과 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공정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한 시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공정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한 시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 - 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반납장소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흡(계획 184개소 대비 실제 85개소 운영)과 어구 반납수요 저조로 인한 수매비용 미집행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19억 9,800만원 중 2억 4,800만원만이 실집행(12.4%)되어 실제 어구의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 어구보증금제 운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민간보조사업자로서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실제 반납어구 수거·처리, 반납장소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실시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처리 예산을 과다계상하지 않고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어구에 대한 반납장소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 즉시 반납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3440-37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게 2025년까지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원가능 대상자는 803명(지원대상자 359명, 지원대상 검토 중 444명)으로 이들이 모두 2025년 내 44만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집행가능액은 3억 5,332만원에 불과함 ○ 그런데 2025년으로의 이월액은 19억 4,600만원으로, 이월액 산정이 잘못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15억 9,268만원이 불필요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의 이월액 중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즉시 반납조치하고, 향후 타 보조사업에서도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마리나 항만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마리나 항만(5062-301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여수웅천마리나’와 ‘안산방아머리마리나’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도 연례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음 -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은 2023년에서 이월된 41억 4,000만원 전액이 불용되고, 2024년 예산 24억 8,5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됨 -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발생하여 실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4년 예산현액 47억 3,300만원 전액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캐시 등 국고 반납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소멸대응지원(3347-300)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나, 2024년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등을 충전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미사용한 캐시 등에 대해 환불 및 국고 반납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5. 해양경찰청(1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비목 적정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현안과 연계된 과제가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었고, 정책연구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되지 않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공백이 발생하였음 -「수중레저 안전관리 방안 연구」,「퇴역예정 경비함정의 장비실습함 활용 방안」 등 정책 현안 관련 5건이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복적·기술적 성격의 과제는 일반연구비(260-01)로, 정책개발 목적의 과제는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연구는 연구결과를 정책연구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구용역비 편성 단계에서 과제의 성격과 정책 연계성을 검토하여, 일반연구와 정책연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연구 과제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성과 공개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운영’은 짧은 활동 시간, 적은 배치장소, 한정된 장비 등의 제약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2024년 기준) 전국 연안위험구역은 총 81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장소는 97개소에 불과함 - (최근 5년) 전체 연안사고의 약 45%가 12~18시에 발생했으나 현행 근무체계는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특성과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지킴이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배치장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제도의 내실화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대형헬기 (5호기)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도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은 2023년부터 유찰이 반복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 도입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약 2년 늦은 2028년으로 연기되었음 ○ 신규 도입되는 AW-189 헬기는 기존 기종과 상이하여 장기간 별도 교육이 필요하므로 조종인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존 보유 기종(S-92)과 상이한 AW-189 헬기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조종사들이 6개월~1년간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대형헬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종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드론의 MDA 연계 강화를 위한 운용체계 정비 및 직무교육 이수자 우선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드론운용’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2024년 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기존 직무교육 이수자 중 35.8%가 드론 운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직무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드론 운용은 임무별 표준 절차 부재와 운용시간 감소로 인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 - 야간 조난 탐지, 연안 침입 감시, 해양오염 예찰 등 임무별 표준 운용 절차가 없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미흡함 - 무인헬기는 1대당 평균 운용시간이 2023년 37시간에서 2024년 17시간으로, 무인비행기는 2023년 3시간에서 2024년 2시간으로 줄어 활용도가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무인기의 임무별 표준 운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제도의 성과보상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제도는 보상 수준이 낮고 성과지표가 정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단속 현장의 기여도와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포상금 집행액은 2만원 내외에 불과하여 고위험·고강도 작전 환경에 비해 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성과지표인 ‘나포척수/검문검색건수 비율’ 지표는 단속의 질적 요소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선박의 위반 유형과 나포 환경을 나포포상금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포상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불용예상액의 목적 외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특공대활동지원’은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티드론건 1대를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제가 있음 - 2024년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에서 드론탐지기 도입 예산 8,300만원 중 4,80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예상액과 대테러장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안티드론건 1대(4,350만원)를 구입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 불용액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마약범죄 수사자문위원회 내실화 및 예산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수사활동(3102-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국제컨퍼런스 행사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자문위원회를 축소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음 -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는 당초 예산 3,880만원 대비 2.1배인 총 8,250만원을 집행하였음 -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당초 예산 5,000만원 중 640만원(12.8%)만 집행하고 나머지 4,360만원은 세목조정을 통해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하여 사용됨 ○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행사성 운영에 치중하여 본래 목적에 따른 심층 자문과 정책적 논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음 - 2023년 제1회 위원회는 환영사·성과발표·위촉장 수여 등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에도 상반기 1회만 개최된 후 나머지 예산은 국제컨퍼런스 경비로 전용되었음 ※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현재 국내 13명과 국외 10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해양 마약수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외자장비 도입 시 조달 특수성 반영과 집행계획 수립 통한 이월·불용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정비유지(3103-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외자장비의 제작·공급 구조와 계약 가능 주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불용 사례가 발생하였음 - CN-235 고정익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은 21억 5,500만원이 이월되고, 5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AW-139 헬기 지상충돌경고장치 도입 사업은 4,1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반복적인 인건비 이·전용 방지를 위한 구조적 편성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지방관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총무활동 등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여 보수(110-01목) 189억 2,100만원을 충당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예산 편성 당국과 협의하여 계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연가보상비 지급한도 적정수준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보수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음 - 2022년 예산 55억6,600만원 중 55억5,4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액은 거의 없었으며, 2023년은 59억2,300만원 중 43억5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률 27.3%, 2024년은 60억6,200만원 중 34억3,5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률 43.3%로 나타났음 ○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소방청에 비해 연가 지급한도 및 지급일수가 연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최대 지급일수)는 경찰청이 7~8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이 0~4일로 경찰청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적었음 - 직원 1인당 평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또한 경찰청이 3.2~3.9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이 0~1.8일로 가장 적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가보상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미지급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연가보상비의 지급한도와 지급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해양경찰청 정보화 사업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7238-300),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7238-301),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7238-302)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 인사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음 ○ 개별 정보시스템마다 유지보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유지보수비 지출이 증가하고 신속한 장애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정보화사업 담당 인력은 직렬, 경력, 자격보유 측면에서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철저히 수립하고,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며, 유지보수비는 정보화사업예산으로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공공요금및제세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등 국회시정요구사항 준수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 증액한 금액이 2022년 19억 8,400만원, 2023년 33억 5,000만원, 2024년 31억 5,600만원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반복적인 예산 과다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정비유지(3103-301)	주의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항공보험’은 항공기 사고 등 위험발생에 대비한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2024년 58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험계약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어 이 중 30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8억 4,600백만원은 지방관서 공공요금 및 항공유류비 충당 등을 위해 타 사업으로 이용 및 세목조정되었음 - 해양경찰청은 보험사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보험계약은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어 큰 폭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최근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 44억 500만원, 2022년 43억 4,300만원, 2023년 36억 1,600백만원 등 매년 30억원 ~ 40억원대 수준에서 집행되어 왔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함정건조(3101-300), 항공기도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상 도입 예정 대수와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기본계획상 함정 중 중형함정 독도전담 1척, 예인정 1척, 대형함정 노후대체 1척, 형사기동정 노후대체 2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기본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고속단정 7대 노후대체는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임 - 항공기는 기본계획상 대형헬기 및 터보프롭 각 1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노후 헬기 대체도 당초 3대가 목표였으나 1대만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부(44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국제부담금 사업 미납액 발생 방지 위한 예비비 배정·사용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제부담금(340-02) 비목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예상환율 대비 집행시 환율이 3~4% 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함 -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대부분 USD, 유로화, 스위스프랑 등 외화로 납부하고 있어 목표금액에 환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 -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총칙 등에 예비비 사용목적을 추가하는 등 대책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국제부담금 사업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배정·사용방안 등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R&D 사업 예산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산업통상부의 2024년 R&D 예산은 4조 8,420억원으로, 2023년 예산(5조 3,914억원)에 비해 5,494억원 감소되었고,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계속과제 3,614개 중 55개 과제가 중단되었으며, 2023년까지 중단과제 55개에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 651억 5,300만원은 매몰비용이 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신뢰성 회복 등 향후 미래성장동력인 R&D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R&D 연구개발비 정산금 징수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R&D 연구개발비 정산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R&D 종료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로 지원된 출연금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정산 결과에 따라 적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64억 3,000만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정산금 회수 실적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정산금의 국고 반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산금 징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 홍보 강화 및 효과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사업비 중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남 - ‘K-Tech Pass’ 등 신규 사업 및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구축되고 실제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시일이 소요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향후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의 신규 사업·제도 인지도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설계 적정성 및 실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및 금액 예산 내에 적정 수준으로 사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플랜트진출확대(1139-31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중 3개 내역사업에서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가 소요되는데,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 기평비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전액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정산함 -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에 따른 일반수용비(210-01), 관리인력을 위한 인건비 보수(110-01) 등 다양한 비목 필요 - 2025년 예산에는 총사업비 대비 기평비 비율을 12.5%로 편성하여 다른 내역사업(10% 이내, 3.2%)에 비해 과다편성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내용 및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및 금액을 예산 내에 적정하게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배분계획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킨텍스 3단계 건립(1139-314)	주의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총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 예산현액 290억원(전년도 이월액 145억원 포함)은 2024년 11월 18일에 ㈜킨텍스로 전액 출자되었으나, ㈜킨텍스는 이 중 5억 7,400만원만 집행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재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2025년 우선시공 공사 및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배분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주의할 것		
7	**연말 계약 과다 체결 방지 및 이월·불용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3133-304)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정책연구과제의 38.5%(10건 / 26건)가 12월에 체결되어 2024년 예산 이월률 및 불용률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연말에 체결된 계약 중 수의계약(8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의계약이 많을수록 연구용역의 계약 과정, 연구자 선정, 결과물 공개 등에서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연말에 정책연구과제 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팹리스 분야 교육 확대 및 민관학 협업 교육사업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반도체아카데미구축(3161-329)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은 종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25년부터 충남·경남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팹리스 분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함 ○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별개로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민·관·학 협업 기반의 반도체 설계전문 교육사업 신설 필요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비수도권 지역 교육기관(대전 KAIST 등) 중심으로 반도체 팹리스 분야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 산업통상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민·관·학 협업 기반 반도체설계 전문교육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 사업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3162-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산업발전법」에 따라 2020년에 종합시책은 수립되었으나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종합시책상 중장기 계획과 실제 과제 추진현황이 일부 상이한데, 이같은 사항이 환류되지 않고 상시·계속과제 위주로 사업이 추진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발전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종합시책과 정합성있게 연계·환류되도록 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10	**개정된 장비구축절차 적극적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혁신기반구축(R&D)(3171-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장비구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규과제의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비구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절차의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과제에서 장비구축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신규과제의 추진 시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과제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연구비 집행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산업통상부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6개소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각 협력센터에 연간 6억원씩 5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024년 예산에 6개소를 5년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8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이를 지급함 - 5년간의 연구비를 일시 지급하면 중간 평가나 조정이 어렵고, 연구진행 도중 중단되거나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 지급된 연구비에 대해 중간에 환수 및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연구불성실이 일어날 경우 현장정밀실태조사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6개 글로벌기술협력센터에 지급된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도출 여부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해외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해외 연구개발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통상부는 국제협력 R&D 수행과정에서 국내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제가 중단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관리시스템 절차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확보된 예산의 적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의 신규 연구과제의 2024년 말 총연구비 실집행 실적은 총 70억 7,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전체 금액의 17.6%에 불과하였고, 연구과제별 실집행률의 경우에도 전체 48개 신규과제 중 46개 과제(95.8%)에서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신규과제 예산 편성 시 실제 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편성 등 확보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협약체결이 지연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과제 관리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적시집행 및 본사업 적기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3171-44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해당사업은 사업계획 확정과 입찰준비가 지연된 결과 7월 25일 타당성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차년도 2월 23일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됨 -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1,784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종합교육관 조성이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용역완료 지연으로 2025년 예산요구 시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기본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국가기반산업인 반도체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적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본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바이오헬스분야 전문인력 양성확대 및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3649-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2022년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부족률은 3.5%, 제약바이오기업 인력 부족률은 14.1%로 나타나는 등 바이오헬스분야 인력부족률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따라 양성되는 전문인력 규모는 200~250명 수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대전테크노파크 등 기 구축된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바이오 분야 R&D 사업지연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3651-30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의정갈등에 따른 임상연구 지연으로 다수 과제에서 연구개발기간 연장이 발생함 ○ 바이오 분야 R&D 사업 신규과제 협약체결 지연으로 협약 전 연구개발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바이오 분야 R&D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통상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16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과제중단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3651-427)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의정갈등에 따른 임상연구 지연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연장 및 과제중단 사례가 발생함 ○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수행기간 내 목표달성 불가능, 수행기관 경영악화 등에 따른 과제중단 사례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바이오 분야 R&D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통상부는 R&D 사업 과제기관의 선정, 성과관리 및 과제중단 시의 대책 포함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참여자 모집전략 재검토 및 이월처리한 운영비 잔액 국고반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3651-442)	주의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모집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함 ○ 2024년 발생한 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42억 8,200만원)을 이월 처리함 - 인건비 · 관리비 등은 성격상 기획평가관리비와 유사한 것으로 국고반납이 타당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산업통상부는 이월 처리한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국고반납할 것		
18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추진한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매년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R&D 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제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안전확인 신고·변경, 행정처분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제품분류체계의 범부처 확대 도입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시스템 고도화’,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3개 과제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 예산 과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사업 사업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는 어린이 제품의 유해성 검증 및 분석을 통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조 사업자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사업 예산이 전액 교부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외부용역 비중(57.7%)이 높고, 일부 내역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강구할 것		
21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권역별 균형 설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2개소, 충청권에 2개소, 영남권에 4개소, 강원권에 1개소가 구축되어 호남권,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구축된 전북 임실의 안전체험관은 시설 노후화 등의 사유로 2022년 운영 종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향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소외지역, 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화로 문을 닫는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운영·관리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집행계획 없는 보조금 교부 관행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통물류기반조성(4302-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과 ‘유통산업 실태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이 연말에 착수되어 차년도에 이월되는 등 연례적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산업통상부는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잔액을 전액 교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이 불명확한 보조금은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23	**증액소요 시 사업 내 구조조정 우선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만성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증액(10억 4,300만원)시키는 한편 그에 따라 이월·불용액이 전년 대비 3.93배에 달하는 5억 7,500만원으로 증가함 - 이월·불용액: 21년)123백만원 → 22년)140백만원 → 23년)146백만원 → 24년)575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증액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 내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편성예산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및 한국석유공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	시정, 주의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사업 추진을 위해 6-1 중·동부 및 8·6-1북부 내내역사업 조정을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하였음 ○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근거, 집행 절차·내용의 불투명성, 경제성 부족 등 다수의 의혹과 지적이 제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유전개발사업출자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 변경을 지양할 것(시정) ○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및 유망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시정) ○ 산업통상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및 집행내용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를 통해 유전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한국석유공사 출자을 관리 강화 및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한국석유공사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설정된 유전개발사업의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음 ○ 유전개발사업출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석유생산시설재활용 친환경에너지사업(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려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출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예산 편성 시 설정된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산업통상부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 및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예산불용방지 등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기반시설지원(2733-415)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보조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고, 내역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예산액은 문화재 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어 전액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7	**사업구조개편시 성과지표 설정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3241-328)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예산개편에 따라 “특화단지재직자교육” 내역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성과지표에 해당 내역사업 성과가 반영되지 아니함 ○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내역사업의 경우 매년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달성되고 있음에도 일부 예산조정을 이유로 과거 3년간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치 대비 하향된 목표를 설정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구조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 취지에 따라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신규과제 상하반기 균형 발주 필요**	관련사업명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신규과제 700건 전부를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 6개월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R&D 사업의 선도효과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 전부를 하반기 협약과제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R&D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규과제 편성 시 상·하반기 협약과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특화단지 지원사업 다년도 예산지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3171-425)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3171-43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사업 특성상 장기간 공사가 실시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지원 종료 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우려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다년도로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30	**배터리아카데미 체계적 사업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배터리아카데미구축(3161-331)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2024년 구축 계획한 장비 12종 중 8종은 2025년 3월 말에 도입하였고, 2종은 심의절차 지연으로 5월말에 도입하였으며, 나머지 2종은 지방비 입금지연으로 현재까지 미도입 되고 있음 ○ ‘배터리입문기초과학’ 등 7개 교육과정 수료율이 70% 이하로, 그 외 교육과정 대비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장비도입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원격지 소재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집행 부진 및 R&D 편중지원 재발방지 대책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3174-41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R&D지원을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 안내 미흡과 조기 신청 마감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여 목표한 대출원금 4,5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22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쳤음 - 이는 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에 사업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극적인 안내가 미흡하였고, ② 대출 신청 마감을 2024년 9월 30일까지 제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또한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산업통상부 R&D 과제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등 지원이 편중된 것도 저조한 대출의 원인임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타 부처 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처 간 협조 및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 부처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민간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통상부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심사 소요기간 및 사업체의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관련 일정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의 내내역사업인 ‘산단환경개선펀드’ 는 펀드 조성 후 사업시행법인(SPC)에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최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선정된 사업 총 7개 중 3개의 사업시행법인이 2025년 6월까지 미설립되었음
- 사업 지연이 지속되자 2025년 6월 다른 사업으로 대체선정이 이루어짐
<table>
<tr><th>산업단지</th><th>사업내용(투자대상)</th><th>사업기간</th><th>사업시행법인</th></tr>
<tr><td>천안제3일반</td><td>업무복합시설</td><td>2024.7.~ 2028.7.</td><td>미설립</td></tr>
<tr><td>여수</td><td>암모니아 배관망</td><td>2024.5.~2029.5.</td><td>미설립</td></tr>
<tr><td>창원</td><td>업무복합시설</td><td>2024.7.~2027.12.</td><td>미설립</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센터건립 등 시설확충 사업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의 5개 내내역사업인 ‘휴폐업공장리모델링’, ‘혁신지원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플러스’,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은 2015~2023년 지원이 이루어진 151개 사업지 중 33개 사업지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지연이 발생하였음 -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도 당초 정상 추진을 전제로 계획된 2년차, 3년차 사업비를 지급하여왔고, 사업관리 시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함에 따라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내 시설 확충 및 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대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규제 이슈 점검을 통한 사업중단 사례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석유화학산단통합안전체계 구축'의 내내역사업인 '울산국가산업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은 2024년 8월 울산시가 사업중단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2024년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현액 50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2022년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협약 체결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정부 출연금 17억원 중 미집행액 8억 3,000만원이 이월된 바 있음 - 2023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하배관 지상화 시 부지가 협소하여 현행법상 이격거리 규정 준수가 불가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8월에 울산시가 산업단지공단에 사업중단 의사를 제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공용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액 국비 지원 등의 재원 다각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산업통상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단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및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2024년도 예산편성액(16억 5,400만원) 전액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24년도</th><th>2025년도</th></tr>
<tr><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 colspan="2">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td><td>39,817</td><td>39,817</td><td>-</td><td>39,000</td></tr>
<tr><td>국내외유전개발</td><td>38,163</td><td>39,817</td><td>△1,654</td><td>-</td></tr>
<tr><td>해외광물자원개발</td><td>1,654</td><td>-</td><td>1,654</td><td>-</td></tr>
</table>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은 2017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산업통상부는 융자수요에 대한 예측을 보다 강화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산업통상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의 내역사업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자의적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집행잔여예산의
임의활용 주의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td><td rowspan="3">시정,
주의</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첨단전략산업초격차’는 2024년도 예산액 160억원 중 예타 결과 61억 4,000만원에 대해서만 연도중 타당성이 인정(2024.3.)되면서, 차액인 98억 6,000만원을 활용하여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재부품패키지형’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신규과제 30개를 추가 선정함
※ 첨단전략산업초격차 내역사업의 예산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2024년도 예산</th><th>조정액</th><th>내역사업간 조정 후</th></tr>
<tr><td>첨단전략산업초격차</td><td>160억원</td><td>△98억 6,000만원</td><td>61억 4,000만원</td></tr>
<tr><td>소재부품패키지형</td><td>8,196억 1,400만원</td><td>98억 6,000만원</td><td>8,294억 7,400만원</td></tr>
</table>
○ 또한 2023년 결산심사에서 경제안보 직결 핵심전략품목에서 중단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024년 4개 과제가 중단되어 92억 9,8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핵심 전략과제가 중단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기관 선정 및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산업통상부는 국회 결산시정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연구비 매몰이 발생하였고, 국회의 심의 없이 잔여예산으로 추가 과제를 수행한 것이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시정)
○ 산업통상부는 집행잔여예산을 임의로 활용하여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주의)</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자본잠식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등 철저한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자본잠식 공공기관 총괄	주의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총 3개 공공기관의 2024년 당기말 기준 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조 7,630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조 3,216억원, 대한석탄공사는 △2조 422억원으로서 모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통합 전 5조 9,985억원 투자실적 대비 8,090억원만이 회수됨에 따라 회수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통합 후 2024년까지도 총 투자실적 7조 3,387억원 중 1조 4,514억원만이 회수됨(2024년말 기준) - 한국석유공사는 2014~2024년 국내투자 15개 광구 중 동해-1, 동해-2 광구를 제외한 13개 국내광구에서는 회수 실적이 없었고, 해외광구에서는 총 51개 광구 대상 240억 3,990만 달러의 투자액 중 128억 9,080만 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쳤음(2024년말 기준) -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은 2020년 △1.2조원에서 2024년 △2.04조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증가 등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 등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대한석탄공사 채무조정 및 조속한 대체산업 추진 등 관리·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대한석탄공사 사후관리 총괄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2025년 6월 말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서, 대한석탄공사는 퇴직 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20여명의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된 계약직 20여명 등 40여명이 공사의 부채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4년말 기준 대한석탄공사의 자산은 4,220억원이나, 부채는 총 2조 4,642억원인 상황임 - 부채 총계 2조 4,642억원 중 98.7%인 2조 4,321억원(유동금융부채 1조 6,321억원, 비유동금융부채 8,000억원)이 금융부채이고, 이 중 단기차입금이 1조 1,320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5,000억원, 비유동성 장기차입금이 8,000억원으로 차입금 중심의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음 ※ 참고로, 정부는 폐광지역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2025년 8월 20일에 통과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대한석탄공사의 채무조정 및 조속한 대체산업 추진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ODA 사업 추진 시 관계부처 협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1931-302)	제도개선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업개발협력기획’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24년 국제개별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최종 2024년 국제개별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산업개발협력기획’ 내역사업 예산액 10억원 전액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ODA 사업 추진 시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고시 소급적용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재발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3171-43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200억원이 반영되었고, 건설사업 준비 완료 시 기획재정부에서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2024년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사업 세부내역(기평비 5억원 별도)
① 용역비 35억원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억원, 기타(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5억원, 건설사업관리 5억원
② 공사비 160억원
○ 산업통상부는 2024년 8월에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의 수시배정요건 미충족 및 당해연도 공사 착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음
- 그러나 2024년 8월에 제정된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금지한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부합하지 않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지원방법)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
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이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준비단계부터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기반시설지원(2733-41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축’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정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등 실적 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법령 상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부실작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기반시설지원(2733-415)	시정	산업통상부
		지적사항	○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고 있는 내역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반함 - 미포함사항: 향후 개선 계획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 · 미달성 ·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반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자료에 기반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정부출자수입(52-52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액 92억 800만원 중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예상액 78억 7,100만원은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2023년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에서 기인함

○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을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2023년 7월 31일에 제출받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2023년 1월에 제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였음

- 실제로 2023년 1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당기순이익은 약 7,331억원 흑자가 전망되었으나, 2024년도 정부배당안을 기획재정부와 수정하면서 조정하는 기간이었던 2023년 7~8월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이미 △1,048억원 적자 상황이었음
(2023년 말 당기순이익 △7,474억원 적자)

※ 국유재산법령 상 관련 규정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의 정부배당수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과도한
일반회계전입금
의존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등
대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산업통상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2024년 그 금액이 7,288억원이므로 1조 2,935억원의 수입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직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음
※ 2020~2024년 전년도 관세 징수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단위: 억원)
<table>
<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전년도 관세(A)</td><td>78,821</td><td>70,585</td><td>82,270</td><td>103,241</td><td>72,883</td></tr>
<tr><td>일반회계 전입금 기준
(B=A*10%)</td><td>7,882</td><td>7,059</td><td>8,227</td><td>10,324</td><td>7,288</td></tr>
<tr><td>수입 부족액(C)</td><td>12,471</td><td>18,082</td><td>15,266</td><td>12,206</td><td>12,935</td></tr>
<tr><td>일반회계 전입금 예산(B+C)</td><td>20,353</td><td>25,141</td><td>23,493</td><td>22,530</td><td>20,223</td></tr>
</table>
주) 수입부족액(C): 총 세출액-일반회계 전입금 기준액(B)-세외수입액-전년도 세계잉여금
자료: 산업통상부
○ 소특회계의 성격에 부합하는 유일한 독자적 수입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이나 이는 163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2029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인 특별회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 소특회계에 편성된 세출 사업 중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특회계 지속 여부 및 재원구조에 대해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2. 지식재산처(1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주의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2023년에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과정의 지체, 행정처리 미숙 등의 원인으로 2024년에 반납이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보조금 정산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조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일반용역비
계획적
편성 ·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심판처리지원(10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지식재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3년간 매년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 내역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임에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2</td><td>-</td><td>84</td><td>84</td><td>84</td><td>-</td><td>-</td></tr>
<tr><td>2023</td><td>-</td><td>52</td><td>52</td><td>52</td><td>-</td><td>-</td></tr>
<tr><td>2024</td><td>44</td><td>55</td><td>99</td><td>99</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지식재산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공백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의 비율로 충당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의 경우 (구)광역센터, 강원남부센터 등 일부 센터에서만 지원되었고, ‘IP디딤돌프로그램’ 도 (구)광역센터를 중심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생애주기별 IP기반 지원사업을 사업간 연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방비 매칭 여건을 보강하는 등 센터별 지원공백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발명교사 인증 제도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1235-302)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인증제도 중 최상위급인 ‘명인’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는 등 발명교사 인증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처우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지식재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에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0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제도의 중요성, 매년 달성하는 성과 및 타기관 수사·조사 업무 담당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고용노동부</td><td>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 담당자에게 월 25만원 지급</td></tr>
<tr><td>관세청</td><td>관세법 위반 관련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20만원 지급</td></tr>
<tr><td>식품의약품안전처</td><td>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15만원 지급</td></tr>
<tr><td>문화체육관광부</td><td>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15만원 지급</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지식재산처는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의 적정 정원을 확보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에 상당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율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을 통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음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분류 및 분석·제공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1531-310)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국가핵심기술 관련 모니터링·분석 결과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담당자 간 비공식적·구두 회신에 의존하여 공유되고 있음 ○ 출원된 특허에 대한 국가핵심기술과의 구체적 관련도 산정 및 타 기술분류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 - 2024년 11월 하순 이후에 배정된 신규 출원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관련도 평가를 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국가핵심기술 분석 결과에 대한 수요기관의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침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 ○ 지식재산처는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기술분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사회복무요원운용(7011-260)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지식재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에 예상 근무 인원 및 보수에 근거한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운용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고, 최근 4년간 이러한 집행률 부진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사회복무요원운용</th><th colspan="3">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th></tr>
<tr><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집행률(B/A)</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집행률(B/A)</th></tr>
<tr><td>2021</td><td>68</td><td>41</td><td>60.3</td><td>155</td><td>117</td><td>75.2</td></tr>
<tr><td>2022</td><td>74</td><td>45</td><td>60.8</td><td>177</td><td>144</td><td>81.4</td></tr>
<tr><td>2023</td><td>74</td><td>41</td><td>55.4</td><td>177</td><td>185</td><td>105.1</td></tr>
<tr><td>2024</td><td>66</td><td>40</td><td>60.6</td><td>289</td><td>187</td><td>64.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지식재산처는 적정 사회복무요원 인원 및 보수에 근거한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률 부진 문제를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여유재원의 규모 축소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8010-8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510-850)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2024년에 발생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777억원)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190억원)하였는데, 연례적으로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여유재원을 지식재산처 심사관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등 본래 목적의 고유사업에 관한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등**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부과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58-581)이 아닌 ‘과태료’(56-563)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원 중 29억 4,200만원(99%)이 미수납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가산금·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과목이 아닌 ‘가산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중부권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연 방지 및 계획적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1235-302)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을 받는 등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충청북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체투자심사 절차는 당초 2023년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5월 8일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건립완료 일정이 2027년 12월로 연기되었음 - 이후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 설계공모 및 공사 입찰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본격적인 센터 개원이 2028년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를 보조사업자로, 충청북도 교육청을 간접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2024년도 예산액 1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중부권의 거점센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의 담보가치 제고 및 활용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특허기한이 제한된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활용되지 못한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의 활용·수익화 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의 적정가치 설정 및 담보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이 적시에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모태조합 출자금의 신속한 실투자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모태조합 출자(1332-304)	제도개선	지식재산처
		지적사항	○ 지식재산처는 2024년 정부출자금 114억원을 통해 총 228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 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실투자액은 5억원에 불과함 - 정부 출자금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벤처투자 계정에 남아 있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사업출연금
소요 예측
강화를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지식재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 동 사업의 피출연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전년도 이월금 100억 1,200만원을 합한 2024년도 예산현액 114억 6,200만원 중 66억 9,100만원을 실집행하고 47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출연기관 내에서 예산이 이월되며 미집행되는 구조는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
※ 2024년도 한국발명진흥회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지식재산처</th><th colspan="9">한국발명진흥회</th></tr>
<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
률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C)</th></tr>
<tr><td>236</td><td>236</td><td>236</td><td>236</td><td>-</td><td>236</td><td>236</td><td>236</td><td>236</td><td>-</td><td>-</td><td>100.0</td></tr>
<tr><td>1,450</td><td>1,450</td><td>1,450</td><td>1,450</td><td>10,012</td><td>11,462</td><td>6,691</td><td>1,450</td><td>1,450</td><td>4,771</td><td>-</td><td>58.4</td></tr>
</table>
자료: 지식재산처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지식재산처는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예산이 출연기관 내에서 장기간 이월 및 유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국내여비
예산규모 현실화
및 연차보고서
작성업무
수행방식 검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지식재산처</td></tr>
<tr><td>지적사항</td><td>○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소속 직원의 회의장소로의 출장 소요를 국내여비로 지출하는데, 2019년 이후 매년 예산 부족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음.

<table>
<tr><th>연도</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예산편성액 (백만원)</td><td>29</td><td>28</td><td>27</td><td>18.5</td><td>17.6</td><td>17</td><td>16.2</td><td>15.9</td></tr>
<tr><td>세목조정</td><td>0</td><td>0</td><td>7</td><td>14.3</td><td>12.4</td><td>18</td><td>29.6</td><td>24</td></tr>
<tr><td>예산현액(A)</td><td>29</td><td>28</td><td>34</td><td>32.8</td><td>30</td><td>35</td><td>45.8</td><td>39.9</td></tr>
<tr><td>집행액(B)</td><td>21</td><td>14</td><td>33.5</td><td>32.7</td><td>30</td><td>35</td><td>42.7</td><td>38.7</td></tr>
<tr><td>집행률(B/A) (%)</td><td>72.4</td><td>50.0</td><td>98.5</td><td>100.0</td><td>100.0</td><td>100.0</td><td>93.0</td><td>97.0</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매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함에도 용역계약을 거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고정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중인 국내여비 예산규모를 현실화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td></tr>
</table>

3. 중소벤처기업부(5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 수납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R&D과제 중 정산금이 미납된 과제는 753건, 미반납액은 296억 5,000만원에 이르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결정액 306억 6,800만원 중 수납 금액은 164억 4,600만원(징수율 53.6%), 제재부가금 부과액 259억 2,000만원 중 징수금액은 26억 8,800만원(징수율 10.4%)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의 회수를 위한 대책 및 책임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출연사업 예산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주의,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는 동 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산하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별도의 출연사업운영비 편성 없이 각 세부과제별 사업예산의 일부를 추진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음 - 사업예산 총액 1,870억 1,400만원 중 172억 6,500만원(9.2%)을 추진단 운영비로 계상 ○ 또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을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비용, 사옥 운영비용, 기관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방한용품 구매비용 등으로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출연사업 운영비를 별도 내역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적정 운영비 규모에 대해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칠 것(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예산 집행 시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산과목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R&D 협약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민간투자연계(스케일업 팁스)’는 신규 지원기업 선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문제가 있으며, 운영사들이 배정된 추천권을 소진하지 못하거나 유사사업 대비 과소 배정되는 경우가 있음 *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혁신형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팁스 이후 성장 단계의 기업에 민간주도 방식의 R&D 및 매칭펀드 지분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 - 상당수 신규 선정기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늦어져 전체 188개 신규 R&D 지원기업 중 100개 기업(37.2%)이 4분기에 협약을 체결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사 컨소시엄의 투자발굴 기능 강화와 R&D 협약 지연 방지를 위한 운영사 추천기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24년에 예산이 미반영되어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 2024년에는 같은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시제품 제작 지원’ 예산 중 2억원을 전용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바우처사업 실집행액과 정산액의 일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835-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99.1%라고 보고하였으나, 바우처 사업의 실제 정산 금액 기준으로 집행률이 51.2%에 불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실집행액 551억 1,300만원보다 실제 266억 2,1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맞춤형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기관에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3년 바우처 사업 사용잔액이 중간정산 결과 25억원 가량 발생하였고, 2025년 6월말까지 해당 미집행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실집행 금액을 협약금액과 정산금액으로 구분 기재하거나, 지원기업 선정 시기 일정을 변경하는 등 실집행액과 정산액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		
6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인력충원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은 15.7%(2025년 3월말 기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8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등 과업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인력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25년도 1분기 중 1차례 공개채용을 시행하였으나, 직원(정규직)을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함 - 정원 115명 / 현원 97명 / 결원 18명(15.7%), 2025년 3월말 기준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등 본연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정책패키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라 지원기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R&D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와의 연계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부분이 있음 * AI 등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1,030억 9,600만원) - 연계 지원현황을 보면, 기술보증은 (’23)14.2% → (’24)39.6%, R&D는 (’23)14.9% → (’24)65.0%로 지원율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정책자금은 (’24)14.5%, 수출바우처는 (’24)15.7% 등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		
8	**프리팁스-상위 팁스 간 연계지원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프리팁스’는 팁스 예비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팁스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 2,820개 중 프리팁스 출신 기업의 선정실적은 75개이며, 특히 비수도권 출신 기업은 총 15개에 불과함 - 2020년부터 프리팁스 출신 기업에 2% 가산점과 투자금 중복 인정을 해주고 있음에도 프리팁스 출신 기업이 여전히 낮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은 프리팁스-팁스 간 연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비수도권 창업기업은 투자자, 멘토링, 보육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쿼터제 도입, 상위 팁스와의 연계 강화 등 프리팁스가 초기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자기부담금
우선집행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인 경산스타트업파크 사업의 집행에 있어 당해연도 편성된 국비 전액을 먼저 투입하여 설계비와 공사비의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차년도 이후에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22년 설계비 선금 5억원을 국비로 지급하고 매칭 지방비 3억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음
- 2023년 1차 공사 계약에 대한 선금 6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면서 매칭 지방비는 설계비 잔금 등 명목으로 4억 3,000만원(누적 매칭 지방비 83억원의 5.2%)만을 사용
- 2024년 관급자재 구매 및 2·3차 공사비로 국비 30억원을 집행하면서 매칭 지방비는 1차 공사비 기성금 등 명목으로 21억 2,600만원(누적 매칭 잔여 지방비 209억 7,000만원의 10.1%)의 지방비만을 사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소지가 있는 동 사업 집행방식을 시정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정부의 딥테크 육성계획과 구체적 연계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창업허브구축(5134-31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딥테크 관련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나, 정부 주도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창업허브 간에 운영상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서울 마포구에 스타트업·글로벌기업·VC 등이 교류할 수 있는 창업허브센터(가칭 'K-딥테크타운')를 구축하는 사업 - 글로벌창업허브는 '공공 구축·민간 선도 운영'을 표방하나, 정부 중심의 딥테크 육성정책과 운영철학이 일부 상이하여 연계·조화 방안이 미흡함 -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10대 신산업·1,000개 딥테크기업 육성 정책)와의 구체적 연계운영 역시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사업이 딥테크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딥테크 육성 계획과 구체적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식 면에서도 자율적 운영방식과 정부의 지원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이스터고 육성(5441-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 사업지연으로 전액 미집행됨 - 202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소요비용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과정에서 총사업비 중 설계비 예산이 공사 규모 대비 부족하다는 조달청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실시설계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 2024년 예산액 11억 5,300만원 중 11억 1,100만원을 이월하고 4,200만원을 불용함(변경후 총사업비: 328억 1,400만원)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준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사업성 검토 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 준비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4156-305)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됨 - 총사업비(23억 7,800만원)의 50%(11억 8,900만원)가 국고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사전 절차인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미완료되어 전액 미집행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과정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 준비 상황 및 민간기구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		
13	**창업보육센터 사업방식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실운영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 자격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대학·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로 지정·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20~2024년 창업보육센터 지정 건수는 총 32건인데, 같은 기간 자진반납 건수는 이보다 11건이 많은 총 43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 자격 자진반납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향후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지식산업센터 실집행부진 개선 및 적정 수준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지식산업센터(제주), 지식산업센터(세종)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은 각각 67.6%, 26.2%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부진과 과다 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5	**중진기금 융자사업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중진기금 융자사업은 미수납 상환 연체액 중 장기연체 및 체납자 재산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와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불납결손액이 5,911억원으로, 불납결손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5년 전체 미수납채권 대비 불납결손 비율은 2020년 35.2%에서 2022년 21.5%, 2024년 49.9%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과도한 불납결손 증가로 중진기금 재원 및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음 * 중진기금 순자산 2024년 말 4조 6,438억원, 전년 대비 480억원 감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기금 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 책임경영심사의 충실화 및 사후 정책자금 위험관리 조치 실질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사업 대상별 자료 구분 관리를 통한 성과파악 및 제도개선 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2017년 사업 개편으로 중소기업 외에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실적 및 수출 사업화 성과를 구분 관리하지 않아 사업성과 파악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소상공인 지원 실적·성과 구분 관리 미흡)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미제출로 자동 식별 불가, 융자지원 전후 소상공인의 수출 실적 변화 파악 어려움 - (소상공인 특성 반영한 융자 조건 미흡)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금융 접근성·수요 규모 차이가 존재함에도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관리 부재로 금리·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 한계 - (사업성과 평가 기반 부족)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 효과 분석·신규사업 설계에 활용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여부 식별을 위한 자료 수집·연계 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신청·지원 실적 구분 관리를 통해 융자 조건·지원전략 개선과 성과평가 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회수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1261-307)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매출채권팩토링'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융자자금인 팩토링자금을 연 1회에 한해 운용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낮음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가 중소기업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즉시 현금화해줌으로써 판매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해주는 사업 - 팩토링 자금은 최대 만기가 3개월에 불과해 융자자금이 회수될 경우 회계연도 내에 다시 재융자 및 회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으나, 본 사업은 1회전 융자분에 대해서만 융자지출액을 편성하고 있고, 신보·기보 등에서 운영 중인 다른 팩토링사업과 달리 기금운용계획상 회수된 팩토링자금을 2회전 이상 재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회수자금을 활용해 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18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집행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1261-308)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 위하여 국회 심사단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집행단계에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제한하여 3,000억원 중 800억원이 불용됨 * 시중은행을 제외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0.5~1.5%p의 이자비용 지원(최대 1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국회 심사단계에서 지원요건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집행과정에서 정부가 지원대상을 5~7%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로 제한하였고, 이후 예산 미집행이 예상됨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증액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선정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경제상황 및 중소기업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자금 금리 적정수준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재도약지원자금(융자)(5161-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통화완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오히려 상승하였고, 이를 적용한 수요자들의 체감금리도 상승하여(2024년 2.68% → 2025년 2.96%)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남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 기존 3.50%에서 3.25%로 인하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3.0%, 2025년 2월 2.75%로 추가 인하되었음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24년도 한 해간 2.9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도 1분기 3.15%로 0.25%p 상승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조건 결정 시 기준금리에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을 반영하거나 성과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금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사고율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장 등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2022년)의 보증 사고율은 과거 대비 1~2%p 낮았으나, 최근 복합위기 지속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보증 사고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고율 : ('21)2.5%→('22)2.7%→('23)4.2%→('24)4.7% *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을 대상,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시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1조 3,301억 9,500만원) -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사고율을 추정치(4.9%)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예상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지역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적정 수지차보전 규모 산출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2024년 예산 편성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3,954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1조 2,175억원(예측액의 307.9%)이 지출되어, 정부출연(1,254억원)에도 불구하고 5,46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함 - 이는 2023년 이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출의 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로 2024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예측(1.79%)보다 높은 5.34%로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해마다 예측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과소·과다 출연이 반복됨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코로나19 직전 3개년(2017~2019년)의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평균치(1.79%)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023년도 순지급률인 3.36%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일관성이 결여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수지차보전 예산 편성시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등 실제 결산상 적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신규 통합물류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중소유통 통합물류시스템 신규 구축’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일부 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신규 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2025년 5월) 후 현재 센터별로 시스템 변경 준비 진행 중이나, 센터별로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신규 시스템과의 호환이 복잡함 - 2024년 말 현재 전국 공동도매물류센터(총 37개 센터)별 물류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구(舊) 물류관리시스템 17개소(45.9%), 민간 물류관리시스템 16개소, 타부처 연계지원 및 자체개발 등 4개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통합물류시스템이 일선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도매물류센터와의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23	**보조금의 이월 요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지역상권역량강화’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지출원인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하여 이월된 보조금으로 대금을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금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은 2024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심의 목표(550개사) 대비 실집행(75개사)이 저조하고, 신규지정 실적이 없음 - 계획액: 2억 5,300만원(550개사×46만원), 실집행액: 9,700만원(75개사×129만원) * 연도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신규지정 현황: -백년가게: 390개(2020년), 445개(2021년), 231개(2022년), 86개(2023년), 없음(2024년) -백년소공인: 344개(2020년), 397개(2021년), 176개(2022년), 52개(2023년), 없음(2024년)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 내실화와 적극적 신규지정을 병행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25	**주요사업비로 기금운영비성 지출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의 방범·출입통제 시스템 이용료 명목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과 혼용하여 보조금이 집행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의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 지출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주요사업비로 기금운영비성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소상공인 개인의 사업 신청편의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의 약 30%가 탈락하였는데, 사전 절차인 체크리스트가 공고문 자격요건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그쳐 신청자 입장에서 신청요건을 사전에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42,042건 중 12,509건(29.8%) 탈락 - 탈락자(12,509건)의 52.2%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등 자격요건 미흡으로 탈락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 개인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거나 간편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개인의 신청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7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판매촉진금 일부가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상인연합회의 사무실 및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상적인 운영비로 집행된 사례가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 및 지회에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이 상품권 판매 촉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향상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전통시장 혁신은 시장 내 상인 역량강화 및 홍보 지원, 특성화 등 마케팅적 요소도 중요하나, 물리적 공간의 편의성 증진 및 현대화를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사업에는 상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향상을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29</td><td rowspan="2">R&D 예산
감액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방안 마련
및 R&D 예산
삭감 재발 방지</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td><td rowspan="2">주의</td><td rowspan="2">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R&D 예산 감액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 20개 사업의 2,477개 과제 중 2,308개 과제가 당초 협약과 달리 감액되었고, 152개 과제가 중단되었음
- 2,308개 감액과제 중 감액으로 인해 R&D 목표를 변경한 과제는 833개(36%)이고, 1,475개(64%) 과제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과제 수행
- 당초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은 감액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융자, 이차보전 등 어려움이 가중
※ 관련 사업명
<table>
<tr><th>구분</th><th>사업명</th></tr>
<tr><td>일반</td><td>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3), 공정·품질기술개발(R&D)(2134-305),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2134-416),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R&D)(2134-465),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R&D)(2134-467)</td></tr>
<tr><td>소특</td><td>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3),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2134-352),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td></tr>
<tr><td>지특</td><td>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3336-334),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 (2151-309)</td></tr>
</table>
※ 협약변경 과제 현황
<table>
<tr><th rowspan="2">회계</th><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협약 변경
대상 과제</th><th colspan="3">협약 변경 결과</th></tr>
<tr><th>감액 수용</th><th>과제 중단</th><th>문제과제</th></tr>
<tr><td>일반</td><td>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td><td>1,469</td><td>1,371</td><td>89</td><td>9</td></tr>
<tr><td>소특</td><td>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td><td>638</td><td>591</td><td>40</td><td>7</td></tr>
<tr><td>기후</td><td>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사업 등</td><td>175</td><td>159</td><td>15</td><td>1</td></tr>
<tr><td>지특</td><td>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등</td><td>185</td><td>177</td><td>8</td><td>-</td></tr>
<tr><td>소진</td><td>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td><td>10</td><td>10</td><td>-</td><td>-</td></tr>
<tr><td colspan="2">계</td><td>2,477</td><td>2,308</td><td>152</td><td>17</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td><td></td><td></td><td>※ 감액과제의 목표 변경·유지 현황

(단위: 개, %)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3">과제 종료 예정 연도</th></tr><tr><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 이후</th></tr><tr><td colspan="2">감액 수용 과제</td><td>2,308</td><td>1,349</td><td>922</td><td>37</td></tr><tr><td></td><td>연구개발 목표 변경</td><td>833 (36.1)</td><td>380 (28.2)</td><td>435 (47.2)</td><td>18 (48.6)</td></tr><tr><td></td><td>연구개발 목표 유지</td><td>1,475 (63.9)</td><td>969 (71.8)</td><td>487 (52.8)</td><td>19 (51.4)</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예산 감액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td><td></td><td></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디지털전환 역량 취약기업의 기초 단계 스마트 공장 지원 수요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제조혁신구축' *의 세부유형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형**에 대한 정부지원은 디지털역량이 취약한 중소 제조기업의 기초단계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단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도화 단계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에서 진행 차질이 발생하고 대기업의 협력투자(민간 출연)가 저조함 - 당초 총 240억원을 출연하고자 했던 주관기관(5개사)이 사업비를 222억원만 출연하여, 매칭 국비지원금 역시 222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8억원은 해당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였음 *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활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비·솔루션 도입 등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협업하여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DX(디지털전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되,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요에 균형있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수출바우처 사용대금의 적기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수출바우처’는 정산이 지연되어 일부 공급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음에도 수개월 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디자인 개발·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1,118억 3,800만원) - 2025년 4월말 기준 바우처 발급총액 1,697억원(국비 1,097억원, 자부담 600억원) 중 1,613억원이 사용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된 금액은 1,335억원(사용액의 82.7%)에 불과하고, 공고시 정산기간(2개월)보다 긴 3 ~ 4개월 이상이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대금정산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업과 서비스 공급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시점 분산을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실집행률 제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5132-31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61.5%로 저조하여 과다 이월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예산 9억 7,100만원 중 3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중 1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함 * 인천 송도 지역에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해 의약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에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라고 지적(제도개선)됨 - 2025년 예산집행도 7월말 기준으로 예산 15억 6,100만원 중 집행액이 5억 3,700만원으로 34.4%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할 가능성 높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추진 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실행 가능성 있는 예산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4154-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로 사업이 부진하고,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 2024년 예산 600억 4,100만원 중 301억 1,300만원(50.2%)만 실집행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자율계정에 해당하나, 매년 실집행 부진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피보조기관에서의 이월 사유: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지차단체가 사업 수행 중 토지 소유주의 변심 등으로 인한 부지 매입 지연, 행정처리 지연 및 민원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월액 발생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지식산업센터 실집행부진 개선 및 적정 수준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부진 및 과다 이월을 반복하고 있음 - 2017년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2018년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2019년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2023년도 결산에서도 시정요구(제도개선)를 받았음에도 2024년 실집행률이 28.7%에 불과하며, ‘설계 용역·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 이월’ 등이 반복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부진과 과다 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이차보전 수요예측 정확성 및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등**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5152-301)	주의,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연구개발(R&D) 계속·종료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수요의 과다예측으로 인해 예산액 120억원 중 41억 7,000만원만 집행되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비 감액 연구기관의 이차지원 신청 저조 등으로 집행률이 34.8%에 불과하였음에도 신청 기간을 조기마감하여 상당부분 예산이 미집행 불용처리되었음 - 신청 기간 조기 마감(3/25~5/31에서 7/31까지로 1회 연장 후 추가 연장 없이 마감)되었는데, 산업통상부 유사사업은 신청기간을 9월말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연장했다는 점에서 신청기간이 다소 촉박하였음 * 정부 R&D 예산 계속·종료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R&D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기간을 집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으로 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과다추계로 인한 불용이 없도록 이차보전 수요를 정확히 추산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것(주의)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2024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95%에 불과하고,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도 당초 목표(40,000명)에 못 미치는 31,162명을 지원하는 데 그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자영업자 수(A)</td><td>5,530,700</td><td>5,513,000</td><td>5,632,000</td><td>5,688,700</td><td>5,657,100</td></tr>
<tr><td>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B)</td><td>31,391</td><td>37,599</td><td>43,319</td><td>47,831</td><td>53,601</td></tr>
<tr><td>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B/A)</td><td>0.57</td><td>0.68</td><td>0.77</td><td>0.84</td><td>0.9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용보험 수급 조건 완화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은 사업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사 후속사업의 관리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사업 진행 중 지원단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예산 집행이 부진함 - 연내 집행 완료가 어려움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어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설정함(연내 실집행률 89.1%, 142억 9,000만원 이월, 132억 8,600만원 전용)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2025년 제1회 추경)과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첩되어 운영상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유사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추진 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중·저신용자 대환대출은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적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4,5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집행 부진으로 1,216억원(27.0%) 수준으로 감액 변경되었으며, 최종 집행액(1,135억원)은 당초 편성액 대비 25.2% 수준에 불과함 - 대환대출은 당초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집행 부진으로 3,000억원(60.0%) 수준으로 감액 변경되었으며, 최종 집행액(2,491억원)은 당초 편성액 대비 49.8% 수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차주의 신용도·부실 정도 등 사업 운영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정책자금 특성에 맞는 지원요건 설계와 실수요 기반 정책을 반영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확정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매년 당초 국회에 제출된 할인율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할인보전금을 계획 대비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실제 상품권 발행규모는 계획 대비 미달하고 있음
- 2024년 실제 상품권 발행규모는 계획(5조원)에 못 미치는 4조 2,880억원(85.5%)임
[온누리상품권 할인보전금 계획 대비 실제 운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안 편성 시 계획</th><th colspan="2">실제 운영</th><th colspan="2">차이</th></tr>
<tr><th>할인율</th><th>예산</th><th>할인율</th><th>예산</th><th>할인율</th><th>예산</th></tr>
<tr><td>지류</td><td>5%</td><td rowspan="2">2,800
억원</td><td>10%</td><td rowspan="2">3,380억원
(계획대비
120.7%)</td><td>5%p</td><td rowspan="2">580
억원</td></tr>
<tr><td>디지털</td><td>10%</td><td>15%</td><td>5%p</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수행 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상의 할인율을 준수하고, 당초 상품권 발행목표를 달성하여 상품권 사용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2024년 현장조사 결과, 고액 매출 가맹점 449곳 중 134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음 - 2023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 목표에 미달한 탓에 2024년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하여 할인율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늘렸음 * 2019~2023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35건, 539억원 규모 * 2023년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는 4조원, 실제 발행규모는 2조 242억원(50.6%) * 2024년 지류 상품권 발행목표는 1조 4,000억원, 실제 발행규모는 2조 6,520억원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서비스 미공급 수행기관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과정의 지연 및 사용기간·사업기간의 혼선 등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부 사업에 비해 선정공고일이 늦고 참여기업 신청 접수 후 선정기간이 길어 참여기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을 선정일 이전 1~2달까지 소급하여 적용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인지하여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 중임 - 사업기간 종료 후 실제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2024년도 사업은 2025년 2·3월 말 사업기간 종료 후 2025년 7월 현재 보조금 미정산)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는 2024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775개사(28.0%)은 최근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참여기업 선정기간을 앞당기고 바우처 사용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보조금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미제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연도 중 임의적 사업내용 변경 및 사후계획 변경·승인 재발장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동브랜드 지원’은 사업연도 중에 사업내용, 선정방식,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연말에서야 어워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 및 집행이 부적정함 - 당초 계획은 대형 유통사 3개사와 협업하여 뷰티·푸드·가전 분야 B2C 소비재 수출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6~7월 ‘브랜드 K 어워즈’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연계지원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실제로는 ‘K-전략품목 어워즈 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2개사와 협업하여 뷰티·푸드 분야 우수기업을 12월 선정하여 ‘K-전략품목 어워즈’ 행사를 개최하고 3월까지 3개월간 연계지원을 수행함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변경된 세부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사업 관리도 미흡하였음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2024년 K-전략품목 어워즈(12.12.) 개최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동 사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사후적으로 제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 세부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적정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승인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글로벌 팁스 신청요건 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팁스’는 이미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된 수준의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여 스타트업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해외 VC의 현지 네트워크 및 멘토링을 활용하여 기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 기준 글로벌 팁스 신청 요건은 해외 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으로 한정되는데, 해외 VC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음 - 기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다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팀스 사업 지원대상에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 인정 등 참여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사업의 근본적 성과평가를 위한 대조군 기반 평가 의무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환경 조성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 기업의 생존률이 일반 생존률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예산을 투입하여도 창업 생태계 평균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성장 악화 문제는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대조군 기반의 성과평가를 통해 업종·규모·단계별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효과성이 낮은 집단·방식에 대해서는 지원모델 전환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함 - 지원기업과 같은 업종, 지역, 설립연도, 기업규모인 기업 중에서 지원 여부에 따른 성장, 매출, 고용률 증가 등을 평가하는 등 대조군 기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지원 성과평가 시 동일 업종·규모·지역·개업연도의 비지원 기업과 매칭 비교하는 대조군 기반 평가를 의무화하고, 단순 사업자등록 유지가 아니라 매출·고용·부가가치·수출 등 질적 성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사업계획 임의변경 주의**	관련사업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1261-308)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사업준비가 부재한 가운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사후 평가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임의로 평균 환급금을 상향한 것은 부적절함 * 시중은행을 제외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0.5~1.5%p의 이자비용 지원(최대 1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당초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환급금 75만원을 기준으로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 추진 결과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84만원을 지급하여 2,112억원을 환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가 순증한 사업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글로벌화지원플랫폼(3152-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구축사업’은 설비구축 일정 지연으로 예산액 중 대부분이 이월 집행되었고, 2024년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음
- 예산액 70억 500만원 중 15억 3,100만원만 집행(집행률: 21.9%)되고 54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월액은 1차 물류설비 구축용역 잔금 35억 3,700만원과 2차 물류설비 구축용역 선금 19억 1,600만원에 해당하는데, 2차 물류설비 구축용역은 2024년 집행가능성이 없고 2025년에야 개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선금을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1차 설비구축 과정(물류설비 설계, 자재 발주, 1층 일부 설치 등)은 2025년 11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바로 2차 설비구축(1층 잔여분 및 2층 전체 설치)에 착수할 예정(2025년 12월)이라 설명함
※ 물류설비 구축사업 추진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물류설비 구축 용역</th></tr>
<tr><th>1차</th><th>2차</th></tr>
<tr><td rowspan="2">예산</td><td>163억 8,900만원</td><td>56억 1,100만원</td></tr>
<tr><td>선금 128억 5,200만원(2023)
+ 잔금 35억 3,700만원(2025)</td><td>선금 19억 1,600만원(2025)
+ 잔금 36억 9,500만원(2026)</td></tr>
<tr><td>과업</td><td>설비 설계 및 발주/제작</td><td>설비 발주, 설치, 검사, 시운전,
교육 등</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폐업 기업
인력의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증잔액이 증가하고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술보증기금 보증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 19 이후 6차례 시행된 상환유예조치가 2025년 9월 종료될 예정으로, 잠재적 부실기업의 일시적 상환부담이 증가하여, 보증사고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술보증 부실 현황
(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연말 사고잔액</td><td>2,834</td><td>2,909</td><td>3,528</td><td>4,544</td><td>5,081</td></tr>
<tr><td>대위변제
보증해지액</td><td>8,136</td><td>6,618</td><td>6,578</td><td>10,816</td><td>12,936</td></tr>
</table>
○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이 폐업할 경우 기업 내 인력의 재기지원 문제가 중요하며, 재취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의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보조금
집행잔액의 적기
국고반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조사업 중 사업의 완료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이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음
※ 2020년도 이전 교부한 보조사업의 2024년 집행잔액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table>
<tr><th>교부연도</th><th>2015년</th><th>2016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총계</th></tr>
<tr><td>전체
교부액</td><td>189,851</td><td>180,025</td><td>200,396</td><td>93,437</td><td>380,978</td><td>4,217,489</td><td>5,262,176</td></tr>
<tr><td>반납액</td><td>1,903</td><td>46</td><td>8</td><td>2,735</td><td>1,402</td><td>4,220</td><td>10,314</td></tr>
<tr><td>반납건수</td><td>2</td><td>1</td><td>2</td><td>3</td><td>6</td><td>9</td><td>2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반납 지체로 인한 보조금 잔액의 국고반납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사업계획 임의변경 주의**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부재한 가운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사후 평가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임의로 평균 지원금을 상향한 것은 부적절함 - 당초에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 추진 결과 약 95.4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2,387억원이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가 순증한 사업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4131-327)	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구축이 미진하여 플랫폼 홈페이지를 대외에 공개하지 못하였고, 동일업체와의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6개월의 보완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대외에 공개함 ○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구축사업의 진척이 저조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이후 동일 업체와 유지보수·운영사업을 수행한 문제가 있음 - 2023년 8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40일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데이터 가공·연계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2024년 6월 30일에 완료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플랫폼을 오픈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7월 구축사업 수행업체와 계약하여 연말까지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하였고, 시범오픈은 11월 29일, 정식오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구축사업이 종료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플랫폼 공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소진기금 부실률
심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부실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경제 여건 악화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 및 폐업 증가로 인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직접대출 연체율(연체 30~89일) 및 부실률(연체 90일 이상) 현황
(단위: 억원, %)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연체금액</td><td>201</td><td>184</td><td>1,214</td><td>2,337</td><td>2,055</td></tr>
<tr><td>연체율</td><td>0.71</td><td>0.34</td><td>1.54</td><td>2.83</td><td>2.79</td></tr>
<tr><td>부실금액</td><td>679</td><td>857</td><td>2,195</td><td>8,240</td><td>10,127</td></tr>
<tr><td>부실률</td><td>2.40</td><td>1.58</td><td>2.79</td><td>9.98</td><td>13.77</td></tr>
</table>
○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이 융자상환, 재창업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의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재기지원(재취업지원) 사업 연계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부(123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3억원이 편성됨 - 2024년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후속연구’ 명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타 비목으로 전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불필요한 연구용역비의 편성을 지양할 것		
2	**국제부담금으로의 비목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WPRO 전략사업 추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WPRO간 체결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급됨에도, 해외교포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해외경상이전(340-01) 비목으로 편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전략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WPRO 전략사업 추진’ 사업의 비목을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하여 해당 예산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성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70%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단위: 조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14</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 colspan="2">계</td><td>6.9</td><td>11.8</td><td>14.7</td><td>16.8</td><td>18.9</td><td>20.0</td><td>22.5</td><td>24.4</td><td>26.1</td></tr>
<tr><td rowspan="2"></td><td>국 비</td><td>5.2</td><td>9.1</td><td>11.5</td><td>13.2</td><td>14.9</td><td>16.1</td><td>18.5</td><td>20.2</td><td>21.8</td></tr>
<tr><td>지방비</td><td>1.7</td><td>2.7</td><td>3.2</td><td>3.6</td><td>3.9</td><td>3.9</td><td>4.0</td><td>4.2</td><td>4.3</td></tr>
</table>
○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제도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지원체계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38~66.7%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2009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율이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3%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지출액) 기준 지원율은 약 1.82%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책임과 기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3년 대비 2024년 물가가 23% 상승했음에도 특별생계비(월 7만 5,000원), 임대보증금(1,770만원) 등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음 ○ 아울러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6	**노인보호 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음 - 2024년 준수율: 노인보호전문기관 95.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2.6%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냉방비 · 부식비 · 시설보수비 등 경로당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반복적으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실집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개소당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 간 1인당 지원금액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부재함 ○ 폭염 등 이상기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건강취약계층으로 기온변화에 취약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경로당, 일반 경로당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규모·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 부식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쉼터로서 경로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냉방비 등 경로당 지원 내역 및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12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형 사업’ 외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인력 배치 등 비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나 통합지원 정책·시범사업 평가 등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형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 재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령친화산업육성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예산 미반영으로 2024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자체 출연금으로 우수제품 지정(73건) 업무만 수행했을 뿐,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혁신형 기업 지원 등은 중단된 상태임 ○ 전세계적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세계시장규모: 2015년 4.2조 유로 ⇒ 2025년 6.4조 유로(약 8,800조원) 전망 - 국내시장규모: 2022년 83조 ⇒ 2030년 143조원 전망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세부사업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 지원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만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도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현황 >
(기준 : 2024. 12. 31.)
<table>
<tr><th>구 분</th><th>서비스관리자</th><th>생활지원사</th></tr>
<tr><td>교통비</td><td>9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d>10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r>
<tr><td>통신비</td><td>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d>7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r>
<tr><td>수당 등 별도지원</td><td>1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d>1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필수적인 교통비·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td></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및 화장시설
확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사시설설치(2140-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장사시설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11억 3,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95억 3,800만원(실집행률 71.8%)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실집행률: 2022회계연도 67.3% / 2023회계연도 73.9%
○ 사망자·화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 대도시권에서 3일장 비율이 낮은 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공설 화장시설 신·증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서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지연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실집행률은 57.2%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만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은 6개소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의 건축단가(198만원/㎡)가 조달청 노유자 시설의 3개년(2022~2024년) 평균 건축단가(358만원/㎡)의 55% 수준에 불과하여 2022년 6개소, 2023년 1개소 등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계속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대상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된 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8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미설치 7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단가가 조달청 단가에 비해 너무 낮아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단가 현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에는 관리해야 할 장비 수가 2024년 27만 2,000대보다 2만 1,000대 늘어난 29만 3,000대임 ○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 등으로 이직률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임금수준 상향, 부대비용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 구축 (22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6.7%인 94개소임. 특히, 도시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이 45.6%인 반면, 농촌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기준 충족률이 20.7%에 불과한 실정임 ○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되었고, 2025년도 계획액에도 301억 4100만원(개소당 1억 1,174만원)만 반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기준 충족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환자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수요를 고려한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예산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비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술비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하고 있고, 2024년에도 8월에 마감된 바 있음 ○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계획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신청이 매년 조기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		
16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부당청구 관리·징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저하되는 등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부당이득금은 506억 7,000만원, 적발기관은 1,127개소, 징수액은 402억 3,000만원임. 징수율은 2015년 97.73%에서 2024년 79.39%로 18.34%p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중 최저치임 * (부당이득 결정건수 · 금액) ('11～'24) (건수) 226,147건, (금액) 4,096억 2,500만원 ** (부당이득금 징수율) ('22) 86.2% ('23) 89.6% ('24) 79.4%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 규모 · 유형 · 징수실적의 분기별 모니터링 · 분석, 고위험 기관 선별 · 점검 체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한 현지조사 ·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 등 부당청구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미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강구 등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국회보고 제도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예·결산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18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실집행률이 전년(70.9%) 대비 개선된 85.1%였으나, 이는 예산액이 2023년 10억 7,600만원에서 2024년 8억 3,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른 효과로, 참여 아동 수나 연간 이용 건수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는 적고, 시·도별 집행 실적에서도 평균 85.1%보다 낮은 지자체(광주광역시 73.1%, 대구광역시 78% 등)가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 등 사업 활성화 노력과 함께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성평등가족부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등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의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취지의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 수행 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20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 개선과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평균 1인당 담당 청년 수가 48.6명에 이르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가 열악하여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채용 인력의 이·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2024년 실집행내역은 예산액 91억원 중 불용액이 18억 7,300만원으로, 사례관리실적은 목표인 2,750명을 초과하여 3,491건이었음에도 불용액이 상당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상 편성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보다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가 초과된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 편성과 배분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8,000명 대상 월 15만원씩 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은 21.3%인 2억 7,700만원에 불과함(시스템 운영비 1억원 제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실제 지원된 금액 12억원 기준으로는 14.8%인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이용자 수·이용 횟수·지급 금액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정밀 분석하여 사업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22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44.4%에 그쳤고, 서울은 78.6%인 반면 전남 13.8%, 경기 22.5% 등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임. 아울러 국가가 매칭해서 지급되는 아동용품 지원 사업 외에,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금액만큼 아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권고 수준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아동용품구입비가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집행 실적이 낮은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 시 재외동포청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13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2024년도 예산 16억 1,000만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바, 보건복지부의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과 사업 대상·내용, 추진체계가 유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 시 국외 입양인 단체와의 효율적 소통 및 네트워크 활용의 장점이 있는 재외동포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		
24	영유아·고위험 아동 돌봄을 위한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낮은 쉼터 설치 지원단가 등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2024년도 신규 설치는 8개소에 불과하는 등 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실집행률이 15%에 그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2.7% 수준,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95.4%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고위험아동을 위한 돌봄 쉼터 설치 확대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및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쉼터 등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 증진(1337-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사업에 포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4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다루게 하는 ‘약식 보고 절차’를 표준 보고 절차로 결정하면서 우리 나라도 약식 보고 절차를 따르게 된바,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과 상이한 사업으로서 2024년 10월에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설정된 다른 신규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6	**아동수당 오지급 규모를 줄일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수당 지급(25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오지급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9억 3,236만원, 2023년 22억 3,195만원, 2024년 27억 3,202만원으로 오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오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위기임산부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없는 상담인력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각 100만원, 숙려기간 지원으로 각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의료비만 지원한 건수는 6건,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한 건수 6건, 의료비·숙려기간 비용 모두 지원한 건수 39건으로,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800만원(15%)에 불과함 ○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기준 12개 지역상담기관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광주·충북 100%, 제주·경기 각 53%, 75.35% 등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위기임산부 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 상담인력의 안정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보호출산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아동센터 지원(1338-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상담·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및 파견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준 배정 교사(3,472명) 대비 11.6%인 403명이 한 해 동안 퇴사하였고, 특히 단시간(12시간) 교사의 퇴사율(14.4%)이 전일제(25시간) 교사의 퇴사율(10.6%)보다 높은 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교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		
29	**고립·은둔청년 적극적 발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국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이 가족돌봄청년보다 6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발굴 실적은 오히려 적어 정책의 목표 설정과 집행 방향에 문제가 있음 ○ 2024년 11월 한 요식업체 앱을 통한 2주간의 홍보만으로도 1,653명의 은둔청년이 자가진단에 참여하였듯이 홍보·접촉 수단에 따라 발굴 효과가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의 추정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발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 ○ 보건복지부는 SNS, 온라인 플랫폼,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발굴 이후 참여를 촉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전담조직 개소 지연 재발 방지 및 인력 처우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25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4개소는 지방비 매칭 등 재원 마련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소가 예정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인력 측면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2024년말 기준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집행률 24.3%,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집행률 47.6%)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개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전담조직 인력의 처우도 유사직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		
3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구조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동 내내역사업을 통하여 냉동난자 해동 이후에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는 냉동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고 이후과정은 전액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냉동난자 해동 이후의 절차를 이원화하는 현재의 사업 구조를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운영비의 합리적 배분 방식 마련**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말 기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전국 9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별 동일하게 1억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각 개소별 연간 상담 횟수는 최다인 곳이 7,052건이고 최소인 곳이 4,335건임 ○ 2024년부터 2025년 5월말까지 각 개소별 상담 인력 1인당 상담 건수를 비교하면 최다인 곳이 3,644건, 최소인 곳이 1,641건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수요량과 관계없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되, 그 밖의 계획액은 전년도 심리상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동 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		
33	**생애초기 건강관리 내내역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말 기준, 내내역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집행된 보건소의 인건비 및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는 34억 5,100만원으로서 계획현액 50억 7,200만원의 68%였고, 2023년의 해당 실집행률은 60.3%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도록 독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당초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동 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민연금기금에 반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5	**예산 추계정확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미교부액은 1,544억 2,600만원이고 교부된 예산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액은 1,457억 8,400만원으로, 이·전용액 26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총 3,264억 2,200만원이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안전망으로서 생계급여 사업의 목적과 기능,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계 재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요에 대한 추계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의료급여 예산은 실집행률 98.9%로 추계는 양호했으나, 정부가 의료급여기금 사용을 전제로 일반회계 예산 5,000억원을 미배정하여 불용 처리됨 ○ 적정 준비금 기준과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없어, 2025년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1,341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시·도와 협의 없이 기금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미배정한 점도 절차상 미흡했으므로, 건강보험 준비금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준비금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시·도 협의 강화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 수준과 적립금 활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사업 개선 및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시군구에 10명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로 인하여 2024년에는 지역별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20명→10명) 조정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58%로 저조했다는 점, 농촌지역 등에서 의료·주거·돌봄체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역별로 사업활성화 차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돌봄·식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와 지역별 사업실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종결 인원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타 복지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것		
38	실집행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가입자 및 해지자 수를 토대로 한 계산 결과, 약 85억 8,3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 월별 가입 유지자 규모와 신규 가입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을 분할·단계적으로 교부하여 불용·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예산의 실집행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2631-32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 증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2631-32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2022년 28만 7,288명에서 2023년 33만 9,579명, 2024년 41만 2,392명, 그리고 2025년 48만 1,82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상해보험료 지원예산은 매년 28억원으로 동결되어 미지원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단위: 명)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사회복지시설 종사자(A)</td><td>255,587</td><td>287,288</td><td>339,579</td><td>412,392</td><td>481,823</td></tr>
<tr><td>상해보험 지원인원(B)</td><td>240,000</td><td>280,000</td><td>280,000</td><td>280,000</td><td>280,000</td></tr>
<tr><td>미지원 종사자(A-B)</td><td>15,587</td><td>7,288</td><td>59,579</td><td>132,392</td><td>201,82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td></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처우 개선 등을
통한 인력 확보</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중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각각 33억 4,500만원, 28억 900만원으로 실집행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 대부분이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발생한 인건비집행잔액으로,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부된 보조금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력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임금 수준 현실화 검토 및 불용 예상시 교부 중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중앙관리직 1인이 2024년 11월에서야 채용되었으므로, 미채용기간의 인건비는 교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5,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결국 2,1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인력을 제때 채용하여 인건비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이 예상될 경우 교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중앙관리직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검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것		
43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제도지원(2636-31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편성된 5억 7,2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피복비·급식비·국내여비 그리고 관련 운영비 등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과 무관한 ‘나눔국민대상’의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동 사업의 운영비 900만원을 사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제45조를 위반하여 동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 적확한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교부 요건이 소멸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동 내역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상실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사업의 취소라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요건이 소멸한 경우 보조금 및 이자를 차질없이 반환받도록 주의할 것		
45	**반복적인 예산조정 관행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685억 1,800만원의 예산액이 당초 편성되었으나, 10월 중 2차례 내역변경 및 전용을 통해 총 6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당초 예산편성액의 약 9%를 변경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취지에 벗어난 측면이 있음 - 2023년에도 동일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총 12억 2,000만원이 조정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내역변경·전용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수급자 변화율도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장애아동수당 사업을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에서 구분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와 지원 기준이 다른 별도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각 수당별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전용 등 예산조정 절차 없이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해지며,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의 성과를 구분해 측정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거나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집행·정산할 것		
47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예산 전용(50억 원)으로 누적 미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 이후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여 2024년말 기준 누적 미지급금이 193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편성 예산(358억 6,800만원)의 54%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수요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고, 미지급금 해소 예산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미이용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은 84.7%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86.7%(2020년) → 86.0%(2021년) → 85.1%(2022년) → 84.7%(2023년) → 84.7%(2024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는 118,125명(2020년)에서 167,403명(2024년)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전체 대상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대상자의 증가가 서비스 이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과 매칭 체계 개선, 장기 미이용자 및 일시 중단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예산조정을 통한
가산급여 집행
관행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집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예산조정을 통해 연례적으로 적게는 약 22억원에서 많게는 약 251억원이 증액되어 집행되었음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회계연도</th><th colspan="9">가산급여</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비비</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0년</td><td>2,066</td><td>2,066</td><td>-</td><td>2,262</td><td>-</td><td>4,328</td><td>4,328</td><td>-</td><td>-</td></tr>
<tr><td>2021년</td><td>4,649</td><td>4,649</td><td>-</td><td>4,999</td><td>-</td><td>9,648</td><td>9,648</td><td>-</td><td>-</td></tr>
<tr><td>2022년</td><td>9,005</td><td>9,005</td><td>-</td><td>7,448</td><td>-</td><td>16,453</td><td>16,453</td><td>-</td><td>-</td></tr>
<tr><td>2023년</td><td>21,925</td><td>21,925</td><td>-</td><td>25,153</td><td>-</td><td>47,078</td><td>47,078</td><td>-</td><td>-</td></tr>
<tr><td>2024년</td><td>47,034</td><td>47,034</td><td>-</td><td>17,967</td><td>-</td><td>65,001</td><td>65,001</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이용시간 증가 등 가산급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조정에 의존하는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보전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불균형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전급여 제도 시행 이후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2024년에는 집행률이 330.8%에 이르고 있음 ○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매년 기준인원에 미달하여 2023년과 2024년 집행률이 각각 20.7%, 13.3%에 불과한 등 예산 집행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전급여는 실제 이용 추이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실시하고, ▲ 집행률이 저조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는 인지도 제고와 신청 절차·접근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안내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실집행액, 편성 기준인원 및 실제 이용자 수 등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언어발달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예산편성액</td><td>796</td><td>796</td><td>651</td><td>651</td><td>651</td></tr>
<tr><td>실집행액</td><td>763</td><td>774</td><td>594</td><td>625</td><td>410</td></tr>
<tr><td>예산편성 기준인원</td><td>550명</td><td>550명</td><td>450명</td><td>450명</td><td>450명</td></tr>
<tr><td>이용자 수</td><td>413명</td><td>435명</td><td>405명</td><td>400명</td><td>365명</td></tr>
</table>
- 이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낮은 지원단가로 인한 공급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언어발달지원은 지원단가(월 18만원)와 제공기관・인력 규모(165개소, 306명)가 발달재활서비스(월 20만원, 2,668개소, 13,546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지원단가를 발달재활서비스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확충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전 시범사업 재평가 및 성과지표 개편**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청자 수만 반영하고 있어 성과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지표**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참여도(%)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참여 신청자 수 / 목표인원 수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 신청자 수 중심에서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지표를 포함하도록 개편할 것		
53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설치 부진 해소를 위한 유인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4개소 설치를 위해 1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충청남도 2개소 설치분 5억 7,100만 원은 전액 이월되고 나머지 5억 7,10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2025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현재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에만 설치되어 있어 신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장애아동 보호체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1538-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비중은 약 79%에 달하는데, 이는 인력 운영이 수탁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안정성이 높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발달장애인지원’ 등 10개의 수탁사업 예산에서 편성·집행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사업 중심 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탁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55	**연구용역비 집행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154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2022년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이행 평가 등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연구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단순한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연구비 집행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최초 연구계획 수립, 주제 설정, 연구자 섭외 등 전반적인 기획·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반연구비 집행 시, 연구 주제의 타당성 검토부터 연구자 검증,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실집행 저조 및 장기 미개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예산이 전액 또는 대부분 전용·감액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정된 기관의 시설계획 변경, 개보수 지연, 사업계획 미승인 등으로 예산을 반복 이월하거나 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개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2024년 기준, 미개소 상태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총 9개소로, 모두 1회 이상 이월을 거쳤고, 이 중 6곳은 2회 이상 이월이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 50% 수준인 시설·장비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소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57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의 장애의료기관 연계 강화 및 성과지표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1542-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음에도 현재 시스템에 동록된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0.3% 수준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사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성과지표 설정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실집행이 저조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제도 정비**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률은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7.6%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25억원을 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식개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9	**WHO FCTC(담배규제 기본협약) 국제분담금의 적시 납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WHO FCTC 국제분담금(ODA)(33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WHO FCTC는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국제 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WHO 총회에서 2003년 채택하여 2005년부터 발효한 국제협약으로, 국가별 분담금은 UN 분담률을 고려하여 경제규모(GDP), 국민소득(GNI), 외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되고, 격년으로 매 11월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다음 회계기간(2년)의 분담금을 결정하여 납부하게 하는바, 2024년 우리나라의 분담률 적용 기준이 기존 2.94%에서 3.33%로 상향 조정되었고, USD 달러 환율 또한 상승하여 이미 확보한 2024년 예산(원화) 부족으로 $51,808를 미납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국제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확실성 대응분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설치비의 연례적 지연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및 진료장비비 지원의 실집행률은 7.2%에 그친바, 당초 2025년 1월 개소 예정이었던 서울 센터도 예정보다 지연되어 개소하는 등 연례적 설치 지연으로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하여 마취과 의사 확보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인력으로 근무하는 상황임 ○ 현재까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경증장애인도 진료받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고, 전담 마취과 인력 확보 및 지역장애인구강진센터 지정·운영도 추진할 것		
61	농·어촌 보건소 등 신·증축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27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0~2023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60% 초반에 그쳤고,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49%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지자체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연례적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73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액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2024회계연도에는 신규 설치 없이 7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65.9%에서 72.5%로 개선됨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집행 실적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 ○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국비 지원을 통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활성화, 기존 지자체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개·보수 등의 방식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63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자는 68만 3,225명이나 수검자는 26만 7,719명으로 수검률이 39.1%로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30%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내 발달평가 결과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화평가 권고’ 비율이 10.2%, 11%, 11.7%로 증가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주상병 분포를 고려한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 ○ 보건복지부는사회적 약자 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비용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금연상담인력 처우 개선과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활성화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금연상담전화의 경우 이직률이 2023년 31.9%에서 2024년 36.59%로 증가하였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65.4%에 이르는 등 인력 운영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하여 금연상담인력 처우 개선과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고할 것		
65	**군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의 효과적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현재 군의 흡연율은 37.5%로 비슷한 연령대인 일반국민 19세~29세 성인 남성 흡연율(28.8%)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에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5% 수준인 5억 6,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군인들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하여 군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앱’ 사업을 건강관리협회에서 개발한 ‘군 금연 길라잡이’ 모바일 앱과 연계·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군인 금연지원서비스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6</td><td rowspan="3">사업 지연에
따른 참여자
동의 확보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3031-52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총 약 77만명의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할 예정이나, 사업의 핵심적 과제인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한 공모 지연 등으로 검체 모집을 비롯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수행기관 단위의 실집행 실적 또한 부진함.(범부처 기준 2024년도 예산 실집행률 59.5%, 올해 8월 11일 기준 예산 집행률 25.5%)
< 참여자 모집실적 연도별 목표 및 실적 >
(단위 : 천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4~2025</th><th rowspan="2">2026</th><th rowspan="2">2027</th><th rowspan="2">2028</th></tr>
<tr><th>목표</th><th>실적('25.8.7)</th></tr>
<tr><td>참여자 모집실적</td><td>206</td><td>54.1</td><td>192</td><td>177</td><td>177</td></tr>
</table>
※ 연도별 성과목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의 성과목표에 따라 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사업 일정 차질의 최소화 및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확보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사업추진일정의 보다 정밀한 관리 및 컨텐츠 종류 재검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플랫폼 고도화 등 주요사업의 추진 일정 지연(2024년 10월 계약 체결, 계약기간 '24.11.~'25.8.)에 따라 2024년도 예산 116억 700만원중 40억 1,500만원이 실집행되고, 73억 8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 전체 의료기관(약 3만 9천 개소) 중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6%(1,004개소)에 불과하고, 앱 다운로드 및 가입자 수 대비 실제 개인건강기록 다운로드 및 공유 등 사용자 활용도는 낮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건강·행정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컨텐츠 종류 및 전달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앱의 국민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8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진료기록 이관의 신속한 추진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정보화)(4333-32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2023년의 경우 당초 200개소에서 100개소로, 2024년은 500개소에서 400개소로 축소)되어 진료기록 이관이 지체되고 있으며, 실제 휴·폐업하여 이관 대상인 의료기관 수(704개)가 사업 규모(600개소로 추산)를 초과하고 있음 ○ 치과와 한의원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진료기록 이관 추진 속도를 높일 것 ○ 보건복지부는 치과·한의원의 진료기록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32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5개 지역에 설치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률 편차가 상당하고, 2024년도 이용률도 40~50%대에 머무는 등 활용이 저조함
<5개소(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 연도별 이용률>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평창</th><th>제천</th><th>진안</th><th>화순</th><th>안동</th><th>합계(평균)</th></tr>
<tr><td rowspan="5">시설
이용률
(%)</td><td>2020</td><td>4.5%</td><td>30.9%</td><td>7.0%</td><td>7.5%</td><td>16.2%</td><td>16.7%</td></tr>
<tr><td>2021</td><td>28.4%</td><td>38.8%</td><td>16.3%</td><td>9.9%</td><td>24.7%</td><td>23.9%</td></tr>
<tr><td>2022</td><td>73.0%</td><td>40.8%</td><td>28.2%</td><td>-</td><td>50.5%</td><td>37.7%</td></tr>
<tr><td>2023</td><td>88.4%</td><td>41.3%</td><td>30.6%</td><td>21.1%</td><td>48.8%</td><td>46.0%</td></tr>
<tr><td>2024</td><td>58.8%</td><td>45.1%</td><td>48.8%</td><td>37.8%</td><td>59.5%</td><td>50.0%</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산업육성(323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말 현재까지 인증 현황 등을 살펴보면 전체 원외탕전실 127개소 중 인증 원외탕전실은 21개소(16.5%)로 여전히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여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인증제의 사업성과가 저조함 ○ 의약품 제조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원외탕전실을 중심으로 제조업화가 진행되어 한방제약산업 분야(식약처 소관)는 사양화에 접어드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함께 조제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의약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1	**연구결과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2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한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의학을 응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실증적 제품 개발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7건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제품 출시 실적은 2건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 연구결과물의 상품화 등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과제 관리 강화 및 우수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32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내역사업인 ‘국가한의임상연구’ 사업에 13개 연구과제, 내역사업인 ‘혁신형한의중개연구’ 사업에 13개 연구과제를 신규로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나, 혁신형한의중개연구의 경우 공모 과정에서 9.2:1의 과제선정 경쟁률을 보인 반면, 국가한의임상연구는 1.6: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음 ○ 2024년 12월말 현재 완료된 총 79개 연구과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과제는 9건, 보통이 69건, 미흡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수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집중되었고, 2024년 완료 과제 중에는 우수 사례가 없는 등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2024년 연구결과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가한의임상연구에 대한 과제관리를 강화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73	과도한 내역변경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내역사업인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예산 73억 9,100만원 중 29억 3,9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함 -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실수요에 따라 내역사업 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심의·확정한 세부사업 규모를 집행 단계에서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역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4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과소 편성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을 낮게 편성하였으나, 건강보험 관련 규칙은 2024년 7월 5일 개정되었음 ○ 마약류 투약사범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비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은 과소편성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추이를 관찰하여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할 것		
7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쏠림 완화 및 전체 기관 치료 역량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현재 전국 치료보호기관은 31개소이고, 이 중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9개소이며, 그 중에서 2개소(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전체 치료보호기관 실적의 74.3%를 차지함 ○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아닌 22개소의 치료실적은 전체 875명의 10% 미만인 연간 80명 수준이고, 치료실적이 전무한 곳도 14개소에 이르는 등 치료기관 별 치료실적 쏠림 현상이 발견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특정한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 보건복지부는 31개 치료보호기관 전체의 치료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345-32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르면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024년 7월 18일부터 관내 정신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장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음 ○ 참고로 2024년 동 센터의 이용 실인원 수는 8,385명, 연인원은 28,628명에 이르는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포항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할 것		
77	**내역사업 백지화를 통한 타 사업으로의 전액 내역변경 사례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3345-32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수도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으로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를 사유로 전액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었음 ○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된 사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포상금 지급 관련 전반적 절차 재정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포상금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되었고, 2024년 7월부터 단 4개월 실적만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었으며, 공적조서 없이 정량적 지표만을 기반으로 포상 대상을 선정함 ○ 포상금 지급의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실집행률이 전국 평균 30.1%보다 낮은 지자체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생계급여사업의 전체 예산이 7조 5,410억인데 포상금이 1억 8,500만원인 점, 의료급여사업의 전체 예산이 8조 9,377억원인데 포상금이 1억 6,000만원인 점과 비교할 때 동 사업(전체 예산 472억 4,900만원)의 포상금 5억원은 규모가 과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급 기준과 선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절차를 재정비하며 다른 복지 사업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양적·질적 상담실적 우수 상담사 등 포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9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격은 심리학과·상담학과 등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자격들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담보되고 있다고 보이나, 심리상담 수련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동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중 민간자격과 관련해서 자격 질 관리의 적절성(심리상담 수련시간, 보수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80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편성 변경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정신건강 증진사업(334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의 예산 일부(공공요금 4,100만원)를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Tel. 1577-0199)의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을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단위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1	**국립병원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나주병원 인건비(3802-100), 부곡병원 인건비(3902-100) - 춘천병원 인건비(4002-100), 공주병원 인건비(4102-1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1년 50.0%, 2022년 33.7%, 2023년 40.0%, 2024년 46.8%로 매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 원인으로는 채용공고 응시자 부족, 지방 근무 기피, 낮은 보수 수준, 특수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인력 미충원에 대한 개선책과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2	**뇌전증 지원센터 명칭 및 홈페이지 등 무단점유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2740-306)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뇌전증 지원센터의 종료된 보조사업 책임자가 센터 명칭 및 기존 홈페이지·상담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제1기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제2기 센터로의 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요재산 이전·반환에 대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3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관리 및 집행점검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2740-307)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월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4 결산 기준 이월액 40억 6,800만원, 실집행율 39.1% ○ 국회는 이에 대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의결하였으나 2024회계연도에도 문제가 지속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시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가능성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병원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이월 승인을 검토할 것(주의)		
84	수탁기관 등을 해당업무 평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의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275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담당주체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1주기 분석 및 2주기 발전방향 제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유상 수행하게 하여 부적절함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시 공개입찰이나 공모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저해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5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2750-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달리 3개 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에 대해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연간 약 143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나, 동 위원회는 그간 개최이력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조속히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것		
86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잔여병상·대기정보 공개 등 시스템 개선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잔여병상·대기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호스피스의 전자적 신청도 가능하지 않아, 말기·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신속하게 호스피스전문기관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저해됨 ○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잔여병상·대기정보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나, 호스피스서비스 대기자의 사망 정보가 대기현황에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의 실효성이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환자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등을 통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잔여병상수·대기환자수 정보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7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및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지역별 소아응급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88	**소아전문상담 센터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의 2024년 예산 45억 6,000만원 중 500만원만이 집행되고 45억 5,500만원이 이월됨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관련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상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사업계획 검토, 집행관리 및 정보화사업 절차 준수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사용 저조 관련 사업 재구조화 등**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취약지 응급환자 처치 등 자문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거점병원을 연계하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이 저조함 ○ 2024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실사용기관 수는 15개소로 2015년 사업 출범 당시의 실사용기관 수인 21개소보다도 감소하였고, 2024년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 사용실적이 0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간 실적이 전혀 없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앱을 즉시 폐지하고 유사 시스템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을 통·폐합하는 등 시급히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의 사용 저조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0	**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2833-31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필수 7개 진료과별 최소 1명의 전담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소 중 1개소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충족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전공의 술기교육지원 사업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92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6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7,000만원이 각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3억 4,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2026년 예산 편성 시 집행률 제고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3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4333-32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8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병원에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 202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80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4차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70.1%에 해당하는 56억 6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이는 간병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시 집행점검을 철저히 할 것		
94	**철저한 사업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4339-30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2022년 마련된 ISP 계획에 따른 1차년도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수탁사업자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민간위탁계약 체결(2024.7.3.) 이후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기 전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가이드’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에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5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의 경우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1.5~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14%)에 미달하고 있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법정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단, 최대한도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을 준수하고 있으나,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하여 2024년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3% 수준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제도개선)		
96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연간 균등한 국고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연말 교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불확실성과 재무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24년 기준) 일반회계 예산액 10조 2,636억원 중 6조 2,136억원(60.5%)은 11월 말 이후 교부, 기금 계획액 1조 9,022억원은 전액 12월 26일 교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및 참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의 모델별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상병수당 사업비 내역사업 실집행률) ('22) 23.2% ('23) 30.3% ('24) 59.1% ○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전체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2024년 기준 11%대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대상 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의료기관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98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형설계·시범사업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시범사업 모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75.3% 감소되었으며, 정률제 수당 상한액(66,000원)이 적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하위 50%만 해당되어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 동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당·모형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지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본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49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은 882일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심사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법정 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정비가 필요한 요양급여기준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10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25억 3,600만원)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이 아닌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033-34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내내역사업인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된 15억원 중 9억 4,700만원(약 63.1%)이 반납되어 실집행되지 못하였음 ○ 2024년 1/4분기부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공의 다수가 사직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하기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2024년 7월까지 교부 완료한바,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2	**바이오헬스넷 관리·운영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3033-5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채용정보가 게재되는 등 ‘바이오헬스넷(보건산업 잡포털)’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넷 관리·운영’ 내내역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103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응시언어 다변화 및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환자 유치지원(30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적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최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언어를 다변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의료 통역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언어를 다변화하고, 합격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4</td><td rowspan="3">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사업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가운데 보조금이 매년 교부되어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보건복지부</th><th colspan="8">충청북도</th></tr>
<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h>예산
현액</th><th>집행
액</th></tr>
<tr><td>21결산</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r>
<tr><td>22결산</td><td>4,513</td><td>4,513</td><td>4,513</td><td>4,513</td><td>1,000</td><td>5,513</td><td>457</td><td>4,513</td><td>-</td><td>5,056</td><td>-</td></tr>
<tr><td>23결산</td><td>4,501</td><td>4,501</td><td>4,501</td><td>4,501</td><td>5,056</td><td>9,557</td><td>500</td><td>4,501</td><td>-</td><td>8,978</td><td>79</td></tr>
<tr><td>24결산</td><td>2,000</td><td>2,000</td><td>2,000</td><td>2,000</td><td>8,978</td><td>10,978</td><td>4,578</td><td>2,000</td><td>-</td><td>6,400</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5</td><td rowspan="3">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
편성 정확도
제고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부부감액 비율 등 개별 변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내역사업인 ‘기초연금급여’ 예산액이 과다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대규모 불용이나 이·전용(감)이 발생하였음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 등 비율: 편성 vs. 실제]
<table>
<tr><th colspan="2">비율 (단위: %)</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2">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td><td>편성</td><td>5.0</td><td>5.0</td><td>5.0</td><td>5.0</td><td>5.0</td><td>8.0</td></tr>
<tr><td>실제</td><td>12.3</td><td>13.0</td><td>9.1</td><td>10.0</td><td>10.7</td><td>12.7</td></tr>
<tr><td rowspan="2">부부감액</td><td>편성</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r>
<tr><td>실제</td><td>41.7</td><td>42.2</td><td>42.8</td><td>43.1</td><td>43.4</td><td>43.8</td></tr>
</table>
[최근 3년간 기초연금급여 집행내역(단위: 십억원)]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6">보건복지부</th><th colspan="2">지방자치단체</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4결산</td><td>20,179</td><td>20,179</td><td>△202</td><td>-</td><td>19,977</td><td>19,587</td><td>390</td><td>19,488</td><td>99</td></tr>
<tr><td>23결산</td><td>18,508</td><td>18,508</td><td>△10</td><td>-</td><td>18,498</td><td>18,168</td><td>330</td><td>18,058</td><td>110</td></tr>
<tr><td>22결산</td><td>16,092</td><td>16,267</td><td>13
△120</td><td>93</td><td>16,254</td><td>16,254</td><td>-</td><td>16,149</td><td>1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최신 추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부부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규모 불용과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집행 제고 및 내실화,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을 위해 52억원이 전용(감)되는 등 연례적으로 전용재원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25만 1,000명임 ○ 취약계층노인의 노후소득 보완 목적의 공익활동형 사업대상자 선정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활동비 단가가 낮고,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사업 대기자가 많고 만족도도 낮음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율은 11.5%(공동체사업단 17.5%),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4,034건으로 사업운영·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 고용불안정 등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동 사업의 대기수요를 고려할 때, 전용이 아닌 자체집행의 비율을 높일 것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참여대상자 선정기준과 활동비 단가와 함께 대기수요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율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급여체계 마련 및 인력 확충 등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7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13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실집행률 현황이 2020~2023년까지 74.2%~85.9%였으나 2024년에는 66.5%에 불과하고, 2025년에 추가된 차상위계층 계좌 가입률도 1분기 기준 25.3%에 그침 ○ 예산 편성 시 가입대상자의 가입률 추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고, 2024년 보호대상 아동 가입률(99.4%)에 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률(74.9%)이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해 후원 활성화 방안 및 조기인출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면밀한 편성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8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는 10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5개소가 설치되어 예산액 24억원 중 14억원만 집행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예산도 433억 3,100만원 중 2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시·도별 거점 심리치료센터 지원 인력의 경우 지역별 아동 인구나 사례 건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대부분 3명으로 동일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2%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거점 심리치료센터 지원 인력을 지역별 아동 인구, 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심리치료 연계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중요성이 더해 가는 돌봄 복지 분야의 저임금 해소 및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 불용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9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 공백 대책 마련 및 유사 업무 중복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25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사무처는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및 정책 연속성 확보에 제약이 있고, 사무처가 수행하는 연구·홍보·정책 개발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유사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조직 개편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배제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편성 절차에 신중을 기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 거버넌스가 개편될 경우 사무처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0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개년 자활성공률은 2020년 25.87%, 2021년 26.24%, 2022년 24.3%, 2023년 24.76%, 2024년 18.66%로 나타났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6.1%p 하락하는 등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자활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운영이 참여자 근로능력 향상보다는 단가 인상 및 참여자 수 확대 등 외형적 확대에 치중된 측면이 있음 ○ 자활사례관리의 경우, 전국 125명의 인력이 약 6만 명의 자활참여자를 담당하고 있어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2025년 10월부터 도입 예정인 자활성공지원금 또한 자활성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애초에 근로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해,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의 구인난이 심각한 농가와 기업 등을 조사하고, 자활근로 대상자들을 매칭해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실집행률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경우 47.3%,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경우 44.2%,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의 경우 11.3%로 예산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전문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에서 경상보조 사업비 지급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제공기관 참여 유인과 인력 처우개선, 지역 간 균형 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조속히 강화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2	**내역사업 백지화를 통한 타 사업으로의 전액 내역변경 사례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345-323)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경북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를 사유로 전액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었음 -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된 사례임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포항시 행정관할 상 경북권 관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 확대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 예산이 전액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3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소명 및 과도한 예산 추계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본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준비 과정이 부족하였음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5년 동안의 총사업비는 최소 2,652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까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4년 예산 실집행률도 31%에 불과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누적 신청자 수(48,386명)가 예산 편성 당시 신청자 수(8만명)의 60% 수준이고, 바우처 평균 사용횟수도 6.13회(최대는 8회)로서 낮은 수치를 보인 데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시범사업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 전에 예산이 집행된 과정(ISP 수립 이전에 바우처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며, 서비스 품질 및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 마음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과다 추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사업적정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므로, 향후 주의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4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활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으로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의료 보장에 사용되어야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을 위협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결정과정 관련 책임소재 규명 이후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진료 지원 중단 검토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수습에 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연구과제 평가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PM 공석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선정과제(25개) 중 일부가 2025년 12월에 1단계 종료될 예정임에도 과제별 성과지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자가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동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PM 공석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사업이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116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관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예산편성 절차 전반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24년 4월 완료되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산액 일부(135억원)가 집행되어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발방지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예산편성 절차 전반을 철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7	**국고보조금 지침위반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실집행부진 사업들이 대거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내역사업들에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집행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47.3%,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 44.2%,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 11.3%,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0% -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실집행을 고려하여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재발방지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8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대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사업의 지자체 단계 실집행률은 26.5%에 불과하고, 지원율 역시 계획인원 2,340명 중 1,390명으로 59.4%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이 기존 사업과 기능적 중복성으로 보이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신청유인이 낮을 수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집행부진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예산이 다른 사업의 부족분 충당에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동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1:1 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액 404억 8,400만원 중 49억 3,200만원(12.2%)이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부족분 충당에 사용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이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9	**국고보조금 지침위반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실집행부진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액 또는 과도하게 교부한데 따른 것임 ※ 실집행률: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0%,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2.4%,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0% -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실집행을 고려하여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재발방지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연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방안 등 총괄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25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작성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신경 쓰지 않은 것임 ○ 기본적으로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처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 사업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에 대한 총괄 리스트조차 없는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의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작성하여 반영하고, 부처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사업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		
121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수준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낮은 국비 지원으로 인해 내역사업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각각 0%, 57.1%로 저조하므로 국비 지원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 등이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 보조율: 50%,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보조율: 70%(단, 서울은 50%) 등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2</td><td rowspan="3">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진흥원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원칙적으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적정하게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음
※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 25억 6,700만원 중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일부인 5,586만 2,000원을 다른 사업비 부족분에 집행</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td></tr>
<tr><td rowspan="3">123</td><td rowspan="3">미지금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230억 300만원, 2023년 305억 6,000만원, 2024년 420억 8,500만원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암검진 국비보조</td><td>16,754</td><td>17,221</td><td>23,003</td><td>30,560</td><td>42,085</td></tr>
</table>
○ 미지급금은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차년도 가용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충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연례적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2. 식품의약품안전처(1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 예산은 2022년 3억 5,600만원에서 2024년 2억 2,4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대면교육 실시 횟수와 교육대상자 수는 2021년 150회, 5,070명에서 2024년 73회, 3,5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이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설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사고 및 정보인식 격차에 적극 대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 예정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한정되나, 일반 소비자들은 공개된 유해성분이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성분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동일한 담배임에도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일반포집법에 따라 측정하여 담배갑에 표시하는 타르 및 니코틴 표시값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강화포집법으로 측정하여 공개하는 표시값이 다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개하는 담배 유해성분의 유해성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뱃갑 표시 측정기준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측정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3	**기후 온난화 대비 식중독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중독 예방 및 관리(12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는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로, 2024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61%에 그쳤음. 또한, 최근 3년간 달성도를 보면 2022년 122.5%, 2023년 114.5%, 2024년 6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KDI 나라경제 보고서('20.9월호)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때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4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09년간(1912~2020년) 연평균기온이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인 1.0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지방자치단체 배분 시험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1033-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2024년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배분된 시험연구비의 사용 내역을 파악한 결과, 같은 독소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음에도 각 시·도별로 재료비에 사용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5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수출국 현지의 생산단계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에는 20개국 140개소에서 1,07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12개국 107개소, 803개 제품으로 감소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업자 대상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1515-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국가 간 활발한 교역에 따라 수입식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위해 수입식품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 ○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대상도 증가하고 있으나,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약 800여 개소)에 비해 현지실사 건수는 연 200여 개소 내외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7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1232-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2021년 7,333개소에서 2024년 7,718개소로 5.3% 증가한 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같은 기간 1,806개소에서 1,377개소로 23.8% 감소함 ○ 2024년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5,091개소 대비 우수판매업소 비율은 3.9%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연도말 전용을 통한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20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이란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QR 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의약품 첨부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2년간(2023~2024년) e-라벨 시범사업을 별도 예산편성 없이 수행하고, 평가 예산을 타 세부사업에서 전용하여 진행하였음 ○ 예산 소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시에 미리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9	**국제기구 협력 사업 사전 조건 합의 절차 강화 및 협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ODA)(7036-31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국제기구(UNODC)와 파견인력의 직급·근무지·채용방식 등 핵심 조건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해당 연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사업도 철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조건 합의 절차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비목 변경, 추가공사 등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 매년 보조사업비가 이월되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건립 및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11	**생약누리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4032-31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제주센터 전시동 ‘생약누리’ 개관 이후 일반인과 학생 대상의 교육·체험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 관람객 수가 50명 이하에 불과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역시 저조함 ○ 관람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저조한 것은 개관 이후 초기 단계에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생약누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의약품 등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시행준비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2033-301),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2131-303)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되어 2024년 7월 21일 시행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및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24년 7월 22일 개정하면서 기존 포장재 사용을 1년간 허용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음 ○ 사실상 법률이 정한 시행일을 1년 연기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 하였고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에 실질적 불편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이 정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의약품 등 해외실사 소요의 정확한 예측 및 목적이 다른 사업예산 집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7037-65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 등 현지실사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여비 17억 1,100만원 중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에서 1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이·전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편성된 의약품 등 현지실사 내역사업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초과지출이 불가하여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통해 부족한 국외여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반하는 것임 ○ 동 사업에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납액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지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초과지출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 예산을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징수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해외 실사 소요를 예측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과소·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목적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시 수입예산의 초과분보다 지출을 과다하게 승인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 예산을 세입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2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4년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실적은 344kg으로, 전년 대비 27%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 대상 지역의 무리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는 거점약국 100개소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이 사업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사업구조는 마약류 의약품 반납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거·처리 수행 약국, 도매업체 등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므로 자발적 반납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거점약국 및 환자·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조속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식약처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현행「약사법」에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기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민간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립예정인 천연물안전관리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적정 교육 인원 재설정 및 교육 전달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231-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대국민 예방교육 성인 교육대상의 경우 교육대상 수가 4,300만명 이상임에도 교육 목표인원이 6만 5,000명에 불과하고, 중등을 제외한 유아·초등·고등 대상군에서는 목표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목표대비 교육 실적: 유아 50.2%, 초등 80.5%, 고등 86.9% ○ 「2024년 청소년 예방교육 종합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이해도, 학습효과성, 행동인식 변화성'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 내용 및 방식이 이들의 수용 수준과 학습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적정한 목표인원을 재설정하고,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콘텐츠 및 전달 방식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질병관리청(2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단가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한 급식비('24년 3,400원/인/일, '25년 3,670원/인/일)와 난방비('24년 71.4만원/세대/연, '25년 77만원/세대/연), 재가 한센인 생계비(월 19만원, 연 226만원) 지원 단가가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편성·지원되고 있어 단가를 상향 현실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5년 저소득층 노인 또는 노숙인 공공 무료 급식비 지원 단가 10,500원(일) 등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한센인 사업대상자에 대한 급식비·냉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 단가를 다른 취약계층 지원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한센인사회복지 센터 요양보호사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한센인사회복지센터(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는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센인사회복지센터는 현 입소자가 42명인 반면, 요양보호사는 12명에 불과해 1명당 관리 입소자 수 3.5명으로, 직원 배치기준 1명당 2.1명을 크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기준에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노인요양시설로 운영중인 한센인사회복지센터가 단계적으로라도 요양보호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
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센병환자관리지원(6133-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질병관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10년간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 37명 중 외국인은 21명(54.3%), 내국인은 16명(45.7%)이며, 2024년에는 내국인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 신환자는 5명이 발생하였음
❍ 외국인 한센병환자의 경우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한센병 다발성 국가 출신이 많고 언어적 제약,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의료접근성도 낮음
WHO 발표, 한센병 다발성(Global priority) 23개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 자료원: Global leprosy upd, mate, 2023(WHO)</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 위험성이 큰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조류 인플루엔자 초동대응인력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비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주요 감염병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뎅기열, 코로나19 등의 유행이 관찰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임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대비 초동대응인력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H5N1)의 충분한 비축·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AI 살처분자 등 초동대응인력의 예방접종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지연 문제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6234-33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면, 호남권 조선대병원은 공모 후 공사를 착공하였고, 충청권은 조달청 중간재설계 적정성 재검토('25.7.~) 중이며, 경남·경북권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준비중이고,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공사비 47억 4,700만원, 감리비 4억 6,5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등 예산현액(241억 600만원)의 21.7%인 52억 2,400만원만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재유행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 당해연도에 원활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예측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교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탄저백신 국산화에 따른 비축 본격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6331-30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탄저백신은 생물테러 등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수행 목적의 공공백신으로 그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7억원을 집행하였음 - 탄저백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에 대비 탄저백신의 국내 자급을 위해 기반연구('97∽'01)를 시작으로, 백신 공정개발 및 비임상('02∽'07) 및 임상시험('08∽'23)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23.10)하고 심의·보완('24∽'25)을 완료하여 2025. 4. 8.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이 국산화된 만큼 생물테러 가능성,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의 특성, 국가안보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비 가능한 탄저백신 물량을 비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인체자원 수집 확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6631-31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2028년까지 75만명분의 인체자원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매년 2024년부터 연평균 15만명분의 인체자원을 확보해야 하나, 인체자원 수집 실적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2022년 28,529명, 2023년 20,125명, 2024년 18,004명으로 인체자원 확보가 저조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고부가가치 바이오데이터 생산 및 인체자원 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해 인체자원 수집 확대 노력을 강화할 것		
8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2-314)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을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 대비 2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인 8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정하여 충당하였음 ○ 시설장비비의 당초 예산 18억원 중 44.4%인 8억원을 조정감함에 따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연구직(2024년 12월말 기준 7명)의 연구환경도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 시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 국고 반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 6634-345)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은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인건비·경상비 등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타 사업단의 경우 매년 운영비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단의 2024년 운영비 집행잔액은 이월 집행 대신 국고 반납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0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16억 5,400만원 대비 83.7%인 97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로 인해 2024년 12월말 기준 시험연구인력은 정원 242명 대비 현원은 210명에 불과함 - 특히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은 집행률이 57.1%에 지나지 않고,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은 70%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의 낮은 집행률은 국민보건 관련 R&D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시험연구인력의 예산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특별회계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4761-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예산 초과, 2023년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지연, 2024년에는 사업기간 연장과 물가변동률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음 -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89.4%에 해당하는 126억 2,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의료진 및 결핵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여 결핵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이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2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지정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11,357개 의료기관의 2.6%인 300개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부족은 지역별 유행 상황의 파악 곤란,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와 초기 대응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의 호흡기 표본감시기관 수와 비교하여도 미국 3,000개소(한국의 10배), 일본 5,000개소(한국의 17배)에 비하여도 현저히 적고, 인구 10만명당 감시기관 수도 우리나라는 0.58개로, 일본 4개, 미국 0.88개, 영국 2.89개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적절한 수의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신종 감염병 및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호흡기 비말과 에어로졸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자의 3분의 1은 무증상일 수 있어 전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수적임 ○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63%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불용액이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절차와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및 팬데믹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14	**인수공통감염병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 예방을 위한 부검센터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소 해면상뇌병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있는 소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발병하는 변종 CJD(Creutzfeldt-Jakob disease, 크로이펠트-야곱병)는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어, 발현될 경우 치명적이고 사회 파급력이 큰 질병으로 국가 차원의 조기 발견 체계가 필수적임 ○ 변종 CJD 진단에 필수적인 생검 및 부검이 2023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검센터 운영이 사실상 시설 유지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변종 CJD 확진을 위해 시신 기증 등을 포함한 부검센터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결핵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환자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전담인력 감소 시 관리망 이탈 환자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를 조사한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및 조사시점에 채용 중인 인력의 비율로 추정시 매년 27~ 67% 가량의 이직률 발생이 추정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		
16	**결핵검진 등 실시의무기관 의무 이행 독려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결핵환자 발생 수를 보면, 2011년 50,491명이 발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 17,944명이 발생하여 이는 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고된 전체 결핵환자 중 집단시설 소속이 확인된 경우는 2024년 6,185건으로 전체 환자(17,944명)의 약 34.5%를 차지함 ○ 2024년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기관 98,193개소 중 66.1%에 해당하는 64,865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이행 조사 결과, 조사 응답 집단시설 수는 44,189개소로 조사대상기관의 45%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체계적인 결핵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검진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결핵검진 이행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조속한 정산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의 경우 인구수 과소 추계(0-1세 인구수가 예산 편성 대비 증가)의 사유로 356억 2,3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도 172억 2,4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2024년의 경우 피보조기관 교부예산에서 43억 6,8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356억 2,300만원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의 조속한 정산과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도 철저히 할 것		
18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12~17세 여성 및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남성에게도 확대하는 내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제22대 국회에 제출·계류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측면 등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대상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6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 10만 307건 중 심의건수는 10만 246건으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진 2,300여건을 포함하여 약 28.5%인 2만 8,566건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졌고, 71.8%에 해당하는 7만 2,000여건이 기각되었음 ○ 이상반응 신고 중 사망 보상 신청 건수는 2,455건이며, 사망 보상 건수는 25건으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별법 제정 취지가 보상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심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2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조치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령화에 따른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9년부터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12년 서울시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된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연례적으로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암역학조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암역학조사 계획액 2억 8,700만원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암역학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근거 교육에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암역학조사반 회의운영 경비 등에 계획액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계획액의 대부분인 암역학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2억 5,00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암역학조사 의뢰건수 미발생에 따라 매년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성 개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2	**희귀질환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희귀질환자 지원(6534-306)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희귀질환자 통합적 진단지원사업) 동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건수를 제한하여 2023~2024년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사업 수행 5개월만에 진단검사 접수가 종료되었고, 진단 접근성이 취약한 비수도권 중심 지원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2024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바 있음 ○ (희귀질환 등록사업) 체계적인 등록자료 수집·분석에 기반한 희귀질환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등록사업의 체계적 개선과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희귀질환자 통합적 진단지원사업) 질병관리청은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단 지원사업의 연중 상시 운영, 진단지원기관 단계적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희귀질환 등록사업)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등록자료 수집·분석 기반의 희귀질환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2021년부터 계획되었으나,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 2021년부터 설립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으나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이월됨 - 설립 지연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성과 창출과 공유 지연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기능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질병관리청은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재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 소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질병관리청은 부적절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사업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II(R&D, 6634-352)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208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2024년 예산은 사업설계비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2024년 9월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12월에 기본조사설계 중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음. ○ 내내역사업인 ‘인체자원 저장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1억 5,4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6,300만원(예산액 3억 1,700만원의 51.4%)이 불용된 바, 이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6634-345)의 지연 추진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인체자원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 비목간 세목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의 경우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함 ※ (예시) 시험연구비의 경우 2024년 9월 19일 3,600만원 세목변경(증) 후 2024년 9월 26일 다시 3,600만원 세목변경(감) - 이는 사업의 향후 집행 가능성과 집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일 세부사업 내 반복적인 세목조정은 당장의 예산 집행에 대한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동일 비목에서 세목변경으로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예산 이월 사유에 부합하는 이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질병관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질병관리청은 2025년 2월 20일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조달청에 계약요청한 행위를 입찰공고의 범위로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설계비를 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 제48조는 예외적으로 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질병관리청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이월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용처리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td></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사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질병관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 역시 정책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이상반응 보상금은 2023년도 예산도 거의 실집행되지 않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함
※ 최근 4년간 코로나19 연도별, 접종대상별 접종건수
(단위: 건)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4">코로나19 접종실적</th></tr>
<tr><th>연도</th><th>대상</th><th>계</th><th>보건소</th><th>의료기관</th><th>접종센터</th></tr>
<tr><td>2021</td><td>국민(6,628만명)</td><td>103,415,932</td><td>1,629,645</td><td>85,447,585</td><td>16,338,702</td></tr>
<tr><td>2022</td><td>국민(4,430만 명)</td><td>30,943,359</td><td>595,699</td><td>30,320,747</td><td>26,913</td></tr>
<tr><td>2023</td><td>국민(1,657만명)</td><td>6,456,774</td><td>228,395</td><td>6,228,379</td><td>-</td></tr>
<tr><td>2024</td><td>고위험군(633만명)</td><td>5,180,763</td><td>118,192</td><td>5,062,571</td><td>-</td></tr>
</table>
자료: 질병관리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질병관리청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8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시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5134-302)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은 2024년 실시한 1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집행하였으며, 이 중 10건은 1차 공고 시 단독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연구용역 수행 시 계약 법령의 규정 취지를 준수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실시설계비 소요의 면밀한 검토 및 결산 시 실제 집행내역 표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5134-302)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에서 당해 연도 실시설계비 집행 잔여 예산으로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실시설계비를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2021~202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의 결산상 불용액 및 이월액은 편성 내역에 따라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매년 다음연도 일부 사업의 실시설계 계약(집행)까지 완료한 이후의 금액을 표기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실시설계비 집행 잔여 예산으로 2025년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함(수자원위성 수문자료 수집 안테나 구축 사업, 1억 7,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산 시 집행 내역 표기와 실제 집행 내역을 일치시킬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치수연구개발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수연구개발(5331-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2024년 연구개발비 용역계약 7건 중 신규용역 4건 모두 이월하여 집행 중이며, 기본조사설계비 신규용역 4건은 연내 용역계약 체결도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기본설계비 집행내역 중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 9. 공포되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 3. 시행되었으나, 2024. 12.에서야 용역 계약을 체결함(2025. 12. 완료 예정)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이후 매년 대규모 전용 및 이월 등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의 취지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동 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재수립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치수연구개발(5331-3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말 기준으로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효성 있는 하천기본계획 건수는 전체 145건 중 절반(75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단위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함
[2024년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재수립 반영)]
(단위 : 건, %)
<table>
<tr><th colspan="6">추진 권역 수</th><th colspan="2">145개 권역에 대한 비율</th></tr>
<tr><th>전체</th><th>완료
(누적)</th><th>완료
(당해연도)</th><th>진행중</th><th>미착수</th><th>재수립중</th><th>완료</th><th>진행중
(재수립중 포함)</th></tr>
<tr><td>145</td><td>75</td><td>22</td><td>18</td><td>1</td><td>51</td><td>51.7</td><td>47.6</td></tr>
</table>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2025년 6월 말)까지 「하천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수립 후 5년마다 실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여 제방 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를 원활히 수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수자원공사의
적정 매칭비율을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업용수도 안정화(5031-301), 공업용수도 확충(5031-302),
광역상수도 확충(5033-301), 광역상수도 안정화(5033-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수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시행하는 수도사업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무상태나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자체 예산을 분담비율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인허가 등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한 사업에서는 매칭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4">~'23년까지</th><th colspan="4">'24년 집행</th><th colspan="4">'25년 집행 예정액</th></tr>
<tr><th>전체</th><th>국고</th><th>수공</th><th>누적매칭</th><th>전체</th><th>국고</th><th>수공</th><th>누적매칭</th><th>전체</th><th>국고</th><th>수공</th><th>누적매칭</th></tr>
<tr><td>▪공업용수도 안정화</td><td>130,840</td><td>47,834</td><td>83,006</td><td>63.4</td><td>64,477</td><td>9,266</td><td>55,211</td><td>70.8</td><td>71,932</td><td>34,602</td><td>37,330</td><td>65.7</td></tr>
<tr><td>▪ 공업용수도 확충</td><td>8,740</td><td>3,159</td><td>5,581</td><td>63.9</td><td>4,279</td><td>1,588</td><td>2,691</td><td>63.5</td><td>4,346</td><td>1,466</td><td>2,880</td><td>64.2</td></tr>
<tr><td>▪ 광역상수도 확충</td><td>180,179</td><td>62,972</td><td>117,207</td><td>65.1</td><td>115,784</td><td>21,204</td><td>94,580</td><td>71.6</td><td>93,105</td><td>43,562</td><td>49,543</td><td>67.2</td></tr>
<tr><td>▪ 광역상수도 안정화</td><td>468,160</td><td>173,137</td><td>295,023</td><td>63.0</td><td>138,536</td><td>37,478</td><td>101,058</td><td>62.3</td><td>169,742</td><td>58,634</td><td>111,108</td><td>63.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사용료 세입
예산 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토지대여료(51-5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대여료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민간기업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 임시 면제가 2023년 6월 해제됨에 따라 징수 및 수납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2022년 수납액 3억 6,100만원 2023년 수납액 6억 700만원, 2024년 수납액 13억 900만원
- 2024년 토지대여료 수납액 13억 900만원 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사용료가 97.1%인 12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도 토지대여료 내역별 분류]
(단위 : 백만원)
<table>
<tr><th>수납액 총계</th><th>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사용료(5건)</th><th>기타(91건)</th></tr>
<tr><td>1,309
(100.0%)</td><td>1,271
(97.1%)</td><td>38
(2.9%)</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토지대여료 세입 예산 편성 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증액하여 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지방자치단체
미반납액에 대한
확인 및 조속한
반납 조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정산협의가 지연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완료 이후에도 추경편성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수탁기관이 정산하지 않은 사업(85개 사업 2조 5,585억원)과 지방지치단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94개 사업 1조 2,143억원)이 존재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미정산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기관명</th><th colspan="2">미정산 보조사업</th><th colspan="4"></th></tr>
<tr><th colspan="2">수탁기관 미정산1)</th><th colspan="2">지자체 미정산2)</th></tr>
<tr><th>개수</th><th>사업비</th><th>개수</th><th>사업비</th><th>개수</th><th>사업비</th></tr>
<tr><td>계</td><td>179</td><td>3,772,873</td><td>85</td><td>2,558,530</td><td>94</td><td>1,214,343</td></tr>
<tr><td>한국
환경공단</td><td>93</td><td>2,824,566</td><td>62</td><td>2,150,016</td><td>31</td><td>674,550</td></tr>
<tr><td>한국
수자원공사</td><td>84</td><td>930,173</td><td>21</td><td>390,380</td><td>63</td><td>539,793</td></tr>
<tr><td>국립
공원공단</td><td>2</td><td>18,134</td><td>2</td><td>18,134</td><td>0</td><td>0</td></tr>
</table>
주1)「지자체(위탁) - 공공기관(수탁)」간 미정산*으로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자체-공공기관 간 정산협의 지연)
주2)「지자체(위탁) - 공공기관(수탁)」간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지자체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수탁기관이 정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인 공공기관 간 정산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탁기관에서 정산 완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정산을 독려하는 등 정산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에 따른
사업 불용 과다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회계전입금이 당초 예산 대비 3,540억원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을 불용처리하였음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미수납액 현황]
<table><tr><th></th><th>예산</th><th>수납액</th><th>미수납액(미전입)</th></tr><tr><td>일반회계 전입금</td><td>5조 6,657억원</td><td>5조 3,117억원</td><td>3,540억원</td></tr></table>- 상수도 및 하수관로 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은 싱크홀 예방과 관련된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에 따른 불용 사업 현황]
<table><tr><th>세부사업명</th><th>불용액</th></tr><tr><td>합계</td><td>2,278억 4,900만원</td></tr><tr><td>하수처리장 설치</td><td>590억 7,500만원</td></tr><tr><td>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td><td>329억 7,400만원</td></tr><tr><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전출</td><td>1,108억원</td></tr><tr><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 전출</td><td>250억원</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상하수도 설치 등 안전기반 시설의 경우 개별 회계의 재원 한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점검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제개발 협력심의회 반영 여부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1531-30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중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은 당초 필리핀, 베트남, 페루 3개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미승인으로 예산현액 23억 9,300만원 중 9억원만 집행되고 14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ODA 성격의 사업임에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불용을 초래하고 해외환경시장 진출 지원효과도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사업은 개도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동북아 환경산업 협력사업 등 대상국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환경현안에 따른 현장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사업 발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환경산업 수출지원 사업이 ODA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국제기후기금(GCF 등) 활용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환경시설설치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환경공단 출연(1534-30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적사항	○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 사업*은 지자체 협의, 인허가, 민원 등의 사유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2020년 69.6%에서 2024년 86.2%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4년 예산현액 8,973억 7,700만원 중 7,738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85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1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생태시설(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가 연차별로 교부하는 시설설치 사업비를 재원으로 설계,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의 협의, 인허가, 민원 등 사업추진 여건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업수요예측 보완방안과 구조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사업(1531-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조정보다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부처의 의견과 달리 사업장관리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으며 통상 신규허가는 하반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밀한 집행계획의 부재로 연례적 전용 및 세목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관리 일반수용비 결산내역: 본예산 12억 4,500만원 중 2억 900만원이 조정되고, 2억 5,200만원이 불용됨 ※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이 부합하지 않음 ○ ‘통합허가사업장 혁신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48.2%로 집행률이 낮고, 예산 전액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용역 등으로 사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동 사업의 예산편성시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수요 예측절차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지적사항을 포함해 통합허가사업장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인 자원순환과 폐기물 분야를 포함하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531-3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의 2024년 예산 3,299억 2,800만원은 전액 집행(100%)되었으나, 세부내역인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은 편성된 민간조달금액 대비 실적치가 지속적으로 저조함
- 2024년 신규분 실적은 계획 대비 61.7%에 그쳐,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신청과 승인 및 실적 금액 차이는 매년 반복되어 왔고, 2024년에는 정책금리 1%p 추가 지원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하락이 지속됨
[최근 4년간 관련 내역사업 예산편성 기준 조달금액과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편성
조달금액(계획, A)</th><th>조달금액
실적치(B)</th><th>비율
(B/A)</th></tr>
<tr><td>2021</td><td>1,000</td><td>734.49</td><td>73.45</td></tr>
<tr><td>2022</td><td>1,000</td><td>810.6</td><td>81.06</td></tr>
<tr><td>2023</td><td>1,000</td><td>667.87</td><td>66.78</td></tr>
<tr><td>2024</td><td>1,000</td><td>616.6</td><td>61.66</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의 경우 정책금리 1%p를 추가하였음에도 실적치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조달금액 계획액을 정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의 계획 조달금액과 실제 집행실적을 전수 조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실적부진 원인을 점검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의 법적근거 보완 및 상시 관리·감독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전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① 예산 대부분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일부 업무는 현행 법률상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하며, ③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협회 예산 4,093억원 중 설립목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억원(0.2%)에 불과함 - 2015년부터 수행 중인 무공해차 충전시설 관련 사업은 현행 법률상 협회의 사업수행 근거가 미비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사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회 업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공정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상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회 출범 당시(2007년)에 비해 크게 확대된 협회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설립 목적과 회원사 구성의 적정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노후경유차 퇴출 및 저소득층 DPF 지원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80%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설치율이 높아짐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지원은 축소하고 있음 ○ 그러나, ①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은 운행차량의 지역별 편차가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 전국 비율로 내역사업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생계형 운전자 중 조기폐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DPF 설치 지원액 규모를 높이며,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주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신규 시범사업인 '전동화 개조' 및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 집행 부진 원인 점검 및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전동화 개조'는 4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행차'는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건설기계' 역시 7대 집행에 그쳐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였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도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전동화 개조'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과 성과를 전수 조사하여 사업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수요자 대상의 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지속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편성된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16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 집행 부진 원인 점검 및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1633-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은 편성 예산 29억원 대비 실제 집행액이 9억 6,200만원(집행률이 33%) 수준에 그쳤고,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는 등, 인프라 부족과 수요창출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보급 위주 지원에 그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과 성과를 전수 조사하여, 사업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급 물량 목표를 시장 수요와 인프라 수준에 맞게 조정하며, 충전·임대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1133-32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령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한 11개의 위원회 중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는 모두 사무국, 사무기구 등을 설치·운영 중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된 정기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실제 개최된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2022년 1회, 2023년 5회, 2024년 2회 실시(분기별로 정기회 1회 실시 필요) ○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 정비가 2025년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운영하며, 그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과 심도 깊은 안건 심의를 위해 정기회의와 대면회의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관리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전주기적 물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2038-319)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19년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2024년 11월 준공된 유체성능시험센터**는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인프라 활용의 비효율이 우려됨 - 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시험장비 가동률은 2022년 재료시험장비 54.8%, 실험분석장비 42.3%에서 2024년 각각 52.4%, 41.4%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센터 도입 이후 자원 분산과 중복투자로 인한 운영성과 저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시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임 ** 유체성능시험센터는 펌프, 유량계, 밸브 등 유체 기자재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국제수준의 성능시험 및 인·검증, 국내 물기업의 인증규격(KS, ISO 등) 공인성적서 발급 등 기술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및 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임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유체성능시험센터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과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지자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 강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비점오염저감사업(11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저감목표 처리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연도별(2022~2024년) 목표 처리효율 달성현황]
(단위: 개소, %)
<table>
<tr><th>구분</th><th>조사시설수
(A)</th><th>전체항목
달성(B)</th><th>일부항목
미달성</th><th>전체항목
미달성</th><th>미확인/
미실시</th><th>전체항목
달성비율
(B/A)</th></tr>
<tr><td>2022</td><td>109</td><td>65</td><td>31</td><td>3</td><td>10</td><td>59.6</td></tr>
<tr><td>2023</td><td>110</td><td>50</td><td>48</td><td>12</td><td>-</td><td>45.4</td></tr>
<tr><td>2024</td><td>85</td><td>46</td><td>26</td><td>5</td><td>8</td><td>54.1</td></tr>
</table>
자료: “2024년 비점오염저감 시범시설 유지관리 및 국고보조사업 효율조사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재작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및
정기점검·
감독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공공폐수처리시설(1131-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평가 저조(E등급) 시설 수가 전체 240개소 중 48개소(20%)임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table><tr><th>유역별
지방환경청</th><th>관할 시설수
(A)</th><th>평가 저조(E등급)
시설 수 (B)</th><th>저조 시설 비율
(B/A)</th></tr><tr><td>낙동강</td><td>27</td><td>10</td><td>37.0</td></tr><tr><td>대구청</td><td>33</td><td>10</td><td>30.3</td></tr><tr><td>…</td><td>…</td><td>…</td><td>…</td></tr><tr><td>계</td><td>240</td><td>48</td><td>20.0</td></tr></table>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저조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기준 위반 횟수가 잦은 처리시설 또는 저조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감독 강화 등 사업관리 구조를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운영사업(1132-309)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수립한 사업 완료 시점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 본예산 100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4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5억 3,100만원 중, 134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26.1%)되고, 55억 4,600만원은 이월, 324억 2,100만원은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 편성 이후 불용 처리의 반복을 시정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며,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22	**예산 편성 · 집행 합리화 및 전용 · 이월 방지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133-304)	시정,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의 운영관리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예산의 20% 수준에 달하는 예산 전용을 하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215억 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6억 1,300만원 중, 175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4%)되고, 37억 1,500만원은 이월, 3억 300만원은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회계연도와 사업 계약기간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도한 예산전용 및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설계 및 예산항목 설정, 사전수요 예측 단계, 기술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단계 전반에 걸쳐 보완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환경영향평가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토환경관리(1831-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을 위해 내역사업인 '환경성평가운용기반 강화 및 관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술인력부족 등 법령위반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공공부문) 현황 : 2022년 29개, 2023년 36개, 2024년 32개 (총 97개) ○ 해당 내역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검토 등의 업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등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령상 규정된 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인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가능하고, 현지조사, 전문가자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청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미이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미이행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협의내용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평가서 작성 품질 검증체계 강화 및 평가결과와 사후조치 이행 여부의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지조사와 전문가자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중점평가사업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차량차고지
필요 수량 및
예산 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공원공단 출연(1831-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립공원공단 출연 예산 2,295억 1,800만원 중 재난안전관리사업 예산은 151억 5,600만원이나, 내역 중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부족함
- 현재 국립공원 내 산불초동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차량은 총 101대(일반형 95대, 대형 4대, 중형 2대)로 차량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차고지 또한 13개 사무소(24개소)뿐임
[산불진화차량 및 차고지 현황]
<table>
<tr><th colspan="4">산불진화차량</th><th rowspan="3">차고지</th></tr>
<tr><th rowspan="2">계</th><th colspan="2">산불전문진화차량</th><th rowspan="2">일반</th></tr>
<tr><th>대형</th><th>중형</th></tr>
<tr><td>101대</td><td>4대
(설악,덕유,오대,무등)</td><td>2대
(지리, 경주)</td><td>95대</td><td>13개 사무소
(24개소)</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차고지의 확충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므로, 국립공원공단과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1831-30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곰사육종식 및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제한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한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설계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고(집행률 0%), 2023년과 2024년도 역시 본예산으로 편성된 공사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함(집행률 0%)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사업 연도별 결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th><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제외
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022</td><td>설계비</td><td>950</td><td>950</td><td>-</td><td>-</td><td>950</td><td>-</td><td>-</td><td>802</td><td>148</td></tr>
<tr><td rowspan="3">2023</td><td>설계비</td><td>-</td><td>-</td><td>802</td><td>-</td><td>802</td><td>802</td><td>-</td><td>-</td><td>0</td></tr>
<tr><td>공사비</td><td>7,600</td><td>7,600</td><td>-</td><td>-</td><td>7,600</td><td>-</td><td>-</td><td>7,590</td><td>10</td></tr>
<tr><td>합 계</td><td>7,600</td><td>7,600</td><td>802</td><td>-</td><td>8,402</td><td>802</td><td>-</td><td>7,590</td><td>10</td></tr>
<tr><td rowspan="6">2024</td><td>건설보상비</td><td>-</td><td>-</td><td>-</td><td>609</td><td>609</td><td>609</td><td>609</td><td>-</td><td>-</td></tr>
<tr><td>설계비</td><td>-</td><td>-</td><td>-</td><td>442</td><td>442</td><td>80</td><td>80</td><td>101</td><td>261</td></tr>
<tr><td>공사비</td><td>7,600</td><td>7,600</td><td>7,590</td><td>5,868</td><td>13,468</td><td>7,042</td><td>-</td><td>5,835</td><td>591</td></tr>
<tr><td>감리비</td><td>-</td><td>-</td><td>-</td><td>671</td><td>671</td><td>371</td><td>371</td><td>300</td><td>-</td></tr>
<tr><td>시설부대비</td><td>40</td><td>40</td><td>-</td><td>-</td><td>40</td><td>33</td><td>33</td><td>7</td><td>-</td></tr>
<tr><td>합 계</td><td>7,640</td><td>7,640</td><td>7,590</td><td>7,590</td><td>15,230</td><td>8,135</td><td>1,093</td><td>6,243</td><td>85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목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규제샌드박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타 부처와의 중복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원순환촉진지원(1431-30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2024년도 본예산 15억 5,400만원 중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집행한 내역은 8억 1,300만원(집행률 52.3%)이며, 상담부스·홍보관 운영비 등 당초 편성과 무관한 용도로 집행되었음 -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기업지원비는 1억 2,000만원에 불과하며 운영비로 약 6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음 ○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 내용이 태양광 폐패널, 바이오에너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으로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와 유사·중복됨 - 에너지 분야 관련 6개 부처 8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과기부-ICT융합·연구개발특구, 산업부-산업융합,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경제, 국토부-스마트 도시·모빌리티, 중기부-규제자유특구, 금융위-혁신금융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에서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운영비 중심의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 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 및 공통 심사기준을 조속히 정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승인유예기간 이내 살생물제 승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화학제품 안전관리(2310-304)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살생물제 승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81억 7,000만원 중 42억 3,900만원만 집행되고 39억 3,100만원은 2025년으로 이월되어 실 집행률은 51.9%에 그침 - 또한 2025년 4월까지 연장된 이후에도 이월액 19억 4,400만원이 기업의 자진 취하(105건)로 불용 처리 되었는데, 이는 승인 절차 장기화와 자부담 증가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살생물제 취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기인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효과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드러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자진 취하 등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정부 지원 및 예상자부담 비용에 대한 간담회 실시 및 사전 수요 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유인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2320-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최종 선정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사례가 2022년 이후로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중도포기업체: (2022) 22개소, (2023) 34개소, (2024) 30개소 -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 참여자 자부담 비용**(30%) 조달 어려움 등으로 최종 선정업체의 중도포기 사례가 지속 발생함 * 화학사고·인명피해: (2020) 75건·61명, (2021) 93건·61명, (2022) 67건·70명, (2023) 116건·68명, (2024) 127건·74명 ** 자부담비용: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11.2백만원 ○ 내역사업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각각 사업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많음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①정책 수요자인 기업에서는 혼선과 불편이, ②사업관리기관인 환경공단에서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③정책성과도 일관되게 관리되지 못하여 화학안전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적이 저해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조기에 개선해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유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재정여건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의 화학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컨설팅·시설개선·안전교육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화학사고 예방과 예산 집행의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체계 일원화 및 무공해차 전환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1633-310)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3년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상 ‘즉시폐지’ 평가에도 2024년 예산이 증액되어 LPG차와 무공해차 지원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LPG 통학차는 무공해차가 아닌 내연기관차 지원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사용금지 제도대응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통학차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차량 전환시 LPG차와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병렬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 등 무공해차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작사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전기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실수요 기반 보조금 제도개선 및 안정적 확산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이 저조함 - 편성 예산 1조 7,340억원 중 1조 1,749억 9,600만원 집행(집행률 67.8%) - 계획 물량 339,765대 중 실제 157,273대 보급(보급률 46.3%)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요에 기반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유지되는 한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요 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향 및 현상유지를 검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단순 정액보조금 지급 방식과 함께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보급 활성화 방안의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서 매년 발생하는 무공해차 보급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중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중 수입산 차량에 대한 지급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2022-2024년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백만원, 대, %)
<table>
<tr><th rowspan="3">연도</th><th colspan="8">총 지급대상 중 수입산 비율</th></tr>
<tr><th colspan="2">전기승용</th><th colspan="2">전기화물</th><th colspan="2">전기이륜차</th><th colspan="2">전기승합</th></tr>
<tr><th>지급액 비율</th><th>지급대수 비율</th><th>지급액 비율</th><th>지급대수 비율</th><th>지급액 비율</th><th>지급대수 비율</th><th>지급액 비율</th><th>지급대수 비율</th></tr>
<tr><td>2022</td><td>16.9</td><td>25.4</td><td>4.7</td><td>4.6</td><td>43.9</td><td>50.5</td><td>43.0</td><td>45.3</td></tr>
<tr><td>2023</td><td>21.6</td><td>28.8</td><td>6.5</td><td>6.2</td><td>48.7</td><td>55.1</td><td>49.3</td><td>57.1</td></tr>
<tr><td>2024</td><td>17.7</td><td>35.4</td><td>4.3</td><td>10.0</td><td>56.9</td><td>61.6</td><td>22.6</td><td>26.3</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 제도 설계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보급 목표 설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납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자체 교부금 집행 확대 및 불용액 국고반납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교부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률이 저조한 상황임 - 3분기까지의 교부금에 대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추가 교부금액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적음에도 4분기에도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 반납률 : (2020) 99.2%→(2021) 80.1%→(2022) 78.5%→(2023) 62.1%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수소차·수소버스 예산 편성 합리화 및 장기적 수요·비용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함 - 2024년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 58% (2023년 29.3%, 2022년 35.9%) -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불용액 2,391억 1,200만원 (2023년 3,110억 8,000만원. 2022년 1,656억 9,2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어 온 목표 물량을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소차 수요 증대를 위한 구매 보조 외의 대안을 마련하며, 보증기간이 도과한 수소버스 물량 중 스택 교체 필요 물량의 비중을 보다 면밀히 추산하여 향후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수소버스 스택 교체 예산의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 실적을 조사하여 과다 편성 원인을 점검하고, 전기버스·수소버스를 비교·대조하여 기후변화를 감안한 장기적 소유 내역을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34	**민간 충전시설 요금 부과체계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민간 충전시설마다 요금 편차와 부과기준·구간이 상이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완속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들간 충전요금 편차가 최대 320원에서 최소 275원까지 최대 45원의 차이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상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충전시설 요금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스마트제어 충전기술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스마트제어 충전기 사업’은 전기차와 충전기간 통신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에도 ① 설치된 충전기에 과충전제어 기능이 없고, ② 국제표준인 ‘ISO 15118-2’가 아닌 국내 전용 ‘K-VAS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제조사·판매사에 적용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시 모든 차량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행정행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완속충전기에 스마트제어 충전기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들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설치할 것		
36	**수소충전소 보조금 배분 조정 및 설치대상 사전심사 강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설치’는 2개년도 사업 구조임에도 보조금이 1차년도에 과다 교부되어 착공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단년도 회계주의와 예산 효율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점을 실제 공정 진행에 맞추어 1·2차년도 간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설치 대상 선정 단계에서 부지 제약·집행 부진 가능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실집행이 저조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하수관로 정비(1132-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싱크홀 발생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 2024년 예산현액 1조 2,815억 9,300만원 대비 1조 1,707억 8,700만원(집행률 91.3%) 집행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집행이 저조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과제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	**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 재분배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 사업 관련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행·위탁으로 수행하였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 성격의 협회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책임성 우려가 상당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과 이후에도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위탁·대행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위탁기관의 전문성·공공성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재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관리
및 목적사업
지출 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4대강 수계관리기금 - 통화금융기관예치(한강 9701-971, 낙동강 9702-971, 금강 9703-971, 영산강·섬진강 9704-9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수계관리기금별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해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지출되는 예산과 비교해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매우 과도함
[최근 3년간 수계관리기금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3년 평균</th></tr>
<tr><td rowspan="3">한강수계
관리기금</td><td>지출액(A)</td><td>523,758</td><td>559,656</td><td>540,308</td><td>541,240</td></tr>
<tr><td>여유자금 운용규모(B)</td><td>115,449</td><td>60,701</td><td>30,409</td><td>68,853</td></tr>
<tr><td>운용비율(B/A)</td><td>22.0</td><td>10.8</td><td>5.6</td><td>12.7</td></tr>
<tr><td rowspan="3">낙동강수계
관리기금</td><td>지출액(A)</td><td>237,921</td><td>237,776</td><td>229,745</td><td>235,147</td></tr>
<tr><td>여유자금 운용규모(B)</td><td>3,616</td><td>5,604</td><td>14,435</td><td>7,885</td></tr>
<tr><td>운용비율(B/A)</td><td>1.5</td><td>2.4</td><td>6.3</td><td>3.3</td></tr>
<tr><td rowspan="3">금강수계
관리기금</td><td>지출액(A)</td><td>126,113</td><td>139,421</td><td>129,321</td><td>131,618</td></tr>
<tr><td>여유자금 운용규모(B)</td><td>50,810</td><td>45,741</td><td>52,345</td><td>49,632</td></tr>
<tr><td>운용비율(B/A)</td><td>40.3</td><td>32.8</td><td>40.5</td><td>37.7</td></tr>
<tr><td rowspan="3">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td><td>지출액(A)</td><td>88,756</td><td>91,027</td><td>89,224</td><td>89,669</td></tr>
<tr><td>여유자금 운용규모(B)</td><td>64,049</td><td>69,019</td><td>79,973</td><td>71,013</td></tr>
<tr><td>운용비율(B/A)</td><td>72.1</td><td>75.8</td><td>89.6</td><td>79.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고유사업・신규사업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지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친환경
청정사업의
성과관리 제도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강수계관리기금 -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1337-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의 6개 부문* 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2022년 개정된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수립 지침」에는 미흡한 과제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부진한 과제에 대한 조치가 부재한 문제가 있음
* 친환경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친환경 첨단기술분야, 기타(관광단지,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등)
[2024년 친환경 청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 개, %)
<table>
<tr><th>구분</th><th>매우 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 미흡</th><th>계</th></tr>
<tr><td>사업수</td><td>1</td><td>5</td><td>12</td><td>4</td><td>13</td><td>35</td></tr>
<tr><td>비율</td><td>2.8</td><td>14.3</td><td>34.3</td><td>11.4</td><td>37.1</td><td>10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친환경 청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정단계에서 계획의 효과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환수 등 제재방안 또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다 정교한 피해인정자 예측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석면피해구제기금 - 석면피해구제급여(2205-30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석면구제급여 지급사업의 24년도 실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 75.1%로 불용액 113억 1,000만원이 발생함. 실제 신청자 수는 23년 1,562명, 24년 1,371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불용액 발생의 근본 원인은 피해 인정자 예측과 실제 신규 인정자 규모의 불일치에 있는데, 이는 향후에도 기금 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누적을 초래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률 부진 원인으로 의료대란으로 인한 CT, 폐기능검사 등 필수 자료 제출 지연·차질로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석면피해자 인정률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정자 수 및 구제급여 소요 예측을 정교화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정기준 합리화, 피해자 발굴·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예상 대비 인정자 저조 문제를 보완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5033-356)	주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실시설계비 38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취수원 위치, 취수방식 및 취수량 변경 등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2025년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의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 착수 전까지 영향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신속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며, 취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공식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조정체계 적극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것(제도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 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예산 불용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소통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후속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안정적 사업 기반을 조성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사업계획수립,
예산 편성 및
교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미흡, 총사업비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사업자(서울시)의 사업진도와 관계없이 관련 예산을 전액 일괄교부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음

[2024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기후에너지환경부
(2024)</th><th colspan="6">서울시(2024)</th></tr>
<tr><th>예산</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집행율</th></tr>
<tr><td>12,500</td><td>12,500</td><td>12,500</td><td>12,124</td><td>62,124</td><td>6,046</td><td>56,078</td><td>9.7</td></tr>
</table>
*서울시 예산현액 = 24년 교부액 12,500백만원 + 24년 지방비 37,50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12,124백만원
❍ 동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도림천 유역의 침수 대응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강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
-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 예정이나, 향후 일정도 지연될 경우 대규모 예산 불용과 국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이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강수 대응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서울시)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을 병행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및 향후 관리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법정부담금
수납률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법정부담금(59-59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4.4%로 저조함
-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함
* 수질배출부과금은 건별 10억원 이상 미수납액 규모가 전체 부과금 미수납액의 77.8%를 차지하는 등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높음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억원, %)
<table>
<tr><th>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부과액(A)</td><td>15,258</td><td>16,994</td><td>16,136</td><td>15,009</td><td>13,911</td><td>13,323</td><td>12,853</td></tr>
<tr><td>수납액(B)</td><td>7,248</td><td>9,017</td><td>8,415</td><td>8,004</td><td>7,249</td><td>7,051</td><td>6,995</td></tr>
<tr><td>수납률(B/A)</td><td>47.5</td><td>53.1</td><td>52.1</td><td>53.3</td><td>52.1</td><td>52.9</td><td>54.4</td></tr>
</table>
[2018~2022년 환경개선부담금・수질배출부과금 수납률 현황]
(단위 : %)
<table>
<tr><th>구 분</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환경개선부담금</td><td>38.6</td><td>38.0</td><td>35.4</td><td>32.3</td><td>28.8</td><td>26.9</td><td>26.8</td></tr>
<tr><td>수질배출부담금</td><td>12.1</td><td>10.0</td><td>10.6</td><td>21.9</td><td>11.5</td><td>11.7</td><td>14.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자들의 부담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해연도 체납액은 물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등 실효성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액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5</td><td rowspan="3">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비점오염저감사업(1131-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2024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68.7%에 불과한 등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실집행 부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7">보조사업자</th></tr>
<tr><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A)</th><th>집행액
(B)</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2022</td><td>49,061</td><td>28,345</td><td>77,406</td><td>43,730</td><td>28,230</td><td>5,446</td><td>56.5</td></tr>
<tr><td>2023</td><td>34,404</td><td>28,230</td><td>62,634</td><td>36,339</td><td>22,578</td><td>3,717</td><td>58.0</td></tr>
<tr><td>2024</td><td>30,696</td><td>25,459</td><td>56,155</td><td>38,573</td><td>16,151</td><td>1,431</td><td>68.7</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및 페널티를 강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	주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2024년도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47.7%로 저조함 - 2024년 교부액 77억 1,500만원 중 집행액은 36억 2,700만원, 이월액은 21억 600만원, 불용액은 19억 8,200만원임 - 열에너지 공급부지·소각장 부지 미확정과 인허가 지연 등 기초 행정 절차 미비, 이월액 불용·설계 지연·준공 후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과 집행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24년 본예산 전액을 4월 1일에 한번에 교부하였고, 12개 지자체 중 6개의 지차체는 교부받은 예산이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 인허가·부지확정 등 필수 절차를 완료한 이후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기별 사업추진 점검과 사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실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전기·수소차 보급 실수요 반영 및 수송부문 NDC 달성 위한 제도개선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수송 부문 NDC(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주요 이행 수단이나, 2024년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51.4%, ‘수소차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45.8%인 등 보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해야하나, 2024년 말 기준으로 보급된 차량은 전기차 71.2만 대, 수소차 3.8만 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범부처간 수송 부문 NDC 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무공해차보급사업이 실수요에 기반하여 보급목표를 조절하는 한편, 총 주행거리 감축이 가능한 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지자체별 전기·수소차 구매수요 여건을 반영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전환 및 효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매칭 참여 유도, 책임있는 국비 지원 방식 마련, 소관 부처 이관 검토 등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산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보다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버스의
무공해차량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내역사업인 ‘수소버스 보급’의 실집행률이 49.9%로 저조하고, 목표 대비 전환율도 50.9%에 불과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① 영세규모의 전세버스 운수업자에 대한 전환 비용 부담(높은 수소전기버스 가격)과 ② 운행 관련 지자체 권역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비 매칭이 불가함을 들고 있음

[2024년 수소버스 보급 결산 내역]
(단위: 억원, 대)
<table>
<tr><th>차종</th><th>본예산
(A)</th><th>교부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th><th>실집행액
(지자체)
(B)</th><th>실집행률
(B/A)</th><th>목표
대수 (C)</th><th>실제 전환
대수 (D)</th><th>목표 대비
전환율
(D/C)</th></tr>
<tr><td>저상버스</td><td>1,911</td><td>1,333</td><td>1,145</td><td>59.9%</td><td>910대</td><td>545대</td><td>59.9%</td></tr>
<tr><td>고상버스</td><td>2,106</td><td>1,123</td><td>862</td><td>40.9%</td><td>810대</td><td>330대</td><td>40.7%</td></tr>
<tr><td>합계</td><td>4,017</td><td>2,456</td><td>2,007</td><td>49.9%</td><td>1,720대</td><td>875대</td><td>50.9%</td></tr>
</table>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한된 재정 상황속에서 무공해차량을 전환하다보니 권역 내 저상버스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고상버스의 전환이 더욱 부진한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세버스부터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들의 전환 의지가 높음에도 동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기인하므로,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차별화된 정책 및 보조금 비율을 정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버스 보조금이 시내버스·광역버스 및 전세버스 등 버스 특성에 관계없이 같은 규모로 지급되어 고상버스의 전환이 미뤄지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 시 국비 지원 상향 또는 버스 특성별 보조금 차등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점검 및 전기차
충전기 사업
중도 포기 방지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4년 예산 4,365억원 중 2,991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1,375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68.6%로 저조함
○ 내내역사업인 ‘일반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에서 충전기 설치 신청 후 중도 포기율이 21.9%에 달하여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음
[2024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도 포기 물량]<table><tr><th></th><th>최초 신청 기수</th><th>중도 포기 기수</th></tr><tr><td>스마트 제어 충전기</td><td>48,900기</td><td>6,868기(14.0%)</td></tr><tr><td>일반 완속 충전기</td><td>54,993기</td><td>15,955기(29.0%)</td></tr><tr><td>합계</td><td>103,893기</td><td>22,823기(21.9%)</td></tr></table>○ 또한, 일부 내역사업들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함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실집행률이 35%, ‘수소충전기 설치’는 실집행률이 63.5%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이 설치 신청 수요 저조와 중도 포기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설치 물량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중도 취소되는 예산 규모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충전기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편성·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기 수요조사·자금조달 지원으로 중도 포기를 방지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미래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1633-312)</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내역사업인 ‘미래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세부 항목 중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은 1.0%, 이동형 충전기 제작·구매사업의 실집행률은 1.1%에 불과함
-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사전이행절차 및 충전사업자의 시험기관 인증 획득 등의 사유로 설치가 지연됨
-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사업은 면밀한 사업준비 미흡 및 조달 절차·가처분 신청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이 지연됨

[2024년 미래형 충전기 시범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th><th>2024년
편성 (A)</th><th>집행액
(교부금액)</th><th>실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설치</td><td>80,000</td><td>70,650</td><td>813</td><td>69,837</td><td>-</td><td>1.0</td></tr>
<tr><td>이동형 충전기
제작·구매</td><td>30,000</td><td>30,000</td><td>344</td><td>29,656</td><td>-</td><td>1.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등 충전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정기 집행점검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동형전기충전시설 구매와 같이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평가기준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예방형 완속충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충전사업자의 사업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 설치물량을 편성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제도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동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계약 지연 해소 후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재이월을 차단하고, 성과를 환류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제도개선)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사업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한 신규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후상수도정비사업(자율)(2031-306)	주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될 당시에는 광역발전계정을 통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물복지 차원의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방식으로 축소되어 사업의 정책적 성격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별 실집행률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구례군(26.2%), 청주시(0%), 충주시(4.2%), 인천시(8.6%), 김해시(0%), 나주시(0%) 등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2024년 동 사업은 예산현액 5,381억 9,300만원 중 70.3%인 3,781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29.7%인 1,599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후상수도가 과소투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생태하천복원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한강수계관리기금 - 생태하천복원사업(한강수계관리기금, 1333-405)	주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산곡천2 사업은 사업 계획상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목적의 사업비가 35.3%에 불과해 사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자체에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지자체에서 보완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음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목적의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산곡천2 사업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목적 35.3%, 이·치수목적 64.7%로 구성됨 - 한강청이 보조금 교부 검토시 토지보상비 과다·치수비용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이 불가하여 2025년 3월 사업이 취소되었음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월액 31억 9,000만원 및 보상비 82억 7,000만원은 전액 회수 예정이나, 설계용역비 2억 7,000만원은 반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선정 및 예산 교부 시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을 지양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사업 축소로 본부 수생태과가 폐지되어 수질·수생태 중심의 하천 관리 목적이 훼손된 만큼, 조직 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면밀한 예산항목 검토를 통하여 이·전용 및 과다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1133-32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69% ~ 85%로 저조하며, 매년 이월 및 불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연구용역 실시, 임차료 및 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매년 자체 전용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출장비 확보와 세미나 개최 등 임차료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일반수용비에서 총 4,200만원의 자체 전용과 세목조정을 실시함 ※ 집행률: 2021년 69.3%, 2022년 76.3%, 2023년 80.4%, 2024년 85.5%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한 예산 항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 또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폐기물
유해성평가
관리체계선진화
사업의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규정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1433-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폐기물유해성평가 관리체계선진화’는 소송 착수금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중 소송 착수금 지급내역]
(단위: 만원)
<table>
<tr><th>집행내용</th><th>금액</th></tr>
<tr><td>전수원 영업정지처분취소 착수금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영업정지 불복 소)</td><td>440</td></tr>
<tr><td>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신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착수금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양수・인수 허가취소 소)</td><td>55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조속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준공을 위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1831-309)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추어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2025년 12월로 연기되었음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임시로 인근 별도 공간을 임대하여 야생동물 검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검역시행장 설치 지연으로 별도의 임시 검역시행장을 운영하면서 집행되는 임차료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음 ※ 2024년 임시 검역시행장 임차료 : 1억 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역시행장 운영을 위하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준공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의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규정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1833-34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고, 임금은 일용임금(110-04) 항목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포유류·야생조류 AI 조사인력(예찰인력)의 임금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들은 약 4~8개월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일용임금이 아닌 상용임금근로자의 성격을 가짐
[예찰인력과 단기근로자의 근무 월 및 시간]
<table>
<tr><th>채용 명칭</th><th>직종</th><th>근무 월</th><th>근무시간</th></tr>
<tr><td>예찰인력</td><td>야생포유류
AI조사인력</td><td>2024. 5. 1. ~ 2024. 8. 31. (약 4개월)</td><td>주 40시간, 주 5일</td></tr>
<tr><td>예찰인력</td><td>야생조류
AI조사인력</td><td>2024. 9. 2. ~ 2025. 3. 31. (약 7개월)</td><td>주 40시간, 주 5일</td></tr>
<tr><td>단기근로자</td><td>조사연구원</td><td>2024. 7. 1. ~ 2025. 2. 28. (약 8개월)</td><td>주 40시간, 주 5일</td></tr>
</table>
- 또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와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table>
<tr><th>집행내용</th><th>금액</th></tr>
<tr><td>2024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비</td><td>1,144,000</td></tr>
<tr><td>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 합계</td><td>6,659,400</td></tr>
<tr><td>합계</td><td>7,803,4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안전한 지상 사외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2320-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기준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는 지상 사외배관의 설치 기준을 ‘적절한 기준’ 및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등의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배관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열수송관 설치 요건을 규정한 산업통상부의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은 적합한 열수송관의 설치 요건을 별도의 산식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한 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한 지상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조속한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 잔액을 현재까지 약 7년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이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집행잔액 총 1,316억 7,100만원이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중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지자체 집행잔액(A)</th><th>국고반납액(B)</th><th>미반납액</th></tr>
<tr><td>2018</td><td>8,079</td><td>7,760</td><td>319</td></tr>
<tr><td>2019</td><td>64,620</td><td>64,463</td><td>157</td></tr>
<tr><td>2020</td><td>52,705</td><td>52,294</td><td>411</td></tr>
<tr><td>2021</td><td>69,695</td><td>55,344</td><td>14,351</td></tr>
<tr><td>2022</td><td>78,632</td><td>61,317</td><td>17,315</td></tr>
<tr><td>2023</td><td>252,602</td><td>153,484</td><td>99,118</td></tr>
<tr><td>합계</td><td>526,333</td><td>394,662</td><td>131,6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조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설치한 충전기의 완속 충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현장조사 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 그런데 이해관계자 논의 등으로 인하여 현장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이 지연되어 2025년 7월말 기준 총 23,281개의 설치된 스마트제어 충전기 중 준공 및 정산이 완료된 스마트 충전기가 없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한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성능검증 및 준공 절차를 완료하여 충전제어 기능이 없는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등 조속히 정산 절차를 마무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대심도하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의
지연방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하수관로 정비 (1132-3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의 집행을 위하여 2024년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60억원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2023년 이월된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 2024년에 교부된 보조금은 100만원만 집행됨

[2024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th><th>교부일자</th><th>전년도
이월액</th><th>교부액</th><th>예산현액</th><th>2024년
집행액</th><th>이월액
제외
집행액</th></tr>
<tr><td>계</td><td>-</td><td>4,500</td><td>6,000</td><td>10,500</td><td>4,501</td><td>1</td></tr>
<tr><td>서울특별시
(광화문)</td><td>2024. 09. 23.</td><td>2,000</td><td>4,000</td><td>6,000</td><td>2,001</td><td>1</td></tr>
<tr><td>서울특별시
(강남역)</td><td>2024. 10. 18.</td><td>2,500</td><td>2,000</td><td>4,500</td><td>2,500</td><td>-</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고효율 설비군에 대한 예산 우선 배분 방안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자금투자 1억원당 에너지절감량은 75.2 toe/억원으로 최근 5개년(2020~2024년) 평균인 80.3 toe/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2024년 융자지원 건수의 대부분이 절감 효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등) 위주로 분산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
<table>
<tr><th colspan="2">세부사업명</th><th>지원건수
(건)</th><th>지원금액
(억원)</th><th>평균단가
(억원/건)</th><th>투자
회수기간(년)</th></tr>
<tr><td colspan="2">ESCO 투자사업</td><td>33</td><td>1246.2</td><td>37.8</td><td>1.7</td></tr>
<tr><td rowspan="4">절약
시설
설치
사업</td><td>절약시설 설치사업</td><td>613</td><td>1,561.2</td><td>2.5</td><td rowspan="4">2.1</td></tr>
<tr><td>생산시설 설치사업</td><td>-</td><td>-</td><td>-</td></tr>
<tr><td>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td><td>24</td><td>62.6</td><td>2.6</td></tr>
<tr><td>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td><td>3</td><td>50.0</td><td>16.7</td></tr>
<tr><td colspan="2">합 계</td><td>673</td><td>2,920</td><td>4.3</td><td>1.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규모 설비에 대한 분산지원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방식을 고효율 설비군에 대해 일정 비중 이상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국회 예산 심의·의결 취지가 훼손되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바우처(5146-301)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2023년 동절기바우처 단가 인상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고, 2024년 상반기부터 과다편성분 1,103억 4,500만원을 등유·LPG,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으로 조정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음 - 특히, 등유·LPG 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860억 1,600만원을 연중 임의로 추진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3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의 신속한 추진 및 국내 수요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5203-318)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전력 판매단가 인상으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에 출자예정이었던 35억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대안으로 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살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전기본설계 추진 비용으로 14억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으로 생산·도입할 물량의 국내 수요 확보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지방비 집행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5203-35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지방비 집행 지연으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일정 차질 및 운영 개시 지연 가능성이 존재함 - 2024년 국비 70억은 성능평가 장비 구입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부지정비 및 센터 구축 공사비·시설부대경비 등에 사용될 지방비 4억 9,000만원 중 건축 기획설계 잔금 1,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됨 - 보령시의 부지 변경 결정으로 추가 절차·기간이 소요되었고, 산업부는 2026년 7월까지 구축 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센터 운영 개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지방비 집행이 지연되어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의 집행부진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5801-301)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을 통해 2024년 추진한 과제 중 11개 과제는 연구수행기관에서의 최종집행률이 2024년 말 기준 3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는데, 해외 정부와의 공동연구 추진 합의, 수행기간 협의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최초 공고는 2024년 2월 26일 게시되어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공고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하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공고 시점부터 늦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외 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조기 공고를 도입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국고보조금 재이월의 제한적 허용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수소생산기지 구축(5804-310)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된 재이월 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2차 보조사업자의 재이월이 이루어졌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된 재이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재이월을 지양할 것		
67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연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수소생산기지 구축(5804-310)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수소생산기지 5개소의 구축이 모두 지연 중인 상황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16.1%로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집행 지연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연차별 보조금 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8	**출연금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5144-31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으나,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69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규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5202-30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규모는 1,682억 1,200만원으로 2020년 예산 3,475억 6,8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규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규모는 4,263억원으로 2021년 예산 5,340억원 대비 약 1,000억원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1	융자액의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신생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 '생산 및 시설자금'과 관련하여, 총 융자액 중 153억 800만원이 이월됨 - 이 중 산업시설 태양광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85억 2,000만원, 농촌시설 태양광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14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 관련 융자 지원의 재정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센터 적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해상풍력산업지원(5202-318)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2024년 해상풍력지원센터 구축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지방비 증액, 건축면적 조정 등으로 인해 연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5년 4월에서야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2024년도 사업비 60억원 전액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교부하였고, 이 중 15억 3,200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 2025년 6월 현재, 연약지반에 따른 건축공법 변경 등을 검토 중으로 절대적인 건축 공기 확보 및 구조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추가연장이 불가피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할 것		
73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점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5203-32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2025년 6월 기준 총 국비 62억 7,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지자체(경남)의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2024년도 사업비 32억원을 지자체에 전액 교부함 -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남 종합지원센터가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잔여기간 동안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적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5451-301),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5451-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24년 계획현액 1,276억 3,000만원 중 2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 발생 원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전력기금 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발전소 폐지 등이 있었음 - 국무조정실 보조금 집행점검(2021~2023년)에서는 부적정 집행, 허위결산, 중요재산 관리 소홀 등 총 283건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미흡과 투명성 저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 조사대상 기간(2017~2020) 이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결산 재검증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절차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75	**연구비 관리 강화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적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R&D)(5703-344)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내 연구비 집행내역 등록 지연으로 집행 상황 파악이 어렵고, 20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연기로 인건비가 이월되는 등 과제 수행에 차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구비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인력 미확보로 인건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며, 실집행 적기 집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자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및 사후점검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7403-313)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여 원전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자금을 그 성격에 맞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후점검 절차도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각 자금을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77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 및 교육체계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5632-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은 대학지원, 연합대학, 종사자 마스터 양성, 글로벌 인력양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품질 편차와 성과관리 한계, 현장적합성 부족 등으로 사업 취지 달성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 대학지원사업은 석·박사 멘토 역량 편차로 교육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논문 수 등 양적 지표 중심 성과관리로 산업·정책 기여도 판단이 어려움 - 신규 인력 유입이라는 사업 목적상 산업계 수요와의 연계 강화, 진로 추적 관리가 필요함 - 종사자 마스터 양성사업은 단기 집체교육 위주 운영으로 교육 지속성과 현장 적용성이 미흡하며, 참여자 중 대학 소속 비율이 높아 산업현장 중심 취지와 괴리됨 - 교육 신청자 대비 수료율(70%)이 낮아 교육 내용·일정·운영방식에 수요자 맞춤형 조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관리 체계 마련, 참여대상 적정성 확보, 교육방식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5679-302)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산업통상부는 방폐물 처분시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매년 기본경비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2019년 이후 반복되고 있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사업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당초 계획액은 189억 5,700만원이나 자체 변경을 통해 254억 4,7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종합부동산세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 가능함에도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증액분이 종합부동산세 예산 결정액의 56.1%를 차지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예측 불가·긴급 소요’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공단의 운영방식은 타당성이 떨어짐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9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 축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3-840)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기금의 법적 취지와 수익성 제고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음 - 2024년 예탁 규모는 3조 8,887억원으로 전체 기금 운용액(8조 9,706억원)의 43.3%에 달하며, 이는 타 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1.2%, 임금채권보장기금 9.9%)과 비교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자력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목적상 전출·전입 제외 대상 기금임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높은 비율로 예탁하는 것은 법적 취지와 상충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아닌 연기금투자풀 등 대체 운용 시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 운용방식은 수익률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증가시킨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적정규모를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블루암모니아 생산 · 도입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 (5203-318)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은 천연가스 가격 변동,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 주요기업의 투자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예산 집행실적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의 연도별·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1	**이차보전금의 연례적 불용에 따른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주의,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2024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으로 2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액 미집행 되었음 ○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하였음 - 기업은 당장 자금 확보가 가능한 ‘융자’ 방식을 선호하나, 이자만 보전받는 ‘이차보전’ 방식은 체감 효과가 낮고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담보 요구와 금리 변동 리스크 때문에 선호가 낮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유사한 이차보전 사업을 적정 보전금리의 산정 및 사업수요의 확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액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저조 사유를 분석해 보고, 재정효율과 더 많은 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들이 이차보전 방식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바우처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바우처(5146-301)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동절기바우처’은 과다편성된 사업비 1,103억 4,500만원을 타 내역사업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4,901억 7,600만원 중 3,904억 9,700만원만이 집행·교부되고, 996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바우처의 실사용률이 지원단가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사각지대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부는 2025년에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제도 개선 이전인 2024년도의 경우 동절기 예산 불용이 2,100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문자·우편발송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바우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비를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원 대상, 지역, 주택 구조, 난방 수단 등 다양한 요인별로 바우처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인지도 제고, 신청절차 간소화, 비정형가구의 보완장치 마련 등 사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절기, 동절기, 연탄, 등유 등 내역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일 바우처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3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의 계약 투명성 제고 및 불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농어촌전기공급(5457-301)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은 위탁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음 - 한국전력은 도서전력설비 운영을 퇴직자단체 자회사에 위탁하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2월 31일 종료된 계약을 2024년 8월 14일로 연장하는 계약을 2024년 9월에 소급 체결하였음 ※ 감사원은 2023년에 한국전력공사가 맺은 수의계약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쟁에 따른 계약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퇴직자단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과소편성이 매년 반복되어 연말에 과다한 자체변경 후 불용이 발생하는 등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가 지속됨 ※ 자체변경액: 2021년 252억 6,800만원(증), 2022년 623억 2,600만원(증), 2023년 428억 8,800만원(증), 2024년 168억 6,600만원(증) ※ 수선유지비·투자비 미집행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판매 수입 증가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수준에서 2024년 예산현액 1,570억 1,100만원 중 77억 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과다 요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급 계약 및 퇴직자단체와의 장기간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준연료비 산정 시 합리적인 단가를 반영하고 과소편성 및 연말 자체 변경 관행을 개선하여 불용 재발을 방지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년간 법률 위반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감사원 지적 이후인 2024년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퇴직단체 자회사와의 수의 계약을 자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4</td><td rowspan="3">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5145-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내역사업인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1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함
- 2024년 지원대수의 목표 대비 달성도가 59.9%에 그쳤고, 전년 대비 지원대수 실적은 24.3%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목표 대비 달성률도 61.7%로 낮은 수준임
(단위: 개, MWh,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r>
<tr><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h>계획</th><th>실적</th><th>달성률</th></tr>
<tr><td>지원대수</td><td>120,000</td><td>105,889</td><td>88.2</td><td>133,820</td><td>80,138</td><td>59.9</td></tr>
<tr><td>에너지절감량</td><td>8,514</td><td>6,837</td><td>80.3</td><td>8,933</td><td>5,512</td><td>6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유인 제공 여부, 현재 취약계층 소득 수준 대비 지원비율 및 한도의 적정성, 보조금 신청 용이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수행체계 다변화, 홍보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5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5145-302)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는 2023년 신규 추진 이후 충분한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예산이 15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110억원으로 조정·교부되었고, 이 중 36억원만이 실집행(집행률 33.0%)되었음 - 충분한 시장수요 조사나 면밀한 사업기획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불용 및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사업 지속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나 면밀한 사업기획 없이 성급히 추진하여 예산의 불용 및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출연금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 원전수출보증(7403-315)	제도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원전수출계약 및 보증서 발급수요가 전혀 없어 보증실적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0억원의 출연금이 편성·집행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음 -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예산 교부 및 금융성기금 출연금의 환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출연금이 이를 관리하는 공사의 자산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단계적 자금교부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기상청(11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한 지상기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140-5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호우 특보(주의보·경보)는 강수량이 특보 기준에 도달하기 전, 국민에게 사전 경고와 대피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최근 몇 년간 호우 특보 발효 시점과 실제 강수량 도달 사이 시간(선행 시간)의 변동폭이 큰 상황임
※ 선행시간 : 2020년 119분, 2021년 78분, 2022년 152분, 2023년 80분, 2024년 98분
❍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 조기 감시를 위해 조밀한 관측망은 필수적임에도 현재 전국 지상기상관측장비 조밀도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현재 전국 자동기상관측장비 시·도별 설치 현황 및 조밀도]
<table>
<tr><th></th><th>서울·인천·경기도</th><th>강원 특별 자치도</th><th>대전·세종·충청남도</th><th>충청북도</th><th>대구·경상북도</th><th>부산·울산·경상남도</th><th>광주·전라남도</th><th>전북 특별 자치도</th><th>제주 특별 자치도</th></tr>
<tr><td>장비 수 (대)</td><td>110</td><td>103</td><td>50</td><td>33</td><td>82</td><td>83</td><td>102</td><td>45</td><td>43</td></tr>
<tr><td>조밀도 (km)</td><td>10.4</td><td>12.8</td><td>13.6</td><td>15.0</td><td>15.6</td><td>12.2</td><td>11.2</td><td>13.4</td><td>6.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하여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상기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해양기상관측망
유지, 보수사업
관측장비
정비·점검계획
수립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2-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관측시설별 장애 통신 통계를 보면 해양기상부이 17건, 파고부이 145건 등 총 239건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연도별 장애 발생 건수도 2020년 162건, 2021년 176건, 2022년 191건, 2023년 245건, 2024년 239건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현황]
(단위: 건)
<table><tr><th>관측장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계</th></tr><tr><td>해양기상부이</td><td>12</td><td>17</td><td>26</td><td>34</td><td>17</td><td>106</td></tr><tr><td>파고부이</td><td>124</td><td>105</td><td>106</td><td>135</td><td>145</td><td>615</td></tr><tr><td>등표기상관측장비</td><td>5</td><td>9</td><td>9</td><td>8</td><td>15</td><td>46</td></tr><tr><td>선박기상관측장비</td><td>4</td><td>5</td><td>4</td><td>7</td><td>5</td><td>25</td></tr><tr><td>연안기상관측장비</td><td>8</td><td>8</td><td>8</td><td>24</td><td>22</td><td>70</td></tr><tr><td>해양안개관측장비</td><td>7</td><td>31</td><td>35</td><td>36</td><td>30</td><td>139</td></tr><tr><td>항만기상관측장비</td><td>2</td><td>1</td><td>3</td><td>1</td><td>5</td><td>12</td></tr><tr><td>계</td><td>162</td><td>176</td><td>191</td><td>245</td><td>239</td><td>1,013</td></tr></table>자료: 기상청

- 최근 5년간 기상청에서 설치, 구축하여 운영한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지점수를 합산하면 총 1,177개소인데 장애발생 수는 1,013건으로 1개소당 1년 평균 0.86회의 장애가 발생하여 관측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양기상관측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해양기상관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빈도가 높은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R&D(3133-312)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수치예보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인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 동 사업단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4	**인공강우 관련 중장기적 연구개발 및 선진국과의 협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4133-301)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2023년 인공강우 실험에는 4.5mm의 증우량을 기록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중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공강우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확대 도입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교원연수과정의
내실화 및
기상기후 데이터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상기후교육(6134-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현행 교원연수과정은 교원 스스로 흥미와 부담을 기준으로 연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수 프로그램이 현장 교원의 요구와 변화하는 교육환경(디지털, AI 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5년(2020 ~ 2024년)간 대학생 기상기후연수과정 및 교원 연수과정 운영실적]
(단위: 명)
<table>
<tr><th>연 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대학생 기상기후연수과정</td><td>-*</td><td>11</td><td>23</td><td>30</td><td>-**</td></tr>
<tr><td>교원연수과정</td><td>-*</td><td>-*</td><td>37</td><td>-***</td><td>-***</td></tr>
</table>
* COVID-19 확산으로 폐강
** '24년 대학생 연수과정 주제를 지진으로 변경하여 운영(22명 교육)
*** 모집인원 미달로 폐강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교원연수과정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실제 운영 과정의 개선점을 모색하여 산업계와 사회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비 연고 직원에 대한 임차관사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7137-302)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2024년 12월 기준, 제주 본원에 근무하는 98명 가운데 비연고자는 47명이며, 기관장 관사를 포함한 임차관사는 2채에 불과하여 44명은 전·월세를 부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 국립기상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급별 배점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본원 임차관사는 2채로 제한되어 청년·신규 직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실질적인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청년·저연차 공무원, 도서·벽지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임차관사를 공급하고, 임차관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7	**기상관측시설 지역별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관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의 경우 각각 211개소, 108개소, 113개소, 109개소의 기상관측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42개소, 40개소, 31개소만 설치·운영 중인 등 기상관측시설의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기상관측시설의 지역별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기상청은 균형있는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하여 재해취약지역·기상수요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장비 도입의 지연·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관측장비의 보안 취약성, 조달·평가 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	주의,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2023년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관측데이터 변조, 기밀유출 등 국가관측망에 대한 해킹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입찰·조달 단계에서 보안성·제조사 이력·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직바람관측장비 주요 장비가 해외(중국, 독일)산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성과 노후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국내에는 19대의 연직바람관측장비가 산악·해안·공항 등 기상관측 거점에 분포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제안서 평가 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점검 강화, 정보보안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산 관측장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것(제도개선) ○ 기상청은 향후 기상관측장비 도입 시 동일한 보안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기상용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1239-5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상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예산 중 이·전용된 예산 대부분은 슈퍼컴퓨터의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문제로 인한 것임
- 기상청은 매년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항목에서 이·전용 등 예산조정의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기상청 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024년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
(조정일자)</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r>
<tr><th>세부사업 명</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 rowspan="4">전용</td><td rowspan="4">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td><td>210-02</td><td>400</td><td rowspan="15">기상용슈퍼컴 운영(정보화)</td><td>210-02</td></tr>
<tr><td>210-02</td><td>400</td><td>210-02</td></tr>
<tr><td>210-02</td><td>200</td><td>210-02</td></tr>
<tr><td>210-02</td><td>300</td><td>210-02</td></tr>
<tr><td>이용</td><td>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td><td>210-07</td><td>350</td><td>210-02</td></tr>
<tr><td rowspan="5">이용</td><td>기상과학관·박물관 운영</td><td>210-02</td><td>120</td><td>210-02</td></tr>
<tr><td>강원지방청 인건비
(총액인건비)</td><td>110-01</td><td>80</td><td>210-02</td></tr>
<tr><td>대전지방청 인건비
(총액인건비)</td><td>110-01</td><td>200</td><td>210-02</td></tr>
<tr><td>제주지방청 인건비
(총액인건비)</td><td>110-01</td><td>110</td><td>210-02</td></tr>
<tr><td rowspan="2">이용</td><td>항공기상청인건비 (총액인건비)</td><td>110-01</td><td>140</td><td>210-02</td></tr>
<tr><td>기상레이더센터인건비 (총액인건비)</td><td>110-02</td><td>230</td><td>210-02</td></tr>
<tr><td rowspan="2">세목조정</td><td rowspan="2">기상용슈퍼컴 운영(정보화)</td><td>210-01</td><td>11</td><td rowspan="2">210-02</td></tr>
<tr><td>210-09</td><td>28</td></tr>
<tr><td colspan="3">합계</td><td>2,569</td><td></td><td></td></tr>
</table>
자료: 기상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보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 집행 추세를 명확히 집계하여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관측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는 1~2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장 건수는 2023년 156건, 2024년 59건 증가하여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2024년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한 해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가 283대에 불과하고, 5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6대, 6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4대로 고장 발생 후 복구한 장비도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기상감정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상산업 활성화(1431-301)	제도개선	기상청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기상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는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2024년에는 면허 취득자가 없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동 제도를 운영한 11년간 기상감정사를 취득한 인원이 총 49명에 불과함 ○ 기상감정사가 근무하는 기상감정업체 수도 2024년 5곳에 불과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4건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기상청은 기상감정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고용노동부(65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최근 2년간 EPS 컨퍼런스는 외국인고용관리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대규모로 확대 개최되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행사를 본래 목적 등과 다르게 개최하거나, 대규모로 확대 추진할 경우 외국 근로자 입국지원 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과다 결정 방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시정,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입 규모와 실제 도입 인원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도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 지원 예산이 감소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현실적인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도록 노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입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에 관계 없이 별도의 현실적 목표로 수입목표량을 결정하는 등 예산 과다 산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자격검정시험 수수료 정상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격검정사업’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적자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험인원 감소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 ○ 자격검정사업 적자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므로 자격시험 수수료 정상화 조치가 필요함 - 자격검정사업은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입실적에 따라 지출규모 조정이 이루어지나, 수입실적에 해당하는 자격시험 수수료(응시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할 수 없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수료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호텔경영사(20,000원, 1997년), 관광통역안내사(20,000원, 1999년) 등 다수의 자격이 마지막 수수료 책정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등,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고정된 상황임 - 초장기간 수수료 정상화 미실시로 인한 적자는 고스란히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자격시험 수수료 정상화 조치가 시급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정상화가 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인상 문제에 관하여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수수료 정상화를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뢰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사항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매년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어 시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은 격년에 한 번 정도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매년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37건의 오류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의 시험출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험위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3050-302)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지적사항	○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은 항공임 지원에 있어 기재부 집행지침을 위반하였고, 전 일정 모든 참석자에 대한 고가의 식사 제공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였음 ○ ASEAN+3 HRD 포럼은 예산을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집행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성과측정을 저해하였고 공동개최자인 세계은행의 초청 국가 항공임까지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음 ○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과 ASEAN+3 HRD 포럼은 모두 유사한 의제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노사발전재단은 국제행사 개최 시 기재부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통·폐합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사업취지에 맞게 홍보물 구매 · 제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회의에 참석한 정책담당자나 행사 초청 대상자에게 증정된 비교적 고가의 선물은 홍보물이라 보기 어렵고, 세부사업에 계획되지 않은 행사에 사용된 기념품 구매는 예산 편성 취지와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물을 구매·제작함에 있어 그 목적과 증정 대상, 금액 등을 사업의 취지와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민취업 지원제도 사업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성과가 부진하고, 제도가 일반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에 특화된 맞춤 프로그램이 미흡함 - Ⅰ유형의 비경활 선발형과 Ⅱ유형의 특정계층의 취업률이 다른 유형의 취업률에 비해 낮음 - Ⅱ유형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최근 4년간 실업률 하락 추이와 대조적인바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Ⅰ유형 비경활 선발형과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의 취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Ⅱ유형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취업률이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 유형과 계층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과가 저조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 제고 및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정책 고용영향평가 중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과제 비율이 10~20% 수준임 - 2021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 11건, 2025년 3건만이 신청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임 - 2024년에는 11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건만이 선정되어 그 결과 전체 8건의 과제 중 1건만이 신청과제로 수행됨 ○ 이는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영향평가 대상 중 첫 번째로 신청과제를 규정한 「고용정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동 사업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제 발굴과 수행이 제한적이며,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고용 효과성 분석이나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계되는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고용영향평가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내부 절차 개선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현황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용 효과성 분석 및 고용패널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수행기관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평가와 같이 평가 결과가 실효성 있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경상보조를 폐지하고, 관영상담을 실시함에 따라 민간 상담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평등분야 상담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61.9% 감소하였음 - 고용평등상담지원 예산: (’23년) 12억 1,500만원 → (’24년) 5억 5,100만원 - 상담건수: (’23년) 1월~8월 4,074건 → (’24년) 1월~8월 2,523건 - 관영상담은 복잡하거나 내밀한 내용에 대한 내담자의 고백 및 후속 재상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상존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평등상담업무 전부를 다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재취업지원 서비스 수요 부족 원인 분석 및 사업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활용도가 낮고, 특히 사후관리 지원의 경우 2023년 집행률이 0%, 2024년에도 16.9%에 그쳐 실집행 성과가 극히 저조함 ○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포함한 개편사업이 도입되었으나, 홍보 부족과 컨설팅 지원 미흡으로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수요 부족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구조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력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개편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1032-303)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제한되며, 이를 지원할 전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 - 프로그램 참여 학생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청년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확대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1044-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2023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급격히 예산을 삭감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62.1%를 삭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타 사업에 이용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은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적립을 통해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2년 8,754억 6,800만원, 2023년 4,295억 8,600만원, 2024년 1,628억 8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51억 4,900만원의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이용하였고, 44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력개발 관리·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사업집행 시기별 적정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취업지원(1051-304)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K-Move 스쿨’ 사업 내 일부 과정은 개별 실적 및 취업률에 따라 후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2024년 신설된 연수장려금은 주소지와 연수지역이 동일한 경우 10만원, 연고지를 벗어나 연수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하나, 연수기간 중 주소지 변경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연수 확정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연수생은 연수장려금 20만원과 연수숙박비를 중복 지급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연수숙박비(월 최대 20만원)는 연수 참여를 위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연수생에게 지원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사업집행 시기 및 후지원금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점검 · 장려금 지급기준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사업 성과와 예산 및 운영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주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저하되고 있음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은 당초 예산 350억원 중 80억원을 전용하였음에도 불용예산이 112억 9,300만원 발생하여 58.2%만 집행하였고 과정 참여율과 훈련 이후 취업률이 낮은 등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함 - 2024년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100,500명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훈련 실시 인원은 69,493명에 그쳐 목표에 미치지 못함 - 의료기술 지원 과정에는 목표인원의 67.1%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아이돌봄 과정은 훈련수료인원 중 동일 직종 취업률이 목표(90%) 대비 크게 낮음 ○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저하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훈련 수요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목표 인원 및 선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취업 연계성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훈련 참여율과 동일 직종 취업률을 높일 것(제도개선) ○ 고용노동부는 향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제도개선하여 포상금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실집행률이 61.1%로 부진하며 개별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 또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참여 지자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의 공모 후 9월에야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수요가 저조하였음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인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운영’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임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운영’은 노사발전재단 위탁사업으로 6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를 개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약 5,000건 이상의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 제공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근로자 이음센터 인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지방노동권익센터 지원 등으로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현물성 지원 외 내실 있는 일터 지원방안 모색 및 국회 보고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31-304)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주로 쉼터 설치 및 방한·안전장구 지급 실시로 상담·교육 등 새로 확대된 사업 추진 유형의 집행은 지자체 1건, 민간 2건으로 저조함 - 현물성 지원은 집행률은 높일 수 있으나, 지역·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약노동자의 근로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터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에도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가 의결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기존 일터개선 지원사업 운영과 예산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물성 지원 외 내실 있는 일터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과다한 이전용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주의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이전용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17회, 5억 8,600만원을 이전용하는 등 예산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였음 - 기관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사업에서 해당 사업 외에도 잦은 이전용 사례가 있고, 2024년도 이전용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동 사업 외에도 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중 ‘노동위원회 인건비’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이·전용되었고,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사업에서도 1억 2,600만원이 전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의 과다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수요를 반영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의한 취약계층 권리구제대리 건수가 2021년 1,888건에서 2023년 3,027건으로 폭증하였음에도 2025년도 예산을 오히려 감액 편성한 사실이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2024회계연도에서도 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해 중도에 예산 1억 2,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동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예산의 과소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비 편성 비율 기준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56-317)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은 위원회 인건비·운영비 위주의 예산 구조로, 사업의 근거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2024년 사업비 중 인건비 56.3%, 운영경비 20.9%의 비중으로, 직접 사업비의 비중은 21.0%로 낮은 수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체·단체 등의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의 직접 사업비 편성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성과관리, 적정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	주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고용안정장려금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함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기업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음 ❍ 사업주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제도의 성과분석과 고용유지 효과 및 근속기간 연장 등의 질적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법률 개정을 전제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4년 예산은 2조 4,968억원으로 법률 개정 전제로 전년 대비 18.9% 증액되었으나, 실제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 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고용보험법」 및「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육아휴직급여 기간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및 대상 자녀연령 확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등 ※ 시행령 개정사항인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24. 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4. 7. 시행) 수준 확대만 시행됨 - 법률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 예산 심의 · 의결권을 형해화할 우려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해당 법률 심사 여부 및 결과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준비 미흡 시정 및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내역사업은 관계부처와 비자 제도 개편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모두 부진함 - 계획액 124억원 중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 55억원이 전액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간경상보조금 69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집행률 2.3%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조금 일괄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2항에 부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가 유학비자의 취업비자 전환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집행 부진 원인이나, 2025년 6월 현재도 비자 제도 개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 준비 과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E-7 비자 전환 어려움으로 훈련 참여 유인 부족, 법무부와의 협의 지연,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확보 및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적사항	○ 내역사업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에 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 1인이 다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품질 및 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됨 ○ 또한 근로지원인의 처우가 불안정하여 장기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장애인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품질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452-315)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확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참여인원 증가에 비해 내실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함 - 2024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패키지 2단계 프로그램 수료율은 13.5%p, 3개월 근속률은 9.7%p 감소 - 취업역량 강화보다 형식적 지원에 치중될 경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 상담 ·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장애인고용교육 연수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적사항	○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분할 및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순연되었음 - 동 연수원은 장애인 고용전문가 양성,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로서, 총사업비는 285억원임(현재까지의 투입비용은 약 15억원)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동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26	**대지급금 계획액의 적정 수준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임금채권보장기금 - 대지급금 지급(3051-300)	주의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 과소 편성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함 - 2024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4,747억 3,300만원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272억 300만원으로 계획액을 수정하였고, 이 중 7,27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만원을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총지출 규모 및 재정운용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액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소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방안 마련 등	관련사업명	근로복지진흥기금 -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4년 퇴사 등 사유로 약 1,765억원(누적)이 중도 인출되어 기금 적립금 규모가 축소됨 - 기금 규모가 축소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가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차질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규모의 경제 유지 및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서가 아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적·전문적 수행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8	산재병원의 전문성 및 정체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병원지원(4054-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산재병원이 장기요양환자 관리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재활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병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병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한도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주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관련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여부 등 고려되지 않음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지원 80%, 협·단체 20%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원 한도가 월 250만원으로 낮게 정해져 협·단체의 실제부담률이 더 높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사업 대상 선정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것(제도개선)		
30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관리 체계 강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4년 안전체험교육장 8곳 중 3곳만 운영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안전체험교육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내구성이 담보 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장 건축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법령상 내용연수가 40년임에도 짧은 기간 사용 후 재건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설계·시공 단계에서 품질관리 미흡과 완공 이후 유지보수의 부재가 원인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설계·건축 과정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완공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32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불용 과다 부적정**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4년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예산 4억 3,000만원 중 2억 6,7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5,100만원(35.1%)이 불용됨 - 산재보험 연구개발비는 2023년 4억 5,000만원에서 2024년 4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사업비의 35.1%가 불용된 것으로, 이는 연구개발을 소홀히 한 것임 - 직업 복귀가 산재보험이 갖는 중요한 두 축 중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 산재보험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보험 연구개발에 책정된 사업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주의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이는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수납률: ('22년) 44.9%, ('23년) 26.5%, ('24년) 17.4% *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활용하는 등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수납관리할 것 ○ 고용노동부는 2023년,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3050-302)	주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 준비 미흡과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됨 -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 출연금 21억 8,900만원 중 1,400만원만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 예산을 처리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사업 추진 시 수원국 제도나 상황에 대해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이월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사업 실집행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사업 추진 시 사업시작 전 수원국과 과업기간, 사업예산, 연도별 실행계획, 양측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이행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집행률 관리 등을 실시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 및 예산산출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주의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최근 실적 증가와 제도운영 변화에 비해 예산 추계가 부정확해 예산이 부족했으며, 사업 설계상 예상 수치와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나타남 - 2024년 구직촉진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1유형 재원에 대해 196억원을 전용(증) 및 내역변경 하고 예비비 60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1유형 참여자는 2023년 22.7만명에서 2024년 25.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3만명(10.1%) 증가함 - 2024년 예산 산정시 IAP* 수립률을 94%, 평균 지급횟수를 5회로 가정했으나, 실제 IAP 수립률은 98.66%, 평균 지급횟수 5.34회로 이를 상회함 * IAP(Individual Action Plan): 사업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전용·추경 편성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참여자 증가 추세와 제도 운영 변화를 고려해 예산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으로 2021년 도입되었으나,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 유입에 방해가 된다는 여러 지적이 제기되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월 소득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14%에 불과하고 이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실업부조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여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의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수준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현재 같은 취지로 국회에 다수 발의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수요추계를 정확히 하여 규모에 맞는 적정 예산액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실제 신청인 수가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당해연도 미지급금액: ('22년) 29.5억원, ('23년) 31.5억원, ('24년) 62억원 - 이로 인해 출산급여의 적기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원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 발생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신청 수요를 면밀히 추산하여 그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타 사업의 불용 예상액 활용 등 재원 보충방안을 마련하여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 검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한 예산을 편성하여 1,192억 7,700만원(집행률 80.3%)이 불용되었음 ○ 또한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에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학습병행’사업 수료자를 포함시킨 것은 미참여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개별 사업의 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취업애로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변호사 · 공인
노무사 등
결원을 충원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상근하는 변호사, 노무사, 공무직 노동권익지원관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민간 중위임금 대비 권리구제지원팀 변호사, 공인노무사 보수수준이 낮아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보수는 변호사 민간중위임금(647.5만원) 대비 61.7%(395만원), 공인노무사 민간중위임금(423만원) 대비 61.9%(262만원) 수준임
※ 2024~2025년 권리구제지원팀 정 · 현원 현황
(단위: 명,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총계</th><th colspan="2">변호사</th><th colspan="2">노무사</th><th colspan="2">노동권익지원관</th></tr>
<tr><th>정원</th><th>현원</th><th>정원</th><th>현원</th><th>정원</th><th>현원</th><th>정원</th><th>현원</th></tr>
<tr><td>2024.8.</td><td>177</td><td>153
(86.4)</td><td>32</td><td>9
(28.1)</td><td>34</td><td>27
(79.4)</td><td>111</td><td>117
(105.4)</td></tr>
<tr><td>2025.8.</td><td>185</td><td>162
(86.4)</td><td>22</td><td>9
(40.9)</td><td>34</td><td>26
(76.5)</td><td>129</td><td>127
(98.4)</td></tr>
</table>
❍ 또한 권리구제지원팀 고용부담금(보험료)를 과소편성하여 2024년 결원으로 인한 상용임금 미집행분 9억 9,0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전용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등의 결원을 충원할 근본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해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감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시정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전문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등 37개 자격 49만 8,380명 규모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것임 ○ 2025년 6월 26일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1교시만 응시하고 시험을 중도 포기한 응시자 5명이 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공단은 2024년부터 공인노무사시험을 ‘1교시와 2교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채점 알고리즘을 미처 변경하지 않음(2교시 미응시 시 탈락시키는 알고리즘 누락) - 해당 건은 ‘채점 관련 알고리즘’ 개편을 부서 간 공문 없이 구두로 의사소통하면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짐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직접 사과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보도설명자료만 게시하였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중도포기자가 1차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음이 공단 내부에서 밝혀졌으나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를 누락함		
		시정요구사항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이익 관점에서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4년 중도포기자 합격 오류 발생 건을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적정한 것인지 및 누구의 지시인지, ②알고리즘 누락 건이 공단 실무자 개인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공단 전반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③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에 기반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전환 및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회적기업 육성(지특)(1037-3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회적기업 육성(제주)(1037-313)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3년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진입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려움이 가중됨 - 사회적기업 예산: ('23년) 2,022억원 → ('24년) 830억원 → ('25년) 284억원 ○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반납 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유지 등 질적 성과 관리가 미흡함 - 신규인증: ('21년) 500건→ ('24년) 236건 / 반납: ('21년) 21건→ ('24년) 56건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 검증 및 지속성 확보가 부족하며 홍보 미흡으로 정책파급력이 제한되고 있고,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도 충분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효과성 검증과 홍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e-store 적극 활용,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방안 구체화 등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및 고용유지율 등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42</td><td rowspan="2">「고용보험법」
제84조
(기금의 적립)
연례적 위반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총괄</td><td rowspan="2">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2">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에 명시된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 적립 규정(연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적립 필요)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장래 상환의무가 있는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는 경우 2024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적립금은 △4조 2,125억원, 적립배율은 △0.3배임
※ 2021~2024년 연도별 실업급여 계정(임금근로자) 재정 현황(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단위: 억원, 배)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h colspan="2">2024</th></tr>
<tr><th>결산</th><th>공자기금
차입분
제외</th><th>결산</th><th>공자기금
차입분
제외</th><th>결산</th><th>공자기금
차입분
제외</th><th>결산</th><th>공자기금
차입분
제외</th></tr>
<tr><td>수입(A)</td><td>148,141</td><td>108,401</td><td>135,675</td><td>131,207</td><td>143,879</td><td>143,879</td><td>149,105</td><td>149,105</td></tr>
<tr><td>지출(B)</td><td>144,138</td><td>144,138</td><td>141,325</td><td>141,325</td><td>143,307</td><td>143,307</td><td>151,541</td><td>151,541</td></tr>
<tr><td>재정수지
C=(A-B)</td><td>4,003</td><td>△35,737</td><td>△5,650</td><td>△10,118</td><td>573</td><td>573</td><td>△2,437</td><td>△2,437</td></tr>
<tr><td>연말적립금
(D)</td><td>42,665</td><td>△30,075</td><td>36,953</td><td>△40,255</td><td>37,525</td><td>△39,683</td><td>35,083</td><td>△42,125</td></tr>
<tr><td>적립배율
(D/B)</td><td>0.3</td><td>△0.2</td><td>0.3</td><td>△0.3</td><td>0.3</td><td>△0.3</td><td>0.2</td><td>△0.3</td></tr>
</table>
○ 향후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 지원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대량 실업 발생과 고용상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적립배율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보험료율 조정,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마련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급여수준, 지급 기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부담과 고용안전망 기능의 균형을 도모하며, 신규 지출 요인의 재정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주의) ○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거나 계정 간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불합리하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필요**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목상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미지급하여 국민의 법률상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권을 침해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고용되었던 곳의 명목상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취업의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사각지대 파악 및 해소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신규지원 등 적극적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임 ○ 2024년부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집행 부진 지속을 사유로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2024년 수정계획액 100억원(당초 40억원) 중 95.99억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비정규직 인원은 864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여전히 큰 수준('24년 상대임금수준 66.4%)으로 나타나는 등 이중구조 개선촉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2025년 종료되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은 2024년에 수립한 일몰 계획을 폐기하고,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특고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신규지원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내역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의 신규지원을 재개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원구조 개편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으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동 예산이 편성된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와 연관성이 직접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의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계정이 실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계정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부담으로 기금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4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15.5%에 불과 ○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①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총족자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급여 사각지대), ②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를 미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들(제도적 사각지대)이 사각지대에 놓임 ○ 또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 수혜 연령대인 20~49세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약 1,557만 2,000명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상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약 976만 9,000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약 580만 3,000명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고용노동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외국인력(E-9) 특화훈련 목표인원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고용보험기금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안전·한국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되었으나, 실제 수요와 괴리된 과다한 목표인원 설정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인력 도입인원 감소와 법정교육 한계 등 구조적 요인도 개선되지 않아 사업 효과성이 떨어짐 - 2024년 외국인력 특화훈련 예산 288억 3,200만원 중 135억 400만원(46.8%)만 집행되었고, 153억 2,800만원이 불용 - 2024년 목표인원 4,000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755명(18.9%)에 불과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교육 만으로는 산업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특화훈련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을 방지할 것 ○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정교육 이후 외국인력 특화훈련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연계를 추진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심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력 특화훈련 교육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분야를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기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할 것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특화훈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장애인고용기금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총괄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940억원(8.3%) 증가한 1조 2,2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증가한 여유자금 규모는 총 3,19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달함 ○ 기금의 2024년 주요 사업비 8,517억 3,400만원은 전체 기금규모(2조 3,043억 7,800만원) 대비 37.0%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적은 수준임 - 유사한 규모로 운용되는 사업성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성 기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음 ○ 기금의 장애인고용증진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5년간 48%~5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2~2024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률이 감소하여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누적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성과와 장애인 고용성과가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임금채권보장 기금 일반회계 부담금 증액 및 사업주 부담금비율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임금채권보장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최근 체불임금 증가로 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하며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전입금은 매년 8,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증액이 필요함 ○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고용노동부 고시)은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1천분의 0.6으로 법률상의 한도보다 낮게 정하고 있어 상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일반회계 부담금 상향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대폭 상향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임금채권보장기금 - 대지급금 지급(305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대지급금 지급액이 2022년 5,368억 6,4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 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회수액・회수율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당해연도 지급액</th><th>누적지급액</th><th>누적회수액</th><th>누적회수율</th></tr>
<tr><td>2021년</td><td>546,571</td><td>5,700,313</td><td>1,838,112</td><td>32.2</td></tr>
<tr><td>2022년</td><td>536,864</td><td>6,237,177</td><td>1,991,353</td><td>31.9</td></tr>
<tr><td>2023년</td><td>686,905</td><td>6,924,083</td><td>2,139,485</td><td>30.9</td></tr>
<tr><td>2024년</td><td>724,207</td><td>7,648,290</td><td>2,297,713</td><td>30.0</td></tr>
</table>
누적회수액: 당해 연도까지 회수한 금액</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임금채권보장 시스템 분리구축 비용 마련 등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7082-204)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근로복지공단의 주 시스템(노동보험시스템)의 업무별 분리구축 과정에서 2024년도에 다른 시스템 분리구축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구축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종전에는 산재보상부문에서 주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대부분 분담하였으나, 산재보상부문이 분리구축됨에 따라 추후 동 사업이 전체 노동보험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 연 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업무는 노동보험시스템을, 체불청산융자업무는 근로복지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산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독자적인 분리구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구축 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일반회계 전입금 상향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3항은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회계 출연금은 213억원으로 2024년 기금 결산액 기준 0.13%에 불과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상향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52	**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단축계획의 철저한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재보험급여(4051-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산재 신청자의 권리 보장과 신속한 치료 지원이 저해되고 있음 -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일수: ('20년): 172.4일→ ('21년): 175.8일→ ('22년): 182일 → ('23년): 214.5일→ ('24년): 227.7일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25년 8월 5일 대통령실에 제안한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기간 단축' 신속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산재인정기준
합리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재보험급여(405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공단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산재인정 기준의 개편이 필요함
※ 2020~2024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
(단위: 건)
<table>
<tr><th></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소송 수행 건수</td><td>2,887</td><td>3,056</td><td>3,182</td><td>3,505</td><td>3,851</td></tr>
<tr><td>확정건수(A)</td><td>1,284</td><td>1,121</td><td>1,233</td><td>1,253</td><td>1,573</td></tr>
<tr><td>패소건수(B)</td><td>136</td><td>129</td><td>178</td><td>159</td><td>273</td></tr>
<tr><td>패소율(B/A)</td><td>10.6%</td><td>11.5%</td><td>14.4%</td><td>12.7%</td><td>17.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반복 패소 유형 재해의 경우 항소 및 상소 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없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및 적합한 지원대상 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은 산재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체계가 미흡함 ○ 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은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원품목이 시스템비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발생 비율이 23.9%~27.3%에 정체되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의 가장 큰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아닌 일반산업단지이며, 일반산업단지에 안전보건교육장·체력증진시설·샤워실 등을 지원한 것은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재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 R&D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취지와 내용에 맞는 지원대상과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주의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 28.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26.3% 수준이므로, 수급기간 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 ('21년) 25.2% → ('22년) 28.1% → ('23년) 27.2% → ('24년) 26.3%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을 제고할 것		
56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취업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운영비 및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고용센터*는 성과평가체계가 없어 취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인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반면 민간위탁기관들은 기본금을 지원받고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나, 기본금이 4년간 동결된 상태라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자체 성과평가 및 취업률 평가를 도출하여 결산보고서의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할 것 ○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기관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취업 후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저소득 대상자 중심 지원방안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수혜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제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출산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아 형평성이 문제됨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지급 기준 부재 관련 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해외취업지원(105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연봉 1억원 이상의 해외취업자도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취업자의 취업 시 연봉 현황(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인원 기준)
(단위: 명, %)
<table>
<tr><th>구분</th><th>평균연봉</th><th>계</th><th>30백만원 미만</th><th>30백만원~50백만원</th><th>50백만원~80백만원</th><th>80백만원~1억원</th><th>1억원 이상</th></tr>
<tr><td>2022년</td><td>3,547</td><td>3,255
(100.0)</td><td>1,275
(39.2)</td><td>1,680
(51.6)</td><td>264
(8.1)</td><td>26
(0.8)</td><td>10
(0.3)</td></tr>
<tr><td>2023년</td><td>3,788</td><td>3,344
(100.0)</td><td>1,230
(36.8)</td><td>1,609
(48.1)</td><td>450
(13.5)</td><td>41
(1.2)</td><td>14
(0.4)</td></tr>
<tr><td>2024년</td><td>3,948</td><td>3,046
(100.0)</td><td>1,226
(40.2)</td><td>1,205
(39.6)</td><td>525
(17.2)</td><td>66
(2.2)</td><td>24
(0.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부재로 고액연봉자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6예산안 심사 전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모성보호
육아지원예산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계정 내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2020년 1조 5,614억원에서 2025년 4조 225억원으로 급증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고갈 상황을 막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립을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
※ 2020~2025년도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단위: 억원, %)
<table>
<tr><th>구분</th><th>실업급여
계정지출(A)</th><th>모성보호
급여(B)</th><th>비율
(B/A)</th><th>일반회계
전입금 (C)</th><th>비율
(C/B)</th></tr>
<tr><td>2020년</td><td>138,860</td><td>15,614</td><td>11.2</td><td>1,800</td><td>11.5</td></tr>
<tr><td>2021년</td><td>144,138</td><td>16,850</td><td>11.7</td><td>2,200</td><td>13.1</td></tr>
<tr><td>2022년</td><td>141,325</td><td>20,772</td><td>14.7</td><td>3,000</td><td>14.4</td></tr>
<tr><td>2023년</td><td>143,307</td><td>22,615</td><td>15.8</td><td>3,000</td><td>13.3</td></tr>
<tr><td>2024년</td><td>151,541</td><td>25,738</td><td>17.0</td><td>4,000</td><td>15.5</td></tr>
<tr><td>2025(안)</td><td>157,775</td><td>40,225</td><td>25.5</td><td>5,500</td><td>13.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해 노·사·정 공동분담의 원칙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구직급여(1280-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자의 구직급여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 지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단기취업 등의 고용 관행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0~2024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수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수급자</th><th>지급액</th><th>수급자</th><th>지급액</th><th>수급자</th><th>지급액</th><th>수급자</th><th>지급액</th><th>수급자</th><th>지급액</th></tr>
<tr><td>3회 수급</td><td>64,996</td><td>355,582</td><td>71,040</td><td>372,795</td><td>71,891</td><td>368,063</td><td>78,366</td><td>416,669</td><td>80,764</td><td>440,677</td></tr>
<tr><td>4회 수급</td><td>15,522</td><td>73,481</td><td>16,675</td><td>75,458</td><td>17,371</td><td>78,267</td><td>18,102</td><td>81,375</td><td>18,139</td><td>84,092</td></tr>
<tr><td>5회 이상 수급</td><td>12,501</td><td>50,904</td><td>12,776</td><td>50,672</td><td>13,059</td><td>52,239</td><td>13,709</td><td>54,204</td><td>13,920</td><td>55,6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구직급여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줄이고 구직급여 수급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구직급여의 과도한 반복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개정 뿐만 아니라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
개편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구직급여(1280-35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교육와 자원봉사의 재취업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업인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전체 실업인정 건수 215만 8,667건 중 온라인교육 및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은 건수는 106만 8,739건(49.5%)임
- 전체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3조 968억 7,300만원 중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된 금액은 1조 4,919억 4,800만원(48.2%)임
※ '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전체 실업인정건수</td><td>1,773,312</td><td>1,926,718</td><td>1,861,477</td><td>2,017,455</td><td>2,158,667</td></tr>
<tr><td>온라인교육 및 자원봉사</td><td>112,527</td><td>296,438</td><td>468,997</td><td>771,624</td><td>1,068,739</td></tr>
<tr><td>전체 구직급여 지급액</td><td>2,512,199</td><td>2,719,887</td><td>2,602,164</td><td>2,866,641</td><td>3,096,873</td></tr>
<tr><td>온라인교육 및 자원봉사</td><td>151,817</td><td>387,484</td><td>683,119</td><td>1,070,768</td><td>1,491,948</td></tr>
</table>
-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온라인교육 12.2%, 자원봉사 8.7%로 재취업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을 개편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2</td><td rowspan="3">사업간 중복성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고용보험기금 -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유사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K-DT)’의 훈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훈련 수요가 감소하고 집행이 부진함
- 2024년 계획현액 3,130억 9,800만원 중 1,985억 7,200만원 집행(집행률 63.4%)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중요 산업분야(금속·동력 전기 및 전자 등)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임
※ ’21~’2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DT 주요 유사 직종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table>
<tr><th rowspan="2">훈련대상 직종</th><th colspan="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th><th colspan="4">K-DT</th></tr>
<tr><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td><td>593</td><td>501</td><td>212</td><td>89</td><td>3,396</td><td>4,446</td><td>4,838</td><td>5,139</td></tr>
<tr><td>디지털 컨버전스</td><td>12,081</td><td>7,879</td><td>4,677</td><td>2,633</td><td>140</td><td>2,284</td><td>6,136</td><td>7,728</td></tr>
<tr><td>빅데이터분석 및 UI 전문가</td><td>992</td><td>599</td><td>207</td><td>39</td><td>1,253</td><td>2,596</td><td>2,488</td><td>1,343</td></tr>
<tr><td>빅데이터 전문가</td><td>1,460</td><td>663</td><td>233</td><td>91</td><td>1,880</td><td>3,705</td><td>4,206</td><td>4,581</td></tr>
<tr><td>스마트웹&콘텐츠 개발</td><td>4,341</td><td>2,829</td><td>1,938</td><td>780</td><td>503</td><td>2,431</td><td>4,027</td><td>5,748</td></tr>
<tr><td>정보시스템구축 (개발, 운영)</td><td>1,514</td><td>707</td><td>404</td><td>214</td><td>462</td><td>1,432</td><td>3,092</td><td>3,968</td></tr>
<tr><td>클라우드 운영 관리</td><td>593</td><td>372</td><td>200</td><td>88</td><td>768</td><td>2,560</td><td>2,664</td><td>2,38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중복 직종 훈련 폐지 등 사업 간 중복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융자 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근로복지진흥기금 -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동 사업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으나, 특정 직종의 융자인원 및 융자 금액이 높게 나타남 - 2024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융자금액 104억 1,800만원 중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금액은 39억 7,400만원(38.1%)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원 2,232명 중 보험설계사 융자인원은 966명(43.3%)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융자사업 홍보와 집행관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아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구상채권 회수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근로복지진흥기금 -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고용노동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신용보증대위변제’는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위변제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위변제금의 회수율(구상채권 수납률)은 2024년 27.65%에 불과하였음
- 동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직업훈련생계비융자(고용보험기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보험기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들을 보증함
※ ’20~’24년도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징수결정액(A)</th><th>수납액(B)</th><th>수납률(B/A)</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
<tr><td>2020</td><td>15,451</td><td>6,908</td><td>44.71</td><td>8,543</td><td>3,361</td></tr>
<tr><td>2021</td><td>18,418</td><td>7,147</td><td>38.80</td><td>11,271</td><td>4,170</td></tr>
<tr><td>2022</td><td>27,711</td><td>7,756</td><td>27.99</td><td>19,955</td><td>6,532</td></tr>
<tr><td>2023</td><td>33,035</td><td>7,320</td><td>22.16</td><td>25,715</td><td>6,942</td></tr>
<tr><td>2024</td><td>29,555</td><td>8,173</td><td>27.65</td><td>21,382</td><td>7,46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일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임금채권보장기금 - 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기준」을 제정할 당시 대지급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비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여 경감 비율 상한을 50%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대지급금지급액 중 퇴직급여 비율이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이 필요함 -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에서 퇴직급여 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40% 정도의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 시 50%를 상한으로 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감소하는 임금체불의 위험 이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액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금액의 비중이 40%로 감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을 조정할 것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부(103건)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토지비축 제도 관련</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인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9)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실제 매입 실적이 미흡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와 수급조절용 토지를 구분하여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 비축은 '공공개발용 토지'에 편중

※ 유형별 공공토지비축 현황
(단위: 억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제1차('10~'19)
종합계획</th><th colspan="5">제2차('20~'29) 종합계획</th><th rowspan="2">합계</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 rowspan="2">공공
개발용</td><td>계획</td><td>23,458</td><td>690</td><td>3,584</td><td>5,135</td><td>2,704</td><td>2,785</td><td>38,356</td></tr>
<tr><td>실적</td><td>23,594</td><td>711</td><td>3,206</td><td>4,504</td><td>2,317</td><td>1,475</td><td>35,817</td></tr>
<tr><td rowspan="2">수급
조절용</td><td>계획</td><td>-</td><td>-</td><td>-</td><td>-</td><td>632</td><td>-</td><td>632</td></tr>
<tr><td>실적</td><td>-</td><td>-</td><td>-</td><td>-</td><td>632</td><td>-</td><td>632</td></tr>
</table>
○ 수급조절용 토지를 보유한 공공 토지은행은 시장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도시재생 · 신산업 유치 ·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회복력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인 비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주간통계의 폐지 등 주택가격통계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택 및 주거동향 조사(103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주간조사는 민간에 의한 주택통계와 별개로 조사·발표되고 있는데, 통계의 신속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택통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정보를 종합하여 표본주택 가격변동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정 기준이 모호하여 결과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진단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간조사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는 주간통계의 폐지 등 주택가격통계의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마이홈포털 사업의 동일 업체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마이홈포털 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 캠페인을 위하여 총 9,448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5,000만원 미만의 온라인 홍보(4,870만원) 및 오프라인 홍보(4,578만원)로 나누어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및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마이홈포털 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는 모두 ① <마이홈포털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자 확산 캠페인 계획(안)>(제1차관 내부보고, 2024. 3.)을 근거로 일괄 기획·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며, ② ○○○컴이라는 동일한 업체를 통해 집행되었고, ③ 두 건의 계약 기간과 대금지급일 역시 각각 20일 이내로 인접한 시기라는 점을 종합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각각 5,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집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절차의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마이홈포털 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 캠페인은 행사운영 및 영상자료 제작 등에 해당하므로 ‘일반용역비’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세목조정 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 집행기준을 준수할 것		
5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의 자체적인 측정역량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접수된 민원 중 층간소음 측정을 원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이관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측정기관이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측정기관의 다원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의 자체적인 측정역량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재정당국과의 인력 충원 관련 협의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1034-30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하자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하자신청 접수 건수 :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2024년 3,922건 -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은 전용부분 하자의 경우 최장 90일,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최장 120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각하·취하 사건을 제외하면 전용부분 하자 사건 1,105건 중 947건(85.7%), 공용부분 하자 사건 964건 중 765건(79.4%)이 법정 기한을 도과함 - 하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2020년 49.6%에서 2024년 78.9%로 상승하였고,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증가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7~9급)의 경우 12명 정원에 1명도 채용하지 않은 반면, 일반직과 위촉직은 정원을 초과 채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 기한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인력 충원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것 ○ 국토교통부는 면밀한 직무분석을 거쳐 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는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운영기관 일원화 및 탄력적 인력 운영 등 제도 정상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34-32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별 업무량 격차가 상당하고 위원회 사무국 직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위원회 사무국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사별 조정 접수건수(2024년)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서울지사 674건(1인당 74.9건), 한국부동산원 소속 인천지사 201건(1인당 40.2건), LH 소속 제주지사 15건(1인당 5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 사무국의 변호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4년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호,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집행률</th><th>다음년도</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h>현액(B)</th><th>(C)</th><th>(C/A)</th><th>(C/B)</th><th>이월액</th></tr>
<tr><td>2021</td><td>8,538</td><td>8,538</td><td>8,538</td><td>5,844</td><td>68.4</td><td>68.4</td><td>-</td><td>2,694</td></tr>
<tr><td>2022</td><td>7,134</td><td>7,134</td><td>7,134</td><td>5,433</td><td>76.2</td><td>76.2</td><td>-</td><td>1,701</td></tr>
<tr><td>2023</td><td>7,134</td><td>7,134</td><td>7,134</td><td>5,789</td><td>81.2</td><td>81.2</td><td>-</td><td>1,345</td></tr>
<tr><td>2024</td><td>7,326</td><td>7,326</td><td>7,326</td><td>6,408</td><td>87.5</td><td>87.5</td><td>-</td><td>91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상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1034-322)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3년 23.7%, 2024년 27.0%, 2025년 6월말 기준 19.3%로 저조함 ○ 동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와 「주택도시기금법」상 대상이 되는 서민들에 한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지원의 실제 수요가 낮으며, 임차인의 체감 효과 및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미비함에도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8월 이전까지 효과가 불분명한 온라인 홍보만 하고, 대상자에 대한 직접 홍보는 하지 않았음 ○ 성과지표의 경우 보증가입건수인 26.8만호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건수는 3.1만호로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집행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 홍보 및 절차 간소화 방안, 사업대상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부합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부담하는 구조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성과지표를 보증가입건수에서 실제 지원건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보증료 환불
대상자에게
지원한 보증료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1034-32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사업수혜자가 이후 보증취소·해지 등으로 보증료를 환불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수혜자의 보증보험 유지 및 환불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면서 보증금 가입에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국토교통부는 신청자가 보증료 지원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보증료를 지원하고, 이후 보증취소·환불 등 보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환불건수 및 금액
(단위: 건)
<table>
<tr><th></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합계</th></tr>
<tr><td>환불건수</td><td>29,457</td><td>14,394</td><td>17,822</td><td>61,673</td></tr>
<tr><td>환불금액</td><td>4억 8,600만원</td><td>8억 3,900만원</td><td>11억 9,100만원</td><td>25억 1,600만원</td></tr>
</table>
주)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로 한정한 통계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보증료 지원 이후 현황에 대한 조속한 파악을 통해 보증료를 환불받은 사업수혜자로부터 보증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이의신청 소요일수 관련 통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1034-32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은 최장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20일 이내에 각각 처리되어야 하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의 처리기일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일수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할 것		
11	**성과지표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1034-32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또는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환류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전세사기피해 관련 연구용역의 비목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1034-32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전세사기피해 관련 연구용역은 시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비목인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함 - 그러나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되고 있어 통제, 공개,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 관련 연구용역의 비목을 일반연구비(260-01목)에서 정책연구비(260-02목)로 변경할 것		
13	**정비사업 컨설팅 성과를 지속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1036-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여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감독을 하는 ‘정비사업 현장조사’의 성과가 연간 32건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신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비사업 컨설팅’을 2024년에 도입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착공·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실제 공급까지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컨설팅의 성과가 실제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있는 일반철도시설을 개량하여 국민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사업의 집행 및 철도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업무에 대해 철도시설의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출연금 예산의 53.7%만을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집행하고 46.3%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 집행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시설개량을 담당해야 할 철도시설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간 업무 구분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기설비개량, 구조물개량, 승강장안전시설, 역시설개량 내역사업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운행선,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수행 중인 업무를 분석하여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영역을 재설정하는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혼용 집행하는 방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도사고조사(2731-307)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철도사고조사’ 사업은 과학적·체계적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 능력을 구축하고 철도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사업임 ○ 그런데 철도사고조사 사업의 임차료 예산은 차량 임차를 위한 예산인데, 기본경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무실 임차 예산으로 일부 집행되었음 - 사무실 임차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7018-257) 사업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차량 임차에 사용되어야 할 철도사고조사 예산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 이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긴급출동차량 임차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이 부족하여 나타나게 된 문제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재정법」상 이용이 필요한 사안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용 집행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경비와 사업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편성 시부터 명확하게 물량, 단가를 계상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철도피해 복구지원 사업 별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도피해복구지원(2731-31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철도피해복구지원’ 사업은 재해로 발생한 철도시설물의 피해복구를 통한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6억 2,400만원 중 74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 사업은 별도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피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체전용 후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 형태로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에도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76억 2,400만원을 전용하였음 ○ 그런데 과거와 같은 집중호우 수준을 벗어난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철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증가에 따라 철도피해 등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철도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의 안정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AI 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 미흡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도치안관리(2731-341)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AI 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은 철도지역 치안강화를 위해 역사 내 지능형 영상감시장치(AI CCTV) 및 전용회선망 등을 구축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이 사업은 2024년 AI CCTV 및 전용망 회선 구축을 위해 예산현액 85억 200만원 중 7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IT운영센터 화재(’24. 7. 6.)와 장마기간 공사 곤란 등으로 인한 철도 방범 통신망 공사 지연(4개월) 등에 기인하였음 ○ 그러나, IT운영센터 화재는 대처할 수 없었던 재해라고 하더라도 장마기간 공사 곤란 등의 사유는 공사 계획 수립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용회선 구축시 철도운영기관과의 협의 후 공사 승인까지도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 점은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AI 영상감시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 추진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속한 운영대책 마련 및 운영지연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3년말 준공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지연, 입주 과정에서 하자 발생에 따른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지연되었고 2025년 6월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물류기업 임대서비스는 운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물류센터 준공 이후 1년 6개월 이상 여러 중소 물류기업들이 저렴하게 임대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당초 사업 목적의 달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운영 개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후속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경우 준공 전이라도 운영방안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영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속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부적절한 재이월 문제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은 2024년 새로이 교부받은 9억원을 이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년 교부받았던 보조금 중 15억 4,900만원도 재이월하였음 - 2023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7억 4,000만원 중 400만원을 실집행하고 나머지 27억 3,6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 ○ 이는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인 계약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지연된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재이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재이월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에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연에 따른 실집행 저조 및 기획연구 이후 연구개발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교통연구기획(R&D)(415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직전 3년과 달리 1분기에 과제를 공고하지 않았고, 2분기에는 전체 과제 25개 중 2개의 과제만을 공고(8%)하였으며, 나머지 23개의 과제(92%)는 4분기에 공고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5개 과제 중 23개의 과제가 연말인 12월에 이르러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고, 연구기간도 지연된 상황임 ○ 대부분의 과제 선정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과제별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실제 집행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약 27.1%에 불과하고, 25개 과제 중 18개 과제의 실집행률이 30% 이하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1, 2분기 이내에 과제를 공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R&D)(4156-32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현황 신속조사 및 관리·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 디지털 안전 정보 구축 자동화 및 경량화, 무인기 기반 위험 탐지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 동 사업의 당초 적용 계획은 기술개발 전체를 완료하고, 건축물 1,000동에 개발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예산 삭감으로 디지털 안전 정보 표준화, 안전점검 자동화, 정책·제도 등의 연구 개발 범위를 축소하고, 실증 규모를 건축물 250동으로 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4년 R&D 예산 홀대 기조 속 삭감된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R&D) 사업의 계속적 추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R&D)(4158-31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자 제로(ZERO)화를 위하여 어린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기술, 한국형 친환경 통학버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임 ○ 2024년 R&D 예산 감액으로 전기차 실차 제작은 중단되었고, R&D 사업 역시 2024년에 종료되어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외 최초 계획했던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제작 및 시범 운영이 실행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차체 개발 및 시범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저상 좌석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관리와 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4158-31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중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좌석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R&D사업임 - 2024년 예산에 2차년도 소요예산 61억 5,000만원 대비 축소된 19억 8,600만원만 반영되어 총 연구개발비를 250억원에서 193억 5,000만원으로 감액(△56억 5,000만원) 변경함 * 2024년 정부예산안 8억 8,600만원 → 국회 19억 8,600만원으로 일부 증액 - 이에 따라 2026년말 사업완료를 위하여 시범노선 운영이 생략된 채 진행 중이며, 일정 지연으로 양산기술 개발까지의 과정을 단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2027년부터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2026년 저상 좌석버스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광역노선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시범운영이라는 검증 과정이 생략된 만큼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소전기차로 개발 예정이나 수소충전인프라 부족,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전기차 선호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수요와 공급 매칭 준비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 없이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소전기차의 가격, 전기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 개편 및 전기차 양산체제 준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저상 좌석버스 의무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지하시설물 전산화 DB의 보완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4270-50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9개 지하시설물(상수, 하수, 광역상수, 전력, 가스, LPG, 통신, 열수송, 송유) DB의 합계 오류율 산출 시, 2024년 신규 분석 기준 4종에 따른 오류 여부는 반영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임 * (종전) 6종(관경, 관재질, 심도, 연장, 건물중첩, 도로미중첩) → (2024년) 10종(탐사구분, 설치연도, 단독관, 이격관 등 4종 추가) ○ 신규 오류 분석 기준 중 단독관·이격관* 오류는 실제 시설물의 연결 불량 또는 전산정보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고, 종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단독관·이격관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단독관·이격관 오류를 포함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합계 오류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단독관 오류 17만 5,000여 건 중 하수·전력·통신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의미한 측면이 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는 굴착공사 안정성 판단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단독관·이격관 오류 정보가 공식 오류율에 반영되지 않아 품질관리 측면에서 한계 존재 * 단독관: 타 관로와 연결성 없이 일정거리(0.05m 이상)가 이격되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관로 * 이격관: 관로의 양 끝점 중 한점이 타 관로와 일정 거리(0.05m < 거리 < 0.2m)의 범위로 이격된 경우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품질검사 시 단독관·이격관 오류 정보를 합계 오류율 산출에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DB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다각도로 보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4306-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은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임
- 현장근로일수, 자격, 교육 등을 반영한 종합경력에 따라, 초·중·고·특 등급을 부여
❍ 사업 초기 저조했던 집행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상승하고 있어,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th><th>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집행률</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h>이월액</th><th>현액(B)</th><th>(C)</th><th>(C/A)</th><th>(C/B)</th></tr>
<tr><td>2022</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456</td><td>45.6</td><td>45.6</td></tr>
<tr><td>2023</td><td>1,000</td><td>1,000</td><td>459</td><td>1,459</td><td>1,179</td><td>117.9</td><td>80.8</td></tr>
<tr><td>2024</td><td>250</td><td>250</td><td>188.2</td><td>438.2</td><td>431.2</td><td>172.5</td><td>98.4</td></tr>
<tr><td>2025.6.</td><td>400</td><td>400</td><td>-</td><td>400</td><td>390</td><td>97.5</td><td>97.5</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시행 초기에 대비하여 만족도와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26</td><td rowspan="2">방치되고 있는 공동(空洞)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방안 마련 및 지반탐사장비 조기 확충·적정 인력 충원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 (4313-301)</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토안전관리원이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업 중 ‘지반침하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 이후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공동의 약 46%가 복구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의 미복구 공동은 대부분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복구해야 하는 긴급등급 또는 우선등급에 해당함

※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2020~2024년)
(단위: 개소, % / 2025년 1분기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합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 colspan="2">발견 공동</td><td>793</td><td>83</td><td>120</td><td>146</td><td>178</td><td>266</td></tr>
<tr><td rowspan="2">사후
조치</td><td>복구</td><td>428</td><td>35</td><td>31</td><td>65</td><td>137</td><td>160</td></tr>
<tr><td>복구율</td><td>54.0</td><td>42.2</td><td>25.8</td><td>44.5</td><td>77.0</td><td>60.1</td></tr>
</table>
❍ 2029년까지 지반탐사장비 총 30대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 지원 신청 증가 추세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계획을 고려하면 지반탐사장비의 조기 도입 필요성이 크고, 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경우 2026년까지 47명 수준으로 증원 계획이나, 장비 운용 방식(1대: 3인 1조 운용)에 따른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외주 활용 규모·방식도 불확실함

※ 지반탐사 지원 인력 및 장비 확충 계획
(단위:명, 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5년(상)</th><th>2025년(하)</th><th>2026년</th><th>2027년</th><th>2028년</th><th>2029년</th></tr>
<tr><td colspan="2">지반탐사 인력</td><td>13</td><td>31</td><td>47</td><td colspan="3">증원 계획</td></tr>
<tr><td rowspan="4">지반탐사
장비</td><td>차도용</td><td>4</td><td>6</td><td>6</td><td>8</td><td>9</td><td>10</td></tr>
<tr><td>협소지역용</td><td>3</td><td>4</td><td>6</td><td>8</td><td>9</td><td>10</td></tr>
<tr><td>확인조사용</td><td>3</td><td>3</td><td>6</td><td>8</td><td>9</td><td>10</td></tr>
<tr><td>합 계</td><td>10</td><td>13</td><td>18</td><td>24</td><td>27</td><td>30</td></tr>
</table></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방치되고 있는 공동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도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의 공동등급별 복구기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국토교통부 차원의 공동 복구 지원·점검·관리를 위한 공동 복구 촉진 로드맵과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에 따른 복구기한 준수 여부의 정기 점검 및 미이행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국가 발주·관할 공사구간에 대해 즉시 복구 계정 신설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책임감리와 연계한 현장 즉시 복구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사고·지방자치단체 신청 급증을 고려해 지반탐사장비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간 지반탐사 목표를 확대하고, 연도별 운용 장비 수 및 인력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반탐사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 및 연례적·반복적 이월 유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사업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최근 5년 동안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68.5%(54건 중 37건)가 이월 집행되었으며, 회계연도 말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월된 예산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부분을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회계연도 말 또는 다음 회계연도 계약 체결 현황(2020~2024년)
<table>
<tr><th>구분</th><th>회계연도 말(12월) 계약 체결</th><th>다음 회계연도 계약 체결</th></tr>
<tr><td>2020년</td><td>-</td><td>-</td></tr>
<tr><td>2021년</td><td>2건</td><td>1건</td></tr>
<tr><td>2022년</td><td>-</td><td>1건</td></tr>
<tr><td>2023년</td><td>3건</td><td>1건</td></tr>
<tr><td>2024년</td><td>2건</td><td>1건</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주제 선정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연구용역 발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례적·반복적인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법률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
획
수립 · 통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사업의 정책연구비 중 9,500만원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의 수립에 집행되었음
❍ 국가기본계획 외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연도별 집행계획, 시 ·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시 ·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립해야 하는 시 · 군 · 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있음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법정 의무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 사례가 없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도 일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2020년～2025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 통보 현황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국토교통부</td><td colspan="5">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td><td>제2차
국가기본계획</td></tr>
<tr><td>관계 중앙행정기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 · 도(17개)</td><td>8개</td><td>11개</td><td>16개</td><td>17개</td><td>17개</td><td>16개</td></tr>
<tr><td>시 · 군 · 구(226개)</td><td>47개</td><td>77개</td><td>161개</td><td>207개</td><td>220개</td><td>216개</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준수하여, 각 단계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연계되어 내실 있게 수립 · 시행 · 통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독려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은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를 통하여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운행기록점검센터를 전국에 운영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 21억원 중 20억 1,700만원이 집행됨 * 운행기록점검센터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점검 및 운행기록 제출을 지원. 매년 한시적 운영 ○ 운행기록 제출률(2025. 5. 기준)이 노선버스 100%, 전세버스 90% 이상, 택시 70% 이상인데 비해 화물자동차는 50% 미만으로 저조함 - 2024년 10월부터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2025년 5월 제출률(41.2%)이 전년도말 제출률(46.8%)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운행기록점검센터의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2024.12월~2025.5월까지 약 6개월 간)에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의무제출제도의 조기 정착 노력이 부족하였음. - 자동제출DTG 장착률 제고가 제출률 향상에 직결되나, 화물자동차의 자동제출DTG 장착률은 36.2%(개인화물자동차는 6.7%)로 저조함. * 전세버스·택시의 운행기록 제출률은 자동제출DTG 장착률과 동일 수준 * 일반형DTG: 운행기록장치의 데이터를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송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에 업로드 필요 * 자동제출DTG: 보급형DTG단말기와 모바일앱(APP)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단말기의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제출(이동통신망을 이용하므로 통신요금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를 위하여 운행기록점검센터 운영 및 자동제출DTG 보급을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개선안의 이행률 제고 및 사업추진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취약 구간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이행 결과를 매년 점검해 나가는 사업임 - 지난 17년간(2008~2024) 6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 4개 지자체에 대해 총 1,451건의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지자체의 개선이행률은 점검 3년차에 약 40%, 10년차에도 60%대에 그치고 있음. ○ 지자체의 개선이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지방 재정 부족과 이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개선권고사항의 실효성이 낮아지기 때문임 -「교통안전법」에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국비 지원은 없음. ○ 지금과 같은 사업 수행은, 개선율은 낮은데 비해 수년 간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개선안의 이행률 향상을 위하여 개선권고 후 초기 단계에 국가 재정지원을 검토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중기 개선안 구분 후 조기 완료를 유도하며, 행정력 소모 최소화를 위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합리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 상용화(4633-31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은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위탁 등을 위한 사업임 ○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심사 인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사업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아 심층 분석을 요구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이버보안 인증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자동차 보안지원 및 대응체계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자동차안전도 강화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동차안전도강화’ 사업은 자동차안전도 평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등을 위한 사업임 ○ 2024년에 제작결함망 및 중재전산망의 대구 클라우드센터 이전 사업비로 당초 편성된 유지보수 예산 외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본래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회 예산 심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예산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엄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5635-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용산어린이정원 등의 임시개방을 위한 위해성 저감조치 등 부지정비,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벙커부지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와 위탁 수수료 등으로 2024년도 예산 417억 1,900만원 중 40억 2,100만원을 불용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계부처 TF(국방부, 외교부 등) 회의를 통해 2023년부터 미군 측과 벙커부지 반환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반환대상 용산기지 면적 243만㎡ 중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76.5만㎡로 약 31.5%에 불과한데, 용산기지 부지반환이 지연될 경우 용산공원 조성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용산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완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적재조사사업(5735-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의 한시 사업이나, 2025년 기준 실적은 전체 계획 대비 33%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예산 감액으로 잔여 사업 기간 내 완료 가능성이 불투명함 - 지적재조사 사업 지연 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중복측량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디지털 지적 구축은 일제강점기 시절 제작된 지적도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 확보, 사업 속도 제고, 경제적 편익 재산정 방안 및 전 국토의 디지털 지적 구축 계획 등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5회계연도
연속·반복된
이월에 대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기본도 제작(58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에서 5회계연도 연속하여 이월이 반복되었음
- 이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조) 및 세출예산의 이월 제한(제48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다한 이월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2019회계연도) 국토교통부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기에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 2020~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C)
[실집행액]</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0</td><td>66,984</td><td>71,984</td><td>5,201</td><td>△1,105</td><td>76,080</td><td>70,019</td><td>97.3</td><td>92.0</td><td>5,683</td><td>378</td></tr>
<tr><td>2021</td><td>93,053</td><td>93,053</td><td>5,683</td><td>△427</td><td>98,309</td><td>86,393</td><td>92.8</td><td>87.9</td><td>10,503</td><td>1,413</td></tr>
<tr><td>2022</td><td>95,219</td><td>93,231</td><td>10,503</td><td>-</td><td>103,734</td><td>88,903</td><td>95.4</td><td>85.7</td><td>6,592</td><td>8,239</td></tr>
<tr><td>2023</td><td>117,629</td><td>117,629</td><td>6,592</td><td>△375</td><td>123,846</td><td>85,305</td><td>72.5</td><td>68.9</td><td>23,735</td><td>14,805</td></tr>
<tr><td>2024</td><td>107,510</td><td>107,510</td><td>23,735</td><td>±104</td><td>131,245</td><td>110,086</td><td>102.4</td><td>83.9</td><td>14,578</td><td>6,58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국회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적기 집행 등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건축 설계 도서, 공사현장 등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등 건축구조의 부실 설계 및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임 - 2024년도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중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진 건수가 건축구조는 3,125건(4.19%), 건축자재는 433건(0.48%)에 불과하여 전체 대상 건수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이는 구조설계 부실 및 불량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축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하고, 부실설계·불량자재 사용 예방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등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사건 각하율이 55.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24년의 경우 각하율이 70.8%로 2021년 48.4%에 비해 각하율이 급증하였음. 제도에 대한 신청인의 이해 부족,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미비, 피신청인 불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정의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실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사건 현황(건)</th><th colspan="4">완료(건)</th><th rowspan="2">각하 등
비율
(B / A)</th></tr>
<tr><th>소계(A)</th><th>당해
접수</th><th>전년도
이월</th><th>소계</th><th>성립</th><th>불성립</th><th>취하,
각하
등(B)</th></tr>
<tr><td>2021</td><td>339</td><td>292</td><td>47</td><td>290</td><td>81</td><td>45</td><td>164</td><td>48.4%</td></tr>
<tr><td>2022</td><td>483</td><td>434</td><td>49</td><td>307</td><td>55</td><td>19</td><td>233</td><td>48.2%</td></tr>
<tr><td>2023</td><td>711</td><td>535</td><td>176</td><td>684</td><td>265</td><td>35</td><td>384</td><td>54.0%</td></tr>
<tr><td>2024</td><td>411</td><td>385</td><td>26</td><td>391</td><td>79</td><td>21</td><td>291</td><td>70.8%</td></tr>
<tr><td>총계</td><td>1,944</td><td>1,646</td><td>298</td><td>1,672</td><td>480</td><td>120</td><td>1,072</td><td>55.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자료 요건 안내를 개선하며, 신청자가 유사 사건을 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더라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당초 공사비용 지원 기간은「건축물관리법」제29조(현행 제29조의2) 및 부칙에 따라 2022년 말까지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법률 개정(2023. 4. 18.)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다시 연장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수행하면서 2024년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1차로 교부한 뒤,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남은 잔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체단체에도 2차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교부하였음. 그 결과, 2024년도 실집행률은 27.4%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2025년도 말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완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투자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교통 혁신펀드(7036-307)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임 -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에서 담당하나 정책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의사결정 및 운용을 담당함 ○ 국토교통 혁신펀드 중 제2호 펀드는 2025년 7월 기준 투자기간(4년)의 약 90%가 경과하였음에도 전체 조성액(176억원) 중 90억원(약 56.8%) 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잉여금이 장기간 방치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조성된 지 3년이 지난 제2호 펀드의 미투자 금액을 조속히 해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반복적으로 과도한 예산의 이·전용 사용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고속도로건설(1532), 일반국도건설(163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고속도로건설’ 및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은 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건설하고 적기에 개통하여 국가의 간선교통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액이 5,286억원으로, 이는 단위사업 전체 예산액의 30.3%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준임 - 특히,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타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음 ○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 또한 세부사업 간 이·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체 이·전용 규모는 2,752억원으로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 예산액의 18.1%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건설,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전용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단계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공공요금 예산의 과도한 전용 반복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국도유지운영(1732-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도유지운영’ 사업은 일반국도 도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로보수원 인건비, 국토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편성·집행하는 사업임 ○ 국도유지운영사업에 편성된 공공요금(220-02목) 예산은 일반국도 구간의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2024년 39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용을 통해 146억 7,800만원을 증액(예산액 대비 37.2%)하여 533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또한 2025년 예산 역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바, 공공요금 예산 부족과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 공공요금은 국도관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용은 불가피한데, 이·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예산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수밖에 없어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도유지운영 사업 공공요금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과적단속 사업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과적단속운영(1732-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과적단속운영’ 사업은 일반국도 관리를 위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인건비, 연금지급금, 단속장비 유지관리비용 등을 지출하는 사업임 ○ 그런데 과적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차 또는 통과를 주로 명령하여 과적상태의 운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적 단속검문소에 분리운송을 위한 공간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도로와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과적 단속검문소 773개소 중 분리운송 조치가 가능한 과적 단속검문소는 37개에 불과함(2023년 3월말 기준) ○ 회차 및 통과 명령으로 인해 과적상태인 화물차의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과적에 따른 도로파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과적 단속검문소의 분리운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분리운송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회차 및 통과명령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병목지점 · 위험 도로 개선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로병목지점개선(1734-461), 위험도로개선(1740-46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로병목지점개선’ 사업은 도로의 구조로 인해 병목이 발생하는 교차로 개선 및 구간 확장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위험도로개선’ 사업은 도로폭 협소,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임 ○ 2024년 두 사업 모두 대체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험도로개선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3.5%, 본예산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은 32.5%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 -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집행률 : 78.3% / 위험도로개선 사업 : 53.5%(예산현액 대비) ○ 도로병목지점개선 및 위험도로개선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중도 취소 물량(60건)의 45%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포함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도로병목지점개선, 위험도로개선 사업의 집행실적, 이월 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지연 구간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로 집행률을 제고할 것 ○ 국토교통부는 도로병목지점개선, 위험도로개선 사업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의 연계·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중도 취소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도로운영지원(183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도로운영지원’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사업임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통행료 동결로 인해 협약통행료*와 징수통행료**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됨 * 국토교통부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정한 통행료를 의미 **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통행료를 의미 ○ 그런데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금은 2022년 253억 9,300만원에서 2023년 474억 4,100만원, 2024년 928억 2,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6년부터 징수통행료는 동결된 상황임 ○ 고속도로건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SOC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자본을 공공부문에 활용하기 위함이나, 협약 · 징수통행료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당초 민자사업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손실보전액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위험과 수익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협약 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손실보전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방지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하는 민자철도(BTO, BTL 등)의 운영비용,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국토교통부는 2024년 민간사업자((주)SG레일)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GTX-A노선 재정구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손실금 516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음 - 특히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GTX-A 노선의 완전개통이 지연되면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적어도 2027년말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실시협약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원칙적으로 SG레일 측에 1,185억 2,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이보다 약 1,020억원 부족한 16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민간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액을 감액 지급할 경우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 한편, 삼성역 개통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삼성역 무정차 개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SRT와 GTX가 선로를 공용하는 공동선로구간이어서 GTX-A의 배차 간격(20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액을 편성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이자 및 법적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것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개통 추진시 수서~동탄 구간의 공동선로로 인한 GTX-A의 배차 간격 문제가 우려되므로 수서발 SRT 감축과 동탄발 SRT 신설을 통해 공동선로 상의 여유시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연계노선 개통 지연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 패소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운영지원(27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신분당선이 연결철도망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연손해금 55억원을 포함한 19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패소하여 2022년에도 366억원을 지급한 바 있음 - ㈜신분당선 측은 철도망사업 지연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또한 상기 사건 외에도 연계노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 3건(청구액 17억원)이 1심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청구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며, 향후 소송에서도 정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분당선 민간사업자가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47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신분당선의 무임수송비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실시협약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채택하면서 개통 초기 5년에 한해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6년차 이후의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음 - 당초 예상수입 책정 시와 달리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비용분담방식이 협의되지 않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연계노선 개통 지연,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보전 등 사유로 상당한 규모의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을 위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GTX-B 노선의 용지보상 및 인허가의 조속한 협의 및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2833-31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역(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마석역(경기도 남양주시)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임 ○ 교통 수요가 높은 노선인 만큼 적기 개통이 시급하나, 수직구 위치 등 주민민원에 따른 지연, 용역비 지급방식 변경(출연금 → 건설보조금) 등으로 2024년도 사업출연금 예산액(36억 4,6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의 용지보상 및 지자체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완료 후 현장작업에 착수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48	GTX-C 노선의 원활한 개통을 위한 조속한 착공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2833-31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GTX-C노선은 덕정역(경기도 양주시)에서 수원역(경기도 수원시)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총 86.46km를 운행하는 노선임 ○ 그런데 최근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참여사(15개 건설사) 간 시공계약이 어려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중임 * 건설물가 상승률(건설 공사비 지수 기준) (2020~2024) 30.0% - 2023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이 가능함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계약과 자금조달을 완료하지 못해 2025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사업시행자는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경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시공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높은 GTX-C 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와의 공사비 협의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및 비효율적 운영 방지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화된 차량의 적기교체를 통한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서울시 25%, 그 외 30%)를 국비로 지급하는 사업임 ○ 그런데 서울시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의 경우 신규 전동차의 납품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1차부터 9차 교체사업까지 총 2,104칸의 제작이 발주되었고 그 중 1,206칸이 납품되었으며 226칸은 제작 중, 672칸은 설계 중에 있음 - 특히 6차 교체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는 2025년 6월까지 5호선과 8호선 전동차 298칸을 모두 납품했어야 하나, 3년 8개월간 1칸도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선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제작 진행도, 납기지연과 무관하게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국비를 교부하는 있는 문제가 있었음 - 국토교통부는 7차 교체사업(’22~’25년)부터 국비 교부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1차년도에 10%, 2차년도에 20%, 3차년도에 30%, 4차년도에 40%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교부하고 있는데, 납품된 차량이 없어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교부금을 제작 완료 시까지 보유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에서 제작업체의 업무 진행도와 납기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를 교부하는 등 국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전동차 제작을 위해 사용한 선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는 등 참여 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울릉도 소형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 연장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3538-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울릉공항은 당초 경비행장을 전제로 설계(50석 이하 항공기에 맞춰 설계)된 점, 울릉도 자체의 환경적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 설계된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울릉도 소형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 길이 등을 고려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5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및 접근철도 건설사업 일정의 차질없는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3538-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파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내역사업인 접근철도 건설사업도 실집행률이 0.1%에 불과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 협의 지연(2023.9.~2024.7, 11개월)으로 인해 접근철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2024년 9월 접근철도 기본계획 고시)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역사업인 접근철도 건설사업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수의계약 입찰 안내 · 답변 미흡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3538-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2024.11.) 중 ‘공사기간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을 제공함 - (질의요약) 적정공기를 반영한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상기 사유로 변경된 공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개항시기의 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요약)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검토결과 대로 제출가능하며, 이에 대한 적격심의 의결기준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28조 및 제31조를 따를 예정 ○ 해당 답변은 수의계약 참여사로 하여금 입찰조건(84개월)을 위반하는 108개월 공사기간 기본설계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최소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2025년도 예산 집행의 차질(1,399억원 불용, 136억원 이월)이라는 중대한 행정 손실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해당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부실한 사전 검토와 잘못된 안내·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공항소음 대책사업 관련 매수 토지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소음대책(36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데 든 총비용이 312억원 이상인데 비해 매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 (토지) 보유한 전체 토지 46,548㎡ 중 1%에 미달하는 토지 238㎡ 이 2024년 8월까지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운영이 종료 - (건물) 전체 공동주택 19개소 중 7개소가 2023년 12월까지 소음저감기술 연구개발 테스트에 활용, 현재는 운영이 종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한 부동산이 유휴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매수가 완료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부지를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항공안전성과지표 설정 시 항공장애 현황 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 -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3636-34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안전데이터를 분석해 매년 안전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임
❍ ‘항공안전 의무보고 자료’ 중 안전성과지표 분석 결과, 조류충돌이 항공안전장애 발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항공안전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류충돌 감축에 대한 안전성과지표 등에서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조류충돌이 2024년 기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만 운항당 조류충돌 발생건수는 2020년 29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2.6배 증가하였음
※ 전체 항공안전장애 상위 5개 발생유형
<table>
<tr><th rowspan="2">순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
<tr><th>발생유형
(비중)</th><th>1만운항당
발생률(건)</th><th>발생유형
(비중)</th><th>1만운항당
발생률(건)</th><th>발생유형
(비중)</th><th>1만운항당
발생률(건)</th></tr>
<tr><td>1위</td><td>조류충돌(44%)</td><td>9.6(461건)</td><td>조류충돌(44%)</td><td>9.4(635건)</td><td>조류충돌(48%)</td><td>10.3(779건)</td></tr>
<tr><td>2위</td><td>고장결함손상
(26%)</td><td>5.7(272건)</td><td>고장결함손상
(22%)</td><td>4.6(313건)</td><td>고장결함손상
(19%)</td><td>4.0(306건)</td></tr>
<tr><td>3위</td><td>기타(13%)</td><td>2.9(140건)</td><td>기타(15%)</td><td>3.2(213건)</td><td>기타(17%)</td><td>3.6(276건)</td></tr>
<tr><td>4위</td><td>공중근접경보
(6%)</td><td>1.4(67건)</td><td>공중근접경보
(9%)</td><td>1.9(125건)</td><td>공중근접경보
(6%)</td><td>1.3(98건)</td></tr>
<tr><td>5위</td><td>항행오류(2%)</td><td>0.5(23건)</td><td>항행오류(2%)</td><td>0.4(28건)</td><td>항행오류(2%)</td><td>0.5(40건)</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수집·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가 실제로 안전성과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안전장애 현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도심항공교통활성화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3637-33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실증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용, 공개 비행시연, 민관협의체(UAM팀코리아) 운영,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정부는 당초 2025년 상용화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운용기체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 세계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사용서비스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수도권 도심지의 실증시설 중 계양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택개발지구에 임시로 구축한 것으로 택지개발 일정에 따라 2025년 말에 철거될 예정이고, 드론센터(인천) 실증시설 또한 드론비행시험장 인근 부지에 설치하여 최근 드론시험 수요 증가로 실증시설 연장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대비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UAM 산업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주도 민관협의체(UAM팀코리아) 운영을 확대하며, UAM 실증시설 구축 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지자체 분담금 미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R&D) (4159-33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R&D)’ 사업은 도시철도 회생전력 등 유휴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개발하고 수소모빌리티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 2022년 지방비 미납에 따른 1차 특별평가에서 2023년 10월까지 지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를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부산시는 2023년 10월까지도 지방비를 납부하지 않음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지자체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2024년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 미납에 대한 조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택시감차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택시산업지원(4931-31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택시감차보상’은 자율감차 신청 운송사업자에 보상금을 지급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사업임 ○ <제4차 택시총량(2020~2024)>에 따른 5년간 감차실적은 전국 초과공급 44,657대 중 4,905대(감차 달성률 11.0%)에 불과함 - 특·광역시(부산 제외) 대부분 감차사업 미시행으로 감차 필요 지역에서 감차 실적이 낮아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감차를 지속 시행하는 지자체도(강원도 제외) 감차 달성률은 모두 30% 미만임 - 5년간 국비 총 예산액 227억 2,200만원 중 22.9%(51억 9,600만원)가 불용됨 ○ 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10년 이상 고정되어, 택시 양수 수요가 있는 대도시에서 감차 유인이 미흡하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단가의 상대적 하락으로 운송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함 * 1,300만원 중 30%(390만원)를 국가가, 70%(910만원)를 지자체가 부담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새로운 감차보상 제도를 포함한 감차보상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의 감차 계획 이행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며, 국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증차운행을 지원하며,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고,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장애인콜택시
탑승 대기시간
축소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중증보행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임(보조율 서울 40%, 그 외 50%)
※ 2024년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내역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th><th>2025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td><td>60,350</td><td>60,350</td><td>-</td><td>-</td><td>60,350</td><td>60,350</td><td>-</td><td>-</td><td>64,857</td></tr>
</table>
❍ 시행령 개정(2023.7월 시행)을 통해 이른바 “장애인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광역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탑승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범위가 광역권 장거리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의 도심 내 탑승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저상버스도입보조’는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보조율 서울 40%, 그 외 50%). 2024년도 예산액 1,674억 9,500만원 중 19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한 후 1,48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내역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세사업 명</th><th colspan="8">2024년</th><th>2025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저상버스도입보조</td><td>167,495</td><td>167,495</td><td>-</td><td>△19,400</td><td>148,095</td><td>148,085</td><td>-</td><td>10</td><td>160,290</td></tr>
</table>
❍ 2024년 지원 실적은 계획물량 3,800대 보다 461대가 줄어든 3,339대분을 지원함
- 주요 이유는 매칭지방비 부족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조금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수소버스 지원물량은 늘리고 지역 수요가 높은 전기버스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1,000대를 감축하여, 지자체의 저상버스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사업 중 버스 편성물량(2022-2025)
<table>
<tr><th>사업명</th><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 rowspan="3">무공해차 보급
(1633-311)</td><td>전기승합</td><td>2,000대</td><td>3,000대</td><td>2,000대</td><td>1,710대</td></tr>
<tr><td>수소저상승합</td><td>300대</td><td>400대</td><td>910대</td><td>1,190대</td></tr>
<tr><td>수소고상승합</td><td>40대</td><td>300대</td><td>810대</td><td>810대</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저상버스 차종별(수소·전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차종별 선호도·인프라 현황 분석 후 맞춤형 물량 배분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계획과 연계 등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정밀화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예산과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예산의 연계 편성을 제도화하고, 수요 대비 보조금 부족 시 예비비 또는 추경 반영 등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은 고속·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를 휠체어탑승버스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보조율 서울 40%, 그 외 50%)
- 2024년도 예산 3억 5,000만원 중 전세버스 4대에 대해서만 차량개조 비용 7,800만원(22.3%)이 집행되고, 2억 7,200만원이 불용됨
※ 2024년도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내역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8">2024년</th><th>2025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td><td>350</td><td>350</td><td>-</td><td>-</td><td>350</td><td>78</td><td>-</td><td>272</td><td>350</td></tr>
</table>
○ 시외·고속버스 업체의 공모 참여 부족 및 전세버스 지원을 위한 매칭지방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5년도 예산 3억 5,000만원도 불용 반복이 우려됨
○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휠체어 등 보조이동기구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임
- 지난 2월 광주지역 장애인분들 고속버스 회사 상대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의 불용 방지를 위하여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의무화 등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수도권 주택임차대여금 및 지방사택지원금 사업 예산의 과다계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공항공사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사업을, 순환근무로 인하여 주거이전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차대여금 및 지방사택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4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25%, 수도권 주택임차대여금 및 지방사택 지원금 사업은 집행률은 약 32%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됨 1)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55.6%(2021) → 37.5%(2022) → 37.5%(2023) → 25%(2024) 2) 수도권 주택임차대여금 및 지방사택 지원금 사업: 57.8%(2021) → 24.7%(2022) → 34.1%(2023) → 32.1%(2024)		
		시정요구사항	○ 한국공항공사는 양 사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한국도로공사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적극 대응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도로공사 총괄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분석해 보면 총 41조 5,025억원 중 유동부채가 6조 3,383억원, 비유동부채가 35조 1,642억원이며, 비유동부채 중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로 7,92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란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중 12개월 이내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는 소송가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하급심 패소 시 패소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함 ○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당직보조원 등과 관련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및 이에 기반한 임금청구소송으로, 2017년에 313억원으로 처음 계상된 이후 2019년에 3,205억원으로 상승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임 ○ 또한 총 163건의 소송 중 153건(93.9%)이 1심 및 2심 단계로서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로 지속적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ITS 유지관리 등 외부 용역업체 활용을 유지하는 영역에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무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분쟁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큰 규모의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가 과도하게 지속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 지휘·감독 및 복무관리 등 노무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4</td><td rowspan="3">한국철도공사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한국철도공사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265.4%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2023년 242.5%보다 22.9%p 증가한 수치로, 이는 부채 중 철도차량 구입 등을 위한 사채 발행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익(△5,167억원)의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한국철도공사 결산 현황
(별도기준, 단위 : 억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4년</th><th>2023년</th><th>증감액</th><th>증감률</th></tr>
<tr><td rowspan="2">손 익</td><td>영업손익</td><td>△1,114</td><td>△4,743</td><td>3,629</td><td>76.5%</td></tr>
<tr><td>당기순손익</td><td>△5,167</td><td>△5,425</td><td>258</td><td>4.8%</td></tr>
<tr><td rowspan="4">재 무
상 태</td><td>자 산</td><td>289,987</td><td>287,523</td><td>2,464</td><td>0.9%</td></tr>
<tr><td>부 채</td><td>210,632</td><td>203,585</td><td>7,047</td><td>3.5%</td></tr>
<tr><td>자 본</td><td>79,355</td><td>83,938</td><td>△4,583</td><td>△5.5%</td></tr>
<tr><td>부채비율</td><td>265.4%</td><td>242.5%</td><td>22.9%p</td><td>-</td></tr>
</table>
❍ 이러한 재무악화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2025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보고서>(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자산 효율화 이행실적이 계획에 따른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또한 용산역세권,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등 공사의 혁신계획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협의에 따른 개발계획 재검토(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차량기지 이전사업 난항(수색역세권)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부채비율의 증가 및 최근 3년간 5,000억원 내외의 당기순손실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지분 정리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산 효율화와 수익 개선,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463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예산 56억 1,000만원 대비 실집행이 26억 630만원(47.5%)으로 집행이 부진한데, 그 이유로는 자율주행 차량 구매 계약 보완, 촬영 사전협의 지연, 일부 지자체 추경 예산 확보 지연 등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철저한 보조금 관리 규정 절차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5550-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1일, 8월 28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①사전 행정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점, ②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기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보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0.8%로 매우 저조하였고 교부액의 대부분인 99.2%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러한 집행 사례는 보조금의 교부 시기 및 규모가 보조사업의 실질적 준비 상태 및 집행 가능성과 부합하지 않아 국고의 비효율적 운용을 발생시킴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사업계획 재점검 및 사업추진에 맞춘 예산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5550-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4년도에 9개 지역에서 추진한 동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46.3%에 불과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6개 사업의 예산집행률도 11.5%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별 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속도에 맞추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8	**사업기간 내 완수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는 2020년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2024년에 최초로 10곳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는데, 10곳 중 8곳은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교부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이 2025년도까지 지연되었음 ○ 내역사업인 ‘도시 취약지역개조’ 사업은 2020년 선정된 사업 22곳 중 18곳이 2023년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교부된 예산을 이월하여 2024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9</td><td rowspan="3">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재생사업(56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은 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 불용이 지속되고 있음
- 연례적 불용으로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신규 관리지역 2곳 지원을 계획했으나, 1개 지역(충북 청주)만 신청이 있었으며, 교부된 예산 전액을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함
※ 2024년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결산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교부
지자체</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본예산
(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th><th>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B)</th><th>이월액</th><th>실집
행률
(B/A)</th></tr>
<tr><td>경기
(동두천·광명)</td><td rowspan="2">6,000</td><td>3,000</td><td>3,000</td><td>3,043</td><td>6,043</td><td>5,641</td><td>3,000</td><td>2,598</td><td>402</td><td rowspan="2">43.3</td></tr>
<tr><td>충북
(청주)</td><td>900</td><td>900</td><td>-</td><td>900</td><td>-</td><td>900</td><td>-</td><td>9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공공주택 건설단계별 목표 · 실적 병행관리, 공급 · 관리계획 법정 문서화 및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공공주택 공급계획 총괄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 과정이 수반되는 건설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이나 매입약정계약 시점이 건설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이러한 지표만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실적을 관리·공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는 착공·준공 실적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수치상으로는 공급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별도로 정해진 형식과 체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친 주택공급 대책 발표의 일부로 포함시켜 수립·공개하고 있고, 수도권·비수도권 수준으로만 구분된 개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세분화된 목표 설정과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은 수립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이 수반되는 공공주택 유형(건설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나 매입약정계약뿐만 아니라 착공·준공 등 건설단계별로 목표와 실적을 관리할 것 ○ 국토교통부는 법률상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의무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별도의 법정계획 문서로 독립하여 수립·공개하며, 계획에 지역별·유형별·계층별 공급목표 및 실행계획, 공공주택 재고 관리 및 질적 개선방안, 재원확보 등 중장기 관리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1	**국비 지원 주택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하여 보증금 미지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사후조치만 발표할 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도에 국비(보조, 기금융자)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에 대해 점검할 것		
72	**국민주택채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국공채발행수입(81-8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임 ○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 대출 규모는 2020년 18조 8,700억원에서 2024년 54조 7,187억원으로 2.9배 확대되는 등 정책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 49조원에 달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28조원, 2023년 18조원, 2024년 10조원, 2025년 3월 기준 7조 9,000억원까지 감소되었음 - 반면, 주요 수입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 조성액은 2021년 18조 8,045억원에 달했지만, 2024년 14조 1,449억원으로 감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3	**국민주택채권 관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국공채발행수입(81-8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경기 변동성, 짧은 만기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낮은 발행금리와 즉시 할인매각 관행으로 실익이 적고, 높은 할인율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목적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자도 의무 매입대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하여 만기의 다양화, 발행금리 현실화 및 할인율 결정 구조 개선, 표면금리 국고채 등 시장 연동, 매입의무 대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74	**청약저축가입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기타민간예수금(94-94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기타민간예수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저축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청약저축 및 종합저축 납부금 수입액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임 ○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 대출 규모는 2020년 18조 8,700억원에서 2024년 54조 7,187억원으로 2.9배 확대되는 등 정책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 49조원에 달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28조원, 2023년 18조원, 2024년 10조원으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2025년 3월 기준 7조 9,000억원까지 감소되었음 - 반면, 주요 수입 중 하나인 청약저축 납입액은 2021년 23조 1,384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4조 9,607억원, 2024년 14조 8,18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 원인과 현행 청약저축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금융·세제 지원 실효성 강화, 정책적 저축·대출 연계 활성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5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이차보전 지원(1042-40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1-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이차보전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이차보전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의 2024년도 지출은 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사용되었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도부터 도입되어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넓은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전체 출생아 중 셋째 이상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많지 않으나, 이 가구들은 주택면적 요건 제한으로 대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면적 요건 완화에 따른 재정 영향 우려가 있으나, 대상 가구 수가 적어 재정 악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출산 자녀 수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 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집행 실적 및 사업체계 전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1131-4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이 사업은 신속한 이주 및 정비가 필요함에도 소득 수준이 낮고 이주자금이 부족하여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저리로 이주비를 융자하는 사업임 ○ 통상적으로 계획액의 90% 이상을 집행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종료된 2024년에 계획액 70억원 중 9억 9,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14.2%)하였고 2024년 9월 이후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 사업에 이관된 2025년 7월 말까지 대출 실적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융자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고, 대출수요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사업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		
77	**공공분양주택의 수요-공급을 고려한 공급 조절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미분양 문제를 가중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을 조절할 것		
78	**불용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분양주택(융자)(1134-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미착공 사업장의 착공으로의 미전환, 사업성이 낮은 프로젝트의 재구조화 지연, 미분양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동력 저하 등으로 사업예산의 불용률이 21.1%(4,258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융자) 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낮아 지연되는 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해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9</td><td rowspan="3">집행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1333-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비아파트 건설경기 둔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의 신규 등록 감소, 민간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하여 공급물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4년에는 계획액 650억원 중 446억 7,600만원을 불용(68.7%)하였으며, ‘민간임대(융자)’ 사업과 유사한 문제도 있음
❍ 기존에 집행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균형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배정액을 줄이거나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사업의 부진을 초래하였음
※ 2022년 대비 2024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급 실적
(단위: 호,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2022(A)</th><th rowspan="2">2024(B)</th><th colspan="2">변동</th></tr>
<tr><th>B-A</th><th>(B-A)/A</th></tr>
<tr><td>부산</td><td>1,191
(92.5%)</td><td>314
(81.5%)</td><td>△877</td><td>△73.6</td></tr>
<tr><td>부산 외</td><td>108
(7.5%)</td><td>75
(18.5%)</td><td>△33</td><td>△30.6</td></tr>
<tr><td>합계</td><td>1,299
(100%)</td><td>389
(100%)</td><td>△910</td><td>△70.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집행실적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과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집행률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집행이 양호한 특정 지역의 사업 수요를 억제하는 역차별적인 예산편성을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수요자의 거주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행복주택(융자)(1335-401),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행복주택(출자)(1440-408),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행복주택의 미임대율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행복주택 미임대율: '21년(8.7%), '22년(5.7%), '23년(6.7%), '24년(7.6%) ○ '24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는 18만 1,938호로, 전체 재고 중 6개월 이상 미임대 물량은 5,154호에 이르고 있으며, 소형 위주의 공급구조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주택의 미임대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미임대 물량의 임대료 손실분을 추정하면 6개월 이상 미임대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은 57억 5,200만원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요자의 거주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1</td><td rowspan="3">다가구매입임대
공실 문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다가구매입임대 재고량은 ’20년말 기준 13.8만호에서 ’25년 18.3만호로 약 4.5만호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임대(공실) 규모도 동 기간 4,596호에서 6,369호로 1,773호 증가하였음
- 장기 공실률의 경우 지역별로는 충남 18.8%, 충북·대구·강원 5%대로 지역별 공실율 편차도 큰 상황임
❍ 다가구매입임대 재고가 공실로 방치될 경우 임대료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리부실에 다른 주택의 노후화 우려도 있음
※ 장기공실 물량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table>
<tr><th></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공가관리비</td><td>9.8억원</td><td>10.3억원</td><td>12.2억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의 장기공실 물량 매각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장기공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매입을 실시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악화 개선 위해 사업규모 조정 등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4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구를 대상으로 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NPV지수가 △66.15%로 사업 손익목표(△37.5%)에 미달하는데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산모라” 지구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구(총 사업비 1조 8,688억원)에서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데도 보상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 대비 초과 손실액은 1,128억원으로 추정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중요 사항이나,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다수 사업을 지속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이 저조한 지구에 대한 사업규모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손익 목표관리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83	**공익성을 우선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실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 지구 총 14곳 중 시장여건 악화로 손실이 발생한 지역은 4곳에 불과함 - 목표 미달지구의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고령자복지주택·쪽방촌 개선·모듈러 시범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적 이익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시장여건이 악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주거복지 향상 등 공익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4</td><td rowspan="3">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4%로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지역민원,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지연 등 착공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임을 감안하여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r><td rowspan="3">85</td><td rowspan="3">적정 사업예산
확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예산이 2022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4년도에는 2,129억 7,700만원, 2025년에는 1,728억 800만원까지 감소한 상황임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table>
<tr><th></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사업예산</td><td>472,943</td><td>201,383</td><td>212,977</td><td>172,808</td></tr>
</table>
❍ 동 사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추가 소요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추가 소요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리 세대수 설정 및 배치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영구임대단지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단지별 1명의 주거복지사를 배치함에 따라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세대수가 504세대인 단지와 2,694세대인 단지가 동일하게 1명의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리 세대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할 것		
87	**주거복지사 기간제 직원 채용조건 및 보수 수준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대부분의 주거복지사는 주택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통해 선별하는 반면, 기간제 직원은 주택관리공단에서 단지별 채용공고를 통해 선별하며, 학력·어학·성별·연령 등에 구체적 제한이 없음 - 총 111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기간제 직원을 배치하고 있음 ○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연 4,836만원, 기간제 직원의 보수는 연 3,300만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간제 직원의 채용조건과 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8	**무분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연장 금지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3-91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임 ○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회계의 순서로 돌려막기를 하여 3년간 220조원을 일반회계에 투입하였음 ○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과도하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024년에 1조 1,1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으나, 환수가 어려우므로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주택도시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저하하는 무분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연장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여유자금 전문 운용 인력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조성자금을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지급준비자금의 성격임 - 자금의 운용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후 투자원본의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말 10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어 3년 만에 여유자금의 약 80%가 감소하였음 ○ 더 큰 문제는 2024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3.35%로, 설정된 기준수익률 5.4%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었음 -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여 BM수익률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저조한 운용 실적 개선을 위한 여유자금 전문 운용 인력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0	**정부보장사업 관련 체계적인 관리와 하위 법령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정부보장사업(464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부가 구상하는 사업임 ○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저조(구상금 수납률 2024년 기준 8.7%)한 반면, 구상수수료율(A등급 34%)은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위탁수수료(2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는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의 대위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하위 규정에는 회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채권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하위 법령의 정비를 통해 미반환가불금의 회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구상채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구상수수료율을 설정하며, 채권의 경과연도별 인센티브 부여 등 구상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1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검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임차료(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해결이 필요함 - 적정 품질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수급가구가 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 - 동시에 주거급여가 수급자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비주택의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문제를 방지 필요 - 이를 위해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는 제도 검토 필요 * 미국 주거비 지원제도: 주택품질 평가하여 물리적, 질적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 바우처 지급. 미충족시 이주 * 프랑스 주거수당제도: 수급가구의 거처가 적정기준 및 최소점유조건 기준(면적, 건강안전, 에너지성능 등) 등 요구 ○ 내역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과 ‘이사비 지원’의 실적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4년 기준 각각 64.6% 58.9%으로 2023년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 55.2%, 49.5% 대비 집행부진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였음 - 최근 비주택거주 가구수가 2020년 43만가구에서 2023년 48만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주택거주 가구수를 줄이고자 하려는 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실시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주택거주자가 점차적으로 정상적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 사업 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집행실적 관리에도 유의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적정 품질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거주환경을 개선시키기보다 고시원 등 비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미국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프랑스 주거수당제도 등을 참고하여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2	**보증보험 가입 창구와 보증료 지원 신청창구 일원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1034-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에도 실집행률이 27.0%에 불과하여 2023년도 실집행률인 23.7%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4년 기준 보증료지원 신청 반려비율이 31%로 높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절차가 길고 복잡한 측면이 있음 ※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을 통일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6.8만건, HUG 저소득 할인 12.7만건 중 실제 신청 4.5만건, 지원 3.1만건으로 잠재 수요 대비 신청률이 매우 저조함 - 이는 신청에 10가지 서류제출이 필요한 절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요구서류 중 다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해 신청에 불편을 초래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창구와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청을 간소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3</td><td rowspan="3">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 제고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4308-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 불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고도 대출상환과 운영비를 우선 처리하면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
-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깊어질수록 체납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큰 상황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문제는 신고·중재 중심의 센터 운영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 및 회수 현황
<table>
<tr><th>구 분</th><th>체납금회수율(%)</th><th>체납신고액(백만원)</th><th>체납회수액(백만원)</th></tr>
<tr><td>2021년</td><td>83.8</td><td>9,338</td><td>7,822</td></tr>
<tr><td>2022년</td><td>80.1</td><td>12,197</td><td>9,775</td></tr>
<tr><td>2023년</td><td>69.6</td><td>15,998</td><td>11,140</td></tr>
<tr><td>2024년</td><td>53.0</td><td>11,869</td><td>6,32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 하락에 대응하여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료 회수 불능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을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포함하여 대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4	**조속한 집행 독려 및 이월금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2732-312)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지방비가 확보되는 등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고, 입찰 결과 예정가격 초과, 단독 응찰 등으로 유찰됨에 따라 예산액(64억 700만원) 전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선 중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전동차를 증차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의 집행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교부금액 조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시점을 사업 추진 여건과 진행경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5	**항공안전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3636-303)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안전점검 외에도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전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전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등을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실조사 업무를 신설하고, 2020년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을 2명 신규채용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사실조사 감독관 충원은 없음 - 현재 항공안전감독관 중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은 2명이고 나머지 28명은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이들 모두 사실조사 업무를 병행 중임 ○ 안전점검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실조사 등 사후적 대응 활동을 병행할 경우, 사전예방 성격의 항공사 안전점검 등이 위축되고 사실조사 또한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사실조사는 항공안전장애 등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적 안전점검과 성격이 다름 - 사실조사는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완료까지 장기간(평균 165일) 소요되어 안전점검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전담감독관 인력 충원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6</td><td rowspan="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5632-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서울 25%)를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이자의 한시적 지원이라는 한계로 인해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이 필요함
- 공원 미집행 면적은 2022년 107.9㎢, 2023년 105.7㎢로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2023년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추정사업비는 14조 9,864억원에 달함
- 2024년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6년 발행 지방채까지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한시적 사업임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
※ 2019-2023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지방채 발행액</th><th>이자지원액</th><th>공원부지 매입면적</th><th>공원조성면적</th></tr>
<tr><td>2019년</td><td>1,020,100</td><td>2,230</td><td>2,400,691</td><td>2,714,919</td></tr>
<tr><td>2020년</td><td>1,512,433</td><td>16,402</td><td>4,710,783</td><td>6,301,838</td></tr>
<tr><td>2021년</td><td>1,064,320</td><td>26,342</td><td>4,272,486</td><td>5,330,406</td></tr>
<tr><td>2022년</td><td>645,772</td><td>29,604</td><td>3,473,400</td><td>5,905,106</td></tr>
<tr><td>2023년</td><td>475,700</td><td>45,537</td><td>3,248,245</td><td>3,956,855</td></tr>
<tr><td>합계</td><td>4,718,325</td><td>120,115</td><td>18,105,605</td><td>24,209,12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하여 토지은행 재원(공공개발용 토지비축) 활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채관리 감독시스템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부채감축을 목적으로 관리비 절감, 투자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없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추가적인 이자부담과 장기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공기업 부채관리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급감함에 따라, 2024년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7,000억원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음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부담할 분기별 이자비용 72억원과 일반회사채에 비하여 최초 중도상환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을 계산하면 약 295억원이고, 발행수수료 13억 3,600만원까지 추가한 금액이 공사의 장기 부채로 반영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부채감축이 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임 * “신종자본증권”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며,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회계상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표시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한 실질적 부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독하고,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채관리를 더욱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비절감과 사업조정 및 자산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게 하는 등 공사의 부채관리 대책을 엄격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8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장애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장애 시 피해가 큰 시설물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우선순위 선정결과 중 일부를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하였으나,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계량화되지 않고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예상하지 못한 마모가 발생하거나 단종 부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변경이 폭넓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계량화된 근거가 없는 과도한 순위조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개량계획 수립의 신뢰를 저하하고, 당초 우선순위권에 있는 시설물의 적기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 위험을 높일 우려 * 변경사례 1: <선로시설개량 중 레일장대화> 부문의 경우 당초 2024년 사업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분당선(야탑-정자), 전라선(익산-동익산), 태백선(석항-예미) 구간이 가장 시급한 개량대상이였던 분당선(수서-가천대) 구간 등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음 * 변경사례 2: <전기설비개량 중 연동장치> 부분 또한 경전선 예당역 등 후순위에 있던 사업이 100위권 이상 조정되어 우선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순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9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업재원으로 외부 차입금을 활용한 문제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안전기술원 출연(3732-307)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현행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 및 정관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사업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만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0월 드론인증센터 구축 관련 시공사 공사중단 및 타절 등 분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함 - 2021년 4월에도 정부 예산 교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10억원을 차입한 사례가 있음 ○ 연내 사업추진 등 부득이한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차입절차 또는 차입한도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와 경영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활용한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하며, 외부 차입이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차입금 활용을 엄격히 관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0</td><td rowspan="3">혁신펀드
출자예산 배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토교통 혁신펀드(7036-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혁신펀드의 경우 대부분 4년간 나누어 투자됨에도 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예산을 한해에 전부 반영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 펀드 투자는 대부분 4~5년간 투자, 4~5년간 운용을 기본으로 약 10년간 투자하고 청산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펀드 결성액 170억원(정부 100억원, 민간 70억원) 중 3년간 148.7억원만 투자되었고, 2021년의 경우 결성액 356억원 중 4년간 224.8억원(63.1%)만 투자됨
- 2024년 결성액 385억원(정부 150억원, 민간 235억원) 중 해당 연도에 10억원만 실제 투자됨
❍ 적자국채 발행으로 매년 국채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자되지 않고 있는 펀드 잔액을 전담기관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 것은 문제
※ 국토교통 혁신펀드 2020~2024 운용현황
(단위: 억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결성금액</th><th colspan="5">투자금액</th></tr>
<tr><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2">2020</td><td>정부출자</td><td>100</td><td rowspan="2">45.7</td><td rowspan="2">83.1</td><td rowspan="2">19.9</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민간출자</td><td>70</td></tr>
<tr><td rowspan="2">2021</td><td>정부출자</td><td>200</td><td rowspan="2">-</td><td rowspan="2">10.0</td><td rowspan="2">86.0</td><td rowspan="2">82.8</td><td rowspan="2">46.0</td></tr>
<tr><td>민간출자</td><td>156</td></tr>
<tr><td rowspan="2">2022</td><td>정부출자</td><td>20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42.5</td><td rowspan="2">285.0</td><td rowspan="2">135.0</td></tr>
<tr><td>민간출자</td><td>387</td></tr>
<tr><td rowspan="2">2023</td><td>정부출자</td><td>15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121.2</td></tr>
<tr><td>민간출자</td><td>97</td></tr>
<tr><td rowspan="2">2024</td><td>정부출자</td><td>15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10.0</td></tr>
<tr><td>민간출자</td><td>23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1</td><td rowspan="3">도시재생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td><td>관련사업명</td><td>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재생사업(56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 기준 사업 대상지 총 513곳에 대해 국비 4조 492억 5,000만원, 지방비 3조 1,799억 4,300만원 등 총 7조 2,291억 9,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국비기준 실집행액이 2조 1,442억 1,800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최근 9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53.0%에 불과함
※ 도시재생사업 2016~2024년 국비 · 지방비 집행액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예산</th><th colspan="3">사업시행주체(지자체)</th></tr>
<tr><th>국비(A)</th><th>매칭지방비(B)</th><th>합(A+B)</th><th>국비
실집행액(C)</th><th>국비
불용액(D)</th><th>국비
실집행률(C/A)</th></tr>
<tr><td>4,049,250</td><td>3,179,943</td><td>7,229,193</td><td>2,144,218</td><td>13,939</td><td>53.0</td></tr>
</table>
❍ 지자체에서 전년도이월액도 다 실집행되지 못하여 재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4년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2024년 결산 결과, 지자체에서 전년도이월액 4,433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국토부는 4,184억 3,300만원(예산액 4,207억 3,200만원의 99.5%)을 지자체에 교부
- 결과적으로 예산현액 8,617억 5,600만원 중 4,823억 500만원(56%)을 집행하고, 3,56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는 예산액의 90% 이상에 달하여 한해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집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규정에서는 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2</td><td rowspan="3">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집행가능성
주의 등</td><td>관련사업명</td><td>주택도시기금 - 전세임대(융자)(1337-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토교통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4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기준 5,096억원 증액하였으나, 결산 결과 1,776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전세임대(융자) 2021~2025년 기금운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전년도</th><th>계획</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집행률</th><th>다음년도</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h>이월액</th><th>현액(B)</th><th>(C)</th><th>(C/A)</th><th>(C/B)</th><th>이월액</th></tr>
<tr><td>2021</td><td>4,366,250</td><td>4,812,750</td><td>-</td><td>4,812,750</td><td>4,004,772</td><td>83.2</td><td>83.2</td><td>-</td><td>807,978</td></tr>
<tr><td>2022</td><td>4,532,791</td><td>4,775,041</td><td>-</td><td>4,775,041</td><td>4,661,183</td><td>97.6</td><td>97.6</td><td>-</td><td>113,858</td></tr>
<tr><td>2023</td><td>4,174,950</td><td>5,087,730</td><td>-</td><td>5,087,730</td><td>4,867,011</td><td>95.7</td><td>95.7</td><td>-</td><td>220.719</td></tr>
<tr><td>2024</td><td>4,546,931</td><td>5,056,531</td><td>-</td><td>5,056,531</td><td>4,878,890</td><td>96.5</td><td>96.5</td><td>-</td><td>177,641</td></tr>
<tr><td>2025</td><td>5,114,122</td><td>5,434,872</td><td>-</td><td>5,434,872</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25년 2차 추경에 3,207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차 연말 집행부진이 우려됨
- 2025년 2차 추경에서 전세임대 유형 3,000호(신혼부부II 1,000호, 청년역세권 1,000호, 非아파트형 1,000호) 추가 공급을 위해 3,207억원 증액 편성
- 5월말 기준 기금액의 약 34%인 1조 7,463억 1,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부진이 우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주의하고, 2025년 추경을 포함한 동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부진시 추경편성 및 집행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3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집행잔액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자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은 집행잔액을 임의로 “미집행 이월”과 “불용액”으로 구분한 후, ‘미집행 이월’은 매년 원인행위 없이 이월과 재이월을 반복하고 있음. - 2024년 결산 기준 미집행 이월액 규모는 약 1조 9,835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1조 6,926억원)·시설계량(1,138억원) 및 광역철도(758억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미집행 이월액 중 39.3%에 해당하는 7,795억원은 이월예산으로서 재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도 기준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예산현액 7조 5,192억원 중 4조 8,789억원 집행(집행률 64.9%)되고, 2조 1,634억원 이월, 4,769억원 불용 ○ 국가철도공단은 원인행위 없이 미집행 이월처리한 예산을 차년도에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다른 내역사업으로 변경·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 -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연도에 사정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출연금 집행잔액을 “미집행 이월” 처리하고, 차년도에 다른 내역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원인행위 없는 이월·재이월 및 내역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이 출연금 집행잔액 일부를 임의로 미집행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인행위 없이 이월 및 재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출연금 집행잔액의 정산·반납 및 이월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것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2031-307)	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지적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30년 전까지 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부분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완전 이전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세종 집무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는 입장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설계 및 공사 등의 일정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상세한 향후 계획은 현 상황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여비 규정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적사항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인이고 공익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공익법인 여비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비교할 때, 공익법인의 국내여비(식비) 및 국외여비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가 과도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 국내여비(식비): (공익법인 임원) 30,000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25,000원 ** 국외여비(체재비): (공익법인 기관장) 차관급, (공익법인 상임이사) 1급 상당 공무원, (공익법인 팀장) 국장급 ○ 또한, 공익법인의 정관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의사회의 의결로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예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국내여비(식비) 및 국외여비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 지연요소 확인 및 향후 공정에 차질 없는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2031-307)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지적사항	○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제2집무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공모 절차가 2024년 6월에서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2022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으나, 계속하여 이월되었으며, 2024년 예산현액 13억 2,000만원 중 1억 5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 8% - 당초 2025년 7월 기본설계가 착수될 계획이었으나, 국제공모 관리용역 수행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연기됨 ○ 현 정부 임기내 대통령제2집무실 이전을 공표한 만큼 전임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현 정부 임기내 대통령제2집무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제2집무실이 현 정부 임기내에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당시의 지연사유 확인과 더불어 동 사업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사업이 단순 청사 이전이 아닌 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의 핵심 과제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신속히 이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2">4</td><td rowspan="2">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2033-315)</td><td rowspan="2">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2">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행정효율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분원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첫해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발생되어, 예산 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시행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운영, 총사업비 협의 등이 순연되었기 때문임
* 2025년 7월 기준 KDI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
- 2025년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70억 5,700만원도 총사업비 협의기간(6개월~1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 불투명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연도</th><th>본예산</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 rowspan="6">국회세종의사당
건립</td><td>2019년</td><td>1,000</td><td>-</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r>
<tr><td>2020년</td><td>1,000</td><td>1,000</td><td>-</td><td>2,000</td><td>-</td><td>2,000</td><td>-</td></tr>
<tr><td>2021년</td><td>12,727</td><td>2,000</td><td>±2,670</td><td>14,727</td><td>-</td><td>14,727</td><td>-</td></tr>
<tr><td>2022년</td><td>-</td><td>14,727</td><td>-</td><td>14,727</td><td>2,542</td><td>12,057</td><td>128</td></tr>
<tr><td>2023년</td><td>35,000</td><td>12,057</td><td>-</td><td>47,057</td><td>-</td><td>47,057</td><td>-</td></tr>
<tr><td>2024년</td><td>35,000</td><td>47,057</td><td>-</td><td>82,057</td><td>-</td><td>82,057</td><td>-</td></tr>
</table>
</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2026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강화 및 일정관리 고도화에 노력하고 단계별 사업비 배분 최적화, 사전검증제, 정책사업 전담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연례적 이·전용 발생에 대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2051-306)	시정,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동 사업에 대한 매년 이·전용 및 이월액 규모 증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 또는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시정)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은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 및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추진 현황 및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동 사업의 이·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동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동 사업에 대한 전용액은 39억 7,200만원으로 2023년(18억 600만원)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단순 사업지연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미비, 각 박물관별 통합적 사업관리 실패, 예산편성-집행간 불일치 등 여러 문제를 나타냄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담당자에 대한 주의와 아울러 2026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지연과 예산 전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조치나 예산 조정 없이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성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경시하는 행위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재이월·재재이월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대전광역시는 가로수 이식, BRT 정류장 위치 변경, 신호기 형식 변경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실집행 부진으로 재이월 또는 재재이월 처리를 하였는데, 단순 협의 지연 사유는 지침에서 정한 재이월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월한 42억 1,600만원 중 21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20억 2,000만원이 재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이 중 15억 9,500만원만 집행되어 4억 2,500만원이 재재이월되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허용 - 재재이월은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재이월 및 재재이월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에 따른 잉여금 처리 규정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국립박물관단지 운영(1031-514)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연금 집행잔액 전액이 결산잉여금으로 분류되고 다시 차차년도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어, 인건비와 사업비 잔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우며, 결산잉여금의 사용시기 및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으나,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은 제외됨 - 참고로 2024년도 결산잉여금에는 집행잔액 중 인력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1억 3,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의 결산잉여금 처리에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조속히 보완할 것		

3. 새만금개발청(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오프라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5557-337)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은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개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새만금 디지털월드 운영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온·오프라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13년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새만금 관광 명소화’ 추진 내용에 문화·레포츠 활동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2024년의 경우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은 새만금 메타버스 콘텐츠 유지 보수로만 편성 및 집행되어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제한이 있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오프라인 사업이 추진되었음 *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2021년) 새만금 노마드 축제, 한류뮤직 및 아츠 페스티벌, (2022년) 한류뮤직 및 아츠 페스티벌,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 (2023년) 한류뮤직 및 아츠 페스티벌,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 문화예술공원 조성,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2024년) 새만금 메타버스 콘텐츠 유지·보수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의 내역사업인 새만금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오프라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사업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5557-387)	주의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2권역(복합개발용지)·3권역(관광레저용지)과 주변 국도(12호선, 30호선)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에 따른 사업 일시정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이에 2024회계연도에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 -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도 예산액 126억 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0억 2,000만원 중 2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5557-418)	주의,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수백억원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 해양환경 영향 우려로 어민단체 반대가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갈등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2024년도 30억 5,800만원) - 어민단체는 해양 방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은 실시간 수질감시 및 해양환경조사 등 상생방안 마련 중 *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고, 다량의 폐수 배출이 불가피한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용·폐수 공동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폐수 배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새만금 지역 어민단체 협의 및 상생협의방안 강구 등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26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기업들의 용·폐수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전지로 지정되었고 최근 5년간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규모는 23개 기업에서 9조 240억원에 이름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기업의 관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제도개선) ○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예산의 65%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등 졸속 추진을 담당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주의) ○ 새만금개발청은 인근 어민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결과, 65% 이상 불용 처리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과정을 의무화할 것(제도개선) ○ 새만금개발청은 용·폐수 관리 구축이 기업 가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어민단체와 합의된 상생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갈등으로 인한 추가 지연을 방지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미납 사용료
회수 등 징수
조치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토지대여료(51-5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새만금개발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액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22년 4억 200만원에서 2024년 25억 900만원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2년 74.0%에서 2024년 35.2%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수납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임
-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연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사용료 장기 체납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 활용 및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사무 위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징수
결정액(B)</th><th rowspan="2">수납액
(C)</th><th rowspan="2">수납률
(C/A)</th><th rowspan="2">수납률
(C/B)</th><th rowspan="2">미수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2</td><td>1,720</td><td>1,720</td><td>1,720</td><td>1,545</td><td>1,143</td><td>66.5</td><td>74.0</td><td>402</td></tr>
<tr><td>2023</td><td>1,720</td><td>1,720</td><td>1,720</td><td>2,068</td><td>1,280</td><td>74.4</td><td>61.9</td><td>788</td></tr>
<tr><td>2024</td><td>1,728</td><td>1,728</td><td>1,728</td><td>3,871</td><td>1,362</td><td>78.8</td><td>35.2</td><td>2,50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3년간 장기임대용지 사용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청구를 통한 미납 사용료 회수 등 징수 조치를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위한 사업분리의 원상복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5557-418)	주의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을 ‘용수관로(292억원)’와 ‘방류관로(244억원)’로 각각 나누어 별도 사업이라 주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동관로 구축’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내부적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훼손한 것임 -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302억원에서 536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기간도 2028년 완공으로 3년 연장됨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비 536억원을 증액하면서도 용수관로·방류관로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공사비를 전환해 사용하는 등 동 사업은 공동관로라는 단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적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비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7011-200)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2024년도 일반수용비 내 소송수행비 등으로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그 2배가 넘는 1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이는 민간개발공모사업 중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항소 등 장기화되면서 소송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이견으로 사업이 4~5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된 민간개발사업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추가 소송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에 따른 소송으로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추가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성평등가족위원회

1. 성평등가족부(59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 2024년 과징금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1억 8,900만원이 수납되고 37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함 - 성평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짐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하여 압류·공매 등의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또는 무재산이 최종 확인될 때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		
2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1200) 프로그램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5개 중 미달성 사업은 2개이며 미달성률이 40.0%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목표(성과지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3년 연속 미달한 바,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라는 성과지표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1137-37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호감도가 낮은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적극적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상설기구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관련, 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8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상설기구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보다 낮으며, 2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19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13개)에 달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79.9%)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성평등가족부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일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중 이행기간이 도과된 미완료 과제의 수와 성평등가족부의 개선권고를 불수용한 과제의 수가 누적되고 있음 ※ 미완료과제: 2020년 13건, 2021년 10건, 2022년 13건 불수용과제: 22건(2020년~2022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2009년)된지 16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6개(46.9%)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불수용 사유들을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예산·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할 것		
7	**다양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 마련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성 교육인원(282명) 중 최고경영자(85명)는 30.1%에 해당함 ○ 다양성 교육 전후 인식·제도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참여율(32.%)이 낮으며, 교육 후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사례가 10~20% 수준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다양성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참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중 대학생들의 2023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8.2%로 상당히 저조함 ○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대학생들(MZ세대)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 교육 인터페이스 편의성 개선, 참여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회(서면 1회, 대면 1회) 개최되고 대면으로 이루어진 1번의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정 및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 포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함 ○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그 규모조차 파악이 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희롱 실태조사 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1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정산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적사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 반납이나 세입 계상 후 사용하는 일 없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만 하고 있어 출연금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출연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수행)이 있으나, 전담 인력 채용 및 인력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실집행률도 2024년 59%로 저조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여가부 수행)과 출연사업(연구소 수행)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리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업무 중복·중첩 및 사업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2025년 8월 기준 지원대상자가 6명(평균연령 95.6세)이고 신규 등록은 2018년 이후 없음 ※ (직접사업) 생활안정지원사업(1,077백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 지급 (출연사업) 맞춤형 지원사업(335백만원): 비급여치료비, 장제비, 환경개선비 등 지급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념·교육·기록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지역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음 - 법령과 다르게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수행되고 있고 이를 매해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홍보 강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162,948명)가 상당함에도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에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은 546명으로 많지 않고, 선정인원(526명) 중 입소인원은 480명으로, 지원 신청인원(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바, 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시설 입지(전북 무주, 합숙형)로 인해 저소득·취약가구 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전북 무주 단일시설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충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9,100만원을 더한 1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9%임 ○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중간설계비(설계용역 1차 완료금)를 전용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는 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억 300만원으로, 이 중 7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39.3%로 저조함 ○ 동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집행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관리·협업 강화, 초기 변수 대응 및 표준 매뉴얼 적용으로 지연·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당초 예산액 중 29.1%에 해당하는 6억 5,400만원을 감액 전용하였고,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4.6%로 낮았으며, 2022년(37.8%)과 2023년(35.3%)에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자치단체는 하반기(8.29. 이후) 교부액의 합보다 불용액이 더 크게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감소 추세와 실집행 현황 등을 반영한 면밀한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학교나 복지기관 등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제도 실효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내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것	
18	**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지 않은 서울과 울산에도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집행하였음 ○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아이돌보미 채용·관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실행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는 광역거점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결산 미분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 2. 29.)으로 2024년 9월 27일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는데, 법인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보고하지 않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에 포함하여 작성·보고되었는바, 별도의 구분 자료를 받아보지 않는 한 정확한 결산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회계보고의 정확성이 저해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사전절차 건립 여건 사전 검토 강화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기간·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가족센터 건립(2333-334)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에 지원한 13개소 중 4개 센터의 집행액이 전혀 없는 등 실집행률(71.9%)이 저조하고, 2024년도 실집행액(235억 8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239억 6,20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러한 집행 부진과 이월액 누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 또한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공사비 증가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보조사업 승인 이후 지자체 재정여건·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 ○ 2024년도 이월액(29억 4,400만원)이 발생한 센터 총 15곳 중 7곳이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전에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사업 대상지 선정시 지방비 조달여건, 가족센터의 유형별 특성, 공사비 증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여건 변동 등 현실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2138-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 위생 점검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 위생점검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6억 9,1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70.5%로 저조하며, 짝수년도인 2022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70.2%로 저조하였음. 이는 짝수년도에 진행되는 자연권 시설의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과거 집행실적 및 시설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률 유지 · 성과평가 연계를 통해 집행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의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맞춤형 직업훈련)과 10개월(인턴십 직장체험)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2.6개월, 인턴십·직장체험은 2개월로, 청소년이 해당 과정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의문시됨 ○ 시·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인 87.4% 미만인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경북, 제주)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지원기간 및 실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실집행률 저조·지원기간 단축 등의 문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 실시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참여청소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중·장기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관심 직종 반영, 자격증 연계 등 실질적 수요맞춤형 과정을 개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202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식사빈도(결식횟수) 문항이 삭제됨.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학교 밖 청소년 150명 대상, 장철민의원실 실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44%가 최근 한 달 이내 경제적 이유로 결식을 경험했으며, 50.7%가 돈이 없어서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품목별 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2025년 7월 기준 125.08로 2020년 대비 25% 상승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상 한 끼당 지원금액을 2023년에 1천원(4천원→5천원) 인상한 이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 인원 및 현실적인 지원단가를 설정하고, 외식비 물가를 고려하여 급식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식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26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집행은 부진하여 2024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75%로 저조함 ○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 사업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최대 6년)의 근거 규정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실무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각 시도별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요 추계의 정밀화,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2024년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하면서 지원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집행률(88.7%)이 저조하였고, 6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집행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2024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금액 73억 9,000만원 중 실제 환수액은 32억 3,000만원(환수율 43.7%)에 그침. 최근 5년간 인적 변동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별 환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환수에 대한 의지 및 역량에 차이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수급자에게 소득이나 인적사항 변동 신고의무의 고지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적정 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4년 실집행률이 84.8%로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2023년 77.2%, 2022년 68.2%)한바,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활동 병행이 어려움에도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총 지원금액(한부모가족 복지급여+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은 2024년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40만원으로 고정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연도별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수급절차 적극 홍보 및 청소년한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의 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영아 지원금 등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		
31	**청소년 한부모 특화성이 부족한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2024년 계획액 4억 5,100만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작·자문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 사업으로 이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24)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인력의 경우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수당의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고유업무 이외에도 소속 센터의 기본사업도 지원하는 등 업무 과중 대비 낮은 처우 문제가 제기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4차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보면, 6개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이 성평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까지 반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과 중요도, 근로 형태 및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한 내 보조금의 정산보고와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사회복무요원 인력 적정 배정 노력 및 서비스 공백 방지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2024년 실집행률이 68.6%로 저조한바,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및 미배치 인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지연과 미배치로 장애인 지원 공백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시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병무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인력 배정 관리를 강화할 것 ○ 장애인 입소자 지원업무는 필수성이 높으므로 배정지연 시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별 인력 배치율 모니터링 및 취약시설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4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년, 전국 15~54세 기혼여성 대상)」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64%로,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함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중 80개소(50.3%)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전국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안정적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가 공모 형태로 운영되고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2023년 9억 4,700만원 → 2024년 4억 7,400만원)되어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지정 또는 인증 제도로 변경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4년부터 삭감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기금 운용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성평등가족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중 복권기금 전입금 비중 추이
(단위: %)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양성평등기금</td><td>95.8</td><td>96.9</td><td>96.7</td><td>93.9</td><td>93.7</td></tr>
<tr><td>청소년육성기금</td><td>90.6</td><td>93.5</td><td>89.0</td><td>89.7</td><td>88.5</td></tr>
</table>
❍ 복권기금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 사업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수행하게 되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는 문제가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나, 복권기금 사업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사업대상이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구조의 다변화 및 기금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운용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사전시관(1232-332)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관련절차 소요기간으로 2024년 예산현액 37억 7,8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완공이 당초 계획(2023년)보다 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무리하게 총사업비 변경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4.9.)으로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등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충원은 지체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인당 삭제지원 건수 (선제적 삭제 포함) - (’22년) 17,555건 → (’24년) 22,252건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보조금 등 횡령 관계자 국고보조사업 배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이라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2024.7.~2029.7.)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받았으나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정의기억연대는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보조금이나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된 자가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별도 법인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2024년 실집행률 78.3%), 2024년 바우처 신청률은 87.4%이며 이 중 바우처 이용률은 83.7%로 전년(85.4%)대비 이용률이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 구매처 다양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대상자의 바우처 조기신청을 위한 홍보 등 조치를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신청률 제고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호남권·광주·경남권)은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45.1%로 저조하고, 특히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의 이월·전용·불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23년에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해 7억원이 전용(감)되었고,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23억 8,200만원 중 18억 6,900만원이 이월되고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19.7%)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광주) 건립 사업에 있어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률 목표 설정 및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진척도 및 집행률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광주)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별 관리체계 강화 및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 치유를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금전 형태인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참고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금전 지원 및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물품서비스 방식으로 지원형태를 전환하거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4.7% 수준이며 대기가구는 9,519가구이고, 평균 대기일수가 32.8일에 달함 - 긴급돌봄 및 단기간돌봄의 연계율이 낮고 심야·긴급 상황에서의 돌봄체계가 부재하여 아이의 화재·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시간당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5.6% 수준이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인원 대비 실제 증원 비율이 21.7%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민간서비스기관과 연계 등 지원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수요 감소 원인 분석 및 현실적 수요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주의,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841억 1,700만원 중 2,752억 1,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1.6%)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 가구를 과다 추계하여 2024년 예산액 279억 2,900만원 중 129억 8,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46.5%)되었음 - 2023년 및 2024년 이용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신설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사업과 영아종일제 간의 중복수급이 불가한 점이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돌봄수당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하고, 향후 예산 증액 시 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등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주의) ○ 성평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중복·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주의) ○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정책의 영향 등 ‘영아종일제’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지원대상 가구 수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상이한 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및 자의적 예산 조정 집행 금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실집행률 71.6%)하며, 미집행분을 별도의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관리’(64억 4,799만원 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51억 5,900만원 증)과 별도의 내역사업인 ‘광역지원센터 운영’(1억 500만원 증)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과거 국회 심사 시 돌봄수당 집행실적 저조와 관련한 문제 및 상이한 내용의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유사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참고) 2023회계연도 결산 동 사업 시정요구 사항 (34)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주의) (35)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시정) (36) 사업성과 측정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주의) (37)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사업관리 강화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시정)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상이한 내용의 사업을 각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이전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적사항	○ 2024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은 15억 4,6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실적은 4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누적 채권 회수율도 18.48%에 그치고 있음 -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므로 구상권 청구 및 환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소속으로, 2024년의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예산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2024.9.27.)에 따라 2025회계연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사업으로 이관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3인(2025년 7월 말)에 불과하여,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 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대상 건수(2026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1인당 약 3,100건)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유사한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예를 고려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지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관리 전담부서 설치,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새일여성인턴’의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이 90% 중반에 이르고 있으나 6개월간 고용유지 비율은 70%대이고, 12개월간 고용유지 비율은 50% 중반으로 고용유지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의 낮은 고용유지율과 경력 단절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며,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를 제고할 것		
48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새일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업 참여와 취업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2024년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참여자 현황은 40대(39.7%), 50대 이상(30.8%), 30대(17.9%), 30세 미만(11.6%) 순임 - 2024년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취업인원의 연령별 현황은 40대(40.4%), 50대 이상(30.8%), 30대(17.5%), 30세 미만(11.3%) 순임 ○ 새일센터 교육훈련 과정 중 전문기술과정의 2024년 취업률은 72.1%이나 이 중 전문기술과정과 연계된 유관 분야 취업률은 47.7%에 불과하여 교육 과정과 취업 간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 새일센터의 성과평가는 장기고용 유지율, 창업 생존률 등이 아닌 단순 취 창업 건수 등 단기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있어 연령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술과정의 유관취업률을 제고하며,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등 사업 성과를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비목 일원화 및 예산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과 민간위탁 사업비(320-02)로 이원화 되어있으나, 비목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음 ○ 민간보조사업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5%로 제한하고 있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저조한 편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2년 77.3%, 2023년 54.3%, 2024년 91.1%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 집행체계(비목)를 일원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이원화된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일원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비를 축소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타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재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제개발협력(ODA)(1136-364),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2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체계로 변경되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 일부 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51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별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사업(1131-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상 연구과제별 세부 단가가 아닌 평균 연구비를 기재하고 있어 연구비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음 - 2024년 집행내역: 1억 2,400만원 = 2,060만원×6건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의 적정규모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1136-363)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 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은 57억 3,900만원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이는 1인당 GDP(IMF 2024년 기준 29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서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1인당 GDP를 고려하여 기여금을 조정할 것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상황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53	**양성평등위원회 명단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소속)는 공무원(15명) 및 민간위원(10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민간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		
54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관리·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집합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자료가 제작되지 않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문항이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역사업인 ‘생활안정금 지원’에 있어 사업대상자 8인 중 3인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만족도 조사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로 반영할 것		
56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시 인터넷 창이 강제종료 되고, 범죄자 이름 클릭 시 정보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며 지도별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방식을 개선하고 성범죄자 조회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며, 지도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굴·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1개 시·도(경남) 및 11개의 시·군·구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58	**성매매 피해자 등의 취업 및 진학 실적 추적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8-3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사업의 성과지표 중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은 지원사업 참여자의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및 자발적 성매매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을 1년 이상의 추적 자료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할 유인이 부족하여 제도 실효성이 낮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장기간 고용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표 미달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후 점검, 맞춤형 컨설팅,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관리 체계를 강구할 것		